# 2023회계연도 결산
#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2. 회부일자 : 2024년 9월 2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차 전체회의(2024. 9. 2.)

-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 제안설명, 결산검사결과보고
-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
-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2차 전체회의(2024. 9. 3.)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3차 전체회의(2024. 9. 4.)

・부별심사(경제부처)

□ 제4차 전체회의(2024. 9. 5.)

・부별심사(경제부처·비경제부처)

□ 제5차 전체회의(2024. 9. 6.)

・부별심사(비경제부처)

・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9.)

・상정,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10.)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계속)

□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11.)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계속)

□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12.)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계속)

□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26.)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계속)

・원안의결

□ 제13차 전체회의(2024. 11. 29.)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함.

❒ 「2023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임.

❒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임.

총세입 규모는 497조원으로 세입예산액 534조원 보다 37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총세출 규모는 490조 4,000억원이며, 예산현액 540조 원 중 90.8%가 집행되었음.

결산상 잉여금은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3조 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원이 발생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전액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였음.

❒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임.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0조 4,000억원이증가한 889조 8,000억원임.

❒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임.

총수입 573조 9,000억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함.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원임.

❒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결산임.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원임.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 연금 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조 5,000억원 증가한 2,439조 5,000억원임.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조 3,000억원 증가한 569조 9,000억원임.

❒ 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재해대책 등을 위해 예산 4조 6,003억원 중 1조 3,091억원이 지출됨.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음.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음.

# Ⅲ.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요지

## (보고자 : 감사원장 최 재 해)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해드린바 있음.

❒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음.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7조원, 세출결산액은 490조 4,000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원임. 고용보험기금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액은 각각 889조 8,000억원임.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27조 8,000억원 감소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함.

❒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결과임.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총 8조 9,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지출 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8,000억원의 오류가 있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009조 4,000억원, 부채는 2,439조 5,000억원임.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원이 과대계상되었고 물품은 2,050억원이 과대계상되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원, 물품은 15조 9,000억원임.

2023회계연도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92조 5,000억원으로서 전년도 1,033조 4,000억원에서 59조 1,000억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음. 그 밖에 국가채권은 514조 2,000억원, 정부보증채무는 10조 5000억원이었음.

❒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임.

기획재정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24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음.

❒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임.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93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2023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전관특혜실태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음.

## Ⅳ.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의 요지

**(보고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음.

❒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

원 검사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있음을 말씀드림.

❒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들에 처분을 요구한 203건 중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91.1%에 해당하는 18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9%인 18건은 조치 중임.

조치 중인 18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3건 20명이고 시정요구가 4건임.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보고자 : 전문위원 정 대 영)

## 1.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 가. 결산 개요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5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43.9조원(△7.1%)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것임.

총지출은 610.7조원으로 전년 대비 71.7조원(△10.6%)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2년에 코로나19에 따른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사실에 주로 기인함.

[표 1] 2023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단위 : 조원)

| 구 분 | 2022 결 산 (A) | 2023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B) | 결 산 (C) | 예산대비 (C-B) | |
| Ⅰ. 총수입 | 617.8 | 625.7 | 573.9 | △51.8 | △43.9 |
| 1. 국 세 | 395.9 | 400.5 | 344.1 | △56.4 | △51.9 |
| 2. 세외수입 | 30.8 | 25.0 | 28.5 | 3.5 | △2.3 |
| 3. 기 금 | 190.8 | 200.3 | 201.1 | 0.8 | 10.3 |
| ※ 세입예산외[1] | 0.3 | - | 0.3 | 0.3 | △0.0 |
| Ⅱ. 총지출 | 682.4 | 638.7 | 610.7 | △28.0 | △71.7 |
| 1. 일반회계 | 379.9 | 369.4 | 343.5 | △25.9 | △36.4 |
| 2. 특별회계 | 59.7 | 71.6 | 69.6 | △2.0 | 10.0 |
| 3. 기 금 | 231.2 | 197.7 | 196.5 | △1.1 | △34.6 |
| ※ 세출예산외[2] | 11.6 | - | 1.0 | 1.0 | △10.6 |

주 1)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2)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GDP 대비 △1.6%)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실적 대비 27.8조원 개선되었으나 예산 대비로는 23.7조원 악화된 것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87.0조원 적자(GDP 대비 △3.9%)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실적 대비 30.0조원 개선되었으나 예산 대비로는 28.8조원 악화된 것임.

### [표 2] 2023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 구 분 | 2022 결 산 (A) | 2023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B) | 결 산 (C) | 예산 대비 (C=B) | |
| Ⅰ. 통합재정수지 | △64.6 | △13.1 | △36.8 | △23.7 | 27.8 |
| (GDP 대비) | (△3.0) | (△0.6) | (△1.6) | (△1.1) | (1.3) |
| 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52.5 | 45.1 | 50.3 | 5.1 | △2.2 |
| (GDP 대비) | (2.4) | (2.0) | (2.2) | (0.2) | (△0.2) |
| Ⅲ. 관리재정수지 | △117.0 | △58.2 | △87.0 | △28.8 | 30.0 |
| (GDP 대비) | (△5.4) | (△2.6) | (△3.9) | (△1.3) | (1.5) |

주) 명목 GDP는 2024년 3월 5일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2022년 2,161.8조원, 2023년 2,236.3조원(잠정)임[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26.7조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하였음. 이는 예산보다 7.6조원 적은 것이나 전년 대비로는 59.0조원 증가한 것임.

---

1) 2024.6.5.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기준년 변경(2015→2020년)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2023년 △3.9%에서 △3.6%로, 국가채무 비율은 50.4%에서 46.9%로 변동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국회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2015년 통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도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이러한 증가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1,091.1조원)가 전년 대비 59.6조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 [표 3]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 구 분 | 2022 결 산 (A) | 2023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B) | 결 산 (C) | 예산 대비 (C-B) | |
| □ 국가채무(A+B, 잠정) | 1,067.4 | 1,134.4 | 1,126.7 | △7.6 | 59.0 |
| (GDP 대비, %) | (49.4) | (50.4) | (50.4) | (△0.1) | (1.0) |
| ○ 중앙정부 채무(A) | 1,033.4 | 1,101.7 | 1,092.5 | △9.2 | 59.1 |
| ■ 국 채 | 1,031.5 | 1,100.3 | 1,091.1 | △9.2 | 59.6 |
| - 국고채권 | 937.5 | 999.0 | 998.0 | △1.0 | 60.5 |
| - 국민주택채권 | 82.2 | 86.8 | 81.6 | △5.2 | △0.5 |
| - 외평채권(외화) | 11.8 | 14.5 | 11.5 | △3.1 | △0.3 |
| ■ 차입금 | 1.9 | 1.2 | 1.2 | - | △0.7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1 | 0.2 | 0.2 | - | 0.1 |
| ○ 지방정부 순채무(B) | 33.9 | 32.6 | 34.2 | 1.6 | 0.3 |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보면,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채무 726.4조원,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채무 400.3조원으로 구성됨.

적자성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가 660.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성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251.0조원을 차지함.

## [표 4]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 구 분 | 2022 결 산 (A) | 2023 | | | 전년 대비 (C-A) |
|---|---|---|---|---|---|
| | | 예 산 (B) | 결 산 (C) | 예산 대비 (C-B) | |
| □ 국가채무(A+B) | 1,067.4 | 1,134.4 | 1,126.7 | △7.6 | 59.4 |
| ○ 적자성 채무(A) | 676.0 | 721.3 | 726.4 | 5.1 | 47.4 |
| (구성비) | (63.3) | (63.6) | (64.5) | (0.9) | (1.2) |
| - 일반회계적자보전 | 605.8 | 656.6 | 660.1 | 3.5 | 54.3 |
|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 70.1 | 64.7 | 66.3 | 1.6 | △3.8 |
| ○ 금융성 채무(B) | 391.3 | 413.0 | 400.3 | △12.7 | 9.0 |
| (구성비) | (36.7) | (36.4) | (35.5) | (△0.9) | (△1.2) |
| - 외환시장 안정 | 265.7 | 278.7 | 251.0 | △27.7 | △14.7 |
| - 서민주거 안정 등 | 125.6 | 134.4 | 149.4 | 15.0 | 23.8 |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나.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은 497.0조원으로 전년 대비 76.9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37.0조원 적은 규모임.

이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407.9조원으로 전년 대비 86.0조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 총세입은 89.0조원으로 전년 대비 8.9조원 증가하였음.

### [표 5]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 2022 결산 (A) | 2023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B) | 결산 (C) | 예산 대비 (C-B) | |
| 합 계 | 573.9 | 534.0 | 497.0 | △37.0 | △76.9 |
| 일반회계 | 493.9 | 446.2 | 407.9 | △38.3 | △86.0 |
| 특별회계 | 80.1 | 87.7 | 89.0 | 1.3 | 8.9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성질별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51.9조원 감소하였고 예산 대비 56.4조원 미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1조원 감소하였으나 예산 대비 19.4조원 초과하였음.

## [표 6] 2023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 국세수입 | | | 세외수입 | | |
|---|---|---|---|---|---|---|
| | 2022 결산 | 2023 | | 2022 결산 | 2023 | |
| | | 예산 | 결산 | | 예산 | 결산 |
| 합 계 | 395.9 | 400.5 | 344.1 | 178.0 | 133.5 | 152.9 |
| 일반회계 | 385.2 | 390.3 | 333.9 | 108.7 | 56.0 | 74.0 |
| 특별회계 | 10.8 | 10.2 | 10.2 | 69.3 | 77.5 | 78.9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전년 대비 69.3조원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보다 49.5조원 적었음.

일반회계 총세출이 405.9조원으로 전년 대비 79.2조원 감소한 데 비해 특별회계 총세출은 84.5조원으로 전년 대비 9.8조원 증가하였음.

## [표 7]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 2022 결산 (A) | 2023 |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액 | 예산현액 (B) | 결산 (C) | 예산현액 대비 (C-B) | |
| 합 계 | 559.7 | 533.9 | 540.0 | 490.4 | △49.5 | △69.3 |
| 일반회계 | 485.0 | 446.2 | 449.1 | 405.9 | △43.2 | △79.2 |
| 특별회계 | 74.7 | 87.7 | 90.9 | 84.5 | △6.4 | 9.8 |

주) 예산현액(B)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및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총세입 497.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 차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이 발생하였음.

# [표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 구 분 | 총세입 결산 (A) | 총세출 결산 (B) | 결산상잉여금 (A-B) | 이월액 (C) | 세계잉여금 (A-B-C) |
|---|---|---|---|---|---|
| 합 계 | 497.0 | 490.4 | 6.5 | 3.9 | 2.7 |
| 일반회계 | 407.9 | 405.9 | 2.0 | 2.0 | 0.04 |
| 특별회계 | 89.0 | 84.5 | 4.5 | 1.9 | 2.6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 기금 결산

❒ 2023회계연도 기금 전체 68개의 수입·지출액은 889.8조원으로 전년 대비 60.4조원이 증가하였음.

기금 수입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내부수입(248.1조원), 여유자금회수(243.8조원), 자체수입(214.3조원), 차입금(183.5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기금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운용(273.4조원), 정부내부지출(268.9조원), 사업비(178.7조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크고,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표 9]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 | 2022 결산 (A) | 2023 | | | 수정계획 대비 (D-C) | 전년 대비 (D-A) |
|---|---|---|---|---|---|---|---|
| | | | 계획 | | 결산 (D) | | |
| | | | 당초(B) | 수정(C) | | | |
| 수입 | 자체수입 | 203.0 | 212.6 | 211.7 | 214.3 | 2.67 | 11.3 |
| | 정부내부수입 | 236.3 | 262.6 | 275.1 | 248.1 | △27.0 | 11.7 |
| | 차입금 | 178.7 | 191.7 | 192.9 | 183.5 | △9.4 | 4.8 |
| | 여유자금회수 | 211.3 | 226.2 | 240.9 | 243.8 | 2.9 | 32.5 |
| 합 계 | | 829.4 | 893.1 | 920.6 | 889.8 | △30.8 | 60.4 |
| 지출 | 사업비 | 214.5 | 180.9 | 185.5 | 178.7 | △6.9 | △35.9 |
| | 기금운영비 | 2.8 | 2.9 | 3.0 | 2.9 | △0.1 | 0.1 |
| | 정부내부지출 | 230.3 | 257.7 | 280.0 | 268.9 | △11.2 | 38.6 |
| | 차입금원금상환 | 111.0 | 139.1 | 142.2 | 138.8 | △3.3 | 28.0 |
| | 차입금이자상환 | 23.8 | 27.6 | 28.1 | 26.9 | △1.1 | 3.2 |
| | 여유자금운용 | 246.9 | 285.0 | 281.7 | 273.4 | △8.3 | 26.5 |

자료: 기획재정부

❒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가 440조 5,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7,499억원 증가하였고,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가 268조 8,556억원으로 전년보다 18조 1,601억원이 증가하였음.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149조 7,30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 9,659억원 감소하였고,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30조 6,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0억원 증가하였음.

❒ 또한 기금 수정계획 대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결산규모가 28조 2,516억원 초과하였던 반면, 계정성기금은 27조 4,226억원, 사업성기금은 29조 2,392억원, 금융성기금은 2조 3,987억원이 각각 수정계획에 미달하였음.

[표 10] 2023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22 실적 (A) | 2023 | | | | 전년 대비 (D-A) |
|---|---|---|---|---|---|---|
| | | 계획 | | 결산 (D) | 수정계획 대비 (D-C) | |
| | | 당초(B) | 수정(C) | | | |
| 합 계 | 8,293,590 | 8,931,295 | 9,205,671 | 8,897,582 | △308,089 | 603,991 |
| ■ 사회보험성기금(6개) | 2,506,955 | 2,403,795 | 2,406,040 | 2,688,556 | 282,516 | 181,601 |
| ■ 계정성기금(5개) | 3,507,948 | 4,409,626 | 4,679,674 | 4,405,447 | △274,226 | 897,499 |
| ■ 금융성기금(8개) | 301,724 | 330,261 | 330,261 | 306,274 | △23,987 | 4,550 |
| ■ 사업성기금(49개) | 1,976,963 | 1,787,613 | 1,789,696 | 1,497,304 | △292,392 | △479,659 |

자료: 기획재정부

## 2.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

### 가. 2023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 2023년 경제성장·민간소비 및 물가안정 지표는 당초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취업자 증가폭 및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세계 교역량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것임.

2022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당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제 시현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실질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등은 전망치를 하회하였으나, 취업자 수와 경상수지 등은 전망치를 상회하였음.

[표 11] 2023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및 실제 통계 비교

| 구 분 |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2023년 주요 거시경제전망(A) | 2023년 실제 통계 (B) | 차이(B-A) |
|---|---|---|---|
| 경상성장률(%) | 4.0 | 3.4 | △0.6%p |
| 실질성장률(%) | 1.6 | 1.4 | △0.2%p |
| 민간소비증가율(%) | 2.5 | 1.8 | △0.7%p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5 | 3.6 | +0.1%p |
| 취업자증감(만명) | 10 | 32.7 | +22.7 |
| 경상수지(억불) | 210 | 355 | +145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정부는 2023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를 보면, 정부기여도가 1분기 △0.3%p, 2분기 △0.2%p 등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3분기 0.3%p, 4분기 0.2%p 등 하반기에 비로소 양의 값으로 나타나, 재정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효과가 상반기에 적정하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움.

[표 12] 분기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p)

| 구 분 | 2023.1/4 | 2023.2/4 | 2023.3/4 | 2023.4/4 | 2024.1/4 |
|---|---|---|---|---|---|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0.4 | 0.6 | 0.8 | 0.5 | 1.3 |
| 민 간 | 0.6 | 0.8 | 0.4 | 0.4 | 1.2 |
| 정 부 | △0.3 | △0.2 | 0.3 | 0.2 | 0.1 |

자료: 통계청 KOSIS, 지출항목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2024.6.

❐ **이처럼 효과가 저조했던 것은 신속집행 대상사업 중 상당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수요가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 등 그 성질상 신속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재정집행의 효과가 민간에 적시에 전달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하겠음.**

예컨대, 기초연금 지급(18.5조원), 의료급여(9.1조원), 생계급여(6.0조원) 등 지자체에 교부되는 법정 의무지출사업은 지자체에서 매달 수급요건 등이 고려되어 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더

라도 실제 지출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보조금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효과만 나타난다 할 것임.

그리고 주택자금·전세자금 융자(10.4조원), 전세임대 융자(4.2조원) 등은 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독려할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흐름의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전제로 신속집행을 추진해온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신속집행의 전제와 달리 실제 경기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재정의 신속집행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예컨대, 2022년의 경우 1분기 경제성장률이 0.7%, 2분기는 0.8%였으나, 3분기 0.2%, 4분기 △0.3% 등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제활력이 떨어진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3.0%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1.4%p를 초과달성하였음.

한편 신속집행을 위한 상반기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량이 증가하여 조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2023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일시차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하였음.2)

2) 차입실적(누계): 2021년 36.4조원, 2022년 50.5조원, 2023년 162.1조원

## 나. 세입결손 현황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

❒ **2023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입결손(56.4조원)이 발생하였고, 세수부족 문제가 2024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그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이 수납되어 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14.1%)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6월 기준 국세수입 누계액은 16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조원 감소하는 등 여전히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세수입 오차율(본예산 기준)은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로서 세수오차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고 변동폭이 큰 상황이므로,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 **한편 정부는 추경을 통한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하여 대응하였는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충분한 세입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가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45.7조원)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2023년 9월, 세입결손에 대하여 세입경정 추경을 통한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응하였으나,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생겨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45.7조원)이 발생하였음.

다만 정부는 결산상 불용액을 ①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원 미교부(18.6조원), ② 내부거래(16.4조원) 및 ③ 사실상 불용(10.8조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불용 규모를 고려할 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불용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세입결손 대응과정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미래 재정부담의 증가, 「국가재정법」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 등이 있었음.**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예산액 기준으로 모두 교부하고 사후정산하는 형태로 운용되었는데, 중앙정부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번에 대규모 재원을 사전에 미교부한 선례가 발생하였음.

향후 지방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배정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위반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음.[3)]

다음으로 내부거래 불용(16.4조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 미상환(8.6조원) 등은 현재의 상환의무를 미래로 연기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내부거래가 회계·기금 간 중복계상되는 것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미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더불어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14.4조원) 과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향후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불용(10.8조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출소요 발생 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사업비 불용 규모(7.5조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에 크게 증액편성된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2023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4] 2023년 목적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할 재해복구 의무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은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만 예산 대비 전액 교부하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예산 대비 감액 교부함에 따라 교부비율이 68.6%, 23.5%, 7.8%로 나타나 법정비율이 준수되지 않았음.

4)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대책비 예산 6,000억원 중 5,400억원, 환경부의 2024년 하천재해대책

중 일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2024년으로 이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표 13]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처 | 세부사업명 | 2023 예산(A) | 2024 예산(B) | 증액분(B-A) |
|---|---|---|---|---|
| 행정안전부 | 재난대책비(보조) | 150,035 | 600,040 | 450,005 |
| 환경부 | 하천재해대책비 | - | 250,000 | 250,000 |
| | 재해대책비 | - | 50,000 | 50,000 |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대책비 | 200,000 | 280,000 | 80,000 |
| 산림청 | 산림재해대책비 | 20,000 | 100,000 | 80,000 |
| 해양수산부 | 양식 등 재해대책비 | 16,346 | 50,000 | 33,654 |
| **계** | | **386,381** | **1,330,040** | **943,659**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비 예산 2,500억원 중 2,300억원은 각각 2023년 7~8월 중앙합동조사 및 2023년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수해 및 태풍 복구계획에 기반하여 2023년 재난대책비 등으로 지원되지 않은 자금을 2024년에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다. 재정수입 결산 검토

**□ 첫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5]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2년 실적은 13.0%인데 반해, 2023년과 2024년 전망치는 각각 15.8%, 2024년 16.3%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출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를 1.5%p, 2024년에도 법정한도 잠정치인 14.6%를 1.7%p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

---

5)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에 따르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1~2023년 동안 매년 1건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은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각각 나타나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그러나 2020~2023년까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은 6건 중 4건이 "타당성 낮음"으로 나타나 평가를 거친 경우 과도한 조세감면을 억제하는데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셋째,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징수 관행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6] 등 연례적으로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세외수입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편성[7] 또는 과다편성[8]하는 경우가

6) 2023년 수납액 641억원

있으므로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위약금과 가산금 등 일부 수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각 부처는 수납실적 저조사유를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의 위약금(△395억원) 등 일부 수입과목에서는 수납액보다 과오납금 반환규모가 커 수납액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과오납금이 어느 세입과목에서 추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세입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세입과목의 당해연도 수납된 금액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부족한 금액은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7) 보건복지부의 기타경상이전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조달청의 기타영업외잡수익, 경찰청 과태료 등

8)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외국환평형기금 국공채수입 등

## 라.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사례

❒ **2023년에는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집행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유발된 경우들이 있었으므로, 향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첫째,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은 2022년말 기준 6,000억원 이상의 잔액이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어 집행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를 하였다면 불용예상 재원을 다른 용도로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둘째,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2023년 6,563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환경부의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집행되는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교부 및 위탁으로 인하여 2023년말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잔액이 9,680억원에 달하고 있음.

넷째,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사업**은 2023년 5,491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실집행단계에서 이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지자체 및 수탁기관으로 교부되는 비효율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3,440억원을 전액 출연하였고, 이 중 432억원만 실집행되고 3,008억원이 미집행된 문제가 있었음.

여섯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보험기금)' 등 5개 사업**은 사업수요를 과다추계하여 2023년에만 합계 1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불용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사례가 2년 연속 반복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 마.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재원의 불균형 및 개선방안

❒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수입재원을 보유하여 독자적인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지출 간 균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보유재원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거나 수입구조가 미약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첫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기금사업비의 1.5배 이상인 약 2.7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동 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최근 3년 평균 약 1.7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여유자금 규모(연중 평잔)는 2021년 0.9조원, 2022년 1.2조원, 2023년 1.7조원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잔액도 2023년 결산 기준 9,600억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을 확대하는 등 수입-지출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최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차입을 통한 외부재원 조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및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2023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조원으로, 동 회계는 매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규모는 2022년 0.4조원에서 2023년 1.2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2.2조원을 예수할 계획임.

이처럼 최근 들어 수입-지출 불균형에 따라 차입을 통한 외부재원 조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회계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융자사업의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부실률 증가로 재원부족 문제가 향후 더욱 악화될 전망이므로, 신규 재원 발굴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동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로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3년 기준 기금의 순자산은 △6.0조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5.2조원 대비 0.8조원 적자가 심화된 것임.

또한 동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은 20.6조원으로 2023년 기금사업비(4.0조원)의 5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시행되었던 각종 대출의 거치기간(2년)이 도래함에 따라 부실률 또한 2021년 1.6%에서 2023년 10.0%로 급증하고 있음.

**넷째,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은 자산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 자본잠식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은 모두 재무결산상 순자산이 음(-)의 값을 지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으며, 2022년 대비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이들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재원 발굴 및 현행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14] 3개 기금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자산 | | 부채 | | 순자산 | |
|---|---|---|---|---|---|---|
| | 2022 | 2023 | 2022 | 2023 | 2022 | 2023 |
| 국민건강증진기금 | 14,940 | 18,826 | 39,787 | 46,125 | △24,847 | △27,299 |
| 방송통신발전기금 | 5,800 | 4,429 | 15,074 | 16,859 | △9,274 | △12,430 |
| 정보통신진흥기금 | 3,082 | 2,068 | 24,760 | 28,936 | △21,678 | △26,869 |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 3. 주요 유형별·주제별 검토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의 미반납에 대한 관리 강화

❒ **2023년 지자체 보조사업의 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았고, 이 중 1,556억원은 2022년 이전에 징수결정되었음에도 반납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3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할 의무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년도 중에 보조금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

그러나 2023년까지 잔액 반납 의무가 있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반납 현황을 보면, 23개 부처 총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아 미수납처리되었으며,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5,552억원, 질병관리청 1,907억원, 환경부 664억원 등의 순으로 미수납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23년 징수결정액 3조 3,528억원 중 7,212억원(17.7%)은 과거연도 미반납에 대한 재징수 결정액으로, 이 중 1,556억원은 2023년말까지 반납이 완료되지 못하였음.

❒ **주된 미반납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지자체는 추경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에 보조금 반납액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

**으나, 통상적으로 연중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있고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하겠음.**

보조금 미반납의 주된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1조 1억원)'으로, 2023년 전체 미수납액 1조 1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지자체는 정산된 보조금 잔액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해야 국고반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예산 확정분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추경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연중 필요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는 등 통상적으로 매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보조사업 잔액 미반납 관행은 추경편성이라는 구조에 그 원인에 있기보다는 반납 의지 부족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대규모 재원이 법률에 반하여 국고로 수납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 차원의 조치는 개별사업별 반납 독려 외 별다른 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 잔액 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반납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음.**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재원이 국고로 수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의 미반납 사유인 '지자체 예산 미편성'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개별사업별로 반납을 독려할 계획만 밝히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 예산 미편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잔액 미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나. 공공기관 결산 검토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347개로,[9] 전체 수입은 908.0조원, 전체 지출은 907.4조원 규모이고, 자산은 1,096.3조원, 부채는 709.0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83.0% 수준이며, 2023년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위변제 금액이나 차입금 증가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들의 사례가 있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4월말 기준으로도 1조 9,967억원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이자부담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10] 2023년 총 이자비용은 2.13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 (2027년 208%)달성을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2022년 25조 2,977억원에서 2023년 3조 2,492억원으로 개선되었으나, 이자역마진이 2023년 △2조 7,345억

9) 2024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들이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기관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정해제되어 공공기관 수는 전년 대비 20개 감소한 327개가 되었음.

10) 부채는 2019년 127조원에서 2023년 153조원, 이자부담부채는 2019년 65.9조원에서 2023년 88.3조원으로 증가하였음.

3,6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함.

❒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계획변경 또는 사업관리 부실 등 회계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계획액이 감축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재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야기하였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사업관리 부실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22년 이후 지연된 공공형 에너지화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2020년 12월 준공 및 개장하였으나 2024년 6월까지 사기업의 유치실적은 1건이고 2024년 6월 기준 공실률이 86.6%에 달하여 당초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관의 미래를 위한 준비 강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등 기관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음.**

**한국마사회**의 경우, 마권 총발매액과 당기순이익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경마산업의 실적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용절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술의전당**의 경우,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이 중에서도 라이센스·인기장르 대비 창작 및 순수예술장르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 2021년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입·세출외로 녹색프리미엄 수익을 이용하여 2024년부터 기업 재생에너지펀드를 결성·운용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수익금 및 펀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탄소중립 지원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 사업출연금 정산 의무화 필요

❒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되거나 피출연기관에 적립되고 있음.**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목적 여부에 따라 일반출연금(350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구분되며, 일반출연금 중 사업출연금(350-02)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그런데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통일된 근거 법률이 부재하여 피출연기관이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모든 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며 사업출연금만 그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국가재정법」제16조제4호는 예산의 원칙 중 하나로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정이 투입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비록 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재정활동과 달리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나 별도의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재정활동과 동일하게 정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집행이 완료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야 할 것임.**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출연금의 정산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되,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율하여,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출연금 집행 시 투명성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음.

나아가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율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하여만 단서조항을 달아 예외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율한 취지는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출연금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없고 정산 및 반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업출연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연구개발출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규율이 정립되어 있으나, 사업출연금 등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불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출연금은 정산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을 정립하여 출연금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라.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에 따른 국가재정 규모의 부정확성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은 2년 연속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총지출 규모 등 적정수준의 재정총량을 도출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국민연금기금 소관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6.2조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집행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9조원을 증액하여 39.1조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도 30.6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5조원 증액된 34.1조원이 집행되었음.

보건복지부는 높은 물가상승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인해 계획보다 급여액이 증가하여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였다는 입장이나, 계획액 대비 집행액 오차율이 2020년 3.6%, 2021년 0.1%로 낮게 나타나던 상황에서 2022년 11.1%, 2023년 7.8%로 최근 2년 사이 오차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은 과소추계로 인해 큰 규모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재정 총 규모가 과소추계 됨으로써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목표로 할 적정 재정규모를 산출하는 데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시하였는데, 만약 2024년에도 과거와 같이 약 3조원의 과소추계 경향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총지출 규모는 659.9조원, 총지출 증가율은 3.3%가 되어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값보다 0.5%p 상승하게 됨.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마. 비효율적인 집행 등

❒ **첫째, 일부 부처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여 투입된 재정이 낭비되거나,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제작한 방사성제논탐지 장비가 연구부정행위로 인하여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2023년 내부감사로 발견하여 다른 유사장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가용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장비성능검사 관련 예산 10억 9,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비 100%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유산청은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인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 6억원에 달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하였음.

❒ **둘째, 사업대상 선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경우, 사업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음.**

통계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위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하여, 특정 기관이 통계청의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 장기간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시를 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마음건강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해당 사실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해 국가지원을 기대했던 소방관들이 자부담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국가정책의 신뢰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친환경설비투자' 사업추진 과정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하였음에도 수입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부 예산의 집행을 차년도로 연기하여 연내 융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 사업대상자들의 자금운용계획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음.

금융위원회의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은 고정된 목표금리와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출금리의 차이를 모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금융기관이 금리를 높게 설정할수록 금융기관의 이익이 커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함.

## 바. 국가재정법 위반 등

❒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1억원의 재원 없는 이월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상 이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함.**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의 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가능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급감에 따라 수입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174억원)’,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101억원)’, ‘친환경설비투자(166억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41억원을 이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함.

❒ **둘째, 정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을 연중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통해 46개 부처에서 약 225억원을 조달하였으나, 이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1호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23년 1월 46개 부처에 총 2,000명의 청년인턴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용 등을 통해 약 225억원의 예산을 조달하여 연중 청년인턴 채용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음.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인턴 사업의 효과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전용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과를 검증한 후 차년도 예산에 본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총칙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음.

## 7. 재정제도 개선과제

**□ 첫째,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같이 분기별로 그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없이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부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예비비총괄명세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차년도 5월 31일에 공개되어 이후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게 됨.

이처럼 예비비 집행내역이 차년도 5월에 공개됨에 따라 예비비 집행 당시에는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차년도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예비비의 지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고, 집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중에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의 국회 제출' 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또한 연중에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수시배정 지정내역 및 그 사유를 연중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수시배정'이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동 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

현재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예산집행지침에 규율되어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수시배정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위임규정을 두고 하위법령에 명확히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집행과정에서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수시배정 지정 사유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타당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셋째,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금출자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나, 현물출자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정부는 현물출자 시 사전에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물출자는 지분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출자대상이 현물인 점 외에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현행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관한 국회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생략)**

## Ⅵ.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심사보고자 : 구 자 근 위원)**

### 1. 심사경과

❑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림.

### 2. 심사보고 요지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음.

❑ 우리 소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이 중 유형을 중복하여 채택한 요구는 68건임.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음.

❑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총 34건을 채택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 Ⅷ. 토론요지

생 략

## Ⅸ. 심사결과

원안의결

# Ⅹ. 시정요구(안), 부대의견(안) 및 감사요구(안) 등

## 1. 시정요구(안)

【붙　임 2】

## 2. 부대의견(안) : 총 33건

| 연번 | 부 대 의 견 |
|---|---|
| 1 | ○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 2 | ○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 3 | ○ 정부는 2024년 예산감액으로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4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민간의료보험 과다진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
| 5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댐 소관 부처에 따라 주민지원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 연번 | 부 대 의 견 |
|---|---|
| 6 | ○ 국무조정실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시 부처별 해당 사업들의 목록과 향후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한다. |
| 7 | ○ 국가보훈부는 천안함 장병 생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 8 |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PF의 연착륙에서 나아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 9 | ○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대된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 및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금 충당 규모를 검토한다. |
| 10 | ○ 법무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 11 | ○ 기획재정부는 지역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방향 조정을 검토한다. |
| 12 |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되면 예산 요구액의 합계 및 분야별 요구액 현황 등의 정보를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한다. |
| 13 |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
| 14 |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필수 공공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

| 연번 | 부 대 의 견 |
|---|---|
| 1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 16 | ○ 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및 법무부 등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이행을 지원한다. |
| 17 | ○ 국방부는 777사령부 산하부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
| 18 | ○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성과와 재정 관리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 19 | ○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과 영업이익 활용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 20 | ○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권도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
| 21 |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 22 |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한다. |
| 23 |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영화 및 지역영화제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 24 | ○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체계와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집행관리점검단 신설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

| 연번 | 부 대 의 견 |
|---|---|
| 25 | ○ 농촌진흥청은 4년 연속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 등 성과지표 미달사업이 다수이므로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한다. |
| 26 | ○ 산림청은 산림헬기의 안정적 운용 및 향후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 헬기의 구입을 적극 추진한다. |
| 27 | ○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및 조직 보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과적인 마약탐지를 위한 특수장비 도입 등 지능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
| 28 | ○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망의 관리운영을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투자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한다. |
| 29 | ○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 30 | ○ 보건복지부는 실제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재원·대상 및 도덕적 해이 등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사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
| 31 | ○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등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 32 | ○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CTX-A 노선이 장래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33 |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1건 제외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비비가 본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결산시 그러한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외교통일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붙 임 1】

# 결산심사결과 총괄표

## 1. 연도별 결산 심사 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21회계연도 | 2022회계연도 | 2023회계연도 |
|---|---|---|---|
| 시 정 요 구(안) | 1,394 | 1,889 | 2,293 |
| 부 대 의 견(안) | 21 | 26 | 34 |
| 감 사 요 구(안) | - | 1 | - |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2023회계연도 26건) 별도
※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31건) 및 부대의견(1건) 별도

## 2.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내역

□ 시정요구(안) : 2,293건

(단위: 건)

| 구 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 개선 | (중복) | 합 계 |
|---|---|---|---|---|---|---|---|
| 건수 | - | 1 | 244 | 793 | 1,323 | (68) | 2,293 |

※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이 적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 시정 및 제도개선)
※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31건) 별도

□ 부대의견(안) : 33건

※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부대의견(1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1건) 별도

## 3.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위원회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 구 분 | 시정요구유형 | | | | | | 계 |
|---|---|---|---|---|---|---|---|
|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 개선 | (중복) | |
| 국회운영 | - | - | - | 5 | 36 | - | 41 |
| 법제사법 | - | - | 18 | 43 | 114 | (3) | 172 |
| 정무 | - | - | 15 | 96 | 131 | (3) | 239 |
| 기획재정 | - | - | 18 | 51 | 97 | (3) | 163 |
| 교육 | - | - | 6 | 40 | 55 | (3) | 98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 - | 24 | 64 | 61 | (1) | 148 |
| 외교통일 | - | - | 19 | 39 | 46 | (3) | 101 |
| 국방 | - | - | 22 | 30 | 61 | - | 113 |
| 행정안전 | - | - | 11 | 38 | 53 | (4) | 98 |
| 문화체육관광 | - | 1 | 15 | 62 | 68 | (7) | 139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 - | 10 | 49 | 149 | (2) | 206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 - | 10 | 72 | 81 | (11) | 152 |
| 보건복지 | - | - | - | 49 | 164 | (8) | 205 |
| 환경노동 | - | - | 26 | 75 | 97 | (8) | 190 |
| 국토교통 | - | - | 43 | 65 | 68 | (9) | 167 |
| 여성가족 | - | - | 7 | 8 | 34 | (2) | 47 |
| 공통 | - | - | - | 7 | 8 | (1) | 14 |
| **합 계** | **-** | **1** | **244** | **793** | **1,323** | **(68)** | **2,293** |

# 4.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처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 위원회 | 부처명 | 시정요구유형 | | | | | | 계 |
|---|---|---|---|---|---|---|---|---|
| |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
| 국회운영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 - | - | - | 1 | 4 | - | 5 |
| | 대통령경호처 | - | - | - | - | 3 | - | 3 |
| | 국회 | - | - | - | 4 | 24 | - | 28 |
| | 국가인권위원회 | - | - | - | - | 5 | - | 5 |
| | 소계 | - | - | - | 5 | 36 | - | 41 |
| 법제사법 | 법무부 | - | - | 4 | 20 | 65 | (2) | 87 |
| | 법제처 | - | - | - | 2 | 10 | - | 12 |
| | 감사원 | - | - | 11 | 9 | 2 | - | 22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2 | 8 | - | 10 |
| | 헌법재판소 | - | - | 1 | 1 | 10 | - | 12 |
| | 대법원 | - | - | 2 | 9 | 19 | (1) | 29 |
| | 소계 | - | - | 18 | 43 | 114 | (3) | 172 |
| 정무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 - | 1 | 21 | 27 | - | 49 |
| | 국가보훈부 | - | - | 7 | 21 | 30 | (2) | 56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12 | 14 | - | 26 |
| | 금융위원회 | - | - | 1 | 25 | 48 | - | 74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2 | 11 | 2 | (1) | 14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4 | 6 | 10 | - | 20 |
| | 소계 | - | - | 15 | 96 | 131 | (3) | 239 |
|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 | - | - | 18 | 34 | 65 | (3) | 114 |
| | 국세청 | - | - | - | 2 | 11 | - | 13 |
| | 관세청 | - | - | - | 4 | 6 | - | 10 |
| | 조달청 | - | - | - | 10 | 5 | - | 15 |
| | 통계청 | - | - | - | 1 | 10 | - | 11 |
| | 소계 | - | - | 18 | 51 | 97 | (3) | 163 |
| 교육 | 교육부 | - | - | 6 | 38 | 52 | (3) | 93 |
| | 국가교육위원회 | - | - | - | 2 | 3 | - | 5 |
| | 소계 | - | - | 6 | 40 | 55 | (3) | 98 |

(단위: 건)

| 위원회 | 부처명 | 시정요구유형 | | | | | | 계 |
|---|---|---|---|---|---|---|---|---|
| |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17 | 52 | 37 | (1) | 105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4 | 8 | 15 | - | 27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2 | 1 | 5 | - | 8 |
| | 우주항공청 | | | 1 | 3 | 4 | - | 8 |
| | 소 계 | - | - | 24 | 64 | 61 | (1) | 148 |
| 외교통일 | 외교부 | - | - | 10 | 22 | 19 | - | 51 |
| | 통일부 | - | - | 9 | 13 | 17 | (3) | 36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 - | 2 | 1 | - | 3 |
| | 재외동포청 | - | - | - | 2 | 9 | - | 11 |
| | 소 계 | - | - | 19 | 39 | 46 | (3) | 101 |
| 국방 | 국방부 | - | - | 12 | 9 | 33 | - | 54 |
| | 병무청 | - | - | - | 1 | 11 | - | 12 |
| | 방위사업청 | - | - | 10 | 20 | 17 | - | 47 |
|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22 | 30 | 61 | - | 113 |
|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 | - | - | 7 | 22 | 24 | (3) | 50 |
| | 경찰청 | - | - | - | 7 | 7 | - | 14 |
| | 소방청 | - | - | 1 | 5 | 6 | - | 12 |
| | 인사혁신처 | - | - | 2 | 1 | 10 | (1) | 12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2 | 6 | - | 8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1 | 1 | - | - | 2 |
| | 소 계 | - | - | 11 | 38 | 53 | (4) | 98 |
|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 | - | 1 | 10 | 46 | 58 | (7) | 108 |
| | 국가유산청 | - | - | 5 | 16 | 10 | - | 31 |
| | 소 계 | - | 1 | 15 | 62 | 68 | (7) | 139 |

(단위: 건)

| 위원회 | 부처명 | 시정요구유형 | | | | | | 계 |
|---|---|---|---|---|---|---|---|---|
| |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12 | 58 | - | 70 |
| | 농촌진흥청 | - | - | - | 4 | 6 | - | 10 |
| | 산림청 | - | - | - | 16 | 32 | - | 48 |
| | 해양수산부 | - | - | 10 | 15 | 39 | (2) | 62 |
| | 해양경찰청 | - | - | - | 2 | 14 | - | 16 |
| | 소계 | - | - | 10 | 49 | 149 | (2) | 206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 | - | 6 | 49 | 31 | (6) | 80 |
| | 특허청 | - | - | - | 6 | 6 | - | 12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4 | 17 | 44 | (5) | 60 |
| | 소계 | - | - | 10 | 72 | 81 | (11) | 152 |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 - | - | - | 22 | 124 | (3) | 143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4 | 22 | (2) | 24 |
| | 질병관리청 | - | - | - | 23 | 18 | (3) | 38 |
| | 소계 | - | - | - | 49 | 164 | (8) | 205 |
| 환경노동 | 환경부 | - | - | 19 | 30 | 47 | (5) | 91 |
| | 기상청 | - | - | - | 8 | 6 | (1) | 13 |
| | 고용노동부 | - | - | 7 | 37 | 44 | (2) | 86 |
| | 소계 | - | - | 26 | 75 | 97 | (8) | 190 |
|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 - | - | 43 | 60 | 65 | (9) | 159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 3 | 1 | - | 4 |
| | 새만금개발청 | - | - | - | 2 | 2 | - | 4 |
| | 소계 | - | - | 43 | 65 | 68 | (9) | 167 |
| 여성가족 | 여성가족부 | - | - | 7 | 8 | 34 | (2) | 47 |
| | 소계 | - | - | 7 | 8 | 34 | (2) | 47 |
| 공통 | | - | - | - | 7 | 8 | (1) | 14 |
| 합계 | | - | 1 | 244 | 793 | 1,323 | (68) | 2,293 |

【붙　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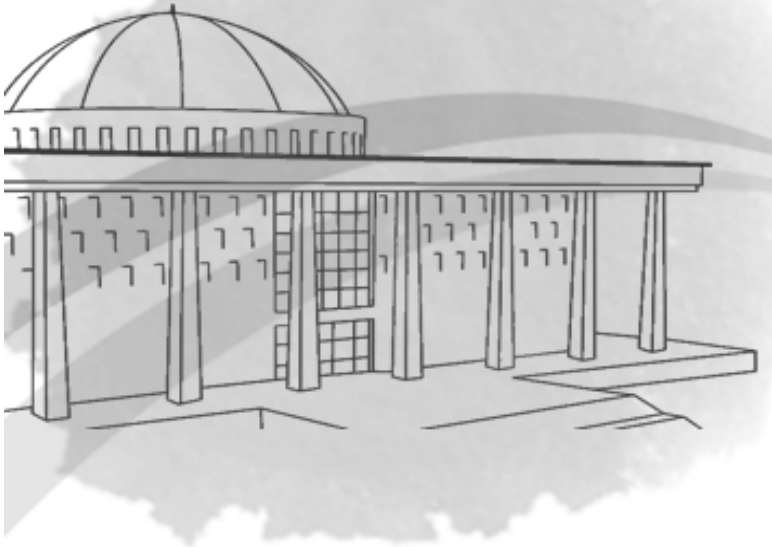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결산

# 시 정 요 구(안)

2024. 11.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 국회운영위원회



#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5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본경비(1011-200) | 주의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 지적사항 | ○ 기본경비를 집행하면서 부족한 국외업무여비(220-02),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등의 충당을 위해 총 14개 비목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10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8억 9,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이 있었음<br>- 특히 대통령 국외 순방 시 사전 업무협의 및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인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당초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용과 세목조정을 통해 4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00만원을 집행함<br>○ 최근 5년간 기본경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용 및 세목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br>-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의 등의 예산 변경은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건비(1001-1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비서실<br>및 국가안보실</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인건비(1001-100) 예산현액 422억 8,800만원 중 366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6,5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86.6%)이 상대적으로 부진함.<br>-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력을 감축·운영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23년 12월 기준 정원 대비 약 25% 감축 운영 중(정원 490명 / 현원 368명)<br>[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력 현황 ]<br>(2023. 12월 기준, 단위: 명)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총 계</th><th>정무직</th><th>비서관</th><th>행정관</th><th>행정요원</th></tr>
<tr><td rowspan="3">대통령<br>비서실</td><td>정원</td><td>443</td><td>12</td><td>38</td><td>238</td><td>155</td></tr>
<tr><td>현원</td><td>336</td><td>7</td><td>34</td><td>152</td><td>143</td></tr>
<tr><td>과부족</td><td>-107</td><td>-5</td><td>-4</td><td>-86</td><td>-12</td></tr>
<tr><td rowspan="3">국가<br>안보실</td><td>정원</td><td>47</td><td>3</td><td>7</td><td>30</td><td>7</td></tr>
<tr><td>현원</td><td>32</td><td>3</td><td>7</td><td>17</td><td>5</td></tr>
<tr><td>과부족</td><td>-15</td><td>-</td><td>-</td><td>-13</td><td>-2</td></tr>
<tr><td colspan="2">정원 계</td><td>490</td><td>15</td><td>45</td><td>268</td><td>162</td></tr>
<tr><td colspan="2">현원 계(정원 대비 비율)</td><td>368(75%)</td><td>10(67%)</td><td>41(91%)</td><td>169(63%)</td><td>148(91%)</td></tr>
</table>
❍ 이러한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운영은 특근매식비(210-05) 및 직책수행경비(250-02)에도 영향을 주어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 86.3%와 83.8%로 높지 않은 상황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비체계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정운영관리(1131-301),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600) | 제도개선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 지적사항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br>○ 첫째, 「국정운영관리」의 경우 지난 2023년 7월 '일반수용비 부족'을 이유로 일반용역비(210-14) 1억 6,12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였으나, 같은 달에 동일한 금액을 다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을 조정하였음.<br>- 이후 9월에 다시 일반용역비(210-14) 1억 6,12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다시 세목조정 하여 비체계적 세목조정이 있었음.<br>○ 둘째,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 '불용 최소화 및 사업량 조정'을 이유로 관리용역비에서(210-15) 3,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였으나, 같은 달 조정받은 일반수용비(210-01) 3,000만원을 다시 관리용역비(210-15)로 세목조정 하였음.<br>○ 상기 두 사안과 같이 동일한 세목 간 동일한 금액의 세목조정이 수 차례 이루어지거나, 세목조정된 예산이 바로 다시 원래 세목으로 환원되었다는 점은 세목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정책연구용역의 보다 적극적인 등록·공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정운영관리(1131-301),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600) | 제도개선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 지적사항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 예산현액 5억 4,000만원 중 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국정운영관리」에서 12건,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서 3건 등 총 15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br>○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총 15건 중 정부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한 용역은 8건이고, 이 중 2건을 공개하여 전체 용역 중 공개율은 13.3%에 해당함.<br>* 참고로, PRISM에 등록하였으나 공개하지 아니한 6건은 국민이나 타 기관이 해당 연구용역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미등록과 유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시설관리 및<br>개선 소요 관련<br>적정예산<br>사전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시설관리 및 개선(11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비서실<br>및 국가안보실</td></tr>
<tr><td>지적사항</td><td>○ 「시설관리 및 개선」은 청사 경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1억 7,100만원 중 50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당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실시설계비(420-02)에 대하여, 동 사업 내 공사비(420-3)에서 1억 1,000만원을 조정받은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여 본예산 대비 333%의 집행률을 기록함.<br>[ 시설관리 및 개선 내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결산 내역 ]<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예산액</th><th>이 · 전용</th><th>예비비</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
<tr><td>실시설계비(420-02)</td><td>40</td><td>110</td><td>-</td><td>150</td><td>133</td><td>17</td></tr>
<tr><td>공사비(420-03)</td><td>2,890</td><td>△110</td><td>-</td><td>2,780</td><td>2,686</td><td>94</td></tr>
</table>
○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공사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안 확정시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세목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 당초 예산 규모를 상당히 초과하여 집행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사 등 노후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2. 대통령경호처(3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연례적<br>경호장비 납품<br>지연문제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세입 - 위약금(57-57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경호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위약금」은 지체상금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호장비 납품 지연을 이유로 1,3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징수결정하여 전부 수납하였음.<br>- 지체상금은 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대통령경호처는 세입예산으로 위약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2019년 이후 매년 위약금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고 있음.<br>[ 최근 5년간 대통령경호처 위약금 수납 현황 ]<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th><th>미수납액</th><th>불납결손액</th></tr>
<tr><td>2019년도</td><td>0</td><td>13</td><td>13</td><td>0</td><td>0</td></tr>
<tr><td>2020년도</td><td>0</td><td>10</td><td>10</td><td>0</td><td>0</td></tr>
<tr><td>2021년도</td><td>0</td><td>20</td><td>20</td><td>0</td><td>0</td></tr>
<tr><td>2022년도</td><td>0</td><td>6</td><td>6</td><td>0</td><td>0</td></tr>
<tr><td>2023년도</td><td>0</td><td>13</td><td>13</td><td>0</td><td>0</td></tr>
</table>
○ 납품기한 미준수 등에 기인한 경호장비 납품 지연은 차질 없는 경호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용역사업 추진 시 계약 관계법령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231-5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경호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대통령경호처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는 재무, 공보업무 등의 용역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1,800만원 중 2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대통령경호처는 일반용역비를 통해 ‘재무결산 및 회계, 예산 업무지원을 위한 용역’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3회계연도 시작 이전인 202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br>[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 ]<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계약명</th><th>발주금액<br>(입찰공고서)</th><th>계약금액<br>(계약서)</th><th>계약 기간</th><th>계약유형</th></tr>
<tr><td>재무결산위탁용역</td><td>20</td><td>19.5</td><td>2022.11. ~ 2023.11.</td><td>수의</td></tr>
</tabl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임차계약 · 운송계약 · 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상기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경호처는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신속·면밀한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경호경비과학화(1231-501) | 제도개선 | 대통령경호처 |
| | | 지적사항 | ○ 「경호경비과학화」는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된 R&D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360-05)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br>-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으로, ① 일반적 금지물품과 전략적 위험물품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②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색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③ 이러한 AI 검색기술을 이용한 ‘보안검색업무 교육체계 정립’ 등 3개의 단위과제로 구성<br>○ 동 R&D 사업 구축을 위하여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7 비율로 분담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br>-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거치면서 사업 총 규모는 동일하되, 대통령경호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담 비율이 종전 3:7에서 5:5로, 사업기간이 종전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변경되었음.<br>○ 대통령경호처는 기관 간 예산 분담비율이 변경(3:7 ⇒ 5:5)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담금 감소분이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총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남은 3개년도(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통령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3. 국회(28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 추가 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2033-302) | 주의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상 공사비 규모와 설계를 통해 계상된 공사비 간 간극이 상당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던 타당성재조사가 지연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br>-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2021년부터 4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2022년 8월 수의계약 예정이었던 시공업체와 가격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23년에는 타당성재조사 지연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br>- 2024년 1월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어 재추진 중이나 당초 2024년 6월 준공예정에서 2026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향후 공사일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발전적 운영 방향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입법정보화(2034-500)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 외국인이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국회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가능함<br>○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가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 및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전자도서관 전문가 정보DB 인지도 및 활용도 저조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도서관 운영(3035-500) | 주의 | 국회도서관 |
| | | 지적사항 | ○ 국회전자도서관 운영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매년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의원 및 국회직원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낮아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에 한계를 보임<br>- 연간이용건수가 매년 감소하여 일평균 109건 수준이며, 국회구성원들의 인지율이 36% 수준<br>- 국회도서관이 구독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Web-DB인물검색(조인스) 등 유사 서비스 대비 정보의 양과 차별성에 한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도서관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DB와의 차별성 확보 및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국유재산 장기<br>미수납 방치<br>문제 해결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세입) - 변상금(57-571) · 기타경상이전 수입(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세입 결산 상 커피전문점·식당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미수납액은 총 1억 5,000만원임.<br>[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액 및 미수납액 현황 ]<br>(2023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변상금</th><th rowspan="2">부과총액</th><th rowspan="2">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th><th rowspan="2">미수납잔액</th></tr>
<tr><th>변상금</th><th>연체료</th></tr>
<tr><td>가배두림</td><td>81</td><td>61</td><td>142</td><td>25</td><td>116</td></tr>
<tr><td>㈜고촌정</td><td>87</td><td>66</td><td>153</td><td>118</td><td>34</td></tr>
<tr><td>합 계</td><td>168</td><td>127</td><td>294</td><td>144</td><td>150</td></tr>
</table>
- 2011.2.15.~10.10.(8개월) 의정관을 무단점유한 커피전문점(가배두림)에 대하여 변상금 8,100만원, 연체료 6,100만원 부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2,500만원 불납결손 처리<br>- 2014.6.21.~2015.1.16.(7개월) 헌정기념관을 무단점유한 식당(고촌정)에 대하여 변상금 8,700만원, 연체료 6,600만원 부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1억 1,800만원 불납결손 처리<br>❍ 국회사무처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관할세무서 위탁징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회수 위탁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나 회수 실적이 없고, 소멸시효(5년) 경과로 매년 변상금 및 연체료의 상당액이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음.<br>※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 : 총 1억 4,400만원 (2023년말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과 변상금 연체료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세출) - 총괄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br>○ 2023년도 국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 678억 9,300만원 중 6억 800만원으로, 그 비율은 0.90%임.<br>- 최근 3년간 국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및 2023년도 공공기관 전체 평균(1.07%) 대비 미흡<br>※ 최근 3년간 우선구매비율 현황: (2020) 1.15% , (2021) 1.27%, (2022) 1.15%<b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동 제도와 관련된 법정 구매목표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물품·용역구매 집행 부서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 제도의 적용이 용이한 분야를 발굴·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SNS동영상<br>제작지원<br>사업의 충실한<br>사업계획 수립<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입법활동지원(1031-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입법활동지원의 내역사업인 “SNS 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정책세미나 요약 영상제작, 입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국회방송 SNS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0억원 중 집행액이 10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35%에 불과함.<br>[SNS 동영상 제작지원 2023년도 결산 현황 ]<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내역명</th><th colspan="6">2023</th><th rowspan="2">2024<br>예산액</th></tr>
<tr><th>예산액</th><th>이·전용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SNS동영상<br>제작지원<br>(일반용역비)</td><td>3,000</td><td>-</td><td>3,000</td><td>1,051</td><td>707</td><td>1,242</td><td>3,000</td></tr>
</table>
○ 동 사업 예산의 집행부진은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것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SNS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의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정책연구비의<br>적정규모 예산<br>편성 및 집행률<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입법 및 정책개발(1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입법 및 정책개발」 정책연구비 예산액 21억원 중 13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집행률(63.5%)을 보임.<br><br>[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br>(단위: 백만원, %)<br>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th><th rowspan="2">예산<br>현액(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불용액</th><th colspan="2">집행률</th></tr>
<tr><th>본예산<br>(A)</th><th>추경</th><th>본예산대비<br>(C/A)</th><th>현액대비<br>(C/B)</th></tr>
<tr><td>2019</td><td>1,200</td><td>1,200</td><td>200</td><td>1,400</td><td>1,323</td><td>77</td><td>110.3</td><td>94.5</td></tr>
<tr><td>2020</td><td>1,200</td><td>810</td><td>100</td><td>910</td><td>886</td><td>24</td><td>73.8</td><td>97.4</td></tr>
<tr><td>2021</td><td>1,200</td><td>1,200</td><td>－</td><td>1,200</td><td>1,191</td><td>9</td><td>99.2</td><td>99.2</td></tr>
<tr><td>2022</td><td>1,200</td><td>1,200</td><td>－</td><td>1,200</td><td>909</td><td>291</td><td>75.8</td><td>75.8</td></tr>
<tr><td>2023</td><td>2,100</td><td>2,100</td><td>△28</td><td>2,072</td><td>1,333</td><td>739</td><td>63.5</td><td>64.3</td></tr>
</table>
※정책연구비: 입법·정책개발 목적의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 (1회 최대 1,000만원, 2명 이상의 의원 공동 발주 시는 최대 2,000만원 한도)<br><br>❍ ①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실집행 규모가 9억원에서 13억원 내외였다는 점, ②국회의원 궐원으로 인한 미집행, ③정보공개 청구나 언론 보도, ④연구용역 표절 검사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정책연구비가 소극적으로 집행된 측면을 고려하면, 2023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은 실수요와 집행 가능성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정책연구비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의원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비의 집행 대상, 활용 방법 및 표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의원실의 분기별 정책연구비 지출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소요가 있는 의원실은 조기 추가배정을 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초청외교<br>활성화를 위한<br>개선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의원외교활동 (10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의원외교활동은 초청외교,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도 초청외교의 경우 총 57건을 계획하였으나 성사 실적은 15건(26.3%)에 그침.<br>[ 의원외교활동 부문별 계획 대비 실적 현황 ]<br><table><tr><th></th><th>계 획</th><th>실 적</th><th>계획대비 비율</th></tr><tr><td>초청외교</td><td>57</td><td>15</td><td>26.3%</td></tr><tr><td>방문외교</td><td>74</td><td>67</td><td>90.5%</td></tr><tr><td>국제회의</td><td>22</td><td>21</td><td>95.5%</td></tr></table>❍ 초청외교 실적 부진은 의원외교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사업 간 과다한 예산의 조정과 불용을 유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br>- 초청외교에 해당하는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33억 700만원에서 16억 2,300만원이 내역조정(감액)된 예산현액 16억 8,400만원 중 10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초청외교가 한국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의회 간 우호적인 교류·협력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회외교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청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주요 현안과 관련 있는 각국 의회 상임위원장, 의원친선협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초청 대상을 확대하고, 의회외교 지원역량을 초청외교에 보다 집중하여 외빈 방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초청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연구과제 추천제도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미래연구원) |
| | | 지적사항 |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2023년의 경우 총 35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음.<br>-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말에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과제를 추천받고 있음.<br>○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한 연구과제는 없고,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추천한 연구과제 건수는 총 12건(2022년 8건/2023년 4건)으로, 추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임.<br>- 동 제도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가 국회입법과 정부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및 특위와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부터 입법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성과가 유의미한 입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추천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자료제공 요청규정 활용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미래연구원) |
| | | 지적사항 |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는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br>-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하는 미래연구가 현재 상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됨.<br>○ 다만,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제정된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통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례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br>- 이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은 자료제공 요청의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자료요청에 필요한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br>○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분야의 소관 국가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연구인력<br>퇴직자 발생 시<br>후임자 적시<br>채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회사무처<br>(미래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현액 40억 8,000만원 중 40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불용하였음.<br>- 불용액은 결원인건비 4,7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1,300만원임.<br>○ 국회미래연구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연도 4분기 출연금 교부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원인건비를 제외하고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음.<br>- 최근 4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결원인건비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였음.<br>[ 최근 4년간 국회미래연구원 결원인건비 내역 ]<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결원인건비</td><td>55</td><td>125</td><td>39</td><td>4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미래연구원은 결원인건비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임자 채용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국회미래연구원 예산이 편성된 단위사업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회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연구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됨.<br>○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지위는 ‘헌정회’, ‘입법정책네트워크 단체’ 등과 함께 ‘국회활동관련단체’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 및 출연금 교부 결정 통지’, ‘분기별 출연금 교부 및 실적보고’ 등을 국회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연 예산을 국회활동관련단체 지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활동 (2031-300)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 국회인권센터는 국회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권리구제 활동 등을 추진하는 감사관 산하의 부서로, “국회인권센터운영”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1,700만원에서 이·전용(증) 1백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1,800만원 중 1,700만원이 집행되고 1백만원이 불용되었음.<br>○ 현재의 국회인권센터 인력(4명: 센터장 및 국회인권보호관 3명)과 예산으로는 전체 직원(국회 소속기관 및 의원 보좌진 등 4,500여명)을 위해 내실있는 상담 및 사건 조사, 예방 프로그램의 진행에 한계가 있음.<br>- 국회인권센터운영 예산은 현재 감사활동(2031-300)의 세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회민원센터(2031-308)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br>○ 국회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 편성 및 조직개편·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국회박물관<br>기획전시 사업<br>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2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연출·설계 및 제작·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일반용역비 예산 1억 6,0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br>- 동 사업은 종전에 진행 중이던 기획전시(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 기념 특별전)가 2023년 11월에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기획전시 개편을 위한 연출·설계·제작·설치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임.<br>[ 일반용역비 예산 이월·집행 현황 ]<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건 명</th><th colspan="2">2023 예산</th><th colspan="3">2024 집행</th></tr>
<tr><th>예산액</th><th>차년도이월액</th><th>사업수행기간</th><th>집행액</th><th>계약방식</th></tr>
<tr><td>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td><td>160</td><td>160</td><td>2024.2.～8.</td><td>157</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r>
</table>
❍ 동 사업은 신규 기획전시 내용의 확정 지연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찰 등으로 연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액 1억 6,000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고, 금년도 2월에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이후 7월 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규 기획전시는 7월 15일에 대중에 오픈되었음.<br>❍ 이러한 사업 지연은 예산의 이월집행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시공간 폐쇄의 장기화로 국회박물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전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전시교체 계획 및 기획전시 개편안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시교체 사업의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헌정자료<br>확충을 위한<br>자산취득비<br>집행률 제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2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세사업 내 “자산취득비”는 국회박물관 전시콘텐츠 확보 및 연구자료 활용에 필요한 헌정자료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6,100만원(55.5%)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은 5,2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내이며, 집행률은 60% 내외임.<br>[ 최근 3년간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자산취득비(430-01) 집행 현황 ]<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 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헌정자료 구입실적</th></tr>
<tr><td>2021</td><td>110</td><td>70</td><td>63.6%</td><td>총 197건 539점</td></tr>
<tr><td>2022</td><td>110</td><td>52</td><td>47.3%</td><td>총 52건 98점</td></tr>
<tr><td>2023</td><td>110</td><td>61</td><td>55.5%</td><td>총 154건 342점</td></tr>
</table>
❍ 자산취득비의 연례적 불용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시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박물관의 전시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br>※주요 국립박물관의 2024년도 자료(유물)구입 예산액: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7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8.5억원), 국립한글박물관(10.8억원), 국립민속박물관(14.2억원) 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헌정자료 수집에 대한 홍보 강화, 헌정자료 구입 횟수의 확대 및 자료구입 방식의 다변화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의 적정 연수기간 및 인원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수활동지원 (2031-306)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사업(신규)은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6개월 이상 1년 이내) 교육·연수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원 중 1억 2,100만원(40.3%)이 집행되었고, 1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이러한 집행부진은 당초 계획 대비 교육정원과 연수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연수과정 운영경비의 집행소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br>- (계획) 교육정원 17명, 10개월→ (집행) 교육정원 11명, 6개월<br>○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장기 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지방의회의 연수대상자 선발 등 사전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2023년 2월이 아닌 6월에 연수과정이 시작되었음.<br>○ 연수계획의 차질없는 시행과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효과성 제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 과정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수인원의 확대와 연수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이 필요해 보임.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비 과정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연수인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연수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와 입법지원 서비스의 연계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입법서비스지원활동 (2032-300)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지역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2023년도 결산 현황: 예산액 6,200만원에서 이·전용(감) 3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5,9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8백만원을 불용<br>○ 그러나, 최근 토론회 개최 및 관련 법률안 입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토론회 개최와 법률안 입안지원 서비스 간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함.<br>- 제21대국회 기간 중 국회사무처는 총 11건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으나, 토론회 개최 이후에 해당 의원실로부터 토론회 주제와 관련한 법률안의 입안을 의뢰받아 성안한 실적은 1건임.<br>○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가 법률안 입안·검토 지원서비스와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일회적인 행사 개최 지원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음.<br>※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최근(2024.5.)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여 토론회 개최 제한사유에 “토론회의 주제인 지역현안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하여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 |
| | | 시정 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와 입안지원 서비스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토론회 개최를 신청한 의원실저을 대상으로 법률안 입안서비스 및 입안의뢰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국회방송 경쟁력 강화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방송운영 (2036-300) | 제도개선 | 국회사무처 |
| | | 지적사항 | ○ 국회방송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시청자 만족도’ 는 목표수치인 70점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음.<br>- 최근 3년간 시청자 만족도는 60점대이며, 2023년도의 시청자 만족도는 62.9점임.<br>- 국회방송의 시청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의 국회방송 시청률은 0.036%(전체 223개 채널 중 84위)로 전년도의 0.052% (275개 채널 중 65위) 대비 0.016%p 하락하였음.<br>○ 최근 4년간 국회방송의 직접제작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라이브 뉴스, 의사·의정 중계, 법률 및 책 소개 프로그램 중심의 구성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전체 방송시간 중 본방송 비율이 줄고 재방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재방송 비율: 2020년도 60.9% ⇒ 2023년도 64.5%)하였음<br>○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콘텐츠 경쟁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회방송이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채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사무처는 본방송시간 확대와 더불어 신규 시청자 유입을 위한 특화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등 국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미디어 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 제도개선 | 국회도서관 |
| | | 지적사항 | ○ 2023년 8월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국회의정관 3층) 내에 미디어 스튜디오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7,70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br>○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미디어 스튜디오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월평균 7회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스튜디오가 국회의정관에 설치되어 있어 주요 사용자인 국회의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br>- 비슷한 시기(2023년 7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이실직고 스튜디오'의 2023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이용실적 53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낮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도서관은 운영시간·요일의 확대 및 국회 내 다른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디어 스튜디오 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인지도·활용도 제고 및 개선 방안 고려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 제도개선 | 국회도서관 |
| | | 지적사항 | ○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는 뉴스, 소셜 데이터 등 국회 외부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현안 이슈 추출 및 관련 전문자료를 연계 제공하여 국회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임.<br>○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사업에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6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br>○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일평균 이용자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23년 일평균 이용자수는 462명 수준임.<br>○ 「2023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 및 국회직원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국회도서관 서비스 중 최하위를 기록함.<br>- 인지율 28.8%, 이용경험률 47.3%, 종합만족도 66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도서관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아르고스를 사용자 편의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 | 제도개선 | 국회예산정책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8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3.4%에 불과함.<br>-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비 8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일반수용비는 2,600만원 중 1,016만원을 집행함.<br>○ 이는 2022년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규 설치·운영하면서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3회에 불과하였고 개최 시기 또한 연말에 집중되는 등 2023년 운영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였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 | 제도개선 | 국회예산정책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의 회답기간 준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도 전년대비 늘어나, 전반적으로 회답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음.<br>- 회답기한 준수율: 70.7% → 62.6% (△8.1%p)<br>- 평균 회답소요일수: 13.9일 → 17.8일 (3.9일)<br>○ 의안 비용추계가 지연될 경우 의안 심사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어려워 비용추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활용도·인지도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 제도개선 | 국회예산정책처 |
| | | 지적사항 | ○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경제 관련 주요 통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운영 중임.<br>○ 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3년 기준 국회 내부 일평균 이용자 수는 8.76명에 불과함. 활용도가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통계수치의 최신화가 미흡한 점임.<br>- 일평균 이용자 수: 82명('19) → 112명('20) → 106명('21) → 104명('22) → 92명('23)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수치 최신화를 통한 재정통계시스템의 활용도·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조사회답의 적시성 제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 제도개선 | 국회입법조사처 |
| | | 지적사항 | ○ 전년대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회답 처리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는 증가하여 평균적인 회답의 적시성이 떨어짐.<br>- 조사회답 처리건수: 5,071건 → 4,822건 (△249건)<br>- 평균 회답소요일수: 15.7일 → 16.9일 (1.2일)<br>○ 특히, 부서별로 조사분석 회답의 평균처리일의 편차가 최대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전년대비 평균처리일이 7일 이상 늦어지고 있음.<br>-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회답기간의 '적시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회의원이 47.4%, 보좌진이 50%로 조사 지표 중 가장 낮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서비스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증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조사회답 관련<br>외부자문<br>활성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입법조사처</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층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문가 자문을 19건 실시함.<br>❍ 최근 3년간 조사회답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자문은 매년 15~25건 수준으로, 연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처리하는 조사회답이 약 5,000건 가량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 자문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br>[ 최근 3년간 입법조사회답 건수 및 외부전문가 자문 건수 ]
<table>
<tr><th>구 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입법조사회답 처리 건수(A)</td><td>5,763</td><td>5,071</td><td>4,822</td></tr>
<tr><td>외부전문가 자문 건수(B)</td><td>15</td><td>25</td><td>19</td></tr>
<tr><td>비율(A/B)</td><td>0.26%</td><td>0.49%</td><td>0.39%</td></tr>
</table>
-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인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약 25%가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외부자문 적극활용”을 제시하는 등 외부자문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상황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의 질적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분야별 균형을 고려한 보고서 발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 제도개선 | 국회입법조사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이 계획 대비 발간실적이 미진함. 이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반면,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는 보고서 발간이 저조함.<br>- 구체적으로, 2023년에 발간된 ‘NARS 입법·정책’ 23권 중 정치행정분야는 14권(61%), ‘NARS 현안분석’ 32권 중 정치행정분야가 16권(50%)이었음.<br>○ 실·국별 보고서 발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당초 발간계획 수립 시에는 분야별로 고르게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산업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보고서 발간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기 때문임.<br>○ 이와 같이 보고서 발간이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 보고서의 주요 수요자인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입법·정책 조사 수요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보고서 발간시기 평준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 제도개선 | 국회입법조사처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인 ‘NARS 입법·정책’과 ‘NARS 현안분석’의 발간 시기가 10월 이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br>- 4/4분기 발간 비율: 60.0%('21) → 53.0%('22) → 58.2%('23)<br>○ 특히, 2023년 기준 ‘NARS 입법·정책’은 총 23건 중 19건(82.6%)이 4/4분기에 발간되었고, 12월에 발간된 건수는 14건(60.9%)에 달했음. ‘NARS 현안분석’은 총 32건 중 13건(40.6%)이 4/4분기에 발간되었음.<br>○ 이들 보고서가 회계연도 말(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발간될 경우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활용하는 데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연중 고르게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세미나 관련 예산 효율적 집행 도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 | 제도개선 | 국회입법조사처 |
| | | 지적사항 |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1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안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총 2,342만원을 집행하였음.<br>○ 동 세미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인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 계획되지 않은 예산집행일 뿐만 아니라 장소변경 등 사업수행방식 조정을 통해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부합하지 않음.<br>-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내부 토론회장 등이 아닌 무대·음향·조명장치 등이 구비되지 않은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함에 따라, 관련 시설·장비 설치를 위해 일반용역비 2,000만원을 세목조정을 통해 확보하여 1,985만원을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미나·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가급적 국회 내 회의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방지할 것 | | |

## 4. 국가인권위원회(5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사업 취지에<br>적합한<br>상담서비스<br>활성화 방안<br>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인권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2023결산 1억 6,700만원)은 전문상담위원 인원 수와 서비스 이용자의 방문 일수 및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집행률 또한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br>※2019년 대비 2023년 수치 현황
<table>
<tr><th>구 분</th><th>2019년</th><th>2023년</th></tr>
<tr><td>전문상담위원 수</td><td>51명</td><td>26명</td></tr>
<tr><td>상담희망자 방문 일수</td><td>884일</td><td>153일</td></tr>
<tr><td>방문 상담 건수</td><td>1,210건</td><td>208건</td></tr>
<tr><td>집행률</td><td>118.2%</td><td>21.3%</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상담위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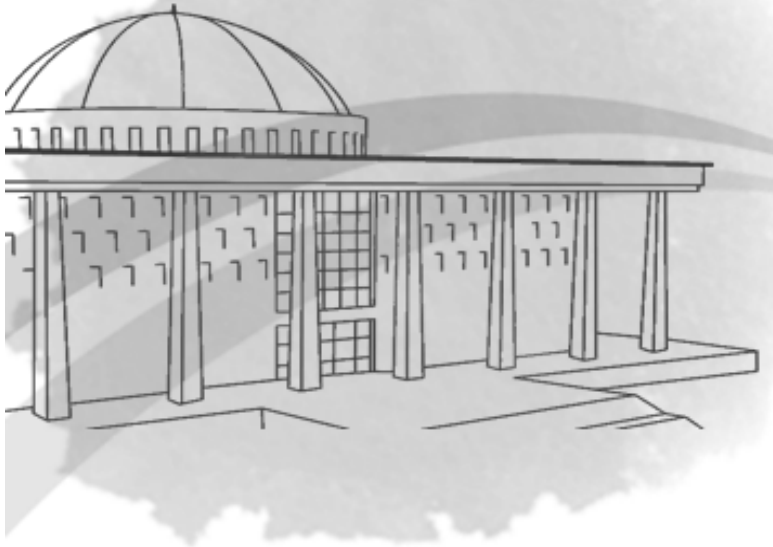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1036-300) | 제도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설립된 국제전문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 6억 8,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br>○ 2018년에 센터가 설립된 이후 2019~2021년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2022~2023년에는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한 실적은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국들과 소통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노후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 제도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콘텐츠의 경우 최대 5년(3년 원칙)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마다 기존 콘텐츠에 대한 개정작업과 신규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고 있음.<br>○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개 콘텐츠 중 2023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가 15개로 나타나고, 10년 전인 2013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도 7개에 이르는 등 시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br>- 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군인 인권(2013년 과정 개시), 학교 폭력(2014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 ② 2017년 과정 개시 후 다섯 차례 법률이 개정된 장애인차별법 관련 콘텐츠와 ③ 2022년 실시한 콘텐츠 분석 결과 사용중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과 인권(2019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시의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 확보 및 품질 제고와 인권분야별 적정 안배 등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콘텐츠 개편 및 신규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정보인권전문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 제도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2023. 1. 1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위원회로서 2023년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회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였으며, 참석사례비 등 소요 경비(1,719만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사업에 이미 편성된 정보인권포럼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였음.<br>○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일반적인 다른 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점, 전문위원회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br>○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회의장소 임차로 인하여 임차료(286만원)가 추가로 지출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내교류협력(1036-303) | 제도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내교류협력(1036-303) 사업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2023년에는 총 16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단체별로 57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br>○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9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국회 등으로부터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br>- 기획재정부의 지적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동일 단체에서 총 5회에 걸쳐 선정되는 등 매년 특정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br>- 5회 선정단체: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3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당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법제사법위원회



# 1. 법무부(87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한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 및 기관별 인원 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법무부 청년인턴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법무부 청년인턴 경쟁률이 높지 않고, 채용 후 근무 포기 인원이 발생함.<br>※ 경쟁률 : (1차) 1.82대 1, (2차) 2.61대 1, (3차) 2.03대 1<br>※ 2023년 채용한 200명 중 18%인 36명이 채용 후 근무 포기<br>○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라서도 경쟁률 차이가 있었는데, 기관별 업무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가 청년들 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br>※ 1차 공고 기준 기관별 경쟁률<br>: (검찰) 2.95대 1, (범정국) 1.33대 1, (교정) 0.94대 1, (출입국) 2.82대 1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2023년 청년인턴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를 산정하고, 소속기관별 인턴 운영규모를 결정할 때 기관별 업무특성, 출퇴근 편의성, 청년 선호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청년인턴 운영 취지에 맞는 직무설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무부 청년인턴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법무부 소속기관별로 부여한 청년인턴 직무의 상당수가 행정지원 및 자료정리, 행정지원·민원서비스,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 위주로,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과정 경험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청년인턴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br>○ 수사, 출입국심사, 교정 등 업무수행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높은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근무하는 청년인턴에게 적극적으로 직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청년인턴이 전공과 관심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근무한 청년인턴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조사·반영한 직무 설계 및 인턴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br>○ 법무부는 공안업무 중심인 기관 업무 특성상 법무부가 청년인턴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양성평등정책 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한 운영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양성평등정책 지원(7032-305)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동 사업에서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 및 관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2020년부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br>○ 2023년 개최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4차례 회의 중 법무부 차관 및 주요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 참석 실적이 전무하였고, 제4차 회의에 내부위원 한 명만 참석하는 등 내부위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음<br>○ 회의 안건으로 동 사업에서 수행한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은 과제 선정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외부심사(정책연구용역 관련 평가위원회)가 진행된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되었음<br>※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 계약액 5,900만원, 계약기간 2023.4.~11.,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내부위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연구용역 평가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전산장비 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2023년 동 사업에서 52억 1,000만원 규모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리스)할 계획을 세우고 6개월분 임차료로 5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도입은 절반 수준인 24억 8,600만원 규모로, 임차료는 2억 8,369만원을 집행함(50.3%)<br>○ 전산장비 도입규모가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존 리스 장비의 갱신 임차료가 상승하였고, 그 부족분(2억 6,938만원)을 신규 도입 임차료 예산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임<br>- 이는 전산장비 신규 도입 및 갱신 계약이 매번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차료 증액분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에 기인함<br>※ 2023년 초과 지출이 발생한 기존 리스계약 3건은 리스료 갱신 계약이 2022년 말에 이루어져, 2023년 예산 편성시 리스료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었음<br>※ 2022년 도입한 전산장비의 경우 2022년 리스계약이 2023년 예산안 편성·제출 완료 후인 2022년 10월말에 이루어져, 2023년도 예산에 정확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 체결되는 리스계약 및 갱신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시 리스료의 실제 소요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매체별 적정한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옥외·신문·라디오 광고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해당 광고 매체는 뉴미디어 매체와 비교했을 때 광고 노출 장소(옥외) 및 시간·기한이 제한되고, 광고 집행의 효과 및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br>○ 2023년 옥외·신문·라디오 광고는 전부 마약 근절 정책에 집행하였는데, 최근 마약 범죄 예방 및 선도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이 20~30대 청년 및 10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광고매체 선택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광고 매체별 광고효과의 장단점을 토대로 매체별 광고집행 비중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책 홍보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7038 단위사업)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단위사업(7038) 내 2개 세부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 목적으로 각각 6,000만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각각 7,356만원, 1,462만원 등 총 8,818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26%(1,818만원) 초과 집행함<br>○ 정부 예산집행지침은 “기념품 등 홍보물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하도록 규정한바, 법무부가 제작·구입한 홍보물의 종류 및 수량<br>※ 초과 집행 규모 등을 감안하면 홍보물품 구매가 과도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br>※ 탁상달력 12,500개, 미니선풍기 300개, 머그컵 100개, 종이쇼핑백 150개, 만년필 70개, 수성펜 90개, 수건세트 150개, 우산 250개, 텀블러 180개, 볼펜 3,000개, 수성펜 100개, 휴대용 담요 256개 등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확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 집행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내용연수 고려 없는 개인 전산소모품 일괄 신규구매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7038-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2023년 9월~10월 기간 중 전산실 확장 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를 실시하면서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암, 키보드 등 개인 전산소모품 구입에 819만원을 집행하였음<br>○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소모품 구입은 최대한 절감 집행해야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시 기존에 사용하던 소모품들을 폐기할 필요는 없음에도, 사무실 인원 수에 맞추어 일괄 신규 구매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음<br>○ 특히, 마우스와 키보드는 일반 사무용 단가 대비 5배 가량 비싼 특수 기능이 탑재된 모델(버티컬마우스, 적축키보드)을 일괄 구매하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여 직원 개개인의 PC 부속품을 구매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7039-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중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총사업비 87억 5,100만원)은 2023년 예산현액 70억 6,500만원 중 39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55.6%), 29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음<br>○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은 2022년에도 사업 지연으로 대규모 예산이 이월(42억원 중 28.7억원 이월)된바 있음에도, 법무부는 별도의 사업기간 조정이나 예산 축소 편성※ 없이 2023년 예산에 잔여 공사비를 전액 편성한 결과, 2023년에도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반복됨<br>※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사비(420-03목)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교정시설 리모델링 등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일반수용비는 2023년 예산안 심사시 기록관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기간 조정(5개월→3.5개월)으로 8,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법무부는 감액분을 전부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에 반영하고,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 는 당초 편성한 8,000만원을 유지하였음<br>○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 로 9,740만원을 지출하여, 당초 예산(8,000만원) 대비 21.8% 초과 집행함<br>○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 는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와 달리 목적이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법무부가 임의로 해당 항목을 확대 편성·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취지에 맞게 항목별 예산을 배정·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연내 활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홍보물품 일괄 구매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에서 준공 홍보물 구입 목적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법무부 기록관 준공시점이 2024년 1월이었다는 점에서 연말에 다량의 홍보물품을 일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당해연도내 활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홍보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집행 행태를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과장급 역량평가 제도 추진 여부 및 시행 계획 확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2023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용역비(210-14)로 ‘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모의테스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br>- 법무부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700만원, 5,700만원을 집행하여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실행과제를 개발해왔음<br>○ 법무부는 정부 규모 축소 기조, 국정과제 관련 예산·인력 우선 배정 등의 사유로 자체 역량평가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불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 내 자체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는 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가모델 개발까지 완료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 제도의 추진 여부와 후속과제 개발 및 평가시행 계획 등을 신속히 확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2년간 국가소송 송달료 및 감정료가 매년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br>- (2022년)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사업에서 2억 9,800만원 전용,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에서 4,500만원 내역변경<br>(2023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에서 2억 5,400만원 내역변경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국가소송 관련 송달료 등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타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론스타 사건의 충실한 기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기재가 충실하지 않아 재무제표만으로 론스타 사건의 개요나 경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br>-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기재부예규)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과 같이 본심의 판정이 있었다면 취소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당해 분쟁의 개요와 경과, 공시를 생략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ISDS 제소 후 분쟁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투자협정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기존의 교육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현재까지의 ISDS 판정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ISDS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 | |
| 15 |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 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공익신탁의 실적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인터넷이나 라디오 광고로만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보 효과의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3년 1,225만원을 편성(회의 예정 일수 5회)하였으나, 실제로는 연말에 1회만 개최되어 120만원 집행에 그쳤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전문가 자문료 집행액이 매년 당초 예산편성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적정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1033-034)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19년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중재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사건 접수 2019년 70건, 2021년 50건, 2023년 54건)에 있으므로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립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 |
| 17 |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1038-303)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심사자료 검토수당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그 횟수와 상관없이 매달 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출근 수당,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수당을 현행보다 감액하고,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건수를 1일 1회에 한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사업 운영비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동 사업 운영비가 매년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br>- (2021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등에서 1억 8,800만원 전용<br>(2022년) 국외여비, 일용임금 비목에서 2,900만원 전용<br>(2023년) 임차료, 기타운영비 등 비목에서 5,300만원 전용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비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 | |
| 19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 법적근거 조속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토지대여료(11-51-511), 건물대여료(11-51-512)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2019결산, 2021결산)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없는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률구조(1131-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공단이 공시한 퇴직급여 적립률은 직원에게 대부해 준 장단기대여금(생활안정자금 대부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단의 가용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 적립률보다 5.9%p~10%p 가량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재무건전성을 투명하게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실제 공단 보유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 | | |
| 21 |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권교육(1133-30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단일 목적의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고 분할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를 원칙적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권교육(1133-30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집행된 국내여비 6,200만원 중 약 3,200만원은 출장자가 아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에 직접 계좌이체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됨<br>-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에서는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가 결제를 한 뒤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정산·지급하고, 그 외 여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향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 |
| 23 | **여유자금 규모 적정성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여유자금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성 기금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여유자금 규모는 유동성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기금의 수입·지출 균형 및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방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기금의 소요에 비례하는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 증액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도부터 여유자금 증가로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이 급증하면서 초과 수납이 이루어져 2023년도에는 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11억원 이상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세입 계획액을 충분히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체계적 오류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것 | | |
| 25 |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정 전입금액(집행된 벌금액×8%)이 아닌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 기금납입금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결산 시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집행된” 벌금액에 8%를 곱한 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비중 확대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국회는 그간 직접지원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고, 이후 법무부가 기금 내 사업별 지원성격을 재분류하여 직접지원 비중이 확대된 것처럼 보임. 그러나, 시정요구 당시 분류 기준에 따른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고, 범죄피해자가 선호하는 생계지원의 계획액 및 집행액이 축소되었으며, 의료지원 규모도 축소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특히 생계·의료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 지출 사업을 관리할 것 | | |
| 27 |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7,273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타 내역사업 예산을 혼용 집행하였으며,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미흡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예산혼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 예산을 “홍보·협의·점검 등”의 일반용역비로 단일 편성하며,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수행용역 대비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 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구조금(1135-302)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 간 강력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감소하여 연평균 12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구상권 행사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긴급구조금을 포함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실적을 제고하고, 구상권 행사 인력 확충 및 가해자 재산 적시조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상권 행사 실적 개선을 추진할 것 | | |
| 29 | **위치확인장치 관리 강화 및 활용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1135-306)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였음에도 지급실적은 소폭 증가하고, 실질적인 조치실적(신고·가해자검거·현장조치)은 감소하여, 투입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br>- 특히, 검찰청은 보유기기 172대 중 7대만 지급하여 활용율이 4.1%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 경찰청 및 검찰청은 구형 모델의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방안 마련, 위치확인장치의 이상유무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검찰청 보유분에 대한 수량 조절 등을 통하여 위치확인장치의 관리 및 활용 실적을 개선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 간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반면,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을 지급하는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은 당초계획액 대비 초과로 증액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br>- 상근 진술조력인의 열악한 처우로 매년 15명 내외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대부분 비상근으로 활동하여,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비상근 진술조력인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였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 |
| 31 | **집행잔액을 활용한 계획에 없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해당 일반수용비를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념품비, 참석자 수당, 자료집 등)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 대상 권역별 사례관리회의'(장소 임차료, 참석자 수당 등)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6-305)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성과지표가 성폭력 등의 피해자 발생 건수를 모수로 하고 있어 범죄 발생량이 증가하여 피해자가 증가하는 경우 성과목표 달성이 쉬워지고, 감소하는 경우 어려워져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br>- 성폭력사범 접수건수가 감소함에 따라(2022년 47,143건→2023년 43,796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가 감소하여(2022년 25,340건→2023년 22,336건), 2023년도 성과목표(42,941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접수 건수 대비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로 개선할 것 | | |
| 33 |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조치의 관광활성화 효과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로 인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고, 연도 중 정책시행으로 당초 세입 대비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였음<br>- 조치 실시 전, 2023년 1~3월 월 평균 4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 조치 실시 후 2023년 4~12월 동안 월 평균 약 10억원 정도의 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감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인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서 수립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의 확정이 지연(2023. 12. 7.)됨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시행계획이 2024년 5월에서야 확정되는 등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기한이 준수되지 못하고 늦게 수립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국가현안인 출입국·이민정책이 제때 수립·시행되도록 할 것 | | |
| 35 |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예산 계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19년 7월부터 운영되는 제주 검찰연수원은 공무 이용 외 개인 이용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징수하고 있어, 매달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2023년 개인 이용 총 1,680건, 5,336만원 수입 발생)<br>○ 제주 검찰연수원이 계속 운영되는 한 사용료 수입 발생은 확실히 예측됨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제주 검찰연수원의 사용료 수입 실적을 토대로 적정 세입예산을 계상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검찰 일부관서의<br>세입과목 혼동에<br>따른 과오수납<br>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벌금 및 과료(12-56-561), 몰수금 및 추징금(12-56-56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법무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검찰청 일선관서에서 “추징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벌금·과료와 함께 “벌금 및 과료”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몰수금·추징금과 함께 “몰수금 및 추징금”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된 사례가 확인됨
<table>
<tr><th>구 분</th><th>과오수납 건수(건)</th><th>과오수납 관련 금액(천원)</th></tr>
<tr><td>추징금 수입 → 벌금 및 과료로 수납</td><td>53</td><td>375,274</td></tr>
<tr><td>벌금 수입 → 몰수금 및 추징금으로 수납</td><td>21</td><td>271,45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관서 세입징수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징수·수납 과정에서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수활동비 | 시정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으나, 법무부가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br>○ 정보공개소송 대법원 판결로 일부 공개된 특활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정해진 목적이 아닌 검찰총장의 ‘쌈짓돈’ 등으로 부당하게 활용된 것으로 확인됨<br>○ 검찰 특활비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정보활동 지장을 이유로 특활비 세부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br>○ 법무부는 2022년 이후 대검 자체 사무감사 등을 통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활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법무부 차관으로 자체 점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br>※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있음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대검찰청 인력운영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 이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중 인력운영 관련 | 시정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2020년 대검찰청이 파견 등의 형식으로 검사 및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국회에서도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검찰의 초과 인력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음<br>○ 2023년 검찰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대검찰청의 인력 초과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조치가 미흡함<br>- 2023년말 기준 대검찰청 근무 인원은 검사 91명, 검사 외 공무원 695명으로 정원 대비 검사 14명, 검사 외 공무원 161명 등 총 175명이 초과운영되고 있으며, 초과운영 규모도 2022년 대비 169명→175명으로 확대됨. 특히, 검사의 초과운영 인력은 14명으로 2019년(18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에 맞추어 대검찰청의 정원 대비 초과 인력운영을 감축·해소하기 위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파견 인력 등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br>※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있음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연구용역비(260목)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와 검찰의 2023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과제 40건 중 34건(85%)이 수의계약으로 수행됨<br>※ 수의계약 25건(62.5%), 유찰 후 수의계약 9건(22.5%), 경쟁계약 6건(15%)<br>○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검찰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그럼에도 2023년 수의계약비율이 85% 수준으로 높고, 전체 과제의 약 3분의 2인 25건을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구용역과제 경쟁계약 수행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계약 체결 세부 기준 마련 등 정책연구용역이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는 2023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 등의 사유로 2억 264만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고, 2024년 2월말에 공사를 완료함<br>※ 총 계약액 2억 9,121만원 중 2023년 집행액 8,657만원<br>○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를 모두 반영한 총 공사기간이 5개월(2023년 10월~2024년 2월)이었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예산 이월의 근본적인 원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초에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집행 실적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예산은 2022년 완공된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활용을 감안, 전년대비 임차료(행사장 임차) 및 국외업무여비(숙박비 지원)에서 총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함. 그럼에도 2023년 연수사업 집행률은 43.3%로, 2022년(48.5%)보다 더욱 낮았음<br>- 특히,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1%로 저조하여, 초청대상 및 실제 초청 규모를 감안하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음<br>- 검찰은 2024년부터는 초청연수에 아태지역 회원국 외에 국제검사협회 관계자 방한도 예정되어 참석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참석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국외업무여비 기존 집행률(2022년 34.4%, 2023년 27.1%)을 감안하면 집행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초청 규모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를 절감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구조적 실적 감소에 따른 영상녹화시설 및 장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각 검찰청 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개소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은 부진함<br>- 2023년 검찰 영상녹화 조사비율은 6.4%로 2022년(8.1%)보다 더 떨어졌으며, 영상녹화 조사 건수는 4,001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br>- 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녹화물의 피신조서 진정성립 입증수단 활용 불가,<br>②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가 영상녹화 실적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임<br>○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과 영상녹화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br>- 2023년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903실의 영상녹화조사실 운영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시설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334-5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은 세 차례 유찰되어 10월에 계약이 체결된 결과, 당해연도 계약은 3개월분(10월~12월)만 체결하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1월~9월)의 사업을 전년도 계약에 근거하여 전년도 계약 업체가 수행함. 이는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함<br>- 최근 대검찰청의 해당 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5월에 첫 사업 공고를 하는 등 당해연도 신규 계약 체결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전년도 업체에게 당해연도 과업 수행을 맡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시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년도 계약업체가 당해연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것<br>○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영장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부진한 집행 실적으로 2023년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5억 8,000만원 감액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로 크게 부진한바, 여전히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과대 편성되었음을 시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 | |
| 45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수사(1335-302)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17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선거범죄 포상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남<br>○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공직선거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초기 신고, 제보, 포상금 신청이 중앙선관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br>-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지급 인원 수, 지급액, 예산집행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법무부보다 실적이 양호하며,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탄력적·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검찰은 2022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신규 추진시 중국 파견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정책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필리핀으로 파견대상국을 변경하였음<br>-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97% 이상이 해외에 위치하고 그 중 87.5%가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에 수사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br>○ 현재 필리핀에 파견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뿐만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도박 등 다른 유형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하고, 필리핀에 파견된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와 검찰은 APICC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매년 일반연구비(260-01)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APICC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최신 게시물이 2020년 12월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2021년 이후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br>○ 사실상 홈페이지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편성·집행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APICC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APICC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가 APICC 및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48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사업의 일반용역비 변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등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한 것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기본조사설계비 와 실시설계비 비목 구분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광주교도소 숙직실 및 사무실 증축 공사'는 기본조사설계비 편성을 누락하였다가 실시설계비에서 세목변경하여 집행함<br>-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2022. 9. 30 ~ 2023. 6. 14)'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원을 세목변경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 | |
| 50 | **교정시설 개선공사의 이월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20억 9,6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이·전용(감)하고 612억 7,7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68억 700만원은 이월하고, 30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건설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의 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 혼용 집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타 세부사업인 “교도소 행정지원”에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일부 혼용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예산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 |
| 52 |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반복적 이·전용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교정시설 공공요금을 매년 이·전용하여 집행하였고, 특히 2023년의 경우 재소자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이용: 252억 6,000만원, 전용: 67억 5,100만원)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3 |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 사회적 처우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교화(1532-3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수형자 인원 대비 이용률 등을 보면, 가족만남의 집은 2.6%, 가족 만남의 시간은 7.4%,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실시하지 않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사회적 추세와 교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54 |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위한 필요성 및 수요 조사 등 점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7011-205)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교정본부의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중 일부를 실무수습 변호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타 사업에서 내역변경을 하였으나, 최종합격자(2명)가 임용을 포기하였고, 이후 6월 법무부의 채용 재공고에 교정본부 선발 인원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실무수습 변호사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신속한 추가 채용절차 진행 등 채용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교도작업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도작업특별회계 - 교도작업(1535-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은 집행이 저조(78.4%)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56 | **교도작업 생산 직종 다양화 및 직업훈련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도작업특별회계 - 교도작업(1535-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교도작업은 작업 장소·시간 등 교도소의 특성상 단순 노무 중심 작업이어서 현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율은 산업 환경 변화로 과거 인력에 의한 작업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거나, 경기 불황에 따라 저조한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생산 직종 다양화와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연계 등 생산성 제고 및 외부통근작업 확대 등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면밀한 감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1631-304)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방,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공사를 제외한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축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5월말경 입주하였음.<br>- 기존 입주건물의 임차기간이 2023년 4월 15일에 만료됨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br>- 공사의 착공시기가 2월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감독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58 |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자립생활관 총 9개 중 절반 이상인 6개(강원・대전・부산・안양・광주・의왕)의 생활관이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50% 이하였고, 이 중 부산(31.2%) 및 광주(12.5%) 생활관은 현원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br>- 소년원 출원 후 재입원율이 최근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율을 높이고 소년원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등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실시하는 사회정착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 세분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갱생보호활동(1633-30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분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업비를 운영비(210) 보조비목 중 기타운영비(210-16) 보조세목에 일괄 산정하여 계획·집행하였음<br>- 이는 해당 사업에 집행된 보조금 예산 규모의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개선할 것 | | |
| 60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감독(1635-3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은 2021년 기준 4,950개에서 2023년 기준 6,176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대상자 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4,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br>-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이 과다한 경우 제작·관리 비용과 기술노후화에 따른 폐기비용 확대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부재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 및 재처리 전자장치의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1 |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건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특별감찰활동(1831-300), 특별감찰관인건비(1802-15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파견2인, 공무직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br>-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속히 건의할 것 | | |
| 62 | **특별감찰관 장기공석으로 인한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특별감찰활동(1831-300), 특별감찰관인건비(1802-15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파견2인, 공무직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br>-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과다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3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을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일괄 집행하거나 관리용역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 | |
| 64 | **범죄수익 환수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몰수금 및 추징금(56-562)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추징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집행대상금 30조 5,493억원 대비 연평균 집행액은 1,011억원으로 집행률이 0.33%에 불과하며, 2023년에는 집행률이 0.29%로 더욱 떨어짐<br>※ 2023년 집행대상금액 32조 2,589억원 중 923억 5,100만원 집행<br>○ 범죄수익 대부분이 차명으로 되어있어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추징금 미납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및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5 | **공무직 퇴직 후 충원 간 공백기간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1032-305)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임금 불용이 나타나고 있음<br>- (2022년) 약 1.25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00만원<br>(2023년) 약 3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5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공무직 퇴직 예정 시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 |
| 66 |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항소 여부 원점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 시정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대한 항소의 인용 가능성이 국제법적으로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엘리엇, 론스타, 메이슨 등 우리나라가 패소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 항소 유지가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더욱 발생시키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항소 계속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분담 및 엘리엇 패소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3. 7. 법무부의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각하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패소책임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엘리엇에 대한 ISDS 대응 예산으로 5년간 약 170억 4,900만원의 재정손실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함<br>○ 2015년 제일모직의 구 삼성물산 흡수합병과 관련, 여러 형사판결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메이슨이 각각 위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됨<br>- 정부는 각 중재판정에 관하여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엘리엇 관련 취소소송은 2024. 8. 2. 무렵 각하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취소소송 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ISDS 취소소송 제기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엘리엇·메이슨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즉시 정부 배상책임에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준비 착수를 할 것<br>※ 관계부처: 법무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8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홍보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규 공익신탁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부자들의 효능감 증진, 상속세와 같은 세제 혜택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공익신탁이 다른 기부제도와 비교하여 충분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상 개선방안·세제혜택 등의 유인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
| 69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이 2020년 0.21%에서 2023년 0.35%로 이용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이 가능한 대상문서 확대 및 전자공증시스템의 홍보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 대상문서 확대 및 홍보를 위한 대한공증인협회와의 다각적인 협력, 간편인증 도입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편의성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0 | **대한법률구조 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률구조(1131-300)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임금 및 퇴직금 소송 등의 감소 및 신규 공익법무관 총원의 감소로 인한 소송수행 건수 감소로, 자체수입이 구조적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수지차 보전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1 |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률구조(1131-300) | 시정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이 급격히 감소함<br>- 공단은 지난 10년간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퇴직급여적립액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기준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신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퇴직적립금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br>○ 법무부는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봉과 성과급, 연가보상비, 퇴직금의 경우에는 용도를 나누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관리할 것<br>○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급여충담금의 적립액을 증가시켜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2</td><td rowspan="3">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법무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코로나19 상황, 격오지 등 일부 배치기관 장기공석, 육아휴직 등으로 법률홈닥터의 결원이 지속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음<br>- 불용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8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br>※ 최근 5년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br>전용<br>등</th><th rowspan="2">예산<br>현액<br>(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집행률<br>(C/A)</th><th rowspan="2">집행률<br>(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br>(A)</th></tr>
<tr><td>2019</td><td>4,418</td><td>4,418</td><td>-</td><td>4,418</td><td>4,168</td><td>94.3</td><td>94.3</td><td>250</td></tr>
<tr><td>2020</td><td>4,549</td><td>4,549</td><td>-</td><td>4,549</td><td>4,170</td><td>91.7</td><td>91.7</td><td>379</td></tr>
<tr><td>2021</td><td>4,570</td><td>4,570</td><td>-</td><td>4,570</td><td>4,188</td><td>91.6</td><td>91.6</td><td>382</td></tr>
<tr><td>2022</td><td>4,703</td><td>4,693</td><td>△2</td><td>4,691</td><td>3,981</td><td>84.8</td><td>84.9</td><td>710</td></tr>
<tr><td>2023</td><td>4,846</td><td>4,846</td><td>-</td><td>4,846</td><td>4,030</td><td>83.2</td><td>83.2</td><td>81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퇴사·휴직 및 채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연중 인력 채용 및 운용 과정에서 신속한 결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예외 없는 징수결정 및 적극적 징수 활동을 통한 변상금 수납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변상금(57-57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와 별개로 실수납액(실제 회수한 금액)만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이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지 않아 그 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있음<br>○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대비 회수한 변상금 수납비율은 최근 5년간 10.8~21.6%에 불과함.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인 근로보상금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근로보상금 등을 공제할 수 있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없이 원칙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도록 하고, 가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 및 수형자에 대한 징수활동 등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변상금 수납률을 제고할 것 | | |
| 74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속한 초기지원 등 역할 확대 및 실적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6-305)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닌 단순 참고인 내지 증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의견진술 등의 보충적 역할에 그치게 되는데,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br>- 또한, 현재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시점은 주로 수사기관 신고·고소 이후로,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단계를 고소장 작성 등의 초기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피해자수요조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적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5 | 이민정책연구원의 보조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관리 의무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이민정책연구원운영(1231-302)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이민정책연구원이 인건비(보수, 110-01)로 편성하여야 할 정규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법정부담금(고용부담금, 320-09)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법무부는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승인하는 등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보조금 정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추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
| 76 | 의무관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이 보호외국인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문제에 대한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3개소(화성, 청주, 여수)에 각 912만원의 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의무관 퇴직 등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의무관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7 | **검사 및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수활동비 배정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을 보면 대부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검찰업무지원’ 이라는 미명하에 특수활동비 5억 2,200만원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의 특수활동비 비목을 삭제하고, 해당 예산을 증빙이 가능한 특정업무경비 또는 사업추진비로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8 |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 이·전용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형사보상(1337-302) | 주의,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형사보상금은 매년 예산편성액 대비 초과 지출되어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빈번함<br>○ 2023년에는 예산액 대비 40% 수준인 168억 5,200만원을 타 세부사업에서 충당하였고, 이를 위해 검찰국 소관 대부분의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떨어뜨리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반하는 부분임<br>○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이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바, 검사의 성과관리에 형사보상금 지출 규모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br>- 형사보상금의 지출은 피고인에 대한 구금 기간, 소송비용 등에 영향을 받는데, 업무상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빠르게 공소를 취소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형사보상금 지출금액을 줄이고, 피고인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br>○ 형사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청에 형사보상 기록송부를 요청하고 있는데, 검찰청의 회답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형사보상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br>○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무죄 사건 평정 등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시 실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제도개선)<br>○ 검찰청은 형사보상 기록 송부 지연 사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형사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9 |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 지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 | 주의,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검찰은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유사 사안 발생시 지속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패소를 반복하여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을 지출하고 있음<br>- 2023년에 한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였는데, 총 58건의 소송 중 전부패소 또는 기타(일부인용)가 44건이었으며, 2023년에 패소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9,800만원임<br>○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처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이에 불복한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불필요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br>○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할 것(제도개선)<br>○ 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검토 범위 확대 및 외부위원 비중 상향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0 |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1531-304)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대체역 편입인원에 비하여 복무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부족하여 대체역 소집희망자의 대기일 수가 2021년 상반기에는 173일부터 327일까지였으나, 2023년 하반기에는 606일부터 969일까지로 증가하여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있는 대체역 자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체복무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81 |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① 의료비 예산 126억 6,300만원 대비 36억 5,7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고, ② 건강보험 예탁금 예산 202억 6,500만원 대비 50억 4,4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으며, ③ 호송여비는 예산 25억 100만원 대비 8억 1,300만원을 이·전용으로 초과 집행되었음<br>○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기관 의무관이 충원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br>○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2 | **수용자 약물 오남용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약품 투약 건수가 과다하여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br>-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투약 건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6배에 해당함<br>- 2019년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 수는 4,61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65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3년 10.0%로 증가하였음<br>- 2023년 5월에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주고받고 모아둔 뒤 투약한 원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 ·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
| 83 | **노역집행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도작업특별회계 - 교도작업(1535-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노역집행률은 93.2 ~ 93.7%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부과 적격자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하지 않는 수형자들이 1,3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작업장 신 · 증축 및 외부통근 작업 확대 등을 통해 노역 집행률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4 |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신과 의사 추가 충원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치료감호자수용관리(1634-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2024년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0.6명인데, 이 중 정신과는 정원 15명 중 현원이 7.2명으로 정신과 의사의 정원 대비 충원률이 48%에 불과하였음<br>❍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72명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하여, 동 직위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보수 외에도 정신과 의사의 채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경감, 연구·교육기능 강화 등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85 |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전자감독 인력 충원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감독(1635-301) | 제도개선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감독이 추가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대상자 수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전자감독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전자감독 인력 충원을 위한 직제개정을 추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6</td><td rowspan="3">검사의<br>국외훈련비의<br>지급기준의<br>적정성 검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법무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검사의 경우 법관과 비교하여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중 학자금 지급한도 및 체재비 월지급액이 높은 수준임<br>- 현 학자금 한도액은 법관의 경우 최대 6만 달러, 검사는 최대 9만 달러로 큰 차이를 보임<br>- 체재비 수령액의 경우 검사가 법관과 비교하여 월 250달러 가량 더 수령하고 있음<br>※ 법관 및 검사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비교
<table>
<tr><th>구분</th><th>검사</th><th>법관</th><th>공무원</th></tr>
<tr><td>학자금<br>(연 한도액)</td><td>$60,000<br>※ 특정요건 충족 시 추가 50% 가산<br>(최대 $90,000)</td><td>$50,000<br>※ 특정요건 충족 시 추가 20% 가산<br>(최대 $60,000)</td><td>$20,000</td></tr>
<tr><td>체재비<br>(실지급액)</td><td>$2,356/월</td><td>$2,107/월</td><td>$2,356/월</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무부는 검사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7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사업의 집행내역 자료 제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1333-301) | 주의 | 법무부 |
| | | 지적사항 | ○ 법무부 검찰청이 제출한 결산 심의자료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산상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br>- 법무부 검찰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자료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사업의 예산현액이 23억원이나 이를 초과한 24억원이 집행되었고, 국외훈련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51억원이나 50억원이 집행되었음에도 잔액이 남지 않았음<br>- 검찰청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출대장이나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등 집행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의 결산 심의권을 저해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검찰청은 예산집행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결산 심의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 | | |

## 2. 법제처(1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현실적인 기타직보수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 주의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법제처는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 근무로 인해 기타직보수가 부족하게 되어 보수(110-01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함<br>○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전용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1011-200) | 주의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이후인 2023. 1월 발표되었고, 필요한 비용은 전 부처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용이 이루어졌음<br>○ 청년인턴 운영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 | |
| 3 |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1011-200)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모집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법제처는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시근로자로 채용하여 법률사무 경험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br>- 2023년 모집 계획인원 7명 중 2명(채용률 30%) 채용<br>-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21년 60%, ’22년 75%, ’23년 30%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법령해석 관련 예산 효율성 극대화 방안 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현재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실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법령해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5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법제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br>○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법률안 소관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본 협의회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분되는데, 개최건수 중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본협의회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개최에 불과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의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영상회의실 이용률 제고 및 불필요한 외부회의실 임차료 집행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고도 회의 참석 용이성 등을 이유로 별도 임차료를 지불하고 외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영상회의실의 이용률이 저조함<br>- 법제처는 2023년 3월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을 완료하였는바, 동 회의실 조성에 2,180만원 집행<br>- 영상회의실 공사 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회의 개최 33건 중 22건은 영상회의실 이용(이용률 66.7%), 11건은 외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임차료 699만원 집행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영상회의실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부회의실 임차료 집행을 최소화할 것 | | |
| 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콘텐츠 현행성 점검방안 마련 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법제처는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두 달에 한 번 인용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오류를 신고받아 검토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행성을 점검하고 있음<br>○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예정 법률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br>○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시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는 법령을 국민에게 '찾기 쉽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령심사지원(1032-300)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법제처가 총괄·조정하고 있는 정부입법계획이 자주 수정되고 국회제출비율이 낮아 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br>-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계획대비 국회제출 비율이 50%임<br>○ 다만, 계획 준수를 강조하는 경우 부처가 정부입법을 회피하거나 긴급한 입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존재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정의 검토를 강화하고 준수율과 유연성을 균형있게 관리할 것 | | |
| 9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제정비(1032-301)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법제처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개선 등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를 주안점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문장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입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예산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문장 구조 개선이 법령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입법영향분석 취지에 맞는 연구용역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행정법제 혁신(1032-302)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 법제처는 3건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효과성 등 입법영향분석보다는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정책연구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할 것 | | |
| 11 |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령정보제공(1031-300)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어린이법제관 수료기준이 낮아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수료율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br>-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후 일정 점수를 적립하면 수료할 수 있는데, 활동별 참여점수(10~20점)에 비해 수료기준(50점)이 낮음<br>- 2023년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60.1%(모집인원 1,300명 중 782명 수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료 기준 강화와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 저조 및 유사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제정비(1032-301) | 제도개선 | 법제처 |
| | | 지적사항 | ○ 국민법제관 회의에 참여한 적 없는 국민법제관이 2023년 기준 31.5%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국민법제관이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미미하여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등 유사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 기준 국민법제관 200명 중 31.5%(63명) 회의 불참, 설문조사를 포함 의견 제출한 적이 없는 국민법제관 6.5%(13명)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다른 제도들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 | | |

## 3. 감사원(2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업무용택시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br>○ 업무용 택시비를 감사활동경비 단위사업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기본경비에 편성된 감사활동 현장 출장 목적의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것 | | |
| 3 |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추후 감액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 1억 3,5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밖의 연도는 집행률이 모두 50% 미만이고,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제 집행액의 2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지어 2022년도에는 40%를 증액 편성하고 있는 바,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예산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감액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편성 시 소요에 부합하는 금액을 설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활동경비 중 여비예산을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br>○ 국내여비 2억 5,800만원을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국외업무여비 및 기본경비의 업무용택시비로 전용함<br>○ 여비 예산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이 전용된 것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증액에 해당<br>○ 여비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지속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여비 예산규모 재산정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의 국내여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감액할 것 | | |
| 5 |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법정기한인 30일(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결정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법정기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br>○ 2023년도 국민제안감사청구 중 공익감사청구가 감사 실시완료 16건, 처리 중 37건으로 감사실시 결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훈령상 처리기간을 실제 처리기간과 향후 감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필요<br>- 2023년 평균 감사처리 기간: 135.4일/ 훈령 상 처리 기간: 6개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에 어긋나고, 특정 학회나 연구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 보기 어려운 일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음<br>○ 감사원은 수의계약의 근거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향후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 | | |
| 7 |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이 타 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거해 특수활동비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기재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감사원도 해당 지침에 따라 감시해야 할 필요<br>○ 집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임<br>○ 감사원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br>○ 특수활동비는 수사, 외교, 안보, 경호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감사원은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집행 계획, 지침, 세부내역 및 지출 증거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br>※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시 해당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도 부대의견으로 함께 채택됨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목표 · 성과목표 등 추가개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감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감사원 예산 및 성과계획은 단일 전략 목표 및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목표는 <건정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으로 하고 있음<br>○ 감사원은 프로그램 목표의 ‘배경 및 의의’에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에 대한 언급이 없음<br><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br>o 2023년 총 136개 감사사항을 시행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처리하는 등 국가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중<br>-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 예산운용, 고질적 비리, 소극행정 등 엄단 필요<br>o 아울러 위법·부당사항의 적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소통·지원도 필요</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등의 수행을 통해 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추가 개발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교육원은 남자 욕실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여성 욕실에 대한 추가 실시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 | | |
| 10 | **과다한 공사비 사고이월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교육원은 설계용역 2회 실시 후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자금을 연말에야 확보하고 긴급 입찰공고 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비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예산 사고이월 등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교육원은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인조라탄 벤치 등을 시설부대비(420-05)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등 비목에 벗어난 예산집행을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향후 비목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 |
| 12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집행 중 사업 목적 변경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본래 11개층에 대한 공사를 계획했었으나, 공사범위를 2개 층으로 축소하고 예산 편성 당시에 없었던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비 예산 4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 다수의 가구·의자 등 물품을 구매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23년도 자산취득을 위해 전용한 사업현황과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계획서를 제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 갱신비용을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SW 사용 라이센스의 만료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시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항목을 올바르게 편성할 것 | | |
| 14 |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 제도개선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예산 대비 46.7%의 증액 조정(총 9차례 이·전용)을 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예상 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일부 내역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내역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4개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본예산과 상이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예산 계획 수립을 보다 면밀히 하고, 예산 전용 및 증액 조정을 최소화하여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소요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반용역비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전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확보함<br>-「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 계약 등의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소요 예산의 확보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선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6 |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낙찰차액 사용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예산집행지침」상의 합법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행사대행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함<br>-「예산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 등 낙찰차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집행심의원원회를 통해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관련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낙찰차액 집행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ODA 연수과정의 간접비 최소화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 | 주의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ODA)을 2023년부터 용역체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 운영 및 진행을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민간업체 대행방식으로 인하여 일반용역비에서 5,142만원의 간접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음<br>- 특히 비슷한 성격의 다른 ODA 사업은 직접 운영하면서도 동 사업은 민간업체 대행방식으로 수행하여 간접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비효율적인 간접비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 |
| 18 |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종합시행계획 등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감사교육원 홍보 동영상(국문·영문) 제작비용”을 ODA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ODA 사업 예산을 종합시행계획 및 사업성격 등에 부합하게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2023년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2개월 이내) 준수 비율은 3.8%로, 최근 5년간 기한 준수 비율 중 최저치를 기록함<br>※ 법정기한 준수 비율: 2019년 18.7%, 2020년 10.4%, 2021년 8.7%, 2022년 18.2%, 2023년 3.8%<br>○ 2023년 재심의 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474일로 1년을 초과하였고, 전체 재심의 청구 중 62.3%가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 | |
| 20 | **공정한 경쟁입찰 환경 제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다년간 계약으로서 매년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OASYS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단독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br>○ 감사원은 입찰공고문에서 시스템의 업무 구성도 등의 필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규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향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유효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경쟁환경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변상판정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감사원 변상판정 후 이행기한(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원이 소속장관 등으로 하여금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에도, 위탁이행 요구를 하지 않는 등 변상판정 이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br>-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이행기간 도과 사건 20건 중 감사원이 위탁이행 요구를 한 사례는 없고, 이행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위탁이행 요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건임<br>- 변상판정 이행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상금 환수가 미흡하고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변상판정 이행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 |
| 22 | **국가결산 검토시 연례적 세수부족에 대한 검토 후 국회에 보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 시정 | 감사원 |
| | | 지적사항 | ○ 최근의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사원의 2023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에 세수결손 관련 감사가 없고, 감사원 결산감사보고서에는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음<br>-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에서는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바 있음에도 2023년 세수결손 56.4조원, 2024년 세수결손이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결산 검토시 세수결손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미비하게 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 |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인건비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 예산, 인사 업무 등 독립적인 행정 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할 때 검사정원 대비 검사외 인력 정원 비율이 낮다(검찰청 3.7배, 공수처 2.4배)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가 실제 소요대비 과부족<br>○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력운용에 부담인 상황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과 파견공무원간 적절한 부서배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인건비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공수처 검사의 경우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최종 연임(7.7%)되었고,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퇴직자의 수가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의 수사관이 퇴직하였음<br>-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의 경우에도 6년의 임기가 적용됨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하여 높은 퇴직률 초래<br>- 연임제한 외에도 채용 또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검사의 퇴직률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 검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 및 추진함과 동시에, 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기준 및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운영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줄일 것 | | |
| 3 |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검찰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중 누구에게 영장 신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수사기관간 협의된 바가 없어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br>-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1년간 15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촉식 회의 한 건만이 개최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과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의 집행실적을 제고하되, 이후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예산은 실적에 맞게 축소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수사 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 주의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수사관련 위원회의 예산집행율 및 개최실적 부진은 수사 등 공수처 기능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br>-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지연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할 것 | | |
| 5 |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개최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 주의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공수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음<br>-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대여료 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등 방만한 집행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회 회의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공수처는 민원소통전문관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023년 11월까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월 평균 약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음<br>○ 공수처는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출범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수용비 330만원, 임차료 745만원 등 총 1,075만원을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예산편성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 7 | **교육훈련 실시에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공수처는 2023년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음.<br>- 이는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이 구축된 교육 시설과 공수처 수사업무 활용에 필요한 강의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용역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됨.<br>- 교육 훈련 시행 시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파악으로 교육 시설 및 교육교재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부합한 예산 비목을 사전에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에 부합한 예산편성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세목변경을 통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고용부담금의 예산 적시 반영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0)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금액을 미리 산정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이 과소편성(총 1억 7,100만원) 되어 편성된 고용부담금 총액의 74.8%에 달하는 1억 2,800만원을 전용으로 조달하였음<br>○ 공수처의 공무직 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수는 총 3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통보서에 가입자 수가 14명으로 적시되는 등 일부 누락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누락된 가입대상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을 포함한 법정 최소적립금을 조속히 산정하여 연말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미리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반영할 것 | | |
| 9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01-300)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지적사항 | ○ 공수처의 전산 인력은 1명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산 인력이 부재하고, 신설 조직으로서 기존 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 후 외부 위탁운영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였음<br>-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기관 주요 정보시스템으로서, 향후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전담 전산 인력을 확보하여 충실한 운영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전산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리 및 운영을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 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 지적사항 |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내 위원회 운영 경비로 총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2,700만원에 그쳤고, 공판활동지원 사업의 위원회 운영 경비 또한 5,300만원 중 900만원만 집행됨<br>- 예산 편성 시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등은 각 15회씩의 개최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3회만 개최되었고, 공보심의위원회는 20회를 계획했으나 5회만 개최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수처는 위원회 개최 실적과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불용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 | |

## 5. 헌법재판소(1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2024년 6월 말 기준 헌법연구관 78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출신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법조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함<br>- 헌법재판은 단순히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경제·사회학 등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이므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헌법연구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비법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개선책, 유인책을 마련하고 채용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및 본부운영지원(1032-302)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운용하고 있는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할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DB형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퇴직급여가 많게 됨<br>-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미운용시 적립된 부담금만을 퇴직급여로 받게 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평균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의 후생증대 차원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재무결산 지원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은 수행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며,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동 용역계약의 주된 과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함<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를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 과다 제작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 주의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으로 무선충전 탁상시계 730개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초청인원 393명, 참석인원 173명에 대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량임<br>- 일반적으로 기념품은 넉넉하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으나, 초청인원 수의 2배 가까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기념품을 과다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5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최근 4년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약 10%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특근매식비(210-05),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직책수행경비(250-02) 세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4개 비목의 불용액 합계가 3,300만원으로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 4,500만원의 약 73%에 이르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예산을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도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 내규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개최하였을 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br>○ 또한 동 내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 | | |
| 7 |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및 운영지원(1033-303) | 시정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도에 체결한 총 18건의 발간물 수의계약 중 14건(77.8%)을 한 업체와 체결하였고,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용역을 두 차례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발간계약을 분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 계획 미흡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에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8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그 운영을 개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사전에 구축·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 | |
| 9 |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23년도 기준 전자접수율 51.3%, 전자송달율 39.2%)에 머물고 있음<br>-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자접수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br>- 전자접수·전자송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심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확충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다양해진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고 연간 2,500건이 넘는 헌법재판 접수 건수 처리를 위하여 헌법연구관 채용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헌법재판의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2023년 기준 46.6건임<br>○ 인건비 불용액은 퇴직·휴직 및 신규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므로 채용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있어 채용시기를 다양화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직 방지 및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본안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3개월로 법정 처리기간을 4배 이상 초과함<br>○ 해당 연도 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미제 헌법재판의 수도 2023년 말 기준 1,6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함<br>(2014년 824건 → 2023년 1,604건)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 조직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헌법재판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
| | | 지적사항 | ○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분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중견기업의 제품을 우회하여 구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br>-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법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것 | | |

## 6. 대법원(29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복리후생비 예산의 용도에 맞는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복리후생비 | 주의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br>○ 다른 기관의 경우 대개 기본경비 사업에 한정적으로 편성·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국선변호료 지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소년보호 등 지원 등과 같은 일반 사업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워크숍 숙박료의<br>비목 목적에<br>부합하는 집행<br>및 전용절차<br>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워크숍 숙박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세목조정을 하여 임차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워크숍 숙박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국내여비로 편성·집행해야 하므로, 예산 추가 확보시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세목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 하는 것이 적절함<br><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워크숍 비용 관련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7">2023년</th><th>2024년</th></tr>
<tr><th>예산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이·<br>전용등</th><th>예산<br>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d>일반수용비(210-01)</td><td>183</td><td>-</td><td>△35</td><td>148</td><td>123</td><td></td><td>25</td><td>84</td></tr>
<tr><td>임차료(210-07)</td><td>12</td><td>-</td><td>35</td><td>47</td><td>47</td><td>-</td><td>-</td><td>12</td></tr>
<tr><td>국내여비(220-01)</td><td>129</td><td>-</td><td>-</td><td>129</td><td>127</td><td>-</td><td>2</td><td>12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워크숍 숙박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연례적 이월 문제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 주의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법원정책연구비' 는 전년도 이월액 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9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9,400만원은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23년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에 관한 과제로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없음<br>○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기획재정부<br>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연구용역비(260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가 해소되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국선변호료<br>지급에 대한<br>철저한 집행관리<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선변호료 지원(1143-4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국선변호료 지급 결과를 살펴보면, 국선변호를 신청한 총 접수 건수는 417,924건으로 전년 대비 38,341건(10.1%)이 증가되었고,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62,577건으로 전년 대비 16,765건(11.5%)이 증가하였음<br>❍ 2023년 국선변호료 불용액 4,900만원은 각급 75개 법원에서 일반국선변호료 기본보수액(2023년 기준 50만원) 미만의 잔액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임<br>※ 2021~2023년 국선변호료 지급현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접수 건수</th><th rowspan="2">국선변호인 선정건수</th><th colspan="3">국선변호료(백만원)</th></tr>
<tr><th>예산액</th><th>지급액</th><th>불용액</th></tr>
<tr><td>2021년</td><td>380,064건</td><td>140,627건</td><td>61,567</td><td>58,133</td><td>3,484</td></tr>
<tr><td>2022년</td><td>379,583건</td><td>145,812건</td><td>61,000</td><td>60,586</td><td>406</td></tr>
<tr><td>2023년</td><td>417,924건</td><td>162,577건</td><td>65,334</td><td>65,285</td><td>49</td></tr>
</table>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제4항에서 각 법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국선변호료 지급지연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는 취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각 법원에 대한 예산 배정을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각 법원에 국선변호료의 정기적인 배정 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선변호료 지급에 있어 지연 및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노후 시설 및<br>비품의<br>시의적절한 교체<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원의 비품 및 시설 내용연수 도과 현황을 보면,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사용 중인 물품이 많은 것으로 보임<br><br><법원시설관리 등 관련 비품 내용연수 도과 현황><br><br>
<table>
<tr><th>물품</th><th>내용연수<br>(년)</th><th>총 개수</th><th>내용연수<br>도과 개수(비율)</th><th>내용연수 5년 이상 도과<br>개수(비율)</th></tr>
<tr><td>법정 의자</td><td>8</td><td>13,858</td><td>7,895(57%)</td><td>2,762(20%)</td></tr>
<tr><td>법정 방청석</td><td>9</td><td>9,239</td><td>5,656(61%)</td><td>3,808(41%)</td></tr>
<tr><td>냉방기</td><td>10</td><td>497</td><td>232(47%)</td><td>52(11%)</td></tr>
<tr><td>냉난방기</td><td>9</td><td>1,246</td><td>493(40%)</td><td>89(7%)</td></tr>
<tr><td>디지털 복합기</td><td>6</td><td>2,733</td><td>1,754(64%)</td><td>미산정</td></tr>
<tr><td>방독면</td><td>7</td><td>13,507</td><td>7,869(58%)</td><td>1,562(12%)</td></tr>
</table>
<br>○ 물품의 내구연한이 도과했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해야 하고, 반대로 물품의 노후화가 심하면 국민의 안전 및 사법서비스의 제고 측면에서 시급히 교체해줄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예산의 정확한 편성 및 적극적 집행을 통해, 노후한 법원의 시설 및 비품을 시의적절하게 교체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법정보화운영[1300]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대법원은 매년 초 사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실제 계약 현황을 보면, 11월·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사업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를 넘어 마무리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계약 준비 및 발주를 매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을 최소화할 것 | | |
| 7 | **보안관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 | 주의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북한의 해킹조직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하여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출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이 소장한 자료는 개인 신원 및 재정 상황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기 쉬우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가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보안관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인원증대 등을 통하여 보안운영, 보안기획, 보안관제,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등으로 보안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도서관 운영지원(7031-307) | 주의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은 법원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점자보도블록, 자동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음<br>※ (2023년도) 시설유지관리(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157백만원<br>- 점자블록 보완 설치: 14백만원<br>- 장애인 주차구역, 보도 경사로, 계단 핸드레일 설치 등 : 7백만원<br>- 자동문 설치 및 촉지도 : 12백만원<br>-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 70백만원<br>- 기타 공사 소요경비(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 54백만원<br>○ 법원도서관은 공사비(420-03목)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잘못 편성하였고,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도 실패하여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등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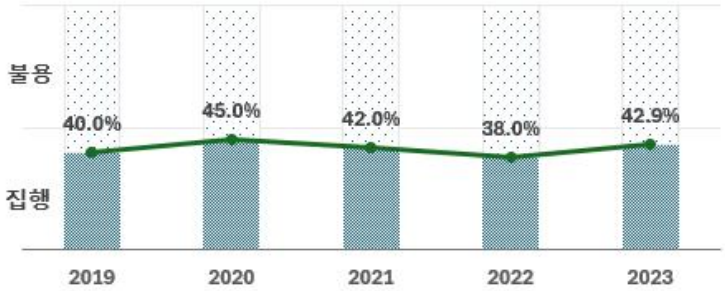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법관연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사법연수원은 2022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1,400만원(시스템 구축 개발비 1억 7,300만원, 시스템 전산장비 확충비 8억 4,1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이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편성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4,200만원 역시 미집행(600만원은 불용, 3,6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사법연수원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반영한 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등기소<br>이전비용의<br>정확한 추계를<br>통한 집행실적<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등기특별회계 - 등기소 신・증축(1252-4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등에 따른 이전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2023년의 경우 리모델링 대상 등기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곳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br>※등기소 신증축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2021년~2023년)<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A)</th><th>집행액(B)</th><th>예산집행률(B/A)</th></tr>
<tr><td>2021</td><td>487</td><td>198</td><td>40.6</td></tr>
<tr><td>2022</td><td>487</td><td>250</td><td>51.3</td></tr>
<tr><td>2023</td><td>487</td><td>73</td><td>14.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계약사무의<br>전문성 증진<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등기특별회계 -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대법원은 동 세부사업에서 세 건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br><br>(단위: 백만원)<br><table><tr><th>대상사업</th><th>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br>유지관리 사업</th><th>인터넷등기소 등<br>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th><th>부동산 등기시스템 DB서버<br>성능개선사업</th></tr><tr><td>원가계산용역금액</td><td>6</td><td>20</td><td>3.3</td></tr><tr><td>사업개요</td><td>등기응용 정보시스템의<br>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td><td>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br>등 결제·정산 대행</td><td>부동산등기 DB서버 3대 교체<br>및 증설 등</td></tr><tr><td>사업예산</td><td>16,716</td><td>징수수수료 총액에서<br>일정비율을 사업자에 지급</td><td>78.5<br>(60개월 금융리스로 집행)</td></tr><tr><td>입찰공고금액</td><td>17,350</td><td>8,613</td><td>1,389</td></tr><tr><td>계약방식</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r></table><br>○ 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은 사업예산이 계약금액 결정기준이 되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사업금액 산출이 가능했음<br>○ 부동산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은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기성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별도의 원가계산용역이 필요하지 않았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각급법원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원가계산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예산 이·전용 등 활용시 정확한 추계 필요 | 관련사업명 | 등기특별회계 - 등기업무운영지원(7032-311)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대법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한 등기국·과·소 건물의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전용·세목조정(이하 '이·전용 등') 을 통해 예산액 39억 9,500만원의 93.3%에 해당하는 37억 2,800만원을 다른 사업과 세목에서 공공요금으로 변경함<br>○ 이·전용 등은 재원을 보내주는 다른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만큼 정확한 추계에 의해 향후 소요분만큼 이루어져야 하나, 일선 관서에서는 공공요금이 남아 공공요금을 다른 세목으로 세목조정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등기국·과·소 청사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청구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 분기별 구체적인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 |
| 13 |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업 홍보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등기특별회계 - 등기업무운영지원(7032-311)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대법원은 「점자법」의 개정에 따라 점역을 위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점역 신청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련하였으나, 점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신청으로 수행됨에 따라 2023년 7월 1건의 점자 문서만 제공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점자 문서 발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으로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절차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수입) - 민간출연금(59-594)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공탁금 보관은행을 신규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재지정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 있음<br>○ 각 보관은행별로 출연율(공탁금 평균 잔액 대비 출연액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출연율 등 기금 수입과 관련된 항목을 보관은행 지정에 반영하는 경우 기금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기준에는 ①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② 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 ③ 민원인 이용 편의성 등이 포함될 뿐 출연율 등 수익적 측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공탁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기준에 기금 수입과 관련된 항목을 반영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전문가 진단 등<br>집행률 개선<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전문가 진단 등의 실시 부족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매년 40% 내외임(2023년 기준 42.9%)<br> 
<br>○ 전문가 진단 등은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심리와 처분을 위한 것인데, 2019~2023년간 대상사건 대비 실시사건 비율을 보면 소년보호사건 4.7%, 아동보호사건 14.6%, 가정보호사건 14.6%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적정한 심리와 처분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한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집행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사업 성과지표 보완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기금 지출 구조상 소송구조 지원 사업(1161-301), 조정제도 지원 사업(1161-302),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1161-303),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 등과 함께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1100)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성과지표로 '사건 처리율'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표로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국민 대상 사법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 사업의 성과와 운영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알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성과지표 보완을 검토할 것 | | |
| 17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모색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국민참여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건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대상사건 대비 신청사건 비율은 통상 5%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상사건 21,483건 중 3.14%인 674건만이 신청되었음<br>○ 당사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비율은 매년 30%에 이르는 수준으로(2023년도 기준 31.0%), 그 결과 2023년에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95건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홍보, 신청주의 수정, 당사자 신청에 대한 배제기준 마련 및 각 법원별 실시율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정책연구비<br>연례적 이월<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3년 동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정책연구비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가재정법」,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강조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취지에 어긋남<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계약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계약기간</th><th>주 제</th></tr>
<tr><td>2021년</td><td>29</td><td>-</td><td>29</td><td>’21. 12. ~ ’22. 9.</td><td>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td></tr>
<tr><td>2022년</td><td>24</td><td>-</td><td>24</td><td>’22. 8. ~ ’23. 2.</td><td>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td></tr>
<tr><td>2023년</td><td>24</td><td>-</td><td>24</td><td>’23. 12. ~ ’24. 6.</td><td>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미리 수요 계획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형사전자소송<br>시스템 구축의<br>철저한 사업<br>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13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예산현액 38억 2,900만원 중 13억 8,700만원만 집행(집행률 36.2%)되고, 23억 8,900만원이 이월(이월률 62.4%)되는 등 예산 집행이 저조함<br>○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1차 과업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과업기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함<br>※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과업기간 변경내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차</th><th>2차</th><th>3차</th></tr>
<tr><td rowspan="2">개발</td><td>기존</td><td>2023. 7. 31.~2024. 5. 1.<br>(9개월, 275일)</td><td>2024. 5. 2.~2025. 5. 1.<br>(12개월, 365일)</td><td>2025. 5. 2.~2026. 3. 31.<br>(11개월, 334일)</td></tr>
<tr><td>변경</td><td>2023. 7. 31.~2024. 6. 30.<br>(11개월, 335일)</td><td>2024. 7. 1.~2025. 8. 31.<br>(14개월, 427일)</td><td>2025. 9. 1.~2026. 7. 31.<br>(14개월, 427일)</td></tr>
<tr><td rowspan="2">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td><td>기존</td><td>2023. 12. 5.~2024. 5. 31.</td><td>2024. 6. 1.~2025. 5. 31.</td><td>2025. 6. 1.~2026. 4. 30.</td></tr>
<tr><td>변경</td><td>2023. 12. 5.~2024. 7. 31.</td><td>2024. 8. 1.~2025. 9. 30.</td><td>2025. 10. 1.~2026. 8. 3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과업기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과업변경 분쟁 및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13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4년 9월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완료가 지연되어 현재 시스템 개통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음<br>○ 대법원은 현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LG CNS 컨소시엄)와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음<br>○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업 추가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과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예측성·정확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과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가적 과업이 당초 요구사항 범위 내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요구사항을 가능한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br>○ 전체 대법원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중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리용역비 분담금 산출은 기존 예산 배정금액 7억 6,500만원 중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도입 일정 지연으로 재산정되어 최종 5억 5,025만원으로 산정되었고 낙찰차액(433만원)을 포함한 집행액은 5억 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100만원임(불용률 40.6%)<br>※ 2023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리용역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재산정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
<tr><td>관리용역비</td><td>765</td><td>550</td><td>544</td><td>221(낙찰차액 4.3 포함)</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과업변경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견 발생 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br>○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발 일정의 준수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비인 관리용역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형사보상청구<br>결정 기한<br>준수에 대한<br>관리 및 대책<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대법원은 형사보상청구 시 결정 기한인 6개월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결정 기한 준수율 등에 대한 자료 관리 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정 기한 준수율을 높여 형사보상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br>「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br>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br>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br>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br>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br><br>- 대법원에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보상결정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법원은 형사보상결정 지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br><br>- 법원이 보상결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납북귀환어부’ 사건, ‘제주 4.3.’ 사건 등의 보상청구 기한을 어긴 사례가 이미 보도된 바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 기한의 준수율을 관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별로 사례를 관리하여 각급 법원에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등기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출(8010-800) | 시정,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는 예산편성시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과다 예측해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도 과다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규모를 결정하는 매년 연말 세입 징수가 마감되지 않아서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기인함<br>○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0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대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112억원(6.6%)만 집행하고 369억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차년도 세입으로 이입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등기특별회계의 전출)은 예산현액 대비 6.6%의 수납률을 보였음<br>- 국회는 2018년도,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과대 추계되어 연례적인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연말까지의 총세입 징수액 추이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이입액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br>○ 대법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심의한 세출예산의 집행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1161-303) | 주의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 작업지침과 달리 사용목적, 집행방식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br>- 일자별, 세목별 집행내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산보고서만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하기 어려움<br>○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하는 회계법인은 작성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송구조 지원(1161-301)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대법원이 실시하는 개인파산·회생사건 지원의 경우 전세사기사건과 관련된 임대인도 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이 실효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받는 절차가 중단되고, 결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게 됨<br>○ 국토교통부 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소송구조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세입예산 편입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관련 - 법원보관금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법원 소관 보관금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법원보관금이 포함되는데, 공탁금의 경우 그 운용수익금이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회수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그 운용수익금이 법원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음<br>○ 2023년 말 현재 법원보관금 잔액은 2조 63억원으로, 그 운용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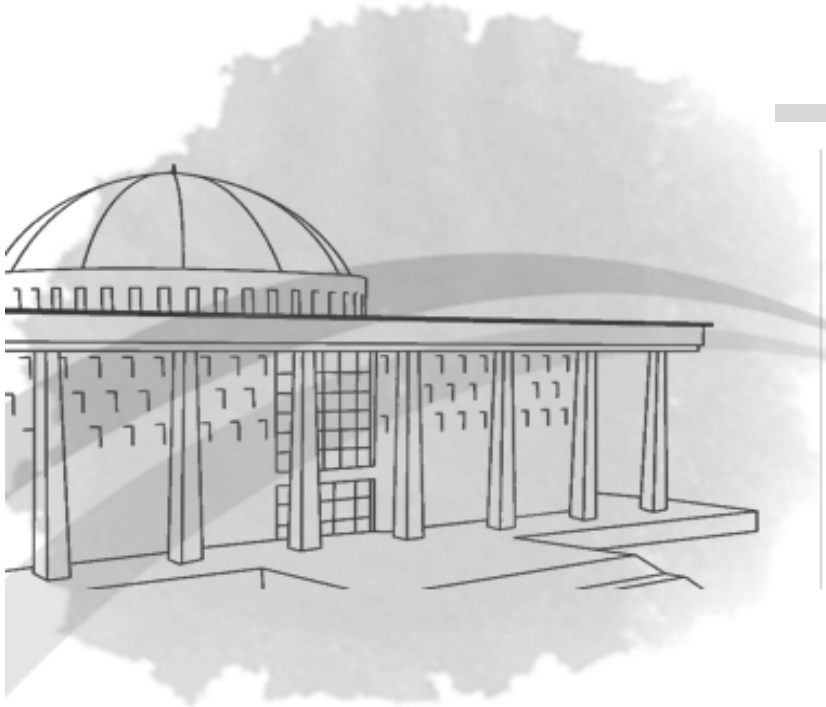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 주의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대법원은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본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인건비: 1억 6,800만원, 공공요금: 4,000만원)하여 사용하거나,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에 지출 또는 계획에 없던 온라인 강의 등록비에 지출하는 등 해당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br>-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 은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연구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수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br>구성원의 어학연수나 단기 위탁교육 등은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 내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23년도 예산 21억 4,400만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 시정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2억 900만원, ‘건강지원운영’ 사업에서 7,600만원,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본부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이용함<br>○ 대법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는바, 사업 대상자 선별과 사업 추진이 모두 부실했다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며,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만큼만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부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8</td><td rowspan="3">징계부가금<br>세입예산 편성<br>및 수납실적<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징계부가금(56-56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징계부가금 10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되었음<br>※ 징계부가금 결산 내역: 2020~2023년<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체등<br>증감액</th><th rowspan="2">예산<br>현액</th><th rowspan="2">징수<br>결정액(B)</th><th rowspan="2">수납액<br>(C)</th><th rowspan="2">수납률<br>(C/A)</th><th rowspan="2">수납률<br>(C/B)</th><th rowspan="2">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br>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0</td><td>-</td><td>-</td><td>-</td><td>-</td><td>2,375</td><td>15</td><td>-</td><td>0.6</td><td>2,361</td><td>-</td></tr>
<tr><td>2021</td><td>-</td><td>-</td><td>-</td><td>-</td><td>1,110</td><td>10</td><td>-</td><td>0.9</td><td>1,100</td><td>-</td></tr>
<tr><td>2022</td><td>-</td><td>-</td><td>-</td><td>-</td><td>1,109</td><td>49</td><td>-</td><td>4.4</td><td>1,060</td><td>-</td></tr>
<tr><td>2023</td><td>-</td><td>-</td><td>-</td><td>-</td><td>1,060</td><td>-</td><td>-</td><td>-</td><td>1,060</td><td>-</td></tr>
</table>
○ 징계부가금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 시부터 세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지 않게 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절차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사법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법업무 전산화(1142-401) | 제도개선 | 대법원 |
| | | 지적사항 | ○ 대법원은 세부사업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으로 연간 45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소송제기건수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br>- 2023년 예산현액 451억 3,100만원, 집행액 428억 8,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 9,600만원, 불용액 6억 4,900만원임<br>- 법원행정처에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현황 확인을 위한 소송제기 건수 및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법원은 전산화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 | | |

# 정무위원회



#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49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국가대테러종합 훈련 방향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대테러센터 운영(7032-303)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대테러센터는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매년 1회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일반용역비(210-14) 1억 6,500만원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였음<br>○ 그러나 2023년도 훈련 시에 일반 시민의 참여는 없었으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음.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려 했던 당초 훈련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다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훈련의 목표로 한다면 더 많은 일반 시민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만약 안전 등의 문제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 목적에 집중하여 범정부적으로 준비해 온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규제심판부의 회의실적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의 운영을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에 일반수용비 2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규제심판부 회의 개최실적이 17건에 불과했으며, 이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집행액이 3,650만원(집행률 17.4%)에 그쳤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향후 규제심판부의 현실적인 회의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도한 불용의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3 | **덩어리규제발굴 사업 등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 주의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덩어리 규제발굴,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br>-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경우 총 4억 2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2억 4,100만원(60.0%)이 집행되었으며, 발굴 규제 검토·개선 사업은 총 3억 8,500만원 중 1억 9,600만원(50.9%)이 집행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정책연구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 주의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연 발주하여 정책연구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였고, 2023년에 추진한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지체상금 납부에 대한 고려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 변경계약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br>* (당초) 2023.10.27.~ 2023.12.31. → (변경) 2023.10.27.~ 2024.4.30. / 2023.12.27. 변경계약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향후 정책연구비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 |
| 5 | **존속필요성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직제 반영을 적극 협의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안과제 추진 지원(7035-301)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을 별도정원과 비별도파견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2008년에, 세월호피해지원단은 2015년에 설치되었지만 아직까지 존속기한 설정 없이 운영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임시조직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 주의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br>○ 그런데, 종합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1~2월경 국회에 보고되었지만, 이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br>○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예산 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실시 등 '사업 변경'을 이유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미흡**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 주의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는 ODA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br>○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위원회의 직접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ODA 정책·사업 관련 정보(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명시하였음<br>○ 그런데, ODA KOREA 홈페이지 확인 결과, 위원회평가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관역량진단의 경우 개별 사업시행기관의 명칭을 익명처리하여, 어떤 기관이 어떤 평가결과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ODA사업과 관련된 위원회평가 결과를 국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화면에 배치하고, 공개 시에는 사업시행기관 명칭 및 사업내용과 그 평가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OECD 대한민국<br>정책센터 지원<br>사업 기여금<br>산출근거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7035-31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무조정실</td></tr>
<tr><td>지적사항</td><td>❍ OECD 기여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OECD의 기여금 인상 요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OECD 정책센터 경쟁정책센터에 지급되는 기여금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인상되고 있음<br>- 양해각서(§8②)는 직원 고용, 주요 작업내용 관련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ECD 입장에서는 기여금 인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br>※ 최근 4년간(2020~2023년) 경쟁정책센터 OECD 기여금 편성 및 지급현황
<table>
<tr><th>연도</th><th>예산편성 기준(€)</th><th>실집행액(€)</th></tr>
<tr><td>2020</td><td>200,000</td><td>217,105</td></tr>
<tr><td>2021</td><td>200,000</td><td>222,249</td></tr>
<tr><td>2022</td><td>230,000</td><td>238,303</td></tr>
<tr><td>2023</td><td>240,000</td><td>218,18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기여금을 증액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도록 하고, 양해각서의 추가 연장 예정일(2026년 7월 1일)에 앞서 양해각서상의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항의 내용을 조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예산편성 시<br>사업추진<br>필요성의 면밀한<br>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무조정실</td></tr>
<tr><td>지적사항</td><td>❍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까지만 운영된 후 2025년부터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될 예정임에도, 2023년도 예산에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12억 5,000만원)가 반영된 후 전액 불용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br>※ 2023회계연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 결산 내역<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3">국무조정실</th><th colspan="4">출연기관(한국고용정보원)</th></tr>
<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3,775</td><td>2,525</td><td>1,250</td><td>2,525</td><td>2,493</td><td>32</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 간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청년DB 활용도<br>제고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td></tr>
<tr><td>지적사항</td><td>❍ 청년DB는 당초 계획(연 평균 2만명)에 비해 2023년 말 기준 회원가입 인원(17,399명) 및 프로필 등록 회원 수(9,711명)가 저조함<br>※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현황<br>(단위: 명)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성 별</th><th colspan="5">연 령 (만나이)</th></tr>
<tr><th>합계</th><th>남</th><th>여</th><th>합계</th><th>19~24</th><th>25~29</th><th>30~34</th><th>35~39</th></tr>
<tr><td rowspan="2">’23.12월말<br>기준</td><td>회원가입 현황</td><td>17,399</td><td colspan="2">-</td><td>17,399</td><td colspan="4">-</td></tr>
<tr><td>프로필 등록현황</td><td>9,711</td><td>5,125</td><td>4,586</td><td>9,711</td><td>1,983</td><td>3,139</td><td>2,995</td><td>1,594</td></tr>
<tr><td rowspan="2">’24.4월말<br>기준</td><td>회원가입 현황</td><td>21,471</td><td colspan="2">-</td><td>21,471</td><td colspan="4">-</td></tr>
<tr><td>프로필 등록현황</td><td>11,761</td><td>6,011</td><td>5,750</td><td>11,761</td><td>2,206</td><td>3,768</td><td>3,716</td><td>2,071</td></tr>
</table>
- 또한, 2023년에 청년DB를 통해 공공기관·지자체 등과 연결되어 활동한 건수는 총 385건으로 프로필 등록 회원(9,711명) 중 3.9% 수준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청년DB가 청년층의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분과위원회 다양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민간위원(76→32명)과 분과위원회(8→4개)가 축소개편된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및 분과위원회 다양화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 | | |
| 12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문임기제 미채용에 따른 업무공백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 주의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전문임기제 가급 1인, 나급 1인 공석 기간의 장기화로 1억 6,200만원 불용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전문임기제 미채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 채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일곱 차례 개정하여 설치 이후 약 10년간 운영하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br>- 이는 임시조직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 감사결과('22.6월)·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함<br>* 2020회계연도·2021회계연도·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전자심판제도<br>운영 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br>조세심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접수건수 대비 전자심판 접수 비율이 22.9%이며, 다른 연도에도 비슷한 실적을 나타냄<br>※ 전자심판 접수 건수 및 비율<br>(단위: 건수)
<table>
<tr><th>연도</th><th>총 접수건수</th><th>전자심판 접수건수</th><th>전자심판 비율</th><th>증감</th></tr>
<tr><td>2020</td><td>12,795</td><td>3,037</td><td>23.7%</td><td>-</td></tr>
<tr><td>2021</td><td>13,025</td><td>3,214</td><td>24.7%</td><td>1%p</td></tr>
<tr><td>2022</td><td>10,373</td><td>3,235</td><td>31.2%</td><td>6.5%p</td></tr>
<tr><td>2023</td><td>16,781</td><td>3,842</td><td>22.9%</td><td>△8.3%p</td></tr>
</table>
❍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의 온라인 청구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68.7%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 접수비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본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은 ISP 수립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 주의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 |
| | | 지적사항 | ○ 조세심판원은 2023년도에 일반연구비(260-01) 1억 4,450만원을 들여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음<br>-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청사이전 예산과 함께 반영되었음<br>○ 조세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개발사업의 단독 실시 가능성이 낮음에도 2023년에 별도로 ‘조세전자심판시스템 ISP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 본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ISP 수립 집행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옴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가능성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정책연구 성격의<br>사업은<br>정책연구비로<br>집행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br>조세심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심판원의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3건 모두 조세심판원의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책연구비(260-02)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였음<br>※ 일반연구비(260-01) 집행 현황<br>(단위: 천원)
<table>
<tr><th>연도</th><th>과제명</th><th>집행액</th><th>계약기간</th></tr>
<tr><td>2021</td><td>포스트코로나 조세심판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td><td>20,000</td><td>2021.12.8. -<br>2021.12.31.</td></tr>
<tr><td>2022</td><td>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연구</td><td>45,455</td><td>2022.12.1. -<br>2023.3.31.</td></tr>
<tr><td>2023</td><td>심판결정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td><td>20,000</td><td>2023.10.6. -<br>2023.12.22.</td></tr>
</table>
❍ 조세심판원은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함으로써 정책연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결과물의 평가 및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연구는 정책연구비로 집행하여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시민사회위원회 운영경비 편성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 | 지적사항 | ○ 국무총리비서실은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폐지된 시민사회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계획임에 따라 매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경비 예산(1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br>○ 이는 ①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폐지를 권고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②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이 2024년 8월 현재까지 지연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③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음<br>* 2023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300만원 중 8,400만원(58.7%)이 집행되고,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경청간담회, 교권 정상화 등 의견수렴 관련 교육개혁 경청간담회 등 시민사회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개최 및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와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등에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고 미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경비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민정실<br>특정업무경비<br>편성 · 집행의<br>적정성 검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회 ·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br>국무총리비서실</td></tr>
<tr><td>지적사항</td><td>❍ 민정실 직원이 「예산안 편성지침」상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 · 집행되고 있음<br>- 민정실의 주요업무 중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등 특정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업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실 직원 현원 42명 중 41명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br>※ 특정업무경비(250-03목) 편성 관련 지침<br>「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6<br>· 적용대상 : 각 기관의 수사 · 감사 · 예산 ·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br>· 세부지침 :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금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 ·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2023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 시정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비슷한 시기 갤럽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으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이 수행한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잘못된 조사를 바탕으로 국정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소지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등의 수행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
| 20 |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주의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
| | | 지적사항 | ○ 출연연구기관은 결산잉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우선 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br>○ 자체 청사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9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일부를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해 납부하고 있음<br>○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매년 부과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연구원 등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경상적 성격의 제세공과금 납부를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제도개선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
| | | 지적사항 |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br>- 한국교통연구원(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0.2%)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물품 및 용역의 총 구매액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
| 22 | **논문게재료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제도개선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
| | | 지적사항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논문게재료 지급지침 여부 또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지급 금액의 상한 역시 편차가 큼<b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은 논문게재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b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급금액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논문게재료 관련 공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3</td><td rowspan="3">공동채용<br>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경제・인문사회<br>연구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별로 실시하던 신규직원 채용을 공동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채용 위탁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관련하여 3억 2,535만원을 집행하였음<br>○ 그러나 공동채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 및 채용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에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채용한 총 1,317명 중 68명(5.2%)만이 공동채용을 통해 채용되었음<br>※ 공동채용 참여기관 수 및 채용인원
<table>
<tr><th>구분</th><th>참여기관 수</th><th>채용인원</th></tr>
<tr><td>2021년</td><td>6개</td><td>19명</td></tr>
<tr><td>2022년</td><td>18개</td><td>127명</td></tr>
<tr><td>2023년</td><td>16개</td><td>68명</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동채용 사업의 확산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재정정보시스템 보급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제도개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 지적사항 | ○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출연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표준화된 예산·결산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으로서 추진되었으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4억 2,4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24년 예산도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br>○ 그러나, 2023년도를 기준으로 27개 연구기관 중 8개 기관만이 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24년에도 1개 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만 당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참여기관 확보, 출연연구기관 예·결산 투명성 제고 등 성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5 | **협동연구의 취지에 맞는 성과인센티브 운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주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 지적사항 | ○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총연구비의 10% 이내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조사나 행사성 경비의 증가만으로도 성과인센티브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음<br>- 그런데 총연구비에는 협력기관의 기여도와 무관한 위탁연구개발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기관의 기여도와 상관없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증가되더라도 총연구비가 증가하여 책정가능한 성과인센티브의 한도액이 증가하게 됨<br>- 2023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위탁연구개발비가 총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9.4%까지 분포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비에서 단순 조사 및 행사성 사업 등에 관한 위탁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통신비의 지급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1532-301)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 | | 지적사항 | ○ 공공요금에 전신전화료·이동전화사용료로 2,16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장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전액 집행하였는데, 원장에 대해서는 단말기와 휴대전화 사용료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였고, 부서장 등에 대해서는 업무형태 및 업무 수행상 필요를 검증하지 않고 매월 정액 통신비를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통신비 지급 대상 업무 형태, 실제 업무용 전화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통신비를 집행할 것 | | |
| 27 | **국가균형발전 연구사업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토연구원(1533-301) | 제도개선 | 국토연구원 |
| | | 지적사항 | ○ 2023년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정책 지원사업’(1.8억원)과 ‘국가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위한 도로정책지원 연구사업’(2억원)을 추진하였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정책 지원사업’의 예산(1.8억원)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중 연구비 예산이 가장 적음<br>- 국·공유지연구센터사업(3.71억원), 중소·중견기업 소규모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3.6억원), 주거복지정책 지원사업(3.24억원), 토지정책 지원사업(2.24억원) 등의 사업과 비교해서도 예산 규모가 적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연구원은 향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일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일반사업 구조 조정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연구원(1535-301) | 제도개선 | 산업연구원 |
| | | 지적사항 |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예산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24년에는 북경지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고정비 1억 4,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6,200만원 수준의 예산만이 편성되었음<br>-「직제규정」상 북경지원의 업무분장 중 첫 번째 업무가 ‘본원 연구지원 업무’라는 점에서 당해 사업은 일반사업으로서의 고유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북경지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1명에 불과하여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확대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br>○ 한편, ‘중국종합연구’ 예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2024년 예산인 5,800만원은 2023년 예산 1억 7,900만원에 비해 32% 수준이며 2020년 예산 3억 5,000만원에 비해 17% 수준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 지속가능성 및 성과창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사업을 활성화 또는 조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 유지비 지급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1537-301) | 제도개선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 | | 지적사항 | ○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연구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연구원 소속 부연구위원 이상 및 책임행정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4,035만원이 집행되었음<br>※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월 30만원, 부연구위원 및 책임행정원: 월 20만원<br>-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지급은 업무와 관련한 출장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 관련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장 이력이 없거나 그 횟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함<br>-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수령자는 출장 시 업무용 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 시 여비를 일부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여비를 중복 지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일괄적인 지급을 지양하고, 동 유지비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왜곡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연구기획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일연구원(1538-301) | 주의 | 통일연구원 |
| | | 지적사항 | ○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살피면 비목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연구기관 운영에 있어 기초적 토대가 되는 성격의 활동에 편성·집행되는 경상운영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안을 연구기획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br>- 연구기획사업비 내 수용비 집행 중 ‘물품구입비 지급’ 명목으로 집행한 273만원은 마트, 카페, 식당 등이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회의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명함제작·연하장제작·신문구독료 등의 경우 수용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br>- 연구기획사업비 내 전문가활용비 660만원을 ‘연구위원 스냅사진 촬영비 지급’ (550만원),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110만원)의 명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기관의 일반적인 활동에 해당하므로 경상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기획사업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 집행에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수시연구사업비 사업·예산 관리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 주의 | 한국개발연구원 |
| | | 지적사항 | ○ ‘수시연구사업비’는 한국개발연구원 기본사업비 중 기관고유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임<br>○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시연구사업비 예산현액 9,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이월하였음<br>○ 한편, 2023년 수시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총 5개의 연구과제는 정책의 수립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적 연구과제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시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원의 정관상의 목표, 기관의 특성 정책 및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시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연구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수시연구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정확한 예산추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 주의 | 한국개발연구원 |
| | | 지적사항 | ○ 민간투자지원사업은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질의답변 등의 정책서비스와 민간투자 연구 및 세부요령 마련 등 민간투자제도의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6억 4,200만원(89.2%)을 집행하였음<br>○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예산 7,200만원 중 4,100만원이 집행되고 3,1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여, 이월액 규모가 43.1%에 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추계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33 |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매각계획 현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교육개발원(1540-301) | 제도개선 | 한국교육개발원 |
| | | 지적사항 | ○ 충북 진천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기존 구청사를 매각하여 822억 5,000만원 금액을 확보해 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청사 매각 계획 달성에 실패하여 금융부채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음<br>- 2010년부터 구청사 매각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5월까지 총 12회 유찰된 바, 신청사 매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총 110억 2,510만원 발생하였고, 2023년 부채비율은 161.86%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속적으로 매각이 유찰되는 구청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계약관련<br>법령준수노력<br>미흡</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교육과정<br>평가원</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워크숍 행사, 합숙 시설 임차에 대하여 감염병(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table>
<tr><th>계약명</th><th>계약상대방</th><th>계약금액(만원)</th></tr>
<tr><td>수업연구회 컴퓨터 기반<br>자율평가 출제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td><td>코리아나호텔</td><td>17,757</td></tr>
<tr><td>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등학교 5학년 및<br>중학교 2학년 성취수준 설정 워크숍</td><td>코리아나호텔</td><td>15,982</td></tr>
<tr><td>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3월)</td><td>건설경영연수원</td><td>5,728</td></tr>
<tr><td>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6월)</td><td>건설경영연수원</td><td>5,728</td></tr>
</table>
❍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계약 기준·절차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과는 별도의 「회계규정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계약절차에서 벗어나 자의적 예산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계규정시행규칙」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준용규정을 도입하거나 「회계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기준·절차를 기관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 주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함<b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경상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목으로 포상금을 총 1,460만원을 집행하였음<br>- 10년 근속자 22명에게 30만원씩 총 660만원, 20년 근속자 5명에게 40만원씩 총 20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 |
| 36 | **이월을 통한 자체수입 초과분 직접사용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노동연구원(1543-301) | 제도개선 | 한국노동연구원 |
| | | 지적사항 | ○ '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초과수입을 동일사업 예산으로 이월하여 편성·집행하였음<br>-「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br>※ 결산잉여금의 사용처: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노동연구원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분을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등 자체수입 초과분 사용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1547-301) | 주의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 | | 지적사항 |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의 세부과제인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238만원을 초과한 6,238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관련 비용을 별개의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br>※ 당초 편성된 행사용역비 5,000만원 중 4,950만원 집행,<br>그 외 동 사업 예산 250만원 집행, 타 사업 예산 1,038만원 집행<br>○ 학술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성과들을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국제 학술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자 1명을 제외하면 발제자 및 토론자 모두 국내연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회의와의 차별점도 찾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별 연구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여러 연구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성과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기본연구사업<br>외부용역비<br>집행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한국조세재정<br>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외부기관에 위탁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고 위탁 및 외부용역 등은 지양하도록 정함<br>○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 연구과제 3건에 대하여 연구과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참고하여 연구과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table>
<tr><th>연구과제명</th><th>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목</th><th>외부용역비<br>집행액</th></tr>
<tr><td>부가가치세의<br>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td><td>부가가치세<br>장기세원분포 분석</td><td>1,200만원</td></tr>
<tr><td>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br>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td><td>구조모형을 통한<br>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td><td>1,000만원</td></tr>
<tr><td>노인 일자리 사업이<br>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td><td>노인 일자리 사업이<br>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td><td>1,000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의 책임성 및 기관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외부용역비을 집행하는 경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임차료 등<br>과다집행</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한국조세재정<br>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회의실 임차는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고, 호화로운 호텔 임차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정함<br>○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 중간보고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센터에서 개최하면서, 시설 임차료 1,593만원·우등버스 임차료 176만원, 국내여비 716만원, 회의비 1,015만원, 수용비 117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table>
<tr><th>구분</th><th>착수보고심의회</th><th>중간보고심의회</th><th>최종보고심의회</th></tr>
<tr><td>임차료</td><td>250만원</td><td>1,769만원</td><td>-</td></tr>
<tr><td>국내여비</td><td>-</td><td>716만원</td><td>46만원</td></tr>
<tr><td>회의비</td><td>613만원</td><td>1,015만원</td><td>787만원</td></tr>
<tr><td>수용비</td><td>4만원</td><td>117만원</td><td>7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관리를 위한 각종 심의회 개최시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여 과도한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일반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 통합발주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1549-305) | 제도개선 |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
| | | 지적사항 | ○ 연구지원사업인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과 일반사업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사업’을 통합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함<br>- ‘기관고유사업’인 연구지원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전체로 심의를 받고 ‘일반사업’은 매년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 특정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운영비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통합발주 시 일반사업을 제외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41 | **규제사후영향 평가센터 (세종연구실) 운영 내실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 제도개선 | 한국행정연구원 |
| | | 지적사항 | ○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에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를 개소하였음<br>○ 그러나, 한국행정연구원은 세종연구실을 사후영향평가팀 소관의 연구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후영향평가팀 직원은 한국행정연구원 본원(서울 은평구)에서 근무하되 2명씩 2개월마다 세종연구실에 순환하여 단기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음<br>-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영향평가팀 팀원(석사급 연구원) 전원(6명)을 계약직(비정규직) 연구인력으로 충원하였는데 직원 채용공고에 세종특별시 근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당해 인원들을 세종연구실에 상주하게 하지 못하고 단기의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활용 방안 및 조직·정원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경상경비 부적정 집행**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 제도개선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 지적사항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3년 11월 21일 '하이브리드 근무환경(태블릿PC) 구축 관련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통해 총액 7,167만원에 iPad Air(5세대) 79대를 구매하여 공급받았음<br>○ 2024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103명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에서 79대의 iPad 구매는 기관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구매한 iPad 79대를 모두 연구위원·행정원 등 직원 개인에게 지급(대여)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상경비를 이용하여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행위의 적정성 및 수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43 |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 주의 | 한국환경연구원 |
| | | 지적사항 | ○ 2023년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배정금액으로 3차례에 걸쳐 의류를 구매하였고, 3차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함<br>- 3건 모두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형식도 통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서 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로 보기 어려움<br>○ 또한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집행 시 직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는바,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므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법령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조세심판원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 |
| | | 지적사항 | ○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최근 5년간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21년도 196일, 2022년도 234일, 2023년도 172일 등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br>○ 우선처리제도의 경우 처리건수가 최근 4년간 최대 29건에 불과하고 전체 처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4년간 최대 0.3%에 그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하여 청구사건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우선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
| 45 | **여비의 사후적 전용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 주의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국무조정실은 2023년 잔여재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국내출장을 먼저 실시하고 정산단계에서야 부족분을 확인하여 예산을 사후적으로 전용(증)하였는데, 이는 전용될 예산의 용도가 적정한지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사전에 출장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이·전용 등을 실시하여 재원을 먼저 마련함으로써 정산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전문임기제 충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권보호관 지원(7032-304) |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
| | | 지적사항 |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반이 구성·운영되고 있음<br>○ 지원반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임기제 직원 1인, 공무직 근로자 2인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 전문임기제 직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은 해당 직위의 지원자 미달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직위의 충원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 | | |
| 47 | **시민사회위원회 필요성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 주의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 | 지적사항 | ○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후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위원회의 운영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위원회의 지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국정운영의 부실로 판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훈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하반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총리보좌 및 정책조정 실패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br>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7011-251) | 주의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 | 지적사항 |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정책조정 등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법에 명시되었으나, 2023년에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LH 부실 아파트 시공, 새만금 잼버리 대화 졸속 시행,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묻지마 흉기난동 등 국가재난급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 있는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위 재난을 관리하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만 펼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2023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같은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조정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평가사업 변별력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제도개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 지적사항 | ○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평가사업 결과에 의해 선정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경상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8,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음<br>○ 연구회는 평가사업 결과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균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2018~2023년) 수행한 평가사업에서 최소 22개 연구기관이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는 등 평가결과가 중간화되고 있어 변별력이 크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개선을 위한 적정수준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 |

## 2. 국가보훈부(56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인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참전명예수당(1133-307)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는 고연령으로, 그 지급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는 높아 의료비는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의료비 부족분(보훈병원진료 부족분, 위탁병원진료 부족분, 제대군인의료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이 · 전용하고 있음<br>※ 2023회계연도 이용 내역: 보훈병원진료(2150-365) 부족분 140억 8,500만원, 위탁병원진료(2150-366) 부족분: 79억 4,6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2150-450) 부족분 22억 8,400만원<br>※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실적: '20년 173,733명, '21년 161,577명, '22년 146,932명, '23년 132,479명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의료비 증가율 추계 반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참전명예수당(1133-307)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는 고연령으로, 그 지급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는 높아 의료비는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의료비 부족분(보훈병원진료 부족분, 위탁병원진료 부족분, 제대군인의료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이 · 전용하고 있음<br>※ 2023회계연도 이용 내역: 보훈병원진료(2150-365) 부족분 140억 8,500만원, 위탁병원진료(2150-366) 부족분: 79억 4,6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2150-450) 부족분 22억 8,400만원<br>※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실적: '20년 173,733명, '21년 161,577명, '22년 146,932명, '23년 132,479명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예산편성 시 의료비 증가율을 추계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 |
| 3 | **명확한 보상정지 처리기준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상금지급관리(1137-311)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등 제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br>※ 품위손상행위자 실형 기간 외 추가 보상 정지 기간 평균 1년 6개월<br>○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같이 명백히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에도, 보상정지를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상 정지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사업 관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직제 증원('22. 12. 13.)에 따라 ‘전문경력관 다군’이 10명 증원되어, 심사지원 전문인력 지원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4억 5,6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br>- 직제개정과 관련된 부처 간 협의가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시작(22년 9월)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 사업 관련 절차 진행을 국회에 적시 설명·보고함으로써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5 |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의 심사지원 전문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부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훈 관련 시설 전반의 인력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개선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등록관리(1143-328)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등록관리”의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중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내내역사업의 계획 대비 발급률이 36.6%(2023년 6월 ~ 12월 말)로 저조하고 2024년 1분기와 2분기의 발급률 역시 저조함. 이로 인해 사업 종료 예정일인 2024년 말보다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7 |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에 대한 월권 행사 방지 대책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5월 국가보훈부 간부가 3단체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관리·감독권과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강요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 및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리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 보조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에 대해 보조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우려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9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의료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철저한 보조금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156-383)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br>-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11 | **학습보조비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2241-453) | 시정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학습보조비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2241-453)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비 지급 단가의 인상이 필요함<br>* 교육급여 비교 : 2024.3월부터 적용 교육활동지원비<br>· 초등학생 461천원, 중학생 654천원, 고등학생 727천원(1인당 연1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교육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 | | |
| 13 | **콘텐츠 구축사업 관련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중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내역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계약 모두 매년 입찰업체 부족(단일 응찰)으로 유찰된 후 재입찰 공고 없이 입찰 참여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제안 설명회 개최 등 경쟁입찰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독립기념관 연구 기능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 및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조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함에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연구사업보다 행사·홍보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자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료를 보다 상세히 국회에 제출할 것 | | |
| 15 | **일회성 홍보 사업 지양 및 본연 업무 집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정신계승발전(3145-401)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훈 문화 확산 사업의 예산이 23년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액(31.7억→172.7억)되었는데, 예산 급증 과정에서 토크콘서트, 퀴즈 경연대회 등 일회성 위탁사업으로 10억원이 넘게 사용된 것은 6.25자녀수당 예산의 부족분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 순위 설정이 잘못된 예산 집행이었다고 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일회성 홍보 사업에 지나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공자 예우 등 국가보훈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국외 탐방국 다양화 대책 및 홍보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내외사적지탐방(3145-403)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국내외사적지탐방”은 청소년, 청년, 교사 등에게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미국, 멕시코,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의 부재로 탐방국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치우쳐 있고, 2023년도 선발인원 경쟁률은 1.74:1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국외 탐방국의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사적지탐방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 |
| 17 | **적극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예산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충시설건립(3146-405)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LA 홍사단 건물 매입”은 “현충시설건립사업”의 세사업 중 하나인데, 국가보훈부는 2023년 2월 LA 홍사단 단소를 295만불에 매입하였음. 국가보훈부는 2023년 11월 LA 홍사단 단소 활용방안 수렴을 위해 미주 한인 대상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한인단체들과의 소통부재를 비판하는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LA홍사단 단소 착공 전까지 많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3146-406)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현충시설관리” 중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HW 구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3억 1,400만원 및 타 내역사업 예산 8,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9 |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3146-406)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현충시설관리”는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방점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의 절반을 동 사업 중 안중근의사기념관 및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대표 현충시설 기념관 인물들을 AI 디지털휴먼으로 제작하는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에 소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3146-410)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주지중화사업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진출입로에 3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려는 사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통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원 규모로 전주지중화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br>-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에 대한 인지 부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동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 | |
| 21 |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3146-410)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공무직 인건비 23억 7,200만원 중 9,300만원을 불용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국내 독립기념행사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의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국내 독립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5억 3,200만 중 22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500만원이 불용됨<br>- 2023년도 국내 독립기념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국내 독립기념행사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23 |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독립기념행사 관련하여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br>- 2023년도에 실시한 국가보훈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이 47건(45,22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단체의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0건, 39,910,000원)과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가 진행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예산 편성 목적과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독립유공자 등 발굴 · 포상 및 홍보(3248-345)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독립유공자 등 발굴 · 포상 및 홍보” 중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은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수당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 대비 9,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50%에 달하는 4,500만원을 예산안 편성 당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내역사업의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고, 300만원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음<br>-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등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사 횟수 및 심사 인원의 경우 202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집행을 위해 증액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25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독립유공자 등 발굴 · 포상 및 홍보(3248-345)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독립유공자 등 발굴 · 포상 및 홍보” 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조건도 완화하였으며, 법적 근거 없는 특별 분과위를 신설하는 등 친일이력 인사 재평가를 위하여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국립3·15묘지 시설의 조속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3·15묘지(3250-355)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국립3·15묘지” 중 “시설보수공사” 의 예산 18억 8,000만원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예산은 18억 7,000만원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연에 따른 이월액 9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음<br>- 에스컬레이터 설치 입찰공고가 집행부진의 사유로 유찰되었음. 이는 국립묘지의 품격에 맞는 시설환경 조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 측면에서도 조속히 진행되었어야 할 사안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국립3·15묘지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것 | | |
| 27 | **적정한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당초 예산액은 신청자 2,086명을 전제로 6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금 지원자가 3,248명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30억원을 보상금에서 이·전용하여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에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4161-417) | 시정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목)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의로 집행함<br>- 동 사업의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2023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연계 정전70주년 사전 붐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낙찰차액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임의로 집행하지 말 것 | | |
| 29 | **적극적 사업 홍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4161-417)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제복의 영웅들사업'의 예산현액 52억 5,500만원 중 44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불용됨<br>-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3,794명 중 신청인원은 3만 6,176명으로, 신청률이 82.6%에 불과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처본부운영<br>사업의 적정한<br>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처본부운영(7112-27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배정된 예산(약 33억 원)의 2배 수준(약 6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전용으로 본부운영비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5억 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br>- ①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을 위해 예비비 28억 4,500만원 증액, ②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1억원 자체이용 증액 ③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2억 7,000만원 자체전용 증액<br>※ 2023년 결산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9">2023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br>현액(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다음년도<br>이월액(D)</th><th rowspan="2">불용액<br>(E)</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3,374</td><td>3,374</td><td>23</td><td>370</td><td>2,845</td><td>6,612</td><td>6,097</td><td>10</td><td>50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처본부운영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을 지양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보상금 등<br>예산을<br>본부운영비<br>등으로 이·전용<br>지양</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처본부운영(7112-27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배정된 예산(약 33억 원)의 2배 수준(약 6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전용으로 본부운영비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5억 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br>- ①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을 위해 예비비 28억 4,500만원 증액, ②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1억원 자체이용 증액 ③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2억 7,000만원 자체전용 증액<br>※ 2023년 결산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9">2023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br>현액(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다음년도<br>이월액(D)</th><th rowspan="2">불용액<br>(E)</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3,374</td><td>3,374</td><td>23</td><td>370</td><td>2,845</td><td>6,612</td><td>6,097</td><td>10</td><td>50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등 보훈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을 본부 운영이나 기본경비 등의 예산에서 이・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연구용역 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정책개발(7167-425)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예산현액이 12억 9,700만원에 불용액이 6,500만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은 20억 7,800만원이 편성됨<br><br>○ 이월액 1억 1,700만원은 연구용역 계약 지연(무응찰 등), 연구기간 연장(현안반영 등 연구 심화) 등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관리 부실로 추정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국가계약법령 준수 및 경쟁입찰을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 시정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나누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br>○ 추석 장관 위문품 및 연말 장관 위문품 두 건의 계약 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34 |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노인생활지원용품 구매 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건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쟁이 가능한 한 건의 입찰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임<br>○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는 집행이며, 차량임차료를 임차료(210-07)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의 계획액 중 불용액이 73억 3,9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결원이 대거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결원 충원을 위해서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 |
| 36 | **보훈장학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장학금(2242-326)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도에는 보훈장학(대학원) 신청자격 강화로 인해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에는 보훈장학(대학원) 신청자 감소로 4,400만원의 발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신청자격 강화, 신청자 감소를 이유로 연이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보훈장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훈장학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인건비 등의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골프장위탁운영(2362-434)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당초 계획액 보다 7억 6,200만원이 늘어난 177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획액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br>- 인건비 전년 대비 2억 6,700만원, 재료비 전년 대비 1억 8,200만원, 경비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 증액 집행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 | |
| 38 | **보훈성금 납부 축소 가능성을 감안한 사업 축소 대책 마련**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재향군인회지원(4163-436)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재향군인회 수익업체의 보훈성금 납부 규모 축소로 인해 24억 2,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훈성금 납부 축소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 축소 대비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순국선열 · 애국 지사사업기금 기금존치평가 결과 이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3141-401)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에서 기획재정부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 국가보훈부는 친일국가귀속재산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친일 재산 발굴을 위한 후속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국회에 대면보고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한국보훈<br>복지의료공단<br>영업구조 개선<br>방안 수립</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영업비용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특히 인천보훈병원 등 보훈병원의 영업손실 규모가 상당하여 2023년 기준 509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br>- 최근 5년간(2019-2023년) 공단의 손익현황을 보면, 2023년 당기순손실 규모가 509억원으로 같은 기간 최대 규모이고, 같은 기간 매년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여 최소 196억원(2019년)에서 최대 1,177억원(2022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br>※ 최근 5년간(2019-20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당기순이익 현황<br>(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영업이익(A)</td><td>△196</td><td>△703</td><td>△863</td><td>△1,177</td><td>△764</td></tr>
<tr><td>영업외이익(B)</td><td>205</td><td>305</td><td>741</td><td>777</td><td>255</td></tr>
<tr><td>법인세 등(C)</td><td>3</td><td>△115</td><td>12</td><td>20</td><td>-</td></tr>
<tr><td>당기순이익(A+B-C)</td><td>6</td><td>△283</td><td>△110</td><td>△420</td><td>△509</td></tr>
</table>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훈병원 특성화 등에 따라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적정한 공무직<br>인건비 편성<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립영천호국원(3250-358), 국립임실호국원(3250-359),<br>국립이천호국원(3250-360), 국립산청호국원(3250-361),<br>국립괴산호국원(3250-36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영천・이천・산청・괴산호국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출 증가로 ‘공무직 등 인건비’가 당초 예산 대비 초과집행(집행률 100% 초과)되고 있음<br>※ 2023년 국립묘지 공무직 인력 초과근무 현황<br>(단위: %, 명, 시간, 만원)
<table>
<tr><th>구분</th><th>공무직 등<br>인건비<br>집행률1)</th><th>인원</th><th>초과근무<br>시수</th><th>연간<br>1인당<br>초과근무<br>시수</th><th>연간<br>1인당<br>초과근무<br>수당</th></tr>
<tr><td>국립이천호국원</td><td>108.1</td><td>29</td><td>7,892</td><td>272.1</td><td>537.6</td></tr>
<tr><td>국립괴산호국원</td><td>104.5</td><td>44</td><td>13,760</td><td>312.7</td><td>531.0</td></tr>
<tr><td>국립영천호국원</td><td>106.1</td><td>54</td><td>14,123</td><td>261.5</td><td>487.4</td></tr>
<tr><td>국립산청호국원</td><td>103.3</td><td>43</td><td>11,335</td><td>263.6</td><td>453.4</td></tr>
<tr><td>국립임실호국원</td><td>91.1</td><td>44</td><td>11,540</td><td>262.3</td><td>297.5</td></tr>
<tr><td>국립4.19민주묘지</td><td>96.7</td><td>9</td><td>1,709</td><td>189.9</td><td>195.9</td></tr>
<tr><td>국립3.15민주묘지</td><td>99.2</td><td>8</td><td>820</td><td>102.5</td><td>163.2</td></tr>
<tr><td>국립5.18민주묘지</td><td>95.3</td><td>23</td><td>1,968</td><td>85.6</td><td>147.0</td></tr>
<tr><td>국립신암선열공원<br>관리소</td><td>90.6</td><td>7</td><td>422</td><td>60.3</td><td>100.1</td></tr>
</table>
주) 본예산 대비 집행률로 산정하였음<br>자료: 국가보훈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력상황을 점검하여 공무직 인건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국립호국원 봉안당 확충 공사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임실호국원(3250-358), 국립영천호국원(3250-359),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국립호국원 안장 잔여기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봉안당 확충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과다한 이월액(153억 6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br>- 공사가 진행 중인 5개 호국원의 안장 잔여 기수는 5,423기에 불과한데, 호국원 안장 대상 생존자는 2024년 4월말 기준 17만 678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90세 이상 고령자가 2만 6,956명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완공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호국원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착공 전 사전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보훈대상자 위탁대부 사업 미상환 채권의 지급보증을 위한 지출 방식 개선**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대부(2259-387), 5·18민주유공자 대부(2259-388), 특수임무유공자 대부(2259-389), 국가유공자 대부관리(2259-390), 5·18민주유공자 대부관리(2259-391), 특수임무유공자 대부관리(2259-392)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대부 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br>-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지급보증 항목에는 국가보훈부의 위탁대부 잔액이 보증채무로 명시되어 있음<br>-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채권 사고 발생 시 해당 채권을 유상으로 양수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임<br>- 이는 직접대부를 위해 편성된 재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권 양수 방식의 지급보증이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지출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채권 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직접대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4</td><td rowspan="3">추계 정확성 제고 및 예산 변경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2023년도 예산의 산정근거를 보면, 지원인원은 실제 인원보다 과다추계(243,732명)되었으나, 실적단가는 실제 단가 대비 과소추계(△15,880원)되었음<br>※ 2023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계획/집행실적 비교<br>(단위: 명, 원)
<table>
<tr><th colspan="2">2023년도 예산계획(A)</th><th colspan="2">2023년도 집행실적(B)</th><th colspan="2">추계오차 (A-B)</th></tr>
<tr><th>예상지원 인원</th><th>예상실적 단가</th><th>지원인원</th><th>실적단가</th><th>지원인원</th><th>실적단가</th></tr>
<tr><td>4,169,499</td><td>93,244</td><td>3,925,767</td><td>109,124</td><td>243,732</td><td>△15,880</td></tr>
</table>
자료: 국가보훈부<br>- 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2019~2021) 추세가액인 93,244원을 반영하였는데 직전연도인 2021년의 실적단가인 98,349원을 반영하였다면, 보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편성 시 직전시점의 실적단가 반영 등을 검토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이·전용 등에 의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45</td><td rowspan="2">의료지원 진료비<br>부족에 따른<br>연례적 이·전용<br>문제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위탁병원 진료(2150-366),<br>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td><td rowspan="2">시정,<br>주의</td><td rowspan="2">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고, 2023년의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부족한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도말 증액 소요가 발생함<br>-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보상금’ 세부사업과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393억 8,500만원을 이용하였고, ‘위탁병원 진료’ 사업과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으로부터 각각 79억 4,600만원, 22억 8,400만원을 이용함<br>※ 2023회계연도 진료비 지원 세부사업 이·전용 등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진료비 지원 사업</th><th>~에서</th><th>구분<br>(날짜)</th><th>금액</th><th>사유</th></tr>
<tr><td rowspan="3">보훈병원 진료</td><td>보상금</td><td>이용(12.26.)</td><td>25,300</td><td rowspan="3">보훈병원 진료비<br>지원액 부족분 충당</td></tr>
<tr><td>참전명예수당</td><td>이용(12.26.)</td><td>14,085</td></tr>
<tr><td colspan="2">소 계</td><td>39,385</td></tr>
<tr><td>위탁병원 진료</td><td>참전명예수당</td><td>이용(12.27.)</td><td>7,946</td><td>위탁병원 진료비<br>지원액 부족분 충당</td></tr>
<tr><td>제대군인 의료지원</td><td>참전명예수당</td><td>이용(12.26.)</td><td>2,284</td><td>제대군인 진료비<br>지원액 부족분 충당</td></tr>
</table>
</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 ○ 특히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의 경우 연례적 과소계상이라는 국회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매년 예산 추계를 형식적으로 하여 최근 6년간(2018~2023년) 예산에 23억 6,500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br>- 이는 국회가 2019~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동 사업 예산 추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규모와 추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진료인원과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것(주의)<br>○ 국가보훈부는 향후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주의)<br>○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의 형식적 추계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여 예산 부족에 따른 연례적인 이·전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위탁병원 진료(2150-366),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방문재활서비스는 확대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의료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있음<br>- 방문재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물리치료사가 직접 찾아가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맞춤형 서비스로,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의료지원 사업의 연례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7 |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2156-382)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국가보훈부는 2023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을 위해 보조금 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6억 4,800만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8.7%에 불과함<br>- 동 사업은 설계용역 지연, 착공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됨으로써 과다한 규모의 보조금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공정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보조금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규모의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2156-382),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2156-39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숫자로만 강조되는 보훈·복지 강화 기조가 매년 각종 시설 사업의 공사 지연, 이월 등을 유발하고 있음<br>○ 특히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의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이월 등으로 추가 예산이 편성될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보훈부는 추가 예산 편성을 강행하였고, 2023년도에 30억원의 대규모 보조금이 재차 이월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br>○ 국가보훈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이 요구하고 있는 철저한 사업계획 및 조속한 집행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 시정, 주의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말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대기자는 1,480명에 이르고, 특히 수도권 대기자가 1,102명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권의 경우 보훈요양원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원이 필요한 상황임<br>-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공사가 계획대로 착수되지 못해 완공 시점이 지연되고 2023년에 교부된 공사비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였음<br>○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국가보훈부는 집행 실적과 관계없이 편성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배되는 보조금 교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을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주의)<br>○ 국가보훈부는 요양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정 과정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시정)<br>○ 국가보훈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이 요구하고 있는 철저한 사업계획 및 조속한 집행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주의할 것(주의)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추계 정확성 향상을 통한 집행실적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생활조정수당(1133-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생계지원금 2023년 집행률은 예산액 81억 2,400만원 중 14억 3,0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감)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62.8%수준으로 저조하며, 2022년 집행률 역시 56%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지급대상가능인원 추계 시 자연적인 감소요인을 추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기 때문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자연적 감소요인 반영 등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집행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 과오급 연례적 발생 방지 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과오급금 환수액 수납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음<br>※ 최근 5년간 행정착오에 따른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현황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건수(건)</td><td>46</td><td>56</td><td>74</td><td>61</td><td>67</td></tr>
<tr><td>금액(백만원)</td><td>247</td><td>350</td><td>726</td><td>677</td><td>73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범죄경력 조회 빈도 확대 및 행정착오 발생에 대한 책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지급계획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상금(1132-300) | 시정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보상금 집행잔액에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이·전용 규모는 642억 4,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br>○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보상금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 지급인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급대상자 현황 파악 등을 바탕으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 추진가능성 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특히 2021년부터는 이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br><br>※ 최근 4년간(2020~2023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국가보훈부</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th></tr>
<tr><th>본예산</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 등</th><th>교부현액 (A)</th><th>실집행액 (B)</th><th>실집행률 (B/A)</th><th>이월액</th></tr>
<tr><td>2020</td><td>2,250</td><td>2,000</td><td>2,000</td><td>1,234</td><td>3,234</td><td>1,670</td><td>51.6</td><td>1,564</td></tr>
<tr><td>2021</td><td>1,955</td><td>1,955</td><td>1,955</td><td>1,564</td><td>3,519</td><td>2,604</td><td>73.9</td><td>915</td></tr>
<tr><td>2022</td><td>2,605</td><td>2,250</td><td>2,250</td><td>915</td><td>3,165</td><td>1,649</td><td>52.1</td><td>1,516</td></tr>
<tr><td>2023</td><td>3,344</td><td>2,989</td><td>2,989</td><td>1,516</td><td>4,860</td><td>1,980</td><td>40.7</td><td>2,280</td></tr>
</table>
자료: 국가보훈부<br><br>○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자체 사업 포기(부산 서구, 충남 홍성군)로 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절차 이행,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률 부진 및 예산 이월(제주도, 함평, 성주, 속초, 진천, 안동, 강진, 대구 동구, 김포, 용인)이 발생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의 실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4</td><td rowspan="3">계약 체결 시<br>관계법령 철저<br>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훈정신계승발전(3145-4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보훈문화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체결한 계약 중 2건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됨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br>※ 2023년도 보훈문화교육 교재 개발 관련 용역 중 추청가격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체결 건<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계약명</th><th>발주금액</th><th>계약금액</th><th>수탁기관</th><th>계약기간</th><th>계약유형</th></tr>
<tr><td>2023년도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td><td>30</td><td>30</td><td>서울교대</td><td>’23.03.~<br>’23.11.</td><td>수의계약</td></tr>
<tr><td>2023년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사업 용역</td><td>30</td><td>30</td><td>대구교대</td><td>’23.03.~<br>’23.11.</td><td>수의계약</td></tr>
</table>
○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일부(9,200만원 중 5,500만원)를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행하였음<br>※ 낙찰차액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계약명</th><th>발주금액</th><th>계약금액</th><th>집행액</th></tr>
<tr><td>3·1절 계기 참여형 웹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td><td>52</td><td>52</td><td>52</td></tr>
<tr><td>3·1절 계기 참여형 웹콘텐츠 이벤트 진행</td><td>3</td><td>3</td><td>3</td></tr>
<tr><td>합계</td><td>55</td><td>55</td><td>55</td></tr>
</table>
자료: 국가보훈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계약 체결시 관계법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보훈기금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제도개선 | 국가보훈부 |
| | | 지적사항 | ○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고 국회가 확정한 「2023회계연도 보훈기금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88골프장 매각을 통해 1,180억원의 수입을 얻도록 계획되었음<br>- 88골프장 매각은 2010회계연도 이래 2024회계연도까지 15년간 매년 보훈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왔고,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음<br>○ 국가보훈부는 2023회계연도 동안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88CC 보훈 상징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매각자체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등 정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및 국회 심의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일방적으로 원점 재검토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2010회계연도 이래 14년간 88골프장 매각 기금운용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매각방향을 확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계획을 편성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재향군인회<br>재무정상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보훈기금 - 재향군인회 지원(4163-43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재향군인회는 2023회계연도말 자본총계가 약 △13억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에 이르렀음<br>※ 재향군인회 자산총계 및 감사의견<br>(단위: 백만원)
<table>
<tr><th>회계연도</th><th>자산총계</th><th>부채총계</th><th>자본총계</th><th>감사의견</th></tr>
<tr><td>2019</td><td>691,701</td><td>656,182</td><td>35,519</td><td>의견거절</td></tr>
<tr><td>2020</td><td>562,747</td><td>532,968</td><td>29,779</td><td>한정의견</td></tr>
<tr><td>2021</td><td>530,649</td><td>510,274</td><td>20,375</td><td>한정의견</td></tr>
<tr><td>2022</td><td>528,399</td><td>512,011</td><td>16,389</td><td></td></tr>
<tr><td>2023</td><td>515,621</td><td>516,911</td><td>(1,290)</td><td></td></tr>
</table>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으로서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3. 공정거래위원회(26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예산 집행절차 적절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세부사업(또는 다른 비목)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전용 또는 조정을 통해 지출과목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br>- 이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 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함<br>○ 과목정정을 통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주의한 집행관리로 잘못된 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하였음<br>-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목정정 누락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출장 여비(220-01)가 일반수용비(210-01)로 잘못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목별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조정 등 해당 항목의 예산확보 절차를 선행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내출장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수행한 국내출장 26건과 관련한 여비 2,301,56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음<br>-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체전용 등을 통해 국내여비 재원을 확보하였는데,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불필요한 예산 전용의 추가 소요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예산 집행시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집행함으로써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
| 3 | **부실한 자율규제 제도 운영**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023.3.) 발표에 있어 소상공인과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여 운영되고 있음. 자율규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감독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입점업체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검토·보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분쟁조정사업의<br>적극적 추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br>한국공정거래<br>조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의 종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건 대비 조정성립률은 41%이며, 종결사건을 제외한 처리건 대비 성립률은 79%로서 성립률 제고가 필요함.<br><2023년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br>(단위: 건, %)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처리현황 및 유형</th><th rowspan="2">성립률<br>[A/(A+B)]</th><th rowspan="2">전체 처리건<br>성립률<br>[A/(A+B+C)]</th></tr>
<tr><th>계<br>[A+B+C]</th><th>성립<br>[A]</th><th>불성립<br>[B]</th><th>종결<br>[C]</th></tr>
<tr><td>소계</td><td>3,151</td><td>1,278</td><td>350</td><td>1,523</td><td>79</td><td>41</td></tr>
</table>
* 종결: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br>○ 또한 2023년 처리 사건 중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비율은 3.3%로서 전년 대비 감소 추세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불성립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조정 성립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수탁연구용역<br>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공정거래<br>조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기타수입 중 수탁연구용역 수입예산은 2,300만원이며 공정위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900만원(39.1%)의 수입실적을 달성함<br>❍ 최근 5년간 수탁연구용역 수입예산 대비 수입실적은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수탁연구용역 수행과제는 연간 한건 내지 두건에 불과함<br><2019년~2023년 수탁연구용역 수입 실적><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 분</th><th>당초예산</th><th>수정예산<br>(A)</th><th>수입실적<br>(B)</th><th>차액<br>(B-A)</th><th>비율<br>(B/A)</th></tr>
<tr><td>2019년</td><td>107</td><td>107</td><td>67</td><td>△40</td><td>62.6</td></tr>
<tr><td>2020년</td><td>40</td><td>40</td><td>36</td><td>△4</td><td>90.0</td></tr>
<tr><td>2021년</td><td>40</td><td>40</td><td>23</td><td>△17</td><td>57.5</td></tr>
<tr><td>2022년</td><td>54</td><td>54</td><td>11</td><td>△43</td><td>20.4</td></tr>
<tr><td>2023년</td><td>23</td><td>23</td><td>9</td><td>△14</td><td>39.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구용역 추가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td></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온라인 교육과정<br>정비 및 홍보<br>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통한 교육과정 중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교육과정이 다수 있음<br>- 10명 이상 수료한 교육 프로그램 64개 중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강의가 50개(78.1%)이고, 50명 미만인 강의는 40개(62.5%)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정거래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육플랫폼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공정거래협약<br>이행평가 실적<br>제고 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후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임<br>○ 2023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체결 실적 대비 협약이행평가 실적은 52.1%(198/380)로, 가맹·유통·대리점거래 분야의 협약이행평가 실적이 각각 62.5%(10/16), 96.2%(25/26), 90.9%(10/11)인 점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음<br>〈연도별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평가 실적〉<br>(단위: 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협약체결 실적</th><th colspan="5">협약평가 실적</th></tr>
<tr><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하도급분야</td><td>280</td><td>292</td><td>306</td><td>359</td><td>380</td><td>157</td><td>168</td><td>182</td><td>197</td><td>198</td></tr>
<tr><td>가맹분야</td><td>16</td><td>17</td><td>17</td><td>17</td><td>16</td><td>11</td><td>12</td><td>13</td><td>11</td><td>10</td></tr>
<tr><td>유통분야</td><td>25</td><td>27</td><td>25</td><td>25</td><td>26</td><td>23</td><td>24</td><td>24</td><td>25</td><td>25</td></tr>
<tr><td>대리점분야</td><td>-</td><td>9</td><td>11</td><td>11</td><td>11</td><td>-</td><td>-</td><td>8</td><td>10</td><td>1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자율분쟁조정위<br>원회 활성화<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처리건수 등 그 실적이 감소추세임<br>〈자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내역〉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비고</th></tr>
<tr><td>개최횟수</td><td>23회</td><td>24회</td><td>24회</td><td>22회</td><td></td></tr>
<tr><td>접수건수</td><td>675</td><td>844</td><td>454</td><td>368</td><td></td></tr>
<tr><td>처리건수<br>(진행중)</td><td>813<br>(101)</td><td>945<br>(94)</td><td>549<br>(38)</td><td>407<br>(20)</td><td>이월건수<br>포함</td></tr>
</table>
- 특히 보조금의 지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21년 이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임<br><br>❍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성립건수 또한 감소추세임<br>〈분쟁조정 처리결과별 현황〉<br>(단위: 건)
<table>
<tr><th>구분</th><th>종결사건<br>(진행중 사건<br>제외)</th><th>조정성립</th><th>법원 외부<br>조정성립</th><th>조정전<br>당사자<br>합의</th><th>합의율</th></tr>
<tr><td>2020년</td><td>712</td><td>46</td><td>5</td><td>231</td><td>39.6%</td></tr>
<tr><td>2021년</td><td>851</td><td>58</td><td>5</td><td>207</td><td>31.7%</td></tr>
<tr><td>2022년</td><td>511</td><td>35</td><td>8</td><td>145</td><td>36.7%</td></tr>
<tr><td>2023년</td><td>387</td><td>29</td><td>10</td><td>84</td><td>31.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자율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지원 인원 축소 및 매칭 비율 약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중 소비자교육봉사사업은 당초 목표한 1:1 매칭을 통한 교육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됨<br>- 목표인원을 노인층 10,000명, 봉사활동 수행 중・고등학생 10,000명으로 설계하여 1:1 매칭을 계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 2,119명을 모집하여 노인층 7,037명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함<br><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계획 및 실적><br>(단위: 명)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당초 계획</th><th>수정 계획</th><th>참여 실적</th></tr>
<tr><td rowspan="3">2022</td><td>청년</td><td>500</td><td>500</td><td>562</td></tr>
<tr><td>중・고등학생</td><td>10,000</td><td>10,000</td><td>2,781</td></tr>
<tr><td>노인</td><td>10,000</td><td>10,000</td><td>10,268</td></tr>
<tr><td rowspan="3">2023</td><td>청년</td><td>500</td><td>500</td><td>415</td></tr>
<tr><td>중・고등학생</td><td>10,000</td><td>1,500</td><td>2,119</td></tr>
<tr><td>노인</td><td>10,000</td><td>7,000</td><td>7,03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의 민간 참여가 필요한 경우 참여대상별로 적절한 유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연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출연금을 통한<br>수탁용역 사업<br>추진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소비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고유사업인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의 대외협력비 일부 3,900만원을 수탁사업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사업에 집행하여 출연금 산정 시 계획했던 고유사업의 수행의 축소가 우려됨<br>-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위의 위탁용역비 및 사업자의 심사비용을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유사업비를 집행함
<table>
<tr><th>구분</th><th>산출근거</th><th>집행액</th></tr>
<tr><td rowspan="3">대외협력</td><td>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td><td>1억 2,200만원</td></tr>
<tr><td>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활동 지원</td><td>3,900만원</td></tr>
<tr><td>합계</td><td>1억 6,100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과 수탁사업간 설정을 명확히 하고, 고유사업비와 수탁사업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td></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집단분쟁조정<br>활성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소비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3년 집단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건에 불과<br>〈집단분쟁조정 접수 실적〉<br>(단위: 건, 명)
<table>
<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접수 건수</td><td>12</td><td>11</td><td>1</td><td>2</td></tr>
<tr><td>소비자 수</td><td>1,061</td><td>12,991</td><td>682</td><td>102</td></tr>
</table>
* 집단분쟁조정 :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결정</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소비자원은 대규모 집단 사건 조정을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제도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공정위는 2023년 4월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음<br>○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운영의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2024년 8월 기준 공정위는 72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있으나 23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장급 5개 전문직위는 모두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함<br>* 인사혁신처는 2022년 및 2022년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주의 처분 등을 한 바 있음<br>○ 한편, 공정위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조사관’으로 통일하고 있으나, 정책기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주무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음<br>* 국민권익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정책·총괄·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주무관’으로 민원조사, 신고심사, 행정심판조사, 법령분석, 제도개선 분야의 경우 ‘조사관’으로 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 등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물품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월 3,074,400원, 1년간 총 계약금액 36,892,8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일반경쟁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공정위는 당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br>○ 또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있으나,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2023년도까지 계약금액을 지급하였음. 이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는 「국고금 관리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경쟁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단년도 계약으로 다년간 예산을 지출하였으므로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 | |
| 14 | **영상회의장비 활용 제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공정위는 세종심판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사비 997만원, 자산취득비 8,999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br>- 2023년 9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2024년 5월까지 영상회의를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2024년 6월 및 7월 각 1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음<br>○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피심인은 심의기일에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 원격 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심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심판정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상장비를 활용한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제 개선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전원회의 불참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br>- 현행 안건 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은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은 물론 안건 검토와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무 과중도에 비례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관련 수당을 개선하고, 비상임위원의 수를 확대하거나 비상임위원의 수를 줄이고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 |
| 16 | **예산 집행 절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하여 일반용역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종료 후 사후계약을 체결함<br>※ 계약서상 계약기간 : 2023. 1. 13. ~ 2. 12.<br>계약일과 지출원인행위일 : 2023. 2. 27.<br>- 용역의 과업 내용 및 그에 대한 반대 급부의 지급을 상호간에 확정하는 계약의 선행이 예산 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사후계약 체결은 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부적정한 집행방식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 등 행사 진행시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자료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발생한 우편요금 84만 6,50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 우편요금의 소요금액을 사전에 파악한 후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재정법」을 준수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18 |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절차 지연**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정거래지원(7031-300)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도록 함<br>- 지출원인행위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세출예산에 비해 지출원인행위가 과도하게 실시되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br>○ 공정위는 ‘IPTV 및 OTT 탑재용 위원회 홍보 콘텐츠 원고 작성 및 후반작업’ 계약을 2023년 9월 4일 체결하였으나, 그 사실을 2023년 11월 29일에 이르러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과징금 환급업무 조기완료**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7031-301)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연 3.5%의 이율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수입감소가 발생하게 됨<br>○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예규)을 통해 최대 8근무일 이내에 과징금 환급 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br>○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과징금 환급업무가 시작된 18건의 경우, 과징금 환급조치 완료까지 평균 13.8일을 소요하였고, 그 중 12건(66%)은 판결문 등이 접수된 날부터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업무를 완료하였음<br>○ 과징금부과처분이 일부취소된 9건의 경우, 과징금 재산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금만을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2023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를 조기에 완료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 및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것 | | |
| 20 |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7031-301)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선임료 부족으로 기타운영비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소송비용부담액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650만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음<br>○ 2022년도 및 2021년도에도 변호사 선임료 부족으로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는 등 변호사 선임료 부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수임료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예산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적절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영하는 한편 직원 직접소송 승소사건 격려금을 인상하여 직접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장기계속계약 시 1차년도 사업지연에 다른 차년도 사업의 연쇄적 예산이월 유의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포털 구축사업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하면서 1차년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모두 예산의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함<br>- 2021년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1차’ 사업 계약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2021년, 2022년, 2023년 모두 사업 예산 중 일부(잔금 50%)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함<br>○ ‘데이터포털 구축감리’ 사업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여 사업 종료 후 집행함<br>-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선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업체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요청이 없더라도 선금지급 불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과징금<br>임의체납액에<br>따른 장기<br>미수납액 증가<br>문제</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징금(59-56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회계연도 과징금 미수납액 중 임의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은 780억 6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임의체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4%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br>* 임의체납 : 체납자의 재력부족, 거소 불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미수납액<br>〈최근 3년간 과징금 미수납액 유형별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5">미수납 유형별 현황</th></tr>
<tr><th>납기미도래</th><th>징수유예</th><th>임의체납</th><th>비중</th><th>합계</th></tr>
<tr><td>2021</td><td>475,644</td><td>8,370</td><td>43,668</td><td>8.3%</td><td>527,682</td></tr>
<tr><td>2022</td><td>431,013</td><td>37,263</td><td>64,754</td><td>12.3%</td><td>533,030</td></tr>
<tr><td>2023</td><td>177,679</td><td>29,465</td><td>78,006</td><td>27.4%</td><td>285,150</td></tr>
</table>
❍ 국회 결산심사 시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저해되므로 임의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의체납액이 증가함
<table>
<tr><td>2020 결산</td><td>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체납 과징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공조 강화, 은닉재산 조회 활동 강화, 상습·고액 체납자, 체납우려 대상집중관리 등 임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대책을마련하여 과징금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주의)</td></tr>
<tr><td>2021 결산</td><td>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징수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의 마련 등을 통해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임의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제도개선)</td></tr>
<tr><td>2022 결산</td><td>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주의할 것(주의)</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재산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강제징수 등을 통해 체납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노력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 자체 인력만으로 경쟁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3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용역 방식으로 전환하였음<br>○ 그러나 전환 이후에도 경쟁제한 규제개선 실적이 예년보다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br>* 경쟁영향평가 : 규제가 신설·강화되기 전에 시장 경쟁에 어떠한 영향(진입장벽, 사업자 경쟁요소 제한 등)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br>○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발굴 및 개선* 건수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실적은 발굴건수(40건)와 개선건수(22건) 모두 최근 5년간의 평균 실적(발굴 42.6건, 개선 25.4건)에 미치지 못하고, 발굴건수 대비 개선건수 비율인 합의비율(55%) 역시 절반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임<br>*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제정·개정된 경쟁제한적 법령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실적을 제고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표준계약서<br>사용률 제고 및<br>공정거래 협약<br>이행평가 참여<br>유인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br>○ 대리점거래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43%로 저조함<br><2023년도 가맹·대리점·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br>(단위: 개, %)
<table>
<tr><th>구분</th><th>실태조사 대상</th><th>전체</th><th>사용</th><th>미사용</th><th>사용률</th></tr>
<tr><td>표준가맹계약서</td><td>가맹본부</td><td>200</td><td>192</td><td>8</td><td>96.0</td></tr>
<tr><td>표준대리점계약서</td><td>공급업자</td><td>546</td><td>234</td><td>312</td><td>43.0</td></tr>
<tr><td>표준유통계약서</td><td>유통납품업체</td><td>2,333</td><td>2,296</td><td>37</td><td>98.4</td></tr>
</table>
○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함<br><최근 3년간 협약체결 및 이행평가 현황><br>(단위: 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h colspan="2">2023</th></tr>
<tr><th>체결</th><th>평가</th><th>체결</th><th>평가</th><th>체결</th><th>평가</th></tr>
<tr><td>가맹 분야</td><td>17</td><td>13</td><td>17</td><td>11</td><td>16</td><td>10</td></tr>
<tr><td>대리점 분야</td><td>10</td><td>8</td><td>11</td><td>10</td><td>11</td><td>10</td></tr>
<tr><td>유통 분야</td><td>26</td><td>24</td><td>25</td><td>25</td><td>26</td><td>2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동일 자율과제의 연례적 · 관성적 선정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소비환경개선 사업은 자율과제 공모 시 동일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였고 2024년에도 유사한 내용을 제안요청함<br>- 2023년 선정된 자율과제 2건 중 1건의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과제로 연이어 선정되었고, 나머지 1건 역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한 과제로 선정됨<br>- 2024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 '소비환경개선'의 사업범위 중 일부는 과거부터 자율과제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선정됨<br>○ 2023년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자율과제는 소비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ChatGPT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br>- 2023년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중 실무자교육 내역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당초 사업목적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자율과제 사업수행 기관과 과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력하고, 소비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자체수입<br>과다계상에 따른<br>결손액 발생 및<br>고유사업 축소<br>문제</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수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규모의 자체수입을 계상함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하여 고유사업의 축소로 이어짐<br>- 2023년도에는 자체수입 항목의 수납실적이 부진하여 총 11억 1,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기타수입(△4억 5,700만원), 전년도 이월금(△4억 4,600만원), 수탁용역사업수입(△2억 9,400만원) 순으로 괴리가 발생함<br><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3">2023년</th></tr>
<tr><th>예산</th><th>실적</th><th>예산</th><th>실적</th><th>예산(A)</th><th>실적(B)</th><th>B-A</th></tr>
<tr><td rowspan="6">자체수입</td><td>전년도 이월금</td><td>1,040</td><td>676</td><td>1,040</td><td>227</td><td>952</td><td>506</td><td>△446</td></tr>
<tr><td>수탁용역사업</td><td>2,741</td><td>1,751</td><td>2,318</td><td>1,333</td><td>1,660</td><td>1,366</td><td>△294</td></tr>
<tr><td>교육연수수입</td><td>40</td><td>9</td><td>40</td><td>3</td><td>40</td><td>4</td><td>△36</td></tr>
<tr><td>이자수입</td><td>128</td><td>70</td><td>128</td><td>164</td><td>125</td><td>248</td><td>123</td></tr>
<tr><td>기타수입</td><td>601</td><td>127</td><td>601</td><td>108</td><td>601</td><td>144</td><td>△457</td></tr>
<tr><td>합 계</td><td>4,547</td><td>2,633</td><td>4,124</td><td>1,833</td><td>3,378</td><td>2,267</td><td>△1,111</td></tr>
</table>
- 기타수입의 경우 수납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6억 100만원의 동일한 규모로 수입예산이 계상되고 되고 있어 매년 약 75% 이상의 수입결손이 반복됨<br><최근 5년간 기타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예산(A)</td><td>374</td><td>601</td><td>601</td><td>601</td><td>601</td><td>601</td></tr>
<tr><td>실적(B)</td><td>600</td><td>195</td><td>127</td><td>108</td><td>144</td><td>-</td></tr>
<tr><td>수입 결손(B-A)</td><td>226</td><td>△406</td><td>△474</td><td>△493</td><td>△457</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납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결손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자체수입 현실화를 통해 적정 규모의 수지차를 반영할 것</td></tr>
</table>

## 4. 금융위원회(7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보조금 이자수입의 예산안 연례적 미편성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세입)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5)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매년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고 있으나 예산안에 이를 편성하지 않고 있음<br>-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실제 발생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수익금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징수하고 있고, 2023년 역시 9,9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는 이자수입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편성할 것 | | |
| 2 | **신속한 보조금 정산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세입)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5)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핀테크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시, 정산보고서 접수 후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자수익등을 수납하였음<br>-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3년 2월 28일 정산보고서를 작성 및 검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정산보고서 접수 후 8개월이 지난 11월 10일에야 보조금 정산 결과를 확정 통보하고 이자수익등을 수납 받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실적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사업(11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출시 현황을 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56건으로 전년(52건) 대비 증가한 반면, 출시 건수는 15건으로 전년(46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br>-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기산일을 기존 ‘지정일’에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했기 때문으로, 지정일로부터 서비스 출시 시점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지정 시에는 심사기준에 부합했더라도 지정기간 개시일(서비스 출시일)에는 혁신성 등이 떨어질 수 있음<br><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 현황><br>(단위: 건)
<table>
<tr><th>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4.7월말</th><th>계</th></tr>
<tr><td>지정 건수</td><td>77</td><td>58</td><td>50</td><td>52</td><td>56</td><td>62</td><td>355</td></tr>
<tr><td>출시 건수</td><td>24</td><td>47</td><td>39</td><td>46</td><td>15</td><td>22</td><td>193</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사업(11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음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없이 편성·운영되는 등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고 있음<br>-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9억 6,000만원)은 ① D-테스트베드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전문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③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안 편성지침」상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1332-501)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정보분석원은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목)로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조달수수료 2,133만원, 정보보호필름 구입비용 585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여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상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하였음<br>-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6 | **청년희망적금 출연금 과다 이월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1831-880)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청년희망적금의 장려금은 만기(2024.2~3) 시 일괄 지급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장려금 소요 재원의 50%를 2023년 예산으로 출연하여 전액 이월함<br>-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만기인 2024년 2월말부터 일괄지급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음(계좌개설은 2022년 2~3월 진행, 2년만기)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과다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규모의 재원만을 반영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최저신용자<br>한시특례보증<br>보증사고 리스크<br>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1831-8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율의 증가 추세로 인해 대위변제를 위해 전액 재정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br>- 금융위원회의 유사 보증사업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대위변제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가 추세가 빠름<br>〈금융위원회 재정지원을 통한 보증사업의 분기별 대위변제율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2022</th><th colspan="4">2023</th><th>2024</th></tr>
<tr><th>4/4</th><th>1/4</th><th>2/4</th><th>3/4</th><th>4/4</th><th>1/4</th></tr>
<tr><td>최저신용자<br>한시 특례보증</td><td>0.01%</td><td>0.1%</td><td>7.3%</td><td>12.6%</td><td>14.5%</td><td>17.9%</td></tr>
<tr><td>일반보증 대위변제</td><td>1.4%</td><td>1.8%</td><td>2.1%</td><td>2.2%</td><td>2.4%</td><td>2.8%</td></tr>
<tr><td>유동화회사보증<br>대위변제</td><td>0.2%</td><td>-</td><td>0.1%</td><td>0.2%</td><td>0.2%</td><td>-</td></tr>
<tr><td>소상공인위탁보증<br>대위변제</td><td>2.6%</td><td>4.7%</td><td>6.2%</td><td>8.8%</td><td>10.8%</td><td>11.8%</td></tr>
<tr><td>대환보증 대위변제</td><td>0.0%</td><td>0.2%</td><td>0.5%</td><td>1.1%</td><td>2.2%</td><td>7.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재정의 장기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정책대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1831-881)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올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규모 신용 사면 등으로 저신용자·서민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오인될 우려<br>-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제도는 신용도를 평가하여 상환을 전제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용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금융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함<br>- 그러나 이는 일정 조건이 되면 현금 등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대출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9 | **사업방식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검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만 도입했던 매칭방식은 기(旣)결성된 펀드나 결성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에 도입되었던 매칭방식이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 | | |
| 10 | **공정한 펀드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성장지원펀드(매칭)은 기존의 자펀드운용사에 비해 유리하게 운용보수를 설정하여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회수될 재정·정책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음<br>- 지원한 운용사가 당초 운용보수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 조건을 변경 고시하여, 관리보수율은 기존 자펀드운용사보다 0.15%p 이상 더 높게 설정하고, 성과보수는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운용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특정 펀드운용사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펀드를 운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운용사 추가인센티브 적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매칭펀드 운용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인 운용사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br>- 성장지원펀드(매칭)의 인센티브는 성장지원펀드(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 보다 20%p 높은 수준에서 지급함<br>- 혁신산업펀드(매칭)는 혁신산업(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 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3%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조건 설정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것 | | |
| 12 | **조속한 운용사 선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차(6월 , 10~11월)에 걸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 시기인 연말에는 자펀드 운용사의 투자자 확보가 곤란하여 자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자펀드 결성을 위해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운용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 | | |
| 13 |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한 관리보수체계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자펀드운용사 관리보수체계가 선제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게 설계됨<br>- 투자잔액과 유보액에 대한 관리보수율 격차가 0.2%p로 미미하여 선제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크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자펀드 운용사의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회수재원 재출자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내부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규정 내에 회수재원 재출자의 구체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하여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며, 회수재원 규모와 활용방안, 재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치를 할 것 | | |
| 15 | **예산 확정 후 주요 사업방식 변경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만 도입했던 매칭방식은 예산 확정 후 사업 추진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br>-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확정 후인 2023년 2월,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서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는 기존의 일반방식 외에 202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20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방안」(2022년 10월)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예산 확정 후 주요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6 | **채무조정 효과 확인을 위한 정확한 수치 표기**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는 동 사업의 채무조정 효과 목표치(성과목표)를 35%로 설정하고, 48.4%의 실적을 내어 138%의 목표 달성도를 나타냄<br>○ 실적을 위와 같이 비율로만 명시하는 것은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왜곡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효과 실적을 비율로만 명시하지 말고, 측정산식에 적용된 값(원리금 감면예정액, 채무조정 약정체결 대출원금)을 정확한 수치로 표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정책모기지 사업 목적에 충실 및 상품요건 변경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2632-301)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대상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신규주택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운영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음<br>-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기준을 없애고, 대상주택가격도 확대 (기존 6억원→9억원)<br>-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였다는 지적도 제기<br>-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발표(2023.1.)와 달리 2023년 9월부터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던 일반형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기존 발표내용과 다르게 상품요건 등이 변경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 |
| 18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32-501)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고도화’ 및 ‘ISP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ISP 구축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확대하여 확대 부분과 함께 통합발주함에 따라 사업의 지연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br>○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대상 사업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통합발주함에 따라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하여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대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무상 유지보수 대상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유상 보수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7132-504)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기간 산정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음<br>- 2022년 도입장비의 경우 2023년 8월 21일까지 무상보수기간이었으나, 하반기 6개월분을 반영하여 유상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유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20 |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정비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7132-504)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계약절차의 공정성,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 가능성 및 다른 부처의 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례를 고려할 때 수의계약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 |
| 21 |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 및 수행기관 편중 재발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7135-302)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25건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23건(92.0%)은 계약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2건(8.0%)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음<br>-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25건의 계약 중 특정 4개 수행기관이 전체 계약의 60%인 15건을 수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및 특정 수행기관 편중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예산 집행 부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연례적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을 4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집행실적이 오히려 예년보다 부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br>※ 집행율: (2023년) 82.7%, (2022년) 97.5%, (2021년) 95.2%, (2020년) 94.9%,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기본경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 부진의 사유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
| 23 |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 편성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외업무여비는 이전의 사업추진 경과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그 중 일부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 편성을 지양하고 계획대로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 | |
| 24 | 부적정한 비목 편성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를 상용임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침에 부합하게 개선할 것 | | |
| 25 | ISP 구축 사업 목표 및 대상 명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32-501)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고도화’ 및 ‘ISP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ISP 구축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확대하여 확대 부분과 함께 통합발주함에 따라 사업의 지연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ISP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안 편성시부터 ISP 구축 목표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정보시스템 관련 감리사업 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32-5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대상 사업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통합발주함에 따라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하여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예산을 함께 편성하고 정보화사업의 통합 발주로 인해 불필요한 감리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것</td></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재계산 결과에 따른 상환 재원 확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적자금상환기금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재정과 금융권의 총 상환부담이 2018년 재계산에서는 58.1조원(2002년 현가), 2023년 재계산에서는 58.8조원(2002년 현가)으로 나타나, 두 차례 재계산 결과 모두 당초 상환부담(69조원) 보다 감소한 수치를 나타냄.<br>- 재계산 제도는 2002년 상환대책 수립 이후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 이행실적과 재계산 시점에서의 회수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총 상환부담과 재정 및 금융권의 부담분 등을 다시 추정하는 것을 말함<br>< 재계산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 추이 ><br>(단위: 조원, 02년 현재가)
<table>
<tr><th>구분</th><th>2002년 상환대책</th><th>2008년 재계산</th><th>2013년 재계산</th><th>2018년 재계산</th><th>2023년 재계산</th></tr>
<tr><td>기부담</td><td>-</td><td>9.2</td><td>21.9</td><td>31.1</td><td>46.2</td></tr>
<tr><td>향후부담</td><td>69.0</td><td>40.7</td><td>33.8</td><td>27.0</td><td>12.6</td></tr>
<tr><td>총부담</td><td>69.0</td><td>49.9</td><td>55.7</td><td>58.1</td><td>58.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확보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저축장려금(1631-301)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br>-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2023년도 수입 총액 중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이 99.8%를 차지하고,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 총액의 99.9%가 2023년도 저축장려금으로 집행되어, 단년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예산 사업과 유사한 집행 형태를 나타냄<br>○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기금을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관계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 | | |
| 29 | **적정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저축장려금(1631-301)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br>○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기금을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관계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장려저축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팩토링 매출채권<br>회수 수입의<br>연례적 과다계상<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을 과다계상하여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br><최근 3년(2021~2023년)간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결산 내역><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계획액(A)</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B)</th><th>수납률(B/A)</th></tr>
<tr><td>2021년</td><td>39,750</td><td>13,592</td><td>13,592</td><td>34.2</td></tr>
<tr><td>2022년</td><td>79,500</td><td>57,890</td><td>57,890</td><td>72.8</td></tr>
<tr><td>2023년</td><td>99,375</td><td>73,225</td><td>73,225</td><td>73.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td></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구상권 회수실적<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구상권 회수’는 2023년 징수결정액(1,214억 4,100만원) 대비 수납률이 2.1%(25억 4,100만원)로 매우 저조하고, 계획액(3,661억원) 대비 수납률이 69.4%로 계획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음<br><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구상권 회수’ 과목의 결산내역><br>(단위 : 억원, %)
<table>
<tr><th colspan="9">2023년</th><th>2024년</th></tr>
<tr><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br>현액</th><th rowspan="2">징수<br>결정액(B)</th><th rowspan="2">수납액<br>(C)</th><th rowspan="2">수납률<br>(C/A)</th><th rowspan="2">수납률<br>(C/B)</th><th rowspan="2">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br>결손액</th><th rowspan="2">계획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3,661</td><td>3,661</td><td>3,661</td><td>121,441</td><td>2,541</td><td>69.4</td><td>2.1</td><td>102,412</td><td>16,488</td><td>3,44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자 상환능력별 맞춤형 구상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상권 소멸 전 채무가 변제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구상권 수납실적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대환보증의<br>저조한<br>공급실적을<br>고려한 출연금<br>반납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보증공급 실적이 2022년 말 기준 공급목표의 3.4%, 2023년 말 기준 13.7%로 매우 저조함<br><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목표 및 실적><br>(단위: 억원, %)
<table>
<tr><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6월말</th></tr>
<tr><td>목표 누적 보증액(A)</td><td>67,500</td><td>85,000</td><td>95,000</td></tr>
<tr><td>신규 보증액</td><td>2,321</td><td>9,333</td><td>2,947</td></tr>
<tr><td>누적 보증공급 규모(B)</td><td>2,321</td><td>11,654</td><td>14,601</td></tr>
<tr><td>달성도(B/A)</td><td>3.4</td><td>13.7</td><td>15.4</td></tr>
</table>
-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총 7,600억원은 운용배수 12.5배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공급실적 부진으로 2024년 6월 말 기준 대환보증 계정의 운용배수는 2.0배에 불과함<br><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계정 보증공급 현황><br>(단위: 억원, 배)
<table>
<tr><th>계정명</th><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6월말</th></tr>
<tr><td rowspan="4">저금리<br>대환보증</td><td>보증잔액(A)</td><td>2,316</td><td>11,276</td><td>13,544</td></tr>
<tr><td>신규보증액</td><td>2,321</td><td>9,333</td><td>2,947</td></tr>
<tr><td>기본재산(B)</td><td>6,730</td><td>7,159</td><td>6,810</td></tr>
<tr><td>운용배수(A/B)</td><td>0.3</td><td>1.6</td><td>2.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종료 이후 잔여재원 반납을 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3</td><td rowspan="3">대환보증<br>프로그램<br>재편성안 강구<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보증공급 실적이 2022년 말 기준 공급목표의 3.4%, 2023년 말 기준 13.7%로 매우 저조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재편성안을 강구할 것</td></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구상권관리<br>사업의 연례적<br>불용 방지를<br>위한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구상권관리(24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구상권관리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며 불용액이 과다한데, 이는 특히 구상권 집행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용인 공탁비용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br>- 2023년 공탁비용은 계획액 699억 9,000만원 중 343억 6,300만원(49.1%)만을 집행하여 333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br>〈최근 4년간 구상권관리 사업 집행실적〉<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계획현액</td><td>72,694</td><td>74,343</td><td>107,831</td><td>101,681</td></tr>
<tr><td>집행액</td><td>58,029</td><td>47,121</td><td>47,273</td><td>60,107</td></tr>
<tr><td>집행률</td><td>79.8</td><td>63.4</td><td>43.8</td><td>59.4</td></tr>
<tr><td>불용액</td><td>14,665</td><td>27,222</td><td>60,558</td><td>41,57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현금공탁에 따른 담보제공 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및 자정 노력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소상공인<br>성공드림 컨설팅<br>사업의 실수요를<br>고려하여<br>적정예산 편성<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경영지도(2431-30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2년과 2023년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컨설팅 실적이 부진하여 소상공인의 수요가 저조함에도, 2022년 신규로 추진된 후 매년 동일한 예산(42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br><2022~2023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제공 건수><br>(단위 : 건, %)<br><table><tr><th>구분</th><th>계획(A)</th><th>신청</th><th>실적(B)</th><th>달성률(B/A)</th></tr><tr><td>2022년</td><td>4,750</td><td>3,088</td><td>2,976</td><td>62.7</td></tr><tr><td>2023년</td><td>4,750</td><td>3,938</td><td>3,308</td><td>69.6</td></tr></table>주: '계획' 건수는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 산출 시의 건수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저조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이 편성되도록 할 것</td></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희망플러스<br>이차보전의<br>사후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이차보전지원(2431-31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산출금리의 적정성,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실제 부담률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대출금리를 파악한 후 실제 대출금리와 평균 산출금리를 대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br>○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7월 기준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실제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별 실제 대출금리의 진위 여부 및 계획액 편성 시 반영되었던 평균 산출금리가 적정 수준이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함<br>- 동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평균 산출금리(6.3%)와 대출 적용금리(3.3%)의 차이의 70%를, 금융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율은 2.1%로 고정되었는데, 대출금리가 5.4%(3.3%+2.1%)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보다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더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있게 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금의 실제 정산을 수행하고, 정산 결과 대출금리가 5.4%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수취 분만큼을 국고로 환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 관련사업명 | 신용보증기금 - 이차보전지원(2431-313)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공급실적이 부진하자 대규모 불용방지를 위해 두 차례 사업을 개편함<br>○ 당초 사업설계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실수요에 비해 과다편성되었으며 잦은 사업변경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br>* 2022년 말 기준 대출액 4.8조원 중 한도소진율 30.1%(1조 4,439억원), 이차보전액 1,000억원 중 한도소진율 5.4%(54억원)<br>** 당초 소상공인 48만명(대출 4.8조원÷대출한도 1,0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개편 후 8만명(대출 2.4조원÷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목표치 하향조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실수요에 비해 과다편성한 후 사업을 과도하게 개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설계를 보다 면밀히 할 것 | | |
| 38 | **신용정보 사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신용보증기금 - 신용정보(정보화)(2431-315)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1년 신규 편성 이후 사업비가 매년 감소*했으나 이와 같은 과도한 예산삭감은 연구위축을 야기할 수 있고, ‘온라인 안심거래 구축(7,400만원)’ 등 예산액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은 내역사업이 있는 등 실제 필요한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였음<br>* 예산액: (2021년) 40억원, (2022년) 32억 900만원, (2023년) 23억 2,3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정보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 분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예산의 효율적<br>운용을 위해<br>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위변제 계획액의 53.9%(1,206억원)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 감액하였고, 그럼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br><2023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실적><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B)</th><th rowspan="2">집행률(B/A)</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A)</th><th>수정</th></tr>
<tr><td>222,731</td><td>103,131</td><td>103,131</td><td>24,788</td><td>11.1</td><td>78,34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최초 공급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농림수산업자<br>신용보증기금의<br>건전성 관리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br>농림수산업자<br>신용보증기금</td></tr>
<tr><td>지적사항</td><td>○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는 2023년말 기준 16.8배, 2024년 6월 기준 17.3배로 전년도 14.6배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법정 운용배수(20배)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br>* 2024년 6월 기준 운용배수 : 17.3배<br>- 향후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회복되기 위하여 장기간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운용배수 진입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수입계획액의 연례적 과다추계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을 산출할 때 의지지표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입계획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 징수실적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br>* 계획액 대비 수납률<br>- 기타경상이전수입 : (2020)79.3% → (2021)84.9% → (2022)62.3% → (2023)48.6%<br>- 면허료 및 수수료 : (2020)82.9% → (2021)75.4% → (2022)75.5% → (2023)68.9%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사용을 지양하여 적정 수준의 계획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42 |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관련사업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금(2432-680)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br>농림수산업자<br>신용보증기금 |
| | | 지적사항 |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보증과 대위변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23년 대위변제액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74억원으로 나타났음<br>○ 이에 당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00억원(+28.2%)을 증액변경하였음<br>* 2024년도 상반기 대위변제금 집행률: 61.9%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비효율적 인력 구조 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인건비(2432-680) | 주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 | 지적사항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직급·고호봉 위주 인력구조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 발생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직급·고호봉 위주의 인력 운용이 심화되고 있음<br>- 2023년말 기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실무자급(5급 이하) 이상 비율은 2019년 37.2% 대비 3.0%p 감소한 34.2%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관리자급 이상(4급 이상) 비율은 2019년 62.8% 대비 3.0%p 증가한 65.8%로 나타남<br>- 2019년 말 기준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농협중앙회 대비 0.1호봉 높았으나, 2023년말 기준으로는 0.7호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것 | | |
| 4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행적 상용임금 계획액 편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기금관리비(3277-201) | 주의 | 금융위원회<br>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 | 지적사항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정규직 인력 대체 등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계약직 및 전문인력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상용임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0명 미만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31명을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있어 2020년 이후 매년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부진하였음<br>-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br>* 계획액 대비 집행률 (2020)32.7% → (2021)56.1% → (2022)79.7% → (2023)63.1%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을 현원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5</td><td rowspan="3">구상권 관리<br>철저</td><td>관련사업명</td><td>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구상권관리(2631-301), 기타경상이전수입(59 - 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당초 예상보다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신규유입 채무자 동반 증가로 인해 공탁비용 등이 증가하였으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집행액 대비 구상권의 회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임<br>[주택신용보증계정 구상권 발생액 및 회수액] (단위: 억원,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예상)</th></tr>
<tr><td colspan="2">구상권 발생액(A)</td><td>2,989</td><td>2,150</td><td>1,870</td><td>1,784</td><td>2,488</td><td>2,286</td><td>3,168</td><td>5,891</td><td>15,588</td></tr>
<tr><td rowspan="2">회수</td><td>연도중(B)</td><td>1,846</td><td>1,355</td><td>1,145</td><td>1,182</td><td>1,447</td><td>1,145</td><td>1,098</td><td>1,259</td><td>1,823</td></tr>
<tr><td>누계(C)</td><td>18,392</td><td>19,747</td><td>20,892</td><td>22,074</td><td>23,521</td><td>24,666</td><td>25,764</td><td>27,023</td><td>28,846</td></tr>
<tr><td colspan="2">구상권 잔액</td><td>31,628</td><td>30,616</td><td>27,418</td><td>24,259</td><td>21,829</td><td>21,051</td><td>21,769</td><td>24,671</td><td>34,819</td></tr>
<tr><td colspan="2">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td><td>61.8</td><td>63.0</td><td>61.2</td><td>66.2</td><td>58.2</td><td>50.1</td><td>34.7</td><td>21.4</td><td>11.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상권 수납률을 제고할 것</td></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기금재산의<br>건전성 강화<br>방안 강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26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주택금융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면 기금지출이 증가하여 기금재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총액의 한도가 감소하여 신용보증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및 주연보계정의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위변제 후에도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여유자금의 전출 규모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901) | 주의 | 금융위원회<br>예금보험공사 |
| | | 지적사항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 등의 수입 발생 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또는 여유자금 예치를 하고 있음<br>- 2023년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수준인 2조 6,000억원만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br>○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본질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국공채(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편성 및 운용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결과적으로 미래 재정수입을 담보로 차입을 통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여유자금 발생 시 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운용하기에 앞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 | | |
| 48 |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 관련사업명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901) | 주의 | 금융위원회<br>예금보험공사 |
| | | 지적사항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 등의 수입 발생 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또는 여유자금 예치를 하고 있음<br>- 2023년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수준인 2조 6,000억원만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br>○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본질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국공채(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편성 및 운용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결과적으로 미래 재정수입을 담보로 차입을 통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 보유지분 매각과 서울보증보험 IPO를 조속히 재추진하여, 보유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예보채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신속히 상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임차보증금<br>환입금 등<br>수입내역 적시<br>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예금보험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과거 발생한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 등 감액분 35억 2,000만원과 그 이자 3억 5,000만원을 합해 총 38억 7,000만원을 2023년도에 수납하였음<br>< 임차보증금 등 환입 세부내역 ><br>(단위: 억원)
<table>
<tr><th>구 분</th><th>2010년 감액분</th><th>2011년감액분</th><th>2020년감액분</th><th>2021년감액분</th><th>합 계</th></tr>
<tr><td>사옥 임차보증금</td><td>7.3</td><td></td><td>27.7</td><td>0.01</td><td>35.01</td></tr>
<tr><td>전신전화 보증금</td><td></td><td>0.2</td><td></td><td></td><td>0.2</td></tr>
<tr><td>합 계</td><td>7.3</td><td>0.2</td><td>27.7</td><td>0.01</td><td>35.21</td></tr>
</table>
❍ 공사의 임차보증금 등이 감액된 경우 당연히 상환기금으로 환입했어야 함에도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잘못 환입함에 따라 이 수입내역이 상환기금에 적시 반영되지 못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 내역을 적시에 반영할 것</td></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기금간 운영경비<br>분담비율에<br>맞추어 공사<br>임차보증금 분담<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예금보험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운영경비에 대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이 3%이므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분담비율 역시 3%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공사 임차보증금의 84.4%를 부담하고 있음<br>< 운영경비 분담 비율 및 임차보증금 부담 비율><br>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운영경비<br>분담 비율</th><th colspan="3">사옥 임차보증금</th></tr>
<tr><th>사옥 임차보증금</th><th>기금 간<br>부담 금액</th><th>기금 간<br>부담 비율</th></tr>
<tr><td>상환기금</td><td>3%</td><td rowspan="2">37억 3,700만원</td><td>31억 5,400만원</td><td>84.4%</td></tr>
<tr><td>예금보험기금</td><td>97%</td><td>5억 8,200만원</td><td>15.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 전에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금융감독원의 민간인력 파견 활용제도 정비** | 관련사업명 |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감독원이 업무 공조 등을 위해 민간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 대상 기관에 과도한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민간인력 활용 규모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타기관 인력 파견 규모의 적정성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br>※ 민간 금융기관 등→금융감독원: 36명, 금융감독원→타 기관: 67명 (금감원 현원 2,054명)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민간인력 파견 활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타 기관 파견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지도·감독할 것 | | |
| 52 |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한국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특수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수익성 관련 지표도 타 은행 대비 낮은 수준임<br>※ 2023년도 BIS 비율: 산업은행 13.7%, 시중은행 평균 17.14%, 특수은행 평균 14.35%<br>2023년도 순이자마진: 산업은행 0.51%, 시중은행 평균 1.69%, 특수은행 평균 1.04%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것 | | |
| 53 | **주목적 투자비율 준수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정부 출자 정책펀드들의 자펀드 운용과정에서 일부 펀드들이 주목적 투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산업은행은 자펀드 운용 과정에서 주목적 투자 비율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정책펀드의 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투자실적 저조한 정책 자펀드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정책펀드 조성 이후 투자 기간 대비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자펀드가 일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산업은행은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자펀드 현황을 관리하고 투자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55 | **자펀드 결성 지연 대응 강화**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1개 운용사의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 및 재정의 예정 출자액(9,000억원) 중 1,600억원이 2024년도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은행은 정책펀드 위탁운용사의 자펀드 결성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 |
| 56 | **재정출자 펀드 회수액 관리 및 처리방식 규정화**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재정모펀드의 회수액이 발생하거나 펀드 청산 후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의 절차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산업은행은 재정출자 펀드에 대한 회수액 관리 및 처리 방식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57 |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상업적 업무로의 지속적인 확장은 민간금융 발전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체 대출 규모 중 83.4%가 보증 공공기관으로부터 100% 보증을 받고 있어 손실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에 정부보증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기간산업안정기금 청산 관련 규정 마련**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되므로, 기간산업업체에 대한 여신의 안정적 회수 및 만기도래 채권 상환의 관리 필요성이 있음<br>○ 2025년까지 존속하는 기금의 청산과 관련한 법적 조항이 부재하여 그 처리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업체에 대한 여신의 안정적인 회수 및 만기도래 채권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기한, 잔여재산 반환 대상 및 방법 등 청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9 | **청년도약계좌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유사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을 제한하면서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기여금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집행 단계에서 예산의 87.4%(3,008억원)의 이월액이 발생(실집행률 12%)<br>※ 추계: 306만명 가입, 3,440억원 편성 / 실제: 47만명 가입, 432억원 집행<br>- 청년도약계좌(2023.7.~)는 청년희망적금 만기(2024.2.~3.)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가입을 제한하며 신규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사업 설계 자체가 가입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br>○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연금 예산을 1년 전액 교부하였는데, 87.4%가 집행되지 못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서 미집행된 상태로 유보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br>○ 금융위원회는 출연기관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 예산을 교부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청년도약계좌<br>합리적 성과지표<br>설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지표를 가입유지율로 설정하였는데, 성과지표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남<br>- 2023년 목표치를 55%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연도말 가입유지율이 91.8%로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음<br><2023년 청년도약계좌 성과목표 및 실적><br>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3</th><th>2024</th><th>산출근거</th></tr>
<tr><td rowspan="3">가입유지율</td><td>목표</td><td>55%</td><td>73%</td><td rowspan="3">6대 은행<br>적금 중도해지율 고려</td></tr>
<tr><td>실적</td><td>91.8%</td><td>-</td></tr>
<tr><td>달성도</td><td>166.9%</td><td>-</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 의지와 청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td></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청년도약계좌<br>기여금 환수액<br>국고 정산 방안<br>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기여금 환수액의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출연금 정산과정에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차후 기여금 지급준비를 위한 명목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는 상황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출연금 편성을 위해 기여금 환수액을 국고로 정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2</td><td rowspan="3">청년희망적금<br>적정 규모<br>출연금 편성<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1831-88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스스로 설정한 성과목표상 가입 인원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근거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려움<br>- 성과지표 상 가입유지율 목표는 55%이고, 예산안 편성 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반영한 가입유지율(예상)은 90% 로 불일치함<br>※ 2023년 청년희망적금 실제 가입유지율은 70.9%</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신규 가입 인원 및 해지 추이 등에 근거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할 것</td></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협약기관 확대<br>등 실효성<br>제고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규모를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채권매입가율 60%, 부도율 20%를 적용해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를 3조 6,000억원으로 추정함<br>○ 정부의 새출발기금 출자규모 대비 2023년도 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함
<table>
<tr><th>구분</th><th>총 계획규모</th><th>실적(2024년 6월 기준)</th><th>계획 대비 실적</th></tr>
<tr><td>채권매입 규모</td><td>30조원</td><td>4조 7,932억원</td><td>15.9%</td></tr>
<tr><td>채권매입소요금액</td><td>18조원<br>(평균 매입가율 60%)</td><td>2조 687억원<br>(평균 매입가율 43.2%)</td><td>11.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에 근거하여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관련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4 | **정부 재원 출자 규모 재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br>한국자산관리공사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규모를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채권매입가율 60%, 부도율 20%를 적용해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를 3조 6,000억원으로 추정함<br>○ 정부의 새출발기금 출자규모 대비 2023년도 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새출발기금을 위해 재정을 추가 출자하는 때에는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가율 등을 고려해 출자 규모를 재산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5</td><td rowspan="3">금융정보분석원<br>내실 있는<br>인사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7102-1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및 2023년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파견인력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br><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br>○ (지적사항) 금융위원회의 민간전문가 파견 인력이 과도하여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및 인력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음<br>->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 파견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함으로써 민간전문가 파견 인력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제도개선)<br>○ (지적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금융위원회 본부 대비 인건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는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 간 인력배치 불균형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br>->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결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시정)<br>-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력부족분을 비별도 정원(국세청·관세청 등 중앙행정기관 7인, 민간 3인)을 파견받아 충원하고 있으나 비별도 파견인력은 원소속기관이 결원을 보충할 수 없고 인건비가 원소속기관에서 집행된다는 문제가 있음<br>* 예산액 대비 불용률: (2021년) 5.0%, (2022년) 10.0% (2023년) 12.6%<br>- 한시조직(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례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정당화되기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외 파견인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결원문제 해소를 위해 정원 내에서 인사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계획과 다른 정보화사업 확대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32-501)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고도화’ 및 ‘ISP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ISP 구축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확대하여 확대 부분과 함께 통합발주함에 따라 사업의 지연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br>- 동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연내 완료되지 못하고 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 사업예산 8억 500만원 중 선금 4억 250만원은 집행하고 잔금 4억 250만원은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완료하였음<br>○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대상 사업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통합발주함에 따라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하여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br>- 해당 사업의 감리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9,000만원에 대해 동 구축사업의 낙찰차액 6,200만원과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낙찰차액 2,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정보화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병행되어야 할 감리사업 예산이 미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사업의 대규모 불용**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8411-880)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함<br>- 2023년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조 1,600억원 중 3,038억 6,000만원만 집행(전출)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미전출)되었음<br>○ 향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임<br>※ 2023년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상환해야 할 잔액(원금)은 28조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8 |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 | 관련사업명 | 공적자금상환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기금예수금(94-943)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부채 상환을 위한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입액이 4조 2,485억으로 나타나, 청산까지 남은 4년 간 채무잔액 약 28조원(연평균 7조원)의 상환 완료를 낙관하기 어려움<br>○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4.1조원)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자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는 상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9</td><td rowspan="3">대환보증<br>대위변제 계획액<br>과다추계 지양<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위변제 계획액의 53.9%(1,206억원)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 감액하였고, 그럼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br><2023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실적><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B)</th><th rowspan="2">집행률(B/A)</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A)</th><th>수정</th></tr>
<tr><td>222,731</td><td>103,131</td><td>103,131</td><td>24,788</td><td>11.1</td><td>78,34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수요와 지원 요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r><td rowspan="3">70</td><td rowspan="3">기금 건전성<br>유지를 위한<br>리스크 관리 및<br>대위변제 지출<br>적정수준 관리<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26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br>한국주택금융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음<br>- 2023년 전세자금 보증사고액은 약 7,100억원으로, 전체 보증사고액의 67.0%를 차지하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약 4,983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84.6%에 이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1 | **현지법인 운영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한국산업은행 일부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저조하거나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는 등 현지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지 않음<br>- KDB 브라질: 자본 9,500만달러 < 납입자본금 1억 1,100만달러로 일부자본잠식<br>- KDB 유럽: 2020년 1,568만 달러, 2022년 127만 달러 적자<br>○ 한국산업은행 일부 현지법인은 현지당국으로부터 제제 받음<br>-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은행 현지법인은 현지금융감독기관 제재로 인해 과징금 2억 6,400만원 부과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산업은행은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것<br>○ 한국산업은행은 현지법인의 현지 금융당국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 | | |
| 72 | **현지법인 배당 실시계획 검토** | 관련사업명 | 한국산업은행 | 제도개선 | 한국산업은행 |
| | | 지적사항 | ○ 한국산업은행이 현지법인에 약 9,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국내 배당 실적이 전무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현지법인의 배당 실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금융의 날 행사의 불필요한 행사비용 축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금융의 날 행사(7135-317) | 주의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날’ 행사를 위해 수용인원 500인의 장소를 대관하면서 일반용역비 4,400만원 중 1,500만원을 참가자 다과세팅비로 집행함<br>* 2023.10.24. 여의도 63컨벤션, “제8회 금융의 날 행사” 개최<br>○ 행사 장소의 수용규모를 고려할 때 다과세팅비가 과도하게 집행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의 날 행사 등을 위한 장소 대관 시 다과세팅비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 74 | **금융권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내부통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과 관련하여 조기안착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br>-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위반 시 제재조치 부과<br>* 책무구조도: 금융회사의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을 배분한 구조도<br>-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책무구조도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음<br>○ 「은행연합회-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의 임직원 교육내용에 ‘내부 통제’ 뿐만 아니라 ‘금융윤리’ 관련 교육도 추가될 필요<br>- 현행 제도는 준법 담당 임직원은 내부통제 관련 교육만 이수하도록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도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 | | |

## 5. 국민권익위원회(1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정무직 전용 차량 임차와 관련하여,「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 준칙)에 반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매달 지급할 임차료 관련 계약을 전년도에 체결한 사례가 발생하였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여 차량 임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1132-321)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정보화예산임에도 동 세부사업 내 공공요금 예산 300만원을 정보화 이외 사업(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_1136-366)으로 자체 전용하여 국내여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이는 정보화 예산의 자체 이·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예산 집행지침에 반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정보화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집행지침에 반하여 자체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정부통합콜센터<br>인지도 개선<br>노력<br>및 홍보 강화<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통합콜센터는 통합 연계되는 국가기관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콜센터 대표번호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br>- 정부통합콜센터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거 국정감사나 결산 심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2014년 · 2016년 국정감사, 2017년 결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br>※ 최근 5년간 정부통합콜센터(110) 인지도 조사 결과
<table>
<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인지도(%)</td><td>39.1</td><td>44.3</td><td>38.6</td><td>39.0</td><td>45.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콜센터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예산 편성 취지에 반하는 사업 예산 50% 삭감 집행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확대가 필요함에도, 2023년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5,000만원을 격오지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차량 지원 등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목조정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한 사업 예산의 50%를 삭감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5 |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부실한 사업 수행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컨설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 사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연구용역은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치는 등 사업 성과물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br>-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워크숍 실시에 대한 내용 외에 당초 사업목적인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프로그램 설계’, ‘진단·분석 결과물 산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 당초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교육·강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변화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청렴 교육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문적 강의내용이 아님에도 특정 프로그램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식이라 보기 어려움<br>- 10회 이상의 강사료를 동일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2023년의 경우 17건, 2022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건, 13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에 가장 많은 횟수(21회)의 강사료 지급이 이루어진 강사(판소리 전문가)의 경우, 동일인에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7회에 걸쳐, 도합 1억 1,241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강사 및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신규 강의개발 및 교육내용·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
| 7 | **구조금 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패신고자보호보상(1136-364) |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중 “부패신고자 구조금” 내역사업은 부패신고자 지원을 통해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편성 예산 2,0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고, 평균처리기간은 194일로,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금 지급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사업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전용 발생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1136-366)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엄밀한 사업계획 및 정확한 예측 없이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연말 동 사업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타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불필요한 추가 전용이 발생하게 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9 |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탁금지제도 운영(1136-367)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최근 4년간(2020-2023)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 일부를 타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집행률이 최대 80% 미만 수준에 그침<br>○ 이는 청탁금지제도 운영 실적의 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 매년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임<br>- 최근 4년간(2020-2023) 청탁금지제도 관련 신고 처리건수는 2020년 273건에서 2023년 131건으로 142건(△52.0%)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집행액도 2020년 3억 800만원에서 2023년 1억 7,8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42.2%) 감소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실적 감소 추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국내여비 적정 집행 및 전용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행정심판 운영(1137-370) |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행정심판 운영”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은 국내여비로 4,200만원이 편성됨. 그러나 편성예산의 50%에 달하는 2,200만원을 전용하여 6,6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예산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고,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사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요불급한 국내여비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이행강제금<br>부과 시<br>관계법령<br>신중 검토 필요<br>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태료(56-56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이행강제금 과오납금반환금 발생은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법적 근거 부재가 문제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로 패소한 데 기인함<br><br>※ 2023년도 과태료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7">2023년도</th><th rowspan="2">2024년도<br>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징수<br>결정액(B)</th><th>수납액<br>(C)</th><th>불납<br>결손액</th><th>미수<br>납액</th><th>수납률<br>(C/B)</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110</td><td>110</td><td>128</td><td>△62</td><td>-</td><td>190</td><td>△48.4</td><td>160</td></tr>
</table>
○ 수입과목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반환금은 어느 과목에서 반납되었는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br>- 현재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한국은행 국고업무해설」 등에 따라 총 수입금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과목에서 지출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시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 및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입규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br>○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금을 세출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부패신고자<br>보상금 추계<br>정확성 제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부패신고자보호보상(1136-36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은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는 최근 4개년(2020~2023년) 중 최대 규모인 14억 4,2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이는 부패신고자 대상 보상금이 매년 과소추계되었기 때문임<br>※ 최근 4년간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집행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본예산(A)</td><td>3,233</td><td>2,582</td><td>2,682</td><td>2,832</td></tr>
<tr><td>실집행액(B)</td><td>3,878</td><td>3,540</td><td>2,999</td><td>4,274</td></tr>
<tr><td>부족분(B-A)</td><td>645</td><td>958</td><td>317</td><td>1,442</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사업에 적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발생 방지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 시정, 주의 | 국민권익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청렴권익민간협력” 중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내역사업의 근거인 훈령이 2023년 2월까지 유효함에도, 해당 훈령의 유효기간 개정을 전제로 2023년 전체 기간(12개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된 예산 일부(900만원)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br>- 훈령은 2023년 2월 25일에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되었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당초 계상하였던 예산 1억 8,600만원 중 1억 5,200만원(81.4%)이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시정)<br>○ 국민권익위원회는 과다 편성된 예산을 타 용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보상금 지급을<br>위한 반복적인<br>인건비 전용 및<br>내역변경 지양</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부패신고자보호보상(1136-364)<br>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5)<br>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1136-366)<br>청탁금지제도운영(1136-367)<br>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1136-36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신고 유형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인건비 전용과 내역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잉여재원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br>※ 최근 4년간 신고자 보상금등 전용·내역변경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부패신고자보호보상</td><td>646</td><td>959</td><td>320</td><td>1,447</td></tr>
<tr><td>공익신고제도 운영</td><td>△506</td><td>△996</td><td>722</td><td>△931</td></tr>
<tr><td>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br>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td><td>△115</td><td>37</td><td>-</td><td>△41</td></tr>
<tr><td>청탁금지제도 운영</td><td>△25</td><td>△40</td><td>△3</td><td>△38</td></tr>
<tr><td>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td><td></td><td></td><td>△5</td><td>△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 전용을 통해 보상금 등의 부족분을 조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고 유형별 지급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내역변경을 최소화 할 것</td></tr>
</table>

##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상각 관리 미흡**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무결산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내용연수를 5년으로 설정한 반면, 2023년도에 취득한 보안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모두 1년으로 설정하였음<br>- 짧은 내용연수의 상각은 비용의 과다계상 및 자산의 과소계상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존 자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요불급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여 자산을 적절히 관리할 것 | | |
| 2 | **출연사업과 무관한 자체 경비성 사업 집행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통 | 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사업과 무관한 자체 경비성 사업을 출연사업을 통해 집행한 것은 각 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br>- 자체 기본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용자산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191만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마다 쪼개어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과 무관한 자체 경비성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당초 출연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부적절한 예산 전용**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원회운영지원(1030-300)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전용함<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물건비(200목)에서 인건비(100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행지침의 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4 | **출연 및 직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련 연구라는 점에서 기술전문성의 필요가 높지 않고,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수행하는 연구용역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을 통해 별도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연구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연구 및 주요국 동향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정책연구 간의 차별성을 확보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br>교육 실적 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br>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개인정보처리자 ‘수준별 교육’은 교육 참여인원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55.9% 수준에 불과함<br><br><2022~2023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 교육 운영 실적><br>(단위: 명, %)<br><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4">2022</th><th colspan="4">2023</th></tr><tr><th>회차</th><th>목표<br>인원</th><th>참여<br>인원</th><th>달성률</th><th>회차</th><th>목표<br>인원</th><th>참여인원<br>(전년대비<br>증가율)</th><th>달성률</th></tr><tr><td>실적</td><td>30회</td><td>9,000</td><td>7,212</td><td>80.1</td><td>37회</td><td>9,800</td><td>5,479<br>(△24.0)</td><td>55.9</td></tr></table><br>○ 정보주체 교육에서 취약계층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과 교재를 매년 개선하였음에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신청인원의 부재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 수요를 면밀히 살펴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할 것</td></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자율규제 활성화<br>사업의 법적<br>위탁근거 보완<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br>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br><br><법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 관련 업무 및 위탁가능 업무><br><table><tr><th>법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 관련 업무</th><th>시행령 제62조에<br>따른 위탁가능 업무</th></tr><tr><td>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td><td>○</td></tr><tr><td>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td><td>○</td></tr><tr><td>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td><td>×</td></tr><tr><td>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td><td>×</td></tr><tr><td>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td><td>×</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 위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사업 실적 부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 지원의 2023년도 사업목표를 29명이 하루 평균 3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 20,880건으로 설정하였음<br><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처리건수 목표><br>* 29명 × 3건 × 20일 × 12개월 = 20,880건<br>(시범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 투입인력·비율 조정)<br>* 사업 총괄(1명), 삭제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전담(2명)<br>○ 그러나 실제 운영결과, 신청건수 11,487건, 처리실적 10,813건으로 목표 대비 처리실적이 약 52%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사업 실적을 개선할 것 | | |
| 8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신규지정현황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br>- 제도 신설 직후에는 2020년 5건, 2021년 13건으로 비교적 활발히 지정되었으나, 이후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지정실적이 점차 감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활성화하여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을 통한 가치 창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 | | |
| 9 |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가명정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가명정보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을 받은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제도와 연계 지원방안을 고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가명정보 시스템 수시점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알리페이에 고객 4천만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 사업에서 가명정보 활용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맡아 왔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위원회는 대기업 등이 가명정보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도 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11 |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1034-301) | 주의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함<br>- 2024년 5월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br>○ 2024년 2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을 9개월로 예상하고 사업을 수행(2024.3.15.~12.31.)하고 있는데, 1차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은 1차 사업의 종료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년도 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지 우려가 있음<br>○ 또한, 2차 사업의 수행업체는 1차 사업의 수행업체와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는바, 1차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
| 12 | **부적정 비목 집행**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7011-251), 위원회기본경비(7011-253) | 주의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 ① 간담회·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식사 비용을 처리하고 추후에 관서업무추진비로 정정하거나 ② 기관 내부 운영을 위한 다과류를 구입하거나 ③ 국외출장 시 통역비용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시 식사비용, 다과류 구입비용, 통역비용 등을 사업·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적정한 비목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지자체 조례<br>제·개정<br>활성화를 위한<br>지원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7011-25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br>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br>○ 2024년 7월 기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72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 않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을 강화할 것</td></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한국인터넷<br>진흥원 출연사업<br>비중의<br>단계적 축소<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통</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br>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의 비중이 과도하여 직접 수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에도 예산의 상당 부분(77.8%)이 출연사업으로 위탁 수행되고 있음<br><table><tr><td>2021<br>결산</td><td>(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보조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문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 수행 비중을 제고할 것</td></tr></table>○ 예산의 출연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한 부처의 포괄적인 사업을 대부분 특정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방식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움<br>○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사업을 다시 위탁하여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단순 사업관리업무로서 출연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고 보기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접 수행 사업을 늘려나갈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한국인터넷 진흥원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원회 정보화 지원(정보화)(1030-302) |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수 부처(개보위·과기부·방통위)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해당 부처의 출연금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으로 통합수행·집행하여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br>○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사업의 집행액 19억 9,400만원 중 1억 7,331만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7개 출연사업에 각각 나누어 집행하였음<br>- 출연사업별로 유지관리 사업 지출을 배분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예산편성내역에는 해당 사업 지출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낮는 등 회계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소관 부처별 예산에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수행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 |
| 16 | **교육포털 인프라 사업 계획 변경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원회 정보화 지원(정보화)(1030-302) | 시정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화 체계구축' 사업의 인프라 도입 과정에서 계획 편성(민간 클라우드, 2억 6,400만원)과 달리 집행함(G클라우드, 1억원)<br>※ 정보화 체계구축: 통합대표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구축사업(12억 2,000만원)<br>○ G클라우드 이용 1억원은 차년도로 이월집행하고, 차액 1억 6,000만원은 감리사업 및 보안소프트웨어 구매에 사용<br>○ 인프라 변경(민간→G클라우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권고하는 자체 ISP 및 지능정보화 관련 상위계획, 국회 제출 계획 등에도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지원 내역사업의 직접 수행 필요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1031-304) | 주의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지원 사업은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었는데, 2023년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br>○ 동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출연 필요성이 낮음<br>-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정 및 결과 평가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어 출연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낮음<br>- 사업구조가 단순함(6억 3,0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을 기업에 배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동 사업의 출연금 편성을 지양하고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사업 출연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 주의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태 조사연구로 보아 사업출연금(8억 1,400만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여 집행하였음<br>※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위탁범위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태 조사·연구가 포함<br>○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2023.3. 개정, 2024.3. 시행)되어 ‘진단’이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시범평가 제도를 운영함<br>※ 평가 전환 시, 연 1회 평가 의무화, 평가대상 확대(800→1400개 기관), 자료 미제출·부실제출 시 과태료 부과<br>○ 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인 2023년·2024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평가 업무에 관한 사업출연금을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행함<br>○ ‘평가’는 진단과 달리 조사·연구의 일종으로 보기 어려워 종전 위탁 근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br>○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스로 공공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기 부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고, 조직·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출연금을 편성·집행 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받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사업의 직접 수행 필요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1031-305) | 주의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 간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95.6%의 예산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임<br>- 2023년 예산현액 15억 2,100만원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출연금이 14억 5,800만원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접수행 관련 국외업무여비 등은 6,300만원에 불과하였음<br>○ 직원의 출장경비를 제외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조사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출연금으로 편성함<br>○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갖춰야 할 정책역량과 네트워크 역량이 기관 내에 누적되지 않아 향후 출연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될 우려가 있고,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 수립 및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의 존립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수행 사업의 비중을 높일 것 | | |
| 20 | **개인정보기술 표준 개발지원 과제 공고 예고기한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인정보기술 표준 개발지원(R&D)(1033-303) | 주의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과제의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의 과제 예고를 2023년 2월 8일에 진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것 | | |

# 기획재정위원회



# 1. 기획재정부(11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대규모 세수결손 시 국회의 심의·확정권 존중 필요** | 관련사업명 | 세수결손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2023. 9. 18.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예상, 여유재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을 통해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함. 2023회계연도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br>- 그럼에도 2005, 2009, 2013, 2015, 2020회계연도 등 세입감액 추경을 추진했던 사례와 달리, 세입예산 조정 없이 일방적 불용, 내부거래 등으로 대응<br>* 이와 관련해 2003. 11. 17. 지자체들로부터 헌법재판소에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 지자체들과의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br>○ 이는 국회의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br>-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br>○ 추경 없이 정부가 사업별 지출계획을 조정할 경우 국회가 당초 심의·확정한 것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며, 그 정도는 세수결손 규모 및 지출계획 조정 수준과 비례하여 커지게 되므로 국회의 심의·의결 없는 세수결손 대응책의 한계점이 노출됨<br>○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수결손으로 인해 국회가 심의·확정한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br>- 이와 관련하여 세입감액경정, 지출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참고로 국고채 발행은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라는 점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한 재원 확보의 경우 자체변경 한도제한으로 인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 | |
| 2 | **세수오차 및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세수결손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총 국세수입을 400.5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344.1조원이 수납되어 56.4조원(△14.1%) 규모의 세수오차 발생<br>- 2024년에도 국세수입 예산을 367.3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8.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조원이 감소하여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음<br>○ 국회는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세수오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세수 추계모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등 시정요구하였으나, 세수오차 문제가 재차 발생함<br>○ 기획재정부는 2022.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방안」에서 ‘경제위기 등으로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도 이행하지 않음<br>○ 세수오차의 주요요인인 법인세의 경우 추계 시 전년도 실수납액 실적에 의존하고 일부 개정된 세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경기 및 산업 동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큰 폭의 오차가 반복됨<br>○ 추계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보임<br>○ 2022년 하반기 주요 전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방안」에서 밝힌 바와 달리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등을 통한 조정안을 국회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2023년 세수결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주요기관의 대한민국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현황<br><table><tr><th>구분</th><th>종전</th><th>변경</th></tr><tr><td>정부</td><td>2.5% (2022. 6. 전망)</td><td>-</td></tr><tr><td>한국은행</td><td>2.4% (2022. 5. 전망)</td><td>2.1% (2022. 8. 전망)<br>1.7% (2022. 11. 전망</td></tr><tr><td>국회예산정책처</td><td>2.5% (2021. 9. 전망)</td><td>2.1% (2022. 10. 전망)</td></tr><tr><td>OECD</td><td>2.5% (2022. 6. 전망)</td><td>2.2% (2022. 9. 전망)</td></tr><tr><td>IMF</td><td>2.9% (2022. 4. 전망)</td><td>2.0% (2022.10. 전망)</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추계모형 고도화, 국내외 주요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할 것</td><td></td><td></td></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해 사전적 협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세수결손</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관련 협의체로 재정정책자문회의,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br>- 2023년 연초부터 국세수입 진도율이 부진하여 세수결손 발생현황,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정운용 관련 협의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과거와 유사하게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협의가 주로 이루어짐<br>-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의 발생가능성, 대응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재정운용 관련 협의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대응방안 수립 시 반영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지방교부세 · 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배분비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세수결손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2013회계연도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 교육재정교부금 18.6조원 미교부 반복<br>- 지방교부세 예산액 74.4조원 중 8.2조원 미교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8조원 중 10.4조원 미교부<br>- 2013년 세수결손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을 각각 2,500억원 불용함에 따라 국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위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사사례가 재발<br>○ 지방교부세 · 교육재정교부금 법정배분비율을 미준수<br>-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각각 내국세의 19.24% 및 20.79%로 규정<br>- 지방교부세법상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97%, 특별교부세는 3%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96.6%로 법정비율보다 0.4%p 낮음<br>- 지방교육재교부금법상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및 재난안전관리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현안 교부는 23.5%로 법정 비율보다 6.5%p 낮고, 재난안전관리는 7.8%로 법정비율보다 2.2%p 낮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등을 감안, 지방교부세 · 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 · 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세수오차<br>최소화를 위한<br>세수재추계<br>실시 및<br>국회보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세수결손</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2년 하반기 주요 전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방안」에서 밝힌 바와 달리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등을 통한 조정안을 국회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2023년 세수결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br>※ 주요기관의 대한민국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현황
<table>
<tr><th>구분</th><th>종전</th><th>변경</th></tr>
<tr><td>정부</td><td>2.5% (2022. 6. 전망)</td><td>-</td></tr>
<tr><td>한국은행</td><td>2.4% (2022. 5. 전망)</td><td>2.1% (2022. 8. 전망)<br>1.7% (2022. 11. 전망</td></tr>
<tr><td>국회예산정책처</td><td>2.5% (2021. 9. 전망)</td><td>2.1% (2022. 10. 전망)</td></tr>
<tr><td>OECD</td><td>2.5% (2022. 6. 전망)</td><td>2.2% (2022. 9. 전망)</td></tr>
<tr><td>IMF</td><td>2.9% (2022. 4. 전망)</td><td>2.0% (2022.10. 전망)</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제출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당초 전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법인세입 편성 정확도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인세(12-12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의 법인세수 예산편성은 전년도 실수납액에 의존하고, 일부 개정세법의 영향을 반영함<br>- 이러한 방식은 경기동향 및 산업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큰 폭의 오차 발생 가능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수 예측 및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
| 7 | **사업 및 세목별 예산현액 범위에서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1141-301)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세사업인 ‘일자리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과제 대응’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정책연구비로 전용하였는데, 전용을 통해 증액한 정책연구비 예산현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음<br>- ‘일자리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과제 대응’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 1억 8,900만원 중 6,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함<br>- 이 중 3,0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3,400만원은 청년정책 대응 기반 강화 사업 일반용역비로 각각 전용하여 정책연구비 및 일반용역비 예산은 각각 7,000만원, 3,400만원으로 증액됨<br>- 그러나 실집행 실적은 각각 8,500만원과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업 및 세목별 예산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편성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1431-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일반용역비 예산은 10억 6,000만원으로, 이 중 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7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 800만원임<br>- 기획재정부는 불용사유를 행사대행 일반용역사업의 응찰자 평가 결과 적격자 선정이 불가하여 계획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행사를 미시행한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 | | |
| 9 |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1431-301)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이 2023회계연도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여 체결한 계약 13건 중 7건이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중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br>- 전체 계약 대비 동일업체 수의계약의 비중: 2021년 7건 중 2건, 2022년 4건 중 2건, 2023년 13건 중 7건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을 위한 일반용역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에 대한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br>- 예산 15억 7,000만원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KDI 출연금이 14억 7,6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br>- 해당 기관들은 조세 감면규모 평가 및 개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3년 국세감면 한도 14.3%를 초과하는 15.8%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도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대한 출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국세감면율<br>법정상한 준수</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됨<br>- 2023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한 15.8%로 전망됨<br>- 2024년에도 법정한도 잠정치인 14.6%를 0.7%p 초과한 15.3%로 전망됨<br>※ 2022~2024년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br>(단위: 조원, %)
<table>
<tr><th>구분</th><th>2022년 실적</th><th>2023년 실적</th><th>2024년 전망</th></tr>
<tr><td>○ 국세감면액 (A)</td><td>63.5</td><td>69.8</td><td>71.4</td></tr>
<tr><td>○ 국세수입총액 (B)</td><td>422.9</td><td>370.4</td><td>394.9</td></tr>
<tr><td>○ 국세감면율 [A/(A+B)]</td><td>13.0</td><td>15.8</td><td>15.3</td></tr>
<tr><td>○ 국세감면율 법정한도</td><td>14.6</td><td>14.3</td><td>14.6</td></tr>
</tabl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br>❍ 국세감면율이 15%를 상회하는 것은 2023년이 처음이고, 특히 2024년에는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2022년 대비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 규모를 크게 늘린 문제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반복적인 임대료 과다편성 · 국내여비 과소편성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 · 운영(2445-401)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연례적으로 임차료 과소지출 및 국내여비 과다 지출이 발생함<br>- 2022회계연도 임차료 예산 6억 1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로 “연말 예산 국회 대응을 위한 작업장 조성 비용 절감으로 인한 불용”으로 기재함<br>- 2022회계연도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3억 5,100만원임에도 실집행액은 4억 2,400만원(국외업무여비에서 7,400만원 세목조정)<br>- 2023회계연도 임차료 예산 6억 100만원 중 국내여비로 1억 500만원을 전용하고 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임차료 불용 사유도 2022년과 동일하게 기재함<br>- 2023회계연도 국내여비는 3억 7,600만원에서 5억 6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증액 사유로 “예산 국회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들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반복적인 임대료 예산 과다 편성(지출 과소) 및 국내여비 예산 과소편성(과다 지출)을 지양하고 지출을 예산에 부합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반복적인 집행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비는 예산현액 7억 200만원 중 이월 8,000만원, 불용 1억 9,200만원으로 불용률이 27.4%임(2022회계연도 정책연구비 예산 6억 7,900만원 중 8,000만원 이월, 불용 1억 1,700만원으로 불용률 17.2%)<br>○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장 워크숍 미개최(2022년에도 미개최)로 7,600만원 전액 불용하는 등 일반수용비 1억 700만원 불용(불용률 23.8%)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미개최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행사에 대해 필요성을 재고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공공기관<br>경영평가<br>결과의 신속한<br>보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6월 중 발표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은 3~4개월이 경과한 이후 국회에 보고하고 있어 보고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음<br>-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결산, 공공기관 관련 예결산 및 법안 심사 등에 있어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9~10월 중 보고로 인해 국회가 경영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활용하기 어려움<br>※ 2019~202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종료시점 및 보고시점
<table>
<tr><th>구분</th><th>평가대상</th><th>평가종료</th><th>국회 보고</th><th>대통령 보고</th></tr>
<tr><td>2019</td><td>2018실적</td><td>2019.6.20.</td><td>2019.9.20.</td><td>2019.9.20.</td></tr>
<tr><td>2020</td><td>2019실적</td><td>2020.6.19.</td><td>2020.9.28.</td><td>2020.9.23.</td></tr>
<tr><td>2021</td><td>2020실적</td><td>2021.6.18.</td><td>2021.9.30.</td><td>2021.9.30.</td></tr>
<tr><td>2022</td><td>2021실적</td><td>2022.6.20.</td><td>2022.10.4.</td><td>2022.9.28.</td></tr>
<tr><td>2023</td><td>2022실적</td><td>2023.6.16.</td><td>2023.10.16.</td><td>2023.10.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지방이전 계획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한전기술은 2015년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원자력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는 382명 중 94명만 이전함<br>- 2018년 유관기관 협조 필요성을 이유로 이전 시기를 1년 연기하였고, 2019년에도 288명 중 101명만 김천 본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음<br>- 2023.12월 한전기술이 산업부에 제출한 대전 원설본부의 혁신도시 김천본사 이전 세부 이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 내 원설본부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2645-300)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의 증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br>- 베트남, 카자흐스탄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1회계연도의 경우 집행률이 15.5%이며,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세부사업(2646-301)'으로 각각 1억 5,600만원, 1억 3,600만원을 전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타 사업의 증액재원으로 연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 소요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전용을 통한<br>과도한 사업비<br>집행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6-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타 사업 및 비목에서 전용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350-02)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br>- 2023년: 사업출연금(350-02)에서 74억 300만원 편성 후 5억 6,000만원 전용(증액) 및 세목조정 통해 79억 6,300만원 집행<br>- 2022년: 사업출연금(350-02) 69억 2,000만원 편성 후 2억 6,700만원 전용(증액) 및 세목조정 통해 71억 8,700만원 집행<br>※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예산 전용 세부내역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에서</th><th>금액</th><th colspan="2">~으로</th></tr>
<tr><th>세부사업 명</th><th>목-세목</th><th>(백만원)</th><th>세부사업 명</th><th>목-세목</th></tr>
<tr><td rowspan="2">2022</td><td>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2645-300)</td><td>210-14</td><td>156</td><td rowspan="2">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6-301)</td><td rowspan="2">350-02</td></tr>
<tr><td>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6-301)</td><td>260-02</td><td>111</td></tr>
<tr><td rowspan="3">2023</td><td>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2645-300)</td><td>210-14</td><td>136</td><td rowspan="3">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6-301)</td><td rowspan="3">350-02</td></tr>
<tr><td>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2646-402)</td><td>360-05</td><td>226</td></tr>
<tr><td>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6-301)</td><td>260-01</td><td>19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반복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과소 편성한 후 타 사업 및 비목의 전용을 통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예비타당성조사 낙후지역 배려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6-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예비타당성조사 초기에는 경제성 평가만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정책성 평가 항목을 신설함<br>-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도개편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두었다고 밝힘<br>○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효과 분석'에서는 2019년 제도개선이 수도권·비수도권 발전지역 대비 낙후지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낙후지역 사업성 평가체계에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19 | **연례적 행사에 반복적인 예산 초과집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300)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연례적인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 비용을 반복적으로 전용 증액을 통해 집행함<br>-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비용이 본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비용으로 반복적으로 본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사항 공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은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0억 3,900만원 중 10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동 사업을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상세한 회의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재정의 투명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 | |
| 21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관련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300)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비용이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하여 2회계연도 연속 전용을 통해 필요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를 위해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성과지표 개선 및 실제 집행 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2712-301)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2024년부터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7.8% (2013~2022년 연평균 증가율) 하회’로 매우 포괄적인 목표치를 잡고 있으나,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부적절함<br>-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2022년에는 2021 재정사업 평가로 6개 사업을, 2023년도에 2022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3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나 평가보고서를 통한 재정지출 제도 정비 계획 및 결과 제시가 미흡함<br>○ 재정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효율화를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연례적으로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br>- 2022 및 2023회계연도의 경우 각각 2억 4,400만원, 9,500만원이 타 세부사업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등으로 전용되는 등 연례적으로 타 사업의 증액재원으로 활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개선하고, 실제 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실제 집행 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3131-311)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022년 및 2023회계연도 국외업무여비 중 각각 7,000만원, 8,9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있어 국외업무여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고,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타 사업의 증액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타 사업의 증액재원으로 연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의 실제 집행 소요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구체적인 성과지표 제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2712-302)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2024년 성과지표는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7.8%(2013~2022년 연평균 증가율) 하회’로 잡고 있음. 2023~2027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전망하고 있으나 2022년 9.7%, 2023년 6.3%로 정부의 경제예측 부정확 및 감세정책 추진으로 달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다른 보조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사업 성과 측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br>- 또한 동 사업은 재정건전성 관련 통계분석 및 제도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고 다양한 중간 성과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br>○ 주요국 재정준칙 관련 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비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으로부터 전용하였는데, 참석 국제회의명 및 참석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국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2712-304)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제안 사업수’로 평가한 성과지표가 26%로 매우 저조하며, 2024년 목표치를 2023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동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부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제안 사업수가 2023년에 급감한 원인을 규명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6 | **국민참여 예산 관련 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2712-304)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예산학교 교육 구성과 비교할 때,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시민교육자료는 부실한 것으로 보임<br>-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20분 분량의 재정 관련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며, 예산국민참여단의 경우 20분 분량의 재정 관련 교육 외에 10분 분량의 사전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참여단원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의 전부<br>- 이에 비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시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화과정(3시간)을 운영하는 한편, 약자동행 의제 발굴을 위한 대상별 교육(6시간)을 별도로 실시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한 제도 운영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녹색기후기획사업 성과 관련 자료 제공 · 공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녹색기후기획 사업(3133-33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회의 개최(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정책연구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회의 개최내용 및 정책연구 결과 등 사업의 성과 및 2023년 성과지표 제시 부재<br>※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GCF 전문가 만족도 조사 (단위: 점)</td><td>목표</td><td>80</td><td>80</td><td>81</td><td>81</td><td>81</td></tr>
<tr><td>실적</td><td>83.1</td><td>81.1</td><td>80.9</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03.8</td><td>101.4</td><td>99.9</td><td>-</td><td>-</td></tr>
<tr><td rowspan="3">국제협력 활동지표 (단위: 점)</td><td>목표</td><td>200</td><td>210</td><td>220</td><td>230</td><td>240</td></tr>
<tr><td>실적</td><td>235</td><td>220</td><td>260</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17.5</td><td>104.8</td><td>118.2</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회의 개최 내용, 정책연구 결과 등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 제공·공개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 활용도를 높일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예산 대비 과도한 국외여비 전용 증액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대외경제협력강화(3231-301)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국외여비 전용 증액 부적절<br>- 국외여비 예산 3억 4,700만원에 더해 1억 920만원을 전용받아 4억 4,970만원 집행. 국외 출장은 상대방 국가와의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전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도 30% 이상 증액은 과도한 측면<br>- 또한 전체 예산 집행액 6억 9,300만원 중 65.1%를 국외여비로 집행하고, 정책연구비는 1억 2,000만원 중 절반을 전용 감액하면서 1,640만원은 불용하는 한편, 일반용역비도 2,000만원 전용 감액 후 7,710만원 불용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계획성 있는 대외경제협력강화 사업 시행 및 예산 집행을 통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정책연구 내용 공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일기반조성(3231-304)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정책연구 내용 공개 필요<br>- 동 사업의 2022년 및 2023년 사업추진 내용 모두 “담대한 구상 및 남북공동발전계획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로 동일. 정책연구비는 1억원을 전용 증액하여 10억 4,600만원으로 3,100만원만 불용<br>○ 2020년 및 2021년에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용역 공개 범위 확대 필요”, “체계적인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필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노력할 계획”, “노력할 것”으로 답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정책연구 집행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외교·대북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정책연구 내용을 공개할 것 | | |
| 30 |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업무명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3240-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의 업무 명시 필요<br>- 동 기획단이 제시하는 사업 내용·성과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관리를 위한 TF 운영임. 주된 지출 내역은 수용비, 임차료, 여비, 정책연구비인데 정책연구비는 불용률이 33.5%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의 목적·업무범위 및 업무성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표 등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세수결손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상환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711-871)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일반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4조 4,843억 2,100만원 중 5조 9,056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8조 5,787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2023회계연도 세수결손으로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 14조 4,843억원 중 5조 9,056억원(40.8%)만 상환하고 8조 5,787억원은 불용하여 불용률이 60%에 달함<br>-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연체이자로 인한 일반회계 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도 부담을 줄 우려<br>○ 2014년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예수이자 미상환으로 해소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동일한 행태가 반복<br>※ 시정요구(시정) -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이자지출 불용 등으로 해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 시 미래의 재정부담과 국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적자 채무 증가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유예를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외국환평형기금의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외국환평형기금 -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9110-910)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평형기금을 국고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탁에 사용함에 따라 금융성 채무(외환시장안정용)가 적자성 채무(일반회계 적자보전용)로 전환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및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를 초래<br>-「국가재정법」 제70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제4항다목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국채 상환 실적을 포함한 변경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국채 상환없이 공자기금 및 일반회계로 자체변경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조기상환 시 금융성채무가 적자성채무로 전환되었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가능여부 면밀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외국환평형기금 -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9110-910)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계획액이 49.8조원인데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4.4조원(28.9%) 증가한 64.2조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br>-「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서는 20%가 넘는 기금 규모 변경이 있을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br>○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요건 중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자체변경하였다는 입장임<br>- 그러나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예수한 것으로「국가재정법」 상 차입금은 예산총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수금은 내부거래로서 차입금과 구분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외평기금의 면밀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필요** | 관련사업명 | 외국환평형기금 -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9110-910)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2024년에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43.5조원을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 예탁에 활용할 계획임<br>- 외평기금이 공자기금 예수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원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MMF 등을 현금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MMF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여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 |
| 35 | **정책홍보 내용 및 성과 제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홍보사업(7135-306)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정책홍보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6억 7,600만원이며, 이중 2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대내외 경제정책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주된 정책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성과지표로 삼는 기준 제시도 없어 사업내용 및 성과를 알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결산 및 예산 심사 자료 제출시 동 사업 관련 정책홍보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 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외국환평형기금 -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9201-92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연례적·반복적으로 계획 대비 10% 내외의 집행 불용 발행<br>- 국고채 금리 변동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수금 규모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br>현액(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집행률<br>(C/A)</th><th rowspan="2">집행률<br>(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20</td><td>6,213,702</td><td>6,170,552</td><td>-</td><td>6,170,522</td><td>5,402,037</td><td>87.5</td><td>87.5</td><td>768,485</td></tr>
<tr><td>2021</td><td>5,439,671</td><td>5,437,186</td><td>-</td><td>5,437,186</td><td>4,878,053</td><td>89.7</td><td>89.7</td><td>559,133</td></tr>
<tr><td>2022</td><td>5,041,024</td><td>5,041,024</td><td>-</td><td>5,041,024</td><td>4,667,782</td><td>92.6</td><td>92.6</td><td>373,242</td></tr>
<tr><td>2023</td><td>5,606,219</td><td>5,538,774</td><td>-</td><td>5,538,774</td><td>5,010,986</td><td>90.5</td><td>90.5</td><td>527,788</td></tr>
<tr><td>2024</td><td>5,918,316</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필요 예수금 계획수립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과도한<br>계획액과<br>수납액 차이<br>소명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95-9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계획액과 수납액의 과도한 차이로 예년 80%대 수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8%의 수납률을 기록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소명이 없음<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이체등</th><th>계획</th><th>징수</th><th>수납액</th><th>수납률</th><th>수납률</th></tr>
<tr><th>당초</th><th>수정(A)</th><th>증감액</th><th>현액</th><th>결정액(B)</th><th>(C)</th><th>(C/A)</th><th>(C/B)</th></tr>
<tr><td>2020</td><td>9,436,932</td><td>9,796,372</td><td>-</td><td>9,796,372</td><td>8,293,138</td><td>8,293,138</td><td>84.7</td><td>100.0</td></tr>
<tr><td>2021</td><td>10,897,448</td><td>10,802,320</td><td>-</td><td>10,802,320</td><td>9,004,870</td><td>9,004,870</td><td>83.4</td><td>100.0</td></tr>
<tr><td>2022</td><td>12,248,385</td><td>12,545,392</td><td>-</td><td>12,545,392</td><td>10,455,761</td><td>10,455,761</td><td>83.3</td><td>100.0</td></tr>
<tr><td>2023</td><td>14,484,321</td><td>14,484,321</td><td>-</td><td>14,484,321</td><td>5,905,619</td><td>5,905,619</td><td>40.8</td><td>1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과소한 수납률에 대한 소명 및 수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예산 편성 대비<br>과도한 예탁<br>축소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 예탁(8540-85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특별회계 예탁 사업은 특별회계 예탁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회계 수입부족분에 대한 적기 예탁을 통해 재정집행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2조 1,14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조 6,481억원만을 예탁하여 불용률이 22.1%에 달함<br>❍ 반면, 특별회계 예탁원금 회수는 당초 계획액 6,86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특별회계 예수금은 2조 9,297억원 중 2조 4,073억원을 예수하여 집행률이 83.4%에 달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예탁금 축소로 특별회계 재정집행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재정집행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탁금의 과도한 축소를 지양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사업 불용 과다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8712-9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br>- 2023년 예수이자상환 예산 1,973억원 중 80.9%에 해당하는 1,596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신규 예수금의 계획액과 실적액 차이(5,224억원)과 예상금리(4%)와 실제 금리(3.25%) 차이 0.75%p를 고려하면 실제 불용액 376억원보다 적은 195억원이 적절한 불용 수준으로 현재 불용은 과다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과다한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 계획액 편성을 개선하여 불용률을 낮출 것</td></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의 과도하게 낮은 집행률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대외경제협력기금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와 달리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는 계획 대비 집행률이 2.8% 수준으로, 계획 편성이 무의미한 수준<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이체등</th><th>계획</th><th>징수</th><th>수납액</th><th>수납률</th><th>수납률</th></tr>
<tr><th>당초</th><th>수정(A)</th><th>증감액</th><th>현액</th><th>결정액(B)</th><th>(C)</th><th>(C/A)</th><th>(C/B)</th></tr>
<tr><td>2020</td><td>5,728</td><td>5,728</td><td>-</td><td>5,728</td><td>4,205</td><td>4,205</td><td>73.4</td><td>100.0</td></tr>
<tr><td>2021</td><td>2,729</td><td>2,729</td><td>-</td><td>2,729</td><td>115</td><td>115</td><td>4.2</td><td>100.0</td></tr>
<tr><td>2022</td><td>6,584</td><td>6,584</td><td>-</td><td>6,584</td><td>159</td><td>159</td><td>2.4</td><td>100.0</td></tr>
<tr><td>2023</td><td>9,616</td><td>9,616</td><td>-</td><td>9,616</td><td>265</td><td>265</td><td>2.8</td><td>1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달성 시 적극적인 소명을 제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통화금융기관예치의 과도하게 낮은 집행률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대외경제협력기금 - 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통화금융기관예치 계획 대비 과도하게 낮은 집행률<br>- 2023회계연도는 예년보다 특히 집행률이 과도하게 낮은 측면. 이에 비해 비통화금융기관예치의 집행률은 222.5%임<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br>현액(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집행률<br>(C/A)</th><th rowspan="2">집행률<br>(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20</td><td>15</td><td>10</td><td>-</td><td>10</td><td>115</td><td>1,150.0</td><td>1,150.0</td><td>-</td></tr>
<tr><td>2021</td><td>6,584</td><td>6,584</td><td>-</td><td>6,584</td><td>159</td><td>2.4</td><td>2.4</td><td>-</td></tr>
<tr><td>2022</td><td>9,616</td><td>9,616</td><td>-</td><td>9,616</td><td>265</td><td>2.8</td><td>2.8</td><td>-</td></tr>
<tr><td>2023</td><td>11,830</td><td>11,830</td><td>-</td><td>11,830</td><td>191</td><td>1.6</td><td>1.6</td><td>-</td></tr>
<tr><td>2024</td><td>838</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달성시 적극적인 소명을 제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2</td><td rowspan="3">비통화금융기관<br>예치의<br>과도하게 높은<br>집행률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대외경제협력기금 -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계획 대비 과도하게 높은 집행률<br>-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집행실적은 예산 계획을 초과하고 있음<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br>현액(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집행률<br>(C/A)</th><th rowspan="2">집행률<br>(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20</td><td>-</td><td>5</td><td>-</td><td>5</td><td>34,800</td><td>696,0000</td><td>696,000.0</td><td>-</td></tr>
<tr><td>2021</td><td>38,307</td><td>38,307</td><td>-</td><td>38,307</td><td>43,850</td><td>114.5</td><td>114.5</td><td>-</td></tr>
<tr><td>2022</td><td>33,265</td><td>33,424</td><td>-</td><td>33,424</td><td>36,236</td><td>108.4</td><td>108.4</td><td>-</td></tr>
<tr><td>2023</td><td>18,251</td><td>18,251</td><td>-</td><td>18,251</td><td>40,600</td><td>222.5</td><td>222.5</td><td>-</td></tr>
<tr><td>2024</td><td>58,27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초과 시 적극적인 소명을 제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감면 발생 시 사유 및 금액 명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복권기금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5247-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납부 시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사유 및 산출근거 등 설명이 부족해보임<br>- 부과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순매출액의 0.35~0.5%를 부과·징수함<br>- 다만,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해서는 0.35% 미만의 비율로 부과할 수 있음<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br>(A)</th><th>계획현액<br>(B)</th><th>집행액<br>(C)</th><th>집행률<br>(C/A)</th><th>집행률<br>(C/B)</th><th>불용액</th></tr>
<tr><td>2020</td><td>7,802</td><td>7,802</td><td>6,162</td><td>79.0</td><td>79.0</td><td>1,640</td></tr>
<tr><td>2021</td><td>6,734</td><td>6,867</td><td>6,867</td><td>99.9</td><td>99.9</td><td>-</td></tr>
<tr><td>2022</td><td>8,991</td><td>8,991</td><td>7,790</td><td>86.6</td><td>86.6</td><td>1,201</td></tr>
<tr><td>2023</td><td>9,693</td><td>9,693</td><td>8,717</td><td>89.9</td><td>89.9</td><td>97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발생 시 사유와 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4</td><td rowspan="3">외환관리<br>예측성·계획성<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외국환평형기금 - 국공채수입(81-8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2022년에 미발행하였고, 2023년에는 계획 대비 과소 발행함<br>- 특히 2023년은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함<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이체등<br>증감액</th><th>계획<br>현액</th><th>징수<br>결정액(B)</th><th>수납액<br>(C)</th><th>수납률<br>(C/A)</th><th>수납률<br>(C/B)</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20</td><td>1,785,000</td><td>1,785,000</td><td>-</td><td>1,785,000</td><td>1,716,917</td><td>1,716,917</td><td>96.2</td><td>100.0</td></tr>
<tr><td>2021</td><td>1,825,500</td><td>1,825,500</td><td>-</td><td>1,825,500</td><td>1,558,883</td><td>1,558,883</td><td>85.4</td><td>100.0</td></tr>
<tr><td>2022</td><td>1,131,000</td><td>1,131,000</td><td>-</td><td>1,131,000</td><td>-</td><td>-</td><td>-</td><td>-</td></tr>
<tr><td>2023</td><td>3,483,000</td><td>3,483,000</td><td>-</td><td>3,483,000</td><td>630,826</td><td>630,826</td><td>18.1</td><td>100.0</td></tr>
<tr><td>2024</td><td>19,690,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외환조달에 예측성·계획성을 제고하여 적절한 채권발행계획을 예산에 반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5</td><td rowspan="3">공자기금<br>미예수 사유<br>소명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외국환평형기금 - 기금예수금(94-94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계획 대비 10%에 달하는 예수금 미예수<br>- 2022년 및 2023년 예수금 수납률이 계획 대비 미달한 사유 소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수립 필요<br>※ 최근 4년간 결산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이체등</th><th>계획</th><th>징수</th><th>수납액</th><th>수납률</th><th>수납률</th></tr>
<tr><th>당초</th><th>수정(A)</th><th>증감액</th><th>현액</th><th>결정액(B)</th><th>(C)</th><th>(C/A)</th><th>(C/B)</th></tr>
<tr><td>2020</td><td>46,308,200</td><td>46,308,200</td><td>-</td><td>46,308,200</td><td>42,271,320</td><td>42,271,320</td><td>100.0</td><td>100.0</td></tr>
<tr><td>2021</td><td>39,893,026</td><td>39,685,926</td><td>-</td><td>39,685,926</td><td>39,685,926</td><td>39,685,926</td><td>100.0</td><td>100.0</td></tr>
<tr><td>2022</td><td>32,681,460</td><td>32,681,460</td><td>-</td><td>32,681,460</td><td>27,967,051</td><td>27,967,051</td><td>85.6</td><td>100.0</td></tr>
<tr><td>2023</td><td>55,301,850</td><td>55,301,850</td><td>-</td><td>55,301,850</td><td>49,801,850</td><td>49,801,850</td><td>90.1</td><td>100.0</td></tr>
<tr><td>2024</td><td>56,647,550</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계획 대비 과도한 공자기금 미예수 발생으로 인한 사업집행 차질을 점검하여 집행 실적에 합당한 계획안을 편성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통합검색센터 신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유재산관리기금 - 대통령경호처 기타시설 신축(1910-500)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예산 24억 700만원 중 86%에 해당되는 20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음<br>-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로 반입되는 우편물 등 검색보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통합검색센터 신축사업이 지연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보안관련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통령경호처는 통합검색센터 신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7 | **투명성 확보 위해 명확한 상환액 산출 근거 제시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유재산관리기금 -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연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액을 증액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차기간, 연간 임차료 상환액 조정 결과 및 해당 기간과 상환액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 위탁개발 방식은 개발이 시작된 이상 향후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므로, 향후 임차료 지급액 변경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라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br>- 대법원 수원법원청사와 법무부 수원고등·지방검찰청의 경우 조기상환 결과 오히려 총 임차료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공청사 위탁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그 집행결과와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기간 및 변경된 연간 임차료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공용재산취득 계획액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유재산관리기금 - 공용재산취득사업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용재산취득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과다한 이용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br>- 통합 청·관사 제외 부처별 공용재산취득 집행현황의 경우 인권위원회는 2023년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부처는 전체 24개 중 8개로 나타나고 있음<br>- 통합 청·관사 포함 세부사업 단위로 공용재산취득 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62개, 30% 미만인 사업 51개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용재산취득 계획액을 편성하고, 편성된 계획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회계·기금의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프로그램 재구조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각 회계·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예탁하고 있으며, 이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탁 관련 예산을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에, 기금에 대한 예탁 관련 예산은 <기금간거래 프로그램>에 편성하고 있음<br>○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프로그램 편성은 각 회계·기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회계·기금에 대한 예탁 예산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성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범위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음<br>- 개별 회계와 기금은 특성이 다르고 유형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자기금의 예탁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될 필요<br>- 2023년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과 ‘기금간거래 프로그램’의 당초 계획액은 각각 48.9조원, 69.8조원으로 자체변경 한도는 9.8조원, 13.9조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2023년 전체 624개 프로그램의 평균 예산액이 2.3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프로그램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탁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손실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로 인해 손실을 보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의 예탁금리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예탁금리 인상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는 회계/기금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동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대상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br>- 공자기금의 손실 증가는 과거 고금리로 국고채를 조달하였으나 최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하락에 따라 고금리 조달·저금리 운용 구조가 발생하였기 때문임<br>- 최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공자기금의 손익구조 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탁금리 인상은 공자기금의 정교한 손익 전망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손실 개선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각 회계·기금의 부담증가 가능성, 사업대상인 국민에 미치는 영향, 금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시 면밀한 분석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상생소비 지원금 사업(1136-301)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위축되었던 소비 진작을 위해 2021년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10~11월 카드 사용액이 3%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총 8,054억원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종료된 사업임<br>- 기획재정부는 환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캐시백 과오지급액 1억 8,500만원을 환수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과오지급액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환수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지급액 미환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정교한 연구용역 수행계획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상생소비 지원금 사업(1136-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캐시백 지급 형태의 지원사업은 가구원의 카드 몰아쓰기, 카드사용액 산정에 있어 제외되는 품목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품목 구축효과, 미래의 소비를 카드사용액 산정시점으로 앞당기고 미래의 소비는 축소되는 기간별 소비구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역시 한계가 존재함<br>- 국회는 시정요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동 사업의 효과 분석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연구용역은 한정된 수행기간(2021.12~2022.9.)으로 인해 2021년 12월까지만의 소비자료만 분석할 수 있었고, 이에 해당 기간 이후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품목 구축효과, 기간별 소비구축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가용가능한 분석자료의 수준을 감안하여 연구기간을 설정하는 등 연구용역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3 | **자율기구 운영 시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자율기구 운영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2023년 자율기구 재정성과관리과를 6개월 운영한 이후 6개월 운영을 연장하였고, 해당 조직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2024년 재정지출관리과라는 자율기구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br>- 재정성과관리과는 재정집행점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운영이 종료된 이후 신설된 자율기구인 재정지출관리과 역시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br>○ 자율기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직을 연장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기존 조직의 운영을 종료하고 명칭·소속 등만 변경한 조직을 신설하여 사실상 자율기구의 운영을 상설화한다는 문제가 있음<br>-「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은 자율기구의 운영을 1회 연장한 이후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규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자율기구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자율기구와 명칭 및 소속 등만 변경한 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자율기구 신설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세밀한 재정집행관리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집행관리(2643-300) | 주의,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재정의 상당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재정의 신속집행은 상·하반기 경기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대부분의 재정을 상반기에 투입하고 있으며, 신속집행으로 교부·출연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br>- 또한 출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집행으로 상반기에 대부분의 출자금이 교부되는 사례 역시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출자사업을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포함함에 있어 상반기 중 출자금을 대부분 교부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주의)<br>○ 기획재정부는 상·하반기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신속집행 목표치를 설정하고 경기 변화 시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br>○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교부·출연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실적을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점검하는 등 실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br>○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신속집행 사업내역 및 월별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면밀한 국회 예결산 심의 위해 국제금융기구 성과평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금융기구 출연(3134-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제기구 출연의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납부목적 부합여부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외교부가 종합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에 실적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부재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출연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제금융기구 출연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6 |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위해 법정배분제도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복권기금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율은 과거 복권발행기관의 시장점유율 등 기득권에 기반하여 설정된 측면이 있어 그 이후의 경제·사회환경과 국민적 수요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경직성으로 인해 법정배분금액이 여유자금으로 남거나 불용되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예산 부족으로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br>-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의 경우 2023년 20억 3,600만원, 2024년 344억 300만원이 여유재원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23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000억원을 예탁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000억원을 전출하는 등 상당한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복권수익금 활용 사업의 불용액 관리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복권기금 -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복권수익금 활용 사업의 불용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액 발생연도의 다음연도까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다음연도까지 반납되어야 하나, 불용액 반납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br>- 2021회계연도 복권수익금 사업 정산 결과 6개 사업에 미반납액이 있음<br>- 지자체가 기존에 수령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부족 내지 기금운용계획 미반영에 따른 반납 지연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 활용 사업 불용액의 반납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기한 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와 교부 일시정지 등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불용액 수납 관리를 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대개도국 차관 사업의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대외경제협력기금 -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333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대개도국 차관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 대비 구속성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 대개도국 차관 단위사업의 모든 세부사업에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이 발생하였으며, 변경 비율도 27.9%로 최근 5년 중 가장 큼<br>※ 최근 5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사업비(당초계획액,A)</td><td>1,141,231</td><td>1,184,879</td><td>1,258,196</td><td>1,333,423</td><td>1,502,976</td></tr>
<tr><td>자체변경 규모(B)</td><td>147,292</td><td>113,955</td><td>315,131</td><td>183,061</td><td>418,769</td></tr>
<tr><td>비율(B/A)</td><td>12.9</td><td>9.6</td><td>25.0</td><td>13.7</td><td>27.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지역별 차관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대개도국 차관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가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9 | **민간 · 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의 별도 단위사업 분리 필요** | 관련사업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 민간 · 국제기구협력차관(3331-309)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성과지표 관리 및 사업별 예결산 심사 강화 등을 위하여 대개도국 차관 사업 중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시키는 등 프로그램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며, 경협증진자금 지원에 관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br>- 대개도국 차관 사업 중 아시아 차관 등 지역별 차관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사업의 수행 절차 등에 있어 직접 수행 여부, 구속성 비율 등에 근본적인 차이 존재<br>- 대개도국 차관 사업과 경협증진자금 지원 사업 역시 사업의 재원이나 정부 직접 수행 여부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현재 성과지표만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경협증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불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 차관 중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경협증진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개별사업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3331-309)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파악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자체변경을 통하여 증액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br>-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집행가능성이 낮은 지역별 차관 계획액을 감액하여 동 사업의 계획액을 증액하고 있어 표면적인 집행률 제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존재. 2023년의 경우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 224.3%<br>○ 또한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과다한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br>※「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br>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의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과다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시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사업진행컨설팅 사업<br>적정규모의 예산평성 및<br>철저한 집행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대외경제협력기금 - 사업진행컨설팅(3376-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사업준비지원’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며, 단년도 사업으로 완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액을 2개연도에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총 22건의 타당성조사 중 20건이 계약기간이 2023년을 경과하여 이월 발생<br>※ 사업준비지원 내역사업의 이월 계약 현황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전체 계약(건)</td><td>23</td><td>18</td><td>18</td><td>22</td></tr>
<tr><td>이월 계약(건)</td><td>23</td><td>18</td><td>17</td><td>20</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br>○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은 2022년 및 2023년 계획액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므로 집행관리 철저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액 편성 필요<br>※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의 집행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계획<br>현액(A)</th><th>집행액<br>(B)</th><th>집행률<br>(B/A)</th><th>다음연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2022</td><td>576</td><td>784</td><td>-</td><td>784</td><td>-</td><td>-</td><td>-</td><td>784</td></tr>
<tr><td>2023</td><td>2,336</td><td>1,072</td><td>-</td><td>1,072</td><td>-</td><td>-</td><td>657</td><td>415</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진행컨설팅 사업 중 사업준비지원 내역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평균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하고,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은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연도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편성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사업평가(2644-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핵심재정사업의 성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신규 도입되었는데, 연중 상시 성과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br>- 정부의 성과포털(열린재정)에 제시된 핵심재정사업군별 성과(실적) 정보를 현행화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성과평가보고서도 미공개함(2024.6.기준)<br>- 기존의 핵심사업평가 사업('22년 종료)과 비교하여 대상사업군 및 관리주기(3년→5년)만 상이할 뿐 운영체계·관리방식이 동일하고, 다부처 협업과제 발굴이 미흡함<br>- 평가 주관부처가 상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및 국무조정실(국격·외교 역량 강화)의 2개 핵심재정사업군에 대한 별도의 성과정보를 미공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사업군별 상시적인 성과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다부처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3 | **연례적으로 저조한 기타재산이자수입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으로,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액은 196억 9,000만원이었으나 결산은 118억 5,100만원을 기록하여 계획 대비 수납률은 60.2%에 불과함<br>-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시장금리 추이, 경제성장률 등 대내외 경제적 여건,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수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수익의 계획 대비 실적이 최근 4년간 평균 51.4% 수준에 불과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가 부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관리비 외에 별도의 사업지출이 없어 중장기 여유자금 운용 규모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여유자금의 운용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4 | **기금의 적정 보증운용배수 산출 필요** | 관련사업명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면허료및수수료(65-65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법정 운용배수 20배 하에서 적정 운용배수를 12.5배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보증상품의 성격상 대위변제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타 보증기금에 비해 매우 낮으며, 법정 운용한도 대비 여전히 추가 공급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한도 상향 및 기금의 적정 보증배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또한 2023년 신규 보증실행된 7개 사업 중「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개정에 따른 신용보증료율 하한 인하(0.05%p)를 적용받은 사업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1개 사업에 불과하여 보증료율 인하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의 성격, 대위변제 실적, 기본재산을 반영한 추가 보증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적정 보증운용배수를 산출하고, 신용보증료율 인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증료율 인하 대상 사업을 확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5 |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0억 8,600만원의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하였으나,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없는 이월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도 상충됨<br>- 기후대응기금은 2023년도에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급감에 따라 수입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0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별 재원 없는 이월규모는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환경부 집행)이 173억 8,500만원,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환경부 집행)사업 101억 1,300만원, 친환경설비투자(환경부 집행)사업 165억원 8,800만원임<br>※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발생한 이월에 대해서는 2023년 수입 여건을 고려하여 지출 조정하도록 시정요구(주의)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 이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안정적인 수입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감소로 기후대응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초계획액 대비 24.8%인 996억 2,200만원에 불과하고 전년도 대비 68.7%가 감소하였음<br>- 자체수입원인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급감에 따라 기금 지출사업 집행에 제약이 발생하였고,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기금전입금 증액이 이루어지는 등 운용상 비효율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수입 추계를 면밀히 하고,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방안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및 국회보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시배정사업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으로, 국회 증액사업은 행정부 동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재정당국이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br>- 2023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69개 사업 중 56개 사업(81.2%)이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br>*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증액사업 비중(사업수)<br>: 2021년 67.6%, 2022년 80.2%, 2023년 81.2%<br>- 수시배정제도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의 시행여부·시행시기 및 사업금액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심사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제약할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사업 지정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수시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8 |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수시배정사업 지정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시배정사업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정부는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재원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시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br>-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교육부), 국가시책특별교부금(교육부) 등 3개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br>-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예산규모가 세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고, 사업여건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연도 재원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 지방이전재원으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취하고자 하는 수시배정제도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규모가 세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수시배정사업 지정을 재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9 | **지출전 협의제도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시배정사업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수시배정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지출전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함<br>- 「국가재정법」은 예산에 대해서만 수시배정제도를 규정하고,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음<br>- 수시배정제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전 협의제도 운영의 필요성, 현행 법령에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금사업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수시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0</td><td rowspan="3">수시배정제도의<br>합리적 운용<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수시배정사업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331-424) 등 4개 사업</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4대 과학기술원의 4개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확정 필요 등의 사유로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후,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다가 2023년 12월 26일에 배정하였고, 이로 인해 비효율적 집행 사례 발생<br>※ 4개 과학기술원의 수시배정 예산 배정 현황
<table>
<tr><th>기관</th><th>내역사업</th><th>배정일</th></tr>
<tr><td>KAIST</td><td>혁신디지털 의과학원 구축</td><td>2023. 12. 26</td></tr>
<tr><td>GIST</td><td>차세대AI반도체 첨단공정Fab구축</td><td>2023. 12. 26</td></tr>
<tr><td>DGIST</td><td>산학연D센서 실험시설증축</td><td>2023. 12. 26</td></tr>
<tr><td>UNIST</td><td>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td><td>2023. 12. 2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지정 후 예산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1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잔액 미반납 관행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자체보조사업 총괄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3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할 의무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해 차년도 중에 보조금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b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1조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심사를 통해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br>○ 2023년까지 잔액 반납 의무가 있는 1조원 규모의 재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국고에 반납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에 비효율을 야기하고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 차원의 개별사업별 반납 독려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br>- 23개 부처 총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아 미수납처리되었으며,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5,552억원, 질병관리청 1,907억원, 환경부 664억원 등의 순으로 미수납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br>- 각 부처는 지자체의 미반납 사유인 ‘지자체 예산 미편성’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개별사업별로 반납을 독려할 계획만 밝히고 있으며,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사유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잔액 미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미반납 관행을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2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정보통신진흥기금(과기부 소관)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차입을 시행함<br>-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기금별 차입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국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 차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br>- 또한 정진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금은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민간차입금 현황에도 누락되어 있는 상황<br>- 특히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경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세출 외로 관리되고 있고,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민간차입금으로 관리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우체국 보험적립금 차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2023년 정보통신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금을 ‘기타민간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목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모태펀드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모태펀드 출자사업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모태펀드는 정부재정으로 결성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로서, 모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게 되면 자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함<br>○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상 출자금 명세서에 따르면, 모태펀드는 단순히 각각의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를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출자대상기관을 오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br>- 과기부·환경부는 출자대상기관인 ‘모태펀드’에 대해 이를 위탁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로 오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모태펀드 사업에 대해 계정별 운영현황 및 재무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4 | **기금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운용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기금 여유자금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MMF의 비중이 증가하고 혼합형 금융상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MMF(2023년 평균수익률 3.91%) 비중: (2018) 20.5% → (2023) 42.7%<br>- 혼합형(2023년 평균수익률 10.89%) 비중: (2018) 42.6% → (2023) 24.4%<br>○ 또한 일부 사업성·금융성 기금의 경우에는 연기금투자풀에 비해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기금투자풀 위탁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br>- 개별위탁의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6개의 사업성·금융성 기금에서, 직접운용의 경우 군인복지기금 등 16개 사업성·금융성 기금에서 해당 수익률이 연기금투자풀 위탁 수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금 여유자금을 위탁받은 연기금투자풀 운용 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연기금투자풀에 비해 개별위탁·직접운용 수익률이 낮은 기금의 경우 연기금투자풀 위탁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5</td><td rowspan="3">조세특례<br>예비타당성평가<br>면제 최소화<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기준이 모호하여 평가의 면제가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 실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임<br>※ 2018년 이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br>(단위: 건, %)
<table>
<tr><th>구 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예비타당성평가대상(A)</td><td>10</td><td>5</td><td>5</td><td>4</td><td>8</td><td>7</td></tr>
<tr><td>예비타당성평가 실시</td><td>1</td><td>2</td><td>3</td><td>1</td><td>1</td><td>1</td></tr>
<tr><td>예비타당성평가 면제(B)</td><td>9</td><td>3</td><td>2</td><td>3</td><td>7</td><td>6</td></tr>
<tr><td>면제사유</td><td colspan="6">「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제1호</td></tr>
<tr><td>면제 비율(B/A)</td><td>90.0</td><td>60.0</td><td>40.0</td><td>75.0</td><td>87.5</td><td>85.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를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6</td><td rowspan="3">국유재산<br>현물출자 시<br>정부 재량권<br>통제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고업무관리(2233-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국회의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현물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한계 존재<br>※ 2023회계연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br>(단위: 억원)
<table>
<tr><th rowspan="2">소관부처</th><th rowspan="2">출자대상기관</th><th colspan="4">현물출자액</th></tr>
<tr><th>계</th><th>토지</th><th>건물</th><th>유가증권</th></tr>
<tr><td colspan="2">합계</td><td>28,228</td><td>-</td><td>288</td><td>27,940</td></tr>
<tr><td rowspan="2">기재부</td><td>한국수출입은행</td><td>20,000</td><td>-</td><td>-</td><td>20,000</td></tr>
<tr><td>한국산업은행</td><td>4,350</td><td>-</td><td>-</td><td>4,350</td></tr>
<tr><td rowspan="2">국토부</td><td>인천국제공항공사</td><td>288</td><td>-</td><td>288</td><td>-</td></tr>
<tr><td>㈜ SR</td><td>3,590</td><td>-</td><td>-</td><td>3,59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7 | **보조사업 정보공시대상 확대 및 국회 권한부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2713-5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와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정보공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통합포털에 공시되지 않고 있음<br>-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은 공시대상임<br>○ 또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자별 집행명세서는 정보공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정보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통합포털을 통해 국회에서 보조사업별 집행세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8 | **펀드 출자 시 투자성과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 정부출자주식매각대(78-781) | 주의,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0만 달러를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에 출자하였고, 이 중 일부를 투자하여 확보한 탄소배출권이 전액 감액손실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손실이 발생함<br>- 우리나라는 2010~2014년 펀드 출자액 2,000만 달러 중 614만 달러를 15건의 사업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총 682,029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확보하였으며, 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 약 169만 달러를 제외한 약 1,216만 달러는 투자되지 못한 채 2022년 10월 미래탄소펀드가 청산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23년에 투자잔액이 회수되어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반납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펀드 출자 시 출자에 따른 성과 및 회수가능성 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출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것(주의)<br>○ 기획재정부는 그린워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불량 탄소배출권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9 |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의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노동전환지원금(6332-301) | 주의,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 및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21억 8,000만원 중 4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22%)되고 17억 200만원이 불용<br>-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노동전환지원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중 빈번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br>- 고용노동부는 지원계획 심사 기준에 활용할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원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는 노동전환지원금 사업내용을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주의)<br>○ 지원계획 심사 기준에 활용할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원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0 | **사업출연금 정산 원칙 수립 및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사업출연금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 또는 적립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br>-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처리하고 있으나,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통일된 근거 법률이 부재<br>- 예를 들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은 정산 없이 전액 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차년도로 이월 또는 적립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지원하는 사업출연금의 경우 집행잔액이 정산 없이 이월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해당 이월금액의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황임<br>○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원칙 중 하나로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재정이 투입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예산과정의 투명성에 부합하는 집행이라 할 것인 바,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나 별도의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사업출연금 사후 관리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1 | **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목적 부합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사업재편 탄소중립기술개발(R&D)(6431-57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기업이 재생에너지·친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로 사업재편을 하거나 기존 공정을 저탄소공정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함<br>- 전기차 분야 등 「기업활력법」에 따른 탄소중립과 관련이 적은 분야에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82 | **보조금 적정 규모 교부 등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도시생태축 복원(6133-4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환경부는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 교부함.<br>- 2023년 교부현액 368억 1,800만원 중 189억 8,4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172억 3,4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실집행률은 51.6%에 불과<br>-「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3 |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당성재조사 시 조사기간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건설사업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었으나 물가상승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함<br>- 사업중단으로 금융비용, 지체보상금 등으로 사업비용이 추가로 증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4 |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국고보조금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중 미반환된 금액은 2019년~2023년 5년간 1,300억원을 초과함<br>- 거짓신청,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부과된 제재부과금은 2019년 이후 5년간 총 납부율이 22.3%에 그치면서 290억원 이상 미납 상황이나,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85 | **외환건전성 부담금 관련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예산안의 정합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예산안의 정합성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예산안 모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법정서류임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른 징수계획액과 2023년도 예산안의 수입액이 상이하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시 국회에 제출되는 법정서류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6 | **일시차입의 기조적 활용 통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2022년 34.2조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나, 2023년에는 일시차입금 규모가 117.6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자비용도 274억원에서 1,506억원으로 급증<b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1월 「2023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을 의결하면서 3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023년 연간 총 64차례 차입을 하는 등 차입 횟수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br>-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기조적인 일시차입은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일시차입 빈도와 일시차입금 누계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7 |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법정 규모 수준으로 전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정전출금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특정 회계에 관하여 세입의 일정규모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은,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한 취지<br>-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하여 ①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②개별소비세 승용차분, ③관세 수입차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제8조제1항)<b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 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제82조제1항, 제2항)<br>○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교특회계와 균특회계 전출금을 법정규모 이하로 과소 전출하였음<br>-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교특회계의 경우 세입실적 기준 8조 8,954억원이 전출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전출된 금액은 7조 9,054억원으로 법정기준에 약 1조원 미달함<br>-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세입실적 기준 2,169억원이 전출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전출된 금액은 1,858억원으로 법정기준에 584억원 미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법정 규모 수준으로 일반회계 법정전출금을 전출하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8 | **국회 공통요구자료 허위 및 부실 작성** | 관련사업명 | 국회 공통요구자료 허위 및 부실 작성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에서 보면 과거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특이사항에 이를 누락하는 등 부실 및 허위로 작성된 사업이 다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회 결산 공통요구자료 제출 시 허위사실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9 |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사업 불용 과다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8712-9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br>- 2023년 예수이자상환 예산 1,973억원 중 80.9%에 해당하는 1,596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신규 예수금의 계획액과 실적액 차이(5,224억원)과 예상금리(4%)와 실제 금리(3.25%) 차이 0.75%p를 고려하면 실제 불용액 376억원보다 적은 195억원이 적절한 불용 수준으로 현재 불용은 과다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다한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 계획액 편성을 개선하여 불용률을 낮출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0 | **국유재산기금 예산 편성 시 적정한 공자기금 예탁규모 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유재산관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11-841)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쟁, 자연재해 등 급박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유사한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연례적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 수립 시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히 평가하여 계획 수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br>-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 경우는 1) 전쟁·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br>○ 또한, 2017년 결산심사에서 국회는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공자기금 예탁금 증액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저하되었음<br>- 2023년 여유자금 운용수익율은 7.56%이나 공자기금 예탁으로 인한 수익률은 3.48%로 1.600억원에 대해서 4.1%에 해당하는 기대이익이 상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자기금 예탁규모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1 |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개편 시 종합적 고려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로 인해 손실을 보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의 예탁금리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예탁금리 인상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는 회계/기금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동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대상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br>- 공자기금의 손실 증가는 과거 고금리로 국고채를 조달하였으나 최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하락에 따라 고금리 조달/ 저금리 운용 구조가 발생하였기 때문임<br>- 최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공자기금의 손익구조 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탁금리 인상은 공자기금의 정교한 손익 전망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향후 운용기준 개편이 있을 시 각 회계 · 기금의 부담 증가 가능성, 사업대상인 국민에 미치는 영향, 금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2 | **정부 재량범위 넘지 않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9.6조원을 추가 예탁하고 일반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 8.6조원의 예수이자를 미상환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세수를 보전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 변경은 자체적인 기금운용계획 한도를 초과한 18.2조원(37.9%)에 해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거치지 않은 재정운용이 정부 재량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3 | **외평기금 예탁금 조기회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외국환평형기금에 예탁한 공자기금 예탁기금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손실을 가져옴<br>○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조기상환 받은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조기 상환 받은 금리(3.569~3.712%)보다 더욱 높은 금리(3.813%)로 12월에 다시 예탁한 비합리성이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을 정부 내 협의 없이 조기상환 받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기상환 받은 자금을 동일 기금에 곧바로 재예탁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4</td><td rowspan="3">세수결손<br>발생마다<br>불용규모<br>증가하지<br>않도록<br>제도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 - 세수결손 대응 관련</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역대 최대 규모 세수결손을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으로 보전함<br>-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만 45.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br>-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3년, 2014년 평균 불용액 17.8조원보다 약 28조원 많음<br><2010년 이후 결산 기준 불용액 및 불용률><br>(단위: 조원, %)<br>
<table>
<tr><th></th><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불용액</td><td>5.5</td><td>5.8</td><td>5.7</td><td>18.1</td><td>17.5</td><td>10.8</td><td>11</td><td>7.1</td><td>8.6</td><td>7.9</td><td>6.6</td><td>8.4</td><td>12.9</td><td>45.7</td></tr>
<tr><td>불용율</td><td>2.1</td><td>2.2</td><td>2.0</td><td>5.8</td><td>5.5</td><td>3.2</td><td>3.2</td><td>2.0</td><td>2.3</td><td>1.9</td><td>1.4</td><td>1.6</td><td>2.2</td><td>8.5</td></tr>
</table>
(출처 : 각 연도별 결산서, 일반회계+특별회계)<br>- 2023년 주요 사업 분야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일자리·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불용률은 22.7%, ‘R&D’ 분야 19.1%, ‘재난안전’ 분야 11.6% 등<br><'23년 결산 기준 주요 사업분야 불용 현황><br>(단위: 백만원, %)<br>
<table>
<tr><th>구분</th><th>불용금액</th><th>불용률</th></tr>
<tr><td>R&D사업</td><td>2,146</td><td>19.1</td></tr>
<tr><td>유아 및 초중등교육</td><td>10,397,226</td><td>14.0</td></tr>
<tr><td>일자리, 서민, 취약계층 지원</td><td>586,141</td><td>22.7</td></tr>
<tr><td>재난 안전</td><td>5,757</td><td>11.6</td></tr>
<tr><td>과거사 정리</td><td>239</td><td>16.2</td></tr>
<tr><td>공공의료확충</td><td>432</td><td>35.2</td></tr>
</table>
(출처 : 기획재정부 디브레인)</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마다 불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으로 인한 내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5 | **저출생 대응 사업 예산편성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 증액을 위한 중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저출산 대응 사업 관련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br>- 저출생 대응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나 정책 대상·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분야, 보육·돌봄 분야 등 정책수요자의 수요에 맞고 저출생 대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br>-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재정소요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논의 부족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정책수요자의 수요가 높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저출생 대응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6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시 지역별 형평성 고려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소멸 및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7 |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법인 파산이 2019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4년 1분기 기업대출액이 2022년 동기 대비 16% 증가함<br>- 차입금 이자상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성장 안정을 위한 사업의 집행률은 높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함<br>○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매출이익이 악화되고 있으며, R&D 예산 삭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재정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8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관련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소상공인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도 1조원을 넘어섬.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도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불안에 따라 자영업자 소득도 지속해서 줄고 있음<br>○ 지난 7월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금융 중심 지원대책으로 채무 부실만 키운다는 우려가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임시방편적 금융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9 | **기획재정부의 성인지사업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타 - 성인지 사업 관련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성인지 사업은 3개뿐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많음<br>- 편성현황: 협동조합활성화사업(업종 특화 교육)(3억 1,300만원),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17억 5,900만원), 지식협력단지운영(8억 6,300만원)<br>○ 특히, 성인지예산은 특정 성별을 위한 예산이 아님에도 자칫하면 젠더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가 일부 있음<br>- 예를 들어,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목표가 지식협력단지에 대한 “여성” 교육생 증가로 기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논의하여 성인지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0 | **지특회계 법정전출금 일방적 불용 근절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8010-802)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출하여야 함에도 371억 5,600만원을 지특회계로 전출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371억 5,600만원을 전출하지 않은 금액을 사후 정산되도록 하는 등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1 | **지특회계 임의 교부금 미전출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8010-803)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사업은 연도별 자체수입 및 특별회계 전망치를 제외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의 세출 대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임<br>- 임의 교부금인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금 3,837억원이 불용(미전출)되었는바, 비수도권 및 접경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차질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3,837억원이 전출되지 않아 비수도권 및 접경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2 | **체계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타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실적으로 집계한 내역 중에는 사업의 종료, 이관 등으로 인해 규모가 자연 감소한 경우, 사업규모의 변동 없이 지출이 이연된 경우 등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br>- 감사원은 2023년 5월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2018·2019년도 본예산, 2020년 제2·3회 추경, 2022년 제2회 추경의 지출 구조조정 실적 중 5.3조원은 사업규모가 자연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6.6조원은 사업규모의 변동 없이 향후 지출이 예상되어 있어 집행이 연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함<br>○ 약 5개월에 불과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8천개가 넘는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엄밀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위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br>- 지출 구조조정 특성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고, 단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법령 개정 등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므로 재량지출 위주로 제한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투명하게 하고, 엄밀한 효과성 분석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적 측면에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는 방안과 사업주체인 부처가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3 | **예산 및 재정운용 관련 적극적인 정보 공개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타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전체 부처의 예산 요구액 합계, 분야별 요구현황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6월 공개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음<br>-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예산의 원칙인 예산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공개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과정의 투명성, 공개에 따른 효과, 과거 공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4 |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검토** | 관련사업명 | 기타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운용· 관리하는 자금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정배분되는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 ·운영되고 있음<br>○ 녹색자금은 그 수입 및 지출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br>- ①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이라는 안정적 수입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② 200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 당시 국가재정 통제를 위해 기금화할 계획이었다는 점, ③ 현재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은 대부분 타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점, ④ 녹색자금보다 운용규모가 더 적은 기금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br>당초 계획대로 녹색자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5 | **수은의 저조한 중소기업 지원 · 대출채권 비중 개선 필요 및 수출팩도링제도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타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수출입은행의 2023년(45.7%)에 비해 2024년 6월말(44.7%) 중소 · 중견기업 지원비중이 1%p 감소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 대출채권 비중도 2019년(33.1%)에 비해 2023년(29.4%) 2.7%p 감소<br>○ 수출팩토링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이 지난 5년간 총액 13조 4,501억원 대비 0.7%에 불과한 1,000억원 수준<br>- 반면 중견기업은 8조 4,431억원, 대기업은 4조 9,070억원 규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및 대출채권 비중을 제고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비중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6 |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필요** | 관련사업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 사업심사평가연구(3376-632)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은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편성되었는데, 협조융자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사업심사평가연구(ODA)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br>- 동 사업은 대개도국 차관사업 관련 기술전문가 고용 및 외부 용역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원조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시킬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7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건비 지급 비목 변경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유재산관리기금 - 인건비(3579-101)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건비를 보수(110-01) 비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보수(110-01)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적절함<br>- 법령으로 공무원에 대해 정해진 봉급과 각종 수당만 보수(110-01)로 지급이 가능함<br>-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8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구체적인 작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2023.8.)을 살펴보면,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의 경우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는 명확한 재원투입계획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국회에 작성·보고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9 |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회계제도운영(2631-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인데, 최근 10년간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특정 회계법인과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수의계약임.(11회 중 9회가 수의계약)<br>○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특혜논란을 방지하고 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조기에 공고하여 공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회계법인이 공고를 인지하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0 | **조세지출 결산서 도입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국세수입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연도)의 조세지출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가 차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에야 국회에 제출되어, 정부 재정 운용의 전체적인 성과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br>- 정부 재정 운용의 전체적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8월 결산 심의시기가 아닌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시기에 국회에 제출되어 조세지출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 및 정책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한 조세지출결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1 |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부실 작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의 변경사유를 대부분 “기금 사업 효율화”로 부실하게 작성하여 국회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의 변경사유를 충실히 작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2 |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6231-600)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보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완료 예정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늦춰지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br>-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행률과 간접보조사업자인 민간협력기관의 최종 집행률이 2023년 계획현액 대비 각각 32.8%와 3.9%로 저조한 상황<br>*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앵커시설인 복합허브센터 건축을 위하여 선정된 조성지에 설계비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적인 사업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인 창업진흥원과 각 조성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3</td><td rowspan="3">할당대상업체<br>탄소중립설비<br>지원 사업의<br>중소기업 참여<br>확대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6131-6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투자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br>-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62억 5,000만원, 전액 불용)과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100억원, 집행률 16%)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기업유형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자금에 여유가 있는 중견기업의 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br>[ 2021~2023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민간 지원 현황 ]<br>(단위: 개, 천원)
<table>
<tr><th>구 분</th><th>신청 사업장수</th><th>선정 사업장수</th><th>지원액</th></tr>
<tr><td>중소기업</td><td>80</td><td>63</td><td>30,839,433</td></tr>
<tr><td>중견기업</td><td>253</td><td>197</td><td>163,361,791</td></tr>
<tr><td>대기업(유상할당)</td><td>6</td><td>4</td><td>1,458,540</td></tr>
</table>
주) 대기업의 경우 선정 사업 모두가 LED 사업에 해당</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사전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4 | **지속가능 캠퍼스 사업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6331-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중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지원 사업’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대학 운영, 친환경 교정 조성 등 그린캠퍼스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대학당 연간 1억 2,000만원, 3년간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대학을 사업 범위에 포함해야 함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4년부터 사업이 중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12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캠퍼스 사업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 | | |

## 2. 국세청(13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재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특정업무경비(250-03목)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은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특정업무경비집행계획을 개정하면서 15일 미만 근무 직원에게는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시정요구의 당초 취지를 왜곡하여 유리하게 해석·적용함<br>- 2022회계연도 당시 특정업무경비집행계획에서는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직원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음<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정업무경비 지급액과 실제 근무일수와의 비례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이 근무일수 등 실소요를 반영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주의)”을 채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도 특정업무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집행계획을 재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소송수행비용(2133-301)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은 법령에 승소장려금의 지급 근거 및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세청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어긋난 집행을 하고 있음<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다만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 |
| 3 | **공사비 낙찰차액 임의 사용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0) | 주의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은 2023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약 3,400만원을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공사에 사용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설비 예산 중 공사비·설계비·감리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사비 낙찰차액의 임의 집행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이·전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지원(1131-300), 조사활동지원(2131-302), 압류재산공매(2232-301), 개인납세국 기본경비(7111-205),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0),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 소관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집행된 포상금과 관련하여 연례적인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br>-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포상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음<br>-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의 경우 2021년 13억 7,000만원, 2022년 25억 6,300만원, 2023년 22억 1,6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br>-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최근 7년간 전액 불용되는 등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포상금과 관련한 현행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각 세부사업별 포상금 규모를 적정히 조정하는 등 포상금 예산의 연례적인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1131-300)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제도를 홍보·안내하며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53억 7,200만원 중 51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년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포상금 지급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향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포상금 소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br>-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제도운영에 따른 세수 확대,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행위의 감소 등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미발급 및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비주거용 부동산 자발적 감정평가 확대 방안 강구**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1133-303)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br>-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 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임<br>- 납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고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고, 신고액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결과보다 낮더라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세금포인트 및<br>모범납세자<br>제도 폐지 또는<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2004년부터 도입(법인은 2014년)된 세금포인트는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례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데 사용하는 제도로서, 개인에 대한 세금포인트는 사용률이 0.59%, 법인은 2.07%로 이용실적이 저조함<br><br>※ 개인 및 법인 세금포인트 부여 및 이용실적 누계<br><br>(단위: 백만점,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 rowspan="3">개인</td><td>부여 포인트(A)</td><td>5,900</td><td>6,663</td><td>7,431</td><td>8,768</td><td>9,851</td></tr>
<tr><td>사용 포인트(B)</td><td>31</td><td>36</td><td>42</td><td>49</td><td>58</td></tr>
<tr><td>사용률(B/A)</td><td>0.53</td><td>0.54</td><td>0.57</td><td>0.55</td><td>0.59</td></tr>
<tr><td rowspan="3">법인</td><td>부여 포인트(A)</td><td>558</td><td>626</td><td>694</td><td>772</td><td>920</td></tr>
<tr><td>사용 포인트(B)</td><td>10</td><td>13</td><td>14</td><td>17</td><td>19</td></tr>
<tr><td>사용률(B/A)</td><td>1.79</td><td>2.08</td><td>2.02</td><td>2.20</td><td>2.07</td></tr>
</table>
❍ 모범납세자 제도는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단이 부족하고, 성실히 납세하는 근로소득자의 선발비중이 낮으며, 모범납세자 선정 후 국세 체납·조세범 처벌 등으로 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및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해당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납세자<br>세금신고 지원<br>사업의<br>개선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담·안내하는 사업임<br>- 2024년부터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 10곳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위탁인력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상황임<br>- 2024년 기준 서울청은 79%(28개 중 22개), 중부청은 60%(25개 중 15개), 인천청은 87%(15개 중 13개)에 해당하는 세무서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신규 배치지역인 대전청은 12%(17개 중 2개), 광주청은 13%(15개 중 2개), 대구청은 14%(14개 중 2개), 부산청은 21%(19개 중 4개)에 해당하는 세무서에만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br>※ 2024년 기준 지역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현황
<table>
<tr><th>구분</th><th>서울청</th><th>중부청</th><th>인천청</th><th>대전청</th><th>광주청</th><th>대구청</th><th>부산청</th></tr>
<tr><td>관할 세무서 수(A)</td><td>28개</td><td>25개</td><td>15개</td><td>17개</td><td>15개</td><td>14개</td><td>19개</td></tr>
<tr><td>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세무서 수(B)</td><td>22개</td><td>15개</td><td>13개</td><td>2개</td><td>2개</td><td>2개</td><td>4개</td></tr>
<tr><td>세금신고지원 세무서 비율 (B/A)</td><td>79%</td><td>60%</td><td>87%</td><td>12%</td><td>13%</td><td>14%</td><td>2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수도권에 집중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위탁 인력을 지역별 소요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면밀한 청사 이전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임시청사 이전비용(7138-303)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중부산, 광주, 금천 청사의 경우 구청사 재건축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임시청사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됨<br>- 청사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재료,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으로 인해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등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착공 예상 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1년 정도 지연되었음<br>- 세 임시청사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는 월 2억 8,900만원으로 청사 재건축 사업이 한달 지연될 때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청사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사 이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해외금융계좌<br>신고포상금<br>예산 집행률<br>제고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라 함) 예산이 연례적으로 전액 불용<br><br>※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br><br>[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br>(단위: 건,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신고건수</th><th>지급건수</th><th>예산액</th><th>지급액</th></tr>
<tr><td>2018</td><td>54</td><td>1</td><td>43</td><td>27</td></tr>
<tr><td>2019</td><td>53</td><td>-</td><td>29</td><td>-</td></tr>
<tr><td>2020</td><td>64</td><td>-</td><td>29</td><td>-</td></tr>
<tr><td>2021</td><td>75</td><td>-</td><td>29</td><td>-</td></tr>
<tr><td>2022</td><td>39</td><td>-</td><td>29</td><td>-</td></tr>
<tr><td>2023</td><td>25</td><td>-</td><td>29</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홍보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매년 TV, 라디오, SNS,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는데, 장려금 홍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홍보예산의 30% 이상이 인지도가 낮은 매체(TV, 라디오)에 할당된 문제가 있음.<br>-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장려세제 홍보 경험 여부에 대하여 ‘있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34.4%에 불과<br>- ’22년 귀속 16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안내를 받았으나,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br>- 장려세제 홍보 매체와 관련하여 국세청 SNS 및 유튜브를 통한 인식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TV·라디오를 통한 인식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TV·라디오를 이용한 홍보비용이 30% 이상 차지<br>[2023회계연도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홍보비 집행현황]
<table>
<tr><th>홍보매체</th><th>집행액</th></tr>
<tr><td>TV</td><td>417,400천원</td></tr>
<tr><td>라디오</td><td>71,257천원</td></tr>
<tr><td>페이스북</td><td>107,000천원</td></tr>
<tr><td>트위터</td><td>12,000천원</td></tr>
<tr><td>유튜브</td><td>166,600천원</td></tr>
<tr><td>다중이용시설(지하철, 버스 등)</td><td>351,360천원</td></tr>
<tr><td>배너</td><td>57,500천원</td></tr>
<tr><td>기타(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등)</td><td>256,660천원</td></tr>
<tr><td>합 계</td><td>1,439,777천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홍보 매체별 비중 조정, 손택스 활용과 같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예산 편성시<br>모바일 안내문<br>발송 비중 확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고지서 등 발송(22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형태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우편물 및 모바일 안내문 예산을 편성하였음<br>- 최근 3년간 일반우편 발송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모바일 발송 건수는 증가한 반면, 2023년도 일반우편 발송 예산은 2022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모바일 발송 예산은 절반 이하로 감소함<br>[일반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 및 예산 편성 현황]<br>(단위: 천건,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 rowspan="2">일반우편</td><td>발송건수</td><td>17,199천건</td><td>17,258천건</td><td>16,055천건</td></tr>
<tr><td>예산</td><td>3,069백만원</td><td>2,770백만원</td><td>7,079백만원</td></tr>
<tr><td rowspan="2">모바일</td><td>발송건수</td><td>24,273천건</td><td>30,247천건</td><td>44,944천건</td></tr>
<tr><td>예산</td><td>5,070백만원</td><td>5,000백만원</td><td>2,370백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예산 편성시 일반우편물과 모바일 발송에 대한 집행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세부 내역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납세고지서 발송비용 관서운영경비 지출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납세고지서 등 발송(2233-300) | 주의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일반적 지출절차인 재무관 및 지출관 검토 이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과금으로 보아 해당 절차 없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br>- 「국고금 관리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이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관서운영경비는 출납공무원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br>- 관서운영경비 대상 공과금은 전기요금과 같이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요금으로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절차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비를 의미하는바,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은 재무관 및 지출관이 계약상대방의 과업 수행 여부, 적정 비용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출했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향후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이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3. 관세청(1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반복적인 예산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밀수단속(1300-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한 반면 예산 편성은 감소하여 예산의 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br>- 2023년은 인건비 사업에서 밀수단속사업으로 4억 3,200만원의 예산의 이용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도 편성된 예산의 87.8%가 상반기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이용이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예산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공사비<br>낙찰차액의 임의<br>사용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사시설관리(7132-44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관세청은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1억 4,700만원을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사용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br>※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공사비 낙찰차액을 사용한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세부사업</th><th>계약건명</th><th>낙찰차액</th><th>낙찰차액 사용용도</th></tr>
<tr><td rowspan="3">청사시설 관리</td><td>2023년도 노후관사 리모델링 공사</td><td>96</td><td rowspan="3">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사용</td></tr>
<tr><td>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화물용승강기 교체(제조구매 및 설치)</td><td>42</td></tr>
<tr><td>노후관사 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 (싱크대 및 신발장) 구매</td><td>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공사비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전용 등 적법한<br>절차를 거치지<br>않은 예산 집행<br>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1441-5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관세청은 K-Customs Week 행사를 용역업체를 통해 진행*하였으므로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일반수용비・임차료・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또는 전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 지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br><br>* 관세청은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와 “K-Customs Week 행사기획 및 준비대행 용역” 계약(계약금액 8억 7,900만원, 조달수수료 699만원 별도)을 체결<br><br>※ 2023회계연도 K-Customs Week 개최 사업 결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th><th rowspan="2">예산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K-Customs Week 개최</td><td>900</td><td>900</td><td>-</td><td>900</td><td>886</td><td>-</td><td>14</td></tr>
<tr><td>일반수용비</td><td>178</td><td>178</td><td>-</td><td>178</td><td>164</td><td>-</td><td>14</td></tr>
<tr><td>임차료</td><td>136</td><td>136</td><td>-</td><td>136</td><td>136</td><td>-</td><td>-</td></tr>
<tr><td>일반용역비</td><td>162</td><td>162</td><td>-</td><td>162</td><td>162</td><td>-</td><td>-</td></tr>
<tr><td>국외업무여비</td><td>424</td><td>424</td><td>-</td><td>424</td><td>424</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예산의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관세청 드론 활용도 제고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1443-301) | 주의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이 보유한 드론 중 상당 수는 고장 및 하자에 따른 수리, 추락 전손 등의 사유로 인해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용을 통한 적발실적이 전무함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br>- 부산세관 소속 드론의 경우, 도입 이후 전복·추락사고가 잦아 2022년 7월 조달품질원에 하자신고를 하였는데, 새로운 드론의 인도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져 드론의 운용실적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전무함<br>- 인천세관 소관 드론의 경우, 2023년 중 드론 고장으로 인해 7월·8월·11월에는 운용실적이 없고, 1월과 12월은 드론의 고장으로 인해 운용시간이 저조함<br>- 또한, 인천세관 드론 2대가 추락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계약이 변경되지 않아 4대에 대한 비용이 2대의 유지보수에 과다하게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드론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드론을 재도입할 경우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용 중단 및 유지보수비 과다 집행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홍보 전략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관세탈루심사(1231-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탈루심사’ 사업은 원산지 표시위반을 단속하고 탈루심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20억 9,800만원 중 20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관세청은 KTX와 서울지하철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광고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광고는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수입업자·생산자 등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KTX와 서울지하철의 주된 이용자인 일반소비자에게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일 수 있음<br>- 관세청은 11월 한달간 KTX와 서울지하철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광고를 실시하여 광고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이용객 대다수가 일반 소비자이므로, 이러한 광고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위반 광고의 홍보 대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탈루심사 교육 연말 집중 실시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관세탈루심사(1231-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은 세관별로 직원의 탈루심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교육 대상자들의 인사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교육의 실효성이 낮음<br>- 28번의 교육 중 12번의 교육을 연말에 실시하였으며, 각 세관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주제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br>- 대다수의 탈루심사 인력인 6급 이하 직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이수 인원이 탈루심사 업무외의 업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탈루심사 교육의 연말 집중 실시를 지양하고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특송화물 통관<br>관리 역량<br>확충을 통한<br>대응력 확보<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특송화물 통관지원(11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관세청은 특송화물에 대해 X-ray를 이용한 전문판독요원의 판독과 현품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관물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충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br><br>❍ 특송물품 적발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20만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같은 기간 통관건수의 증가율 대비 통관 인력 증가율이 낮아 통관 인력 1인당 통관물품 처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위해물품 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br><br>-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세청의 통관인력은 약 71% 증가하고 통관건수는 206% 증가하여 인력 1인당 통관물품 처리건수는 78% 증가하였음<br><br>※ 특송통관 건수 및 전담인력 현황<br><br>(단위: 천건, 명)
<table>
<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통관건수</td><td>42,988</td><td>63,575</td><td>88,380</td><td>96,120</td><td>131,443</td></tr>
<tr><td>특송 전담인력(현원)</td><td>184</td><td>275</td><td>288</td><td>304</td><td>315</td></tr>
<tr><td>1인당 처리물량</td><td>233.6</td><td>231.2</td><td>306.9</td><td>316.2</td><td>417.3</td></tr>
</table>
❍ 특송물품에는 마약 등 위해물품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특송물품 증가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통관지연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 면밀한 예산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1231-301) | 주의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중앙관세분석소는 보유장비 운영을 위한 실험재료 구매 시 업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협의를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집행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를 때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나「국가계약법」과「국고금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담보하는 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을 일괄 생략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br>○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용재료 구매시 모든 물품의 납품 완료 시점에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2022년 구매요청한 재료 건에 대해서 2023년 지급이 완료되는 등 지출원인행위와 대금지급행위가 속한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분석용 재료 구매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구입을 결정한 분석용 재료의 구입비가 이월 절차 없이 차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 징수실적의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가산금(58-581)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함<br>- 과태료의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32.9%,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임<br>- 과징금의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51.3%, 2021년 45.8%, 2022년 51.1%, 2023년 54.6%임<br>- 가산금의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3~0.4% 수준에 그치고 있음<br>○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은 법령상 의무 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수납실적이 저조할 경우 그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미수납 과태료·과징금·가산금에 대한 납부독려, 재산조사 강화,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압수물품 보관 창고 관리 위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밀수단속(1300-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은 세관소유의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용역만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위탁하였으나 위탁보관 보관료에 대한 예산을 관리용역비가 아닌 임차료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br>- 각 세관에서 압수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소유가 아닌 세관의 소유이므로 압수물품에 대한 위탁 보관은 보관 자체를 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닌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함<br>○ 관세청은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용역 민간위탁을 공개경쟁입찰 계약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는데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초기 수의계약 이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세관 소유의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위탁 예산을 임차료가 아닌 관리용역비로 편성·집행하고, 보관창고 관리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 | | |

## 4. 조달청(15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희소금속의 구체적인 이관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비축물자사업수입(45-456)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희소금속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미비한 상황임<br>- 2024년 오산화바나듐을 이관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희소금속을 보유한 상태에 있고,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희소금속의 이관 가격 및 가격 정산 등을 포함한 이관 세부조건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br>-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희소금속 이관을 위해 89억 6,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점과 구매 시점의 국제가격 차이로 37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희소금속 매입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하여 마련한 이관 세부기준 등을 바탕으로 희소금속 이관 완료시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이관 계획을 수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전년도세계<br>잉여금의<br>과소편성 시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조달특별회계 -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조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조달특별회계의 연례적인 과소추계로 인해 전년도세계잉여금 초과수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음<br>※ 2021~2023년 비축물자사업수입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예산(A)</td><td>4,200</td><td>2,032</td><td>7,324</td></tr>
<tr><td>결산(B)</td><td>39,994</td><td>17,526</td><td>14,573</td></tr>
<tr><td>오차(B-A)</td><td>35,794</td><td>15,494</td><td>7,249</td></tr>
</table>
자료: 조달청<br>❍ 세입 과소추계가 나타나는 주된 항목은 비출물자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비축물자사업수익과 회전자금 예치이자수익 등으로 발생하는 기타영업외잡수익임<br>- 비축물자사업수익의 경우 최근 3년 실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하고 있어 최신 대내외 여건과의 괴리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br>- 회전자금 여유자금 예치이자수익의 경우 최근 5년 실적 평균치(평균예치액, 평균수익률)를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하였으나, 금리상승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률은 3.71%, 실제 수입은 820억원이 징수되어 예산 대비 6배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함<br>※ 2023년 기준 예상 수익률 1.31%, 예상 수입 133억원</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조달청은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전출이나 비축자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한국조달연구원 평가관리업무 외부기관 위탁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1235-338)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 편성된 R&D 과제비 16억 5,000만원의 4%에 해당하는 6,600만원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 중 4,000만원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재교부하고 과제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였음<br>※ 조달청은 2023년 3월 3일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재)한국조달연구원을 조달청 소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음<br>○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기관 지정 및 기획평가관리비 지급비율을 섣불리 확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br>- 2024년도 한국조달연구원에 지급되는 기획평가관리비는 1억 1,6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액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R&D 전문기관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 규모 증액을 추진하기에 앞서, 한국조달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서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역량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자체전용을 통한 신규 용역 추진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1131-505)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불용이 예상된 일반 수용비 2,000만원과 사무실 임차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자체전용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등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함<br>-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의 예산현액이 전액 순감되었음<br>○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이후의 운영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논의는 최초 추진할 당시부터 충분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확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br>※ 조달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임차료와 일반용역비 간 세목조정이 반복되고 있어 잦은 세목조정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자체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 시점부터 순감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연례적 세목조정<br>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조달특별회계 -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조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조달청은 매년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보수(110-01목)의 불용 예상액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전용하여 배상금 지급 소요에 충당하고 있음<br>※ 2021~2023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이전용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 colspan="2">배상금 예산액</td><td>40</td><td>40</td><td>50</td></tr>
<tr><td rowspan="3">배상금</td><td>합계</td><td>130</td><td>353</td><td>101</td></tr>
<tr><td>소송비용액</td><td>96</td><td>63</td><td>34</td></tr>
<tr><td>손해배상</td><td>34</td><td>290</td><td>67</td></tr>
<tr><td colspan="2">기관운영 인건비로부터 이전용한 금액</td><td>90</td><td>313</td><td>51</td></tr>
</table>
자료: 조달청</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조달청은 매년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보수(110-01목)의 불용 예상액을 배상금 지급 소요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연례적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세목조정 전 지출행위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2023년 12월 14일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중 300만원을 '군산비축창고 신축 착공식 비용 부족분 충당' 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증)하고, 2023년 12월 15일 착공식 행사 용역 업체에 지급하였으나, 실제 착공식이 개최된 날짜는 12월 6일이었음<br>○ 예산상 자금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한 집행에 해당<br>- 「국고금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내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를 세목조정하기 전에 지출결의 없이 착공식 행사를 진행하여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기존 계약 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조달정보화(정보화)(1131-501)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2021년 12월 말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구축 완료를 전제로, 2022년 예산부터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위탁 비용 연간 소요 2억 6,900만원을, 최초 1년 무상유지보수 이후 2023년 예산부터는 유지관리비용 연간 소요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구축이 완료된 시점은 2022년 5월이었음<br>- 이에 따라 구축 완료 이후 무상유지보수 기간(1년)이 2023년 5월에 종료되었으므로 2023년 예산에 반영된 1년치 유지보수비 2억 5,100만원 중 일부를 불용하였어야 함<br>○ 그러나 조달청은 기존에 별도로 수행 중이던 다른 장기계속 계약(나라장터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추가로 위탁하고, 유지보수비 예산을 전액 지급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음<br>- 디지털서비스전용몰 구축업체의 무상 유지보수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추가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하여 기존의 나라장터시스템 위탁운영 업체 A에 추가 기능개선 및 보수비로 1년치 유지보수비를 연내 지급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별건의 계약을 통해 경쟁입찰로 조달하여야 할 유지보수 용역을 기존 나라장터 위탁용역 수행업체에 수정계약의 형태로 위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조달청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자마자 구축업체가 무상보수할 수 없는 추가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 부실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및 취업한 수료자의 지속근무 여부 점검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온라인 해외조달 진출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간 2억 1,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 과정의 수강생은 60명으로 그 중 16명만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 유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사업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우수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취업한 수료자의 지속근무 여부 점검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내역사업간 구분을 준수하지 않은 용역업무 재위탁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지원 운영’ 사업의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 및 규격검토 용역 업무를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에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용역사업자는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 및 규격검토 용역 업무를 외부기관에 하도급 계약방식으로 외주위탁함<br>○ 내역사업간 경계를 준수하지 않고 별도 경쟁입찰 없이 다른 내역사업에 포함하여 외부기관에 재위탁한 것은 공정한 조달 문화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br>- 또한 2024년도 예산부터는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규격검토 업무 직접수행방침에 따라 해당 일반용역비가 순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용역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예산집행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내역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내역사업의 일반용역계약 내 하도급 계약을 통해 외부기관에 업무위탁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우수조달물품 지정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우수제품 중 제3자 단가계약을 요청한 제품에 대해 원가자료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br>-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서 수의계약,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혜택과 판로지원 혜택 등이 주어짐<br>○ 2018년 10월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인조잔디에서 원가부풀리기 방식의 비리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우수제품 납품비리를 사전에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br>- 현행 우수제품 원가자료 적정성 검토 및 우수제품 적용기술 유지여부 조사, 우수제품 연장 신청 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납품비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우수제품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원가자료 적정성 조사 및 우수제품 적용기술 유지여부 조사를 보완하고, 특히 공공조달 규모가 큰 우수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1237-433)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용 이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제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실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추가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br>○ 2023년 기준 시범구매 이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수는 총 74개이며, 이 중 2024년 4월까지 시범사용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총 41개임<br>- 미제출 기관 41개 기관 중 5개 기관(6건)에 대하여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수요를 매칭하여 시범구매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1개 기관은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미제출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시범구매를 재차 지원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의 제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추가 수요매칭 기회를 부여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비축창고 신축 사업 집행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7162-509)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은 설계용역 과정에서 2회의 적정성 검토가 있어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 대비 8개월 지연된 2025년 4월에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br>- 2022년 결산 당시 사업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함<br>○ 현재 물자를 비축할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물자는 사용가능면적을 초과하여 비축되고 있어, 비축창고 신축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br>- 일부 비축창고의 경우 알루미늄이 야외공간에 배치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요 원자재 품목이 목표재고량에 미달되는데 추가 재고를 확보하더라도 저장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실내 보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관리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자재 목표재고량 달성에 필요한 공간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비축창고 신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조달수수료 감면 방안 및 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총괄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조달사업 원가에 비해 공공조달 수요자인 국가기관, 지방정부 등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으로, 이러한 막대한 수익에도 수수료 인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br>○ 비록 조달청 수익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거나 회전자금 등으로 내부유보되는 등 공공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익의 규모가 과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조달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과징금의 연례적 과소추계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과징금(56-565)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과징금에 대한 연례적인 과소 추계로 추가 수납이 반복되고 있음<br>- 2023년 과징금 예산액은 3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0배 정도인 28억원을 징수결정해 27억원을 수납하였음.<br>- 2021년 수납률 383%, 2022년 194%, 2023년 911% 등 매년 예산을 과소추계하여 수납액이 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예산 편성 시 현실에 부합하는 추계를 통해 계획성 있게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기타영업외잡수익의 과소추계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기타영업외잡수익(69-697)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회전자금 예치이자수입, 재활용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타영업외잡수익의 2023년 징수율이 478%에 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고 있음<br>- 2023년도 기타영업외잡수익은 18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5배에 달하는 886억원이 징수되었으며, 당초 예산대비 수납률은 2020년 116%, 2021년 114%, 2022년 275%, 2023년 478%로 예산이 과소반영된 경향이 뚜렷하고 편차가 증가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기타영업외잡수익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추계를 통해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5. 통계청(11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청은 (재)한국통계진흥원에 위탁사무의 대부분을 장기간 위탁하고 있음<br>- 「통계법」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중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한국통계진흥원에 장기간 위탁(2019~2023년)하였음<br>○ 위탁사무의 대부분을 특정 기관에 장기간 위탁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br>- 이는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서 수탁기관 지정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자체통계품질 진단의 실효성 확보와 통계품질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정기·수시·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통계작성기관의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여부 점검 및 이행 독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br>- 이는 정기통계품질진단과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해서는 기존 미이행 개선과제 전체에 대해 매년 2회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과 대조됨<br>○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행여부 점검 및 독려를 적극 실시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의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통계법」 상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계품질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감리대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비 별도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청은 UN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국제표준과 국내 통계의 수요 및 환경을 반영한 한국표준분류 등 통계작성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음<br>- 사업비 7억 5,300만원 전액이 시스템 구축비로 편성되었음<br>○ 통계청은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사업이 감리대상 사업임에도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구축비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감리를 실시하였음<br>-「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감리비를 미편성하고 구축사업 낙찰차액으로 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감리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부터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감리 실시를 낙찰차액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신속한 업무 이관을 통해 비용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2031-305)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으로 112종의 통계만이 이관되었고 328종의 통계가 이관이 완료되지 않은 채 기존 시스템에 남아 있음<br>-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거치며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의 이관이 지연되어 신·구 시스템의 중복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비효율 발생<br>○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대비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임에도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위탁운영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의 조사기능을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 신속히 이관하여 시스템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위탁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2032-308)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개소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이용실적이 하락하였음<br>- 2023년 기준 총 12개소 통계데이터센터의 연간 이용자 수는 4,528명, 좌석당 월평균 이용자수는 3.6명에 불과<br>- 특히, 서울 상암·국회 및 대구의 경우 이용실적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광주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br>○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자료반출 기준 완화, 제공 자료의 연계성 확대, 제공 자료 수 확대 등의 서비스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의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2032-307)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는 마이크로데이터의 대국민 서비스 방식 3가지(다운로드, 원격접근, 이용센터 방문) 중 이용센터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센터임<br>- 마이크로데이터만을 제공하는 센터는 서강대학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건강보험공단으로 3곳<br>- 그 외의 13곳의 통계데이터센터에서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제공<br>○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1곳당 연간 이용건수는 58건에 불과<br>-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제공데이터 확대, 자료에 대한 설명 및 교육 필요, 반출절차 간소화, 서버 불안정 해소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민간데이터와의 연계 강화 및 분석환경 보완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가계동향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통계작성(3032-304)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 중 응답을 거부한 인원이 전체의 42.1% 수준임<br>※ 연도별 불응률: 32.2%(2020년) → 30.6%(2021년)→ 34.8%(2022년)<br>-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소득과 지출 현황 등 사생활 노출을 거부하는 심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br>- 대체조사가구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음으로써 조사완료율은 높일 수 있겠지만 왜곡 가능성 우려가 있으며, 통계조사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문제점도 발생함<br>- 통계청은 답례품 단가 인상, 지급 횟수 확대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함<br>○ 일정 수준 이상의 불응률은 조사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조사 참여를 위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 중 응답을 거부한 인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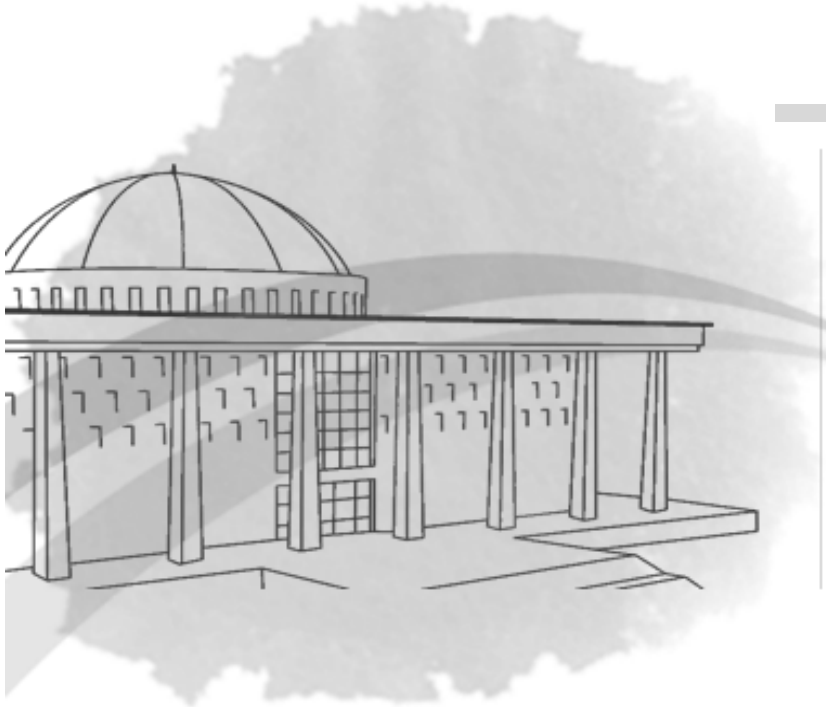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조직 신설·개편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계조사지원(3037-309) | 주의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청은 비대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비대면조사센터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현장조사를 비대면조사로 전환하고, 지방청의 현장조사 대상처를 본청 비대면조사센터로 이관하고자 2022년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하였음<br>※ 3팀, 46명 규모(2022년 신설 당시)<br>○ 신설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신설 후 단기간 내에 비대면조사팀의 기능이 조정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음<br>- 통계청은 비대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비대면조사센터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현장조사를 비대면조사로 전환하고 지방청의 현장조사 대상처를 본청 비대면조사센터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수행과정에서 대규모 표본 개편에 따른 대응 부족, 지방청 인력 이관에 따른 지방청 내부 불만 등 조직 내·외부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br>- 현재 센터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비대면조사를 센터와 지방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향후 조직 신설 및 개편 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위탁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총괄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는 통계청의 위탁사업 관련 사업비를 일반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으나, 통계청은 2024년 예산편성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br>- 통계청은 2023년 예산은 위탁사업 관련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였으나, 일반경쟁방식으로 전환함을 사유로 2024년 예산은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위탁사업 관련 사업비를 일반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라는 2020회계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의 응답률 하락 및 조사요원 중도포기율 증가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험조사 사업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험조사를 통해 최적의 수행방안을 도출하고 조사항목을 점검하는 것임<br>○ 2023년 2차 시험조사 결과 응답률이 하락하고 조사요원의 중도포기율은 증가하였음<br>- 2차 시험조사의 응답률은 82.5%로 2020년 총조사 대비 13.8%p 하락하여 차기 총조사 시 응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br>- 1차 시험조사 시 총 63명 중 4명이 중도포기하여 중도포기율이 6.3%였으나, 2차 시험조사 시 61명 중 13명이 중도포기하여 중도포기율이 21.3%로 크게 증가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시험조사의 응답률 하락 및 중도포기율 증가 사유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명부 작성 방식 개선 및 시험조사 실시 시기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농림어업총조사(3035-308)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대비한 2022년 1차 시험조사 시 명부상 농림어가와 현장조사 시 농림어가의 일치율이 72.8%였고, 2023년 2차 시험조사 시에는 43.2%로 크게 하락하였음<br>- 명부와 현장조사 간 일치율이 저하될 경우 불필요한 조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br>○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는 12월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나, 2022년~2023년 1차, 2차시험조사는 실제 총조사 시기와 차이가 있는 8월~9월에 실시되었음<br>- 시험조사 시기와 실제 총조사 시기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조사 개선사항의 발굴 및 반영이 어려울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불필요한 조사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험조사 실시 시기를 총조사 실시 시기와 유사하도록 조사 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 | | |

# 교육위원회



# 1. 교육부(93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교육부의 과도한 기본경비 전용 부적절** | 관련사업명 | 교육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br>- 학술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8-2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8-283), 교육과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6),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9), 평생교육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8),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3), 감사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1), 교육안전정보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0), 학생지원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5), 대학학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7),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8-284)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및 본부 연구비 등 기본경비 전용 최소화 필요<br>- 교육부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예산을 본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연말에 연구비 등 예산을 전용해 일반수용비로 활용<br>- 소속기관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본부 연구비 및 여비를 삭감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소관 기관 예산 전용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행태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지출규모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교육부 수입대체경비(면허료 및 수수료)(65-651)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면서 응시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작년 징수결정액 221억 5,2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br>- 교육부의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의 예·결산을 비교해보면, 연례적으로 세입은 과소편성하고, 세출은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br>- 교육부의 반복되는 예산이 과소편성과 초과지출은 예외적인 사항을 위한 법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응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통상적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초과지출을 지양하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교육부의 (실)집행률 저조 사업 31개<br>-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1033-315), 교육급여(1131-30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1502-301),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4531-302),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4606-306),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02),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03), 대변인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04), 학생지원국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05), 산학협력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09), 교육복지정책국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10),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13), 대학학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17),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19),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3), 학교혁신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8-283), 그린스마트스쿨 조성(1604-300),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2232-316),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2232-321), 대학구조개혁 지원(2301-301), 사학혁신 지원사업(2301-303),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2861-305),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978-25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9110-841), 직원복지대부(6376-207), 국채매입(9703-974), 주식매입(9703-976)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작년 교육부의 모든 세부사업 222개 가운데 집행률이 70% 대 이하였던 사업은 총 24개(10.8%)이고,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2조원(1.5%) 가량됨<br>- 실집행률로 살펴보면 8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31개 사업이 70% 이하의 실집행률을 보였고, 3,611억원이 더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타경상이전수입(59 - 596), 사학진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유특회계 제외 작년 교육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미수납액이 837억 6,600만원에 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세입과 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5 | **글로컬 대학 사업의 국회 심의절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혁신지원(R&D)(2301-300), 국립대학 육성사업(2704-301), 전문대학 혁신지원(R&D)(4602-4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글로컬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안 통과 이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각각의 인센티브를 활용함<br>- 위 세 사업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특수목적 형태로만 지원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일반재정지원사업 성격으로 해당 사업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활용함<br>- 2024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를 그냥 넘어갈 경우 국회 예산심의권을 편법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2025년 예산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교육부지원금 비율이 낮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비율이 높은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평균 등록금이 낮은 수준임<br>○ 교육부의 국고지원은 학교의 재정상태, 소재지역 물가수준, 학생수·학급수 등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하므로 국가별 국고지원비율에 차이가 발생함<br>○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 |
| 7 | **예산의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는 사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APEC 교육협력 지원 예산은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해당 예산은 원래 계획되었던 제19차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에 사용되지 않고, 아시아교육협회의 HTHT 컨퍼런스를 교육부 사업으로 가져와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2023 GEIS)’이라는 행사개최에 사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산이 기존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 지연**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어능력시험개선(4531-303)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추진하기로 계획된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지연되면서 최근 4년간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br>○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서 일반용역비(210-14)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편성이 잘못된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할 것 | | |
| 9 | **에듀테크 사업의 효과성 파악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실증과제 현장적용 사례가 저조하고, 참여기업 중 실적이 파악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br>- 동 사업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에듀테크를 개발하여 공교육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 실증 기획, 2단계 실증 준비, 3단계 실증 수행, 4단계 실증 완료로 이루어지는 실증과정을 진행하는데,<br>- 실증과제의 현장적용 사례가 저조하고, 참여기업 66개 중 실적이 파악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함<br>-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등이 필요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동 사업에서 실증과정을 거친 에듀테크의 공교육 활용실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별 집행이 전체적으로 저조함<br>- 이러한 부진에는 장비비 집행 저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1차년도에 반도체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인프라 및 장비 구축이 집중되면서 연구시설/장비비 비중이 58%에 달하는데 그 집행률은 27%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4년도 예산을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인프라 및 장비 구축사업의 계획 지연 등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2023년 선정대학의 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할 것 | | |
| 11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2305-305)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조건부 인증과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한 추가평가와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평가를 신청한 학교가 적고, 일부대학은 평가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평가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br>-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 미흡 및 법적 분쟁의 발생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평가만 받을 것을 규정할 뿐, 평가에 따른 인증까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처리 보완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신규과제의 회계연도내 연구기간 등 고려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인문사회기초연구(R&D)(2432-301)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신규과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대학 기준)이 학문후속세대지원의 경우 69.9%, 일반연구지원의 경우 69.3%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br>-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국가 회계연도와 대학 회계연도간의 불일치 및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에 기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회계연도 내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것 | | |
| 13 |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대학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인문사회기초연구(R&D)(2432-301)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대학간/학과 간 융합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추진을 보다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증 수여(학점인정) 제도화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등 교육운영 성과 및 진로성과 학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br>-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등 5개 주제별로 컨소시엄을 구성(주관대학 및 참여대학)하여 융합교육과목(학부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내용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육운영 성과 및 진로성과 확산을 위하여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LAMP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내 LAMP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실집행률이 27.7%이므로 향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br>- 동 사업은 대학의 연구역량 발휘를 위해 지원방식을 과제중심이 아닌 기관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관리체계 강화 및 혁신적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내용<br>- 수리통계, 물질에너지, 지구해양 등 분야별로 8개 대학에 각각 20억원을 지원<br>- 2023년도 예산 153억 3,300만원 중 42억 4,1000만원 집행(실집행률 27.7%)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사업추진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 |
| 15 | 지역대학 R&D 배분에 따른 연구성과 등 평가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대학 R&D 활성화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사업평가를 할 필요<br>- 교육부는 전 부처 중 유일하게 ‘R&D 지역할당제(① 지역대학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② 과제의 일정 비율을 지역대학 연구자에게 배정)’를 두고 있음<br>- 연구의 필요성과 성과가 지원기준이 되어야 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사업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수행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성과의 관점에서 면밀한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지원정도 및 적절한 제도운영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 연차별 최소투자비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창업 활성화(2256-31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결성된 39개의 자펀드 기준수익률이 모두 0%로 운용되고 있는 바, 운용사는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0%만 초과하여도 성과보수를 받게 되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학창업펀드 출자 공고상 연차별 최소 투자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및 2022년 결성된 일부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2024년 이전 결성된 펀드의 수익률 제고 및 출자부터 투자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7 |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순연 문제**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사학혁신 지원사업(2301-303) | 주의 | 교육부<br>한국사학진흥재단 |
| | | 지적사항 | ○ 2023년 예산안 편성 전, 검토 기간이 1년 가까이 충분했음에도 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실집행률이 25.8%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순연에 따른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학교기업 지원사업(4604-4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수익을 창출해 교육에 재투자하여 학교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액을 제외했을 때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br>- 당기순이익 기준 11개의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에서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제외 순이익 기준으로는 부경대학교의 해양ICT융합기술센터를 제외한 모든 학교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음<br>-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1개교당 평균 지원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학교기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원대상과 그 지원액을 대폭 삭감 조치할 것 | | |
| 19 | **미수납액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사학진흥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4) | 주의 | 교육부<br>사학진흥재단 |
| | | 지적사항 | ○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br>-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모두 융자연체이자로서, 최근 5년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행복기숙사 지원 융자금의 연체이자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br>-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2023년 미수납액은 304억 6,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한국국제대학교 행복기숙사 융자원금 92억 5,400만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융자사업 연체이자와 융자원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융자원금과 연체이자를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학생교육지원(1231-3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여 계획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부진한 실집행률을 기록한 문제가 있음<br>- 동 사업은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데, 특히 장애대학(원)생 보조기기 지원 사업(58.9%)과 대학자율사업 등 사업(35.5%)에서 집행부진이 주원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수요 재검토와 함께, 대학자율사업 등의 사업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 21 | **사업취지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및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우수고등학생 해외 유학 장학금 지원 사업(드림장학금) 장학생의 중도포기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음<br>- 2023년 12월말 기준, 총 71명(유학준비생 56명, 유학생 15명)이 중도포기하였는데, 이는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26.9%가 중도포기한 것임<br>- 선발된 유학생들의 학위 취득 비율도 낮고, 2015년도에 선발된 유학생(9년차)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 등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동 사업이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적정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 | 제도개선 | 교육부<br>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점은행제 운영사업’은 2023년도에 약 6억원의 불용이 발생하는 등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br>-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용액이 전년 대비 57배 증가하였는데, 이후 2023년까지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음<br>-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액수가 증가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br>- 해당 내역사업 외에도 독학학위제운영,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등 다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
| 23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 | 주의 | 교육부<br>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ACU) 사업’은 온라인 ACU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분야 교육인적교류와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사업운영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br>- 2020년 1건의 콘텐츠를 신규 개발한 이후, 2023년까지 신규 콘텐츠 개발은 없고, 사업 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 수는 총 17개 교육과정에서 1,060명에 불과함<br>-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각국의 ACU 플랫폼 총 방문자수와 방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연평균 15,257명, 38,558회에 불과한데, 이는 ACU 플랫폼 방문자 1명이 평균 2.5회 가량 접속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CU 플랫폼을 통한 아세안 각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공동 운영 수요조사와 함께 ACU 플랫폼 고도화 계획 등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이·전용 대상 사업 선정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4606-3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긴급한 사유로 이·전용 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신중한 검토 없이 동 사업에서 이용을 결정한 문제가 있음<br>- 2023년 잼버리 긴급지원을 위해 34억 7,200만원을 동 사업에서 '인성교육진흥사업'으로 이용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 고졸 청년 취업과 안전한 현장실습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유였는지 검토했을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잼버리 사태와 같이 예산 상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이·전용을 결정할 때, 대상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 |
| 25 |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2022년도 정책연구비 18억 2,8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나,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금지 원칙)와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br>- 2023년도에 추진된 정책연구과제 10건 중 4건의 연구용역이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 공고, 접수 및 심사 절차를 추진하여 연도 말(10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례적으로 정책연구비의 이월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연구용역 추진 시 당해 회계연도에서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AI 디지털교과서에 서책형 대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검정 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보임<br>- Open AI, 구글 직원이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아이들에게 집중력 저하 또는 과몰입, 인지적·정서적 결핍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창의성 교육이 핵심인데 AI 교과서를 통해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임.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실체가 없음을 성토하고 있음<br>- 최근의 각종 지방교육 관련 교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비용은 서책형 교과서의 10배에 달하며, 서책형 교과서 검정 기간은 8개월인데 반해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검정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AI 기술 도입 및 검정 절차에 대한 논란과 서책형 대비 막대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 | | |
| 27 |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불용과 이월 발생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8개 내역사업 중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은 2023년도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br>-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당초 ‘2023년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변환 추진계획(안)’의 사업기간(2023년 1월~12월)을 벗어난 2024년 2월 29일에 과업 명과 일부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24년 7월 기준)에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적절한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적법한 이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 집행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영재교육 지원사업(1031-305)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회계연도를 벗어난 예산집행 개선이 필요함<br>- 교육부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적법한 이월 절차 없이 2023 회계연도를 벗어난 2024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국가재정법」제3조 및 제48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세출예산 이월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이월 절차 없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29 | **공동 AP과목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1031-403)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공동 AP과목 효과성 제고 필요<br>- 교육부는 과학고 교육과정에 대학 과목에 준하는 AP과목을 편성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이 관련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br>- 그러나 과학고 학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은 최근 4년간 평균 33.4%이며, 공동AP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진학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비율은 최근 4년간 평균 19.5%로 역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2023학년도 학점인정 현황까지 함께 파악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 | 주의 | 교육부<br>동북아역사재단 |
| | | 지적사항 | ○ 동북아역사재단의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연평균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br>- 인건비 잔액이 매년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정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연구직의 높은 이직률이 주요 원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동북아역사재단은 연구직 인력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교육부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 |
| 31 | **지급방식 변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육급여(1131-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바우처는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교육급여의 경우 일부 사용처를 제외한 모든 사용처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br>- 현재 바우처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흥·사행업종·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등인데, 해당 업종을 제외한 음식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세부 업종 분류 방식 등이 상이하여 카드사 변경을 통한 사용제한 우회도 가능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 방지’라는 지급방식 변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등학교 무상교육(1602-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4개월 가량 남은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비용 부담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선례가 있는바 관련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협의사항으로만 비용 부담 주체를 설정한다면 이와 같은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률적 근거와 비용 부담 주체 등 재정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 | |
| 33 | **운영기관의 신속한 선정 및 사업 성과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4131-306)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3년 검정고시 1회 시험이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원기관 선정 결과가 5월 4일에 발표되는 등 절차가 지연되어 1회 시험 응시자들이 해당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함<br>- 2022년에도 시험일이 4월 8일이었으나 운영기관 추가 선정 결과 발표가 4월 18일이었으며, 2024년 역시 검정고시 1회 시험이 종료된 5월 3일에 운영기관 선정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반복될 우려가 있음<br>○ 사업의 내역사업 중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와 지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내역사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합격률이 전체 검정고시 응시자 합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참여자의 중도포기율 또한 높아지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운영 기관이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br>○ 교육부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성과를 개선하고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 집행관리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4705-301)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기존 일정상 23년 7~8월 사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체결이 9월에서야 이루어져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고, 실태조사 대상 학교와의 협력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4년 3월 용역계약을 변경하여 24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도 함께 지연되었으므로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신속하게 완료할 필요가 있어 보임<br>- 2023년도 예산액 10억원 중 6억 8,500만원만 집행되고 3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금액은 2024년 6월 28일 집행을 완료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사업이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고, 계획한 일정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해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35 |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1033-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출연금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br>- 2023년 교육부는 동 사업에서 출연금 2억 5,700만원을 사업수행자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집행함<br>- 교육부는 출연금 집행의 법적 근거로,「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제13조(보호자),「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및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들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가재정법」 제12조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1033-300) | 제도개선 | 교육부<br>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 지적사항 | ○ 2023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관련 인건비는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되었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 파악과 소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함<br>-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인력 중 무기계약직 3인에 대한 인건비는 동 사업에서 집행되었고, 정규직 2인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 세부사업에서 집행됨<br>-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별도의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인건비를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 파악과 소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 | |
| 37 |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1033-300) | 제도개선 | 교육부<br>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 지적사항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이수율이 저조함<br>- 2023년까지 온라인 교육과정(학부모On누리)에 게재된 총 101개의 콘텐츠 중 75.2%(101개 중 76개)는 이수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남<br>- 이는 게재된 콘텐츠 중 지속하여 수강할 유인이 부족한 콘텐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수요와 시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게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정보화 관리용역사업의 적정 사업 및 비목 편성 ·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6034-300) | 주의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 | | 지적사항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별적 수리·보수 용역사업에 집행되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장기간 지속되는 용역 사업에 집행하였고, 성격이 서로 다른 세부사업(정보화사업, 기본경비사업)에서 단일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함<br>- 2023년 동 사업에서 개별적 수리·보수 용역사업에 집행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장기간 지속되는 용역 사업을 위해 26억 5,400만원이 집행됨<br>- 또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사업 중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단일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6034-300)' 세부사업과 '기타경비(6376-200)' 세부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각 집행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정보화사업과 기본경비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할 것 | | |
| 39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6100) | 제도개선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 | | 지적사항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가입자 수 감소 및 수급자 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발생 및 기금 고갈이 우려됨<br>- 2020년 연금재정 장기추계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남<br>- 또한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72년 27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폐교 등 학교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자 수 감소 및 수급자 수 증가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특수학교 설립 지연 및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특수교육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도 사업예산 174억 300만원 전액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에 사용되고 부산대·교원대의 경우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25년 3월이 아닌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br>- 부산대·교원대의 경우 사업 미진행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액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음<br>- 부산대의 경우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교원대의 경우에도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실시로 사업이 지연됨<br>-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는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산대와 교원대 모두 기한이 준수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지연의 경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는 부재하다는 입장이나 주무부처로서 사업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고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업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어린이집 확충(3134-344)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 부족과 집행 저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br>-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함<br>※ 2020년 44.5%, 2021년 43.8%, 2022년 37.9%, 2023년 47.5%<br>- 동 사업의 실집행 저조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중 사업단가가 낮은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편중 및 신축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2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시도별 편차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어린이집 확충(3134-344)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미달 및 국공립어린이집 시도별 편차 개선이 필요함<br>-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23년에 확충목표를 550개소에서 500개소로 낮추었음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지표달성도가 전년 대비 6.8% 감소한 82.8% 수준임<br>- 시도별 공보육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51.5%)과 세종(39.7%)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며, 시도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br>※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전체 평균<br>: 2020년 20.4%, 2021년 22.7%, 2022년 25.3%, 2023년 28.3%<br>※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공보육 목표 50%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고, 특히 농어촌 등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련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세입)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이중고지 오류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br>- 2023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조 4,700억 3,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조 4,89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3조 4,879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음<br>-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억 1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이중고지 오류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4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근거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45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투명성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지역현안특별교부금 교부 및 운영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br>- 사업당 금액의 경우 서울, 광주, 전남 등은 평균보다 적은 반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은 평균보다 높은 등 지역불균형 배분 문제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운용 및 관리기준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보고를 강화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국가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집행하는 것은 동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교부금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7 | **법률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국회보고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 | 시정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관련 내용이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형식적이고 부실함<br>-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가 사업 내용 및 교부대상을 결정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br>※「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3.10.시행으로 2024년에 최초 보고)<br>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법률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역사업 및 교부단체, 교부일 등을 포함하는 등 보고서식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보고를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문제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수능감독관 처우개선, 시험장 확보 문제 해결, 지역별 수능 운영 격차 해소,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안정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br>-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 관련 수능감독관의 기피 현상, 감독관 수당 및 처우의 불균형,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의 어려움, 수능 운영의 지역별 격차, 온라인 접수시스템 안정성 문제, 응시수수료 동결로 운영비 충당의 어려움, 맞춤형 지원대상 수험생 증가에 따른 감독관 수요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재정안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9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집행관리 철저 및 사업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310억 3,400만원 중 203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7%)되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br>- 국립부설학교 시설의 신증축, 노후건물의 개축·리보델링, 기존건물 유지보수,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등을 내용으로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저조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2740-300) | 시정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 부지선정 문제, 학교 내부문제로 인한 설계지연 등으로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br>- 2022년 국회 결산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실집행률이 10% 미만의 대학들이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실집행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요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교부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인 실집행저조 문제를 개선할 것 | | |
| 51 | **행복기숙사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연차별 예산 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사학진흥기금 - 행복기숙사지원사업(2861-301)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의 경우 실집행률은 54.8%에 불과함<br>○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교육부는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함<br>- 2024년 예산의 경우 2023년 대비 60% 축소된 286억원 수준에서 편성됨<br>○ 행복기숙사 내 사립대학생 수용률을 높이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확충,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실집행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차별 사업예산이 올바르게 배정되도록 하고, 행복기숙사의 시설확충, 사립대학생 수용률, 저소득층 제고,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전반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교육급여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과 사업기간 조정 및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과정 통합**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육급여(1131-300) | 주의,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18개월로 설계되었는데 교육급여 바우처는 일단 신청하고 나면 실제 사용기간은 장기간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교육급여의 활용도를 높이고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br>- 교육급여 사업의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보면, 2023년 3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년이 지난 2024년 2월까지 실집행률이 8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급여 신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br>○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에 사용하도록 2023년도부터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 형태로 변경되었는데 2023년 12월 기준 집행률이 전년 대비 16% 이상 감소함<br>○ 교육급여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과 실제 바우처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달라 교육급여 수급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문제가 있음<br>- 현재 교육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고,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으로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률 개선을 위해 신청절차를 개선할 것(주의)<br>○ 교육부는 교육급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기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신청 과정을 통합할 것(제도개선)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한국교육<br>학술정보원의<br>자체수입 확보<br>내실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1303-5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br>한국교육학술정보원</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지차보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함<b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최근 5년간 매년 사업수입 1억 9,800만원을 자체수입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은 1~200만원에 불과함<br>※ 최근 5년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체수입 계획 대비 실적<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19년</th><th colspan="2">2020년</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r>
<tr><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r>
<tr><td>사업수입</td><td>198</td><td>2</td><td>198</td><td>2</td><td>198</td><td>1</td><td>198</td><td>0</td><td>198</td><td>1</td></tr>
<tr><td>사업외수입</td><td>120</td><td>202</td><td>120</td><td>73</td><td>120</td><td>108</td><td>120</td><td>174</td><td>185</td><td>247</td></tr>
<tr><td>이자수입</td><td>-</td><td>58</td><td>-</td><td>24</td><td>-</td><td>30</td><td>-</td><td>117</td><td>-</td><td>197</td></tr>
<tr><td>잡수입</td><td>-</td><td>144</td><td>-</td><td>49</td><td>-</td><td>78</td><td>-</td><td>57</td><td>-</td><td>50</td></tr>
<tr><td>전년이월금</td><td>1,178</td><td>979</td><td>1,178</td><td>709</td><td>1,178</td><td>630</td><td>1,178</td><td>686</td><td>1,178</td><td>634</td></tr>
<tr><td>계</td><td>1,496</td><td>1,183</td><td>1,496</td><td>784</td><td>1,496</td><td>739</td><td>1,496</td><td>860</td><td>1,561</td><td>882</td></tr>
</table>
자료: 교육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br>❍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년에 수립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수입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1303-500) | 시정, 제도개선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 지적사항 | ○ 4세대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개편 이후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성과지표 달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오류와 시스템 편의성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br>○ 이와 같은 만족도 급감은 4세대 나이스를 새로이 개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류 및 시스템 마비에 따른 것으로, 업무 추진 점검 및 관리·감독상 부실에 기인함<br>- 제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2023년 11월에 이루어진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2023년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는 57.7%, 성과목표 달성도는 65.6%로 전년 대비 각각 29.9%p, 36.3%p 저조하게 나타남<br>- 특히, 교직원의 만족도는 전년도 90.81에서 33.66으로 급감하였고, 학생(87.33→72.11)과 학부모(84.72→67.42)의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br>○ 나이스 시스템 상 민원서류 오발급 사태 또한 교육부의 조급한 시스템 개통으로 발생한 문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시스템 개편 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4세대 나이스가 교직원의 안정적 · 효율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제도개선)<br>○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향후 정보화 서비스 개편 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전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줄이고, 서비스 신규 개통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것(제도개선)<br>○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8월 26일 기준 정부24 발급 관련 민원담당자 현행화 미조치 학교 수 전수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세수결손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502-301),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 시정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조 7,606억원 중 10조 3,97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불용 처리되었음<br>「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br>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특별교부금<br>배분 비율 준수<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세수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조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확정 금액을 그대로 교부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은 감액하여 교부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br>※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대비 교부액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23년<br>예산액(A)</th><th>비율</th><th>최종<br>교부액(B)</th><th>비율</th><th>미교부액(A-B)</th></tr>
<tr><td>지방교육재정교부금</td><td>75,760,666</td><td>100%</td><td>65,363,666</td><td>100%</td><td>10,397,000</td></tr>
<tr><td>○ 보통교부금</td><td>73,533,444</td><td>97.1%</td><td>63,416,456</td><td>97.0%</td><td>10,116,988</td></tr>
<tr><td>○ 특별교부금</td><td>2,227,222</td><td>2.9%</td><td>1,947,210</td><td>3.0%</td><td>280,012</td></tr>
<tr><td>- 국가시책</td><td>1,336,333</td><td>(60.0%)</td><td>1,336,333</td><td>(68.6%)</td><td>-</td></tr>
<tr><td>- 지역현안</td><td>668,167</td><td>(30.0%)</td><td>458,158</td><td>(23.5%)</td><td>210,009</td></tr>
<tr><td>- 재난안전</td><td>222,722</td><td>(10.0%)</td><td>152,719</td><td>(7.8%)</td><td>70,003</td></tr>
</table>
자료: 교육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되는 보통교부금을 기존 ‘학교·학급·학생 측정단위 수요액 비율’ 대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비율’을 적용한 결과 일부 교육청에 대해 불리하게 배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br>- 서울, 인천, 강원의 3개 교육청은 각각 3,374억 1,400만원, 168억 9,200만원, 246억 6,500만원 과다하게 배분된 반면, 경남(845억 9,800만원), 경기(834억 1,300만원), 충남(306억 6,600만원) 등 13개 교육청은 과소하게 배분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청별 배분 과정에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58 |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지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 시정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필요<br>- 2023년 예산안 부대의견 :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br>※ 2024년, 2021년 예산안에도 동일한 부대의견 첨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관련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협의 실적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국립학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을 포함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9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배정시기 조정 최소화 및 적시지원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1502-301)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세수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조치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연도말에 교부한 결과, 시·도교육청은 이를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여 93.5%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br>-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수시배정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본예산만큼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예년대로 배정하지 않고 2023년 11월 1일에 1,371억원, 2023년 12월 14일에 156억원을 배정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이 재해발생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배정시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회심의를 받지 않고 대규모 사업도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심의회 구성 인원의 대표성, 심의 절차 및 내용 등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br>-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2023년 기준 9명의 외부위원 중 7명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7명의 교수 중 4명의 교수는 3년 이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편중된 문제가 있음<br>- 2021~2023년 동안 12차례의 심의 중 수정의결은 2차례에 불과했으며 모든 사업이 교육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교육부는 심의회의 회의 내용, 심의회 내용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관리 및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원안의결의 경우에도 심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 국가시책 69%, 지역현안 23%, 재난안전관리 8%의 비율로 교부<br>※「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배분비율<br>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1 | **특성화고 학생 지원 예산 이용을 통한 잼버리 긴급지원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성교육진흥사업(1034-3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인성교육진흥사업 명목으로 특성화고 학생 지원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을 무시하고 잼버리 긴급 지원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함<br>※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34억 7,200만원을 이용<br>- 인성교육진흥사업의 본예산은 3억 9,300만원이었고 그 10배에 가까운 이용액을 잼버리 긴급지원에 집행하였는데, 그 취지가 ‘국가 긴급 재난 대응 실소요 경비 보전’이므로 인성교육진흥사업이 아닌 대학 지원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br>- 불용이 예상되어 이용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 사업은 2020년과 2021년에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여 실집행률 제고 노력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이었음에도 회계연도 중간에 이용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br>- 긴급 대응에 따른 국가 예산 지원은 타당하나,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 예산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추후 잼버리 사태와 같이 정부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이·전용 대상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적합한 사업이 없을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재단채 조달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 제도개선 | 교육부<br>한국장학재단 |
| | | 지적사항 |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채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국고채와 같이 신용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채 조달금리가 모든 연물별로 국고채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음<br>- 동 사업의 예산은 재단채 조달금리와 관계있는 만큼, 학자금대출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국가가 대납하고 있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 시 조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3 | **이자면제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이자면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들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br>-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의 당초 예산대비 실집행률은 각각 68.4%, 60.6%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이자면제 사업의 사업대상 범위와 소요예산을 면밀히 추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4</td><td rowspan="3">취업후<br>학자금대출<br>사업의 학자금<br>중복지원 해소를<br>위해 철저한<br>사업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br>-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인원은 2023년 12월말 기준 7,788명이며, 장학금 반환이 필요한 중복지원금은 4억원(346명)에 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r><td rowspan="3">65</td><td rowspan="3">사업성과를<br>높일 수 있도록<br>면밀한 사업관리<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의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될 뿐 환수하는 규정은 없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므로 장학금을 수혜한 당해 학기만 이수하고 의무재직하면 되므로 졸업 여부는 장학금 환수 요건과 무관하다는 문제가 있음<br>- 지원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졸업자수는 매년 감소 중이며, 2019년 수혜자 중 졸업자수 비율은 55.4%, 2020년 수혜자 중 졸업자수 비율은 48.3%임<br>- 최근 5년간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 환수현황은 200~6,00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학적변동이나 의무재직 변동에 따른 장학금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음<br>※최근 5년간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환수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환수금액</td><td>25</td><td>60</td><td>15</td><td>5</td><td>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적정 규모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 규모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학자금 지원구간 상승,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통과율 하락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면서 불용이 발생함<br>- 2023년에는 본예산의 9.8%인 3,590억 7,3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보다 증가함<br>-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은 2021년 100만명에서 2022년 95만명, 2023년 91만명으로 감소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 변동, 성적통과율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동 사업에 대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 | |
| 67 | **국가장학금 제도 취지에 맞는 장학사업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형)을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지원대상 소득수준을 높인 결과,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br>-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형)의 지원대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였으나, 교육부는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을 수정하여 집행함<br>-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중 9구간에 지원된 예산이 국공립대의 경우 2021년 0.8%에서 2023년 74.5%로, 사립대의 경우 2021년 0.4%에서 2023년 5.2%로 확대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하여 8구간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자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일관되게 운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8 |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조정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자체노력형’과 ‘신·편입생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신·편입생 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하여 ‘대학 자체노력형’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2022년 79억 2,300만원, 2023년 256억 9,500만원 조정)<br>- 대학 자체노력 연계형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 연계형 장학금의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원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각 항목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항목 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 | |
| 69 |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추가 지연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 관련 유네스코 회관 안전보강 사업은 관계기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되었음<br>- 설계업체 선정에 따른 설계완료가 2023년 7월에 완료되었고, 설계 관련 심의, 문화재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시공사 선정이 2023년 12월에야 이루어졌음. 그에 따라 2024년 1월 완료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사업 기간이 2024년 10월까지 연장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유네스코회관 안전보강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당초 연장 승인된 기간 안에 보조사업을 완료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0 |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 보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4531-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교원해외진출 사업 관련 해외 교원파견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고, 예산현액 43억 6,700만원 중 불용액이 12억 600만원에 달하여 집행률이 72.1%로 저조함<br>- 해외파견분야를 보면 한국어 분야가 수학·과학 등 분야와 비교해 월등히 많음<br>- 2023년도 해외 교원파견 현황: 네팔 3인, 말레이시아 10인, 세르비아 7인, 우즈베키스탄 5인, 태국 5인, 파라과이 4인, 카자흐스탄 7인, 키르기스스탄 6인, 우간다 2인, 캄보디아 3인(합계 52인)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적정한 파견기간 재설정 검토와 다양한 분야의 해외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71 |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및 현장실습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4606-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 205억 2,800만원 중 실집행액이 161억원 가량에 불과하는 등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br>-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학령인구 감소, 대학진학률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여건 악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 위축 등에 기인함<br>- 직업계고 학생수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실적 부진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수와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추이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2 | **면밀한 사업계획 설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4606-306)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당초 설정했던 교육인원, 채용연계비율, 참여기업 수의 실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br>- 교육생 선발 시 목표인원 1,350명보다 많은 1,860명을 합격시켰으나, 실제 입교는 1,036명만 하였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목표인원과 입교 희망인원 간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인원에 대한 적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br>- 당초 계획보다 교육인원이 저조하여 동 사업의 사업주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실집행 실적도 부진하여 실집행률이 74.6%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사업수요와 지방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다수의 합격자가 입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 73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교부 필요<br>-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52.5%,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57.7%<br>○ 사업지연으로 인해 조정된 사업기간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중요재산 취득보고·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후속 관리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요재산취득보고·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br>○ 교육부는 지자체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불필요하게 자금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월 및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4 | **의견수렴 부족에 따른 대규모 불용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2232-321)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이었으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사업 예산 105억원이 전액 불용됨<br>- 동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사업조정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됨<br>-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교대생 등의 반대여론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사업 유예요청('23.4.)에 따라 사업을 철회하였음<br>- 2024년에는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계획(시안)(2023.9.)」을 토대로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2024.6.)」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하고, 2024년 6월에 마련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고도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br>○ 교육부는 향후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급조함으로써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예산안 편성 경위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br>○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고, 2024년 6월에 마련한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고도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향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예산안 편성 경위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5 |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국립대학 인건비는 과다 편성으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용액 규모가 2017년 354억, 2020년 883억원, 2023년 99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 | |
| 76 |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한 대학정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혁신지원(R&D)(2301-300),<br>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일반재정지원의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대학에 대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정지원 확대가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대학등록금에 대한 계속된 규제로 대학 수입 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 대학혁신지원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합한 일반재정지원 예산(운영비 제외)은 전년대비 85.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br>- 등록금 3% 인상분으로 재정으로 보전 시 3,230억원 소요되며, 10% 인상분을 보전 시 1조 765억원 소요 등 향후 대학의 계속된 등록금 동결을 재정으로 보전해야 할 경우 재정소요 부담이 큼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일반재정지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소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속가능한 대학정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7</td><td rowspan="3">산학연협력<br>고도화 지원<br>사업 성과 제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br>-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관련, 2024학년도 일반대학, 전문대학 계약학과의 등록률이 2023년 대비 하락하였음<br>※ 최근 3년간 계약학과 등록률 현황<br>(단위: 명, %)
<table>
<tr><th rowspan="2">학교명</th><th colspan="2">22학년도</th><th colspan="2">23학년도</th><th colspan="2">24학년도</th></tr>
<tr><th>등록</th><th>등록률</th><th>등록</th><th>등록률</th><th>등록</th><th>등록률</th></tr>
<tr><td>일반대학</td><td>750</td><td>73.3</td><td>749</td><td>69.7</td><td>715</td><td>67.2</td></tr>
<tr><td>전문대학</td><td>241</td><td>50.2</td><td>471</td><td>66.0</td><td>549</td><td>65.7</td></tr>
</table>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관련,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평균 2,590만원에 불과함<br>-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관련, 참여인원에 비해 수료인원이 미진한 대학들이 있고, 취업률도 대학은 평균 15%, 전문대학은 21.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계약학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의 건당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를 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8 |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예산집행 구조 개선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2256-303)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참가자 만족도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함<br>- WEST 사업의 2021년 실집행률은 35.6%, 2022년은 54.2%, 2023년은 40.8%에 불과<br>- 참가자 만족도가 2023년 65.7로 전년대비(70.6) 4.9 하락함<br>- 연수 참가자가 여학생, 수도권, 4년제 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3분위까지의 저소득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8~10분위가 5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균형있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미대학생연수 서비스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 |
| 79 | **글로컬대학 예산 적기 교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혁신지원(R&D)(2301-300)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지연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야 교부됨으로써 대학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이월되었으며, 글로컬대학에 대한 어떠한 성과 검증도 없이 계획서 평가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br>- 11월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완료되고 나서야 인센티브 예산이 각 대학에 배분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별 실집행률이 2024년 2월 기준 74.9%에 불과함<br>- 계획서 제출만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에 따라 대학에 교부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며, 학교 통합 등의 핵심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0 |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혁신지원(R&D)(2301-3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학교에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였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지원 축소를 포함한 패널티 부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안내공문 발송 및 한남대에 대한 6,200만원 환수 및 사업비 삭감 조치만 있었음<br>- 국민대학교에 대해서는 회의비 집행 증빙 미비 등 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해서만 약 300여만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으며, 특정 업체 위탁사업자 선정 및 특정 업체 전산장비 구입 등 의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집행과 관련한 국정감사 지적과 예산안 부대의견 첨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와 이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후속조치 경과 및 이행노력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추가적인 후속조치 계획 마련을 통해 시정·보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1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2301-4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하고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RISE 체제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임. 그러나 2023년 예산의 실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4년도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br>- 2023년에 신규로 선정된 부산·전북 및 제주를 제외한 6개 지역혁신플랫폼 모두 이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br>-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사업비의 실집행률을 보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광주·전남 76.5%, 대구·경북 79.0%, 부산 56.9%, 전북 71.1% 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실집행이 부진한 플랫폼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2025년 새롭게 추진되는 RISE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하는 한편,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2 |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2301-400)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은 120억원 중 80억원이 불용됨으로써 불용률이 66.7%임<br>- 교육부는 적극적인 사업 안내 및 재공모 실시에도 불구하고, 참여지역 미달로 1곳(전북)만 지원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불용사유를 밝히고 있음<br>- 그러나 해당 내역사업은 당초 정기국회 초반(202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2년 11월에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청하면서 추가 신설된 사업임<br>○ 이처럼 단기간 내에 수립된 사업에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향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즉흥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3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동물실험실 구축사업 추진 지연 및 실험실습기자재 장비 활용실적 저조 등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액 598억 5,700만원 중 302억 6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물실험실 구축사업의 집행률이 9.3%로 극히 부진한 것이 원인임<br>- 2023년도 신규로 선정된 대학 중 충북대 외에 충남대, 경상대는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대학들도 2023년 집행률이 0.7%~19.9%에 불과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br>○ 5,000만원 이상 장비의 활용실적이 연평균 10건 이하로 저조한 대학들이 있음<br>- 제주대는 5,000만원 이상 장비를 55건 구매하였으나, 그중 연평균 활용실적이 10건 이하인 장비구매가 30건이며, 금액으로 보면 총구매금액 대비 52.2%로 나타나 투입예산 대비 장비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br>- 부경대·목포대·강릉원주대 및 한국해양대 등도 활용실적이 저조한 장비를 구입한 비율이 31.6%~54.6%(금액비율)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br>○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국립대의 장비 등록 현황을 보면, 30일 이내에 등록한 비율이 2023년 16.4% 등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최근 5년간 30일 이내에 등록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시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장비구매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효과 등을 위해 국립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를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4 |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4134-303)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매치업 운영' 사업의 학습과정 신청자 수 대비 이수율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br>- 2018년 선정된 인공지능 분야는 33.09%, 스마트물류 분야는 69.65%의 이수율을 보였으나, 2021년에 선정된 드론,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분야는 각각 18.04%, 20.34%, 11.15% 등 낮은 이수율을 나타냈으며, 2022년에 선정된 4개 분야는 모두 30% 미만의 이수율을 기록함<br>- 매치업 운영 사업의 이수율이 낮고 중도포기가 많은 이유가 학습자 개인의 문제인지, 교육과정과 매치업 사업의 효용성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매치업 운영 사업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기업체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5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 주의,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br>- 동 사업은 2년 연속 실집행률 70% 이하를 기록하고 2023년에는 43.2%에 그침<br>- 실집행이 극히 부진함에도 국립대병원으로 예산을 전액 교부한 뒤 전액 미집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이월시키고 있음<br>- 집행실적 부진 사유는 사업계획이 사전에 미진하게 수립되어 대규모 사업비 증액 등으로 시행 여부가 재검토되거나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다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제도개선)<br>○ 사업 진행현황,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이월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것(주의)<br>○ 교육부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6 |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 제도개선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은 2022년에 예산액 93억 7,500만원 중 10억 8,300만원만 집행된데(11.6%) 이어 2023년에도 16.9%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br>- 교육부는 단지 공공임상교수 채용에 미응시하여 집행이 부진하다고 밝히고 있을 뿐 2022년에도 저조했던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해왔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한편, 동 사업은 2년간 집행률이 저조하자 2024년에는 63억 5,000만원만 계상함<br>- 국립대병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배정인원을 설정했음에도 여전히 공공임상교수 채용인원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br>-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은 신분이 불안정하여 교수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공 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 의사로서, 신분보장이 명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그동안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별도의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7 | **편성된 계획액 범위 내 사업 추진 및 면밀한 계획액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 주의 | 교육부<br>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액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증액 집행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평가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음<br>- 동 사업은 교육부의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2.5.)」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2년 계획액(531억 8,200만원) 대비 11% 감축한 472억 9,2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고, 최종 정부안에는 414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음<br>-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재원부족을 사유로 2023년 7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사업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사업으로 158억 8,900만원을 전용(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계획액의 범위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8</td><td rowspan="3">사학연금급여의<br>연례적 과소<br>편성 및 계획<br>변경 지양<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연금급여(6131-4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교육부<br>사립학교교직원<br>연금공단</td></tr>
<tr><td>지적사항</td><td>○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의 과소 편성 및 계획 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br>-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금급여는 매년 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액이 증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01억 3,900만원을 계획 변경으로 증액하여 그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br>※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금급여 계획액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당초계획액(A)</td><td>2,766,929</td><td>3,136,410</td><td>3,407,725</td><td>3,703,240</td><td>4,108,274</td></tr>
<tr><td>수정계획액(B)</td><td>2,920,434</td><td>3,172,566</td><td>3,438,025</td><td>3,860,491</td><td>4,378,413</td></tr>
<tr><td>계획변경규모(B-A)</td><td>153,505</td><td>36,156</td><td>30,300</td><td>157,251</td><td>270,139</td></tr>
</table>
자료: 교육부<br>- 연금급여의 연례적인 과소계상은 정부의 예산지출을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이게 하는 등 국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연금급여의 과소 계상은 연금의 재정 상황에 대한 파악·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br>- 사학연금공단이 매년 실시하여 중기사업계획 작성 시 제출하는 중기재정추계와 실제 계획액을 비교하여 보면, 거의 매년 중기재정추계보다 더 많은 실지급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액은 매년 중기재정추계치보다도 적게 편성되어 연금급여의 과소 편성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중기재정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연금지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연금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9 | **퇴직수당 지급 비용의 공단 부담금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고용주부담금(38-381), 일반회계전입금(91-911) | 제도개선 | 교육부<br>사립학교교직원<br>연금공단 |
| | | 지적사항 | ○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적용된 일시적·예외적 조치로서 퇴직수당에 대한 사용주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br>-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인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며, 공단의 비용부담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br>- 제도 도입 초기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였던 점, 1991년에 함께 도입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급여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사용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용주 부담 원칙의 예외를 3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br>※ 2023회계연도 퇴직수당공단부담금 236억 3,000만원, 퇴직수당법인부담금 1,722억 6,400만원, 퇴직수당국가부담금 6,640억 7,1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0 |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의 국고 지원 적절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고용주부담금(38-381), 일반회계전입금(91-911) | 제도개선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 | | 지적사항 | ○ 고용주 부담의 원칙, 사립대학병원 직원의 역할 및 국고 지원의 취지, 국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br>- 사립대학병원 직원은 국가적·사회적 역할인 교육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국고 지원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br>-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퇴직수당비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br>- 대학병원 직원이 전체 가입자 및 퇴직자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퇴직자 증가에 따라 대학병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급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br>※ 2023회계연도 퇴직수당공단부담금 236억 3,000만원, 퇴직수당법인부담금 1,722억 6,400만원, 퇴직수당국가부담금 6,640억 7,1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1</td><td rowspan="3">한국판 뉴딜사업<br>검토 및 평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이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학습혁신과 SW, AI 등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br>○ 그러나 그 동안의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광장형 도서관, 학생 커뮤니티 복도, 가변형 교실, 옥외데크 연계교실, 복합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수영장) 등 주로 물리적 시설 개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br>○ 한국판 뉴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반면, 물리적 시설개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뉴딜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되었는지, 국민의 세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최근 4년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예산액<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 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예산액(추경기준)</td><td>94,252</td><td>431,527</td><td>421,158</td><td>358,484</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뉴딜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평가하여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2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개선 및 영유아보육법상 기준에 따른 시도별 센터 설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3135-353) | 주의 | 교육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1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일부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교부액 전액을 이월하였음<br>○ 동 사업은 2023년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1차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실적이 없고,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차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부지확보 여부·실현 가능성·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에 주의할 것<br>○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나, 전체 시·군·구 중 평균 설치율은 50.4%에 불과하므로 교육부는 지자체 간 보육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3 | **사학연금 휴업급여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재해보상급여(6132-401) | 제도개선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 | | 지적사항 | ○ 현재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 1일당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br>○ 그러나 사학연금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음에 따라 휴업급여가 없음<br>○ 병원 사업장의 경우 공기매개체와 혈액매개체에 의한 감염 등 다양한 산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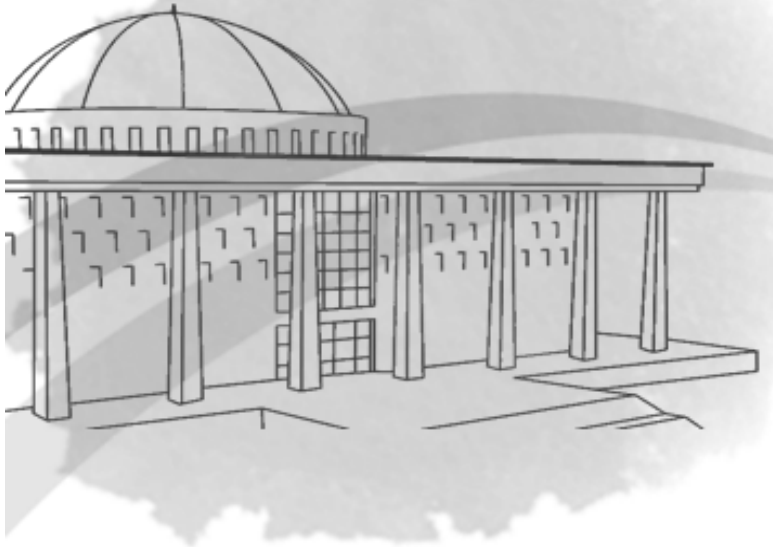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2. 국가교육위원회(5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의 지연 및 예산 이월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 | 제도개선 | 국가교육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년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2023년 11월에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7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음<br>○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사업은 상반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지연과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 | 제도개선 | 국가교육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함<br>- 2024년 5월 기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현황을 보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2024년 3월에 2건, 2024년 4월에 1건에 불과하고, 동의인원도 거의 없어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관계 규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3 | **예산 이·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 | 주의 | 국가교육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담금을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나,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46조에 따라 이·전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 집행 자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7019-200) | 제도개선 | 국가교육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의 고용부담금 예산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br>- 2023년 고용부담금 예산은 총 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정한 수준은 4,412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산 편성오류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무실 이전 경비로 전용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 5 |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 주의 | 국가교육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사업지연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가 있음<br>-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을 계약하였으며, 이 중 1건을 제외하고 16건에 대한 계약이 연도말에 이루어진 결과, 예산현액 10억 1,400만원 중 56.3%에 해당하는 5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음<br>- 연도말 용역 계약이 다수 이루어진 것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이 5월에 완료되었고, 각 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담겨야 할 아젠다 발굴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조기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것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5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청년인턴사업<br>예산편성 및<br>운영규정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액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채용 추진계획 수립(2022.12.8.) 및 부처별 채용목표 인원 배정(2023.1)에 따라 과기부는 예산안 편성 없이 2023년 7월부터 청년인턴을 채용·운용하였고, 과기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에서 39명을 채용하였음
<table>
<tr><th>기관명</th><th>채용인원</th><th>업무 내용</th><th>근무기간</th></tr>
<tr><td>과기부</td><td>14</td><td>청사이전 업무 지원, 홍보, 기록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td><td rowspan="7">2023년<br>7~12월<br>(최대 6개월)</td></tr>
<tr><td>우정사업본부</td><td>7</td><td>우체국 이용고객 대민지원, 정책홍보</td></tr>
<tr><td>국립전파연구원</td><td>3</td><td>기록관리, 회의지원, 자료정리</td></tr>
<tr><td>중앙전파관리소</td><td>8</td><td>청사건축업무지원, 전파관리 행정지원</td></tr>
<tr><td>국립중앙과학관</td><td>2</td><td>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 콘텐츠 구축</td></tr>
<tr><td>국립과천과학관</td><td>5</td><td>전시·행사·교육 지원, 전시프로그램 기획·운영·개발</td></tr>
<tr><td>합계</td><td>39</td><td></td><td></td></tr>
</table>
○ 2023년에는 기존 사업의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예산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의 전용, 세목·내역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청년인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청년인턴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연례적 예산 이월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연구사업(7031-401)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정책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새로운 정책도출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통해 시의성·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br>○ 2023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9억 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2억 3,600만원 중 9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집행률 74.1%), 차년도 이월액이 2억 5,600만원, 불용액이 6,400만원 발생하였음<br>○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3억 6,000만원, 2020년 1억 3,600만원, 2021년 8,700만원, 2022년 2억 9,400만원, 2023년 2억 5,600만원이 이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연구사업의 연례적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 |
| 3 |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용역에 수의계약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액비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7011-254)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내 일반용역비 목을 통해 5,000만원 규모로 “2023년 업무보고 지원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2022년 12월 26일)하였음<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업무보고 지원 용역 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긴급한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함<br>○ 그런데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보고 행사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계약법상 취지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적용을 지양하고 일반경쟁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출연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 출연금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 출연금 예산 중 13억 2,800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교부하여 정보통신장관회의 개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콘퍼런스 개최 지원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출연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br>- 출연금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어, 지원의 남용 방지를 위해「국가재정법」제12조에 따라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 근거를 제시하고,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 |
| 5 | **기초연구의 질적성과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인기초연구(1234-301), 집단연구지원(1234-302)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액은 2017년 7,139억 300만원에서 2023년 1조 6,367억 2,800만원으로 약 2.3배가 증가했으며, ‘집단연구지원’ 사업 예산액은 2017년 1,682억 8,200만원에서 2023년 4,133억 9,600만원으로 약 2.45배 증가하였음<br>- ‘개인기초연구’ 사업과 ‘집단연구지원’ 사업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두 사업을 통해 창출된 SCI논문 수나 IF 상위저널 논문 수 등 양적 성과도 함께 증가하였음<br>○ 그러나, 논문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시하는 지표인 ‘SCI(E) 논문 평균 질적수준(mrnIF)’은 개인기초연구와 집단연구지원사업 모두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종료과제 평가 결과 상위등급을 받은 과제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연구비의 통합연구관리시스템 적시 등록 및 부적절한 연구비집행 등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집단연구지원(1234-302) |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집단연구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통합 Ezbaro에 등록하지 않은 과제가 146건임<br>○ 또한, 1인당 연구개발과제 참여 횟수 제한 위반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타 과제에서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책임연구원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연구가 중단된 과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적시등록을 독려하고, 연구중단 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7 | **K-BDS 활용가능한 데이터 확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1138-312)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K-BDS(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Korea-BioData Station) 구축 이전에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히 이전한 것으로써 별도의 표준화 작업을 거치지 않아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과기부 외 다른 부처의 연구데이터 확보 노력이 부족함<br>* K-BDS :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통합 수입·제공을 위한 범부처 바이오 연구데이터 통합 플랫폼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BDS에 축적된 데이터를 조기에 표준화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확보되는 연구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K-BDS 데이터<br>활용기능 강화<br>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1138-31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현재 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는 연구개발과제 단위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물질 발굴, 선도물질 도출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br>○ 과제 종료 후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은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서 기관 차원에서 계속 활용하거나 유관 플랫폼에 연계하여 공개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설계 일정<br>고려한 적정<br>예산 편성 및<br>사업 관리 철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1139-42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그 내역에 기본설계와 중간설계를 모두 포함하였는데, 이는 기본설계와 중간설계 사이의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2개월)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써 중간설계는 2023년에 마무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임<br>- 2023년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은 전체 예산액 30억원 중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7,0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음<br>※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결산내역(2023)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기능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계획<br>현액</th><th rowspan="2">집행액<br>(실집행액)</th><th rowspan="2">차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td><td>3,000</td><td>3,000</td><td>-</td><td>-</td><td>-</td><td>3,000</td><td>3,000<br>(230)</td><td>2,770</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원활한 사업<br>집행 및<br>적기 출연금<br>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1640-3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은 시제품 발주가 지연되어 2023년 예산현액 49억 3,600만원 중 13억 4,500만원만 집행(집행률 27.2%)되었는데, 이월금 대부분이 2024년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인 발주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br>○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수행기관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인 사업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사업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적기에 교부할 것</td></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연구수행기관<br>사업집행현황을<br>고려한 출연금<br>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R&D)(1158-42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건설 및 시운전’ 내역사업은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년도 이월액 17억 600만원도 집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예산액 8억 3,800만원을 2023.2.28.에 전액 교부하였음
<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세부내역</th><th colspan="2">한국연구재단<br>→연구수행기관</th><th colspan="7">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주관연구기관)<br>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공동연구기관)</th></tr>
<tr><th>교부날짜</th><th>금액</th><th>교부액<br>(A)</th><th>전년도<br>이월액<br>(B)</th><th>교부<br>현액<br>(C=A+B)</th><th>최종<br>집행액<br>(D)</th><th>발생<br>이자</th><th>이월액</th><th>최종<br>집행률<br>(D/C)</th></tr>
<tr><td>초전도 도체 시험설비<br>건설 및 시운전</td><td>2.28</td><td>838</td><td>838</td><td>1,706</td><td>2,544</td><td>102</td><td>2</td><td>2,442</td><td>4.0</td></tr>
</table>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br>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출연연간<br>경상운영비 편차<br>축소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출연연 공통</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결산 기준, 1인당 경상운영비가 기관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기관의 특성상 정부수탁이나 민간수탁 수주가 용이한 기관일수록 자체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고, 따라서 각 기관의 경상운영비는 해당 기관의 소요와 인력현황을 반영하여 면밀히 산정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br>-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매년 편성하여 교부하는 기관운영출연금과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주하는 수탁과제 예산으로부터 경상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br>※ 2023년 출연연의 1인당 경상운영비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기관명</th><th>인당 경상운영비</th><th>기관명</th><th>인당 경상운영비</th></tr>
<tr><td>녹색연</td><td>25.5</td><td>한의학연</td><td>16.8</td></tr>
<tr><td>에기연</td><td>24.4</td><td>지자연</td><td>16.1</td></tr>
<tr><td>안전성연</td><td>22.4</td><td>국보연</td><td>14.3</td></tr>
<tr><td>표준연</td><td>22.2</td><td>재료연</td><td>13.9</td></tr>
<tr><td>기계연</td><td>22.0</td><td>식품연</td><td>13.2</td></tr>
<tr><td>생기원</td><td>20.8</td><td>핵융합연</td><td>12.8</td></tr>
<tr><td>KIST</td><td>20.5</td><td>전기연</td><td>12.6</td></tr>
<tr><td>기초연</td><td>19.9</td><td>ETRI</td><td>12.5</td></tr>
<tr><td>철도연</td><td>19.9</td><td>김치연</td><td>12.4</td></tr>
<tr><td>화학연</td><td>19.1</td><td>건설연</td><td>11.8</td></tr>
<tr><td>생명연</td><td>18.8</td><td>천문연</td><td>9.7</td></tr>
<tr><td>원자력연</td><td>16.9</td><td>KISTI</td><td>9.6</td></tr>
<tr><td>항우연</td><td>16.9</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수입 확보능력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인 기관운영출연금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출연연 간 경상운영비 편차가 축소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출연연의 미납된<br>기술료 징수<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출연연 공통</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19~2023년 5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징수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납부되지 못한 기술료는 31억 9,200만원(47건의 기술이전 계약)임<br>※ 2019~2023년 5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현황<br>(단위: 건, 백만원)
<table>
<tr><th>기관명</th><th>당해연도 총<br>기술계약<br>건수</th><th>총 기술료<br>예산<br>수입(A)</th><th>실제 징수된<br>기술료<br>수입(B)</th><th>징수 기일이<br>미도래한<br>기술료수입(C)</th><th>미납액<br>(D=A-B-C)</th><th>기술료가<br>미납된 계약<br>건수</th></tr>
<tr><td>23개<br>정부출연연<br>구기관</td><td>9,577</td><td>513,185</td><td>471,552</td><td>38,442</td><td>3,192</td><td>47</td></tr>
</table>
주) 2024년 6월 중순 기준임<br>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료가 미납되지 않고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출연연의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임차 공유지 문제 해결 필요** | 관련사업명 | 출연연 공통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임차 공유지 마련 필요<br>- 출연연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 중 47개의 한시조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립된 조직임<br>- 지방자치단체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이하 36개 지역조직은 토지 대부기간 등이 만료될 때 토지 매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br>※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정리하도록 함(의안번호 : 2124490)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임차 공유지의 대부기간 만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PBS 개선 등 연구환경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출연연 공통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현행 PBS 제도에서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으로 도전・창의・중장기적 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성공중심・단기 연구가 집중 수행됨에 따라 연구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 있음<br>-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제도란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임<br>- PBS 제도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여 연구 지속성 저하 및 연구역량 축적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br>○ 현행 PBS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정 PBS 비중을 파악하고, 출연연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출연금 연구 사업비 총액의 묶음예산 형태의 블록펀딩 지원 방식과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 허용, 경상운영비 확대 편성 요구, 폐지된 복지제도 환원 등 기관 운영 환경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음<br>○ PBS 제도가 장기화에 따라 연구과제들이 파편화되면서 공공성이 크고 대형 장기 과제 위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본래 역할 정립과 협업을 통한 대형 R&D 참여 유도 등 PBS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 제도의 재검토 등 출연연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수시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배정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231-40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231-40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231-40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231-403) |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4개 신규 내내역사업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후 2023년 12월 26일에 배정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사업수행 및 집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br>- KAIST 혁신디지털의과학원구축 사업의 경우 '건립내용 및 지방비 지원내용 구체화 필요', DGIST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확정 필요', UNIST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의 경우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추진 필요', GIST 차세대 AI반도체 첨단공정Fab구축 사업의 경우 '부지 관련 쟁점 해소 필요'가 각각의 수시배정 대상 지정 사유였음<br>○ 기획재정부가 2022년말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한 후 2023회계연도 중 배정을 하지 않다가 회계연도 종료를 5일 앞둔 시점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수시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집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 |
| 17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1831-401) | 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br>○ 그러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고등급 지급률을 차하위 또는 최저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 운용을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등을 통해 지급기준을 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공모 필요** | 관련사업명 | 과학기술진흥기금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1744-402)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용도별로 수행 기관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각 과제마다 매년 같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을 공모절차 없이 선정하고 있음<br>-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간 공모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 | | |
| 19 |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분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744-404)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의 내역사업 중 ‘과학기술 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과학기술인력 통계 조사·분석’, ‘과학기술정책전문이력 육성·지원’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데,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을 분리하여 별도로 두거나 직접 연구개발과제의 관리·평가 등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차별성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744-404)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의 내역사업 중 ‘과학기술전문사관 모집 선발 및 교육훈련 과정 운영’이 2026년 1월 16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제도와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음<br>-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과 대상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이공계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음<br>- 두 제도 모두 후보생이 학위과정을 마치고 임관하게 되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므로 임관 후 보직 경로가 중복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제도와 차별성을 갖도록 할 것 | | |
| 21 | **과학관 수요증대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1831-402)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과학관 관람객 수가 감소한 후로 관람객 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람객 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관 수요확대를 위하여 과학관 통합플랫폼 구축, 연간회원권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2 | **과학관 간의 역량 격차 완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1831-402)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국립과학관의 경우 국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해설사, 전시기획인력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과학문화확산 및 과학교육 기능 수행이 가능한 반면, 공·사립 과학관은 기능 수행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과학관에 비하여 공·사립과학관의 전시기획인력이나 해설인력 등 전문인력의 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원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국·공립과학관 과학관 관람료 및 이용료 제한 완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1831-402)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관람료 등은 공립과학관의 자체 수입에 포함되어 해당 과학관의 운영경비에 활용되고 있는데, 공립과학관의 운영경비가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수준의 관람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임<br>○ 또한, 국립중앙과학관이나 국립과천과학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국립과학관법인도 별도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취지는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람료나 이용료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관 관람료 및 이용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4 | **울산과학기술원 인건비 지원비율 과소로 인한 연구분야 투자 부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231-403)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울산과학기술원은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다른 과학기술원과 비교(KAIST 52.9%, UNIST 44.9% GIST 57.4%, DGIST 72%)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음<br>○ 울산과학기술원은 정부수탁비 중 간접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하여 장비고도화, 연구 재투자 등 연구분야 지원경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에 어려움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성과목표를<br>달성하지 못한<br>성과의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과학기술진흥기금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1744-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은 경력복귀지원 종료 후 수혜자 취업유지율과 이공계 여성멘토링(취업탐색, 글로벌)사업 수혜자 만족도 모두 2023년 성과목표에 미달하였음
<table>
<tr><th>구분</th><th>성과목표(지표)</th><th>목표치</th><th>실적치</th><th>달성여부</th></tr>
<tr><td rowspan="2">’23년</td><td>경력복귀지원 종료 후 수혜자 취업유지율(&)</td><td>77.4</td><td>77.2</td><td>미달성</td></tr>
<tr><td>이공계 여성 멘토링(취업탐색, 글로벌) 사업 수혜자 만족도(점)</td><td>84.0</td><td>82.6</td><td>미달성</td></tr>
</table>
출처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 연차보고서</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사업의 운영방식<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4602-4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민간 R&D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R&D 수요가 추후 정부의 국가 R&D 투자 방향 설정이나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br>※ 민간 R&D 협의체 운영 내역사업 개요
<table>
<tr><td>사업 목적</td><td>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연구소(민간)의 R&D 활력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td></tr>
<tr><td>구성</td><td>선도형 연구소(상위 0%< 역량진단 결과(R) ≦20%)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br>산업별로 전문위원회(CTO급) - 실무위원회</td></tr>
<tr><td>’23년<br>사업규모</td><td>800백만원(5개 협의체에 대해 800백만원 지원<br>(산출내역 : 160백만원 × 5개 × 12/12개월 = 800백만원)</td></tr>
<tr><td>사업기간</td><td>과제당 1년</td></tr>
<tr><td>지원형태</td><td>출연</td></tr>
<tr><td>사업관리기관</td><td>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d></tr>
<tr><td>사업시행주체</td><td>산업별 R&D 민간 협의체</td></tr>
<tr><td>대표적<br>(예상)성과물</td><td>정부 R&D 사업 기획 다각화 등</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발굴된 민간의 R&D 수요가 국가 R&D 신규 사업 기획이나 R&D 투자방향,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등 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연구자권익보호 위원회 제재처분검토회의 사업 수행 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1039-401)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의 운영의 제반 사항을 KISTEP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br>- KISTEP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볼 때, 연구부정에 따른 R&D 제재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업무는 KISTEP의 업무 성격과 이질적임<br>- 또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보이는 국세청 소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해볼 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KISTEP에 출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KISTEP에 출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인원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간접비 관리 강화 방안 필요** | 관련사업명 | R&D 예산 간접비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간접비 관리 강화 필요<br>- 현행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는 산학협력단 간접비 예산의 학교회계 전출을 인정하고 있는데, 재원 구별없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기만 하면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br>-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회계로 전출된 간접비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간접비가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9 | **R&D 중간평가 내실화를 위해 특정평가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R&D 사업 공통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R&D 사업 평가 관련 : 중간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특정평가 활성화 필요<br>- 최근 5년(2020~2024년)간 R&D 중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2023년까지 미흡, 부적절(또는 매우 미흡)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2024년에는 미흡의 비율이 20%이상임<br>- 2024년부터 R&D 자체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자체평가에서 미흡의 비율을 20%이상으로 의무화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적시성있는 평가를 통한 신속한 R&D 추진을 강조하는 현행 과학기술정책 아젠다들을 고려할 때, 상대평가 도입만으로는 적시성 있는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중간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 외에 특정평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R&D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1035-401)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률이 감소하고 있고, 본예타를 통과하는 사업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예타 신청 후 결과 도출시까지 조사기간도 길어지는 등 R&D 재정이 선제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br>○ 한편, 정부는 2024년 5월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R&D 예타를 통해 충실한 사업기획 및 점검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br>○ R&D 특성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R&D 예타 통과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변경, 목표조정, 중단 등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도록 특정평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 | | |
| 31 |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1945-501)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디지털배움터 예산의 축소로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던 디지털교육이 중단되거나 수업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br>- 디지털배움터 예산이 2023년도 698억 4,000만원에서 2024년도 279억 3,600만원으로 60% 삭감되고, 디지털배움터 수는 예산상 1,000개소에서 800개소로 감소함<br>- 또한 상설 거점 디지털배움터 수를 36개소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br>○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도(%)”는 교육전 점수가 낮을수록 교육후 증가점수가 높은 향상도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축소에 따른 대책 및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사업관리 강화 및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예산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2033-300)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70.9%로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났고 일부 시도의 경우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도 있음<br>○ 지특회계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수행 전문기관(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관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집행률 부진 문제에 대응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스마트빌리지 사업수행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 |
| 33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의 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조성(2033-301)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연구집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900만원과 매칭금 5억 1,6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104억 7,500만원 중 32억 7,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31.3%)하고 71억 9,600만원을 이월함<br>○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는 향후 서비스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건축물이나, 설계범위 확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 대비 1년 지연되고 집행실적도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운영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AI정밀의료SW 선도기반조성(2233-336) |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충북지역 AI 응급의료서비스가 사업 실증 및 고도화 단계임에도 추가적인 내부 검토 등으로 운영이 지연되었음<br>- 2023년도 충북지역의 경우 171회 가동에 그쳤으며(강원지역 655회 대비), 2월부터 8월까지는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음<br>○ 2023년도는 동 사업 2차년도로서, 사업계획을 고려했을 때 보안성 검토 ·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절차는 1차년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선정 및 사업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것 | | |
| 35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액비대상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기본경비(7011-272)<br>정보통신진흥기금 -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2601-303) |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액비대상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기본경비로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을 집행함<br>-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 회의 자문료 및 심사수당,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대상자 심사수당 및 강사수당 등 2,300여만원을 집행<br>○ 국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님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노력** | 관련사업명 | 정보통신진흥기금 - 데이터 활용 의료 · 건강 생태계 조성(2601-308)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인공지능 기반 암환자 치유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수행기관이었던 인제군이 지방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됨<br>- 2023년 9월 인제군 사업 포기, 11월 강원대학교병원 재선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 | |
| 37 | **체계적인 사업관리 노력** | 관련사업명 | 정보통신진흥기금 -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2131-305)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내역사업인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의 규모를 축소(70억원→5억원)한 후 실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함<br>○ 기존 컨소시엄과의 협약 해약 등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변경된 사업 내용은 그간의 추진 내용과 상이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관련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학습용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정보통신진흥기금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602-305) |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데이터 구축·개방 및 품질관리 부실 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등록 목표량에 미달하거나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AI 데이터가 다수 있으며, 활용도가 낮은 AI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br>○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자리 창출 또한 단순 단기알바를 양산하는 등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미등록·미공개 데이터를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개방하도록 노력하고, 구축·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윤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등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
| 39 | **성과목표 수정 및 구체적인 대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601-359)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나, 선정된 과제들이 실제 국민체감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함<br>○ 해당 공무원이 포함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90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창출이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국민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수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성과를 고려한 사업추진방향 재설정 | 관련사업명 | 정보통신진흥기금 - 데이터레이크운영(2605-303)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서는 사업 성과로서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레이크를 총 5개 기관에서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레이크를 활용하여 총 4건의 서비스를 구축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축 성과 4건 중 3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혁신서비스반에서 수행하는 타 사업*에서 지원한 내용과 동일함<br>*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2605-304)<br>○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성과와 달리 타 사업에서 사업수행기관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단순 정제·축적하는 것은 사업방향과 맞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것 | | |
| 41 | AI 인재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AI 인재의 해외유출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방송통신발전기금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2133-304) 및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2232-302)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년간(2023년~2027년) AI분야 인력은 1만 2,800명이 부족하고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br>○ SW·AI 등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관련 분야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 중 AI 분야의 인재 및 사업화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여 격차가 큰 상황임<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 졸업 후 진출 분야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우리가 양성한 인재가 더 좋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찾아 해외의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AI 인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인재양성 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확대 및 AI 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취업률 조사 기준일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업멤버십SW캠프(2232-306)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취업 실적은 해당연도 교육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집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2월에 완료된 교육과정은 거의 1년이 되어서 조사를 마쳤고 이미 완료된 다수의 교육과정은 취업률 조사 기준일이 지연되었음<br>- 총 31개의 교육과정 중 27개(약 87%)는 2023년 2~4월에, 나머지 4개는 6·7월에 완료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업률 조사 기준일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성 있는 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43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2233-339)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이 전년대비 75.5% 감소한 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2024년 4월에 연구개발 목표 축소, 연구개발비 총액 감소를 반영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br>○ 동 사업의 당초 4개년도에 걸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기간 중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달성되는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4234-323)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수”로 이는 지역이 선정되기만 하면 달성되는 지표임. 즉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달성되는 지표로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검증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혁신거점으로의 입주기업 수, 지원기업 만족도, 협업 프로젝트 지원 건수 등의 산출·결과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 | |
| 45 | 신속한 연구비 정산 및 법정기한 내 회수금 반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1131-319)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3,900만원과 매칭자금 38억 4,8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292억 8,400만원 중 269억 6,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2.1%)하고 23억 1,500만원을 이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도록 관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신속한 연구비 정산 및 법정기한 내 회수금 반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2231-32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8,000만원과 매칭자 106억 2,4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1,343억 1,400만원 중 1,250억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3.1%)하고 93억 1,400만원을 이월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도록 관리할 것</td></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정보통신진흥기금 -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223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성과목표 수치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정함<br>※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기술료 징수액(R&D)<br>(10억원당 금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0.25</td><td>0.09</td><td>0.09</td><td>0.09</td><td>-</td></tr>
<tr><td>실적</td><td>1.03</td><td>0.77</td><td>0.65</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 매출액(R&D)<br>(10억원당 금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0.09</td><td>0.09</td><td>0.09</td><td>0.09</td><td>-</td></tr>
<tr><td>실적</td><td>0.55</td><td>0.09</td><td>0.39</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1131-32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성과목표 수치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정함<br>※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SCI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평균(지수)</td><td>목표</td><td>-</td><td>-</td><td>66.6</td><td>67.3</td><td>67.3</td></tr>
<tr><td>실적</td><td>-</td><td>-</td><td>66.6</td><td>67.3</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00</td><td>100</td><td>-</td></tr>
<tr><td rowspan="3">기술료 징수액<br>(10억원당 금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td><td>-</td><td>-</td><td>0.10</td><td>0.10</td></tr>
<tr><td>실적</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 매출액<br>(10억원당 금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td><td>-</td><td>0.72</td><td>0.72</td><td>0.72</td></tr>
<tr><td>실적</td><td>-</td><td>-</td><td>0.72</td><td>0.72</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00</td><td>100</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br>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1131-31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성과목표 수치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정함<br><br>※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br><br>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SCI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br>영향력 지수(mrnIF) 평균</td><td>목표</td><td>65.9</td><td>66.6</td><td>67.3</td><td>68.5</td><td>69.2</td></tr>
<tr><td>실적</td><td>72.79</td><td>68.28</td><td>75.06</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10.5</td><td>102.5</td><td>111.5</td><td>-</td><td>-</td></tr>
<tr><td rowspan="3">기술료 징수액<br>(10억원당 금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0.10</td><td>0.11</td><td>0.12</td><td>0.13</td><td>0.14</td></tr>
<tr><td>실적</td><td>0.06</td><td>0.18</td><td>0.18</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60</td><td>163.6</td><td>150</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 매출액<br>(10억원당 금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td><td>0.72</td><td>0.72</td><td>0.72</td><td>0.72</td></tr>
<tr><td>실적</td><td>0.08</td><td>0.12</td><td>0.17</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16.7</td><td>23.6</td><td>-</td><td>-</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것</td></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민간 기업<br>주도의 과제<br>수행 장려</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설계)(R&D)(2603-31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미래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메모리와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PIM)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사업임<br><br>○ 동 사업 19개 과제 중 2개 과제(10.5%)만이 중소 팹리스 업체가 수행*하였으며, 이마저도 1개 기업이 수행함<br>* 대학 15개, 출연연 · 전문연 2개, 중소 팹리스 업체 2개<br><br>○ 다양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기술 상용화 성공률이 제고되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민간 팹리스 업체의 참여를 보다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각목명세서 및<br>결산 심사자료<br>구체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2137-3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내역사업인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출연기관(NIPA)이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수행기관(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GDIN)과 협약을 맺고 후속지원을 수행토록 하는 형태로 추진됨<br>❍ 그런데 실집행 내용과 달리 동 사업 각목명세서에는 수행기관 운영에 소요된 비용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br>※ 각목명세서 소요 비용 내역
<table>
<tr><th>세사업명</th><th>예산</th></tr>
<tr><td>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td><td>o 해외시범서비스 신규 구축 지원 : 700백만원x3개과제<br>o 해외시범서비스 구축 확산 지원 : 400백만원x3개과제</td></tr>
<tr><td>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td><td>o DNA 기업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운영 지원 : 100백만원x10개사<br>o DNA 기업 해외 기설립 조인트벤처 안착성장 후속지원 : 100백만원x6개사</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산출 내역을 각목명세서에 명시하고, 국회에 제공하는 결산 심사자료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td></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법률상 근거<br>없는<br>관리위탁수수료<br>충당 시정 및<br>모니터링·조정<br>체계 구축</td><td>관련사업명</td><td>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2133-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자금관리업무를 기업은행에 법률상 근거 없이 재위탁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성격의 관리위탁수수료를 기업은행이 융자원리금으로 직접 충당하도록 허용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위탁의 법률상 근거 없이 관리위탁수수료를 원리금에서 직접 충당하는 실태를 시정하고, 융자취급수수료율의 적정 수준 모니터링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기 투입 연구비<br>매몰비용화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정보통신진흥기금 -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 · 서비스 개발지원(R&D)(2133-30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계획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됨<br>※ 2023년 및 2024년 예산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2023년 계획액</th><th>2023년 초 기준<br>중기재정계획상<br>2024년 예산계획</th><th>2024년 예산액</th></tr>
<tr><th>2,672백만원</th><th>4,600백만원</th><th>336백만원</th></tr>
<tr><td>신규수요R&BD</td><td><신규><br>- (1단계)<br>572백만원(8개×143백만원×6/12개월)<br>- (2단계)<br>420백만원(4개×420백만원×3/12개월)<br><계속><br>-1,680백만원(4개×420백만원×12/12개월)</td><td><신규><br>- (1단계)<br>715백만원(10개×143백만원×6/12개월)<br>- (2단계)<br>525백만원(5개×420백만원×3/12개월)<br><계속><br>-1,680백만원(4개×420백만원×12/12개월)</td><td><종료><br>336백만원(4개×84백만원×12/12개월)</td></tr>
<tr><td>기존성과R&BD</td><td></td><td><계속><br>-1,680백만원(4개×420백만원×12/12개월)</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투입된 연구비가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를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4</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정보통신진흥기금 -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 · 서비스 개발지원(R&D)(2133-30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차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됨<br>※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 ·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기술사업화 성공률<br>(단위: %)</td><td>목표</td><td>-</td><td>(신규)</td><td>45.4</td><td>50.0</td><td>54.9</td></tr>
<tr><td>실적</td><td>-</td><td>-</td><td>66.7</td><td>80.0</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46.8</td><td>160</td><td></td></tr>
<tr><td rowspan="3">신규고용인력<br>(단위: 명)<br>(‘21~‘22)</td><td>목표</td><td>-</td><td>5.84</td><td>6.01</td><td>(종료)</td><td></td></tr>
<tr><td>실적</td><td>-</td><td>12</td><td>35</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205.5</td><td>582.4</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 매출액<br>(단위: 억원/10억원)<br>(‘23~‘25)</td><td>목표</td><td>-</td><td>(신규)</td><td>1.28</td><td>1.66</td><td>2.15</td></tr>
<tr><td>실적</td><td>-</td><td>-</td><td>1.75</td><td>2.42</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36.7</td><td>145.8</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할 것</td></tr>
<tr><td rowspan="3">55</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2132-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차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됨<br>※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특허출원<br>(단위: 건 )</td><td>목표</td><td>1.65</td><td>(종료)</td><td>-</td><td>-</td><td>-</td></tr>
<tr><td>실적</td><td>2.29</td><td>-</td><td>-</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38</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시제품 제작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율<br>(단위: % )</td><td>목표</td><td>(신규)</td><td>100</td><td>100</td><td>100</td><td>-</td></tr>
<tr><td>실적</td><td>-</td><td>100</td><td>100</td><td>100</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100</td><td>100</td><td>100</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매출액<br>(단위: 억원 )</td><td>목표</td><td>(신규)</td><td>1.80</td><td>1.89</td><td>1.98</td><td>-</td></tr>
<tr><td>실적</td><td>-</td><td>1.80</td><td>2.17</td><td>2.13</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100</td><td>114</td><td>107</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정보통신진흥기금 -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2132-3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차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됨<br>※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사업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신규 고용창출<br>(단위 : 명)</td><td>목표</td><td>신규</td><td>8</td><td>2</td><td>4</td><td>-</td></tr>
<tr><td>실적</td><td>-</td><td>66</td><td>44</td><td>22</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825</td><td>2200</td><td>550</td><td>-</td></tr>
<tr><td rowspan="3">전담 시장전문가 -수행기관 만족도<br>(단위 : 점)</td><td>목표</td><td>신규</td><td>76</td><td>79</td><td>82</td><td>85</td></tr>
<tr><td>실적</td><td>-</td><td>91.3</td><td>93.6</td><td>98.6</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120.1</td><td>118%</td><td>120%</td><td>-</td></tr>
<tr><td rowspan="3">연구개발계획의 시장수요예측 반영률<br>(단위 : %)</td><td>목표</td><td>-</td><td>신규</td><td>80</td><td>80</td><td>80</td></tr>
<tr><td>실적</td><td>-</td><td>-</td><td>91.5</td><td>91.8</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14%</td><td>115%</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성공률<br>(단위 : %)</td><td>목표</td><td>-</td><td>신규</td><td>50</td><td>63</td><td>85</td></tr>
<tr><td>실적</td><td>--</td><td>-</td><td>60</td><td>83</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20%</td><td>132%</td><td>-</td></tr>
<tr><td rowspan="3">정부출연금 10억원당 사업화매출액<br>(단위 : 억원)</td><td>목표</td><td>-</td><td>신규</td><td>2.3</td><td>3</td><td>3</td></tr>
<tr><td>실적</td><td>-</td><td>-</td><td>2.9</td><td>3.4</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26%</td><td>113%</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7</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방송통신발전기금 -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2133-30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차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됨<br>※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특허성과<br>질적분석결과<br>평균점수<br>(단위: 점)</td><td>목표</td><td>신규</td><td>4.0</td><td>4.2</td><td>4.41</td><td>4.63</td></tr>
<tr><td>실적</td><td>-</td><td>4.42</td><td>4.77</td><td>(조사중)</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111%</td><td>114%</td><td>(조사중)</td><td>-</td></tr>
<tr><td rowspan="3">정부출연금 10억원당<br>사업화매출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신규</td><td>2.78</td><td>3.06</td><td>3.37</td><td>3.70</td></tr>
<tr><td>실적</td><td>4.86</td><td>23.12</td><td>33.79</td><td>(조사중)</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831%</td><td>1,104%</td><td>(조사중)</td><td>-</td></tr>
<tr><td rowspan="3">정부출연금 10억원당 신규고용<br>(단위: 명)</td><td>목표</td><td>10</td><td>6.86</td><td>5.63</td><td>-</td><td>-</td></tr>
<tr><td>실적</td><td>18.1</td><td>14.5</td><td>9.13</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81%</td><td>212%</td><td>162%</td><td>-</td><td>-</td></tr>
<tr><td rowspan="3">컨소시엄<br>만족도<br>(단위: 점)</td><td>목표</td><td>73</td><td>82</td><td>86</td><td>-</td><td>-</td></tr>
<tr><td>실적</td><td>88.8</td><td>92.4</td><td>98.5</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22%</td><td>113%</td><td>115%</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성과지표 실효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방송통신발전기금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2133-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차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됨<br><br>※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성과지표 현황<br><br>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매칭지원 비율<br>(단위: % )</td><td>목표</td><td>20</td><td>30</td><td>(종료)</td><td>-</td><td>-</td></tr>
<tr><td>실적</td><td>29</td><td>32.4</td><td>-</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145</td><td>108</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br>성공률<br>(단위: %)</td><td>목표</td><td>-</td><td>(신규)</td><td>55.8</td><td>61.3</td><td>67.5</td></tr>
<tr><td>실적</td><td>-</td><td>-</td><td>57.4</td><td>61.9</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02.9</td><td>100.9</td><td>-</td></tr>
<tr><td rowspan="3">사업화<br>매출액<br>(단위: 억원)</td><td>목표</td><td>-</td><td>(신규)</td><td>4.05</td><td>4.46</td><td>4.91</td></tr>
<tr><td>실적</td><td>-</td><td>-</td><td>5.97</td><td>21.5</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147.4</td><td>482.1</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할 것</td></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도전적·중장기적 성과지표 설정 및 전략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방송통신발전기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2135-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시장수요가 명확하나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위험·도전형 ICT R&D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함<br><br>○ 동 사업 성과지표인 ‘등록특허 질적지수(SMART)’, ‘논문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10억원당 기술료 성과’ 등은 다른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고위험·도전형 과제에 초점을 둔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br><br>- 2023년 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일몰관리혁신 중간점검 결과, 동 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타 연구개발사업들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고위험·도전형 원천연구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등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를 보다 도전적·중장기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사업 조기 추진 노력**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서명인증(1935-503)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내역사업인 ‘디지털 인증간 상호연동 지원체계 마련’에서는 디지털인증확산센터 신규 구축 용역을 계획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br>○ 계약절차 지연으로 2023년도 용역계약이 11월에 체결되는 등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 |
| 61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태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2333-307)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임<br>○ 2023년도 16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 11개 사건에 대하여 조정부를 조정위원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하였는데, 이는 조정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태를 개선할 것 | | |
| 62 | **연구비 정산 관련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2132-301)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과제 중 2021년 종료과제 4개(21억 5,000만원), 2022년 종료과제 7개(47억 7,500만원)는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반영이 누락되었고, 2023년 종료과제 71개(763억 5,900만원)는 정산이 완료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결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3 | **연례적 인건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431-302)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내역사업은 보편적역무의 손실보전금과 접속료에 대한 원가 검증·조사를 통해 통신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br>○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내역사업에 2023년 공무직 근로자 3인에 대한 인건비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8,930만원(57.6%)만 집행되었음<br>○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연례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내역사업에서 채용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지속적 처우개선과 함께 채용공고 게시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례적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 | |
| 64 | **통신사업자의 분담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 손말이음센터 운영체계 마련**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3231-305)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다른 청각·언어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사가 실시간으로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br>○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 예산은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중계사 인건비와 통신사업자가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구성됨<br>○ 손말이음센터의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대국민 인지도가 낮아서 홍보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중계사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상으로는 서비스 지원 자원이 제약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 분담금 규모를 제고하려는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5 | **OTT컨텐츠 보조금 교부 요건 강화 등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콘텐츠 진흥(1131-301)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CA는 ‘OTT특화-제작지원’으로 집행된 보조금의 지원조건으로 ①총 제작비의 20%는 자부담하고, ②2025년 12월 이내에 OTT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지원받은 11편 중에서 3편은 2024년 8월 현재까지도 방영계획이 잡혀있지 않거나 방영 OTT가 확정되지 않고 있음<br>- 내역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국내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는 보조사업자 KCA가 해외진출형 및 공익형 방송콘텐츠 99편에 대하여 11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에서 ‘OTT특화형-제작지원’은 국내 방송·제작사-OTT플랫폼사 컨소시엄의 OTT컨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접수편수 69편 중 11편을 선정하여 총 48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음<br>- 보조사업자인 KCA는 간접보조사업자와 협약서를 통해 협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작지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OTT특화-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향후 미이행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고, OTT 컨텐츠 제작 여건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용용도 중 인건비성 경비의 비중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제공기한을 단축하는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법적의무 추진 사업의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콘텐츠 진흥(1131-301)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파법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연간 총 300억원 규모로 추진되던 사업이 올해 179억원 규모로 축소되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음<br>- 내역사업 중 차세대방송성장기반조성,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해외한국어방송지원, OTT해외진출 기반조성 예산이 사라짐<br>- 특히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상 과기부 장관의 의무사항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적 의무 추진 사업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 |
| 67 | **2023년 및 2024년도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술변화 선도형 방송·미디어 장비 기술개발(2531-334)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총 4년의 사업기간 중 1단계(2023년~2024년)의 목표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이는 성과평가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사업연도에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8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2531-302)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항목에서 수행실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서 체결된 총 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중 2건의 계약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수행실적을 포함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계약규정을 준수할 것 | | |
| 69 | **우체국 건립 및 재건축 추진시, 주민 복지·편의시설 설치 공간 제공 확대** | 관련사업명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건립(5143-411)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우체국건립 사업에서 노후 집배관서 신·개축은 23국(계속사업 17국, 신규사업 6국. 780억원)이며, 노후 창구국 재건축은 50국(신규사업. 938억 6,2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체국 건립 및 재건축 추진시 다른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 복지·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0</td><td rowspan="3">국회의 의결 없이<br>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br>민간재원 차입 문제</td><td>관련사업명</td><td>정보통신진흥기금 - 기타민간차입금(82-824)</td><td rowspan="3">주의,<br>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1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예산총칙에 없는 것으로서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반함<br>- 「국가재정법」 제18조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 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또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금은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민간차입금 현황에도 누락되어 있음<br>-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입 · 세출 외로 운용’ 되며,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는 민간재원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함<br>※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현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차입기간</td><td>○ 2023.11.23. ~ 2026.11.22. (36개월)</td></tr>
<tr><td>차입금액</td><td>○ 250,000백만원</td></tr>
<tr><td>이자율</td><td>○ 연 4.04%, 고정 금리</td></tr>
<tr><td>이자납부방식</td><td>○ 2024.1.25. 최초 납부 이후 매 3개월마다 납부</td></tr>
<tr><td>상환방식</td><td>○ 3년 거치 후 차입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금 수지를 개선할 것(제도개선)<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 보험적립금 차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2023년 정보통신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금을 ‘기타민간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1</td><td rowspan="3">추가적인<br>사업지연 방지<br>및 실집행<br>가능성을 고려한<br>예산 지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R&D)(1235-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중간설계단계의 건축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간 소요에 따라 중간설계 일정이 지연(2023.6.→2023.9.)되어 이월금 발생이 예상되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을 거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2023년 12월 22일 당시 예산 집행잔액 542억 6,800만원을 전액 교부함<br>- 결과적으로 2023년 실집행률은 17.8%(2023년 예산현액 1,024억 6,300만원 중 182억 5,700만원 실집행)이며, 약 843억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br>※ 2023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부처 교부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1차</th><th>2차</th><th>3차</th><th>4차</th><th>5차</th><th>6차</th><th>합계</th></tr>
<tr><td>교부일</td><td>3.2.</td><td>4.3.</td><td>4.21.</td><td>9.27.</td><td>10.18.</td><td>12.22.</td><td>-</td></tr>
<tr><td>교부액</td><td>290</td><td>175</td><td>116</td><td>3,554</td><td>1,597</td><td>54,268</td><td>60,000</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도관리를 강화하고,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구개발비 예산을 지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2</td><td rowspan="3">제재부가금 및<br>연구개발비<br>환수금의<br>미수납문제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과기부 소관 R&D 사업 전체</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18년부터 제재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 중 납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아직 국고에 반납되지 못한 미환수금(D)은 30억 2,400만원임<br>-「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br>※ 2018~2023년 제재처분 받은 R&D 과제 현황<br>(단위: 백만원, %, 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당해년도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A)</th><th rowspan="2">연구수행기관이 납부한 환수금**(B)</th><th colspan="3">미환수금 (C=B-A)</th><th rowspan="2">미환수율 (C/A)</th><th rowspan="2">미환수율 (D/A)</th><th rowspan="2">미환수과제수</th></tr>
<tr><th></th><th>납기가 도래한 금액(D)</th><th>납기가 미도래한 금액(납부유예액) (C-D)</th></tr>
<tr><td>2018</td><td>3,432</td><td>1,892</td><td>1,540</td><td>1,520</td><td>20</td><td>44.8</td><td>44.2</td><td>8</td></tr>
<tr><td>2019</td><td>4,656</td><td>2,195</td><td>2,460</td><td>845</td><td>1,615</td><td>52.8</td><td>18.1</td><td>15</td></tr>
<tr><td>2020</td><td>1,997</td><td>1,491</td><td>506</td><td>157</td><td>349</td><td>25.3</td><td>7.8</td><td>7</td></tr>
<tr><td>2021</td><td>2,476</td><td>2,419</td><td>57</td><td>57</td><td>0</td><td>2.3</td><td>2.3</td><td>4</td></tr>
<tr><td>2022</td><td>1,231</td><td>1,230</td><td>1</td><td>1</td><td>0</td><td>0.1</td><td>0.1</td><td>1</td></tr>
<tr><td>2023</td><td>1,026</td><td>582</td><td>444</td><td>444</td><td>0</td><td>43.3</td><td>43.3</td><td>1</td></tr>
<tr><td>계</td><td>14,818</td><td>9,816</td><td>5,008</td><td>3,024</td><td>1,984</td><td>33.8</td><td>20.4</td><td>36</td></tr>
</table>
* 환수금 : 제재부가금 + 연구개발비 환수금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은 제외함)<br>** 연구수행기관이 부처에 최종적으로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즉, 국고 반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환수금)<br>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td><td></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 중 미환수금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td><td></td><td></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R&D 종료과제 대상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공통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0년 ~ 2023년 R&D 종료과제 중 2024년 5월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1,806개이고 정산완료 과제 중에서도 정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42억 3,100만원으로 상당한데, 이는 정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임<br>-「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은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R&D 종료과제의 정산완료기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정산완료 기한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4 |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1159-425)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초고성능 컴퓨터 6호기 시스템 구매입찰이 4차례 진행되었으나 챗GPT 등 수요 폭증과 공급 문제로 핵심부품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4차례 모두 유찰*되면서,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기반시설 구축비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 92억 4,300만원이 발생함<br>- 그러나 부처 및 한국연구재단은 사업비 184억 2,300만원을 전액 연구수행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교부함에 따라 약 3,793만원의 이자가 발생함<br>* 초고성능 컴퓨터 6호기 시스템 유찰 현황 : 1차 공고(2023.5.31.~7.26., 무응찰), 2차공고(2023.7.27.~8.8., 무응찰), 3차 공고(2023.9.14.~10.26., 무응찰), 4차 공고(2023.10.27.~11.7., 무응찰)<br>○ 사업예산이 증액되어야 2024년 3분기부터 시스템 구매계약 조달 수수료 및 선금 지급 등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br>- 기획재정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SITEP)은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2024년 3월부터 추진 중이며 9월에 재검토가 종료될 예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사업비 조정 이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하여금 집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국고로 반납하도록 조치할 것<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이 추가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5</td><td rowspan="3">연구비<br>집행내역의<br>Ezbaro 적시<br>등록 및<br>해외기관과의<br>조기 계획수립<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R&D)(4731-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총 283개 과제 중 최종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89개이며, ① 2023년도 4분기 개시 과제가 48건, ② 상대측 연구자와 인력교류 활동 일정이 2024년 2월 이후에 계획된 과제가 14건이고, ③ 통합 Ezbaro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구비 등록이 연동되지 않아 집행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례도 27건으로 나타남<br>※ 내역사업별 최종집행률 50% 미만인 과제 사유 현황<br>(단위: 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과제수</th><th colspan="3">집행부진사유</th></tr>
<tr><th>2024년에 연구활동 개시</th><th>상대측 연구자와 2024.2. 이후에 일정 합의</th><th>통합 Ezbaro 연구비 미등록</th></tr>
<tr><td>공동연구</td><td>54</td><td>27</td><td>-</td><td>27</td></tr>
<tr><td>인력교류</td><td>25</td><td>11</td><td>14</td><td>-</td></tr>
<tr><td>협력센터</td><td>2</td><td>2</td><td>-</td><td>-</td></tr>
<tr><td>협력활동</td><td>8</td><td>8</td><td>-</td><td>-</td></tr>
<tr><td>계</td><td>89</td><td>48</td><td>14</td><td>27</td></tr>
</table>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br>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일정 지연 등 외부변수를 고려하여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독려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6</td><td rowspan="3">해외기관과의<br>조기 계획<br>조율을 통한<br>면밀한 사업준비<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1436-40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32.7%로 저조하며, 과제공고 또는 해외 국가와의 계약 지연으로 이하 7개 과제는 최종집행률이 30% 미만으로 특히 부진함<br>※ 2023년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사업 최종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구수행<br>기관명</th><th>해외<br>국가명</th><th>연구과제명</th><th>교부<br>현액<br>(A)</th><th>최종<br>집행<br>액<br>(B)</th><th>최종<br>집행<br>률<br>(B/A)</th></tr>
<tr><td>한국원자력<br>연구원</td><td>미국</td><td>수소화물재배열 조사 시험자료 분석 및<br>미조사 시편 장기 냉각거동 연구</td><td>239</td><td>39</td><td>16.4</td></tr>
<tr><td>한국원자력<br>연구원</td><td>영국</td><td>방사성핵종 흡착기작 규명 및 측정을 위한<br>국제협력연구</td><td>188</td><td>43</td><td>23.0</td></tr>
<tr><td>한국원자력<br>연구원</td><td>영국</td><td>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캐니스터의 방열,<br>차폐 성능 향상 및 저장부지 조밀화를 위한<br>흑연-보론 복합 차폐소재 개발</td><td>188</td><td>34</td><td>18.2</td></tr>
<tr><td>한국원자력<br>연구원</td><td>RCA<br>회원국</td><td>아태지역 원자력공동연구 싱크탱크 육성 및<br>운영</td><td>600</td><td>112</td><td>18.7</td></tr>
<tr><td>한국원자력<br>연구원</td><td>RCA<br>회원국</td><td>전자선기술을 이용한 수질정화 기술지원 및<br>공동연구</td><td>200</td><td>26</td><td>13.0</td></tr>
<tr><td>한국과학<br>기술원</td><td>RCA<br>회원국</td><td>이동형 X-선 진단장치를 위한 인공지능<br>기반의 자동 판독 프로그램 및<br>핵심요소기술개발</td><td>200</td><td>5</td><td>2.7</td></tr>
<tr><td>한국원자력<br>연구원</td><td>미국</td><td>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br>타당성 한미공동연구</td><td>2,200</td><td>-</td><td>0.0</td></tr>
</table>
주) 최종집행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br>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기에 해외기관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7</td><td rowspan="3">글로벌 R&D 사업 수행 해외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초연구기반구축(1235-4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초연구기반구축’의 내역사업인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사업의 연구수행기관 단위에서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9억 9,500만원 중 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음<br>- 해외연구시설의 고장 및 사용가능일수 감소, 2023년 연내 해외연구시설 사용할당 미결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집행이 부진한 과제들은 해외기관과의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임<br>※ 연구수행기관별 집행부진 사유<br>(단위: 개)
<table>
<tr><th>합계</th><th>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연구시설 사용이 어려워 2022년 예산이 2023년으로 이월</th><th>학생연구원 개인사정으로 파견 일정 조정 (’23년→’24년)</th><th>해외연구시설 사정(고장, 사용가능일수 감소 등)으로 일정 지연</th><th>2023년 연내 해외연구시설 사용할당 미결정</th><th>(중복)</th></tr>
<tr><td>21</td><td>8</td><td>6</td><td>6</td><td>12</td><td>11</td></tr>
</tabl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 초기부터 해외기관과의 조율을 통하여 보다 면밀히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8</td><td rowspan="3">원자력시설<br>인허가 심사<br>이후 사업<br>추가지연 방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원자력시설 폐기물종합관리시설 및 원자력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사업은 원자력시설 인허가 취득 심사가 지연되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023년 예산현액 58억 7,900만원 및 191억 3,3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이월됨<br>※ 인허가 취득 심사 당초 계획 대비 지연 현황
<table>
<tr><th>시설명</th><th>구분</th><th>당초 계획</th><th>지연 계획</th></tr>
<tr><td rowspan="2">원자력시설<br>폐기물종합<br>관리시설</td><td>기본/실시설계 및 원자력시설<br>인허가 취득<br>※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br>진행 중(2020.9~)</td><td>2018.1. ~ 2019.12.</td><td>2018.1. ~ 2023.12.</td></tr>
<tr><td>공사발주/계약 및 장비 도입</td><td>2020.1. ~ 2021.12.</td><td>2024.1. ~ 2025.12.</td></tr>
<tr><td rowspan="5">원자력<br>폐기물<br>감용실험동</td><td>기본/실시설계 및 원자력시설<br>인허가 취득<br>※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br>진행중(2021.9~)</td><td>2020.5. ~ 2021.12.</td><td>2020.5. ~ 2024.3.</td></tr>
<tr><td>설계적정성 검토</td><td>2021.1. ~ 2021.6.</td><td>2024.1. ~ 2024.5.</td></tr>
<tr><td>기재부 총사업비 협의</td><td>2021.7. ~ 2021.10.</td><td>2024.6. ~ 2024.8.</td></tr>
<tr><td>공사발주/계약 및 장비 도입</td><td>2022.1. ~ 2023.12.</td><td>2024.9. ~ 2026.12.</td></tr>
</table>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9</td><td rowspan="3">금융투자국사<br>건축일정<br>추가지연 방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금융투자국사 건립(5261-37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서울시 건축심의 지연 및 공사계약 유찰로 인하여 예산현액 92억 7,000만원 중 16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7.3%)됨<br>❍ 또한 동 사업은 2022년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지연 및 2023년 서울시 건축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2021년 2,498억 2,600만원에서 2024년 8월 기준 2,817억 6,900만원으로 증가되었음<br>※ 금융투자국사 건립사업 집행실적<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2023년도</th><th rowspan="2">2024년도<br>예산안</th></tr>
<tr><th>예산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현액<br>(A)</th><th>집행액<br>(B)</th><th>집행률<br>(B/A)</th><th>이월액</th></tr>
<tr><td>기본조사<br>설계비</td><td>2,066</td><td>-</td><td>2,066</td><td>18</td><td>0.9</td><td>2,048</td><td>500</td></tr>
<tr><td>실시설계비</td><td>-</td><td>1,574</td><td>1,574</td><td>1,574</td><td>100.0</td><td>-</td><td>-</td></tr>
<tr><td>공사비</td><td>4,940</td><td>-</td><td>4,940</td><td>-</td><td>0.0</td><td>4,940</td><td>24,500</td></tr>
<tr><td>감리비</td><td>500</td><td>-</td><td>500</td><td>-</td><td>0.0</td><td>500</td><td>1,700</td></tr>
<tr><td>시설부대비</td><td>190</td><td>-</td><td>190</td><td>10</td><td>5.3</td><td>180</td><td>120</td></tr>
<tr><td>합계</td><td>7,696</td><td>1,574</td><td>9,270</td><td>1,602</td><td>17.3</td><td>7,668</td><td>26,820</td></tr>
</table>
주) 집행액은 2023.12.31. 기준임<br>자료 : 우정사업본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우정사업본부는 건축심의 지연 및 공사입찰 유찰 등으로 추가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0 |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관리 철저 및 전문기관의 수익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금융투자국사 건립(5261-377)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금융투자국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체부지(1989년 380억원 취득)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낮은 수익목표(4.5%)를 설정하였음<br>- 이는 외부 전문기관 없이 우정사업본부 자체 분석만으로 수익성 변동을 예측한 것으로, 민간 개발사업에서는 자체부지일 경우 최소 15% 이상의 수익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정사업본부는 현실적 수익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의 수익성 검토를 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8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3호 기술료 집행 법정비율 타당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는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부지분기술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3개 기관에 불과함<br>※ 3개 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br>○ 동 규정에 따른 법정비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관 사정을 고려한 집행 등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고, 정부지분기술료 총액이 큰 기관의 경우 10% 이상을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비율인 10% 이상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2 |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용도 중 기관발전사업 범위 명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13개 출연연구기관은 청사이전사업, 정보보안 시스템, 주차장 환경개선, 기숙사 증축,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연구개발적립금의 성격과 무관한 경상적 경비에 지출 또는 지출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있음<br>-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수행되는 기관발전사업은 적립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시설 구축 및 장비 도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재원임<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용도를 ‘기관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해석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관고유연구 및 교육훈련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적립금의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생긴 문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연구개발적립금을 R&D와 무관한 경상경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기관발전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3 |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투입 재정이 매몰화 된 것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과기부 소관 R&D 사업 공통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4년 R&D 계속과제 연구비 감액으로 인하여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년까지 해당 과제에 투입한 R&D 재원이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음<br>- 2023년 수행과제 중 1만 1,851개 과제의 2024년 연구개발비가 감액되었고, 일부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됨<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협약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였으나,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과 과제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연구개발목표가 하향 조정된 과제들에 대한 성과분석 및 관리를 면밀히 수행할 것<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4</td><td rowspan="3">협약변경으로 인한 향후 절차 지연 방지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Net-Zero 대응 미세먼지저감 기술개발(R&D)(1531-415)</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신규과제의 선정평가 이후 2024년 동 사업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70% 감액 편성되면서 착수 5개월 만에 연구개발비와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협약변경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연구개시 시점이 지연되었음(2023년 예산액 20억원, 2024년 예산액 6억원)<br>※ Net-Zero 대응 미세먼지저감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개시 지연 현황
<table>
<tr><th>구분</th><th>과제<br>공고</th><th>선정<br>평가</th><th>결과<br>확정</th><th>결과<br>발표</th><th>협약<br>체결</th><th>연구개시</th><th>1차년도<br>협약기간</th></tr>
<tr><td>계획</td><td>2023.5.</td><td>2023.7.</td><td>2023.7.</td><td>2023.7.</td><td>2023.7.</td><td>2023.7.</td><td>2023.7.~12.</td></tr>
<tr><td>변경</td><td>-</td><td>2023.7.</td><td>2023.9.19.</td><td>2023.10.12.</td><td>2023.10.27.</td><td>2023.10.27.</td><td>2023.10.<br>~2024.3.</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비와 목표를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지연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5 | **기 구축 장비 활용방안 및 연구목표 미달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R&D)(2601-313)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 100억원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어 이를 통해 컴퓨팅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6개 우수 연구팀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86% 삭감된 14억원으로 결정되면서 후속연구 지원 과제의 연구목표를 하향조정하였고 2024년 챌린지 대회도 개최하지 못함<br>- 동 사업은 미래 핵심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으로, 공개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연구팀을 선발하고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됨<br>○ 이에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에 구축된 컴퓨팅 자원 인프라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 구축된 컴퓨팅 자원의 활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6</td><td rowspan="3">장비 구매대금의<br>실제 지급시기<br>고려 및<br>연구시설·장비<br>본심의 이후<br>적정 예산편성<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신융화합물반도체 연구파운드리 기술개발(R&D)(2132-33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 73억 8,000만원에 2024년 및 2025년에 집행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편성하고, 연구개발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br><br>※ 2022~2024년 장비구매금액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br><table><tr><th>구분</th><th>2022년 지급</th><th>2023년 지급</th><th>2024년<br>지급(예정)</th><th>2025년<br>지급(예정)</th><th>합계</th></tr><tr><td>2022년 예산</td><td>2,952</td><td>1,925</td><td>277</td><td>-</td><td>5,154</td></tr><tr><td>2023년 예산</td><td>-</td><td>1,972</td><td>2,209</td><td>3,199</td><td>7,380</td></tr><tr><td>2024년 예산</td><td>-</td><td>-</td><td>3,580</td><td>4,420</td><td>8,000</td></tr></table>주: 연도별 지급규모에는 정부 연구비 외에 이자 및 자부담을 포함함<br>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br>❍ 또한 2022년 2월에 작성된 연구개발계획서에 1억원 이상 5종의 장비가 구체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시설·장비 도입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br><br>* 3종 : 미세패턴 검사장비, 절연막 건식 식각기, 반도체기판 건식 식각기</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질적인 대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본심의를 거쳐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7 | **전력료 부족으로 인한 포항가속기 중단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R&D)(1235-411)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예산(614억 4,900만원) 중 전력료 예산은 총 102억원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전력료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약 3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3세대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운영이 계획 대비 약 30일 가량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속기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료 경비의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88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601-359)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과제에 대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2023년 4월에 이루어지고 7월에 비로소 시작하였는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었음<br>○ 또한 2023년 3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9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6개 프로젝트에 12억 6,4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불용액(11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9</td><td rowspan="3">예산 편성시<br>신규과제<br>선정기간 및<br>연구진행기간을<br>고려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집단연구지원(R&D)(1234-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혁신현구센터(IRC)’ 내역사업은 예산 편성 시 과제 선정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과제 개시가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당해연도 연구비가 단가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됨<br>- 예산 계획 상 2023.4.1.부터 9개월 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당초 계획과 달리 9월 1일부터 6개월간 과제당 3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원단가가 상향되었음<br>※ 2023년 글로벌 IRC 예산 산출내역 및 실제 집행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산출내역</th><th>협약기간</th><th>금액</th></tr>
<tr><td>예산</td><td>(신규) 3개 × 5,000백만원 × 9/12개월</td><td>2023.4.1.~12.31.</td><td>11,250</td></tr>
<tr><td>집행</td><td>(신규) 3개 × 7,500백만원 × 6/12개월</td><td>2023.9.1.~2024.2.29.</td><td>11,250</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편성시 신규과제 선정기간과 실제 연구진행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0 | **사업방식 재검토 및 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과학관활성화 지원(1831-402)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3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3차례 공모를 시행하였음에도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적합한 지자체를 찾지 못해 2개 신규 공간을 조성하지 못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br>- 1차 공모 시 영월·문경·안동을 선정하였으나, 문경·안동의 경우 보조사업 외 활용 승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br>- 2차 공모 시에는 신정 지자체가 없었으며, 3차 공모에 신청한 순천의 경우 콘텐츠 부적합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적기 확충을 위해 사업방식 변경 및 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1 | **우체국 건립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건립(5143-411)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Barrier Free) 예비인증 지연 등으로 1차년도(2023년) 50개소 중 완공비율이 58%에 불과함<br>- 2023년 예산현액 1,915억 3,700만원 중 1,287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2%)되고 397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30억 1,300만원은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정사업본부는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완공비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 | | |
| 92 | **성과평가 결과의 R&D 예산 환류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1035-401)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법」상 평가결과의 R&D 예산 환류 강화 필요<br>-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음<br>- '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사업 중 자체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부여받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적절성 검증 결과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 11개의 사업 중 10개의 사업이 '24년 예산 편성에서 대폭 삭감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R&D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3</td><td rowspan="3">정부지원<br>연구개발비<br>발생이자의<br>관리에 관한<br>「국가연구개발혁<br>신법 시행령」<br>제20조제3항<br>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지원연구개발비(R&D 사업비)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집행 또는 국고반납 여부를 과거 20여년 간 연구수행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br>- 발생이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3항 각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2023년 총 발생이자 528억 4,946만원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음<br>※ 2023년 연구수행기관 연구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br>발생이자</th><th colspan="5">「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3항</th></tr>
<tr><th>제1호</th><th>제2호</th><th>제3호</th><th>제4호</th><th>제5호</th></tr>
<tr><td>해당 연구개발<br>과제의 연구<br>개발비에 산입</td><td>연구개발에<br>재투자</td><td>연구개발성과의<br>창출지원, 보호,<br>활용역량의 강화</td><td>국고반납</td><td>그 밖에<br>중앙행정기관 장의<br>승인을 받은 용도</td></tr>
<tr><td>52,849</td><td>24,464</td><td>5,336</td><td>55</td><td>22,392</td><td>603</td></tr>
</table>
❍ 또한 동 시행령에 따라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재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국고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회의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연구수행기관은 국고금을 조기에 교부받아 연구비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을 늘려 사업비를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은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투자를 허용하고, 당해 집행내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여 후속 점검을 받도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br>제3항 규정을 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94</td><td rowspan="2">집행이 부진한<br>시설사업의<br>실집행상황을<br>고려한 출연금<br>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td><td rowspan="2">주의</td><td rowspan="2">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 중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시설사업은 이하 12개 사업임<br>※ 25개 출연연 중 시설사업 집행률 60% 미만 기관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사업명<br>(기관명)</th><th colspan="3">예 산</th><th rowspan="2">실집행액<br>(B)</th><th rowspan="2">실집행률<br>(B/A)</th><th rowspan="2">미집행액<br>(A-B)</th></tr>
<tr><th>전 기<br>이월액</th><th>2023년<br>예산액</th><th>계<br>(A)</th></tr>
<tr><td>글로벌 기숙사 리모델링(KIST)</td><td>1</td><td>2,762</td><td>2,763</td><td>612</td><td>22.1</td><td>2,151</td></tr>
<tr><td>연구동 환경개선사업Ⅳ(KIST)</td><td>-</td><td>4,423</td><td>4,423</td><td>597</td><td>13.5</td><td>3,826</td></tr>
<tr><td>연구1동증축사업(기초연)</td><td>587</td><td>4,250</td><td>4,837</td><td>1,939</td><td>40.1</td><td>2,898</td></tr>
<tr><td>수도권통합센터연구동건설(기초연)</td><td>-</td><td>1,000</td><td>1,000</td><td>8</td><td>0.8</td><td>992</td></tr>
<tr><td>자원동 환경개선사업(생명연)</td><td>397</td><td>5,000</td><td>5,397</td><td>647</td><td>12.0</td><td>4,750</td></tr>
<tr><td>연구동 환경개선사업(생기연)</td><td>2,956</td><td>11,615</td><td>14,571</td><td>2,185</td><td>15.0</td><td>12,386</td></tr>
<tr><td>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식품연)</td><td>5,950</td><td>-</td><td>5,950</td><td>-</td><td>0.0</td><td>5,950</td></tr>
<tr><td>탐사선 운영(지자연)</td><td>336</td><td>1,896</td><td>2,232</td><td>1,336</td><td>59.9</td><td>896</td></tr>
<tr><td>민간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항우연)</td><td>13,699</td><td>4,200</td><td>17,899</td><td>211</td><td>1.2</td><td>17,688</td></tr>
<tr><td>수소에너지 첨단연구동 건설사업<br>(에너지연)</td><td>422</td><td>4,000</td><td>4,422</td><td>422</td><td>9.5</td><td>4,000</td></tr>
<tr><td>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br>구축사업(원자력연)</td><td>4,879</td><td>1,000</td><td>5,879</td><td>-</td><td>0.0</td><td>5,879</td></tr>
<tr><td>원자력시설 폐기물 감용실험동<br>구축사업(원자력연)</td><td>12,133</td><td>7,000</td><td>19,133</td><td>-</td><td>0.0</td><td>19,133</td></tr>
</table>
주) 집행액은 2023.12.31. 기준임.<br>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를 재구성</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 ○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2022년 이월액도 집행하지 못하여 재이월되었는데, 2023년 예산액은 전액 교부되어 이월금이 증가하였음<br>- 4개 사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한국식품연구원의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사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민간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구축 및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사업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년도 예산요구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필요한 출연금을 배정함으로써, 이월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집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5</td><td rowspan="3">연말에<br>집행가능성 없는<br>선금 과다 지급<br>재발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331-4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광주과학기술원은 차세대 AI반도체 첨단공정 Fab 구축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계약금액(12억 3,300만원)의 67.7%인 선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br>-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br>- 광주과학기술원은 12월 26일 수시배정 예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된 이후인 12월 28일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9일 계약금액의 67.7%를 선금으로 지급함<br>※ 차세대 AI반도체 첨단공정 Fab 구축 사업 설계용역 계약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계약건명</th><th>계약금액</th><th>계약기간</th><th>계약유형</th><th>선금<br>(지급일)</th><th>선금지급<br>비율</th></tr>
<tr><td>차세대 AI반도체<br>첨단공정 Fab<br>설계용역</td><td>1,233</td><td>2023.12.28.<br>~2024.8.23.</td><td>일반경쟁</td><td>834<br>(12.29.)</td><td>67.7</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에 선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정부 입찰·계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6 | **연말 선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계약 신뢰 하락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331-424)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과학기술원은 혁신디지털의과학원 구축사업에서 2023년 5월 설계용역 공모를 실시하고 7월 21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약 5개월 간 선금 지급 없이 과업을 지시하였고, 12월 27일 계약금액(15억 450만원)의 57.8%인 8억 6,900만원을 선금으로 연말에 과다하게 지급하였음<br>-「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계용역 체결 이후 약 5개월 간 선금 지급 없이 과업을 지시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신뢰가 하락하지 않도록 할 것 | | |
| 97 | **공금 횡령 및 유용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예금사업 운영(5231-361)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거제 남부우체국의 예금 반환소송에서 국가패소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우정사업본부 자체감사를 통해 전남 약산우체국장의 공금 횡령 및 유용 사건이 적발되는 등 일부 별정우체국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금 횡령 및 유용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8 |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부과 및 과제 선정평가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1434-428)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과제 선정과정에서 공고 내용의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미선정 기관의 이의신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br>- 과제명 : 중수로 해체 특수폐기물 물리화학적 분리/감용 및 안정화 기술 개발 과제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등 적의 조치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평가 관리를 강화할 것 | | |
| 99 | **R&D 예산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1031-401) | 시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8월 22일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는 6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의 배분·조정을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0</td><td rowspan="3">R&D 특성에<br>맞는<br>예비타당성조사<br>운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1038-401),<br>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1035-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br>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5년간 R&D 예타 시행 현황을 보면, ① 본예타 대상으로의 선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② 결과도출 시까지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음<br>- 본예타 진입 및 통과 사업수가 감소하게 되면,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R&D 사업의 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br>- 또한 예타 수행기간을 7개월로 규정하고 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5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br>※ 2019~2023년 R&D 예타 대상선정 및 본예타 추진 현황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연평균<br>증감률</th></tr>
<tr><td>예타 대상 선정률(%)</td><td>37.3</td><td>50.7</td><td>41.8</td><td>37.2</td><td>23.5</td><td>△21.1</td></tr>
<tr><td>본예타 시행 판정률(%)</td><td>62.1</td><td>44.4</td><td>39.1</td><td>60.0</td><td>25.0</td><td>△36.1</td></tr>
<tr><td>평균 조사기간(개월)</td><td>6</td><td>7</td><td>8</td><td>8.3</td><td>일부<br>조사 중</td><td>-</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R&D 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1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1038-401),<br>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1035-401)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12월 12일 개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의 제도개편 내용에는 예타제도 폐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음<br>- 이는 기존 예타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 예타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검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함<br>○ 특히, R&D 예타 폐지를 위해서는「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와 제38조의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6월 10일 발의되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br>※「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69호<br>「국가재정법」<br>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br>제38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 및 역기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2 | **의대증원을 고려한 이공계지원 대책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744-404)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의대증원으로 인해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이공계지원 특별법」상 명시된 이공계지원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br>-「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및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야 하나, 지원실적이 부재함<br>- 또한 동 사업은 2022년 35억 9,200만원에서 2024년 29억 8,300만원으로 17% 축소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대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이공계 인재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공계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 |
| 103 | **미개방 데이터의 조속한 대외개방 및 일부 수행기관 사업참여 제한 필요** | 관련사업명 | 정보통신진흥기금 -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2602-305)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중 하나로 2.5조원을 투입해 1,30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20~2021년 7,020억원이 투입되어 구축한 360종 중 168종이 품질기준에 미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현재 미개방된 데이터의 조속한 대외개방 및 공개 산출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품질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4 | **사업협약 위반 업체 사업비 환수 등 적정 조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정보통신진흥기금 -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2602-305) | 주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중 하나로 2.5조원을 투입해 1,30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기업은 협약을 위반하여 다른 AI 사업에 이중 참여하거나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사업협약을 위반하여 이중참여한 업체에 대해 관련자 주의 조치 및 사업비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것 | | |
| 105 | **별정우체국연금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 총괄 | 제도개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적자 확대(2019년 83억원→2023년 304억원)로 연금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2019년 2,138억원→2023년 1,443억원)하고 있고, 재정 추계 결과 2027년에는 연금자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br>- 별정우체국 퇴직자의 연금지급은 부담금(개인 및 피지정인(국가가 전액부담)) 및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부담금 수입으로 연금지급금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는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금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 |

## 2. 방송통신위원회(27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연가보상비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본부(총액대상)(7101-101)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의 '본부(총액대상)' 예산 중 '연가보상비(110-05목)'의 집행률은 2021년 45.8%, 2022년 63.6%, 2023년 61.4%로,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문제가 있음<br>- 세부사업 '본부(총액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213억 1,300만원 중 202억 9,500(95.2%) 집행되었고, 이 중에서 '연가보상비(110-05목)'은 2023년 예산액 1억 5,800만원 중 61.3%에 불과한 9,700만원이 집행되었음<br>- 최근 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용 내역 중 명예퇴직 증가 등 인건비 부족으로 연가보상비를 투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예산집행지침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연가보상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불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과도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연례적인 일반용역비 집행부진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7111-212)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기획조정관 사업의 일반용역비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예: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계약) 없이 과다편성되어 집행이 부진하다는 문제가 있음<br>- 세부사업 ‘기획조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023년 예산액 12억 3,000만원 중 10억 1,400원(74.3%)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용역비 예산은 2023년에 4,800만원 편성되었고, 58.3%인 2,800만원이 집행되었음<br>-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3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기획조정관” 소관 일반용역비로 집행되는 연례적인 행사는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 유일하고, 해당 행사는 1,600만원(2022년), 1,700만원(2023년)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어, 예산 대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집행할 연례적인 행사 등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의 집행 비목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7111-212)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조정관 사업의 일반용역비로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집행하였다는 문제가 있음<br>-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은 공영방송의 헌법상 지위와 수신료 분리징수의 의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br>- 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에서 일반용역비(210-14목)는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면서, “자문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자문 용역”에 해당하는 해당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일반연구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는데, 예산 비목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 | |
| 4 | **법률 검토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7111-212) | 시정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에 ‘2인 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부정보 제출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음<br>- 법률검토는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이 사안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당한 법률적 행위이며 방통위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고의로 로펌명, 변호사명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지출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7111-212)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의 및 합의 없이 정치적 다양성이 결여된 ‘불법적 2인 체제’ 의결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 해임된 방문진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송에서 피소되었음<br>-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9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의 위원만 참석한 ‘불법적 2인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전한 5인 체제가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의결을 강행하여 3건의 소송에 대해 총 4,290만원의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 |
| 6 | **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135-301)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역사업 ‘방송통신융합기반 정책연구’의 연구용역비를 통하여 방송통신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 전 조사·연구 및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가 있음<br>- 최근 5년간 정책연구과제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의 과제의 비중이 2020년 69.4%, 2021년 71.8%, 2022년과 2023년 67.6%, 2024년은 75.7%로, 전체 과제의 2/3 이상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기반 정책연구’ 사업의 정책연구비에 대한 수의계약 비중이 67.6%에 달하는데, 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며,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행사 지원 경비의 비목을 조정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융정책연구(3135-301)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역사업 “방송통신 학술 행사 지원 등”은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원하는 행사 지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용역비(210-14목)나 개별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편성지침상 정책연구비(260-02목)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br>-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역사업 “방송통신 학술 행사 지원 등”은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중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된 예산 1억 4,000만원을 매년 한국방송협회 등의 학술행사 지원에 집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학회 등의 학술행사를 지원하였는데 해당 예산을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적정한 비목으로 집행할 것 | | |
| 8 | **연례적인 임차료 집행 저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135-302)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 내역사업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의 최근 4년간 임차료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0년 2.8%, 2021년 1.1%, 2022년 0.9%에 불과하고, 코로나의 영향이 줄어든 2023년에도 21.6%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br>- 내역사업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는 국외 출장 시 소요되는 차량임차료, 회의장 임차료 등에 집행하기 위하여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br>-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집행률이 높은 2023년의 경우에도 국외 출장시 “차량임차료”에 주로 집행하였고, 대규모 행사장 임차 소요 등이 없으며, 건당 집행금액 역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인 회당 평균 비용 1,200만원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임차료가 과다편성되어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보조금 집행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3131-301)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EBS는 세부사업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법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수익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감사원에서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게 집행하도록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한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보조금 수익금은 EBS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제작 비용에 사용하기 보다 동 세부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br>- 세부사업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공익적인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제고를 통하여 시청자와 청취자의 권익증진 및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354억 6,800만원 중에서 321억 6,400만원을 보조사업자인 EBS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33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90.6%임<br>- EBS는 세부사업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보조금으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고,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EBS 미디어 방영권 판매 등을 통한 자체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음<br>- 그런데, 2023년 동 사업의 수익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이전과 같이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동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지출하지 않고, 공통적인 무대소품이나 세트설치 비용, 한국방송작가 협회 저작권료, 촬영보조 용역 등 EBS의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사용되는 금액의 일부를 해당 수익금으로 집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보조금법에 따른 교부조건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의 취지에 맞게 해당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성과지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의 저조한 성과달성률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재난방송 운영지원(3135-307)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은 성과지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2023년 성과달성률이 49.1%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br>- 내역사업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은 청각장애인의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전문 교육을 통한 재난분야 수어통역사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1억 400만원이 전액 피보조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교부되었고, 8,1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br>- 방송통신위원회와 (사)한국농아인협회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어, 동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동 사업이 목표하였던 "신속·정확한 수어제공으로 청각장애인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히 신속·정확한 수어제공으로 청각장애인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농아인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사업의 재개 및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 |
| 11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 위해 사용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131-308)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예산지원은 2023년 기준 45억원, 각 방송사당 1억원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고, 지역방송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프로그램 제작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br>-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문화 창달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내에 지역중소방송발전 기금 마련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지상파 공영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공성 유지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7131-306)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TBS 사업 존속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br>- TBS는 재단 변경 이후 2019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로 인해 공적 재원인 서울시 지원금으로 운영하되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갖췄으나,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되었고,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는 TBS의 변경허가 요청도 방통위가 거부하여 자체적인 수익 마련 방법도 차단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방송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실적이 이행되지 못하여 TBS 등 방송사업자의 사업 존속 및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이 위축될 우려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앱 마켓 실태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활용하는 용역의 출연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2141-302)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역사업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의 출연금 예산을 교부 받아, 연구용역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출연금 예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br>-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임<br>-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내역사업 출연금으로 2023년에 ‘공정한 앱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3,500만원 등 총 5건, 4억 2,5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해당 연구용역은 프리즘 등에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보조금 교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 한다고 설명하였음.<br>- 해당 용역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출연금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 및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용을 많이 집행한 용역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재)팩트체크넷 해산에 따른 사업 미수행 부적정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정보화)(3132-317)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역사업 “팩트체크 활성화”는 2023년 팩트체크넷 운영자가 해산하면서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br>- 팩트체크넷과 관련하여, 2021년에 5억 4,000만원, 2022년에 6억 1,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2023년에는 계획액 3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팩트체크넷 운영예산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억 7,000만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교부하였고, 이 중 1,200만원만 실집행된 상황임<br>- 동 사업은 2023년 예산 3억원, 2024년 예산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중단되었음<br>- 팩트체크넷 관련 예산이 2023년부터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의 경우 당초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넷 운영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선정한 팩트체크넷 운영자인 “(재)팩트체크넷”이 2023년 1월 25일에 해산하였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과 같이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정보화)(3251-318)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전년 대비 축소하면서 동 사업 예산 10억원 중 1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체적으로 격년 단위의 점검을 실시하는 방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한 수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만 실태점검을 실시한 채 교부받은 출연금 10억원 중 1억 2,900만원은 불용하였는데, 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실적은 2022년 977개소에서 2023년 780개소로 감소하였음. 만일 불용액을 활용하여 추가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약 238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실태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할 것 | | |
| 16 |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정보화)(2141-309)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폭 늘어나고 있는 스팸문자 대비 최근 5년간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는 문제가 있음<br>- 2020년 36억 7,900만원, 2021년 33억 4,600만원, 2022년 32억 9,100만원, 2023년 32억 9,100만원, 2024년 32억 2,1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스팸대응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세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량문자 사업자 진입장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 의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3132-311)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 의 측정 산식이 복잡하고, 실제 성과와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br>- 세부사업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은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 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 은 2023년 목표 88건 중 87.8건의 실적을 보여, 성과달성률은 99.8%임<br>- 해당 성과지표는 "{전체 채널수-[(1회 위반 방송채널수×1.0)+(2회 위반 방송채널수×1.5)+(3회 이상 9회 이하 위반 방송채널수×2.0)+(10회 이상 위반 방송채널수×3.0)}/전체 채널수×100" 의 산식을 통해 측정하고 있음<br>- 해당 성과지표의 기초가 되는 방송광고 법규 위반횟수별 채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1회 위반에 해당하고, 3.0의 가중치가 부과되는 10회 위반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의 성과지표를 위반횟수와 성과지표가 높은 비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34-315)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br>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지적사항 | ○ 세부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의 2023년 예산 실집행률이 90.1%에 불과한 것은, 보조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TV·라디오 광고 제작 지원” 보조금을 교부된 금액보다 적게 집행하였기 때문임<br>- 2023년 매체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TV의 경우 최초 31사를 선정하였으나 12사가 중도 포기하고 11사가 추가 선정되어 최종 30사를 지원하였고, 라디오의 경우 최초 16사를 선정하였으나 5사가 중도 포기하고 9사가 추가 선정되어 최종 20사를 지원하였음<br>- 중도 포기로 인한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경영 상황과 자부담액 부담이 가능한 기업인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의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기업의 선정 단계에서 경영 상황, 자부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 19 |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 내역사업 통합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미디어 다양성 증진(3132-301)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등 방송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동 사업에서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조사와 본 조사 추진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br>- ‘미디어 다양성 증진’ 사업의 내역사업 중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에는 1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본 조사인 ‘시청점유율조사’에는 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사업비 교부 및 철저한 사업관리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2171-301) |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에서 문화재 이슈가 발생(2023.7.6.)하여 이후 예산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인 KBS에 7월 24일 4,800만원, 11월 21일 4,8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음<br>- 제주송신소 노후 안테나계통 보강사업 진행 중 서귀포시 건축신고 과정에서 당해 부지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임을 인지함<br>- 이는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br>「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br>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2023년 분기별 자금배정<br><br>(단위: 천원)<br><table><tr><th colspan="4">자금배정(방송통신위원회 → KBS)</th></tr><tr><th rowspan="2">분기</th><th colspan="2">배정금액</th><th rowspan="2">교부일</th></tr><tr><th>송신비</th><th>송신시설교체비</th></tr><tr><td>1분기</td><td>1,904,040</td><td>576,000</td><td>2023.2.22.</td></tr><tr><td>2분기</td><td>1,904,040</td><td>128,000</td><td>2023.4.25.</td></tr><tr><td>3분기</td><td>740,460</td><td>48,000</td><td>2023.7.24.</td></tr><tr><td>4분기</td><td>740,460</td><td>48,000</td><td>2023.11.21.</td></tr><tr><td>계</td><td>5,289,000</td><td>800,000</td><td>-</td></tr><tr><td>세목조정 후(±394,000)</td><td>5,683,000</td><td>406,000</td><td>2023.12.18.</td></tr></table>자료 : 방송통신위원회</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된 효율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원칙을 일부 위반하였으므로 보다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선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방송통신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19~2023년 개선권고가 실제 개선조치로 이어진 비율을 보면, 2019년은 29.8%, 2020년 52.5%, 2021년 40.0%, 2022년 45.0%, 2023년 48.0%로 최근 5년 간 저조한 개선 비율을 보이고 있음<br>-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내역사업은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예산현액 5억 1,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br>※ 2019~2023년 개선권고 대비 개선조치 비율<br>(단위: 건, %)
<table>
<tr><th>구 분</th><th>모니터링</th><th>개선권고<br>(A)</th><th>개선조치<br>(B)</th><th>비율<br>(B/A)</th></tr>
<tr><td>2019년</td><td>13,247</td><td>6,191</td><td>1,848</td><td>29.8</td></tr>
<tr><td>2020년</td><td>12,354</td><td>2,279</td><td>1,198</td><td>52.5</td></tr>
<tr><td>2021년</td><td>12,988</td><td>4,413</td><td>1,794</td><td>40.0</td></tr>
<tr><td>2022년</td><td>13,727</td><td>4,003</td><td>1,793</td><td>45.0</td></tr>
<tr><td>2023년</td><td>14,982</td><td>4,123</td><td>1,977</td><td>48.0</td></tr>
<tr><td>계</td><td>67,298</td><td>21,009</td><td>8,610</td><td>41.0</td></tr>
</table>
주) 2018년까지는 개선권고 후 결제방식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br>자료 : 방송통신위원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앱 신규 등록부터 최소한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 조치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한 과거 시정요구사항 이행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가 의결한 EBS UHD 방송 송출 관련 3가지 시정요구 사항을 전부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KBS에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정도의 조치를 하고, 이를 조치완료로 보고함<br>- 디지털 송출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의 연례적 불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정요구 받았으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br>- EBS UHD 송출시스템의 구축 일정과 실현가능한 UHD 전환계획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 받았으나, 향후 구축일정과 실현가능한 UHD 전환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br>- UHD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송출될 수 있도록 송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계속 편성하도록 시정요구 받았으나, 해당 예산이 '23년, '24년 연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UHD 정책 마련에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 지역방송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현실적인 UHD 방송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br>○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가 의결한 EBS UHD 방송 송출 관련 3가지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br>○ 추후 OTT 활성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저하, 지상파 경영 상황 악화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법적 근거 없는 인터넷 보도 심의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 | 시정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심의를 자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위법 통신 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과 비용 등을 일괄 변상해야 함<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임<br>- 2023년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 출범 이후 사용된 예산은 39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를 심의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방심위원장 해외 출장 관련 변상 및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2024년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미국) 구글 부사장 등을 면담하여 한국 내 불법 및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으나,<br>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 간 협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은 방송 내용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임<br>- 류희림 위원장 해외 출장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약 2,800만원(2024년 예산)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해외출장 일정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성 있는 출장 일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출장 시 기관장의 언행을 주의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축소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3131-301) |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2년 기획재정부가 내역사업을 조정하라는 지적(사업효과성 제고 목적)에 따라 기존 8개의 내역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제작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음<br>- 소외계층 제작 0건, 안전교육 0건, 다문화(동남아) 언어교육 0건, 독서교육 0건 등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가치와 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내역사업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유인이 감소하였음(2022년 대비 2024년도 제작 편수가 63%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공익방송의 다양성과 제작편수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내역사업을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 지원, 안전교육 분야 등으로 다양화하고 제작편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6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국악방송 지원(3131-304) | 시정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지원에 2023년에 총 298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감사가 불가능한데, 매년 예산만 지원하고 있음<br>○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의 경우, ‘TV 프로그램 제작’과 ‘영어FM 프로그램 제작’ 2가지 내역사업은 예산지원 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 불일치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br>-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2141-301),<br>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131-308),<br>방송시장 상생 환경조성(3132-313),<br>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3-304),<br>방송평가 기반조성(3134-302),<br>OTT산업경쟁력강화(3134-341),<br>재난방송 운영지원(3135-307),<br>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3251-319) | 시정 | 방송통신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99개 내역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br>○ 그 중 17개 내역사업은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라는 사유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보조금법」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동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음<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br>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br>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br>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17개 내역사업 현황<br><br>
<table>
<tr><th>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th><th>수행기관</th><th>공모 여부</th></tr>
<tr><td>☐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td><td></td><td></td></tr>
<tr><td>- 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td><td>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td><td>X</td></tr>
<tr><td>- 통신분쟁조정제도운영을통한 이용자피해구제강화</td><td>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td><td>X</td></tr>
<tr><td>☐ 지역,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td><td></td><td></td></tr>
<tr><td>- 프로그램 제작지원</td><td rowspan="3">한국전파진흥협회</td><td>X</td></tr>
<tr><td>-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td><td>X</td></tr>
<tr><td>-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td><td>X</td></tr>
<tr><td>☐ 방송시장상생환경조성</td><td></td><td></td></tr>
<tr><td>- 외주제작 실태조사</td><td rowspan="2">정보통신정책연구원</td><td>X</td></tr>
<tr><td>-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td><td>X</td></tr>
<tr><td>☐ 공동체라디오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td><td></td><td></td></tr>
<tr><td>- 프로그램제작</td><td>시청자미디어재단</td><td>X</td></tr>
<tr><td>☐ 방송평가기반조성</td><td></td><td></td></tr>
<tr><td>- 방송내용 편성 운영영역 평가</td><td rowspan="5">정보통신정책연구원</td><td>X</td></tr>
<tr><td>- KI 시청자평가지수 조사</td><td>X</td></tr>
<tr><td>-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td><td>X</td></tr>
<tr><td>-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td><td>X</td></tr>
<tr><td>-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td><td>X</td></tr>
<tr><td>☐ OTT산업경쟁력 강화</td><td></td><td></td></tr>
<tr><td>- OTT 해외진출 지원</td><td>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td><td>X</td></tr>
<tr><td>☐ 재난방송운영지원</td><td></td><td></td></tr>
<tr><td>-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td><td>시청자미디어재단</td><td>X</td></tr>
<tr><td>-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td><td>한국전파진흥협회</td><td>X</td></tr>
<tr><td>☐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td><td></td><td></td></tr>
<tr><td>-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td><td>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td><td>X</td></tr>
</table>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사유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것</td><td></td><td></td></tr>
</table>

## 3. 원자력안전위원회(8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재활용고철사업자의 조치결과 제출연기 시 안전지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1402-401) | 제도개선 |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상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후 조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치결과서 제출 연기를 원하는 경우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유선으로 연기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음<br>○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다르게 조치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활용고철사업자가 조치결과서 제출을 연기할 경우 지침에 따라 명시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의 평상시 활용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1403-301) | 제도개선 |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시설물로써 평상 시에는 주민·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 교육, 방사능방재 업무협의회 및 훈련 등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센터별(8개)로 상시 근무인력 8명과 연간 운영비 약 3~6억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은 대규모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km 근방에 광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하여 방사능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지휘 및 상황관리, 사고대응 활동 및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민보호 활동을 수행하려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평상 시 활용도를 높여 인력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국제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변경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031-401) | 제도개선 |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200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사업은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비(일반사업비)가 아닌 고유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기관고유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음<br><br>○ 2009년도부터 지속해서 해외 인재 대상으로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 원전도입국 규제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을 지속해오고 있으므로, 해외 원자력 안전 관련 인력에 대한 관리 및 단순 수료·졸업생에 대한 DB 축적이 아닌, 축적한 인력 DB를 활용해 정보교류나 국제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일반사업비에서 기관고유사업비로 내역을 변경할 것<br><b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비연구직종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기준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031-402) | 제도개선 |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지적사항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비연구직종(기술직·행정직·실무직)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라는 점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연구직종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br>- 연구직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직종인 반면, 기술직·행정직·실무직은 직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인 연구근접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비연구직종이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기타경상<br>이전수입과<br>기타재산<br>이자수입의<br>구분 계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원자력안전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관리되어야 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음<br>-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 수납되는 비목이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과 같이 기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 등이 수납되는 비목임<br>※ 2019~2023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및 집행잔액 이자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td><td>1,704</td><td>1,559</td><td>1,472</td><td>2,691</td><td>2,057</td></tr>
<tr><td>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중 집행잔액 이자</td><td>65</td><td>48</td><td>81</td><td>84</td><td>15</td></tr>
</table>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구분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사의 지방 이전 적극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사 운영(7021-301) | 시정 |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청사 지방 이전계획에 대한 범부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현 청사 임차계약을 3년 연장(2023.8.)하였음<br>- 잠정적으로 입주한 현 청사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청사 이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점, 협의 없이 임차 기간을 연장한 이후에야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한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요구 이행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관계 부처에 협의 요청, 직원들의 의견 청취 등 청사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방사능제논탐지 장비 구축 및 성능 검증, 출연금 집행 등 관리 · 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031-401) | 시정 |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울릉도에 배치된 방사능제논탐지장비(XeMS) 제작업체 직원의 유지 · 보수 과정에서 동 장비의 고장 및 오작동 사실을 제보하면서 2023년 3월 연구개발 전 과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능제논탐지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허위로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한 사실이 밝혀짐<br>- 또한 XeMS는 시험성적서 없이 준공되었고, 운영 중 성능 및 측정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됨<b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XeMS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해 편성된 출연금 10억 9,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친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장비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미교부하고 전액 불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연구개발 및 구축, 운영하는 장비의 성능에 대하여 교차 검증하는 등 R&D사업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산하기관이 출연금 미교부 상태에서 사업을 미리 추진하지 않도록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원자력안전기반 조성사업 내 소통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 원자력안전기반조성(1701-401) | 주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 결정 사항과 관련한 국민 소통 부족을 사유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분야에서 하위등급을 받음<br>- 2021년 :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초안이 언론 발표 전 사전 유출되어 국민 혼란을 초래한 사유<br>- 2022년 :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의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 노력 부족으로 안전성 논란을 양산하였다는 사유<br>- 2023년 :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SMR(소형원자로)·방사선 안전관리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안전정보 공개 확대 및 소통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유 | | |
| | | 시정요구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관련 국민과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 | |

## 4. 우주항공청(8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적정 주기 및 추가포함 사항 검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1331-422) | 제도개선 | 우주항공청 |
| | | 지적사항 | ○ 최근 우리나라 소유의 위성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성을 포함한 우주자산이 충돌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제품이 보급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태양폭풍이나 우주활동으로 인한 우주방사선이 전자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br>○ 또한, 우주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면서 우주분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주위험의 종류와 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적정 주기와 추가 포함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우주개발 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의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장기간 지급유보 문제 해결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2241-415) | 시정 | 우주항공청 |
| | | 지적사항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기관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노사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간 지급유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기관 사례를 점검할 것 | | |
| 3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차세대발사체개발(1332-408) | 제도개선 | 우주항공청 |
| | | 지적사항 | ○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 추진중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에 발사체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업 차질이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주항공청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발사체 기술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소유 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하여 타협점을 찾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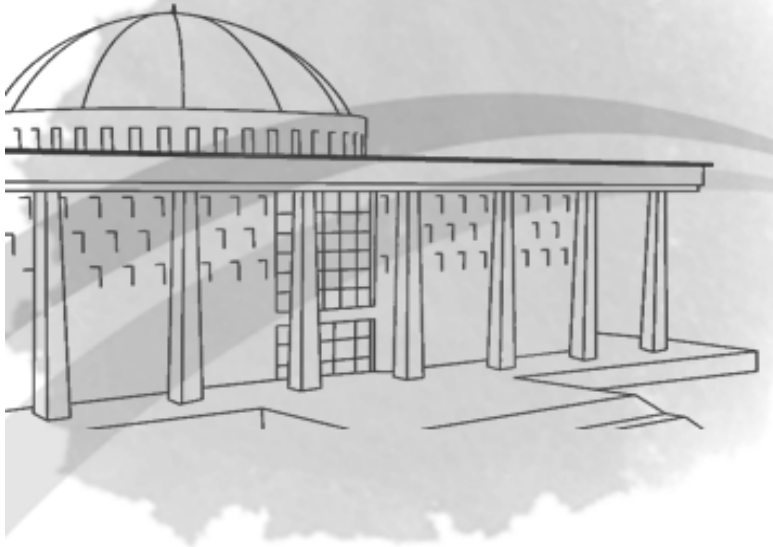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형발사체고도화(1332-405) | 제도개선 | 우주항공청 |
| | | 지적사항 |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교부현액 1,421억 5,600만원 중 1,100억 8,1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77.4%)하고 320억 7,500만원은 이월하였음<br>- 발사일정 조정으로 연구수행기관의 실집행 가능 범위를 초과하여 2023년 예산액을 전액 교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예산의 조기 교부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고로 반납하도록 할 것 | | |
| 5 | **인공위성 및 발사체 제작 시 구성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1331-416),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1331-418),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1331-301),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1331-302), 차세대중형위성개발(1331-410), 다목적실용위성개발(1331-401) | 제도개선 | 우주항공청 |
| | | 지적사항 |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나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인공위성 제작시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확인할 수 있음<br>○ 그런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국산화 비율을 살펴보면 발사체제작 사업의 경우 국산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공위성 제작 사업의 경우 국산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주항공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부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1331-416) | 주의 | 우주항공청 |
| | | 지적사항 |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 사업은 매년 100억원 가량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br>- 2022년은 탑재체 해외 제작용역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지연이 발생하였고, 2023년은 보안 과제에 해당하여 해외용역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보안성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자문 및 보안성 검토가 길어지면서 계약 및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주항공청은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차세대 발사체<br>개발사업의<br>추가지연 방지<br>및 집행가능성을<br>고려한 출연금<br>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차세대 발사체 개발(R&D)(1332-40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우주항공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체계종합기업 입찰공고(2023.12.21.)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출연금 290억원 전액이 항우연으로 교부되었고, 교부현액 290억원 중 111억 2,500만원은 최종집행(집행률 38.4%)되고 178억 7,500만원은 이월되었음<br>※ 2023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출연금 교부 및 최종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10">2023년 결산</th></tr>
<tr><th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br>→한국연구재단</th><th colspan="2">한국연구재단<br>→한국항공우주연구원</th><th colspan="6">한국항공우주연구원</th></tr>
<tr><th>교부날짜</th><th>금액</th><th>교부날짜</th><th>금액</th><th>교부액</th><th>교부<br>현액<br>(A)</th><th>최종<br>집행액<br>(B)</th><th>발생<br>이자</th><th>이월액</th><th>최종<br>집행률<br>(B/A)</th></tr>
<tr><td>'23.08.29.</td><td>4,000</td><td>'23.08.30.</td><td>4,000</td><td rowspan="6">29,000</td><td rowspan="6">29,000</td><td rowspan="6">11,125</td><td rowspan="6">231</td><td rowspan="6">17,875</td><td rowspan="6">38.4</td></tr>
<tr><td>'23.09.27.</td><td>5,000</td><td>'23.10.05.</td><td>5,000</td></tr>
<tr><td>'23.10.31.</td><td>4,000</td><td>'23.11.03.</td><td>4,000</td></tr>
<tr><td>'23.11.27.</td><td>7,992</td><td>'23.11.28.</td><td>7,992</td></tr>
<tr><td>'23.12.15.</td><td>8,008</td><td>'23.12.20.</td><td>8,008</td></tr>
<tr><td>계</td><td>29,000</td><td>계</td><td>29,000</td></tr>
</table>
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br>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br><br>❍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은 2023년 7월 사업이 지연 착수되었고, 연내 계획했던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2024년 5월로 미뤄지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음<br>- 사업 착수가 지연된 것은 2023년 5월 24일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및 후속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후 체계종합기업 제안요청서 및 공동설계 방안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시행하면서 추가 지연이 발생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우주항공청은 체계종합기업 선정 지연으로 인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투입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및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과학기술진흥기금 -스페이스이노베이션(1331-302) | 주의 | 우주항공청 |
| | | 지적사항 | ○ 2026년까지 초소형 위성 분야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모델과 비행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예산 삭감에 따라 시험모델 개발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br>- 후속연구(비행모델 제작, 발사 및 운용 등)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이 기존 계획 대비 기업당 26억 4,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 기 개발된 시험모델 및 기술개발 결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우주항공청은 이미 투자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 | | |

# 외교통일위원회



# 1. 외교부(51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연례적, 관행적 예산 전용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국외업무여비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등으로부터 약 80억원 이상의 전용 발생함. 특히 임차료 및 공공세제 등 경직성 항목에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고질적 문제로 판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국외업무여비예산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1132-403)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6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br>○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탈북민 의료지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며, '주재국 유관기관과 정기협의체 운영', '주재국과 협력관계 구축' 사업은 탈북민 수의 증감과 상관없이 적극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향후 체류국 정부와 현지 교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 | |
| 3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134-401)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은 40~70%대이고, 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이 61.8%로 전반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향후 중국측 국내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조달수수료 이월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1135-404)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외교부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계약대금으로 2023년 4월과 8월에 각각 선금과 잔금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조달수수료는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하였음<br>○ 조달수수료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교부는 즉시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수수료를 연내 납부했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조달수수료의 부적절한 이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5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업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부적정 집행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외교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 일반용역비에서 2억 8,682만원을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별도의 정상회의 세사업이 편성된 경우 개별 세사업에서 정상회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 집행 및 업무 수행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 · 보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2131-404)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피평가자인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존하고 있고, 개별 부처의 자발성 및 관점 차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분담금 납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 | |
| 7 | **국제기구초급 전문가(JPO) 파견경비 집행 및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기구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2231-401)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가 중도에 사임을 하여 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2021년과 2023년 JPO 조기 사임에 따라 국제기구측이 해당 금액을 반납한 두 건에 대해서만 세입처리를 하였으며, 각 국제기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향후 JPO 파견 시 사용해 오고 있음<br>○ 일부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에 정산 관련 내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기구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의 체계적 관리가 부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향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국제기구에서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구측 예치 잔액을 신속히 국고로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차차기이월금 과다 계상 및 이자수입 과소 추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 제도개선 | 한국국제협력단 |
| | | 지적사항 | ○ 매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을 차차기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사업수행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br>○ 이자수입 추계방식이 최근 5개년 이자수입 평균값을 사용하여 직전 연도의 차차기이월금을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측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확정된 결산잉여금을 바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이자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9 |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관련 후속 조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 제도개선 | 한국국제협력단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23.08.)에 “현지국가에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정보시스템 설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하며 ‘기관주의’를 통보한바, 이에 따라 디지털 정부 ODA사업은 중단된 상태임<br>- 추후 감사원은 일률적으로 현지의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관련 법령 개정 진행상황 등에 맞추어 추가대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밝힘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감사원의 취지를 본부 및 48개 해외사무소 임직원들에게 조속히 공지하고,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미비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한국국제협력단의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 제도개선 | 한국국제협력단 |
| | | 지적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징계가 있었음에도 징계부가금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 | | |
| 11 | **한국국제협력단의 내부감사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 제도개선 | 한국국제협력단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이 발표한 ‘2022년도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고위직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와 같은 비위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체 내부조사 뒤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감사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부진한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대책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도네시아(ODA)(2431-402) | 주의 | 한국국제협력단 |
| | | 지적사항 | ○ 19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된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실집행 3% 미만이고, 28억 8천만원이 편성된 ‘인도네시아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은 사업 변경절차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br>-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두 사업과 관련하여 저조한 집행률이 지적되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 피력으로 편성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PCP(공식사업요청서) 등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수행역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13 |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국가별 협력사업에 대한 신속한 후속 절차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리랑카(ODA)(2431-408) | 주의 | 한국국제협력단 |
| | | 지적사항 | ○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사업 추진 미비로 인한 사업취소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2023년까지 집행 없는 예산 편성이 지속된 후 2023년 4월 사업이 최종 취소됨<br>-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 피력으로 편성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수원국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3-405) | 주의 | 한국국제협력단 |
| | | 지적사항 | ○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역량강화 및 소득증진 사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지 정세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로, 2022년부터 편성액을 감액하였으나 매년 불용됨<br>○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를 피력하여 편성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이티 지원사업 예산의 불용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 | |
| 15 |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위험과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도적 지원 계획과 인력, 조직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br>-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의 도입과 인도적 지원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인도적 지원 예산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안전홍보예산 확대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2차례에 걸쳐 6천 5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과 같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 | |
| 17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3032-401) | 시정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부 세목조정 등 변동 및 국외여비 (220-02) 확보 명목으로 전용한 예산 총 5억 9,300만원이 발생함. 부산엑스포는 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에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같이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집행부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3131-401)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은 AI,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미·중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동 사업의 23년도 예산 18억 900백만원 중 6,700만원은 이·전용되었고 6억 8,300만원(약39%)이 불용처리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중복 및 추진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 | | |
| 1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4021-401)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관련하여 업무과다, 예산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개선,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처우개선, 재외공관 인력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이월 관행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4031-401)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외교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월이 있었으나, 결산상에는 이월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 이월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상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것 | | |
| 21 |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4차례에 걸쳐 46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체 내역변경을 포함할 경우 52억원이 부족하였음<br>○ 과도한 기본경비의 이·전용은 기관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연례적 이전용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예산 심의 당시와 다른 변칙 집행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7033-404)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재외공관장회의 개최를 위하여 약 8억 5천만원의 전용이 발생함. 행사장 조성 용역(2,500만원에서 9,900만원), 임차료(3,300만원에서 5,200만원) 등 예산 내역과 변동된 내역이 다수 발생한바, 용역이나 임차료 등은 예상 및 계획이 가능한 예산 항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공관장회의 개최 사업과 같이 예산 변동 내역이 다수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 | |
| 23 | **기여금 감면으로 인해 폐지·삭감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제교류기금 - 법정부담금(12-59-593) | 제도개선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여권발급 비용 인하,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등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이 축소되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음<br>○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은 집행률 99.1%, 글로벌인적교류 98.8%, 한국문화해외확산 99.5% 등으로 높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 축소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 타기금 전입, 민간 기부금 확대 등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 편성 근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제교류기금 - 한국학기반확대(2632-401)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학 강좌 운영사업, 한국학 전문가 육성사업 등 국제교류재단 사업에서 예산 편성 근거와 집행 내역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편성 근거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국회 승인 사업은 감액시키고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br>○ 업무 위탁 계획이 무산된 것, 한국학 현황 조사 용역비를 다른 연구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 연구 성과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등은 국회가 가진 정부 예·결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이 사업 계획과 집행 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
| 25 |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실률 개선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건물대여료(51-512)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국립외교원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온비드(국가공매포털)를 통해 유상사용허가 일반입찰 공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층 민간임대공간의 경우 2020년 외교부가 외교타운을 환수하여 관리를 맡은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공실인 상황이며, 현재 민간임대 전 공간(1,291.06㎡)이 모두 공실임<br>○ 국립외교원 근무인원 1명당 사무공간이 상당부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외교센터 304호(146.4㎡) / 경제안보연구센터 구성원 2~3명]<br>※「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인당 사무실 면적 기준<br>- 3급 과장, 4급 국·과장, 5급 과장: 17㎡(집무면적)<br>-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이하 일반직원: 7㎡(집무면적)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외교부 사무실 입주현황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일부 본부 조직을 외교타운으로 입주시키는 방안, 임시조직인 기획단이나 TF의 활동 공간으로 외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외교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외교원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근무인원 1인당 사무공간을 재조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국회<br>예산·결산심의권<br>침해하는 부당한<br>예산전용</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 아태국은 ‘한일관계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추진과정에 한일관계개선으로 국외여비 수요 폭증을 이유로 정책연구비 4,950만원을 국외여비로 사용함<br>❍ 외교부 아태국은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에서 99.5백만원을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증진」사업으로 전용,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내외여비, 행사장비용 등으로 사용하고도 ‘출장보고서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방이 공개 곤란함을 양해바란다’며 출장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br>※ 2023년 외교부 자체전용 내역 일부
<table>
<tr><th rowspan="2">구분<br>(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br>(백만원)</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등<br>사유</th></tr>
<tr><th>세부사업코드<br>(내역사업명)</th><th>목-세목<br>코드</th><th>세부사업코드<br>(내역사업명)</th><th>목-세목<br>코드</th></tr>
<tr><td>자체전용<br>(2023.11.16.)</td><td>1135-401<br>(한일 과거사 대응<br>및 미래지향)</td><td>260-02</td><td>49.5</td><td>1135-401<br>(한일 과거사 대응<br>및 미래지향)</td><td>220-02</td><td>한일관계 개선으로<br>예년에 비해<br>외교당국 각급 간<br>협의 수요 폭증</td></tr>
<tr><td rowspan="4">자체전용<br>(2023.11.24.)</td><td rowspan="4">1134-401</td><td>210-01</td><td>23</td><td rowspan="4">1135-401<br>(아시아태평양<br>지역 협력 증진)</td><td>210-01</td><td rowspan="4">한일중 외교장관회의<br>개최를 위한 행사장<br>임차료, 사업추진비 등<br>예산 부족분 보전</td></tr>
<tr><td>210-07</td><td>52</td><td>210-07</td></tr>
<tr><td>220-01</td><td>7.9</td><td>220-01</td></tr>
<tr><td>240-01</td><td>15</td><td>240-01</td></tr>
</table>
자료: 외교부<br>❍ 한일관계 개선이 국외여비 수요 폭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올바른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예산 심의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 일반 정서에도 심히 어긋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하고 출장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세목조정을 통하여 적합한 비목의 예산 확보 후 광고 요청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1135-404) | 시정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의 정부광고는 집행목적에 적합한 비목의 잔액이 부족하였음에도 지출원인행위(광고의뢰)를 하여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을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향후 지출원인행위 전 적합한 예산비목을 확인하고 잔액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것 | | |
| 28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적극적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기구분담금(2100) | 시정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서 의무적 지출에 해당할 것이나, 2023년도는 환차손, 회계연도 불일치 또는 국제기구의 수정예산안 제출 등으로 인해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하였음<br>- 기타 의무부담금은 예산 편성액을 전액 집행하였음에도 환차손 등으로 인하여 24억 9,800만원을 미납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의무분담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용(移用)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여 고지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9</td><td rowspan="3">국제기구 분담금<br>분류기준의<br>일관성 미흡</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2131-4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제질병퇴치기금에 편성되었던 CEPI(감염병예방혁신연합), GPEI(글로벌 소아마비 박멸 이니셔티브), Global Fund(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에 대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음<br>○ 동일한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각각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납부하거나 기금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분류하지 않음<br>※ 2023~2024년 CEPI, GPEI, Global Fund 분담금 예산편성액<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
<tr><th>일반회계</th><th>국제질병퇴치기금</th><th>일반회계</th><th>국제질병퇴치기금</th></tr>
<tr><td>CEPI</td><td>31,687</td><td>-</td><td>-</td><td>23,418</td></tr>
<tr><td>GPEI</td><td>3,701</td><td>-</td><td>-</td><td>3,903</td></tr>
<tr><td>Global Fund</td><td>64,612</td><td>10,320</td><td>-</td><td>32,525</td></tr>
<tr><td>합계</td><td>100,000</td><td>10,320</td><td>-</td><td>59,846</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같은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납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금 사업이라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는 등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소규모<br>무상원조사업<br>(ODA)의<br>집행가능성 검토<br>및 집행절차<br>관련 법령 개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아시아태평양지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사업선정 시에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액의 34.8%(57억 4,800만원)를 이월하였음<br>※ 2023회계연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3년</th><th>2024년</th></tr>
<tr><th>예산액</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d>소규모 무상원조</td><td>78,000</td><td>77,080</td><td>57,153</td><td>14,545</td><td>5,384</td><td>23,006</td></tr>
<tr><td>아시아태평양</td><td>16,500</td><td>14,718</td><td>7,410</td><td>5,749</td><td>1,560</td><td>4,006</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br>○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집행절차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규정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은 개정되지 않았음<br>※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table>
<tr><td>시정요구명</td><td>(22)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집행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외교부는 해당 예산을 한국국제협력단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집행할 계획인 경우 이를 외교부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국국제협력단에 출연하는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만 집행하도록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집행절차를 시정할 것</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의 시정요구에 적합하게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소규모<br>무상원조(ODA)<br>의 수원국별<br>지원한도의<br>적정성 검토 및<br>지원 기준 준수<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불특정 소규모 원조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부내역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되며, 일반협력국에 대한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수원국별 지원한도가 크게 상향조정되고 예외에 해당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및 현금지원이 증가하고 있음<br>※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 원칙 및 한도 비교
<table>
<tr><th>구분</th><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
<tr><td>지원대상국가</td><td colspan="2">일반협력국<br>(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중점협력국 가능)</td></tr>
<tr><td>지원원칙</td><td colspan="2">물자지원<br>(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현금지원 가능)</td></tr>
<tr><td>지원한도</td><td>연간 20만불 이내<br>(특별히 필요한 경우 40만불)</td><td>연간 50만불 이내<br>(특별히 필요한 경우 100만불)</td></tr>
</table>
자료: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외교부예규, 2022.12.13.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사업 집행 시 소규모 무상원조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을 명확화하며, 물자지원원칙을 준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국가별<br>협력사업(ODA)<br>예산의 조정<br>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부 국가별 협력사업(ODA)은 전용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전액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낮음<br>※ 2023년 전용증액된 국별협력사업(ODA) 중 집행부진 사업 사례<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본예산</th><th>전년도<br>이월액</th><th>전용<br>조정</th><th>추경 및<br>미교부액</th><th>예산<br>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베트남<br>인민법원<br>재판절차의<br>투명성 강화 및<br>재판품질 향상<br>지원 사업</td><td>1,026</td><td>-</td><td>100</td><td>-</td><td>1,126</td><td>765</td><td>342</td><td>19</td></tr>
<tr><td>방글라데시<br>소방방재<br>역량강화사업</td><td>-</td><td>174</td><td>99</td><td>-</td><td>273</td><td>11</td><td>90</td><td>172</td></tr>
<tr><td>몽골<br>생명과학대학교<br>산학연계형<br>고등교육<br>역량강화사업</td><td>1,300</td><td>-</td><td>400</td><td>△42</td><td>1,658</td><td>1,273</td><td>380</td><td>5</td></tr>
</tabl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연도 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도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3</td><td rowspan="3">신규 ODA 사업<br>예산 편성시<br>수원국의 특성<br>고려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ODA 사업은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 ODA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br>❍ 신규 ODA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다수의 사업이 사업기획단계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음<br>※ 2023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중 집행부진 사례<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예산액<br>(A)</th><th>실집행액<br>(B)</th><th>집행률<br>(B/A)</th><th>집행부진 사유</th></tr>
<tr><td>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td><td>100</td><td>-</td><td>0.0</td><td>• 수원국 원조사업에 대한 법령체계에 따른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td></tr>
<tr><td>우즈베키스탄 하원 전자의회 도입과 디지털화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지원 사업('23-'25/600만불)</td><td>50</td><td>2</td><td>4.0</td><td>• 협력국 정부의 요청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추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td></tr>
</table>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신규 ODA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과정이 모호한 국가별 협력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사업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국가별<br>협력사업(ODA)의<br>철저한<br>사업관리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실제 집행단계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확인되고 있으나, 명목집행률이 높게 나타나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상황 간에 괴리가 있음. 또한, 2023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집행이 저조함<br>※ 2023년도 베트남(ODA)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큰 사업 사례(KOICA 단계)<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본예산<br>(A)</th><th>전용·<br>조정 등</th><th>예산<br>현액<br>(B)</th><th>집행액<br>(C)</th><th>예산현액<br>집행률<br>(C/B)</th><th>본예산<br>-집행액<br>(C-A)</th><th>본예산<br>집행률<br>(C/A)</th></tr>
<tr><td>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 ('20-'25/900만불)</td><td>1,600</td><td>2,542</td><td>4,142</td><td>3,823</td><td>92.3</td><td>2,223</td><td>238.9</td></tr>
<tr><td>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UNDP) ('22-'26/2,500만불)</td><td>3,750</td><td>△2,259</td><td>1,491</td><td>1,462</td><td>98.1</td><td>△2,288</td><td>39.0</td></tr>
</table>
주) KOICA 단계에서 집행액(B)이 본예산(A) 대비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내역사업에 대해 작성<br>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 ODA 사업의 실질적 집행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을 시정하며, 사업의 지연요소를 면밀히 관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분쟁 및 취약국 지원(ODA)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약정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원조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의 실집행은 저조한 경우가 있음<br>※ 2023년도 신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사례<br>(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시행<br>기구</th><th>약정<br>체결일</th><th>’23년 예산<br>지급일</th><th>지급액</th></tr>
<tr><td>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초 인프라, 생계 지원, 평화활동을 통한 사회 안정 및 사회통합 향상 사업 (UNDP, 2023-2025/372만불)</td><td>UNDP</td><td>’23.9.18.</td><td>’23.10.23.</td><td>363</td></tr>
<tr><td>우간다 카라모자 지역 분쟁 영향 및 취약 공동체 내 회복력 구축 (UNDP, 2023-2025/500만불)</td><td>UNDP</td><td>’23.11.3.</td><td>’23.11.10.</td><td>758</td></tr>
<tr><td>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 (IOM, 2023-2026/400만불)</td><td>IOM</td><td>’23.12.1.</td><td>’23.12.8.</td><td>2,162</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신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민간기업 및<br>비영리기구를<br>지원하는 ODA<br>사업의<br>관리·감독 강화<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2435-40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내역사업 중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파트너 기업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고,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은 해외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 자금의 집행 및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br>※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내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td><td>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재원, 혁신 기술, 비즈니스 전략 등을 적용한 ODA 사업</td></tr>
<tr><td>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td><td>민간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투자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추진하는 ODA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td></tr>
<tr><td>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td><td>국내외의 예비창업가 또는 스타트업을 개발협력분야에서 발굴·보육·확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td></tr>
<tr><td>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td><td>중견 및 대기업의 사업모델을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내용 재구성<br>○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계속사업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예산이「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에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CTS 사업 및 IPS 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CTS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수행기반 마련과 IPS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원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다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의 사업내역을 공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해외긴급구호<br>(ODA) 사업<br>평가시기 조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바, 결산 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해당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br>※ 2019~2022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국회 보고일
<table>
<tr><th>구분</th><th>2019년도<br>결과보고</th><th>2020년도<br>결과보고</th><th>2021년도<br>결과보고</th><th>2022년도<br>결과보고</th></tr>
<tr><td>일자</td><td>2020. 12. 4.</td><td>2021. 11. 12.</td><td>2022. 8. 31.</td><td>2023. 11. 30.</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공공외교<br>현장실습원<br>사업의 수의계약<br>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과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음<br>- 현장실습원의 채용 및 파견준비 업무를 분리하여 2건의 용역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수의계약을 허용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br>※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용역계약 체결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계약명</th><th>과업내용</th><th>계약<br>금액</th><th>계약<br>업체</th><th>계약기간</th></tr>
<tr><td>2023년 재외공관<br>공공외교 현장실습원<br>채용 대행</td><td>- 온라인 홍보<br>- 지원자 접수현황 관리<br>- 서류 및 면접심사</td><td>20</td><td rowspan="2">A</td><td>2023.1.17.<br>~2023.3.15.</td></tr>
<tr><td>2023년 재외공관<br>공공외교 현장실습원<br>파견준비 대행</td><td>- 홈커밍데이 개최 및 운영<br>- 파견 문의응대</td><td>12</td><td>2023.3.16.<br>~2023.9.16.</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과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재외공관 직원<br>개인차량<br>공용사용비의<br>차등지급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4011-25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재외공관의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에 대한 지원금은 직무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직무등급에 따라서 사용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적 사용의 정도와 직무등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음<br>※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원비<br><table><tr><th>직무등급</th><th>월지급액</th></tr><tr><td>고위공무원 나등급, 9등급, 3급 이상</td><td>$292<br>※ 공용차량을 제공받으며, 개인차량을 소유한 경우 $145 지급(공관장 등)</td></tr><tr><td>8등급(4급) 이하</td><td>$192</td></tr></table>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 지원금에 대한 차등지급 방식을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재외공관<br>행정직원에<br>장애인 고용<br>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402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가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음<br>※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br>(단위: 명,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적용대상<br>정원</th><th>의무고용<br>인원(A)</th><th>고용인원<br>(B)</th><th>고용미달<br>인원(A-B)</th><th>고용부담금<br>납부액</th></tr>
<tr><td>2021년</td><td>1,278</td><td>43 (3.4%)</td><td>3</td><td>40</td><td>569</td></tr>
<tr><td>2022년</td><td>1,262</td><td>45 (3.6%)</td><td>2</td><td>43</td><td>625</td></tr>
<tr><td>2023년</td><td>1,285</td><td>46 (3.6%)</td><td>1</td><td>45</td><td>710</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 소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과 함께 장애인 고용 독려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재외공관<br>리모델링 사업의<br>연례적 집행부진<br>해소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4031-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교부된 사업비가 실집행되지 못하고 있음<br>- 연례적으로 공관으로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이 과다함<br>※ 연도별 리모델링 사업 집행현황<br>(단위: 10,000USD,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본부</th><th colspan="4">공관</th><th>본부</th><th rowspan="2">실집행률<br>(B/A)</th></tr>
<tr><th>예산액<br>(A)</th><th>교부액</th><th>집행액<br>(B)</th><th>반납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19년</td><td>906</td><td>850.5</td><td>246.0</td><td>-</td><td>604.5</td><td>611백만원</td><td>27.2</td></tr>
<tr><td>2020년</td><td>230</td><td>184.5</td><td>105.4</td><td>0.7</td><td>78.4</td><td>534백만원</td><td>45.8</td></tr>
<tr><td>2021년</td><td>1,613</td><td>1,390.5</td><td>468.8</td><td>8.2</td><td>913.5</td><td>3,543백만원</td><td>29.1</td></tr>
<tr><td>2022년</td><td>1,684</td><td>1,039.7</td><td>302.4</td><td>-</td><td>736.7</td><td>3,622백만원</td><td>18.0</td></tr>
<tr><td>2023년</td><td>1,839</td><td>1,709.4</td><td>771.4</td><td>138.3</td><td>799.7</td><td>987백만원</td><td>41.9</td></tr>
<tr><td>평균</td><td>1,254.4</td><td>1,034.9</td><td>378.8</td><td>29.4</td><td>626.6</td><td>1,859백만원</td><td>30.2</td></tr>
</table>
주) 불용액은 디브레인 결산 금액으로 시설정비 사업의 불용액을 포함한 금액임<br>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실소요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2</td><td rowspan="3">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지연</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의전장실 기본경비(7011-203・253): 외빈차고지 개축사업</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은 외빈차량운영팀 사무실 및 외빈차량 보관・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여 예산현액 중 60.1%를 이월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짐<br>※ 2023년 외빈 차고지 개축 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비목</th><th>예산액</th><th>이·전용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 rowspan="5">외빈 차고지 개축</td><td>기본조사설계비</td><td>70</td><td>26</td><td>96</td><td>67</td><td>7</td><td>22</td></tr>
<tr><td>실시설계비</td><td>70</td><td>22</td><td>92</td><td>74</td><td>18</td><td>-</td></tr>
<tr><td>공사비</td><td>1,942</td><td>-</td><td>1,942</td><td>-</td><td>1,462</td><td>480</td></tr>
<tr><td>감리비</td><td>30</td><td>-</td><td>30</td><td>-</td><td>30</td><td>-</td></tr>
<tr><td>임차료</td><td>88</td><td>△71</td><td>17</td><td>-</td><td>-</td><td>17</td></tr>
<tr><td colspan="2">합계</td><td>2,200</td><td>△23</td><td>2,177</td><td>141</td><td>1,517</td><td>519</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외빈차고지 개축사업 등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공사, 감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3-403)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 예산은 정부안(1억 8,4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외교부는 2023년 제2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해 5,650만원을 동 사업으로 전용 증액하여 행사장 조성 및 방송 연출 용역 비용으로 집행한바,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을 증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반하는 동시에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의 사례와 같이 국회 감액 사업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외교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예산 집행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4</td><td rowspan="3">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미추진 및 교체 여비로의 전용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외교홍보역량강화(7034-4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예산(일반연구비 5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당분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 예산을 재외공관 직원 이부임을 위한 교체여비로 전용함<br>※ 2023년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 내 일반연구비(260-01) 집행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비비</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일반 연구비</td><td>594</td><td>120</td><td>△590</td><td>-</td><td>124</td><td>120</td><td>-</td><td>4</td></tr>
</table>
❍ 이에 대해 외교부는 내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계획한 일부 기능을 개선함에 따라 일반연구비 예산 5억 9,400만원을 불용하고 불용액 중 5억 9,000만원을 재외공관 발령 직원의 이부임 항공료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였다는 입장임<br>❍ 그러나 이는 당초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예산을 홈페이지 개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재외공관 직원의 이부임을 위한 교체여비로 융통했다는 점에서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 미추진 및 전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무상 ODA 주관기관으로서 리우마커 표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주의 | 외교부 |
| | | 지적사항 | ○ 우리나라 무상 ODA의 ‘농림수산(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운송 및 저장’, ‘환경보호’ 분야 일부 사업에서 리우마커가 미표기됨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보고되는 ODA 지원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집계되었음<br>※ ‘리우마커(RioMarker)’란 리우협약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존,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ODA 사업에 부여되는 정책마커(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된 지표)[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국회예산정책처]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는 무상 ODA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리우마커의 미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우마커 표기실태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차차기이월금<br>규모의 감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을 차차기년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사업수행에 활용하지 않음<br>- 결산잉여금에서 차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클 경우 결산잉여금 발생 시점부터 수입계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br>※ 한국국제협력단 결산잉여금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회계연도말 기준)</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처분전 결산잉여금 합계</td><td>12,350</td><td>2,581</td><td>32,137</td><td>48,131</td><td>49,856</td><td>46,289</td></tr>
<tr><td>- 퇴직급여적립금</td><td>-</td><td>-</td><td>-</td><td>4,817</td><td>-</td><td>1,517</td></tr>
<tr><td>- 법정보험료부족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사업외 비용</td><td>200</td><td>472</td><td>-</td><td>-</td><td>-</td><td>-</td></tr>
<tr><td>- 차기이월</td><td>12,150</td><td>2,109</td><td>11,878</td><td>7,276</td><td>8,380</td><td>7,088</td></tr>
<tr><td>- 차차기이월</td><td>-</td><td>-</td><td>20,259</td><td>36,038</td><td>41,476</td><td>37,684</td></tr>
</table>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차차기이월금의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가결산 과정을 통해서 결산잉여금을 추계하고, 이를 차기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이자수입<br>추계방식의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회계연도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이자수입 예산(23억 7,300만원)보다 실제 수납된 결산 규모(85억 400만원)가 61억 3,100만원 만큼 더 큰 상황으로, 이자수입 추계가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br>※ 최근 7년간 한국국제협력단 이자수입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2017년<br>결산</th><th>2018년<br>결산</th><th>2019년<br>결산</th><th>2020년<br>결산</th><th>2021년<br>결산</th><th>2022년<br>결산</th><th colspan="2">2023년</th></tr>
<tr><th>예산</th><th>결산</th></tr>
<tr><td>이자<br>수입</td><td>1,900</td><td>2,599</td><td>3,323</td><td>1,791</td><td>2,253</td><td>4,850</td><td>2,373</td><td>8,50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5개년 평균값을 사용하는 기계적인 이자수입 추계방식 대신에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환경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CTS Seed 2 및 Seed 3에 대한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2435-4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br>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지적사항</td><td>○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은 Seed 0-3단계별로 설정한 목표수준이 상이하여 Seed 1의 성공만으로는 수원국의 사회경제발전과 같은 성과를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br><br>※ CTS 사업: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ODA 사업<br><br>※ CTS의 사업 단계<br><br>
<table>
<tr><td></td><td></td><td>⇒ 3. 스케일업</td></tr>
<tr><td></td><td>⇒ 2. 엑셀러레이팅</td><td>CTS Seed 3</td></tr>
<tr><td>1. 인큐베이팅</td><td>CTS Seed 2</td><td></td></tr>
<tr><td>CTS Seed 0</td><td>CTS Seed 1</td><td></td></tr>
</table>
자료: 외교부<br><br>※ Seed 0~Seed 3의 사업목표<br><br>
<table>
<tr><td>Seed 0</td><td>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td></tr>
<tr><td>Seed 1</td><td>·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기술 개발<br>· 시작품 제작, 실용화를 위한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또는 실험</td></tr>
<tr><td>Seed 2</td><td>실제 환경에서 검증된 혁신제품의 개발도상국 내 보급 및 일부 판매<br>→ 현지 지사 설립(창업)을 통해 동일 지역 내에서 시범판매를 통한 성과검증(개발도상국 친화적 수정·개량 필요)</td></tr>
<tr><td>Seed 3</td><td>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현지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착 및 확장</td></tr>
</table>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을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Seed 2 및 Seed 3에 대한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에 대한 급여지원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제교류기금 - 한국문화해외확산(2634-401) | 제도개선 | 외교부<br>한국국제교류재단 |
| | | 지적사항 | ○ 한국전문 기금큐레이터직 설치 지원 사업은 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조성한 후에 큐레이터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재원투입 시점과 채용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미술을 전담하는 큐레이터에 대한 급여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예상<br>가능했음에도<br>2030<br>부산세계박람회<br>유치 위한 예산<br>전용</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3032-4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유치교섭 출장, 행사 개최 등으로 18억 5,700만원 계상<br>※ 내역사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집행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2023년</th><th rowspan="2">2024년<br>예산액</th></tr>
<tr><th>예산액<br>(A)</th><th>전년도<br>이월액<br>(B)</th><th>이·전용<br>등<br>(C)</th><th>예산<br>현액<br>(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30<br>부산세계박람회<br>유치지원</td><td>984</td><td>-</td><td>911</td><td>1,895</td><td>1,857</td><td>-</td><td>38</td><td>-</td></tr>
</table>
○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타 사업에서도 예산이 소요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 예산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예산 소요 내역 일체,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 및 분석자료, 외교부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BIE회원국들의 2030세계박람회 지지표명 현황 파악 후,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총리, 기업, 국회의 전방위 교섭 전략 수립’ 활동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미국 전문직<br>비자쿼터 확보<br>노력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3032-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는 미국 내 15,000개의 전문직 비자(E-4) 쿼터를 신설, 우리 국민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n Act)」을 추진 중이며,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으로 미 의회 내 지지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br>※ 2023년도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 결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2023년</th><th rowspan="2">2024년<br>예산액</th></tr>
<tr><th>예산액<br>(A)</th><th>전년도<br>이월액<br>(B)</th><th>이·전용<br>등<br>(C)</th><th>예산<br>현액<br>(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해외진출기업<br>활동지원</td><td>2,462</td><td>-</td><td>△54</td><td>2,408</td><td>2,088</td><td>-</td><td>320</td><td>2,917</td></tr>
<tr><td>미국 경제동향<br>대응</td><td>723</td><td>-</td><td>-</td><td>723</td><td>712</td><td>-</td><td>11</td><td>1,014</td></tr>
</table>
❍ 그러나 2019년 이후 관련 예산은 매년 약 56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 내 반이민 정서로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br>※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미 의회 회기별 발의 현황
<table>
<tr><th>구분</th><th>114회기<br>(2015~2016)</th><th>115회기<br>(2017~2018)</th><th>116회기<br>(2019~2020)</th><th>117회기<br>(2021~2022)</th><th>118회기<br>(2023~2024)</th></tr>
<tr><td>발의<br>의원 수</td><td>87명<br>(상원 6, 하원 81)</td><td>85명<br>(상원 3, 하원 82)</td><td>57명<br>(상원 3, 하원 54)</td><td>54명<br>(상원 3, 하원 51)</td><td>40명<br>(상원 3, 하원 37)</td></tr>
</table>
주) 2024년 5월 기준<br>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해외자문회사 실적 점검 및 예산 증액, 정상외교와 해외투자 시 안건 반영 등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에 노력을 강화할 것</td></tr>
</table>

## 2. 통일부(36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총괄, 통일정책추진(1031-30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등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통일부가 운영중인 소속 위원회(4개) 중 법령상 국회(또는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이 필수인 위원회(남북관계발전위원회 2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0회) 뿐만 아니라, 그 구성·운영이 국회 추천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3회,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4회)도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바,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br>○ 또한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에 비수도권, 여성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성별·지역·직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소속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 위촉을 통해 전문성, 공정성 및 신중성을 확보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시정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불법시위 개최 및 주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통일부, 외교부, 과기부는 현재도 해당 규정을 존치 중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 | | |
| 3 | **통일+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에서, 일부 센터의 경우 지역통일관의 역할을 겸하고 통일체험·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등과 그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센터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 통일 관련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음<br>○ 역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하나센터, 지역통일관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통일교육 인프라 기관과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권역 내 통일 관련 인프라의 지리적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권역별 통일+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통일교육 인프라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자부담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민화협은 2018년부터 4년간 통일문화축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파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총 9,100만원)으로 통일부 보조사업의 자부담(20%)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br>※ 통일부 담당자는 민화협이 파주시 지원금으로 자부담 정산 처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단체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5 | **적정 예산과목 편성으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과다 불용(1억 5,000만원)된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함께 편성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br>○ 사업 취지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예산 과목(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인데, 2023년도 당초 예산(1억 500만원)에는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영화 다시보기'의 상영장소 임차료(800만원)로 집행함<br>○ 콘텐츠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장소 임차를 위해 집행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사업추진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해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 등 변경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7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 18개(상반기 15, 하반기 3)단체에 총 20억원을 집행함<br>○ 통일부 공모사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공모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어 이중으로 지원된 단체(3곳)도 확인된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당초 계획에 없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중 자료 발간을 위한 예산은 당초 2,000만원이었으나, 다른 세부사업 등에서 전용, 내역변경 등을 통해 총 1억 2,100만원을 더 조성하여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국문판 5,900만원, 영문판 8,200만원)함<br>○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별도의 홍보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바,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전용 등 변경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
| 9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일(2016.9.4.)에 맞춰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br>○ 이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하나센터 직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25개 하나센터 근무 직원 127명 중 1년 미만 퇴직자가 59명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하나센터 현황: 서울(4), 인천(1), 부산(1), 대구(1), 대전(1), 광주(1), 경기(6), 강원(2), 전북(1), 전남(1), 충북(1), 충남(1), 경북(1), 경남(1), 제주(1)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하나 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
| 11 |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적극적 성과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세부사업에 총 1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3년도 기존 내역사업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억 2,400만원과 신규 내역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7억 2,500만원을 집행함<br>○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성과평가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함에도 2023년도에 동 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정보화 사업 관련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10억 이상)을 내역사업 기준이 아니라 세부사업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관리에 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09억 8,100만원 중 100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08억 9,500만원은 불용함<br>○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추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임(2023년도 예산 기준 북한이탈주민 550명, 실제 입국인원 196명)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향후 국제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 | |
| 13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사업의 예산 과다 계상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3036-312)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1억 4,700만원 집행)은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br>○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 등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결국 예산액의 51%를 불용(1억 5,300만원)처리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의 과다계상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남북회담문서 공개사업 열람 방식 확대 ·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남북회담 추진(4031-300)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분야별회담 추진 사업(8,000만원 집행)은 북한과의 분야별 회담 · 접촉을 추진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사업임<br>○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22년과 2023년의 남북회담문서 자료 열람건수를 보면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열람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남북회담문서 열람 장소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15 | **교육목적에 맞게 현장견학 프로그램 개선 및 세목조정을 통한 위탁용역 신설 집행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국립통일교육원의 장 · 단기 교육과정(1억 3,400만원 집행)은 통일 및 통합과정을 주도 ·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br>○ 동 사업 예산 집행액의 15%를 현장견학에 사용하였는데, 통일정책 지도자과정에는 통일과 무관한 통영 · 제주 등 관광지 방문 등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에 없던 현장견학 위탁용역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통일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현장견학 위탁용역 등을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개설 지원사업의 수강인원 확대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국립통일교육원의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개설 지원사업(7억 100만원 집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형식과 1학기 동안의 학점과정인 통일 강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임<br>○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 점검 결과 2020년 2,779명 대비 2023년 수강생이 1,681명으로 40% 급감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이 급감한 원인을 파악하고, 수강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7 |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사업(4,200만원 집행)과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4,400만원 집행) 등 공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br>○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관련, 2021년 대비 2023년의 응모 수는 41%, 입상 수는 4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사업 또한 응모 수와 입상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상금을 올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입상 후 연계활동을 개발하는 등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부채 상환 방침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남북협력기금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3041-403)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20억 2,700만원 집행)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등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동 재단의 기본임무와 역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2024.3월 해산을 의결하였음<br>○ 재단의 주요 자산이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788억원 및 외화 대출 $1,577,050이 미상환 상태임(2023년 12월말 기준)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 상환에 대한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7031-300), 통일정책추진(1031-300) 등 | 시정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통일부는 2023년 정책연구비(260-02)로 8개 세부사업과 13개 내역사업에 총 62개 과제, 1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음<br>○ 정책연구개발(7031-300)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43건 중 32건(74.4%)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고, 통일정책추진(1031-300)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6건의 정책연구과제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함<br>○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부분공개를 포함하여 그 공개 비율이 2021년 81%, 2022년 79%, 2023년 74%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구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정산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시정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기타경상이전수입’(10억 3,500만원 수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자체 감사 후 환수금액 등이 수납되는 비목이며, ‘기타재산이자수입’(7,400만원 수납)은 보조금 관련 발생이자 및 관유물대여료 분할납부시 이자 등이 수납되는 비목임<b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 완료하여야 하나, 2022년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2023년 연내 미수납된 사례(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집행잔액 6,400만원 등)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 시정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신규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11억 800만원 집행)은 통일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 해임에도 예산집행률은 73.9%에 그쳤으며, 법령상 회의운영 기준도 준수하지 못함<br>○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사업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통일+센터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시정,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통일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인데, 당초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통일+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br>○ 강원권 통일+센터의 경우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이나, 경기권·충청권의 경우 사업이 반복 지연(예산이월 반복)되어 2025년 6월과 10월로 각각 개관이 늦춰짐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br>○ 통일부는 통일+센터 건립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시정,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서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변경 집행을 통해 일반용역비 1억원을 조성하고 8,000만원을 집행한 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br>○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신규사업 추진시 관련 예산을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시정)<br>○ 통일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 |
| 24 | **북한경제연구포럼 사업 구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세분석역량강화(1533-307) | 시정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내역사업은 북한경제에 대한 연례적 평가 및 북한 경제의 구조적·심층적 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함<br>○ 동 사업의 목적은 정부와 북한경제연구자 간 종합적 소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는데, 포럼 운영에는 세미나 개최 비용 1억원(28.6%)만 편성되어 있고,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정책연구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내역사업을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포럼, 세미나 등 형태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9억 7,700만원 중 5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 5,500만원을 불용함<br>○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시의 부지 변경 요구로 착공 진행 불가에 따른 설계 중지로 설계비 기성금 잔액 5,000만원, 공사비 등 59억 500만원, 총 59억 5,500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향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설계, 착공 등에 있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것 | | |
| 26 | **보조사업자 선정시 정치적 중립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 18개(상반기 15, 하반기 3)단체에 총 20억원을 집행함<br>○ 보조사업 추진 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체를 배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 연말 예산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시정,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2023.12.1. 서울 코엑스 개최)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2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전용하여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됨<br>※ 구인 기업체 141개, 북한이탈주민 약 1,200여명 참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정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예산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양할 것(시정)<br>○ 통일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내실있게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훈령 제697호)에 따르면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촉할 수 있으며,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br>○ 총 138개 지역협의회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이 위촉된 지역협의회는 15개에 불과하며, 반기별 회의 개최 규정을 준수한 지역협의회는 3년간 15개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성 및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br>○ 통일부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별 종사자 인력편차 문제를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운영사업의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4억 1,400만원 집행)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br>○ 최근 3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휴면 중인 기업이 20개 내외이고, 소비재박람회, 국회 상품전시회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는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관련 기존 사업의 결과분석 및 2024년 이후의 사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 |
| 30 |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남북회담 추진(4031-300)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400만원 집행)은 남북회담·협상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국제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대북협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br>○ 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외부전문가 및 회담 유경험자 강의 등을 통해 회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유관부처 합동 해외 사례조사 사업 또한 2023년 집행되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담당 인력의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회담에 대한 상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지역사회 통일교육 제공 주체의 분절화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통일교육 강화(5031-309)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45억 3,000만원 집행)은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통일관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br>○ 통일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조직의 역할이 통일강좌 확산, 체험학습 등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 상호간 역할과 위치 등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통일 인프라의 역할을 조정 및 재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보조사업자 예산 집행 관련 교육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남북협력기금 - 사회문화교류 지원(2040-401)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계획액 215억원 중 34억 5,600만원 집행)은 남북한 교육·학술협력사업 및 인적왕래, 그 밖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br>○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가 예산집행시 원고비 및 제작비를 사업추진비(240-01)로 집행하고 행사 식대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등 예산비목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편성 비목과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상 집행 비목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교육 강화 등 예산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br>○ 통일부는 현재 북측의 호응이 없이 남측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일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진행 방식 및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남북협력기금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3040-403)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집행액 없음)은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임<br>○ 남북경협이 장기간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 청산,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장기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집행가능성을<br>고려한 보조금<br>예산의<br>편성·교부 및<br>보조사업<br>집행관리 철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 조성(1031-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통일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br>※ 2023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사업시행<br>주체<br>(지자체)</th><th colspan="2">통일부</th><th colspan="8">사업시행주체(지자체)</th></tr>
<tr><th>예산<br>(A)</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br>이월액<br>(B)</th><th>교부<br>현액</th><th>집행액<br>(C)</th><th>C-B<br>(D)</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r>(D/A)</th></tr>
<tr><td>전라남도</td><td>300</td><td>300</td><td>300</td><td>-</td><td>300</td><td>‘299</td><td>299</td><td>-</td><td>1</td><td>99.7</td></tr>
<tr><td>강원도</td><td>-</td><td>812.5</td><td>812.5</td><td>2,210</td><td>3,022.2</td><td>3,021.8</td><td>812.5</td><td>-</td><td>-</td><td>-</td></tr>
<tr><td>충청남도</td><td>1,600</td><td>1,600</td><td>1,600</td><td>400</td><td>2,000</td><td>355.7</td><td>-</td><td>1,644</td><td>-</td><td>-</td></tr>
<tr><td>경기도</td><td>1,000</td><td>1,500</td><td>1,500</td><td>1,457</td><td>2,956.8</td><td>201.7</td><td>-</td><td>2,755</td><td>-</td><td>-</td></tr>
<tr><td>계</td><td>2,900</td><td>4,212.5</td><td>4,212.5</td><td>4,067</td><td>8,279</td><td>3,878.2</td><td>1,111.5</td><td>4,399</td><td>1</td><td>34.85</td></tr>
</table>
주) 강원: (전년이월) 8억 1,250만원 교부('23.1월)<br>❍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단계에서 국비만 우선 집행되고, 매년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정산·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은 통일부의 보조사업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서 부적절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향후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액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지자체의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마다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정산·반납받는 등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을 준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신규 내역사업 미집행 및 내역변경을 통한 노후시설 보수의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 | 주의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옥외전광판 교체 사업은 경의선 차량게이트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않고, 내역변경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집행됨<br>○ 시급한 노후시설의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음<br>-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 공사 예산을 전액 다른 용도의 공사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br>- 현재 경의선 출입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출입시설 냉난방기 교체와 CCTV 부분 교체 공사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음<br>-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설물 개보수 공사의 경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라는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의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실시하고, 내역변경 등을 통한 집행은 안전과 관련한 시급한 공사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실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북한의 경수로지원 (KEDO) 채무불이행 관련 북한정권에 채무상환 촉구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KEDO 차관 관련 | 제도개선 | 통일부 |
| | | 지적사항 | ○ 1999년에 발생한 KEDO(경수로 지원) 차관 원금 1조 3,744억원을 지난 2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돌려막기(리볼빙) 하며 빚을 계속 미룬 결과 이자지급에만 원금보다 더 큰 1조 8,705억원을 혈세로 탕진함<br>○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차입하다보니 원금과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으면서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에서 이자 상환(2012~2023년까지 매년 평균 742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일부는 북한의 경수로 지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십년째 누적된 재정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정권에 채무상환 촉구 등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 |

##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3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분과위원회 회의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 주의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은 통일정책 자문 등을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법정위원회 중 분과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 출석률이 최근 5년간 평균 65.8%, 2023년에 59.6%이고, 2023년 상반기에 일부 분과위원회(청년·교육 37%, 인권·국제협력 39.1%, 국민소통2 40.9%)는 회의체의 기본요건인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음<br>○ 상임위원회와 함께 자문 기능의 중추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비목별 적정예산 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민주평화통일<br>자문회의</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세부사업에서 2020년부터 매년 여비 또는 사업추진비를 전용하여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음<br>※ 2023년 자문회의 운영 사업 내 전용 현황
<table>
<tr><th rowspan="2">구분<br>(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br>(백만원)</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등 사유</th></tr>
<tr><th>세부사업명<br>(사업코드)</th><th>목-세목<br>코드</th><th>세부사업명<br>(사업코드)</th><th>목-세목<br>코드</th></tr>
<tr><td>자체전용<br>('23.11.24.)</td><td>자문회의<br>운영<br>(1031-300)</td><td>220-01<br>220-02</td><td>104</td><td>자문회의<br>운영<br>(1031-300)</td><td>210-01<br>210-07</td><td>전체회의<br>일반수용비(86백만원),<br>임차료(18백만원)<br>부족분 충당</td></tr>
<tr><td>자체전용<br>('23.12.20.)</td><td>자문회의<br>운영<br>(1031-300)</td><td>220-02</td><td>10</td><td>자문회의<br>운영<br>(1031-300)</td><td>210-01</td><td>상임위원회 개최<br>일반수용비(10백만원)<br>부족분 충당</td></tr>
</table>
자료: 외교부<br>❍ 예산의 전용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특정 비목에 대한 연례적·반복적 전용을 지양해야 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각 비목별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변경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 제도개선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국내·해외 출범회의’는 21기 자문회의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활동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br>○ 2023년 21기 국내 출범회의(11.28.)의 위원출석이 정족수에 미달(48.8%)한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과반수 출석의 정상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회의 일정을 조기에 수립하고, 자문위원의 자발적인 참여 제고를 위한 관리조치 등 제도개선을 할 것 | | |

## 4. 재외동포청(11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 |
| | | 지적사항 | ○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매년 500여개 단체에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포단체에서 시행한 사업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에 맞추어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를 통해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사할린동포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 |
| | | 지적사항 | ○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교류협력 강화(5035-301), 아주러시아동포 정책강화(5038-302)에서 세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 및 행정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예산을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
| 3 | **재외국민등록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7131-301) |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 |
| | | 지적사항 | ○ 대부분의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의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등록률의 편차도 큼<br>○ 부정확한 재외국민등록 실태는 정부가 해외체류중인 국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하고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조속 구축 및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2) |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br>재외동포협력센터 |
| | | 지적사항 | ○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재외동포 관련 기록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콘텐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바, 수집된 자료는 내부자료로 보관하는데 그치고 대국민 및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외교부 이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워킹홀리데이 이행(5033-301) |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 |
| | | 지적사항 | ○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협정 체결 담당 부처로서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및 동 사업이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아닌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br>-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참가 현황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동 자료는 외교부에서 주한공관에 외교공한을 발송하여 파악하여야 하는바 외교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인 현황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와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로부터 이관된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소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실적보고서 제출<br>관리 및<br>제도개선 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재외동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내 재외동포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재외동포청의 16개 보조사업 중 5개의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br>※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 현황<br>(단위: 일)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내역사업명</th><th colspan="5">보조사업자</th></tr>
<tr><th>기관명</th><th>보조사업<br>착수일</th><th>보조사업<br>종료일</th><th>실적보고서<br>제출일</th><th>제출일까지<br>소요기한</th></tr>
<tr><td>1</td><td rowspan="5">동포단체<br>활성화</td><td>A</td><td>’23.8.24.</td><td>’23.11.24.</td><td>’24.2.5.</td><td>74</td></tr>
<tr><td>2</td><td>B</td><td>’23.8.24.</td><td>’23.9.28.</td><td>’24.2.28.</td><td>154</td></tr>
<tr><td>3</td><td>C</td><td>’23.8.24.</td><td>’23.10.12.</td><td>’23.12.14.</td><td>64</td></tr>
<tr><td>4</td><td>D</td><td>’23.8.24.</td><td>’23.10.9.</td><td>’23.12.29.</td><td>82</td></tr>
<tr><td>5</td><td>E</td><td>’23.10.24.</td><td>’23.10.31.</td><td>’24.1.8.</td><td>70</td></tr>
</table>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재외동포청은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 사유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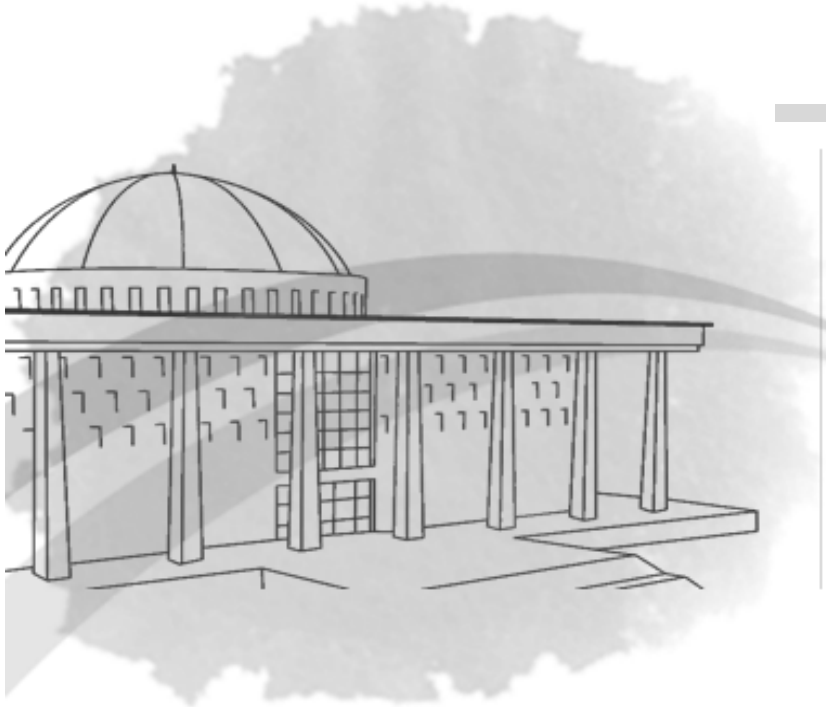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해외 동포단체의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 |
| | | 지적사항 | ○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5개 사업을 선정하여 99만 1,400달러를 지원하였고, 그 중 6만 9,400달러가 반납되어 전체 반납률은 7% 수준인데, 17개 사업은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6만 7,400달러) 반납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기념성 행사 지원금의 반납 사유 등을 조사하여 추후 사업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스터디코리안<br>운영사업의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5035-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재외동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재외동포 학습자와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스터디 코리안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교사인증과정’의 수료율이 낮고 세부과정의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의 수강인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br>※ 교사인증과정 신규 및 기존 수료자 수강 현황<br>(단위: 명, %)
<table>
<tr><th>연도</th><th>신청인원</th><th>수료</th><th>수료율</th></tr>
<tr><td>2021년</td><td>1,215</td><td>933</td><td>76.8</td></tr>
<tr><td>2022년</td><td>955</td><td>576</td><td>60.3</td></tr>
<tr><td>2023년</td><td>1,673</td><td>1,189</td><td>71.1</td></tr>
</table>
주) 교사 인증과정 중 ‘정규과정’, ‘단축과정A’ ‘단축과정B’만 합산한 수치<br>자료: 재외동포청<br>※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 수강인원 현황<br>(단위: 명)
<table>
<tr><th>구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1)]</th><th>합계</th></tr>
<tr><td>인원</td><td>200</td><td>176</td><td>175</td><td>83</td><td>634</td></tr>
</table>
주1) 2024년 5월말까지<br>자료: 재외동포청</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재외동포청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선,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콘텐츠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사인증과정’의 수료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의 수강인원 증가를 위해 영어권 화자 뿐 아니라 비영어권 화자로 학습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자료실 미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2) |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br>재외동포협력센터 |
| | | 지적사항 | ○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어 자료실 소장자료의 보유·관리 권한이 재외동포청을 거쳐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으나 청사 공간 부족,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건립 지연 등의 사정으로 자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의 자료실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 |
| 10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2), | 주의 | 재외동포청<br>재외동포협력센터 |
| | | 지적사항 |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당초 2023년 건립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마곡지구의 매입불가 통보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로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공일을 2025년으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실제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6년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임<br>○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건립규모도 7,800㎡에서 1,042㎡가 감소한 6,758㎡로 축소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건립규모에 대하여 재논의하고 향후 계획된 공사 일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순회영사 지원금 효율적 운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5031-301) | 주의 | 재외동포청 |
| | | 지적사항 | ○ 순회영사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반납된 3만 4,235달러 중 1만 5,733달러가 재배정되지 못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br>※ 순회영사 사업 프로세스<br>- 1월 초 : 순회영사 예산 배정 계획 배포 및 수요조사(재외동포청), 연간 순회영사 시행계획 보고(재외공관)<br>- 2월 초 : 시행계획 등 수요조사 결과 검토 → 공관별 예산 배정(재외동포청)<br>- (연중) : 순회영사 시행 및 결과 보고(재외공관), 실적·건의사항·특이사항 모니터링(재외동포청)<br>- 6월 말~7월 초 : 상반기 실적 점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재배정(재외동포청)<br>- 10월 말 : 1-10월 실적 점검, 불용 예산 반납 및 최종 재배정(재외동포청)<br>- 12월 초 : 연간 실적 점검, 예산·민원처리 및 예산 집행 실적 결산(재외동포청)<br>- 12월 말 :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등 환류(재외동포청)<br>※ 순회영사 지원금이 반납된 경우 이를 다른 재외공관에 재배정함으로써 순회영사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외동포청은 순회영사 지원금의 배정 및 재배정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 | |

# 국방위원회



# 1. 국방부(5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임기제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충원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사관인건비(1101-152)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임기제부사관의 정원 대비 운영률은 51.7%이며 특히 육군의 경우 기본급 예산운영률은 46.4%에 불과함<br>- 이는 병사와 임기제부사관의 봉급 및 지원금 실수령액 차이 감소로 인해 금전적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우수한 임기제부사관을 당초 목표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 | |
| 2 | **특수지역근무수당 지급근거 및 지침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간조리원(1231-305)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민간조리원에 대한 특수지역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지침이 부재하고, 근무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br>- 예시: 1사단 미지급, 25사단 지급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군수지원 및<br>협력 프로그램<br>사업의 이전용<br>최소화 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군수지원 및 협력(2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군수지원 및 협력(2300) 프로그램 사업은 장비·물자·탄약 등의 획득·운영 및 유지로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전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군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적극적인 대민업무 지원 사업임<br>○ 회계연도 2020~2023년 국방부 이용 현황(세출예산 12개 프로그램) 중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비중 매우 높고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br>(단위 : 억원)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합계</th></tr>
<tr><td>국방부 이용 전체(A)</td><td>2,176</td><td>3,045</td><td>2,196</td><td>2,257</td><td>9,674</td></tr>
<tr><td>군수지원 및 협력 이용(B)</td><td>655</td><td>726</td><td>1227</td><td>908</td><td>3,517</td></tr>
<tr><td>B/A(%)</td><td>30.10</td><td>23.84</td><td>55.87</td><td>40.23</td><td>36.3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이사화물 수송임<br>현실화 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송활동(23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이사화물 수송임은 국가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지원액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낮아 그 차액을 군인 및 군무원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담액의 규모는 이사거리가 증가할수록 더욱 확대됨<br>○ 이사 시 필수비용인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설치비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군인 및 군무원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의 이사화물 수송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사업목적에<br>부합하는<br>사업효과 작성<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결산설명자료상 예산의 사업목적은 재난예방·보수이나 사업효과 및 실적에는 대민지원이라고 작성되어 있음<br><br>○ 이는 과다홍보에 치중한 결과로 보여져 이러한 결산서류 작성은 시정되어야 함<br><br>
<table>
<tr><td>2023</td><td>○ 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긴급구조지원 및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br>- 병력 167,031명/ 장비 9,365대<br>* 풍수해(태풍·호우·대설), 폭염, 하천정비 147,437명/7,548대<br>* 철도파업 1,234명<br>* 실종자 탐색구조 1,787명/226대<br>* 산불, 화재 13,607명/697대<br>*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방역 1,050명/463대<br>* 해외재난 지원 1,916명/431대</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br>사항</td><td>○ 국방부는 결산서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효과 및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할 것</td></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초급간부 AI<br>면접 지속<br>추진에 대한<br>재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사정책지원(2439-306)</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지난 3년간 AI 면접을 실제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성·타당성 문제에서부터 기술적 오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대부분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임<br><br>- 모니터로 분석된 생체정보를 이용해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항목은 아직까지 AI가 좋은 성능을 보이기 어려움<br><br>- AI 면접 질문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 반복, 이미 답변한 내용 재질문 등 쌍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음<br><br>○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국방부는 AI 면접 시행의 비용과 효과성 및 채용의 공정성·타당성을 고려하여 면접평가 배점비중, 사업의 유지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 (시정)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td></tr>
<tr><td>시정요구<br>사항</td><td>○ 국방부는 AI 면접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비상근예비군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동원훈련(2632-303)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비상근예비군으로 지원하는 병력 자원의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br>○ 2014년 비상근예비군 제도 도입 이래 2016년에 한차례 손실보상금(훈련보상비) 단가 인상 이후 현재의 손실보상금 단가를 유지하고 있음<br>○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비상근예비군으로 복무할 유인을 떨어뜨려 비상근예비군 지원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비상근예비군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8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의 상설 운영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소속 한시조직인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성격상 이를 한시조직이 아닌 정식 부서로 직제에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br>-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기준 5명의 상근인원으로 구성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을 직제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이 상설 부대 형태로 운영되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군수품 분실<br>방지를 위한<br>체계적인 관리<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무기·탄약류 등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군수품이 분실되었지만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군수품 관리 소홀로 인해 분실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br>- 육군(대검, 5.56mm 보통탄, 7.62mm 보통탄), 해군(K-2소총, 45구경 권총, 5.56mm 보통탄), 공군(5.56mm 보통탄)
<table>
<tr><th>구분</th><th>계</th><th>육군</th><th>해군</th><th>공군</th></tr>
<tr><td>수량(건)</td><td>8,183</td><td>6,250</td><td>116</td><td>1,817</td></tr>
<tr><td>금액(원)</td><td>7,554,912,781</td><td>721,649,500</td><td>6,705,745,310</td><td>127,517,971</td></tr>
</table>
○ 해군의 경우 분실방지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를 분실하는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br>- 2021년(광대역송신안테나, 항공기용 음파송수신기), 2022년(수중음파탐지기, 전자구성품 조립체, 기음향측정장비), 2023년(중어뢰훈련용완성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무기류 군수품 분실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군수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과도한<br>사업조정과<br>집행잔액 사용<br>관리·감독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편성액 대비 증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그 이하는 각 군에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나, 각 군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형식적으로 시행하여 지침을 위배한 집행잔액 사용이 다수 발생함<br>- 정보화사업과 시설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나 각 군에서는 일부 기재부 지침과 다르게 임의로 재사용하여 기재부의 정부예산안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지침에 근거한 각 군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절차, 각 군의 사업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부대개편 사업의 적기추진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부대개편 사업(413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진행된 부대개편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4.8%에 불과하며, 8차까지 진행된 사업 중 정상진행된 것은 2차 사업 1건에 불과함<br>○ 2019회계연도부터 5년 연속 육군의 부대개편 사업은 국회의 “집행부진과 사업관리 철저”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향후 육군 부대 개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동안 국회 국방위에 분기별로 집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 12 | **군 무단점유 토지사업 실태조사 전문기관 위탁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사유재산정리(4132-400)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무단점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무단점유지 정리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br>- 2023년 8월 기준 군 점유지 4,964만㎡ 중 무단점유 토지는 2,534만㎡(51%)이고, 그 중 사유지는 1,986만㎡으로 무단점유 토지의 78.3%에 해당<br>- 국방부의 연평균 매입목표에 비하여 매입실적이 부진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방부가 제시한 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br>○ 국방부는 사유지 정리사업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지만 실 소요가 있을 때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군 무단점유 정리실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무단점유지 현황조사(측량 및 실태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위탁을 활성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지원금액 상한을 지정하는 방식 등 기금 소진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군인복지기금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급격한 금리인상 때문에 민간주택임대 지원사업의 자금 소진이 빨라졌음<br>- 실제 2021년 인당 41만원이었던 월평균 지원금액이 2023년 88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하였고, 2023년 7월에는 신규 지원을 일시 중단하고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함<br>○ 정책대출인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전용 협약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자체 상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은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협약상품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여 지원금액 상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금 소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4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연도별 수납률을 보면,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1,565억 6,600만원 중 886억 1,1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56.6%를 보이고 있고,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2,802억 4,000만원 중 1,948억 7,7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69.5%를 보여 전반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상태에 있음<br>○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결정된 채권이 미수납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양성평등담당관의 성실한 임무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건복지지원(2242-303)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양성평등담당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상담실적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음<br>○ 양성평등담당관의 신분이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인 관계로 행정업무와 상담을 겸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담자 또한 전문 상담자가 아닌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상담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과 임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16 |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 내일준비지원(2242-304)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사업개시연도인 2022년 병사들의 가입 저조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41.3%에 그쳤는데, 2023년의 경우에도 76.2%만 집행되어 1,570억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br>- 2023년 예산 편성시 '적금 가입률 95%, 납입금액 4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2023년 중 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인 '2021년 5월~2022년 5월 입대자'의 적금 가입률과 납입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였음<br>* 2023년 집행실적: 가입률 81.6%, 평균납입액 34만원<br>- 또한, 2023년 12월 전역자의 경우 2024년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애초에 불가능하나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로 인해 약 490억원의 불용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관련 예산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급을 제고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병영생활관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영생활관(2531-301) | 주의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병영생활관 사업은 과도한 이월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음<br>- 2023년 예산현액 3,635억 3,100만원 중 1,111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1억 1,700만원은 불용됨<br>- 집행부진 사유로는 설계지연, 대관 협의 지연, 업체 부도 등, 현장여건 변동, 감리계약 지연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사업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제반 여건이 완료된 사업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진행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사항 발견 시 선제적 대응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 |
| 18 | **미등재 건축물의 조속한 양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시설정책지원(2533-320)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미등재 건축물이 국방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등재 건축물 50,665동, 미등재 건축물 51,018동)<br>- 미등재 건축물은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br>○ 국방부는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매년 기본조사설계비 등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말 현재 19,902동을 양성화하고 있으나, 미등재 건축물의 양성화 실적은 아직 미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건축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정화사업의 완결성 제고를 통해 배상금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4232-302) | 주의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결성이 떨어져 소송패소로 배상금이 집행되고 있음<br>- 환경정화를 완료한 20개소 중 5개소가 소송 중(3건)에 있거나 소송이 완료(2건)되어 배상금(277억 800만원)이 지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기관과의 협업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완전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정화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20 | **적정한 공공요금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요금(2536-302)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2020년 감사원은 국방부의 공공요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국방부는 예산편성 시 조정비율을 제외하여 공공요금을 실소요액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br>국방부 부처 요구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정비율이 감사원 감사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이 준수되지 않았고, 이용 21회, 전용 174회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함(이·전용등(증) 금액은 1,343억 600만원에 달함)<br>○ 지금과 같이 이·전용(증) 등으로 과도하게 사업비를 증액하면 이·전용해 준 사업에 영향을 주어 국회가 승인해 준 사업내용이 왜곡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실적과 전기료 인상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의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4131-480) | 주의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대부분의 기본조사설계비와 건설보상비 전액이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함<br>- 재공고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기본조사설계비가 집행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건설보상비에 편성된 토지보상비 역시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함<br>○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건설보상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 건설보상비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2 | **병역자원 감소를 반영한 국방분야 중장기 예산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2030년대 중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도 국방개혁 기본계획 등 국방분야 중장기 계획에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br>- 20세 남성인구는 2024년 25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수준의 상비병력 규모(50만명)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방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중장기 계획은 현재수준의 상비병력 규모(50만명)를 가정하고 수립되어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분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의 변화 등이 국방분야의 재원배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과의 협의를 통해 국방 인력체계 개편 및 상비병력 규모 설정에 관한 개편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국방혁신 4.0 관련 국방분야 재원배분 방향성 제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방혁신 4.0은 계획범위를 국방 전 분야가 아닌 첨단과학기술 관련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있어 국방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됨<br>- 병 봉급 인상 등 국방혁신 4.0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국방예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국방혁신 4.0의 추진목표와 국방예산 내 재원배분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방혁신 4.0의 목표 달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재원배분이 국방혁신 4.0의 목표 달성과 개혁방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과 관련된 국방분야 재원배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 | | |
| 24 | **국방혁신 4.0과 국방예산 간 연계성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방혁신 4.0 및 그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과업과 이에 대응하는 예산사업의 분류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국방혁신 4.0 추진을 총괄하는 국방부 차원에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방혁신 4.0의 체계적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각 과제·과업과 국방예산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방혁신 4.0의 추진과 관련된 예산사업의 기획·관리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이원화 및 국방부 내 기획부서와 재정부서의 분절적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국방개혁 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제출 및 추진실적 보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매년 국회에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비밀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br>○ 「방위사업법」 제13조에서 국방중기계획도 수립 즉시 그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고된 적이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회 차원에서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의 추진상황 점검 및 그와 연계된 심도 있는 예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사기밀 등을 제외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추진실적을 보고할 것 | | |
| 26 | **국방혁신 4.0 관련 주요 연구개발 목표 설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괄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방혁신 4.0은 그 과업 중 하나로 ‘국방 R&D 예산 확대’를 설정하여 2027년까지 국방비 중 국방 R&D 예산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 핵심부품 국산화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투자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br>- 2019년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서는 2019~2033년까지의 국방 R&D 및 핵심 항목에 대한 재원 배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2023년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서는 2024년 이후의 국방 R&D 및 핵심 항목에 대한 재원 목표가 대부분 삭제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과업 중 ‘국방 R&D 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국방비 중 국방 R&D의 비중만을 단일한 목표로 제시하기보다는, 미래도전국방기술, 핵심부품 국산화 등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현역병의 입영률 저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 인건비(1101-153)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병 봉급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입영 대상자들이 입대시기를 늦추고 있어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각 군의 현역병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의 불용도 상당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br>- 2022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 96.6%, 입영률 86.8%,<br>2023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 94.7%, 입영률 87.5%로 나타나 예산 집행률 및 입영률이 저조함<br>○ 병 봉급 인상과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입영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계획인원 산정 시 실제 입영 대상자 수 및 입영 선택비율 등에 근거하지 않고 군 정원 대비 병사 전역에 따른 현원의 부족분을 그대로 계획인원에 반영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입영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28 | **입영월별 · 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 인건비(1101-153)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대학 복학시기 고려, 동계기간 훈련소 기피 등의 이유로 4분기 입영률이 떨어져 병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br>- 2022년의 경우 11월 입영인원 7,295명, 입영률 46.0%,<br>2023년의 경우 11월 입영인원 6,138명, 입영률 43.6%<br>○ 해군과 해병대의 입영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br>- 해군의 입영률은 2021년 94.3%에서 2023년 70.5%로,<br>해병대 입영률은 2021년 105.1%에서 2023년 76.8%로 감소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입영월별 · 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영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 획득의 어려움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부사관인건비(1101-152)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병 봉급 인상과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장교·부사관 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br>- 초급간부의 획득경로 중 하나인 학사장교·학군장교(ROTC) 및 단기복무부사관의 최근 5년간 지원율은 모두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br>○ 장교 및 부사관 획득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과 근무환경의 문제로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원활한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 |
| 30 | **부사관 명예전역 신청 증가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사관인건비(1101-152)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부사관의 명예전역 신청은 2021년 712건에서 2023년 1,61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br>- 국방부는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165억 1,300만원을 조정(기본급여→명예퇴직수당)을 통해 확보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전역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명예전역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군무원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군무원인건비(1102-15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군무원 정원을 확충하였으나 매년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중도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br>- 중도퇴직자가 2019년 670명에서 2023년 1,720명으로 증가하고, 전체 퇴직자 중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의 비율이 18.9%에서 49.2%로 크게 증가하였음<br>○ 군무원의 인력 운용상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 전반에 대한 선호도 하락 외에, 군무원의 역할 확대 과정에서 군무원의 모호한 역할 및 업무 설정, 기존 군인 직위의 군무원 전환에 따른 업무수행상 갈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 |
| 32 | **민간조리원 채용률 제고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간조리원(1231-305)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민간조리원의 채용률은 2022년 78.2%, 2023년 82.1%로 저조하고 예산집행률도 2022년 87.8%, 2023년 83.7%로 낮아지는 추세임<br>- 민간조리원의 인력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주된 요인은 조리직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과 관련된 근무여건상 문제로 확인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특수지역 근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장비획득 사업 지연 및 집행 부진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구매요구서 등 필요서류 작성지연·보완, 조달청 위탁조달품목의 우선순위 후순위 설정, 예산편성 후 사업방식 변경 등 행정상 문제로 인한 장비획득 사업의 지연 및 집행부진이 나타남<br>- 2023년 주요 집행부진 사례로써 ①구매요구서 등 필요 첨부서류 작성이 지연되어 발주가 지연된 경우, ②조달청 조달의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설정되었음에도 발주시점에서 서류 등의 미흡점이 존재하여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③사업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④조달 관련 각종 서류의 수정·보완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행정상 문제로 인한 장비획득 사업의 지연 및 집행부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비획득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사전검토 강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34 | 장비획득 사업 편성단가와 계약단가 불일치 문제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군수품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군사요구도와 핵심부품의 가격상승에 비하여 편성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거나, 시장환경 및 동일 품목의 과거 낙찰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편성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결과 군수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각 군의 군사요구도에 부합하는 군수품의 적정 단가가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성단가와 계약단가 간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군수품 조달계약 업체의 생산지연 또는 납품포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군수품 조달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생산지연 또는 납품포기로 인하여 군수품이 조달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함<br>- 2023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계약업체의 생산지연과 납품포기로 인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br>-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나,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업체가 다른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업체 선정 시 생산능력과 신뢰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 및 심사를 강화하고,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지연 또는 납품포기 업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36 | **예산 편성 시 장기계속계약의 집행잔액 반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장비획득 사업 중 2022년도 이전 장기계속계약이 체결된 건과 관련하여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2023년도 연부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br>-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취소된 경우 또는 장기계속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이가 미반영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현황 등 관련 내용 보고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의 집행잔액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현재 운영 중인 한시조직 등 정비 및 규정에 부합하는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 주의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방부 국방정책실 소속 3개 T/F는 육군 준장 및 각군 중령 등을 상근인원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등에 따른 한시조직 운영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br>- 국방부는 국방정책실 소속으로 2023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 T/F,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를 운영하였음<br>○ 국방부는 특정한 T/F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 동일 조직 내에 새로운 T/F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br>- 대표적으로, 국방부는 2023년 말 국제정책관 소속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의 운영을 종료한 직후 다시 지역안보협력 T/F를 설치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T/F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시조직을 운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단기복무장려금 · 장려수당 지급의 형평성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2019년 2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으로 6배 인상된 반면,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019년 500만원에서 2024년 1,000만원으로 2배 인상되는 것에 그치고 있음<br>- 단기복무장려금 및 장려수당의 경우 장교·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복무기간이 더 긴 부사관에 대하여 더 적은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br>○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임관 전에 지급되고 장려를 위한 보전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단기복무장려수당의 경우 임관 후 수당으로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져 장려금과 장려수당 간 실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지원율·의무복무기간·장려수당 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려수당 형평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입법적·제도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시설사업 변경기준의 소급 적용에 따른 사업지연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영생활관(2531-301) | 주의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3월 병영생활관에 대한 국방·군사시설기준을 변경한 후 이미 진행 중인 병영생활관 사업에 대하여 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지연 및 집행부진이 발생함<br>- 변경된 시설기준을 기 진행 중인 병영생활관 사업에 적용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부지 추가확보, 총사업비 변동,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집행부진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향후 시설사업의 기초가 되는 기준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거나 개정을 검토 중인 경우, 기준의 변화와 예산 편성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변경기준의 소급 적용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 |
| 40 |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방안 강구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2년 11,000원/일에서 2023년에 13,000원/일로 18.2% 상승하였으나, 급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병사 비율은 61.3%에서 60.8%로 감소함<br>- 국방부는 「2023~2027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서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과 균형있는 식단 편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식만족도 하락<br>○ 식재료의 질, 식단, 양 등 부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가 하락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 방안을 강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영외자 급식비<br>법령 불일치<br>해소 및 정당한<br>보상<br>지급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기준 영외자급식비(일 4,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3,000원)의 1/3 수준으로 적게 편성하고, 국방부 「급식방침」은 급식을 실시한 금액이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봉급에서 공제함<br>❍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은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영외자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급식방침」 및 「급식운영 지시」는 급식을 실시한 만큼 영외자급식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불일치가 발생함<br>- 영외자가 1일 3식을 할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는 4,784원이지만 급식비용으로 13,000원을 부대에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함
<table>
<tr><th>구분</th><th>유형</th><th>내용</th></tr>
<tr><td>군인<br>급식<br>규정</td><td>대통령령</td><td>- 영외자에게 주식과 부식에 갈음하여 급식비 지급<br>- 급식을 실시한 경우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td></tr>
<tr><td>급식<br>방침</td><td>국방부<br>방침</td><td>- 급식을 실시할 경우 다음 달 급식비에서 해당분 공제<br>- 공제액이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봉급에서 공제</td></tr>
<tr><td>급식<br>운영<br>지시</td><td>각 군<br>지시</td><td>- 급식을 실시할 경우 부대별로 희망송금하여 공제하거나 부대통장으로 입금해야 함</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영외자 급식비에 대한 법령 체계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입영시기 및 사용률을 고려한 피복류 보급기준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본피복(1241-301)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육군 병사의 경우 입영시기에 따라 동·하절기 근무기간이 상이함에도 동일 기준으로 피복이 지급되고 있고 실제 사용률이 낮은 품목이 지속적으로 보급됨<br>-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18개월간 복무로 입영시기에 따라 계절별 피복 수요가 상이함 (예: 운동복, 하계 전투복 상의, 방한양말 등)<br>-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지급품목 중 9개 품목 사용률이 50% 미만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병사의 입영시기 및 실제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피복류 보급기준을 개선할 것 | | |
| 43 | **안경제작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진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무물자확보(2231-304)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안경제작 사업은 2022년부터 제조업체가 안경테만 제작하고 병사 개인이 직접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렌즈를 제작하고 수령한 후,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조달방식 변경되었음<br>○ 이로 인해 2022년 이후에는 병사 개인의 행정 부담 증가라는 집행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2022년 집행률이 58.1%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2023년에도 70.6%에 그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병사 개인에게 제작 책임을 지우는 현행 조달방식의 유지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인 특례 마련 등을 추진하는 등 안경제작 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교체 대상 장비의 선별 기준 및 절차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무장비획득(2231-302)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예산의 집행부진이 나타난 사유는 계약잔액 또는 낙찰차액 발생, 납품 지연,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한 장비의 사양 조절, 노후장비 상태가 양호함에 따른 미조달 등임<br>- 이러한 집행부진 사유 중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한 장비의 사양 조절, 노후장비 상태가 양호함에 따른 미조달의 경우 구매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지연사유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br>- 또한, 구매 대상 의료장비의 수가 많아 현장여건 및 장비의 실제 노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군의관이 바뀌면서 교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교체 대상 장비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실제 노후도와 교체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할 것 | | |
| 45 | **정보화사업 일반연구비 이월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보체계개발유지(2131-302)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방자원관리 및 M&S 체계의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정보체계 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중 상당수에서 연말 계약체결, 보안절차 등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반연구비 이월이 나타나고 있음<br>- 내역사업인 정보체계개발 사업의 2023년 일반연구비 예산현액 681억 7,800만원 중 109억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br>- 특히,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거나 연말에 계약을 발주한 후 관련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편성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2023년에도 편성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계약 발주 전 필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계약이 연말에 발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보안 검토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예산에 부합하는 국군의 날 행사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방행사지원(7131-313)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군의 날 행사예산은 당초 79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방부의 행사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22억 5,9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조정하여 총 99억 3,600만원(3억 800만원을 불용함)을 집행하였으나,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br>- 특히, 전용·조정한 예산은 기념음악회·무대설치 등으로 집행함<br>○ 기념식 및 행사의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과도한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심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집행방식은 부적절함<br>- 2023년에 적용된 「부대관리훈령」 제313조(행사규모)는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하고, 소규모 행사는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등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 및 주기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방행사지원(7131-313)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국군의 날 행사는 당초 5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그 밖의 해에는 소규모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국방부는 2022~2023년 모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행사의 개최빈도를 증가시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br>- 국방부는 2024년 2월 「부대관리훈령」 제313조(행사규모)를 개정하여 제2항에서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br>- 2010년 이후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전까지는 2013년과 2018년에만 대규모 행사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3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국군의 날이 가지는 의의,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 및 국방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2월 개정된 「부대관리훈령」 제313조를 개정 전으로 다시 개정하는 등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불용 방지 대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동원훈련(2632-303)·일반훈련(2632-304) | 주의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보상비 등을 편성함에 있어 훈련인원 산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해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됨<br>- 2023년도 손실보상금(훈련보상비 등)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원훈련 사업에서 67억 4,400만원, 일반훈련비 사업에서 52억 2,300만원의 손실보상금 불용이 발생<br>○ 국방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2017년~2019년 평균 훈련인원을 기준으로 훈련인원을 산정하였는데, 현역병 등 입영인원의 감소, 현역부대의 해·감편 등으로 인하여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감소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49 | 동미참·지역예비군 훈련 시 훈련보상비 지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일반훈련(2632-304)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훈련인원 산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br>○ 동원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보상비가 지급되는 반면 동미참·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br>- 2023년 기준 동원훈련(입영) 훈련보상비 : 8만 2,000원<br>○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동원훈련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훈련 시에도 훈련보상비 지급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훈련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미지급금 지급계획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5131-304)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 공백으로 발생한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미지급금의 해소를 위한 연차별 지급계획이 부재하여 2023년의 경우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미국측 요구액을 충당하였고, 향후 연차별 재정소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br>-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20~2025)의 체결이 지연되어, 미측에 대한 미지급금이 크게 증가함<br>- 2024년 예산에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92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상당 수준의 잔여 미지급금이 존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주한미군사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잔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군 무단점유 토지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사유재산정리(4132-400)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무단점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무단점유지 정리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br>- 2023년 8월 기준 군 점유지 4,964만㎡ 중 무단점유 토지는 2,534만㎡(51%)이고, 그 중 사유지는 1,986만㎡으로 무단점유 토지의 78.3%에 해당함<br>- 국방부의 연평균 매입목표에 비하여 매입실적이 부진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방부가 제시한 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br>○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안내·통지 등 국방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 국방부는 토지의 매수·반환 등을 요구하는 민원, 소송이 제기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토지정리를 위한 사전준비를 이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무단점유 중인 토지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매입·반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통지하고, 이를 통하여 충분한 수요를 확보한 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무단점유 해소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이자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군인복지기금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 제도개선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이자지원사업은 융자사업과 비교하여 원금이 회수되지 않으므로 별도 수입이 없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군인복지기금의 여유자금(2024년말 3,467억원 예정)이 감소추세임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채무 성격인 주거지원보증금(2023년말 3,468억원)보다 적어 자체적인 재원마련도 쉽지 않음<br>○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부터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결정하였으나, 2024년까지 회계이관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사업규모가 상당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편성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기금 내 여유자금 활용의 적절성 및 법령상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53 | **의무시설개선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무시설개선(2231-305) | 시정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2년 연속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집행부진에 대한 주의를 받은 바 있으나, 2023년에도 여전히 집행률이 67.9%로 저조함<br>-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집행률이 2022년 67.8%, 2023년 67.9%에 그쳐 연례적으로 부진하였고, 과다한 다음연도 이월액( ‘22년 107억원, ‘23년 165억)과 불용액( ‘22년 45억, ‘23년 36억원)이 발생하였음<br>- 특히 국군외상센터 헬리포드 개선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3.8%이고,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시설 증·개축은 55.9%, 해병 6여단 의무대 신축사업은 52.5%에 불과함<br>- 주요 집행부진 사유로는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사정책지원(2439-306) | 주의 | 국방부 |
| | | 지적사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원의 3.6%이상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현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국방부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br>- 2021년도 38억 2,600만원, 2022년도 52억 7,300만원, 2023년도 81억 8,700만원 납부<br>○ 2021년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도 국회에서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반복해서 이를 미준수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방부는 장애인에 대한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2. 병무청(1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부적절한 여비 집행으로 인한 사업 차질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무행정운영(7134-317) | 주의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전북지방병무청은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실시 예산을 ‘조직문화 활성화’와 관련 없는 병력동원 훈련·산업지원 실태조사 여비 예산으로 집행함<br><전북지방병무청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br>- 워크숍 기간/장소 : 2023.5.19.(금)~5.20(토), 무주리조트<br>- 인원/소요예산 : 56명(전북지방병무청 전직원), 824만원<br>○ 워크숍 비용을 실태조사 사업에 편성된 여비로 집행하여, 해당 사업 여비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목적 외로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이로 인해 기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병역의무자 여비 추계 정확도 제고 및 집행 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병역의무자 여비는 2023년 242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불용이 10억 1,100만원(불용률 : 4.2%) 발생함<br>○ 병역의무자 여비의 최근 5년(2019~2023년)간 불용액은 총 167억 4,200만원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함<br>○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이 정확한 추계에 따라 편성되지 않고 예산 집행도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음<br>- 2024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가 예산을 횡령(1,780만원)한 사실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여비 지급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 예산 과다 불용 시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865억 5,700만원이며, 이중 661억 6,100만원(76.4%)을 집행, 203억 9,600만원(23.6%)을 불용함<br>○ 예산 집행 부진이 발생한 원인은 예산 편성 당시 과도한 기준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br>- 이러한 추계 오류는 적금 납입 기간을 최대 복무기간인 21개월로 설정하였고, 납입 금액을 법정 납입 최대 한도인 월 4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예산 추계 시 적금 가입액 및 가입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장병내일준비 적금 미가입자 지원**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사회복귀준비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이 납입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임<br>○ 그러나 병영 내 합숙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br>- 2024년 3월 기준 현역병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98.6%이나 사회복무요원 가입률은 87.5%로 10%이상 낮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내일준비적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납입 한도액 조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가입자가 월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개인별 한도 최대액인 40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나, 은행별 한도액이 월 20만원인바,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2곳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적금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은행별 납입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 | **병역판정기준 조정 가능성 검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현역병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20대 남성인구는 2024년 25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임<br>○ 2023년 현역병 판정비율은 83.7%인데, 2014년 이전에는 90%대였다가 입영 적체기에는 검사규칙 변경 등에 따라 82%로 감소하였고, 이후 약 82%~84%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판정 기준 조정 가능성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 감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br>*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이들의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처분(근거법률 : 「병역법」제65조제9항)<br>○ 이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대기 중이거나, 매년 보충역 처분을 받고 유입된 공급 인원이 사회복무요원 배정 등의 수요 인원 보다 많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인원 감축에 노력할 것 | | |
| 8 | **병역판정검사 체계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과반수의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20세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음<br>○ 내용이 유사한 신체검사를 두 번 수검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됨<br>○ 검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병역의무자가 입영 시기에 맞추어 한차례 신체검사를 수검하고 입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신체검사 체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체검사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병역진로설계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사업 예산도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 | |
| 10 | **산업지원분야 병역 제도 적정 규모 설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지원인력(1434-309)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산업지원인력의 편입인력이 배정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산업지원인력의 편입인원 규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산업지원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br>- 2023년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은 2,300명이었으나 편입인원은 1,541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이 3,200명, 편입인원은 3,078이며,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 1,000명, 편입인원은 801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과학기술 분야 위축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지원분야 병역 제도 적정 규모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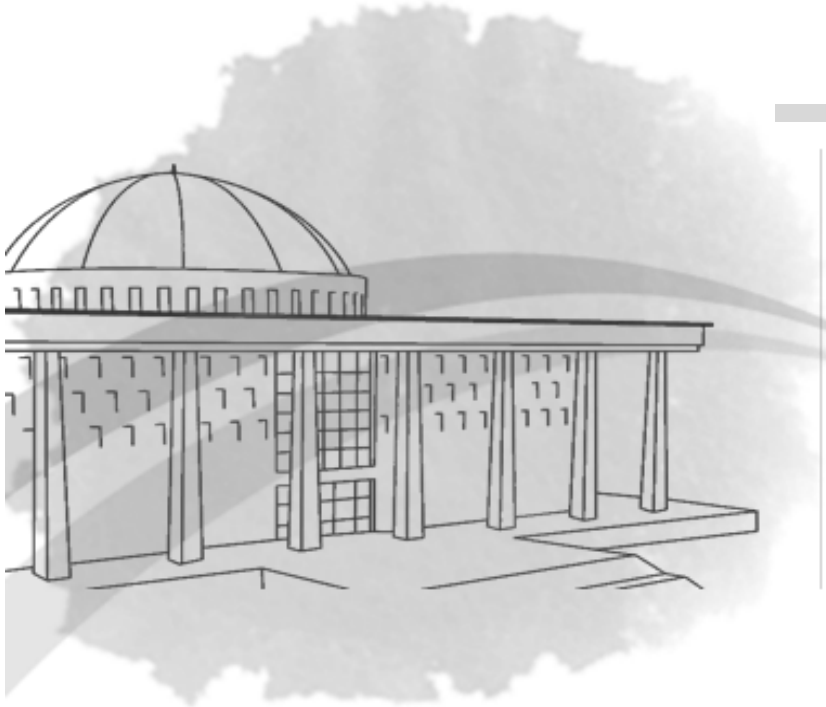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역량 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복무지도관이 복무 관리하는 1인당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는 2023년 기준 431명으로 효율적 복무 관리에 한계가 있음<br>- 2018년도 병무청 정책연구 과제인 「사회복무제도 운영 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복무지도관 1인당 업무 소요 시간을 고려한 적정 관리 인원수는 300명 정도임<br>○ 또한 복무지도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심리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나, 관련 자격증 보유 인원은 임기·공무직 48명 중 41명(85.4%), 일반직 66명 중 9명(13.6%)인 것으로 파악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교육 등을 통하여 복무지도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직 복무지도관에 대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상시화할 것 | | |
| 12 | **사회복무요원 부당대우 근절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 제도개선 | 병무청 |
| | | 지적사항 | ○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관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2024년 5월부터 시행중임<br>○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부당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의 행위가 매년 수십건씩 적발됨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신고하기 쉽지 않으며,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의 주체가 복무기관 내부 부서인 관계로 조사부서가 같은 소속 직원을 상대로 공정한 조사와 처분이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당대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복무기관 평가결과를 배정 제한·취소에 반영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 | | |

## 3. 방위사업청(47건)

※ 비공개 (764 ~ 789쪽)

##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0건)

# 행정안전위원회



# 1. 행정안전부(5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특수상황지역개발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특수상황지역개발(1231-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0개 시·군에 국고보조금 2,164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1,017억 7,600만원을 집행함(47%의 저조한 집행률)<br>○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 위탁사업의 실집행률은 31.6%로, 사업 추진 현황에 비해 과도한 위탁금이 배부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탁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마을기업 자립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30년까지 3,50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정부는 2023년 말 기준, 3,500개 대비 2,386개(68%)의 마을기업을 지정했음<br>○ 다만, 지정취소 기업이 2023년 말 기준 586개에 달해 전체 5곳 중 1곳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0원인 기업의 수도 2018년 199곳, 2021년 449곳, 2023년 526곳에 달하는 등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br>○ 이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마을기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운영 지표가 부실한 마을기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개선방안과 이와 연계한 차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 | | |
| 3 | **임명직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건비(이북)(7002-106)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북5도지사의 자격 요건, 임명 철차, 담당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북5도지사 5명의 보수로 이북5도위원회 전체 인건비 예산의 약 1/5을 지출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이북5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이북5도위원회 사무처를 강화하여 실무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이북5도위원회의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법률상 근거 없는 명예직 수당 지급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지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이북5도기본경비(7018-258)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명예시장·군수 등 명예직 위촉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대통령령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시장·군수 등 명예직을 위촉하고, ‘이북5도기본경비’ 사업 예산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 규정을 즉시 폐지하고, 명예시장·군수 등 임명의 남발로 인하여 과도한 인건비 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5 |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조성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당초 행정안전부는 전국 단위 희생자 추모시설, 전시관,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평화공원(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원)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배정 및 준비 부족 등으로 2024년까지 사업이 연기되었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서게 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으로 사업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타당성 재조사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공기 지연 등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준비하여 총사업비 산정 및 사업 관리 부실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여수 · 순천 10 · 19사건 희생자 · 유족 결정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 미지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수 · 순천 10 · 19위원회 지원(2437-300)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여수 · 순천 10 · 19위원회 지원사업 중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3,600만원 전액을 불용하여 희생자의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여수 · 순천 10 · 19위원회 지원 사업의 예산 주무부처로서 여수 · 순천 10 · 19위원회의 저조한 사건 처리율로 인한 손실보상금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7 | **여수 · 순천 10 · 19사건 희생자 · 유족 결정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수 · 순천 10 · 19위원회 지원(2437-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 유족 심사 결정은 4회만 이루어졌고, 희생자 · 유족 신고 건수 7,355건 중 708건만 희생자 · 유족으로 결정되는 등 희생자 · 유족 신고 사건 처리율이 저조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 유족 신고 건수 등 미결정된 6,647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와 희생자 · 유족 결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기간 연장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8 | **재난대책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난대책비(보조)(2734-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 교부되어 2023년으로 이월된 재난대책비 중 2,119억 3,700만원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는 등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친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재난대책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한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수령시 지자체 금고은행 외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재정 정보화(1332-5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개통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구축하면서,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계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br>-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기로 입력하면 금고은행 외 금융기관(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운용절차 전반을 전산화하고자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취지가 반감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외의 금융기관 계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전자정부지원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출연금 정산지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정부지원(정보화) (2031-5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전년 대비 추진과제 수가 37% 감소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58.5% 수준으로, 예산 493억원 중 203억원을 이월하고, 일부 사업 과제는 2024년에 사업 수행을 시작하였음. 연례적 사업지연으로 출연금 정산도 차년도 하반기 또는 차차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업계획 하에 사업기간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 실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행정안전부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정산을 완료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전자정부지원 사업 과제선정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정부지원(정보화) (2031-500)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법률 제정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한 결과, 법적 근거 미비로 과제수행을 중도에 취소하였음<br>- 동 사업을 통해 추진한 2023년 과제 중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예산 20억원)는「국가사이버안보법안」제정을 전제로 선정되었는데, 법안심사 보류로 인해 2023년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제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2 | **5G정부망 이용지원사업 활용도 저조 및 운영관리 미흡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 (2040-509)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행정안전부는 5G정부망 실증사업 대상인 4개 기관의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통신사업자와 기기당 50GB 이상 사용을 기준으로 계약(12억 5,700만원)하였으나, 실제 이용률은 평균 6.5GB 수준으로 저조하였고, 5G정부망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노트북 및 5G모뎀) 3,000명 분을 대상기관에 보급하였으나 이 중 일부만 실사용 중으로, 미사용 기기는 회수하여 신규도입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통신망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실사용 수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범도입기관의 이용률 제고 및 미사용 기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2635-301)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기관 실수요 파악 미흡, 연도 중 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과 제도 변경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br>- 실집행률: ’22년 52.5%, ’23년 63.5%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연차별로 클라우드 전환 물량이 재설정되고 전환계획이 순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하에 전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14 | **사업 수요 사전검토 및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235-300) | 시정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지원’ 및 ‘읍면동 기능 및 체계개선’ 사업은 실수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였음<br>-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30회 및 주민자치회 간 교류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맞춤형 컨설팅은 4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고 컨설팅을 위한 지역별 기초조사도 계획 대비 부진하여 예산액(4억 5,700만원)의 27.3%만 집행됨<br>- 읍면동 기능 및 체계개선 사업은 집행률이 60.0%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사업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실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1141-302) | 시정,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국민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9억 7,400만원을 전용하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재정법」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부적정한 집행 방식임<br>※「국가재정법」<br>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br>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br>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계획되지 않은 신규 행사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시정)<br>○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및 공직선거·지방의회 역량강화 예산을 김장행사 용역비로 사용한 바 예산을 목적 외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수의계약 방식의 연구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보고서 임의적 비공개 과다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시정,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모든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과제 내역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임<br>- 위원회 출범('22년) 이후 수행한 연구용역 21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나, 과제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하는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br>❍ 국민통합위원회는 완료된 용역보고서의 42.9%만 공개하여 정책연구를 공개토록 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br>- 21개 과제 중 9개만 공개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계약하는 기간보다 50% 이상 단축된 기간에 용역을 완료하는 계약 건들의 결과보고서 내용과 품질에 대해 확인이 불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공정 경쟁에 근거한 계약과 그 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근거 법령의 취지와 정책연구 공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시정)<br>❍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통합위원회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과다한 비공개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사회적경제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보조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1235-300) | 시정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사회적경제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음<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5/37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6/10개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취해지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미제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한국섬진흥원의 출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강화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섬진흥원 지원(1242-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출연금이 연초에 전액 교부되고 집행잔액이 반납처리되지 않아 매년 인건비 잔액이 이월되고, 한국섬진흥원 사업비의 실집행이 부진(집행률 57%)하여 출연금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음<br>- 또한 ‘섬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운영’, ‘한섬원 아카데미’ 등 사업출연금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만 편성되어 사업성격에 따른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등 관리를 강화할 것<br>○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의 출연금을 사업성격에 맞게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분리하여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의 실집행률은 37.8%로 저조하고, 2023년말 기준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도 존재하여 사업의 집행 점검·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에 대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선정·예산교부 단계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자율성 발휘를 위해 다양한 기금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의 실집행률은 37.8%로 저조하고, 2023년말 기준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도 존재하여 사업의 집행 점검·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br>○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집행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식 및 사업구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지원계정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 특색이나 기금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분야(문화·관광, 산업·일자리)에 편중되거나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br>○ 동 기금은 기존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의 상향식 사업을 추구하고, 기존 분산적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국가보조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br>○ 또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액 중 95% 이상이 비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여 역내 시·군·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집중투자 목적으로 설치된 재원이 역내 시·군·구에 균등 배부되는 형식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문화·관광 분야 등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광역지원계정 재원이 역내 시·군·구에 재분배하는 형태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이나 동일 생활권 공용시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실집행 부진 개선 및 미집행액 사후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도 기금액은 당해연도 9월에 배분되어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률은 인구감소지역 5.7%, 관심지역 0.4%에 불과하며, 2023년도에는 연초에 기금액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19.3%, 관심지역 22.2%로 부진함<br>○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배분액 중 2023년 말 기준 집행하지 못한 잔여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될 예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부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잔여사업비가 해당 사업으로 재편성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사업지원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과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를 보임<br>○ 기초지원계정 사업은 투자계획과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배분하는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기금의 취지를 반영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 연단위 성과평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재원조달계획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에 근거한 평가와 차등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기 실적 도출에 유리한 사업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 24 | **특수상황지역개발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특수상황지역개발(1231-300)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정의 제약 등에 따른 실집행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br>- 매년 연초에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나 매년 예산현액의 50%를 상회하는 이월액이 발생하고, 2023년 실집행률은 47%수준으로 1,651억원이 이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가능성, 지자체의 기존 사업 집행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을 선정·계획하고,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은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연례적 이월 과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부처지역사업연계지원’ 사업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주도로 다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자치 기구의 역량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br>○ 지자체별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인력(PM)을 두고 있으나, 매년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br>- 실집행률: ’22년 65.4%, ’23년 57.9%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효과적인 추진체계와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것 | | |
| 26 | **옥외광고 수익금의 국가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275억 1,100만원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형성됨<br>○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그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br>※「국가재정법」<br>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수익금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내용 보완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 기업이전 관련 설문조사와 컨설팅 용역을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을 고려한다는 계획하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 수행이 차년도에 이루어져 효과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없이 2024년도부터 본 사업을 확대하여 편성함<br>○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이전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민간기업 입장에서 유인·제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실제 추진 내역상 타부처의 기업 대상 이전촉진 사업이나 부처내 지역 투자유치역량 제고 사업들과의 차별성 확보가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사업 지연으로 시범사업의 성과검토 없이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결정할 것 | | |
| 28 | 안산시·포항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1235-300)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안산시와 포항시의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사업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2023년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하였음<br>-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하여 전액 불용,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사업도 재이월액이 과다하고 사업비 증액 협의 및 주민민원 등으로 착공이 순연되어 실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미집행함<br>- 포항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0%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두 지역의 공동체 복합시설이 갖는 의의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시설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효과성 검토 없이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용역 수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최근 매출액 변화, 지원대비 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쇼핑몰 판촉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이는 1,770개 마을기업 중 1%에 해당하는 일부기업만 선별 지원된다는 점, 행사 참여업체가 모두 영농법인들로 농식품 소비 정책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효과성 검토 없이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해 계획하지 않은 판촉행사 용역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을기업 중 일부에 대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품 할인행사보다는 보다 많은 마을기업이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지방재정 관련 전산시스템 제공 자료의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재정 정보화(1332-500) | 주의,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은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보탬e),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시스템 보강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공시정보의 내실화·적시성이 미흡함<br>-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공시 대상 자료(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는 공개 중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br>- 지방공기업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은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공시 자료를 통합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제공 중인 자료가 전전년도 연말 기준으로서 시의성에 한계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각종 지방재정 관련 전산시스템의 제공 자료를 확대하고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할 것(주의)<br>○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시스템들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실화 및 시의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보를 가급적 개별 지자체가 아닌 동 시스템을 통해 통합 혹은 연계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개선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서울특별시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기지급된 민간위탁 사업비 조속한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1333-503)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부터 서울특별시 지방세입시스템과 표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민간위탁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발주한 용역이 유찰되고 서울특별시와 사업범위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br>- 참고로, 올해초까지도 서울특별시는 일부 기능만 연동하는 수준에서 참여할뿐 전면 통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br>-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67억원이(서울시 127억원, 국비 40억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집행되었으나 2024년 8월 현재까지 위탁기관에 전액 미집행 잔류 중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급된 3단계 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br>○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의 면밀한 협의하에 ETAX통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하고, 장기간 잔류되어 있는 위탁사업비는 조속히 집행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조속한 안정화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1333-503)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당초 2023년 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2024년 2월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2023년 2월 이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으로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 발생<br>-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신규 시스템으로서 기존 시스템과 운영비 단가에 차이가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확한 운영비 소요를 재산정하여 협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집행<br>○ 또한 시스템 개통 후에도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지방세 관련 민원만 57천건이 제기되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2023회계연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비 실집행 내역이 적정하였는지 검토하고, 향후 지방세 등 납부 과정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br>○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업무에 계획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면밀한 예산소요 재계상과 협약변경 없이 임의적으로 조정·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세대시스템 오류에 대한 조속한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 시정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75.3조원) 중 8.2조원(보통교부세 7.2조원 및 부동산교부세 1.0조원)을 미교부(불용)<br>-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400.5조원 대비 85.9%인 344.1조원 수납<br>-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지방교부세법」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14년 행정안전부는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였음<br>○ 행정안전부는 2023년 내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불용을「지방교부세법」상 교부비율과 무관하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지방교부세법」상 교부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음<br>-「지방교부세법」제4조제2항은 내국세를 통한 재원(내국세 총액 중 19.24%)의 97%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고, 3%는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전액 교부되고 보통교부세만 7.2조원 미교부에 따른 불용처리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br>○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공문 등 공식적 통보 없이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한 행위를 시정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경기도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임의운용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2024년 1월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임의로 운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이 당초 목적 외로 사용되고 관련 법적분쟁으로 행정력 및 법적비용 등 예산의 낭비도 발생하였음<br>- 해당 운영대행사는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운용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우려가 있음<br>○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발행취지와 달리 특정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되고, 주유소와 병원 등에 과다사용되어 경기부양 효과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임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 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담당자들이 국고보조금 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사업이 개시된 2018년 이후 약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단기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질적인 청년층의 지역정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br>- 2018~2023년 중도포기인원: 34,525명(전체 대비 19.8%)<br>- 6개월 후 고용유지율: ('21) 40.5%, ('22) 51.8%, ('23) 57.7%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 | | |
| 36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 전환 추가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신축 (2042-500) | 시정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대구센터 신축공사 지연(2018년 → 2022년 완공)되어 통합전산환경 구축도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으며, 2023년도는 구축된 시설로의 입주대상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지연되면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입주 대상 기관의 예산확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추가지연을 방지하여, 센터가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집행 비목 오류로 인한 공사비 전액 이월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이북5도 청사시설 개 · 보수(1531-301)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이북5도위원회가 청사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집행 비목 오류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해당 공사비 2억 3,400만원이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br>- 공사 발주를 위해 공사비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자산취득비로 잘못 편성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시 오류와 기관 내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시설 보수·교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역량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 |
| 38 | **협상평가 부적격업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이북도민관련단체 및 행사지원(1531-302)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기관의 최대 행사인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 재공고를 거치지 않았고, 낙찰 업체의 포기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적 제약 상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수행자격을 갖춘 업체와 동 행사 추진경험을 가진 업체도 있었음에도 대안 모색 없이 입찰 당시 협상평가 부적격자였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의 용역체결과정에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제주4 · 3사건 피해보상금의 과도한 이용 및 불용에 따른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제주4 · 3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제주4 · 3피해보상(보상금 등)사업은 반복적인 피해보상금 이용에 따라 4 · 3사건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칠 예정이었던 4,250명 중 83.5%인 3,638명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이용액과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0 | **제주 4 · 3사건 피해보상금 의 과도한 이용 및 불용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제주4 · 3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제주4 · 3피해보상(보상금 등)사업은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나, 사실 조사 담당 인력이 3명에 불과하여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사업기한인 2026년 내에 피해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실 조사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 관리 미흡에 따른 실집행부진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부산, 대전, 창원)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실집행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례적 실집행부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2 |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2436-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정부가 제출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19억원)은 2024년도 예산액(22억원)보다 3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비용 중 50%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수요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노후 유·도선 대체 건조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2020년 19척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1척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실수요 부족으로 2023년까지 총 7척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임<br>-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원받기를 포기한 경우의 비율이 매년 56%~78%에 이름<br>○ 해수면 유·도선 대상 해양경찰청 사업은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액 부족으로 전용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내수면 유·도선 대상 행정안전부 사업은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악화로 수요가 저조하였음<br>- 2024년 이후 폐선 대상 선박 수가 24척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토하여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의 차별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은 2021년 6개, 2022년 7개, 2023년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전액 실집행이월한 자치단체도 존재하며 2023년에는 실집행률이 55.6% 수준임<br>- 2021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사업지연과 실집행부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2023년도에 오히려 실집행률이 더 낮아졌음<br>○ 자치단체보조사업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라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2월에 전액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지방비 분담금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고난이도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경험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실집행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5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의 수요 제고 및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2731-307)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사업수요 부족 및 연말 보조금 교부 등으로 인해 2022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에 이어 2023년 집행률도 43.2%에 그치는 등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음<br>- 내진성능 확보가 법적의무가 아니고,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만 보조됨 (국비 10%, 지방비 10%)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수요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향후 사업대상자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 시 실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합리적인 물품관리체계 및 공급망관리계획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2734-314)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관리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동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자원비축창고를 구축하였으나 해당 공간에 비축된 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br>○ 2020년 신규사업 착수 시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자원 보유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2023년 하반기에서야 물품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계획 수립 중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거점센터와 비축창고 운용에 있어 현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물품관리체계와 공급망관리계획을 조속히 구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및 신규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미흡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난행정정보화(3032-501) | 주의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은 총 8개 시스템을 종합하여 지원·관리하는 사업임에도 3개 시스템의 운영실적만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br>○ 2023년 서비스를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주요 시각화서비스가 2020년도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고, 제공 오류도 상당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전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의 시의성 및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적기 완료가 중요한 재해예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예산배정방식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실집행 이월액이 2022년 약 617억원에서 2023년 약 2,131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br>○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초 수입액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49 |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사후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1632-301) | 시정 | 행정안전부 |
| | | 지적사항 | ○ 도봉구 도봉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하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공모 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종료 후 건물의 용도를 임의대로 변경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 상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부적정한<br>관서운영경비<br>집행 재발 방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행정안전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행정안전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우회하여 같은 날 동일 업체에 유사한 건으로 500만원 이내로 나눠서 지급하였음<br>※「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br>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br>※2023년 행정안전부 관서운영경비 집행내역<br>(단위: 원)
<table>
<tr><th>부서</th><th>세부사업</th><th>일자</th><th>내용</th><th>집행액</th></tr>
<tr><td rowspan="2">지방<br>재정<br>경제실</td><td rowspan="2">지자체<br>재정분석<br>및<br>재정제도<br>개선</td><td rowspan="2">12.29</td><td>제4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임기종료에 따른 감사패 제작 지급요청</td><td>4,950,000</td></tr>
<tr><td>2023년 제4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참석자 감사패 제작비용 지급요청</td><td>4,950,000</td></tr>
<tr><td rowspan="10">지방<br>자치<br>분권실</td><td rowspan="10">지방자치<br>분권실</td><td rowspan="10">11.9</td><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e스포츠(스타크래프트)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야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볼링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탁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족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테니스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r><td>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축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td><td>2,600,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행정안전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우회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유사사례 방지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2. 경찰청(1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관련 이·불용 최소화 및 미반영 장비구매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통과학장비관리(1331-313) | 주의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 편성 당시 구매단가 대비 집행단가 차이로 인해 불용(27.4%)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한 구매 수량보다 많이 구매하거나 구매계획에 없었던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됨<br>- 불용액: '20년 28억 5,600만원, '21년 6억 8,700만원, '23년 5억 3,700만원<br>- 집행률: '20년 19.5%, '21년 79.6%, '22년 98.9%, '23년 72.6%<br>- 장비 추가구매: '21년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27대, '23년 회전식 단속장비 3대 추가구매<br>○ 우편요금 관련,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무인단속장비 설치증가에 따라 단속 건수 증가 및 과태료 발송고지서 증가를 예상하고 2022년 예산대비 4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불용이 발생함(이용 40억원, 불용액 100억원)<br>- (예산액 기준)집행률: '21년 77.1%, '22년 75.5%, '23년 75.5%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않았던 장비구매는 지양하는 등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구매단가 현실화를 통한 노후차량 교체 적기 이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 주의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2021년 이후 차량 가격의 상승에 비해 예산상 구매단가 상승이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계획 대비 구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br>○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찰차량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업무 수행상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노후차량 교체 기준이 경과한 경찰차량의 교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년도 예산부터 구매단가를 현실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 | |
| 3 | **저위험권총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비관리유지(4231-314) | 주의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저위험권총의 성능 보완이 지연됨에 따라 저위험권총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r>○ 저위험권총 우선구매를 위해 기존 38구경 권총 구매예산을 삭감하였던 국회 예산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저위험권총 보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총기 구매와 관련한 경찰의 예산집행이 본래 예산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품질 보완 및 국산장비 사용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비관리유지(4231-314) | 주의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경찰청은 현재 외국에서 도입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는 2023년 예산안 심사시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충분한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구매하되, 미통과시 기존과 같이 테이저건을 구매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br>○ 경찰청은 2016년부터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전자충격기를 개발하였으나, 최종 납품검사 미통과로 도입이 중단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향후 일선경찰관들이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때 효능과 안전성 모두를 충분히 검증한 후 구매 및 현장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연구성과가 매몰되지 않고 국산장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5 | **부적정한 예산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 주의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경찰청은 범죄예측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이를 청년인턴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한 면이 있음<br>○ 경찰청은 2022년도에 동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은 바가 있어 2023년도에 동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미편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2년 말 112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범죄예측분석시스템을 포함하여 발주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향후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112지능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112시스템운영(1431-511) | 주의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 일정 지연으로 21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3년도에는 해외 제조 장비 구매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10억 4,8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였음<br>○ 전년도에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고, 사업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업 심의위원회를 4월보다 앞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사업의 지연가능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심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과태료 · 가산금 수납률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가산금(58-581) | 제도개선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연례적으로 과태료의 수납률이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23년 미수납액은 1조 609억 8,600만원에 달함<br>※ 연도별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br>('21) 징수결정액 1조 7,596억 700만원, 수납액 8,606억 8,800만원<br>('22) 징수결정액 2조 1,220억 8,900만원, 수납액 1조 1,412억 6,600만원<br>('23) 징수결정액 2조 2,934억 9,100만원, 수납액 1조 2,284억 3,6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과태료·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br>○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태료가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고, 과태료 수납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 제도개선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에도 동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지속 여부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바 있음<br>○ 경찰청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 동 사업과 같은 일회적인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동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지역 교통약자 대체교통수단 지원사업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할 것<br>○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령대·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교통안전 평가지표 개선 및 법적 ·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 제도개선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연구용역 결과 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5%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안전지표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② 농촌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지표 평가를 공표하는 등의 제도화와 공식화가 필요함<br>○ 교통안전지표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교통안전지표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에 대한 구속력, 자료의 일관성 등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교통안전지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도 평가·환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 제도개선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의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사용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급 유인이 적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발급 목표치를 과다계상한 문제가 있음<br>- 발급실적: 286만 6,179장 계획대비 125만 8,389장(43.9%) 발급<br>- 징수실적: 예산현액 406억 9,100만원 대비 184억 9,500만원(45.5%) 징수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발급 유인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1231-317) | 제도개선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한시적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br>- 고위험군 대상자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를 분석할 필요<br>- 지원 대상자에게 1회 14일, 1일 10시간의 제한적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서비스 제공 기간·시간 등 연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동 사업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경대체지원(2131-314) | 주의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경찰청은 의경대체지원 사업 예산 중 25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급식비 3억 9,200만원, 유류비 5억 3,400만원, 해안경비 임무수행 내역사업의 관리용역비 14억 600만원 등임<br>○ 기동대 창설 지연, 가스 및 전기보일러 사용 청사의 확대 등 급식비 및 유류비 수요가 감소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음<br>○ 해안경계 임무수행 내역사업의 경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지연 등으로 관리용역비가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급식비 및 유류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안경계과학화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해외파견자 적정 수요 산정 및 전지의료검진 제도 지원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제도개선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직무파견 경찰주재관 운영비 중 주택임차료의 경우 당초 4개 공관(카타르, 알마티, 다낭, 라고스) 파견인력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개 공관(다낭, 라고스)으로 파견수요가 줄어 2명분의 불용액 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지원비 및 정착지원금 등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br>○ 전지의료검진비는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해외파견자 및 동반가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으나, 항공료 등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검진이 불가하여 예산액 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예산 편성 시 해외 파견자 수요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전지의료검진비 예산 편성 시 외교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 관련 여비를 같이 편성하여 해외파견자 및 동반가족의 실질적인 전지의료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국제 경찰청장회의의 회원국 간 순환개최 등 개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제도개선 | 경찰청 |
| | | 지적사항 | ○ 경찰청은 국제경찰청장회의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4회 개최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br>○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 인터폴 총회, UN경찰청장회의 등 현존 국제회의 및 국제치안협의체와 차별화되고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하고 있는 국제경찰청장회의가 회원국들 사이의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다자간 국제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순환 개최되는 회의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 | |

## 3. 소방청(1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국립 소방병원 건립 사업 일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 주의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대규모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br>- 이월율: ('20년) 2.2%, ('21년) 47.4%, ('22년) 41.4%, ('23년) 36.8%<br>○ 당초 소방병원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소방청은 2023년 12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고, 소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기가 2025년으로 변경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방병원 개원 시기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 | **산불전문 진화차 적기 도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1132-305) | 제도개선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산불전문진화차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각각 50%씩인데, 2023년 말 기준 계획된 수량의 약 51.1%인 24대만 도입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동 사업 예산 집행률은 매년 70%에 머물고 있음<br>- 지방자치단체 집행률: ('21년) 75.9%, ('22년) 76.6%, ('23년) 72.0%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가 조속히 화재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계약절차 추진, 납품 등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지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추가 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 주의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소방정대 신축 사업은 2023년도 예산 24억 6,400만원 중 2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89.9%), 2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br>-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198억 100만원 중 16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82.7%), 34억 2,100만원을 이월, 700만원을 불용함<br>○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소방선박 설계· 건조·인도 등 전반적인 사업일정이 지연되었고 국가항만 소방정대 신축 사업도 당초 계획 대비 1년 가량 늦어짐<br>-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총사업비 재산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더해 2023년도에도 유관 기관의 선행 공사 지연 등으로 소방정대 완공('23.6.완공→'24.7.완공)과 소방선박 인도('24년 하반기 인도→'25년 상반기 인도)가 지연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 |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 재발 방지 및 지역 간 지원 편차 완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 제도개선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 개인의 진료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br>- 소방청은 11.14. 각 지역소방본부에 1.1.~12.11. 진료건은 '23.12.14일까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 명기)하였으나, 일선 소방관서로 공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지 못하였고, 연말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23년 예산 부족으로 325건의 개인 신청 건에 대해 1,823만 3,760원의 상담·검사·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음<br>○ 시·도 소방본부간 지원 편차가 있음: 부산 지역 소방본부는 전체 지원 건수의 25%인 1,973건을 지원받은 반면, 울산지역 소방본부는 약 0.37%인 29건을 지원받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향후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소방본부 간 지원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국립 소방병원 의료 인력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 제도개선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개원준비단은 병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23년에 소방병원 부단장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하였음<br>- 당초 부단장 충원을 예상하고 편성한 인건비 12개월 분 2억 5,516만원을 집행하지 못함<br>○ 소방병원 개원('26년)까지 48명의 의료진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b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은 2018년 7.6%(정원 1,037명, 결원 79명)에서 2023년 13.4%(정원 1,422명, 결원 191명)로 증가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의료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 제도개선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신규데이터 등록 건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까지 3년간 정부지원금 약 92억원이 지원되었음<br>* 동 기간 중 플랫폼 개발 참여업체의 자체부담금 : 10억 7,000만원<br>*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22년 말까지만 유지<br>- '23년 이후 소방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플랫폼을 운용 중<br>-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는 '20년~'23년 동안 총 3,118건이나, '21년을 제외한 '24년(8월말)까지 데이터 등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br>* ('20년) 705건, ('21년) 1,606건, ('22년) 601건, ('23년) 206건, ('24년) 26건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플랫폼의 성과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 증가를 포함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국립소방 박물관 건립공사 추가 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1134-305) | 주의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지장물 보상 문제로 인한 연내 공사 미착공 및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었음<br>- 소방청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공사를 '23년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장물(주유소 부지) 보상문제로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3년에 착공하지 못하였음<br>- 소방청은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1단계 공사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1억 6,000만원의 추가 실시설계비를 공사비로부터 세목조정('23.6.29.)하여 '23.9.1.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3.12.29.에 공사 및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102억 5,600만원(공사비 93억 3,300만원, 감리비 9억 2,300만원) 이월액이 발생함<br>○ 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저조함<br>- 소방박물관 예정부지의 토지보상은 소방청이, 지장물 처리와 영업손실 보상은 광명시가 담당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광명시가 보상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사업 지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부지매입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사업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150-500) | 시정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사업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통제하지 못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br>- 2개 회선 중 1개 회선만 연도 내에 운영되었고 다른 1개 회선은 사업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둘러싼 가처분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연도 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소방청은 외부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직위해제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착수한 문제가 있음<br>○ 동 사업은 비위자(사업담당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소송'의 소송대리자로 지정하였고, 데이터망 구축 완료 전에 완료보고를 먼저 하는 등 법령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2023년 행안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업무 담당자의 비위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면밀한 장비구입 계획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1171-302) | 주의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소방청은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무인파괴방수차를 도입하였는데, 차량 및 장비 구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br>-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은 '22~'23년 2개년도 사업(총 구매예산 15억원)인데, '22년에는 예산액 4억 5,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3년에는 10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음<br>- '22년에 차량구매비 지출을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많이 하였음(예산 3억 5,100만원, 집행 4억 5,300만원)에도 '2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23년도 예산 8억 1,900만원 중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구입한 차량에 무전기·영상송출장치 등이 장착되어있어 별도의 운용 장비가 불필요하여 '23년 무전기 등 구입 예산 2억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불필요한 장비 구입 계획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사전 절차 및 관련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1171-305) | 주의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훈련장 건립사업 중 충청·강원대 훈련장 건립사업은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미비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됨<br>- 계획: '23.7.→ 현황: '24.3.<br>○ 비축기지 건립사업 중 충청·강원대 비축기지 건립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누락과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절차도 거치지 않아 'BF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등 이를 보완하느라 착공이 지연됨<br>- 계획: '23.1. → 현황: '24.8.<br>○ 예비인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와 동시에 BF 예비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추후 유사 사업 시행 시, 사전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중앙 소방학교 수입대체 경비의 수입 · 지출 비목 연계성 재정비 및 위탁 교육훈련비 적정 단가 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 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br>일반회계 -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1173-650) | 제도개선 | 소방청 |
| | | 지적사항 | ○ 소방청은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의 일부를 청사시설관리 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청사시설 관리 경비는 교육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비이므로 직접적으로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하는 수입대체경비를 청사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br>- '21년~'23년의 수입대체경비 세입 징수액은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위탁교육생' 항목이 매년 95%를 차지하고, 세출은 '청사시설 관리' 비용이 '22년, '23년 모두 약 80%를 차지함<br>- 훈련비용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큰 상황으로 '23년 중앙소방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시 · 도 소방학교의 약 1.5배(부산)~약 3.6배(강원)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소방청은 수입지출 산정 비목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청사시설관리 경비를 '중앙소방학교운영(1170-300)' 사업으로 조속히 이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교육훈련비용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한국소방<br>산업기술원<br>수수료 수입의<br>적정성 검토</td><td>관련사업명</td><td>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소방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제품검사를 수행하며 위험물시설 설치, 변경, 검사 관련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2020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br><br>※ 2021~2023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입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수입 유형</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사업수입</td><td>소방용품검사, 위험물 검사, 소방장비검사, 연구용역, 기타수입 등</td><td>7,659</td><td>9,007</td><td>10,687</td></tr>
<tr><td>위탁수입</td><td>소방용품검사, 위험물 검사, 소방장비검사</td><td>38,938</td><td>43,501</td><td>49,146</td></tr>
<tr><td>독점수입</td><td>소방용품검사, 위험물검사, 기타수입</td><td>3,075</td><td>3,017</td><td>4,120</td></tr>
</table>
※ 2019~2023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주요 손익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영업이익</td><td>8,887</td><td>3,540</td><td>4,366</td><td>6,538</td><td>10,682</td></tr>
<tr><td>당기순이익</td><td>7,837</td><td>3,689</td><td>4,528</td><td>6,358</td><td>11,798</td></tr>
</table>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관의 이익증가분을 사내 유보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이자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6억 2,500만원이었던 이자수익은 2023년 30억 7,300만원까지 증가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금융자산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기관 수취 수수료 수익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td></tr>
</table>

## 4. 인사혁신처(1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우수 인재 공직 임용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2018~2023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0년부터 매년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음<br>○ 2023년 예산편성기준과 실제 응시인원 오차 비율은 32.9%로, 예산편성기준 대비 실제 응시인원 오차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인재의 공직 임용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불용 최소화 및 불용액의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육과정 운영(2133-300)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 신임관리자과정에서 편성된 예산 중 2억 3,700만원을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세부사업(7018-250)에 계상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移用)하였는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br>○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교차하여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을 예산 편성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수수료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2018~2023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0년부터 매년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음<br>○ 2023년 예산편성기준과 실제 응시인원 오차 비율은 32.9%로, 예산편성기준 대비 실제 응시인원 오차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최근 시험별 응시인원 추이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건 분할 집행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시험 시행(1631-300)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인사혁신처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629만원의 지출건(2023년 5급 공채 제1차시험 등 합숙출제 일반수용비)을 148만원, 208만원, 274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우회하였음<br>※「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1항·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관서운영경비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개방형 직위 수 감소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감소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1645-302) | 시정,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2019~2022년 개방형 직위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개방 효과가 미흡한 직위를 개방 효과가 높은 직위로 변경하거나 자율 직위로 전환하는 등의 과정에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개방형 직위의 수가 102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것(제도개선)<br>○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감소 및 자율 직위 확대에 따른 개방형 직위 채용수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임용 기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1645-302)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와 민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민간 스카우트 제도를 포함한 개방형 직위 임용 실적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바, 개방형 직위의 수가 감소하면서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의 자율 직위로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민간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 강화를 통한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무원 인재개발(1732-300)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재 학자금의 2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유럽국가 등 무상교육이 실시되거나 학비가 저렴한 국가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 중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환수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비영어권 국가<br>파견 비율<br>확대를 위한<br>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무원 인재개발(1732-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인사혁신처</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외훈련 국가별 파견 인원과 관련하여 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영어권 국가로의 파견 집중 현상은 국외 교육훈련의 다변화 및 비영어권 전문가 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br>※ 최근 5년간 국외훈련 영어권 파견 인원<br>(단위: 명, %)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합계</td><td>366</td><td>323</td><td>309</td><td>300</td><td>317</td></tr>
<tr><td>영어권 국가 소계</td><td>291</td><td>268</td><td>264</td><td>256</td><td>272</td></tr>
<tr><td>영어권 국가 비율</td><td>79.5</td><td>83.0</td><td>85.4</td><td>85.3</td><td>85.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인사혁신처는 국외 교육훈련의 다변화 및 비영어권 전문가 양성 확대를 고려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 및 사업 중심으로 비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국제부담금 비관서운영경비로 지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육기관 교류협력(2134-301) | 시정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인사혁신처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1조,「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및「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부담금(“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국제기구 국가부담금” 6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음<br>○ 인사혁신처는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에 해당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국고금 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를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로 한정되는 바, 국제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국고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국제부담금을 비관서운영경비(일반지출)로 지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에 대한 조기환수 방안 마련 등 수납률 제고 노력 및 장기미수납 급여환수채권 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공무원연금기금 - 연금기여금(12-55-551)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연금기여금 세입항목 중 급여환수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고,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도 다수 존재함<br>- ‘급여환수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이자 및 환수비용 등을 가산하여 환수하는 수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39억 3,500만원 대비 293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9억 7,400만원을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4.5%)함에 그쳤음<br>- 관리기간별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장기 관리되고 있는 채권 수가 37건(전체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대비 24.8%)에 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에 대한 조기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퇴직인원 추계방식 개선을 통한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공무원연금기금 - 퇴직급여(3031-311), 퇴직수당(3032-312) | 주의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퇴직급여·퇴직수당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br>-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5건 이상 변경해왔고, 그 중 2023회계연도의 경우 6건의 변경이 있었음. 증액변경 기준 변경액 규모도 6,500억원~9,100억원 사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퇴직인원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2학기 대부 수요 추계시 최근 3년치 실적 반영 등 추계 방식의 변경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공무원연금기금 - 대여학자금 융자(3141-321) | 제도개선 | 인사혁신처 |
| | | 지적사항 | ○ 대여학자금은 당초 계획액 3,164억 9,100만원을 계획변경하여 787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실제로 대부수요 감소로 인한 지출액 감소로 184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통상 등록금 납부 기간인 2월과 8월에 학자금 대부가 집중(약 90%)되는데,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연간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787억원을 증액하였음. 그러나, 추계와 달리 대부수요가 감소하여 불용액 184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인사혁신처는 2학기 대부 수요를 추계함에 있어서 최근 3년치의 실적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것 | | |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8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세목별 예산사용 지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 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등 운반용기구 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여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안내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케이블, 전화선 등에 대한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목별 예산 사용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 |
| 2 | **국외출장 내실화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7132-345) | 제도개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 실시한 외국선거 참관 방문국가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일정과, 방문단 구성 등을 살펴보면 해당 국외출장이 외국 선거참관 및 기관교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고, 방문국으로 선정한 국가 역시 선거방식 연구에 적합한 국가인지 의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상 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제고하고, 방문국 및 방문일정을 보다 충실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선거보전비용<br>미반환액<br>수납률 제고<br>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앙선거관리<br>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선무효된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실적이 27.5%로 저조함<br>※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9">2023년도</th><th rowspan="2">2024년도<br>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이체 등<br>증감액(B)</th><th>예산현액<br>(A+B)</th><th>징수<br>결정액(C)</th><th>수납액<br>(D)</th><th>불납<br>결손액</th><th>미수<br>납액</th><th>수납률<br>(D/C)</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710</td><td>710</td><td>-</td><td>710</td><td>1,729</td><td>476</td><td>-</td><td>1,253</td><td>27.5</td><td>9,56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체납된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사이버공정<br>선거지원단 적정<br>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앙선거관리<br>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인원 및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불용함<br>- 당초 예산 계상 시 최근 실시된 선거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인원이 17개 시·도 평균 18명 수준이고 예산 집행실적도 평균 65.5%임에도 시·도별 27명 기준으로 편성<br>- 휴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불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사이버공정 선거지원단 지역별 단속 실적 편차 완화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 제도개선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일부 시도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근무인원이 부족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별 삭제요청 건수 및 1인당 평균 삭제요청 건수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함<br>- 전남과 경북은 근무 인원이 각각 18인, 14인으로 타 시·도에 비해 근무 인원이 특히 부족하여 1인당 평균 삭제요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지역별 단속 실적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6 |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탁선거관리(1131-306) | 제도개선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하나, 위탁선거경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함<br>-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되는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은 4억 8,8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위탁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는 2023년 집행액 기준 340억 2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위탁선거경비가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집행됨<br>-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시정요구가 있어왔고,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의 집행 결과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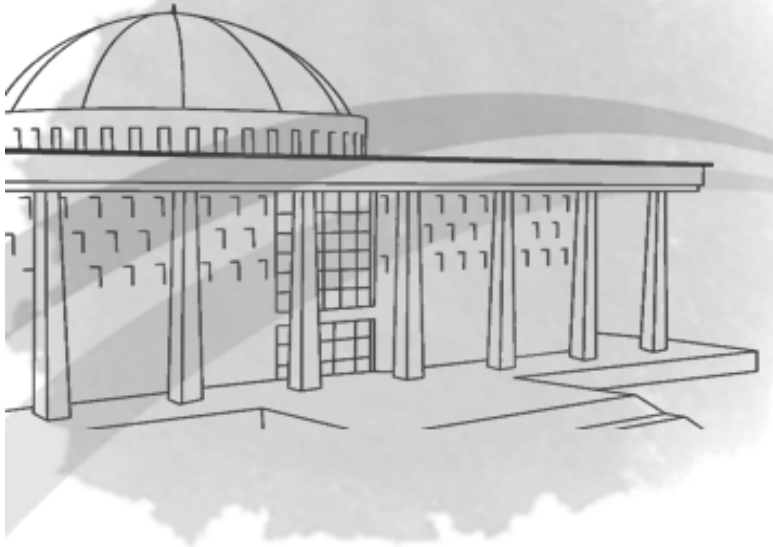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ODA 예산 시간 계획 조정 및 사업보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 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지적사항 | ○ 당초 15개국 45명에 대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개국 33명에 대해 실시하여 전체 예산 4억 1,200만원 중 2억 6,200만원만 집행하였음(집행률 63.6%)<br>○ 연수 참석자 평가 결과 온라인 강의 시 영어음성 제공 및 비영어권 자막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가국 모집 등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예측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언어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보완할 것 | | |
| 8 | 안건검토수당 지급 기준 합리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원회운영(7132-351) | 제도개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지적사항 | ○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부재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대체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 숫자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함<br>- 안건검토수당은 비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인에게 지급하며, 2023년의 경우 종전 10만원에서 안건별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함<br>-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선관위 규칙을 개정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증액한 것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우회하여 지급함<br>- 안건검토수당 지급 기준을 월정액에서 안건별로 변경하면서 별도의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와 무관히 회의 안건 수만큼 일률적으로 지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회적인 안건검토수당의 상향 지급을 지양하고, 안건검토수당의 지급 기준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것 | | |

##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부진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진화위운영(1031-300) | 주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예산액 11억 2,400만원)은 보조금 교부 지연과 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17개소 중 4개소에서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7개소만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집행이 부진(실집행률 39.7%)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불필요한 홍보장비 구매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진화위운영(1031-300) | 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
| | | 지적사항 | ○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의 공사비(420-03목)와 자산취득비(430-01목)는 임의적 필요에 따라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국가재정법」 제45조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됨<br>- 특히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당초 목적인 ‘위원회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매’, ‘유배발굴 조사검체 보관장비 구매’와 달리 ‘언론홍보용 카메라 구입’으로 1,497만원을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문화체육관광부(108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세입예산 징수 누락 등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면허료 및 수수료의 세입액 대부분에 대한 징수결정 및 수납이 지난 3년간 누락되었음<br>- 2023년도 예산액이 8억 5,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총 4,900만원만을 징수결정 및 수납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5.7%에 불과한 수납률을 보였는바,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관련 수수료가 전혀 수납되지 않은 것에 기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및 수납을 누락하여 세입에 흠결을 발생시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112-25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법률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임에도 현재 문체부의 고용률은 2.94%에 불과하고, 매년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최근 5년간 20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함으로써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3 | **정책연구개발의 이월·불용 증가 및 수의계약 과다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R&D)(7132-6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이월·불용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br>- 2023년도 기준 이월액은 5억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8.1%이고, 불용액은 1억 3,200만원으로 7.4%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br>- 2023년도 전체 34건 중 28건(82.4%)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연구용역의 이월·불용액 및 수의계약 비율 과다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재정사업 예산감액 시 신중한 접근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1531-304)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은 2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 예산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경비 외에 경상적 경비(위원회참석비, 여비, 인쇄비 등)도 202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조정은 신중히 접근하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
| 5 |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방식을 강구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1533-301)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국학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전체 고용인원 156명 중 39명인 25%가 4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구성됨<br>- 해당 40세 이상 고용인력에 지급된 보수가 전체 집행액의 31.7%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방식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지원기간 이후 기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일반회계, 1533-306)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 기업에 대해 최대 지원 기간이 경과한 기업이 나타내는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있음<br>- 또한,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초기 창업기업 3년 생존율’은 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기간 이후의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지표도 자립 기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 | |
| 7 |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일반회계, 1533-306)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사업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내 임차료 1억 2,900만원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 일부의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집행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은 공진원 직원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공진원 경상경비로서, 동 사업에서 집행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비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경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신규 편성 사업 지연 해소 및 실집행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신규 편성된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사업과 ‘제주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사업은 회계연도 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 전액이 차년도로 이월된 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사업 편성시 사업 지연 및 과도한 이월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 | |
| 9 | **문화예술 신년인사회 관련 편성 예산 변경 시 국회 보고 등 제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추진을 위해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및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에 각각 편성된 예산을 별도의 내역변경 없이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부사업 간 구분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국회의 예산편성과 다르게 예산을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관련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 시 국회 보고 등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632-326)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국회에서 확정된 당초 예산 편성 내역과 달리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20억원 전액을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국회 예산 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 11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시상식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예술의 산업화 추진(1633-306)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예산안에 미편성된 ‘문화예술발전유공자시상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동 세부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발전유공자시상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책정 과정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성인지적 관점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극장 운영(323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현행 성과지표인 ‘국립극장 티켓 예매자의 남녀 고객만족도’는 성별을 고려한 공연기획이라는 성평등 목표 측정에 적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의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 | |
| 13 | **기금계획 미편성 사업의 분할 집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예술진흥기금 - 예술창작지원(1761-300),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1765-3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기금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를 2개 세부사업에 걸쳐서 집행하고,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20주년 관련 전시’를 기금변경을 통해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증액 소요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하나의 사업을 두 개 이상의 세부 사업으로 분할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문화유산과학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유산과학센터 건립(2831-316)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공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집행률이 2020년 34.6%, 2021년 13.9%, 2022년 56.4%, 2023년 25.8%로 연례적으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도한 이월 및 불용을 지양할 것 | | |
| 15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관련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예산 추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2831-362)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2023년 연내 착공이 어려워졌고, 이에 공사비 예산 전액을 재해복구비로 이용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계획 및 예산 추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보조사업자 사업 계획 등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2151-302)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포기 및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53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기집행 예산도 실집행률이 6.4%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 등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 | |
| 17 | **연례적 실집행 저조 시정 및 사업계획의 전반적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2032-301)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5년간 실집행률이 60% 내외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br>- 사전 준비 및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여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집행 및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해외진출을 위한 발간물 등의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br>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와 ‘콘텐츠산업 매거진’은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과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에 각각 편성 및 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을 일원화하고, 1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편성·집행되거나 각각의 실적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할 것 | | |
| 19 | **제품개발 기간 확보 등 사업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정 기간이 약 3개월로 사업기간이 촉박해 성과달성이 어려움<br>-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 기업이 목표치의 50개 사의 16% 수준인 8개 사이고 공모 기업도 13개 사로 저조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재외문화원 주요사업비가 운영경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3131-304)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의 재외문화원 운영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재외문화원 운영에 필수적인 경직성 경비에 대한 지출을 매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출함<br>- 해당 경비의 이·전용액 규모는 2021년 73억원에서 2023년 1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문화원 주요 사업비가 운영경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 | |
| 21 | **재외문화원 운영사업비 일원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3131-304), 국가이미지홍보(3131-300)<br>관광진흥개발기금 -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4362-308)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재외문화원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재외문화원 전반의 예·결산 현황, 사업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예산구조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문화원의 사업경비 일원화를 통한 재정투명성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 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콘텐츠정책국 소관 보조사업 총괄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콘텐츠정책국 소관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례적으로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br>-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전 준비 과정 미흡,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행정협조 체계 구축 미비 등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단계의 문제<br>-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설·증액된 사업의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주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능한 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시배정 대상 지정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업 지연 및 실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콘텐츠 분쟁조정 제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콘텐츠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br>- 전체 신청건수 대비 실제 처리되는 '유효' 건수의 비중이 적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br>- 게임 분야 콘텐츠 사업자·이용자 간 결제 관련 분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콘텐츠분쟁 사전예방 활동 강화가 필요함<br>-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정 신청 건 중 콘텐츠 관련 건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되고 있으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으로의 이첩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집단분쟁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실제 처리되는 유효 건수 비중이 낮은 문제, 게임분야 분쟁이 과다한 문제, 관련 기관으로의 자동이첩 불가, 집단분쟁 도입 요구 등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국회에 보고된 금액을 초과한 펀드출자 실시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31-322)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선정 자조합 중 1개(출자예정액 300억원)가 결성에 실패하자 이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2024년 재출자액에 포함하였는바, 이에 당초 2024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정부출자액 3,400억원보다 300억원 더 큰 3,700억원 규모로 2024년 정부출자를 실시하였고, 이는 2024년 국회 예산심의 당시 감액된 200억원을 복구하는 결과를 가져옴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 심의를 받은 출자 규모를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 | | |
| 25 | **음악산업 육성 사업의 자부담 부과 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음악산업 육성’ 사업은 자부담 부과 여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지원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br>- 지원대상에게 일정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사업추진 방식이 아니라 수혜자의 영세유무 및 정책적 지원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자부담 여부 및 자부담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 육성 사업의 자부담 부과 방식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게임국가기술자 격검정 및 게임시간선택제 실효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게임산업 육성(1232-302)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과 게임시간선택제 모두 실효성이 매주 저조한 상황임<br>-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의 경우 응시자 수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격 보유자의 취업률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게임시간선택제의 경우 협력 게임사 4곳 및 누적 이용자 수 94명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
| 27 |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1232-304) | 시정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콘진원은 보조사업 실시과정에서 각 사업의 구분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합·집행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사업 구분 등을 무의미하게 만든 문제가 있음<br>- ‘K-콘텐츠 엑스포 in UAE’ 실시과정에서 다른 단위사업의 보조금을 하나의 용역계약에 통합하여 집행하였고, 그 외에도 개별 사업비의 보조금을 기관 홍보에 사용하는 등 유사 사례가 다수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조금의 집행이 국회가 예산으로써 심의·확정한 프로그램·단위사업 등의 구분 및 각 보조사업의 구분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신뢰 회복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1232-307) | 시정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게관위는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및 등급 재조정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편파성 및 투명성 등 논란이 발생·확대되면서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임<br>- 게관위가 등급분류를 '거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 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 29 |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이야기산업 활성화(1232-31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 중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과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보다 길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br>- 사업 시작연도부터 2023년까지 두 사업의 예산액은 전액 교부(교부율 100%)되어왔으나, 평균 실집행률은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이 72.1%,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이 59.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매년 이월액이 발생되어 왔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사업추진 지연 및 이월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231-3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센터 조성방법·총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당해연도 교부, 보조사업자의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률 저조와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지원센터의 조성방법 및 총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연부액으로 편성하고, 지방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추진 경과에 따라 적정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31 | **생성형 AI 저작권 논의에 저작인접권자 참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1331-301)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학계·법조계·산업기술계·권리자·정부·공공기관과 함께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구성원에 저작인접권자가 존재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AI 저작권 관련 논의 시 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하여 논의하거나 개별 의견 청취를 진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1~2단계 구축(총 8,615백만원 집행)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 사용불편 및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였고, 모니터링・심의・수사지원・통계관리 등 일부 기능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시스템 사용부서와 구축부서 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 | | |
| 33 | **저작권법 개정 취지에 맞는 사업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보호원 신설에 따른 기능 분담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보조금이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 두 기관으로 나뉘어 교부되고 있으며,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저작권 ‘보호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 본 사업에 일부 혼재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시 표준계약서 보급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1432-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심사 시에 해당 콘텐츠 스태프 및 해당콘텐츠에 출연한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심사 시 지원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심사요소에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 | | |
| 35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시 보수 등의 체불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1432-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심사 시에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제작스태프에 대한 임금·계약금 체불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심사 시 해당 콘텐츠 제작자와 제작사 대표의 계약금액 체불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표준계약서 인용 여부에 관한 별도조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1432-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문체부는 방송외주제작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에 다르면 표준계약서 활용의 경우 방송사는 100%, 제작사는 50%가 넘는 수준으로 조사되나, 표준계약서 활용은 표준계약서를 일부만 인용해도 활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인용률을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외주제작 실태조사 시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부인용, 일부인용 등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 |
| 37 | **효과적인 콘텐츠기획개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1432-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은 선정작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후속단계 사업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공모전 개최 관련 예산은 2022년 15억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증가한 데 반해, 사업화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3억 7,900만원에서 2억 8,7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획안이 제작계획 등 사업화단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북토큰 지원 사업 일정 지연 및 수혜대상 선정의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1433-302)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북토큰 사업은 교환도서 목록 지정 논의 지연 등에 따라 수혜 청소년의 도서선택 및 활용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사업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br>- 또한 사업 수혜대상 선정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수혜 대상을 청소년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독서문화 장려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기획 및 설계할 것 | | |
| 39 |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방안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언론진흥기금 - 뉴스미디어진흥(1463-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이전 회계연도 지원금 집행률이 저조한 언론사가 다시 선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관이나 언론사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디지털뉴스리포트의 고의누락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언론진흥기금 총괄 | 시정 | 한국언론진흥재단 |
| | | 지적사항 |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로이터저널리즘의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어판을 발간하면서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설문에서 조사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함<br>- 이는 국가 예산을 들여 발간하는 보고서가 허위로 발간된 것으로 시정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어판 발간에서 언론매체 신뢰도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 41 | 민간컨설팅 업체와 계약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193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홍보기획 지원사업 중 민간컨설팅 사업으로 2023년 8개 업체와 평균 7,42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간계약이 아닌 분기별, 수시로 한 해에 여러 차례 계약 체결 등 모든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이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컨설팅 업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편성비목에 부합한 예산 집행 및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는 예산 전용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KTV 운영(3831-300) | 시정,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KTV 운영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중 '제작진행비' 명목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사용 5,156건(119,473,904원)과 온누리 상품권 구입비 2,800,000원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어야 할 내역으로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을 위반하였고, 자체전용 대상에서 업무추진비로 전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우회하기도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위반한 집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비목별 용도에 부합하도록 사업집행방식을 변경할 것(시정)<br>○ 문화체육관광부는 편성비목과 부합하지 않은 집행분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적정 비목으로 예산편성, 내규정비 등 조치를 하고, 식음료비 등을 수용비로 집행하거나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주의) | | |
| 43 | **KTV 시청률 저하 원인 분석 및 시청률 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KTV 운영(383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KTV 시청률 목표치를 2020년 0.1%에서 21년 0.085%, 22년 0.076%, 23년 0.063%로 계속 하향하였음에도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더욱 저조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 들어 KTV 시청률이 더욱 낮아진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시청률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스포츠강좌이용 권 부정사용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스포츠강좌이용자의 부정불성실 사용일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부정사용조사일간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분을 소급 환수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특성상 몇 달치를 일괄 납부함에 어려움이 있음<br>-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 누적 2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부정불성실 사용(해외출국으로 인한 출석일수 미충족)한 경우 부정사용액을 환수하고 해당연도 추가지원을 중단함<br>-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입국자료를 반기별로 받음에 따라 사용일과 조사일간 시차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취약계층(수혜자)에게 부정사용 기준에 대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 | | |
| 45 | **스포츠강좌이용 권 수강료의 탄력적 이용 허용 및 국민체력 100과의 연계**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 지원이 월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자기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종목이 한정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월별 금액의 이월을 허용하거나 연 단위 총액을 지급하며, 국민체력 100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대책 및 확대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9005-84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체육을 위해 쓰이지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전출되고 있음<br>- 체육인들의 낮은 처우 및 체육시설의 노후화 개선, 종목별 지원 강화, 생활체육 확대 등 시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2023년 기준 문예기금 전출금이 1,000억원에 달함<br>- 참고로, 2024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300억원 전출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체육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확대 발급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7 | **체육 종목단체 상근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5261-301)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상근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없고, 종목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높음<br>- 2023년 기준 종목단체 인건비 지원대상 380명 중 담당자급 116명은 최저시급인 9,860원에 근접한 9,970원이며, 최근 5년간 인건비 지원금 변동이 없음<br>- 2023년 종목단체별 자체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율이 60%를 초과하여 종목단체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상근 직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국가의 비용부담 확대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5161-31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안전점검 등록률이 약 51%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안전점검 관련 전문성이 다소 부족함<br>- 2023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상 · 하반기 각 1회씩 국가체육시설 103개소, 취약시설 2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800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이행하였으며, 이외의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함<br>-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 대상인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합동 안전점검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초등학교<br>스포츠강사의<br>고용안정성<br>향상, 다양한<br>스포츠 종목<br>강사와 프로그램<br>제공 및<br>문체부의 보조율<br>상향 조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체육진흥기금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5164-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스포츠강사의 지위가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생의 종목 선택의 폭이 부족하며, 지자체 보조율이 감소함<br>- 스포츠강사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지만, 체육 교과과정에서는 여전히 보조 역할임<br>「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br>「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br>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br>- 시·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임용하는 한정된 스포츠강사 자원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br>- 2024년부터 문체부 보조율이 20→10%로 감소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문체부의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체육인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대한체육회 운영지원(526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4년 12월 완공하여 2025년 본격 운영을 앞둔 체육인교육센터는 운영 조직 · 인력 · 예산 등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짐<br>- 2024년 6월 기준 공정률 73%로, 체육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 연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장흥에 건립되고 있으며, 교육동(4층), 숙박동(4층), 다목적체육관(2층) 등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임<br>- 2023년 11월 개관한 스포츠가치센터와의 차별성, 심판 및 행정가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상시 배치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교육센터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예산 소요액 대책 등을 면밀히 수립할 것 | | |
| 51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포인트 사용률 제고 및 전년도 실집행 수준을 고려한 예산 요구**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력인증(5161-305)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포인트 전환금으로 당초 49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집행액은 246백만원(실집행률 약 50%)에 불과함<br>- 2023년 계획액 495백만원의 실집행률이 50%에 불과함에도 2024년 계획액이 500백만원으로 배정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적극 홍보를 통해 인센티브 포인트 사용률을 제고하고, 전년도 실집행 수준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한국체육인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5161-301)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체육인회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인 복지 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특정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br>- 1994년부터 계속 한국체육인회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23년 기준 누적지원액은 총 43억 9,5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체육인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사업의 집행 방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53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집행실적 제고**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5365-3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융자금의 경우 계획현액 76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이차보전의 경우 계획현액 39억 중 30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2023년도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에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함<br>- 이차보전 방식은 기금 원금이 소진되고 기금 재정 확보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수혜 대상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사업 효과 및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 중장기적 기금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이차보전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보조금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편성 · 교부 및 보조사업 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체육 · 문화예술사업의 지원(5161-307)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학교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 사업에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예산 300백만원 전액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0%임<br>- 연구용역 입찰 과정이 지연되어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 이월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 | |
| 55 |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위한 태권도 스테이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태권도진흥(5461-304)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태권도 스테이는 2023년 기준 주로 내국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태권도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함<br>- 별도의 통역이나 외국인 그룹 대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판매는 국내 사이트 한 곳을 통해서만 판매를 대행하여 티켓팅을 위한 외국인의 접근이 어렵고, 사후관리와 개선을 위한 외국인 방문객 수 통계도 수집하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스테이 통역, 외국인 별도 프로그램 구성, 판매처 다양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태권도 외교력 및 인지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6 |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별 대여(이용)현황 관리체계 강화**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5561-301)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각 지자체에 예산 지원 후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별 대여(이용) 현황을 보고받지 않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함<br>-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매년 17개 시·도로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지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각 시·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별 대여(이용)현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가 실제 수요를 반영한 장비구매계획서를 제출했는지를 검토하는 등 실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 | |
| 57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한 보조금 편성·교부**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 종목 보급(5161-311)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충주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광역지자체가 사업을 최종 포기하여 건립이 중단됨에 따라 공사비 예산이 2년 연속(2022~2023년) 전액 불용처리됨<br>- 실시설계 용역과정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예산 조정 없이 편성 및 집행하여 예산의 연례적 불용을 야기함<br>(*2023년 1,392백만원 전액 불용, 2022년 1,500백만원 전액 불용)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경과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집행잔액 이월<br>사례 재발 방지</td><td>관련사업명</td><td>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 종목 보급(5161-31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통무예 진흥 사업 취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이월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부적정함<br>-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으로 8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충청북도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업 취소로 8억원이 남음<br>*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5억원(충청북도 자치경상보조) + 국제무예산업 페어 3억원(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민간경상보조)<br>- 3억 8,000만원은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로 교부하였으나, 센터는 이를 전액 차년도로 이월함
<table>
<tr><th>계획액</th><th colspan="2">집행내역</th></tr>
<tr><td rowspan="3">8억<br>(집행잔액)</td><td>민간경상보조금<br>3억원 미교부</td><td>-</td></tr>
<tr><td rowspan="2">자치단체보조금<br>5억원<br>→민간경상보조금으로<br>변경</td><td>(1억 2천만원) 2023 우즈벡 국제 민속 스포츠 대회 부대행사 추진(8월)</td></tr>
<tr><td>(3억 8천만원) 2024.10월 예정인 글로벌 무예 포럼 추진 목적으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 교부(12.19.)<br>→ 무예센터에서 전액 차년도 이월</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부적절한 집행잔액 이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9 |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회복을 위한 운영사업 개선 방안 검토 및 개별 사찰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전통문화체험 지원(4262-303)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2023년 참가자 수가 286,60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참가자 수 294,796명 수준에 근접하지만, 템플스테이 사찰이 2017년 137개소에서 2023년 150개소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감소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국고지원액을 참가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근속기간 등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부합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시설 확대,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개선 등 사업을 점검하고, 참가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근속기간 등으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
| 60 | **관광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 수요진작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관광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은 2023년 계획현액 25억원 중 3,700만원만 집행(집행률 1.48%)되어 기존 전대융자 방식의 사업 집행률이 거의 100.0%(계획현액 4,465억원 중 4,463억원 집행)인데 비해 저조하고, 2024년 5월말 기준으로도 융자신청 건수가 9건에 불과하여 연말까지 신규지원 목표규모인 1,000억원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 초기 단계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 방식 지속을 위해 금리, 대출기간 등에서 전대융자 방식과 균형을 맞추는 등 수요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1 |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성과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관광호텔 객실증가에 대한 기금기여도 등 관광호텔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객실증가와 개보수는 시설자금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전체 지원규모 중 45.5%인 운영지원자금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음<br>* 성과지표: 관광호텔 객실증가에 대한 기금기여도, 개보수 관광호텔의 매출액 증가율<br>* 전체지원액 4,463억 3,600만원 중 건설자금 1,793억 1,600만원(40.18%), 개보수자금 639억 1,700만원(14.32%), 운영지원자금 2,031억 300만원(45.5%)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융자사업 성과지표가 수혜업체 전체를 포괄하도록 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통한 관광사업체 경영상태 개선, 실적 증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사업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62 |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대규모 불용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4267-301)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관광사업체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의 2023년 계획현액 100억원 중 10억원만 집행, 90억원을 불용하였는바, 코로나 진정세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와 기 출연금 보증잔액 규모가 충분하다는 것을 예산편성 당시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2023년 11월에야 출연규모의 축소 운영을 결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전에 신용보증기관 출연보증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3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의 정기적인 추진을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매년 기금변경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정부발표 계기 비정기적 사업추진, 추진때마다 다른 숙박할인권 발행물량으로 사업수혜자인 국민의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벤트성 기금계획 변경으로 숙박할인권을 발행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 | | |
| 64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예산비효율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4462-3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아 사업초기부터 크게 지연되었고, 사업지별 사전행정절차 추진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일부 사업지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행정상 낭비 등으로 2022년도 2차 사업지 선정 이후 신규 사업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에 그치고 말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력 제고라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행정상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5 | **베니키아 체인 호텔의 민간이양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4462-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베니키아 체인호텔은 2011년 민간기업으로 완전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이양 시점이 계획되지 않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장기간 부재로 브랜드의 자립 기반 형성은 사실상 중단되며 민간이양을 준비를 위한 지원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베니키아 체인호텔의 민간이양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협동조합 정상화 또는 협동조합과 계약 해지 후 브랜드를 매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6 | **웰니스관광 사업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4463-306)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웰니스관광객 대부분이 국내관광객(2,544만 5,673명)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10만 6,711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21만 8,567명 대비 51.2% 감소한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한 의료관광 수요를 웰니스관광 수요로 연계하는 등 체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서 외국인 카지노 제외 검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4631-30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하는 이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매출총량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br>-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 규모가 줄어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제외하면 2009년 매출총량제 실시 이후 2023년까지 매번 매출총량을 넘는 이행실적(매출규모)을 기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총량제에서 제외하고 해당 매출총량분을 타 업종으로 재조정하는 등 매출총량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8</td><td rowspan="3">전통사찰<br>보수정비 사업시<br>행정절차 이행<br>여부 및 집행<br>실적을 고려한<br>예산 편성 · 교부<br>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11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으로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년 평균 32%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음<br>※ 최근 5년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실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문체부</th><th colspan="6">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th></tr>
<tr><th>예산액</th><th>교부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교부현액<br>(A)</th><th>집행액<br>(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r>(B/A)</th></tr>
<tr><td>2019</td><td>11,456</td><td>11,456</td><td>-</td><td>11,456</td><td>8,087</td><td>3,316</td><td>53</td><td>70.6</td></tr>
<tr><td>2020</td><td>12,154</td><td>11,894</td><td>3,316</td><td>15,210</td><td>9,793</td><td>5,417</td><td>-</td><td>64.4</td></tr>
<tr><td>2021</td><td>14,500</td><td>14,394</td><td>5,417</td><td>19,811</td><td>12,111</td><td>7,700</td><td>-</td><td>61.1</td></tr>
<tr><td>2022</td><td>15,480</td><td>15,480</td><td>7,700</td><td>23,180</td><td>18,048</td><td>5,132</td><td>-</td><td>77.9</td></tr>
<tr><td>2023</td><td>23,621</td><td>23,621</td><td>5,132</td><td>28,753</td><td>17,861</td><td>9,978</td><td>912</td><td>62.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며, 행정절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9 |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집행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5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된 33억 9,000만원을 전부 교부하였으나, 센터장 파견 지연·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인해 5개소 모두 연내 개소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29억 1,500만원을 기존 비즈니스센터 10개소에 배정하여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센터의 조속한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연내 추진가능한 규모로 센터 확대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집행부진을 개선하고, 향후 신규 센터 개소를 위한 예산이 기존 센터에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70 |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31-322)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의 2023년도 민간출자를 포함한 총 결성규모 4,220억원 대비 실제 투자액은 244억원에 불과하여, 연내 투자소진율이 5.8%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해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1 |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연례적 이월 등을 개선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통생활문화 진흥(1533-303)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함<br>- 최근 5년간 평균 교부율은 33.7%, 교부액 중 실집행률은 9.5%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72 |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문화정책지원(1534-307)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한·중·일 3국 간 각국의 장관급 인사가 주관하고, 문체부장관이 직접 본회의에 참여하여 합의문 서명 등을 실시하는 국가행사라는 점에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직접수행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실무 처리에 효율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위탁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장애예술인 공연장의 공연사업 추진 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함께누리 지원(1633-304)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장애예술인공연장 임차 및 운영’ 사업은 조성 공사 지연으로 임차료 등이 낭비되고 공연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추진 지연으로 임차료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예술인 공연장의 공연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 74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방안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4153-315) | 시정,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5개 사업 모두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 55억원이 교부되지 않고 불용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나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방증으로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임<br>○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이지만 지방비가 매칭되지 못해 예산 55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사업추진체계 점검과 독려로 최소한의 사업이라도 시작하도록 했었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세부내역별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집행관리할 것(시정)<br>○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전준비 상황을 파악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주의)<br>○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5</td><td rowspan="3">입장료수입의<br>일부 계상 및<br>별도 적립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문화예술진흥기금 - 입장료수입(64-64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뉴서울CC 총 운영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만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장료수입으로 계상해왔고, 2021년부터 입장료수입 중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함<br>※ 최근 5년간 입장료수입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실제<br>입장료수입<br>(B)</th><th rowspan="2">별도재원<br>조성<br>(C)</th><th rowspan="2">징수결정액<br>(D=B-C)</th><th rowspan="2">수납액<br>(E)</th><th rowspan="2">수납률<br>(E/A)</th><th rowspan="2">수납률<br>(E/D)</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19</td><td>6,244</td><td>6,244</td><td>6,244</td><td>5,448</td><td>-</td><td>5,448</td><td>5,448</td><td>87.3</td><td>100.0</td></tr>
<tr><td>2020</td><td>6,244</td><td>6,244</td><td>6,244</td><td>5,227</td><td>-</td><td>5,227</td><td>5,227</td><td>83.7</td><td>100.0</td></tr>
<tr><td>2021</td><td>6,244</td><td>6,244</td><td>6,244</td><td>6,354</td><td>3,761</td><td>2,593</td><td>2,593</td><td>41.5</td><td>100.0</td></tr>
<tr><td>2022</td><td>6,244</td><td>6,244</td><td>6,244</td><td>5,085</td><td>2,479</td><td>2,606</td><td>2,606</td><td>41.7</td><td>100.0</td></tr>
<tr><td>2023</td><td>6,244</td><td>6,244</td><td>6,244</td><td>4,828</td><td>1,692</td><td>3,136</td><td>3,136</td><td>50.2</td><td>100.0</td></tr>
<tr><td>2024</td><td>6,431</td><td>6,431</td><td>6,43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총계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고, 자체적인 기금수입의 별도 적립 행태를 개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6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사업에 대한 엄격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5163-306)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낮은 교부율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 계획현액 257억 3천만원 중 116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0억 9천만원을 불용함<br>※ 실집행률: 2019년 32.1%, 2020년 26.7%, 2021년 27.7%, 2022년 1.5%, 2023년 6.9%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에 따른 교부액 삭감률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한 집행관리를 실시하도록 주의할 것 | | |
| 77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기간 내 사업완수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5261-315)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이에 따라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9년까지였던 당초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6년 연장됨<br>- 매장문화재 발견 및 공사 정지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긴 하나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실집행 가능 범위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8 | **환경친화 대중골프장 운영비 연례적 기금 변경 지양**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생활체육인프라 운영(7281-205)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사업에서 최근 3년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 내역변경 등 연례적인 기금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br>- 2023년 기준 1년간 타 세부사업으로 기금변경이 13회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사업의 필수경비가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례적 기금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79 |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창작준비금 지원’ 관련 계획보고서를 제출한 자의 창작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어 창작준비금이 창작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br>-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연도 중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연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창작활동을 완료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수행 중인 경우 ‘계획보고서’를 제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창작활동 경과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인절차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0 | **공연연습장 가동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 주의,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경우, 현재 조성된 지자체의 공연연습장 가동률이 50~60%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br>- 특히 강진, 담양, 영월 지역은 20~3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연습장 활용,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공연연습장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br>○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연습장 추가 조성 시 인근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연연습장의 가동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 |
| 81 | **지역별 공연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연단체 소재지 및 공연 개최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br>- 지원대상 42개 공연단체 중 39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지원단체에서 개최한 총 514회의 공연 중 241회(46.9%)가 수도권에서 개최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지원단체 선정 시 지역·권역별 배분을 통해 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횟수의 의무 공연 개최를 조건으로 하는 등 지역별 공연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2 | **청와대 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2136-302)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청와대 관람객 수가 감소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청와대 전시, 해설 등 활용프로그램’ 항목의 만족도가 낮음<br>- 청와대 전시물 안내 팻말이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 기능이 부족함<br>○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실시한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 조사 기간이 짧아 계절변화 등에 따른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br>※ 2023년 만족도 조사: 2023.6.30.(금)~7.3.(월)(총 4일)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인근 4대 궁궐과의 연계,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유인 및 편의 기능 마련, 청와대 내 전시·공연 등 활용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관람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청와대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주기를 확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3 |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게임산업 육성(1232-302)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이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이스포츠경기장의 최근 3년간 가동률이 대전 42.8%, 광주 51.3%, 부산 46.4% 등으로 저조하게 나타남<br>- 항목별 가동률로 살펴보면 당초 구축 목적인 대회나 행사 개최일보다 단순 투어프로그램에 따른 가동일이 많음<br>※ 대전: 대회 96일 및 투어 107일, 광주: 대회 68일 및 투어 120일, 부산: 대회 108일 및 투어 110일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스포츠경기장 조성 시 경기장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 |
| 84 | **이스포츠경기장 운영비 지원종료 기준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게임산업 육성(1232-302)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현재 각 지역 이스포츠경기장마다 2억원의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 상황인바, 경기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자체 소유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종료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종료 기준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5 |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 실집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사업 지속여부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스마트관광 활성화(4264-319) | 시정, 주의,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스마트관광도시로 2023년 신규 선정된 지자체의 1차년도 실집행률(16.3%)이 사전 행정절차 지연, 사업포기 지자체(경남 하동) 발생 등에 따라 저조함<br>○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은 투입예산 대비 이용자 수, 결제금액 등이 저조하고, 주요 기능(여행코스 검색, 맛집·교통·숙박 예약 등)이 관광 분야 민간 플랫폼과 중첩되며, 민간 플랫폼이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특정 지역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향후 이용자 수와 매출액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움<br>○ 지역관광 정보를 위해 일일이 지역별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사용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한 관광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의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 등을 살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 지역 선정 때부터 세부계획 수립, 사업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주의)<br>○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기존 민간 플랫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br>○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이 높은 동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과의 경합 여부 및 사업의 수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시정)<br>○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6 | **민박사업자 교육수강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4462-300) | 주의,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은 2023년도 집행액 8억 7,700만원(계획현액 전액 집행) 중 교육·홍보사업으로 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의무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 실시한 오프라인 교육이 5개 시·도 6회에 그쳤고, 시기도 10~11월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참여율이 11.7%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민박 교육 실시 지역 및 횟수를 확대하고, 교육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교육수강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br>○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교육 실시 지역 및 횟수 증가, 교육 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민박사업자의 교육 수강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진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가 매년 위생 및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주의) | | |
| 87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4361-306)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최근 5년 실집행률(19년 29.3%, 20년 49%, 21년 63.6%, 22년 42.9%, 23년 2.7%)이 부진하고, 2021년과 2022년도의 경우 2개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였음에도 실집행률 부진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2023년은 9개 지역의 실집행률이 2.7%에 불과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8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에 필요한 결제 수단 다양화 및 가맹점 확대**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 | 시정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수단이 카드 1개사에 불과한 등 유·청소년 및 장애인이 직접 이용권을 사용하기 어렵고,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가맹점이 구분되어 있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이 불편함<br>-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사업 카드를 발급받고 홈페이지에서 가맹 체육시설에 결제하여야 함<br>-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도 1개사에 불과한데, 단독계약만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과의 결제·정산 연계 시스템 자부담 등의 선정 조건으로 타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움<br>-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가맹점이 분리되어 있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수가 일반 이용권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며, 가맹점의 39.7%가 수도권에 몰려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가맹점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9 | **유사한 사업의 차별화 및 추진경과를 고려한 보조금 편성** | 관련사업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5365-302)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며,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최근 5년간 매년 30~40%에 불과함<br>-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산업은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사업 내용과 유사하여 일부 지자체가 양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지원을 받기도 함<br>-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은 에어돔 설치·지원사업,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등의 집행 부진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매년 저조한데, 이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 지연이 예상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교부하였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특화하여 추진하고, 향후 보조사업자의 추진 경과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교부하며,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0</td><td rowspan="3">지자체 · 스포츠 클럽의 자부담 확대 및 기초 · 비인기 종목 육성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체육진흥기금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516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지자체나 스포츠클럽이 전혀 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지정스포츠클럽 내 기초·비인기 종목의 비중이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내 비중과 큰 차이(4.8%p)가 없음<br>-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나 스포츠클럽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있었으나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음<br>- 지정스포츠클럽은 기초 및 비인기 종목* 육성 목표가 있으나(「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023년 기준 전체 스포츠클럽 중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비중이 공공스포츠클럽은 21.6%, 지정스포츠클럽은 26.4%로 다르지 않음<br>(*기초 및 비인기 종목: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table>
<tr><th>2023년 현황</th><th>클럽 수<br>(A)</th><th>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클럽 수(B)</th><th>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클럽 비율(B/A)</th></tr>
<tr><td>공공스포츠클럽</td><td>222개소</td><td>48개소</td><td>21.6%</td></tr>
<tr><td>지정스포츠클럽</td><td>106개소</td><td>28개소</td><td>26.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및 스포츠클럽의 자부담을 확대하여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1</td><td rowspan="3">반다비체육센터의 공모 참여 개선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516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반다비체육센터(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신청 및 최종선정 개소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장애인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br>- 2019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작 이래로 매년 센터 공모지원·선정 개소 수가 감소세로, 2027년까지 목표한 150개의 센터 건립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
<table>
<tr><th>개소 수</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목표</td><td>30</td><td>30</td><td>25</td><td>18</td><td>14</td></tr>
<tr><td>공모지원</td><td>43</td><td>33</td><td>17</td><td>16</td><td>20</td></tr>
<tr><td>최종 선정</td><td>30</td><td>23</td><td>13</td><td>11</td><td>13</td></tr>
</table>
- 장애인 우선이용 대상인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 장애인용 손잡이나 점자블록 등 미설치,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불편, 휠체어 이용 경사로에 진입판 미설치 등의 지적이 있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센터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2</td><td rowspan="3">한미동맹<br>70주년 기념<br>전시 및 6·25<br>행사 개최 관련<br>국가계약법령<br>위반사항 시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행사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함<br>- 유사한 전시공간 디자인 과업에 대하여 공간별로 구분하여 다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br>-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 견적서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b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br>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u>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u>하도록 해야 한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행사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3 |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 사업 관련 서울 외 지역 공연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예술진흥기금 - 예술창작지원(1761-3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예술단체의 공연 개최지역이 서울지역에 편중(70.5%)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 예술단체의 서울 외 공연 개최를 확대하는 등 지역별 공연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94 | **재무제표상 자산의 과대 계상 및 재정운영결과 과소 계상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 관련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재무제표 결산 검사결과 자산이 83억 5,318만원 과대 계상되어 순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었고, 재정운영결과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어 있었음<br>- 일반회계 소관 토지재평가 오류 및 일반유형자산 등재 오류<br>- 그 밖에도 문예기금 소관 투자자산 계정분류 오류 등에 따라 과대·과소 계상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재무제표상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재정운영결과가 과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5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 관련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중 다음과 같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br>- 전략목표1(국민문화환경 조성): 29개 지표 중 5개 지표<br>- 전략목표2(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15개 지표 중 3개 지표<br>- 전략목표3(콘텐츠산업 재도약): 7개 지표 중 1개 지표<br>- 전략목표4(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 8개 지표 중 3개 지표<br>- 전략목표5(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 12개 지표 중 3개 지표<br>- 전략목표6(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11개 지표 중 2개 지표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6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 부실 관련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게임산업 육성(1232-302) | 시정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콘진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결정하여 2024년 5월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주의 요구가 있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함<br>- 콘진원은 2021년 2월 문체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아 게임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게임이 제안요청서대로 제작되지 않았고 모바일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었음<br>- 이는 당초 콘진원의 개발계획 등이 부실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후로도 교육용 게임콘텐츠 효과성 검증 연구용역에서 부정적 평가 내용의 삭제를 책임연구원에게 지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br>- 콘진원은 국회의 지적에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한다는 등의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최근까지도 모바일기기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감사가 있었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7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1232-304)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콘진원은 前직원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와 2016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총 43건, 약 193억 6,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주었음<br>- 해당 업체의 총 매출 중 콘진원이 발주한 용역의 비중은 2021년 및 2022년 각 98%, 2023년 100%를 차지<br>- 콘진원의 위탁용역비 중 해당 업체에 지급된 금액의 비중은 2016년 0.14%에서 2019년 2.23%, 2021년 3.2%, 2023년 3.45%로 지속 증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직전 용역 계약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업체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이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규정과 제도를 정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8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 평가위원 선정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1232-304)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콘진원은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를 용역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음<br>- 위 교수는 ‘평가위원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 회피·제척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해당 업체가 용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평가위원의 회피·제척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평가위원이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9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운영 점검 및 징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1232-304) | 징계,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콘진원은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고위직(글로벌 혁신 부문장)을 신설하여 채용하였음<br>○ 콘진원은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출장과 관련된 유료보고서의 구입을 해당 업무와 무관한 업체에 요구하였고, 업체는 요구에 따라 이를 구입하여 콘진원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음<br>-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주의' 조치가 있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정요구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비 전용을 통한 고위직 채용, 유관 업체에 대한 부당 요구 등 방만한 기관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징계)<br>○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관련 업체 등에 대해 계약 외의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0 | 청와대 관람객 감소 개선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2136-302)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청와대 방문 관람객 수가 202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공공 행사의 청와대 사용으로 일반인 관람이 제한되는 등 개방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br>- 지속적인 사업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청와대 관람객 수는 21만명 수준으로 전년 동월(57만명)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br>-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청와대 개방의 경제적 효과(연간 2,000억원 이상, 취업유발 효과 연간 1,270명) 추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실제 측정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공공기관 자산의 민간개방 시 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할 것 | | |
| 101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정부광고에 신중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매체활용 정책홍보(1932-301)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국민적 논란이 많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를 위해 유튜브, 지하철 등 정부광고에 18억 9,400만원, 책자 제작·배포에 8,900만원 등 총 19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온라인광고의 경우 집행액이 10억원으로 배정 예산액 83억 4,000만원 중 상당액에 해당하여 정책홍보 주제의 다양성이 배제되고 정부정책 홍보가 아닌 정권정책 옹호광고로 변질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정부광고에 신중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2 |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폐지를 고려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언론진흥기금 총괄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월 평균 10여 건에 그치고 있으며, 업무 또한 상담을 통한 조정신청 안내 등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그치는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진흥재단은 졸속적인 사업집행으로 행정력·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주의할 것 | | |
| 103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보조사업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4153-309)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23년도 23개 사업에 34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16개 사업은 교부받은 지자체 집행실적이 전무한 등 전체 실집행률이 37.5%로 저조하고,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한 후 교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 사업추진경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보조금을 편성하여 교부하고,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4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4153-309)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성과지표를 충청유교문화권 지역 관광객 수와 관광개발 공정률 2개 지표로 설정하고 2023년도의 경우 목표수치를 초과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조성된 장소에 대한 관광객 수가 아닌 충청 전체지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수로 하여 성과가 과다계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 | |
| 105 |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통합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4262-309), 문화관광축제 지원(4264-304), 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4361-306), 관광활성화 기반구축(4462-300),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4463-306)<br>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4153-30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4153-309), 남부권 광역관광개발(4153-315),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4153-316), 관광자원 기반조성(4161-311),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4161-312),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4262-310)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13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됨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편중 여부,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이 있음<br>- 2023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여러 사업에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개선, 특산품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및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취지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회계 및 기금별로 주요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6 |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4361-306) | 시정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코리아투어카드 사업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으로, 제휴 매장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제휴 매장의 지역별 편차 또한 큰 상황임<br>- 제휴 매장 수 : (2019년) 840개 → (2023년) 341개<br>- 대구·광주·대전·울산·충남·세종 등 일부 지역은 제휴 매장이 1~3개에 불과하여 동 카드에 대한 효용성이 부족함<br>※ 코리아투어카드 : 온라인(모바일카드) 또는 공항 및 전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4,000원)하여 요금 충전 후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관광지, 숙박, 식음료, 공연·전시장 등 전국 341개 제휴처(2023년 말 기준)에서 정액 또는 정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문 혜택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의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래관광객 방문지역 비율이 낮고 제휴 매장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휴 매장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동 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7 | **정보화 관련 예산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예산 집행지침 규정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예술진흥기금 - 예술인력육성(1761-301),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7276-500) | 주의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화 관련 예산 낙찰차액 일부를 사업 광고비, 차년도 사업 준비, 만족도 조사, 행정지원 물품 구입 등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도 누락하는 등 예산집행지침 준수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88)<br>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정보화 관련 예산 낙찰차액의 다른 용도 사용을 지양하고, 보안 강화 및 추가 과업 수행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형 | 조치대상 기관 |
|---|---|---|---|---|---|
| 108 | **해외투자 유치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31-322) | 제도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지적사항 | ○ 해외자금을 포함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이 감소하고 있음<br>- 금년 6월 21일 미국벤처캐피털협회(NVCA)의 보고서에는 약 433조원, 실리콘밸리은행에 따르면 약 385조원의 미소진 투자금이 존재하고, 역대 최대규모임<br>- 일각에서는 후기 투자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글로벌과 달리 선행 투자자의 권한이 강한 한국 간의 계약 구조 차이가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의 해외 자금 유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 국가유산청(31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세입 징수실적<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 - 세입</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유산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유산청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함<br>- 징수결정액 67,515백만원 대비 46,567백만원 수납으로 수납률이 69%임<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2023 예산</th><th rowspan="2">예산현액</th><th rowspan="2">징수결정액<br>(A)</th><th rowspan="2">수납액<br>(B)</th><th rowspan="2">수납률<br>(B/A)</th><th rowspan="2">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br>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세입</td><td>51,272</td><td>51,272</td><td>51,272</td><td>67,515</td><td>46,567</td><td>69.0</td><td>20,817</td><td>13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유산청은 세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미수납 개선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경복궁 등 궁능 입장료 상향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입장료수입(64-641)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경복궁 등 궁능 입장료 수입이 국가유산청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입장료가 2005년 이후 변동이 없고, 해외 유명 궁궐 입장료와 비교해볼 때 저렴한 수준이며, 우리 궁궐 문화의 가치 현실화를 위해 입장료 상향, 외국인 가격 차등 및 시민 할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궁능입장료 상향 관련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관광 진흥, 국가유산 인식 제고 및 국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 |
| 3 |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의 국가유산진흥원 위탁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2232-307)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국가유산진흥원이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였는데,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 등이 주요업무라는 점에서 국가유산과 연관성이 낮은 청와대 관람·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합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민간위탁사업 수행 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위탁사업 관련 규정과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위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복궁종합정비(2231-301)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되지 않은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6억 800만원 규모의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음<br>-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예산을 전용을 통해 추진한 것은「국가재정법」제46조 제3항에 위반되고,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로 보았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긴급성, 보안필요성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필요소요를 예산에 미리 편성하도록 하여 미편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계약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 |
| 5 | **사업 지연 방지 및 편성명목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으로 2023년까지 개선관 철거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공사 계약 지연 및 공사 중지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올림픽의 집 철거 설계비 집행잔액을 편성내역과 달리 차년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철거 설계를 미리 추진하기 위해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단계별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편성 명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예산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재보호기금 - 문화재연구원운영지원(R&D)(1236-301),<br>문화유산조사연구(R&D)(1236-302)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일반회계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령에 맞지 않고, 운영비의 경우 경직적 경상경비라는 특성상 기금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법령에 부합하도록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것 | | |
| 7 | **궁능방재시스템 확충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재보호기금 - 궁능방재시스템 구축(2331-303)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 선정릉 야간 무단침입 및 봉분 훼손 사건 등 무단 침입과 각종 외부 위협으로부터 궁궐과 조선왕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궁·능 종합경비시스템의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4대궁·종묘와 조선왕릉 방재시스템(소방시설, CCTV 등)을 확충하고 외곽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 침입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공무직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1232-303)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공무직 중도퇴직자 41명 중 26명(63.4%)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의 공무직들로 1년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있는데,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 잔액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의 출퇴근 시간, 거리 등 근무여건이 열악해 공무직의 중도퇴사율이 높은 만큼, 국가유산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공무직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9 |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및 사전준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등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2135-302)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군산·영주·영덕·창원 0%, 익산 15%, 목포 33%, 통영 76%)함에도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함<br>○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2018년부터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올해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미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집행률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을 개선하고,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예산의 집행 점검 강화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2135-302)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등록문화재 활용 특별전 개최’ 사업은 예산 편성 내역과 달리 근현대건축 활용 학술대회 및 설계 공모 전시회 사업으로 변경되어 실시되었고, 학술대회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을 별도로 섭외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인건비 지출 비용이 크고, 학술대회 기념품 경비가 과도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국회 예산 심의로 확정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 시행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의 계획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경비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 | | |
| 11 | **문화재수리재료 센터 건립의 연내 준공 완료를 위해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공사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한 사업 종료 연도인 2023년까지 준공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2024년 8월 말 현재까지도 준공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2024년 예산에 편성된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운영비까지 전액 이월이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예상 사업 기간을 면밀히 추계하지 않은바, 추가적인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2024년 연내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면밀한 보조금 교부 등 집행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전통재료 진흥’ 사업 중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평균 실집행률은 42%로 저조한데,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 | |
| 13 | **예산 편성 내역에 맞는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재보호기금 -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1136-304)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사찰 및 문중 전시관 등) 보존관리 지원’ 사업 예산이 박물관·전시관 등에 설치된 항온항습기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예산 편성 내역과 달리 전시관 진열장 보수정비 등 환경정비를 위한 경비에 일부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예산 조정 및 실집행률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재보호기금 -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1136-304)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전기요금 지원)의 계획현액 54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22억 4,0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41.5%)하고 집행잔액 31억 6,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이는 전기요금의 편성단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점과 전기요금 청구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의 사업추진 절차로 인한 것임<br>*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전국 319개소, 2022년말 기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액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고, 연내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거나 정산 분기를 더 세분화하여 예산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15 | **지자체 사업계획 보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중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주시의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고, 공모 형태로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했으나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세밀한 계획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결과 관리가 부실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홍보 방식 및 인지도 조사 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무형유산원 건립 10주년을 맞아 무형유산원 전국 인지도 향상 성과지표를 설계했으나, 목표치(65.8%)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48.5%)를 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식을 강구하고, 설문조사 대상을 국립무형유산원 프로그램 참여자로 한정하지 말고, 서울역사박물관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정확한 전국 인지도 조사 방식을 검토할 것 | | |
| 17 | **성인지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무형유산 공연 여성 관람객 참여율이 성인지 성과지표로 설정되었으나, 성인지 성과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사업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불용규모 과다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3년 예산현액 대비 86.1%가 불용되었으며, 2024년에도 공사비 등 84억 3,000만원의 예산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br>- 2023년 예산현액 28억 6,500만원 중 3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9%)되고, 나머지 24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2024년 5월말 현재, 동 사업은 총사업비 증액(457억원→507억원)에 따라 타당성재조사('24.4~12월)를 실시 중으로, 당초 2023년 예정이었던 착공 시기는 2024년 이후로, 2025년을 목표로 하였던 개관은 2028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으로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실집행률을<br>고려하지 않은<br>보조금 교부 및<br>연례적 이월<br>주의</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무형유산원운영(1132-3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가유산청</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및 연례적 이월에 대하여 국회 시정요구가 거듭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br>※ 최근 5년간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실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국가유산청</th><th colspan="6">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th></tr>
<tr><th>예산액<br>(추경)<br>(A)</th><th>교부액<br>(B)</th><th>교부율<br>(B/A)</th><th>전년도<br>이월액</th><th>교부현액<br>(가)</th><th>집행액<br>(나)</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r>(나/가)</th></tr>
<tr><td>2019</td><td>3,000</td><td>3,000</td><td>100.0</td><td>5,039</td><td>8,039</td><td>5,357</td><td>2,068</td><td>614</td><td>66.6</td></tr>
<tr><td>2020</td><td>4,490</td><td>4,490</td><td>100.0</td><td>2,068</td><td>6,558</td><td>3,754</td><td>2,543</td><td>260</td><td>57.2</td></tr>
<tr><td>2021</td><td>4,716</td><td>4,716</td><td>100.0</td><td>2,543</td><td>7,259</td><td>4,828</td><td>1,945</td><td>486</td><td>66.5</td></tr>
<tr><td>2022</td><td>4,716</td><td>4,716</td><td>100.0</td><td>1,945</td><td>6,661</td><td>3,035</td><td>1,482</td><td>2,163</td><td>45.6</td></tr>
<tr><td>2023</td><td>4,925</td><td>4,925</td><td>100.0</td><td>1,482</td><td>6,407</td><td>3,699</td><td>2,621</td><td>87</td><td>57.7</td></tr>
</table>
※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br>-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국가유산청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br>-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국가유산청은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업추진 경과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으로 국가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사업점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고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각 50%씩을 2회로 형식적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음<br>- 2023년 2차 교부(6.3.) 당시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과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각각 0%와 0.01%에 불과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형식적 분할 교부를 지양하고, 고도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전년도<br>이월규모와<br>사업추진 경과를<br>고려한 보조금<br>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3331-3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유산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단일유산)’ 사업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액이 교부되어 매년 대규모 이월 또는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음<br>※ 최근 5년간 세계유산 보존관리(단일유산, 연속유산) 사업 실집행 현황<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국가유산청</th><th colspan="6">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th></tr>
<tr><th colspan="2">예산</th><th rowspan="2">교부액<br>(A)</th><th>전년도<br>이월액<br>(B)</th><th>교부액<br>(C=A+B)</th><th>집행액(D)<br>[당해연도<br>집행액(E)]</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집행률(%)<br>[당해연도<br>집행률(E/A)]</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19</td><td>31,232</td><td>31,232</td><td>31,232</td><td>11,274</td><td>42,506</td><td>20,161<br>[9,939]</td><td>이월 20,145<br>재이월 1,686</td><td>515</td><td>47.4<br>[31.8]</td></tr>
<tr><td>2020</td><td>34,686</td><td>33,686</td><td>33,686</td><td>21,830</td><td>55,516</td><td>28,339<br>[17,795]</td><td>이월 15,084<br>재이월 10,835</td><td>1,258</td><td>51.0<br>[52.8]</td></tr>
<tr><td>2021</td><td>33,034</td><td>33,034</td><td>33,034</td><td>25,919</td><td>58,953</td><td>30,979<br>[17,311]</td><td>이월 15,132<br>재이월 4,679</td><td>8,163</td><td>52.5<br>[52.4]</td></tr>
<tr><td>2022</td><td>34,395</td><td>34,395</td><td>34,395</td><td>19,811</td><td>54,206</td><td>22,026<br>[9,161]</td><td>이월 24,828<br>재이월 6,487</td><td>865</td><td>40.6<br>[26.6]</td></tr>
<tr><td>2023</td><td>29,495</td><td>29,495</td><td>29,495</td><td>31,315</td><td>60,810</td><td>34,084<br>[11,503]</td><td>이월 17,483<br>재이월 6,775</td><td>2,467</td><td>56.1<br>[39.0]</td></tr>
</table>
주) 각 연도 두 사업 예산액, 집행액 등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유산청은 향후 전년도 이월액 규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교부를 실시하여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의 운영 점검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1131-301) | 시정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의 현장점검이 선발된 인턴의 실제 수행 업무가 아닌 근로계약 이행의 적정성 등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등에 대해 실시되고 있음<br>○ 인턴 모집을 예산 편성 당시 사업내용과 다르게 전공 제한없이 하였고, 선발 인턴에 대한 전공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목적 및 효과성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진흥원은 문화유산 산업 인턴 제도가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관련 분야 전공자에 대한 인원 할당 및 인턴 종료 후 고용 지속 여부 등에 대한 통계 정보를 관리할 것 | | |
| 23 | **전수교육 실적을 반영한 전수교육장려금 지급방안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 시정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전수교육장려금을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수교육 실적에 따라 A등급(상위 10%), B등급(하위 90%)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인 90%가 B등급이라서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수교육장려금의 평가등급 및 배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실적을 반영한 효과적인 장려금 지급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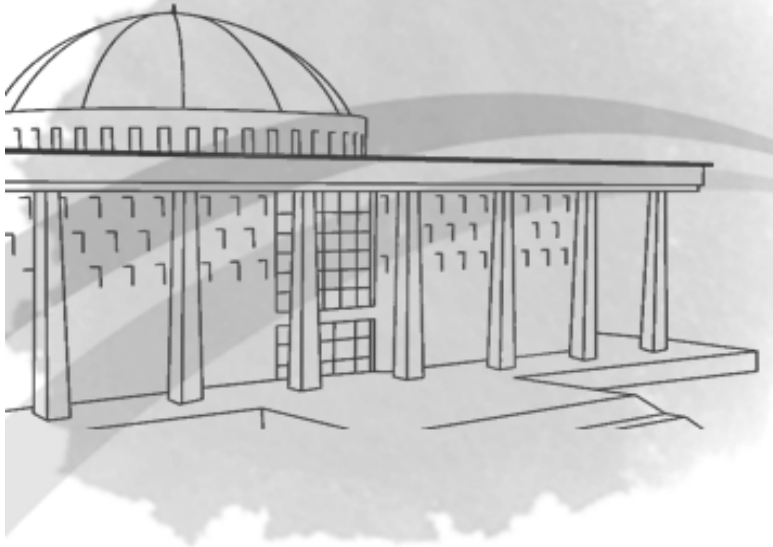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행사 시기 및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한 계약 체결 시 통합 입찰계약 실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음악과 함께하는 조선왕릉 해설’ 사업의 사업대상지인 16개릉에 대하여 권역별, 시기별로 나누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부 및 서부권 행사의 계약 체결일 및 내용이 유사하고, 계약업체도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통합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행사 시기 및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한 계약인 경우 이를 통합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선왕릉별 역사적·장소적 특성과 해당 권역 내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 |
| 25 | **일반용역비 등의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예산 집행지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정보화 관련 예산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에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정보화 관련 예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과업의 추가계약이나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절차를 누락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일반용역비 등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의 다른 용도 사용을 지양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긴급보수비 연례적 예산 부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재보호기금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2332-301)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가뭄 등 자연재난이 잦아지면서 많은 문화재가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매년 긴급보수사업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보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 규모에 적합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례적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할 것 | | |
| 27 | **집행잔액을 당초 편성목적과 다른 내역에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복궁종합정비(2231-301) | 주의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의 집행잔액 18억 7,800만원이 동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계조당 권역사업 및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동일한 세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집행잔액을 당초 편성 명목과 다른 내역에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문화재보호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문화재보호기금 - 기금전입금(91-913),<br>공공기관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990-891)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 말 기준 문화재보호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3억 8,300만원으로, 2023년 사업비의 12.2%에 불과함. 2025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916억원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고, 상환완료 시점까지 이자 부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금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기금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해 향후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성과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정비하는 등 기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 | | |
| 29 |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상근위원 확대 등 운영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문화재예방관리강화(2334-301) | 제도개선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코로나19가 전환되고 문화유산 감정 업무는 증가되고 있는데, 감정위원 중 상근위원 수는 현재 22명으로 엔데믹 이전에 비해 6명이 줄어들었고, 비상근위원 수는 현재 45명으로 코로나 엔데믹 이전에 비해 10명이 늘어, 문화재 감정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br>- 문화유산감정위원(상근, 비상근)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부산항 등에 근무하면서 문화재 감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상근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근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연례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면밀히 추산·집행하는 등 사업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2135-306) | 시정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건립이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2년 연장되었음에도, 최초 사업 추진 당시 계획한 연도별 예산을 매년 그대로 편성하여 2023년까지의 실집행률이 매년 10% 내외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경과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31 | **성과지표 실적 측정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2135-306) | 시정 | 국가유산청 |
| | | 지적사항 | ○ 성과지표 측정산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실제 공정률이 아닌 국가유산청의 단순 집행액(교부액)을 성과지표 실적으로 함에 따라 20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가 100%인 반면, 실제 공정률은 10%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는 경우 정부 단계에서의 집행기준이 아닌 보조사업자 단계에서의 실집행 현황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농림축산식품부(7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공통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2020년 기준 36억 8,330만원이었던 장애인 고용 부담 부담금 납부 총액이 2023년 기준 53억 3142만원까지 증가(+44.7%)하는 등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br>- 특히, 농협은 중앙회·지주회사·농협은행 등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200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부 및 소관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 |
| 2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공통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협중앙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1%이상)을 준수하지 않았음<br>- 특히, 농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며, 구매비율도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br>*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19년(0.03%), '20년(0.03), '21년(0.07), '22년(0.14), '23년(0.30)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집행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협중앙회 등 소관 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성인지 대상 사업 추가 발굴 및 적합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공통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 사업은 노동부담 경감, 영농교육, 창업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대상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br>○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성인지 결산서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과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 활성화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추가 발굴하고, 현행 성인지 대상 사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대상 사업 선정 시 사업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성인지 사업관리 및 예결산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공통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회계연도에 13개 성인지 대상 사업 중 4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성과목표 미달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국회로 제출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5 | **실집행부진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공통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19개에서 3,217억 6,7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소요 확인 및 철저한 분석으로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측정 방식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공공시설 복구 공사의 신속한 착수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재해대책비(1033-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공공시설 복구비의 실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4.6%, 지자체에 교부한 금액인 68억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도 26.7%에 불과함<br>○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해 6-8월 이전에 해당 시설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시설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국비 교부, 지방비 편성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시설 피해 복구공사의 착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피출연·피보조기관에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현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21건의 공사도 2024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 | |
| 7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1130-331)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실집행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도 실집행률은 46.9%에 불과함<br>○ 최근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당시 계획 개소수와 실제 컨설팅 진행 개소수를 비교해 보면, 매년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개소수가 계획 개소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차이가 증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수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관리 · 감독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은 20.4%로, 10곳의 지자체 중 5곳은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고, 전북 고창과 경남 거창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실집행률도 각각 0.5%, 4.3%, 23.7%에 불과하여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함<br>○ ’24년부터 추진중인 신규 10개소도 7월 현재 지자체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님비현상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사업다각화 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연내 집행가능한 보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131-35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사업다각화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과 연계한 선별·저장·가공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실집행률 32.5%로 저조<br>- 주요 집행 부진 사유는 ① 건축공사 인허가 지연 ② 지방비 확보 지연 ③ 사업계획 변경 ④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나타남<br>○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선정된 공동경영체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연례적 이월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다각화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사업다각화 사업 예산의 내역변경 절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131-35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사업다각화 예산 81억 9,300만원 중 14억 9,900만원을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내역 변경하여 시설장비 지원 사업 예산현액 132억 4,900만원으로 증액<br>- 내역변경 시 자체전용에 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절차 혹은 국장의 전결 절차없이 내역변경('23.4.28.)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 관련 지침 취지 위반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예산 내역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스마트팜 조성사업 예산집행 비효율성 해소 등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대형 스마트팜(2220-383)<br>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2220-376)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22년 신규사업 4개소에 2년간 8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87억 8,100만원(실집행률 11%), ’23년 신규사업 3개소에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8억 2700만원(실집행률 2.8%)에 불과하고,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6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4,800만원(실집행률 0.7%)에 불과하였음<br>- 스마트팜 사업의 집행부진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회계년도 및 ’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의 집행부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내역사업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2023년 10개소를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연내 완공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함.<br>- 나머지 개소는 2024년 4월에야 모두 완료되었으나, 경남 창원 2개소의 경우 6월말 기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함.<br>- 임대계약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실적도 45억원의 예산현액 중 46.8%에 해당하는 21억 800만원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만 편성하여 한정된 농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여 대상자 모집 및 임대계약 등 필요한 절차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시 지역간 형평성 고려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향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제주는 스마트팜 확산 및 대체의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으로 효과성에 대한 고려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임대형 스마트팜 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평가 기준 등에 적절히 반영할 것 | | |
| 13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방식(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방안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감축량 1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감축량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br>* 사업기간('13년~'23년)내 탄소감축량 및 인센티브 지급액: 156,370t$CO_2$, 15억 6,849만원<br>- 최근 ESG 경영 실천 기업이 증가하면서 자발적 시장('24년 1톤당 약 1.2만원)에서 탄소크레딧(감축실적)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농업분야에서도 소규모 개별농가의 감축량을 규모화하고 거래체제 구축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대신, 감축실적을 인증해 탄소크레딧을 발급하고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관리 강화와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2023년에 36억 7,200만원의 국비를 보조하였으나 실집행액이 6억 6,800만원에 불과하고, 2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목)으로 전용하여 농어촌공사의 컨설팅사업에 사용함<br>- 총 8개 사업지 중 7개 사업지에서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br>- 성과지표가 사업의 추진 정도와 무관하게 단순히 당해 연도 예산을 반영한 ‘실증지원 개소수’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고 있음<br>- 2022년도 및 2024년도 예산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컨설팅 사업비가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었음을 고려하면, 예산편성 과정상의 실수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추진 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지역 등에서의 사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정도 및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하며, 민간경상보조 등 향후 예산편성에 실수가 없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산업식품용햄프 산업클러스터조 성 사업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실집행 실적 고려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업식품용햄프산업클러스터조성(경북 안동)(2250-386)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산업식품용햄프산업클러스터조성(경북 안동) 사업은 현행 법령에서 추진 가능한 햄프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헴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임<br>○ 2023년도 국비 예산 12.5억을 편성한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2년간 0%에 머무르고 있어, 1년차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서 동일 액수의 국비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 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식품용햄프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 등 실집행이 전무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조정과 환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 | |
| 16 |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기업 분양률·준공률 제고 및 연구시설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23년에는 분양기업수가 감소(126개→125개)하고, 분양면적도 1%p 증가(72.7→73.7%)하는 데 그치는 등 기업투자 유치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br>○ 준공율의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23년 기준 준공단계에 이른 기업은 78개사이고, 분양면적 기준으로 46.2% 수준으로 나타남<br>○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조성된 부지는 총 40,381㎡이나 '23년 기준 민간 연구시설 유치실적은 전무한 실정 | | |
| | | 시정요구사 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분양률·입주율 제고 및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내 연구시설부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농업관측 사업 출연금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관측(3031-30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업관측 내역사업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한 인건비 집행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 2,700만원으로 나타났던 인건비 이월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도에 9,600만원, 2022년도에 4억 7,100만원, 2023년도에 5억 9,200만원에 이름<br>○ 미집행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br>○ 사후정산 및 반납 의무가 없는 출연기관이 누적된 출연금을 정산 및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관측 사업 출연금 지급 시 마지막 분기(월)에 예상되는 집행 잔액만큼 출연금을 미배정하는 등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
| 18 |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인한 가격 영향 분석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3041-38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물가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소비수요 촉진으로 인한 수요 창출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br>○ 2021년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효과분석에서는 증가된 수요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2022년도 성과분석에서는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영향 효과 분석을 미실시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요 증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의 중소유통경로 집행 비중 제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3041-38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대형유통경로 사업비 집행 비중은 60.3%, 중소유통경로 사업비 집행 비중은 39.7%임<br>- 사업 예산 집행이 대형유통경로에 집중되는 경우,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지역농협, 친환경매장 등 중소유통경로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효과 유발<br>-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이 없는 유통업체에 소규모로 납품하는 소농은 할인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문제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시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을 제고하고,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이 없는 유통업체에 대한 할인지원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 | **조사를 통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 파악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3741-338)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존재하고, 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고양이 구조 건 수, 길고양이 관련 민원·언론보도 건 수 등의 지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br>* 길고양이 구조(마리): 14,292(’21) → 19,944(’22) → 25,115(’23)<br>* 길고양이 민원(건): 501(’21) → 410(’22) → 455(’23)<br>* 길고양이 관련 언론보도(건): 1,816(’21) → 2,064(’22) → 1,989(’23)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및 중성화된 개체 수 측정, 서식형태 및 주변환경 조사 등을 통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지역별 중성화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 인력 충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신규로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필요인원 150명 대비 103명이 충원되어 충원률이 68.7%에 불과한 상황임<br>- 지자체별 가축방역관 역시 적정인원은 1,953명이나 정원은 1,214명(적정인원 대비 62.2%)이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1,130명(적정인원 대비 57.9%)에 불과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관 등 가축방역 인력의 필요인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가축방역 인력의 적극적인 충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것 | | |
| 22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의 면밀한 예산 배정 및 충실한 사전 조사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용수관리(4038-31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 사업은 정기적인 수질조사 실시 및 수질조사 결과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 호소에 대한 인공습지 조성, 침강지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br>○ 동 사업은 일부 지구의 기본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으며, 지방비 100%로 추진해야 할 지구에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부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 사업 추진 시 지구별 사업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보조금 지침 준수 및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4130-44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22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내역사업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의 예산이 재이월되었고 ‘23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내역사업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도 예산이 이월되었음<br>○ 두 내역사업 모두 보조금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1차 또는 2차에 걸쳐 전액 교부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을 수행할 때 재이월·보조금 분할 교부 등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할 것 | | |
| 24 |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사업수요 감소 및 실적 부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4135-394)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실천모델 발굴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최근 5년 간 지원한 총 89개소 중 23개소만이 연내에 계획을 완료(25.8%)하고, 그 외에는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관련 예산 실집행률은 47.5%에 불과함<br>○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관련 공모 선정 지연 및 적정 부지 선정의 혼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수요 감소 및 실적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6240-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동물복지축산인증제는 인증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관리가 소홀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존재하는 상황임<br>-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따라 시설개선 및 사육밀도 감소 등으로 농장의 생산비용은 증가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높지 않아 사업 참여가 저조함<br>- 점검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은 농가가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 |
| 26 | **LMO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6432-301)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LMO 종자 불법 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23.6)이 발표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으나, 2024년 7월 현재까지 동 대책의 추진*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br>* 「식물방역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 미완료, 종자원 보관 종자(38개 품목) 전수 검사, 국립종자원의 조직과 인력 확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완료하여 LMO 종자로 인한 농가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과수 작물별 공급 불균형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6432-30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5대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사과·배·감귤의 무병묘 공급률은 각각 12.3%, 11.7%, 21.9%였던 반면, 포도는 2022년까지 무병묘목 공급 실적이 없다가 2023년에서야 7.1%의 공급률을 보였으며, 복숭아는 1주의 무병묘목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병묘목이 과수 작물별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8 |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전체 사업 예산 550억원 중 525억원에 해당하는 '영농정착지원' 예산의 실집행률이 89.7%에 불과함<br>○ 시·도에 교부되는 선발운영비 역시 실집행률이 69.1%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양곡 소비 촉진행사 추진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 식량작물소비기반구축(2131-369)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기반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집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업 협력 소비촉진 행사와 국산 쌀·밀·콩 제품 할인지원 행사를 추진하였음<br>-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유통경로에 예산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이 존재함<br>- 동 사업 참여 유통기업이 대형유통기업으로 한정되어 상대적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 소비 촉진행사 추진 시 사업의 중복성 및 참여대상 기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 | | |
| 30 | **쌀가공제품 개발· 출시의 기한 내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 쌀가루 산업화 지원(2131-37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쌀가루 제품개발지원 사업은 쌀가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가루 사용을 희망하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 대체 프리미엄 제품 등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2023년 10월 말까지 제품개발 및 내부 소비자 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15개 쌀가공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기한 내 제품개발 및 출시를 완료한 업체는 7개, 연내 출시 완료한 업체는 10개에 그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 시 쌀가공제품의 개발·출시가 정해진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대형유통기업 편중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비축지원(3031-323)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지원 사업을 통해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추진<br>- 납품단가 지원 사업은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소매가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유통업체에게 품목당 납품단가의 일부를 지원하여 납품가격을 낮추는 방식임<br>○ 납품단가 지원 대상은 농협,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납품으로만 국한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 사업 대상을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납품업체로 편중하여 집행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 |
| 32 |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의 청년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지관리기금 - 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청년농 14명 모집 중 13명이 선발되었으나, 스타트업단지 조성 완료('24.2) 후 계약 체결 시점에 청년농업인 개인 사정으로 5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8명만이 계약 체결을 완료('24.4)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회계연도에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 부지 조성 계획 면적이 6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농지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불용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지관리기금 - 농지이용관리지원(4130-41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실집행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br>○ 이는 현장조사 농업인의 반발, 조사원의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조사원의 중도 퇴사와 공고·계약 등 공식 채용 절차를 재추진하는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잔여기간에 대한 즉각적인 신규 채용이 어렵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
| 34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상향 등 지원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면적이 81,717ha에서 69,412ha(△15%)로 친환경 인증농가 수가 58,055호에서 49,520호(△17.2%)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 규모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현실화 등 친환경 농업인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상한(5ha)을 타 직불금 수준(30ha~50ha)으로 상향하고, 유기지속 직불금의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 현실화, 친환경농업 특화 재해보험 검토 및 세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친환경 농업인증 권리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농산물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사항 중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36 | **공익직불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2020년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br>※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br>○ 또한, 공익직불제는 시행 5년 차로 농림부는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불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br>- 2023년 공익직불금 예산 약 2조 7천억원 중 불용액이 약 2,200억원(8%)에 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항목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조치를 하고 있는데, 준수사항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br>- 실제 4만5,000건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항목을 개선할 것 | | |
| 38 | **전략작물직불 단가인상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전략작물직불 사업은 밀의 직불금 단가를 기존 논활용직불 사업과 동일한 50만원/ha로 설정하여, 추가 재배 유인이 낮고, 실제 재배 실적도 목표 대비 74%에 그침<br>○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경우, 전략작물의 소비촉진과 산업화, 계약재배자금 등의 사업이 확장되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품목별 직불금 단가 인상과 소비 촉진 전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식량자급률 증진과 양곡 수급관리 목표를 달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FTA관련 교육·홍보 예산의 구분 운영 및 교육비 비율 상향 필요 | 관련사업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1072-395)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FTA 교육홍보비로 3년간 총 83억이 집행되었는데 교육사업은 19억이 지급되었고 홍보사업은 지급 단가의 가이드라인 없이 특정 언론사 16억을 포함하여 64억이 지급되는 등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언론사 홍보비가 지출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언론 홍보비 과다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비와 홍보비를 구분하여 운영하되 교육비 비율을 상향할 것 | | |
| 40 |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원예시설현대화(3034-35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자급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임<br>○ 동 사업은 예산 2,970백만원 중 1,612백만원을 집행하고 508백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8억 5,000만원을 불용 처리(28.6%)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실제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3760-346・33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은 2023년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신규 편성(8억원)하여 추진되었으나, 두차례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었음. 이는 사업이 실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지자체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통한 실제 현장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사업방식 결정 시 실제 수요기관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예산 불용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42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3760-346・33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468억 100만원을 지자체로부터 반납받아야 했으나, 62.8%는 반납기한이 지나서 반납되었고, 1.3%는 2024년 7월말까지도 반납되지 않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현재 미반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조속히 완료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축산발전기금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br>○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반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의 보조금 관리 및 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 중 일부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44 |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축산발전기금 -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례적으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당한 불용액('21: 5억 7,500만원, '22: 2억 7,300만원, '23: 1억 6,200만원) 및 이월액('21: 7억 7,600만원, '22: 9억 1,000만원, '23: 7억 5,400만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축산발전기금 -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마사회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인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 연구’,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 연구’를 연도 중 신규 반영하여 추진<br>- ‘퇴역경주마 복지 관련 문제’는 2019년에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 되었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 시 준비가 가능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6 | **곤충·양잠거점단지 조성 사업비 추산 등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2271-303)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추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경북)<br>○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강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양잠거점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선행 검토를 하고, 조성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등 예산 이월원칙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축산발전기금 -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 연구’ 및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 연구’의 경우 입찰 공고만 한 상태('23.12)에서 계약 체결('24.2) 등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였는바,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의 이월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집행 시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재정법」 상의 이월 원칙을 준수할 것 | | |
| 48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축산발전기금 - 가축분뇨처리지원(3735-329, 33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실집행실적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53.3% 연례적으로 부진<br>○ 동 사업 대상 지자체 모두 2023년도 예산집행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시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관련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드론을 활용한 가축방역사업의 체계적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축산발전기금 - 가축위생방역지원(3941-34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 | | 지적사항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드론을 활용하여 농장 주변지역 소독, 울타리 방역실태 확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력, 장비 및 시스템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음<br>- 드론 운용 전담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짧은 계약기간으로 전문성·노하우 축적이 어렵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함<br>- 총 27대의 드론 장비 중 과반수(14대)가 임차로 운용되며, 보유 장비(13대) 중 예찰용 드론(9대)은 성능 및 보안성 문제로 사용이 어려움<br>- 기존 사업 관리시스템 활용에 따라 드론 방역 활동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외부 클라우드 서버 사용으로 보안성 문제 발생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 인력·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절차별로 필요한 방역이력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 | |
| 50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3033-36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온라인 중심의 상물 분리 거래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도매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48억 6,200만원을 집행<br>○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 중인데, 동 지정기간은 내년도 10월 3일까지로 한시적용에 따라 법률 미제정시 사업의 지속성 담보 불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기간 내에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조속한 센터운영주체 결정 등 후속절차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2240-41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94억원을 투입하여 전남 해남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21억 3,5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00만원을 이월함<br>- 사업기간('23~'26) 첫 해부터 실시설계비 전액(11억 200만원)을 이월함<br>- 센터의 운영방안(①기존 공공기관에서 운영 vs ②별도의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주체가 미결정 상태이고, 별도 공공기관 설립으로 추진한다면 근거 법률의 제·개정도 필요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주의하고, 조속히 센터운영주체를 결정하여 후속절차를 추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반복되는<br>집행부진에 대한<br>해결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자율)(3740-3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실집행률이 35% 미만임<br><br><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 실집행 현황><br><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교부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현액</th><th>실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th></tr>
<tr><td>2021</td><td>3,526</td><td>3,383</td><td>6,909</td><td>1,928</td><td>4,940</td><td>41</td><td>27.9</td></tr>
<tr><td>2022</td><td>4,693</td><td>4,940</td><td>9,633</td><td>2,262</td><td>6,068</td><td>1,303</td><td>22.1</td></tr>
<tr><td>2023</td><td>6,386</td><td>6,068</td><td>12,454</td><td>4,237</td><td>7,267</td><td>950</td><td>34.0</td></tr>
</table>
- 집행부진 주요 원인은 지역주민 반대, 부지 미확보, 지방비 미매칭 등 사업수행여건 미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매년 교부액이 소진되지 못하여 누적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사업별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제반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강화하며, 민간자부담 완화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반복되는 집행 부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3 | **양곡매입 방식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 및 농협경제지주 채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 정부양곡매입비(2131-360)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보유 또는 융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판매대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br>○ 동 법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매입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할 수 있다고 규정<br>※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br>○ 그러나 현재 쌀 시장격리는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또는 차입을 통해 시장격리미곡을 우선 매입하고, 농식품부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외상거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br>○ 「국가재정법」 제25조에서 ‘외상거래 방식’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br>※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br>○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시장격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25조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매입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의 자본부담이나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의 철저한 관리 및 몰수 농산물의 보관·폐기처분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몰수금 및 추징금(56-56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에 몰수금 및 추징금 2,300만원 수입을 계획했으나 징수결정과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음<br>- 2023년 8월 발생한 밀수농산물 매각대금을 당해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수입조치를 하지 않음<br>○ 인수하지 않은 밀수 농산물의 시장 유입도 차단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관으로부터 인수된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관이 인수 요청한 몰수 농산물의 시장 유통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인수 후 보관 및 폐기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 | | |
| 55 | **농산물 수입 시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법령개정 통해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법정부담금(59-593)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산물 수입이익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법정부담금 목으로 수납처리됨<br>○ 농산물 수입이익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품목을 기준으로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품목 기준에 더하여 수입권의 배분방식에 따라 수입이익금이 면제되고 있음(법령상 근거 미흡)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의 일부 품목에 대해 배분하는 실수요자 배정방식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6 |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납품단가 지원 지양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비축지원(3031-323)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비축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사업으로 저장품매입비(430-02목)로 편성됨<br>○ 비축지원 사업 예산을 활용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br>- 납품단가 지원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에 금전 지원을 통해 공급단가를 낮추는 방식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 시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집행을 지양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수행할 것 | | |
| 57 | **법률상 이수의무 없는 교육 관련 비용 자부담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식품유통교육훈련(3033-34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동 사업을 통하여 총 53개의 과정을 개설하고 총 5,9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개 과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분류되어 98.5%에서 100%의 이수율을 기록함<br>○ 일부 농산물 유통종사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동법 시행규칙에서 의무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교육 소요비용의 일부를 자부담(2023년 20%, 2024년 50%)하여 교육을 수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종사자가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교육 축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 적극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지관리기금 - 법정부담금(59-593)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지보전부담금의 연체채권 규모는 296억 1,300만원에 달하며, 5년 이상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53.6%에 달함<br>- 농지보전부담금(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재산압류 중인 5년이상 체납 건 16건은 모두 압류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상황이며, 5년을 경과한 경우는 12건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96.4%에 해당<br>- 재산압류 후 추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체납액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압류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채무상태를 필요 이상으로 방치하는 문제를 가져옴<br>- 재고자산매각대 중 '사망 및 행방불명'으로 인한 장기미납 건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시효가 이미 완성된 건들이 존재할 가능성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장기압류 중인 미납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등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임차임대 사업의<br>적정규모 계획액<br>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지관리기금-맞춤형 농지지원(1160-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중 ‘임차임대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계획액을 2년 연속 수정하여 감액하는 등 비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나타내고 있음<br><br><최근 5년간 임차임대사업 예산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당초<br>계획액(A)</th><th>변경<br>계획액(B)</th><th>실집행액<br>(C)</th><th>당초 계획액 대비<br>실집행률(C/A)</th><th>계획액<br>변경(B-A)</th></tr>
<tr><td>2019</td><td>40,000</td><td>24,992</td><td>24,157</td><td>60.4</td><td>△15,008</td></tr>
<tr><td>2020</td><td>29,544</td><td>29,544</td><td>24,426</td><td>82.7</td><td>-</td></tr>
<tr><td>2021</td><td>22,413</td><td>22,413</td><td>10,547</td><td>47.1</td><td>-</td></tr>
<tr><td>2022</td><td>22,413</td><td>7,291</td><td>7,239</td><td>32.3</td><td>△15,122</td></tr>
<tr><td>2023</td><td>21,293</td><td>8,482</td><td>8,435</td><td>39.6</td><td>△12,81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차임대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 실시시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및 신규대출 실적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51-34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식품가공원료매입(운영자금), 외식업체육성(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액 대비 125%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 의무가 부여되지만 농식품시설현대화(시설자금), 외식업체육성(시설자금)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시설,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구매 의무가 부여되지 않음<br>○ 각 내역사업의 대환대출 비중이 높고, 신규대출의 비중이 낮아 신규 수혜자의 유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종합자금 내역사업 중 ‘식품시설현대화(시설자금), 외식업체육성(시설자금)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시설, 운영자금)’의 경우에도 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식품외식종합자금 각 내역사업별 신규대출 실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1 | **농지연금 수시인출형 사업 재원 확보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지관리기금 - 농지연금(융자)(4130-410)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지연금 중 수시인출형 연금은 사업재원 부족을 이유로 가입자의 필요자금 인출이 장기간 제한된 바 있고, 동 상품의 신규가입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한되고 있음<br>○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조치는 수시인출형 연금 가입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법령이 정한 농지연금 상품의 선택권을 근거 없이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걸맞는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출금 지급 기한 설정과 예산 범위 내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선택직불제 확대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기본형 직불금(소규모농가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거나, 경관작물 및 전략작물 재배,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등 공익기능증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2조 7,268억 8,400만원 중 2조 5,081억 2,900만원이 집행되고, 2,187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선택형 공익직불 예산액은 2020년 805억원에서 2023년 1,512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의 실집행률은 98.9%에서 86.6%로 감소하고, 불용률도 0.6%에서 8.4%로 증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선택직불 예산의 증액과 신규 직불제 도입을 통해 선택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금)를 확대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계란공판장<br>출하촉진(융자)<br>사업 예산편성<br>방향 정립 및<br>사업실적 제고<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축산발전기금 - 축산물수급관리(융자)(3731-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사업의 재원과 사업추진 방식이 정립되지 못하고 예산집행실적도 저조<br><br>[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사업의 재원 및 사업방식 변경 현황]<br><table><tr><th>연도</th><th>재원</th><th>추진방식</th></tr><tr><td>2020년 및 2021년</td><td>축발기금</td><td>융자 지원</td></tr><tr><td>2022년</td><td>축발기금 → 농특회계</td><td>융자지원 → 이차보전</td></tr><tr><td>2023년</td><td>축발기금</td><td>융자 지원</td></tr><tr><td>2024년</td><td>농특회계</td><td>이차보전</td></tr></table><br>- ’20년부터 ’22년까지 200억원의 계획액 중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간 계란 출하량 대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계란 출하량 비중이 ’22년 3.2%에서 ’23년 0.9%로 하락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사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4 |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에서 불용액 발생, 실집행률 미흡<br>('23년 계획액 551억 9,00만원 중 53억 4,100만원 집행, 331억 2,900만원 불용)<br>○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중 하나는 일선 지역농협 분담률이 높기 때문임<br>- 현재 농협 분담금 20% 중 10%는 농협경제지주, 10%는 지역농협이 분담<br>- 사업물량 확대 시 지역농협 재원 부담이 증가하여, 영세한 지역농협은 사업참여 및 확대를 기피하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 조합 인센티브 제도 도입, 평가를 통한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 |
| 65 | **FTA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피해보전직불(1072-392)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6년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집행률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우 저조한데, 이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발동되기 어렵기 때문임<br>- '21-'22년 계획액 200억원 중 집행액이 각각 23억원 및 전액 미집행되었고, '24년 계획액 54억원 중 9월 현재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재원 없이 차년도로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br>-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은 2021년(276억원)과 2022년(319억원)에도 발생<br>- 세입재원 없는 이월로 인해, 차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 또한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일부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재차 이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에 충당하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7 | **물가안정 사업 실시시 타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사업 설계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3041-385) |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부처 내 타 사업을 통해 동일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사업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종전과 동일하게 실시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고, 할인품목을 변경하거나 할인율(20%)을 탄력적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일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각 사업이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과 유통업체 등 사업참여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8 | **맹견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 홍보 및 미수료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교육이수율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보호복지 대책(3741-338)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맹견소유자 정기교육 이수율과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저조한 상황<br>- 동물보호·복지 관련 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맹견소유자 정기교육의 경우 대상인원 1,363명 대비 891명이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율이 65.4%에 불과함<br>- 맹견소유자 정기교육을 미이수한 인원 472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4명(0.8%)에 불과한 상황<br>-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당 의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 홍보와 미이행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조를 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9</td><td rowspan="3">‘연구기획 및 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재발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6234-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연구지원 및 기획’ 사업 중 식물검역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인 이월을 초래하였음<br><br><식물검역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 사업 예산집행현황><br>(단위: 백만원, %)<br><table><tr><th>연도</th><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현액 (A)</th><th>집행액 (B)</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집행률 (B/A)</th></tr><tr><td>2021</td><td>740</td><td>-</td><td>740</td><td>507</td><td>210</td><td>23</td><td>68.5</td></tr><tr><td>2022</td><td>8,566</td><td>210</td><td>8,776</td><td>229</td><td>8,547</td><td>-</td><td>2.6</td></tr><tr><td>2023</td><td>6,662</td><td>8,547</td><td>15,209</td><td>9,759</td><td>5,450</td><td>-</td><td>64.2</td></tr><tr><td>2024.4.</td><td>3,807</td><td>5,450</td><td>9,257</td><td>1,057</td><td>-</td><td>-</td><td>11.4</td></tr></table><br>-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21년 68.5%, 2022년 2.6%, 2023년 64.2%, 2024. 4월 현재까지 11.4% 수준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0 | **공모계획서 지연 등에 따른 사업실적 저조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보호 및 복지대책(3741-338)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br>-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계획서 작성 지연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공모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3년 지자체 실집행액이 전무하고, '24년5월까지도 구체적 진전이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계획서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지자체와 적극 소통 통해 사업관리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2. 농촌진흥청(1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체결 사업 추진 유의** | 관련사업명 | 공통 | 제도개선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업기술’, ‘그린매거진’ 등 농업·농촌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제작과 K-농산어촌 한마당, 농업기술 박람회 등 행사 개최를 위하여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였는데, 일부 용역 계약사업의 낙찰차액을 다른 용역 계약의 일반용역비 부족분에 집행하는 등 원칙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br>-「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시 각종 홍보영상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통해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실집행률 50% 미만 부진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민간연구개발지원(R&D)(1148-650) | 제도개선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민간이 의뢰하는 시험수행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3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2.6%로 매우 부진함<br>* (민간연구개발지원) 농협 등 민간에서 농진청 소속기관에 의뢰하는 민원의뢰시험 수행에 있어 필요 시험경비를 조달하는 사업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의 실집행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1232-300) | 제도개선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3년간 소방 안전관리 대행, 전기 안전관리 대행, 무인 경비 시스템,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가 아닌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관리용역비가 아닌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br>- 축산시험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축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 신소재 물질 개발, 가축개량 및 품종개발, 한우 고급육 생산, 가금 품종개발, 제주 재래가축 증식·개량, 가축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연구 비용으로 편성된 것임<br>- 관리용역비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을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연례적으로 관리용역비 세목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관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정당한 내역변경 또는 이·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할 것 | | |
| 4 |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2231-300) | 제도개선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꿀벌수급안정지원사업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량 꿀벌품종을 증식·보급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충남·전남·경북 3개 지자체에 예산 36억원을 전액교부하였음<br>그러나 1차 보조금 교부(3월) 후 사업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 가능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2차 보조금을 교부(5월)하여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였음<br>○ 또한 실집행액은 7,700만원(실집행률 2.1%)에 그치고 35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농촌진흥청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꿀벌수급안정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추진 전 소요기간, 입지여건의 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정 수립과 부지확보 등 지자체 신청모집 조건 개선이 필요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배정·교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2231-301) | 주의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구축사업은 도농업기술원에 정밀진단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강원, 충남, 충북, 전남의 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별 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음<br>-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강원은 71.4%, 충남은 69.6%로 상대적으로 저조함<br>- 국고보조금은 사업 추진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이 원칙인데, 충남의 경우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고위험병해충 및 농업재해 피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2023년 12월 계획 변경 수립)하였고,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구축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1232-305) | 제도개선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현재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를 전남 함평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임.<br>- 2023년 농촌진흥청은 예산현액 962억 6,600만원 중 917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2.6%)하였으며 20억 9,200만원을 불용(2.2%)하였음<br>* (2023 예산현액 962억 6,600만원)<br>건설보상비 886억원, 기본조사설계비 58억 9,800만원,<br>실시설계비 12억 5,5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억 1,300만원<br>○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기본설계 지연으로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하여 실시설계비 12억 5,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대상지 주민 일부를 위한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건설보상비 2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 시 보상과 총사업비 변경절차 등을 조속히 마치고 후속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일정 수립을 비롯하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1136-330) | 제도개선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치유농업기반구축 사업은 경남 김해시에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72억원 중 4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br>-당초 사업비 300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60억원) 규모로 구축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였음<br>- 총사업비 조정 지연과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가량 지연되었으며, 토지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사업의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적극적 자체수입 예산편성을 통한 국비 초과지원 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1136-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농촌진흥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사업’은 기관 운영 및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액에서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국고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br><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자체수입 및 결산잉여금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2020년</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r>
<tr><th>예산</th><th>결산</th><th>예산</th><th>결산</th><th>예산</th><th>결산</th><th>예산</th><th>결산</th></tr>
<tr><td>자체수입</td><td>13,503</td><td>14,922</td><td>13,648</td><td>15,673</td><td>15,205</td><td>17,291</td><td>16,943</td><td>19,379</td></tr>
<tr><td>결산잉여금</td><td colspan="2">1,965</td><td colspan="2">1,760</td><td colspan="2">2,148</td><td colspan="2">2,443</td></tr>
</table>
주) 결산잉여금은 자체수입 초과분에 지출잔액을 합한 금액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향후 자체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적극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절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연구개발사업 공통 | 주의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기준 총 16개 사업, 231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자 결정을 위하여 ‘본 공모’ 절차만을 진행하였을 뿐, 공모 절차에 앞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일반에 예고하지 않은 문제<br>-「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공모일정·지원내용·지원기간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할 것 | | |
| 10 | 견학성 국외여비를 실증지원사업의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사례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2131-306) | 주의 | 농촌진흥청 |
| | | 지적사항 | ○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의 보조비목 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간접보조사업자는 각각 1,500만원, 465만원의 국외여비를 편성하였고, 해당 비목으로 각각 1,404만원, 465만원을 집행<br>- 농업용로봇 실증지원 보조사업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와 일부 간접보조사업자의 농업용로봇 박람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여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사업목적과는 낮고 성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br>- 본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연구·개발한 최신 농업용 로봇을 활용하여 재배작물별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로봇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최신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작업에 투입하는 시점에 해외 농업용 로봇 동향을 파악하거나 해외의 로봇 이용 농작업 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br>-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증사업과 관련한 정보취득 등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수행과 관련도가 떨어지는 견학성 국외여비를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3. 산림청(48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방식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59-593)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대부분 후납이 되고 있으나, 산림청의 부과징수업무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징수결정액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고 징수율 부진이라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됨으로써 사업성과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수허가자가 법적인 의무없이 선납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br>- 최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율은 2021년 87.4%에서 2022년 80.8%, 2023년 74.7%로 감소추세<br>-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징수율 제고 노력에 관한 시정사항이 요구되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 또는 후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시점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사업' 의 분절적 집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산림협력(1331-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개발도상국 산림 관계 공무원을 초청하여 무상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으로,<br>① 일반용역비(210-14목)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문제, ② 용역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흡 문제, ③ 실질적 ODA 성격의 초청연수사업임에도 초청대상국(12개국)의 50%는 정부 ODA 중점협력국에 해당하지 않는 등 산림청만의 분절적 사업수행 및 사업의 효과성 저하의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사업이 실질적 ODA 성격의 초청연수사업이므로 ODA 사업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 정부 ODA 정책의 일관성 및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제 집행내역에 맞게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으로 나누어 편성·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국립양묘기술 체험관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묘목생산(1533-300)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립양묘기술체험관 건립' 사업 예산현액은 16억 7,100만원인데, 이 중 94.2%인 15억 7,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이러한 집행부진은 동 내역사업이 시작된 2022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사업기간은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국립양묘기술체험관 건립 사업의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설계부터 착공 등 사업단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
| 4 | **전력공급 약관상 농사용 전력에 종묘생산업 포함 방안 강구**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묘목생산(1533-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유양묘장 묘목생산'은 한국전력공사가 양묘장 사용전력을 농사용 전력에서 제외함으로써 위약금(전기료 및 면탈금의 증가액) 납부를 위해 세목조정(1억 1,487만원)을 한 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약관 개정사항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농업과 임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력공급 약관상 농사용 전력에 종묘생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다수 세부사업 예산에서 목적 외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림정책개발(1532-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사업(13개)은 다수 세부사업(산림정책개발 사업 등 일반회계 2개, 조림 등 농특회계 2개)의 예산을 이·전용 등 절차 없이 분할·집행하였고, 관련 영상 제작 용역들은 중복 추진되었으며, 13건의 일반용역계약(6억 4,020만원)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됨.<br>- 서로 다른 회계 및 단위사업을 통해 소요 예산을 분할·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국회 및 재정당국이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드는 부적정한 집행임<br>-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수의계약상대방(11개 업체) 중 7개 업체와는 2년 이상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이·전용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용역과제를 발주하기 전 상호중복성 검토를 통해 유사한 용역계약이 수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은 특혜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산림복지부처 협력사업의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의 통합·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림정책개발(1532-300), 산림교육치유활성화(1743-302)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산림복지부처협력사업’은 ‘산림정책개발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고, 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청소년 녹색체험 교육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육성·관리와 사업목적 및 대상 등에서 동일한 내용임<br>○ ‘산림교육강화’(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는 사례(4건, 1억 3,070만원)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산림복지부처협력사업’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통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관리에 있어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적 예산집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림생물종연구(R&D)(1131-301), 정원산업 기반구축(R&D)(1131-302),<br>산림과학연구(R&D)(1251-300) | 주의 | 국립산림과학원 |
| | | 지적사항 | ○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도 1월에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 연구원의 보수를 상향조정하고도 처우개선분을 2023년도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석·박사 연구원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이 부족하게 되자 예산의 이·전용 등 절차 없이 해당 부족액을 당초 예산이 편성된 산림과학연구(R&D) 사업과 프로그램(항)을 달리하는 '산림생물종연구(R&D)' 및 '정원산업기반구축(R&D)' 사업을 통해 집행함<br>- 상용임금 부족액(5억 3,300만원) 중 2억 9,000만원을 '산림생물종연구(R&D)' 및 '정원산업 기반구축(R&D)' 사업에서, 고용부담금 부족액(4억 6,300만원) 중 800만원)을 '정원산업기반구축(R&D)' 사업에서 이·전용 등 없이 사용하였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무도 미이행함<br>- 예산 범위에서 운용해야 하는 상용임금에 관한 예산집행지침도 위반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립산림과학원은 석·박사 연구원의 보수인상분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의 재원을 통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 사업의 목적 외 집행 주의 및 ‘열대·아열대 임업기술개발공적개발원조(R&D, ODA)’와 차별성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림과학연구(R&D)(1251-300) | 주의 | 국립산림과학원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과제’ 사업에서 최근 5년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와 다른 세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추진된 것으로 보임<br>- ‘국가 산림자원 육성 방향 설정을 위한 산림기본계획 개선 방안 연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위한 산림자원 통계 및 정보 구축 방안 연구’, ‘주요 용재수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관리 기술 개발’, ‘WTO 지위와 FTA 변화를 고려한 임산물 교역모형 개발’ 등은 동 내역사업의 목적인 SDGs의 국내이행, 남북한 산림협력 방안 구축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br>- ‘인도네시아 이탄지 지역사회 발전모델 개발을 통한 ODA 적용방안 연구’는 다른 세부사업인 ‘열대·아열대 임업기술개발 공적개발원조(R&D, ODA)’의 사업내용과 인도네시아 이탄지에 대한 복원기술 개발연구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중복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립산림과학원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를 추진하지 않도록 새로운 과제발굴에 노력하고, 사업목적과 대상 및 내용에서 유사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예산을 분산·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목적 외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림과학연구(R&D)(1251-300), 기후영향 적응연구(R&D)(1251-305),<br>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1251-306),<br>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1251-402),<br>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보호 및 생태계보전(R&D)(1251-404) | 주의 | 국립산림과학원 |
| | | 지적사항 | ○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도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미국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 외국 전문가 8명의 초청경비(체재비, 왕복항공운임, 강연수당 등)로 약 3,400만원을 집행한바, 이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간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br>- 전체 행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해당 외빈이 국제세미나 및 국제심포지엄 참가 외에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참여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회가 의결한 R&D 시험연구비 예산의 목적과 용도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R&D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등 행사와 병행하여 외빈초청경비의 집행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교육부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촌활성화 지원(1742-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임업 분야 인재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원대상(특성화고) 및 지원내용 측면에서 교육부 및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사업들과 유사하여 기능적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정보 공유체계의 강화를 통해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 | | |
| 11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완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촌활성화 지원(1742-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2024년부터 일몰 폐지로 예산지원이 종료되었는데, 산림청은 예산 사업 종료와 함께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해당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br>-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5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 37억 4,500만원으로 332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을 받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분석검정장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한국임업진흥원은 2023년도 분석검정장비현대화 예산(7억 3,800만원) 중 2억 1,265만원(예산액의 28.8%)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br>- 2021년도는 예산액 8억 2,000만원 중 4,056만원을, 2022년도는 예산액 7억 3,800만원 중 2,985만원을 직원용 책상 등 사무가구, 복합기 및 소형금고 구매 등에 집행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임업진흥원은 분석검정장비 취득예산을 사무비품 구입 등에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3 | **분석검정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분석검정장비 구매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55.8%, 2022년 40%에서 2023년 76.2%로 급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임업진흥원은 분석검정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고가시험분석 장비의 가동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 결산 기준 고가분석검정장비 65개 중 18개(27.7%)는 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100시간 미만(월평균 8.3시간)으로 저조하고, 10개 장비는 가동시간이 감소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임업진흥원은 고가시험분석장비 중 가동시간이 적거나 활용빈도가 저조한 장비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의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등 장비가동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
| 15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지관리(1736-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저감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소음·진동 등이 어느 정도 절감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재원 배분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br>-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서는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산업, 농업·생활 등 부문별 저감 대책을 제시<br>- 성과관리계획서상 성과지표는 ‘산지관리 만족도(점)’, ‘산지분야 대국민 소통 및 제도개선 실적(건)’인바, 동 내내역사업의 효과성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환경피해 저감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참여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지관리(1736-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최근 3년간 등록 대상사업자 대비 신청 사업자 비율은 2021년도 4.2%, 2022년도 4.5%, 2023년도 4.7% 수준에 불과함<br>- 실집행률은 2021년 46.8%, 2022년 59.4%, 2023년 74.0%이고, 이월승인사업자 규모는 2021년 12개소, 2022년 11개소, 2023년 11개소(평균 전체 참여사업자 중 32.2%)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 참여업체의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참여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17 |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편성 및 집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림교육치유활성화(1743-302)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문수산(전북 고창) 치유의 숲 운영자산 구매’(4억 1,300만원) 예산으로 2022년도 완료 사업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을 통해 구축된 문수산 치유의 숲 운영에 필요한 물품(체지방측정기 인바디 등)을 구매<br>이는 ① 산림휴양복지증진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다른 세부사업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에서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자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어 중복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문수산 치유의 숲 운영자산 구매와 같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업내용의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산사태<br>피해복구사업의<br>효율성 제고를<br>위한 집행방식<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산림재해대책비(19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림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산림재해대책비 중 집행액 기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에서 재해발생 시점과 지자체 국고 교부 시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연계성이 미흡함.<br>- 2023년도 산사태 발생 시점부터 복구계획 확정 및 지자체 예산 교부까지 약 6개월여 소요, 국고 교부 완료 후 12월부터는 동절기임을 고려할 필요<br>【 2023년 산림재난별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사업 예산 현황 】<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산사태</th><th colspan="3">산불</th><th colspan="3">소나무재선충병</th></tr>
<tr><th>지자체<br>국고보조</th><th>직접</th><th>소계</th><th>지자체<br>국고보조</th><th>직접</th><th>소계</th><th>지자체<br>국고보조</th><th>직접</th><th>소계</th></tr>
<tr><td>2023년</td><td>23,835</td><td>5,683</td><td>29,518</td><td>3,652</td><td>-</td><td>3,652</td><td>7,400</td><td>2,610</td><td>10,010</td></tr>
</table>
자료 : 산림청</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의 적기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산림재해대책비<br>(일반연구비)의<br>한국치산기술협<br>회에 집중된<br>수의계약 방식<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산림재해대책비(19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림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산림재해대책비의 일반연구비 연구과제 대다수는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됨<br>- 최근 5년간 총 연구과제 17건(12억 5,600만원) 중 한국치산기술협회에 13건(11억 1,700만원)을 위탁</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림청은 산림재해대책비 중 연구용역비가 수의계약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계약을 확대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항공보험 관련 범정부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림헬기 도입・운영(1936-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항공보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적게는 15억 2,000만원(예산액의 30.2%)에서 많게는 47억 600만원(예산액의 99.9%)까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연례적으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향임<br>- 정부 항공보험계약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통합발주 및 종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2023년도 종합계약의 평균 낙찰률은 전체 예산액의 45.2% 수준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기관별 항공보험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항공보험요율 산출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할 것 | | |
| 21 |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체계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 분석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7035-507)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체계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2년 연속 발생함<br>- 2022년에 프로그램 장애로 접속 불가 상황(14분간), 2023년에 메모리 부족으로 기능 장애(18분간)가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2025년 추진계획인 산림재난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에 앞서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 시스템의 장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연례적 집행부진 지자체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2023년도 평균 실집행률은 6.5%(강원 춘천 4.6%, 충북 괴산군 8.1%)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 노원·부산 사상·경기 광주·충북 충주 등 4개 지자체는 실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신규 지자체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수행 역량 제고에 노력할 것 | | |
| 23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산림청은 2023년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 지방비가 미확보된 지자체(서울 노원구, 부산 사상구, 경기 광주시)와 저조한 실집행실적으로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들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미준수함<b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취소 및 연례적 이월의 최소화를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하되, 1차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어긋나게 보조금을 교부 및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따라 보급된 보일러 31,121대 중 2023년도 기준으로 9,689대가 가동되고 있어 평균 실가동률은 31%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성과가 상당히 부진함<br>- 사업 초기 단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수는 23,417대였으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수는 7,704대로, 초기 단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함<br>- 낮은 가동률은 비싼 연료가격, 목재펠릿 판매처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사업성과 부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판매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이용증진(1535-304)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는 2023년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전액(2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됨<br>- 보조사업자인 서울시 노원구의 공사 계획상 2023년 4월까지 추진된 설계에는 실내부문은 공간구획만 해당되고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지 않아 동 내역사업을 일정 기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예산집행지침상 보조금 교부원칙을 위반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일반적 제한조건들에 대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26 |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지자체임업기계장비보급’, ‘임업기계지원센터지원’의 성과지표인 임업기계장비 활용률은 2020년 89.0%에서 2021년 51.2%로 급감한 후 2022년 44.5%, 2023년 46.6%에 머물러 있고, 2023년도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빈도는 1대당 36.5일로, 이는 1개월에 3일 정도 사용 수준임<br>- 2020년 77.2일(국유림), 83.9일(지자체) → 2023년 37.4일(국유림), 40.6일(지자체)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임업기계장비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산림조합과 지속적인 협의,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계장비 홍보 및 장비운영 교육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품목 조기 선정 및 입찰공고 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의 2023년 결산 기준 다음연도 이월 규모(10억 5,100만원)는 예산액(55억 7,700만원)의 18.8%임<br>-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2020년 2,300만원 → 2023년 10억 5,100만원으로 4년간 45.7배가 증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이월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비 선정을 직전 연도 말까지 완료하고, 입찰절차 등 추진 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
| 28 | 선금 지급 시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산림청은 2023년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구매계약에 대한 선금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함<br>- ‘멀쳐’ 및 ‘타워야더’ 구매계약은 각각 10월 하순 및 12월 하순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도 계약금액의 68.5% 및 80%를 선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함<br>- ‘타워야더’ 구매계약의 경우 연도말(2023.12.26.)에 선금을 지급하여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임업기계장비 선금 지급에 있어 「국고금 관리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한국치산기술협회 독점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지원)(1536-302)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임도 타당성평가 6건(계약액 20억 4,400만원) 전부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수탁하였는데,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임도 타당성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음<br>- 2022년도 실시된 5건(계약액 7억 3,600만원)도 전부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수탁함<br>- 임도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하여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시정할 것 | | |
| 30 |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는 과목으로 편성·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지원)(1536-302)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한 것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것임<br>- 일반용역비(210-14목)는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예산과목별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수납 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법정부담금(59-593)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법정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은 2020년 428억 1,000만원 → 2023년 689억 9,100만원으로 증가추세이고, 법정부담금 전체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경우가 38.8%(174억 9,000만원)의 비율을 차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고액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장기간 미납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여 나갈 것 | | |
| 32 |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1734-301)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산림청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기한 내 완료 실적은 50% 미만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보다 국고보조금을 과다교부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교부원칙을 위반하고 있음<br>- 2019년 이후 사업기한이 완료된 총 15개소의 사업지 중 기한 내 완료된 사업지는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소는 이월 또는 재이월됐는데 특히 1개소는 2024년 5월말 기준 미완료 상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보조금 교부원칙을 준수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 실집행부진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성상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체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도 당초 자체수입예산(62억 3,200만원)보다 22억 9,400만원이 많은 85억 2,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전액 당해연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바, 해당액만큼 국비가 과다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함<br>-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필요경비 총액에서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수지차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당해연도 이익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어 시설운영 등 사업비로 집행되는데,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다음연도 예산 증가 효과가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의 자체 수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34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고보조금(2023년 결산 기준 421억 9,500만원) 외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수탁·운용하고 있는바, 녹색자금의 재원은 복권기금이고 복권기금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므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움<br>- 녹색자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복권기금(법정배분금)에서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br>○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그 수입 및 지출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국산 산림헬기 도입을 통한 부품·정비 대외리스크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1936-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2022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산림청 진화헬기 주력기종인 러시아산 카모프 기종의 부품수급이 곤란하여 동 기종 다수가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체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조하였음<br>○ 산림청의 현재 항공기 정비인력이 적정 인력 대비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항공기 1대당 정비인원수가 적어 가동률 향상에 한계가 있음<br>○ 산림청은 2024년 이후 매년 중·대형 진화헬기를 1~2기씩 도입할 계획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수급이 곤란하여 카모프 기종이 다수 가동되지 못한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대외리스크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 등을 강구하며, 정비인력 적정수준 보강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 |
| 36 | **산지연금형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유림 확보 및 관리(1543-302)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사유림매수 제도 중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한 실적(면적)은 목표치 대비 저조한 실정이고, 사유림 매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9-2028)」에서 설정한 국유림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br>- 2021년~2023년 3년간 매수실적은 일시지급형이 10,982ha, 산지연금형이 834ha로 산지연금형의 매수실적이 극히 저조함<br>- 2023년 기준 매수단가는 산지연금형이 2,467만원/ha로 일시지급형 매수단가 1,137만원/ha의 2배를 초과함<br>○ 산지연금형이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단가가 높아 매수 실적이 저조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10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산주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현행 고정 지가상승률(2.85%)이 사업참여 유인을 저해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산지연금형과 일시지급형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비용 대비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사유림매수 면적 확대에 노력하고, 산지연금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한국치산 기술협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적정성 검토 및 경쟁체제 도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방사업(1939-300), 산사태재난 경계피난(1939-301)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산림청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한 용역 및 연구개발 계약의 규모는 2019년 4개 과제에서 29억 5,000만원 → 2023년 9개 과제에서 53억 400만원으로, 2019년 집행액 대비 79.8%(23억 5,400만원) 증가함<br>- 최근 3년간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수익금은 2021년 27억 5,100만원 → 2023년 55억 600만원, 성과급은 2021년 13억 7,500만원 → 2023년 44억 7,300만원(수익금의 81.2%)으로 급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최근 3년간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수익금 급증이 사방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사업을 독점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용역사업방식을 다른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개선할 것 | | |
| 38 |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 관련사업명 | 공통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산림청이 2023회계연도에 세목 간 조정한 건수는 총 1,971건이고, 금액은 176억 5,800만원임<br>○ 국회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산림청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과다한 세목조정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에도, 2023회계연도에도 개선되지 아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비목별로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목별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사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 | |
| 39 |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공정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1740-311)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연례적인 이월 발생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총 사업비도 827억원에서 909억 8,4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집행 가능한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임<br>- 다음연도 이월 규모는 2018년 14억 4,400만원, 2019년 6억 1,900만원, 2020년 1억 7,300만원, 2021년 25억 7,900만원, 2022년 62억 8,900만원, 2023년 175억 8,9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공사가 추가적인 지연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정원 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연례적 사업추진 지연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원 조성관리 사업(1740-312)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정원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도 예산이 이월되는 등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br>- 2023년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1억 2,800만원 중 85억 2,8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1,200만원을 불용 처리함<br>-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정원 지원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 | |
| 41 | **보조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청정임산물 이용증진(1535-500)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주요 내내역사업들(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함<br>- 보조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1년도 4개사업에서 67.3%, 2022년 6개 사업에서 56.4%, 2023년 6개 사업에서 38.9%로 감소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내 지자체 보조사업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두 차례나 국회의 시정요구(18년, 20년)를 받았음에도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성과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산림과학연구(R&D)(1251-300) | 제도개선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성과지표인 ‘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점)’의 2022년도 및 2023년도 목표 대비 실적은 98.4% 및 87.7%로 2년 새 10.7%p 하락하였고,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는 2020년 53건, 15억 2,200만원에서 2023년 30건, 3억 5,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함<br>- 전체 논문 건수는 2020년 356건 → 2023년 264건, SCI논문 건수는 2020년 148건 → 2023년 122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br>-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립산림과학원 대하여 연구인력의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감독하여 연구인력이 연구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사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은 본연의 업무인 R&D 사업에서 논문 건수(SCI 논문 건수)와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 등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정량적·정성적 성과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43 | **무단점유지 원천차단 등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변상금(57-571)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국유림 무단점유자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일반회계)은 납부자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연례적으로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br>-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일반회계 변상금 과목의 연도별 미수납 현황을 보면, 2021년 미수납 건수가 9,101건(106억 6,000만원), 2022년 9,103건(113억 4,300만원), 2023년 9,007건(137억 4,400만원)으로 연례적으로 미수납 건수 및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br>- 5년 이상 납부가 지연된 금액이 65억 2,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금액의 47.5%(10년 이상은 34.3%)를 차지하여, 장기 미수납 채권이 상당규모를 차지하고 있음<br>- 산림청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매년 일정 규모를 정리하고 있으나, 정리한 규모만큼 신규로 무단점유지가 발견되어 전체적인 무단점유지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채권회수 방식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사업의 사전 사업준비 등 철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자연휴양림조성(1732-301)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은 사전준비 미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실집행 부진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br>- 동 사업은 단년도(2023년)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미리 사업일정에 고려했어야 할 계획설계 용역을 사업년도 중에 실시하게 됨으로써 예산이월 과다 (예산현액 34억 5,900만원 중 24억 9,600만원 이월) 및 사업완료가 2024.6월로 순연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향후 사전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45 | 국고보조금의 기한 내 납부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 농특 59-596)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목의 수납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일반: 90.4→63.9%, 농특: 95.3→59.5%)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액이 증가한데 기인함<br>-「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기한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일반회계의 경우 지자체는 징수결정액 144.3억원 중 94.2억원을 수납하여 65.2%의 수납률을 보여 미수납액은 전액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금액으로 나타남<br>- 농특회계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액 대부분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금액으로 지자체에 대한 징수결정액 258.8억원 중 152.8억원을 수납해 59.0%의 수납률을 보임<br>- 2023회계연도에 수납률이 일반회계 63.9%, 농특회계 59.5%로 전년(90.4%, 95.3%) 대비 대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 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산림청이 국고보조금 정산금액에 대한 반납 관리 노력이 전년도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을 제고할 것 | | |
| 46 | **산림헬기 골든타임 달성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1936-300)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산림청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진화에 착수함으로써 산불을 조기에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골든타임제’를 운영중이나, 골든타임 달성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가 있음<br>- 산림청은 최근 3년간(2020~2023년) 산불발생 시 신고접수~물투하까지 모두 골든타임(50분)을 초과하였고, 골든타임 달성률도 적게는 16.7%(2020년 하반기), 크게는 40.0%(2023년 상반기)로 달성률이 저조하였음<br>- 2024년초부터 산림청 헬기와 지자체 헬기를 구분하지 않고 산불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를 기준으로 골든타임 준수여부를 판단하도록 골든타임제를 변경・시행중이나, 2024년 1사분기 산림청 헬기의 골든타임 달성률은 32.0%에 그침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출동지시 단계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골든타임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7 | **한국임업진흥원 자체수입 적정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한국임업진흥원은 자체수입을 과다계상한 후 자체수입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지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사업범위가 축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음<br>○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요 자체수입원이었던 산림비전센터가 2023년 매각됨에 따라 향후 자체수입 실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임<br>○ 반면 2021년 및 2022년 2년 동안 11개 사업에서 지출되고 남은 자체수입 금액이 3억 7,776만원에 이르는 동안 이를 차년도 자체수입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지원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수입 예산의 적정 수준반영 및 자체수입원 발굴에 노력하고,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자체수입을 빠짐없이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 | |
| 48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유지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 육성(1535-303) | 주의 | 산림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중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2023년 결산 12억 4,000만원)은 보조사업자로 선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필요** | | 된 일부 지자체가 사업비 상승,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음<br>○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지자체별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림청은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기준 강화 및 사업종료 후 지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 해양수산부(6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공통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세입관련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3년 일반회계, 교특회계 각각 1.3%, 26.0%이고, 5개년 평균도 각각 9.5%, 30.7%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추징활동 강화, 채권 보전 조치 적기 이행 등 변상금 미회수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 |
| 2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공통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지자체 보조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매칭 지방비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사유로 집행이 부진함<br>-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총 48개 사업(자본보조 39개, 경상보조 9개)이 집행부진(실집행률 80% 미만)으로 확인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해양정원<br>조성사업에 대한<br>철저한 사업계획<br>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양정원 조성(1031-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가로림만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당시 유사·중복 사업이 많았고, 이에 대한 통폐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됨<br>※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현황
<table>
<tr><th>시 기</th><th>예비타당성조사 중<br>변경('20.9)</th><th>타당성 재조사 추진시<br>변경('22.5)</th><th>최종안('23.6)</th></tr>
<tr><td>총사업비</td><td>2,448억원<br>(국비 1,555/지방비 893)</td><td>1,577억원<br>(국비 1,024/지방비 553)</td><td>1,236억원<br>(국비 834/지방비 402)</td></tr>
<tr><td>사업기간</td><td>'21 ~ '25년</td><td>'22 ~ '26년</td><td>'23 ~ '27년</td></tr>
</table>
-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해양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상생형 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향후 추진하는 해양정원 조성사업에서는 성격·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고, 집행여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사업여건에 대한 사전 확인 강화 및 사후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오염퇴적물 정화 · 복원(1033-305)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준설토투기장의 확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정화사업지로 선정한 이후 준설토투기장 미확보로 사업착수가 지연됨<br>○ 정화 · 복원 사업 완료 이후의 해수 수질 검사에 따르면 일부 해역의 경우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음(통영항의 경우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전보다 상승)<br>- '오염퇴적물 정화 · 복원 사업'은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수거 · 처리,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화를 도모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정화 · 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준설토투기장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사업 실시 후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은 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사업구간 선정방식 검토 및 등급평가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안정비(1034-30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 상 시급한 구역에 한정하여 사업구역이 선정됨에 따라 침식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구간을 설정하지 못함<br>○ 현행 연안침식 등급평가는 모든 연안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 및 배점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침식유형에 따른 정확한 사업효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함<br>- 2023년도 연안침식 등급평가 결과에 때르면 제주도내 14개소 중 A등급(1개)과 B등급(6개소)은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소 중 C등급 4개소, D등급 3개소임. D등급(심각단계)은 전국에 19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3개소가 제주도임<br>- 국가(지방해양수산청)가 시행하는 사업은 ‘연안정비(일반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해양 및 수자원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내역사업으로 이원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사업구간 선정방식의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br>○ 해양수산부는 평가방식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침식 평가로 바꾸는 등 등급평가방식을 개선할 것<br>○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연안침식 등급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제주지역 연안침식 대책을 마련하며 내년도 예산배정을 확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확대 및 대책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어업협정이행(3132-30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은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예산이 부족하고,<br>○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예산액이 동일함에도 철거실적이 각각 43통, 1.5통으로 사업 실적의 연도별 편차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관련 예산의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실적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7 | **생분해어구 보급확대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친환경 어구보급(3140-303)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생분해어구의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잦은 교체주기, 기존 나일론 어구 대비 비싼 가격으로 인해 생분해어구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2023년 기준 14.6%)임<br>-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은 어업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어구의 생산단가 인하,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자망 어종 중심의 어구 보급 등 생분해어구 보급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어선건조 진흥단지 (고흥) 사업의 국가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3150-343)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은 재정자립도 등 고려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br>- 기획재정부는 당초 국가 직접수행사업으로 계획된 동 사업을 2025년부터 지자체보조사업(지방비 30%)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 | |
| 9 | **선박 확보계획에 대한 점검절차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4-30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동 내역사업의 운항실적이 낮고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대상 선정시 먼저 선박 및 인력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당장 활용 가능한 선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확보계획 및 일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br>○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구체적인 선박 확보 계획이 누락되어 있음<br>- 내역사업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 도선 등이 운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의 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시 선박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확인 및 점검절차를 보다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 사전계획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고여객선 건조(6143-302)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접안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국고여객선 준공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br>- 대천-외연 항로 여객선의 접안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에 따라 '25년에나 해당 항로의 선박(선령 23년) 대체 가능<br>-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은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향후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사전에 폐업예상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 |
| 11 | **유류세 관련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간 협의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6159-30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기재부는 세입예산안 편성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조치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유류세 인하기간 종료를 전제로 편성하여 집행율이 39.4%로, 188억이 불용됨<br>-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예산안과 연계되는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관련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어 승객의 혼란이 있고, 초동조치를 위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부족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선박 내에 질식소화포, 전기차 화재탐지기, 화재진압 선원 보호복, 상방향 물분사장치 등을 조속히 보급할 것 | | |
| 13 | **해파리 피해 어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위생관리(3041-303)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 인한 어선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노무라 입깃 해파리 구제사업과 관련된 예산(매년 16억원)은 편성되어 있으나, 피해어선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어선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근해어선감척(3145-30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감척희망어민이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을 철회하는 비율이 28%정도('23년 근해어선 기준)이고, 2023년 예산액(1,325억원) 중 70.6%(93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하였음<br>○ 감척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량 증대, 잔존 어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 등 감척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br>-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감척신청절차 개선 등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자원량 증대, 경영개선 등 감척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전문 준설선을 활용한 어항준설 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국가어항관리(3345-30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어항 준설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전문 준설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전문 준설선 보강 등 준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어항준설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6 |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사업의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인원 1,800명 대비 검진인원이 674명으로 저조하여 예산액의 이월·불용이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검진병원 확대, 특화건강 검진 항목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 등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의 수검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외국인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에 지자체 참여 제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지역별 어업형태의 차이, 기숙시설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어업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하여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효용성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고할 것 | | |
| 18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3440-37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전기료 인상으로 농어가들의 경영상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19 | 직불금 지급자격요건의 합리화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공익직불제(3460-31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위한 승선일수가 6개월 이상으로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어 어선원 직불금의 2023년 계획(15,000명) 대비 지급인원(7,458명)이 49% 수준이고 2023년도 편성예산 180억원 중 89억 5,000만원을 실집행함<br>* 현재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상 어업종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1년에 60일 이상이고, 일부 어종은 연간 실제 조업가능일수가 100일 미만임<br>- 어선원 직불제는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직불사업의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승선기간 등 어선원 직불금 지급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의 의무이행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공익직불제(3460-310)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수산자원보호직불’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계획(1,467척) 대비 69% 수준(1,017척)이고, 그 중에서도 44%(443척)만이 실제 직불금을 지급받고 있음<br>-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실제 직불금 지급단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의무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 | | |
| 21 | **새만금신항 사업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새만금신항(5050-324)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예산 239억 1,900만원 중 99.3%인 237억 6,300만원을 타 사업으로 과다 전용(새만금 신항 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192억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45억은 타 사업인 울산신항 남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전용)<br>- 내역사업인 「방파제(연장) 사업」은 새만금신항 내 개발예정인 민자부두의 정온도 확보를 위해 기존 방파제(3.1km)에 250m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파제(연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타당성 보완 및 부지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5063-304)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및 해안항만 건설기술 실증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액 57억 1,500만원 중 99% 해당하는 57억 500만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함<br>- 2023년 57억 1,500만원 중 57억 500만원 타사업 전용, 남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사업 추진일정 순연으로 불용하여, 2022년에 이어 전액 미집행<br>○ 당초 '2차원 수로 실험동'을 포함하여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중 3차원 수조 실험동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로 사업이 중단됨<br>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국가(해양수산부)가 행정재산(강원도, 예정부지 소유자)에 건물을 건립하고 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현재 건립부지가 불확실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변경과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실집행 부진사업의 사업효과 측정방식 개선**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지유통시설지원(3031-301)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사업자 선정 지연,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포기, 사업 수요 부족 등의 원인으로 17개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이 실집행률 50% 미만으로 나타남<br>○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실시설계·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0%에 그침<br>-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청정위판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실집행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과정 및 사업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산발전기금 - 해양폐기물 정화(1065-301)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법」상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책임부담원칙에 따라 처리·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 및 이에 따른 대집행을 한 사례가 없음<br>-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원인자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책 연구, 대상자 선별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5 |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 수행 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산발전기금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3167-316)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현재 연안어장 및 근해어장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연안어장의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임무수행 차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어업지도관리(3132-303) | 시정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건조사업은 계약업체와 경쟁업체 간 법적분쟁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잔여공정을 마무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후속계약이 유찰되어 아직까지 건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br>-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국내외 불법어업 어선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가어업지도선을 대체 및 신규(3척) 건조하는 사업임<br>○ 어업지도선의 준공시기 지연(2024. 1. 31. 준공예정 → 최소 2025. 12월 이후)으로 인해 교체대상인 기존 어업지도선 3척을 계속 운영할 경우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임무수행에 공백이 초래될 소지가 있음<br>○ 건조가 중단된 어업지도선 3척을 폐기할 경우 매몰비용(321억원)이 발생하고, 건조를 재개할 경우 물가상승분(100억원) 및 기성물 수리비용(22억원) 등 12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서 계약과정에 관한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어업지도선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산불용사태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어업지도관리(3132-303)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은 2022년~2023년 2년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활동에 필요한 민간선박이 미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을 조기 종료함<br>○ 이로 인하여 당초 설정한 시범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 14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br>-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은 대형어업지도선 도입 전 접경수역 등 원거리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분쟁 방지효과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민간어선을 활용하려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민간선박의 확보 여부 확인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8</td><td rowspan="3">해양문화시설<br>연례적 이월에<br>대한 시정과<br>결산잉여금 관리<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출연금 실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연례적 이월 및 결산잉여금 처리 관련 규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br>-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사업의 실집행단계에서 출연금이 연례적 이월되고 있음<br>※ 연도별 이월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r>
<tr><td>해양박물관</td><td>1,906(18.4%)</td><td>1,659(15.3%)</td><td>2,233(21.0%)</td></tr>
<tr><td>해양과학관</td><td>1,835(18.6%)</td><td>2,517(23.5%)</td><td>1,954(17.7%)</td></tr>
</table>
-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처리와 관련하여 결산잉여금 포함 항목(집행잔액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없으므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이월문제를 시정할 것<br>○ 해양수산부는 결산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어촌뉴딜300 사업의 잔여 공정관리 철저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어촌뉴딜300(3301-304)<br>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어촌신활력증진(3301-303) | 시정,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의 집행률이 49.2%로 저조하고 이후 연쇄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함<br>○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여 다수의 사업지에서 당초 공모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br>○ 어촌뉴딜300(내역사업: 혁신어촌조성)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율 등 사업 추진 관련 설계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으로 교부되어 회계연도 불일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됨<br>- 혁신어촌조성은 매년 최저 1,229억 8,500만원, 최고 5,927억 9,8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고, 어촌신활력증진은 2023년 305억 4,4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br>-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중 하나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매년 예산서에 차기 이월을 전제로 차기이월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이는 구조적으로 집행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탁기관으로 교부되고 있음을 나타냄<br>○ 어촌뉴딜300(내역사업: 혁신어촌조성사업)은 2024년 6월 기준 사업대상지 300개소 중 136개소가 준공되었으나, 개별 사업지가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지를 점검하는 평가가 미흡함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각 사업지별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 사업기간 지연 및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지별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시정)<br>❍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관련 설계 미흡으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 및 교부되는 비효율 문제를 시정할 것(시정)<br>❍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의 내역사업인 혁신어촌조성 사업 관련 준공이 완료된 개별 사업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지연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042-325)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선박건조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여러 차례 무응찰로 유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바, 이처럼 건조사업 지연 시 건조비용이 인상되고 기존 아라온호의 부담이 가중되며 극지 연구일수와 연구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br>-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은 기존 아라온호 대비 강화된 쇄빙능력 및 향상된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려는 것임(총사업비: 2,765억원, 사업기간: 2022~2029)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기간 연장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산발전기금 - 해양폐기물 정화(1065-301)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완도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설계 지연 및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br>○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의 사업기간이 실제 소요기간(3년 이상)보다 과소 설정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조 사업의 기간을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하고 연차별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 | |
| 32 |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선청년임대(3145-303)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임대차 거래를 중개하고 임대비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 어선임대비 지원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적정가격에 대한 이견 및 양호한 상태의 어선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등 사업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과 2023년 임대신청 건수(99건) 대비 실제 임대계약 건수가 18건으로 저조함<br>-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어선을 매입 혹은 위탁받아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지원하여 신규 어선어업인 유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임<br>○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임대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업현황, 조업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2022년·2023년 어선임차인 18명 중 13명의 조업실적이 누락되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사업규모 확대, 임차료 지원 비율 상향,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여수신북항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여수신북항(5059-313) | 시정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전남 여수에 국제적 해상관광 거점육성 및 여수신항 대체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전기·계류시설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br>당초 2021년 완료를 목표로 2013년에 시작되었으나, 공사 중 해경부두 변형이 발생하여 해경부두 지반복구공사를 실시하였고, 시공사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준공시점이 2025년으로 연장되었음<br>- 해경부두 블록변위 발생원인에 대하여 국가(해수부)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반복구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경부두 지반복구 공사로 인해 본공사 및 후속공사가 순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계류시설, 전기 및 건축 등 후속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수산부가 목표로 하는 준공시점인 2025년말까지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34 | **신규펀드 조성 시 적정 수준의 기준수익률 설정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모태펀드 출자(3465-37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수산모태펀드 기준수익률(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이 0%인 경우, 운용사는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0%만 초과하여도 성과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고 펀드 수익성을 주된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펀드 조성 시 적정 수준의 기준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어업감독공무원 제복의 연내 미납품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3132-305)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해양수산부는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수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지급할 피복 제작·구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나, 2023년 말까지 계약물량의 33%만 납품되었고, 2024년 3월 업체의 계약포기로 잔여물량이 납품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계약 체결 시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납품지연 및 계약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6332-308)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e-Navigation 선박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예산이 통신망 구축 지연으로 과다하게 반복 이월(실집행률 '20년 9.6%, '21년 41%, '22년 52.9%, '23년 49.7%)되었고,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미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배됨<br>○ e-Navigation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박단말기의 적기 보급이 필요함<br>○ 일부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를 장착한 선박이 LTE-M 통신망 음영지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에서 선박단말기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송・수신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됨<br>-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사업'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센터 운영, e-Navigation 선박단말기 보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b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의무 발생사유로 회계연도 종료 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회계연도가 종료하였음에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해양수산연수원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해양수산연수원 지원(6132-30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2018년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 2019년 D등급, 2020년 C등급, 2021년과 2022년 모두 종합평가등급 D등급을 받아 평가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연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부진하였으므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할 것 | | |
| 38 | **사업기간 내 완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5067-301)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목포·마산·광양 및 평택·통영 지역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항만법 시행규칙」을 미리 정비하지 않는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2년) 내 완료하지 못함<br>-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항 내 의무설치되어 운영 중인 선박 폐유수용시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사업관리 철저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3140-30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양식배합사료에 대한 어가의 신뢰부족 등 사유로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해양수산부의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이 유예되고 있고, 보조사업자(수협)가 수요 부족 등으로 배합사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포기하는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br>- 2022년에는 지자체에 6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에는 지자체 단계에서 예산현액 50억 400만원 전액이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br>○ 해양수산부는 성장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배합사료 수요를 확보하는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사업수요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여부 결정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3140-35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신청이 없어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사업이 조기종료되었음<br>- 2023년 자치단체보조금 4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고, 당초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수요 부족으로 2023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동 시범사업이 중단됨<br>○ 같은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사업초기 부지 선정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년(2024년→2026년) 연장될 예정임<br>- 2023년은 예산현액 98억 600만원 중 15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7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집행률이 16.2%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재해대응에 대한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br>○ 해양수산부는 질병예방연구센터가 변경된 준공시점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040-310)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이해관계자간 이견 등으로 차질을 빚어 준공시기가 최초 계획 대비 8년 이상 지연(2019년→2026년 이후 준공예정)되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증가(약 1,729억원→2,284억원)하였음<br>-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 건립되어 노후도가 심한 부산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형태는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임(국비 70%)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42 |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내수면자원조성(3141-303)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 사업’은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이 대부분 이월됨<br>- 피해어업인들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잔존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령상 보상금 산정 및 집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br>* 2022년: 예산현액 115억 6,300만원 중 114억 4,600만원 이월<br>2023년: 예산현액 173억 7,200만원 중 59억 200만원 이월, 114억 5,900만원 불용<br>- 2024년 1월「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4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보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공고부터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한 어가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3140-355)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15억 4,500만원) 중 6억 3,4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41%로 저조함<br>- 자원순환인프라구축 사업은 전국 박신장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에서 유기물과 코팅사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지원장비 종류 확대, 홍보 강화 등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한 어가의 신청률을 높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44 |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선거래제도 운영(3145-302) | 시정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2018~2023년 간 전체 어선거래 건수(49,384건) 대비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건수 및 매물등록건수의 비율이 각각 연평균 0.18%, 3.65%로 연례적으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합법적 어선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등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조성 부지의 매각 업무 처리 부적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부산북항 재개발(5061-300) | 시정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상업·업무지구, D-3블록)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가 계약과 달리 ‘관광숙박시설’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부지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br>○ 부산시가 건축심의 협의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최소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내용 검토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민간사업자는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동 지구는 조성목표와 달리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질되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1단계)의 D-3 블록의 용도를 당초 제안한 대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특급호텔)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강구할 것<br>○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동 사업지 내 다른 구역(블록)에서 민간 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내용과 달리 시설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협의 업무 등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항(5059-302)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항 내 해경·어업지도선 접안을 위한 방파제(접안시설) 및 선착장 확장 등을 통해 영해관리 및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타당성재조사 추진 등으로 2022년 및 2023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 실적도 부진하였음<br>※ 예산액 기준 집행률: 2022년 3.4%, 2023년 0%(전액 미집행)<br>○ 타당성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감액했으나 축소한 준설물량 등에 대한 필요성과 추가재원 소요가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2022년부터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민간제안 사업의<br>향후 추진방향<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에서 사업방식 변경(BTO-a→BTO)에 따라 2023년에 민자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정부지원사업 예산 25억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2024년도 5월에 민자사업자 선정이 최종 유찰되어 민자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table>
<tr><th>구분</th><th>BTO-a<br>(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th><th>BTO<br>(Build-Transfer-Operation)</th></tr>
<tr><td>손익<br>부담</td><td>- 건설단계: 건설보조금 없음<br>- 운영단계<br>· 손실발생시: 최소사업운영비(70%) 보전<br>·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공유(정부 70%)</td><td>- 건설단계: 건설보조금 지급<br>- 운영단계: 민간 운영 책임(100%)</td></tr>
<tr><td>비고</td><td>- 적용: 도로, 하수처리장 등<br>(항만사례 없음)<br>- (수익률) 낮음/ (리스크) 낮음</td><td>- 적용: 도로, 항만 등<br>- (수익률) 높음/ (리스크) 높음</td></tr>
</table>
※ 2020년 민간제안서가 BTO-a 방식으로 제출, 2022년 KDI가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BTO 방식으로 추진 권고, 해수부가 BTO 방식으로 공고하면서 경제성 저하로 '24년 6월 현재 민자사업자 미선정<br>- 동 사업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총 2,244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880m와 도로 2,987m를 건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정부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제안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정부재정의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제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책임성있게 결정할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낙포부두 개축사업의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양(여천)항(5059-303) | 시정,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낙포부두 개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협의, 사업자 선정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21년·’22년 0%, ’23년 4.6%)하였고, 준공시점도 4년 연장(2026년 준공→2030년 준공)될 것으로 보임<br>○ 기존 낙포부두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서 그 후면에 인접하여 신규 낙포부두 신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기존 부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동 내역사업에서 제외된 기존 5번선석 구간의 노후도가 심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진행될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br>○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시정)<br>○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추진 시 기존부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존 5번 선석구간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양항(3단계)(5050-316)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안정적인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 및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부두(4선석)에 국내 기술 중심의 자동화항만(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 및 2023년에 기초자료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이 부진(’22년 29.3%, ’23년 0.6%)하였음<br>- 기초자료조사(’22.6~’23.7), 총사업비 협의(’23.7~11), 국토부 입찰서류 협의(’24.4~’24.6) 등 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소요로 사업이 지연<br>- 안벽크레인을 총사업비 협의 후 즉시 발주하였으나 장비제작 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유찰(’23.12~, 6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기반공사 및 항만장비 발주·계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묘도 항만재개발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기타항만재개발(5061-301)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묘도 항만재개발 기반시설 설치 사업(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추정 335억원→설계 685억원)로,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를 1년 6개월 이상 지연하였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br>-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 '22년 78억 1,400만원 중 실집행액 700만원, 36억 3,000만원 불용, '23년 10억 중 9억 9,500만원 타사업으로 전용(감) 남은 500만원 불용<br>- 폐수 종말처리 시설 사업: '22년 22억 2,600만원 전액 불용, '23년 22억 전액 이월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향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공사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하여 계획된 기간인 2026년말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51 |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사업관리 철저 방안 강구 등**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5050-323) | 시정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남방파제(2단계) 사업은 당초 2023년 2월 공사를 발주하고 하반기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으로 70억원이 편성되었으나,<br>기초조사('10년) 이후 물가변동과 설계기준 개정 적용 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2년 10월~2023년 7월)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2023년 8월~2024년 2월) 등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14개월 사업이 지연됨<br>○ 집행부진에 따라 49억 6,100만원이 연도 중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고 남은 예산(예산현액 20억 3,900만원)도 연내 전액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산발전기금 -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1065-306)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은 융자 수요자(소형유조선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설계로 융자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2022년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집행률이 최저 12.8%에서 최고 30.7% 수준)하고, 국회의 사업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 미흡으로 사업을 조기 폐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 신규사업 추진 시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한편, 소형유조선 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
| 53 |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업 방향성 재정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산발전기금 - 비축사업(3066-302) | 시정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7개 품목에 대해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한 수산물 수매·비축이 수산물의 생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br>○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매년 대규모 예산(2020~2024년 비축사업 계획현액 6,702억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비축사업이 수산물 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편성 및 수납 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br>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br>교통시설특별회계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br>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수납대상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과다계상되었고, 동일 회계 및 계정에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2번 편성된 오류 및 타 세입과목이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잘못 수납된 오류 등이 발생함<br>-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2023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없음<br>※ 2023년 일반회계 15억 1,1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억 9,000만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억 1,3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00만원 편성<br>-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계정에 동일 세입과목이 2번 편성되는 편성 오류 발생<br>- 2022년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수납된 금액(200만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할 금액이 잘못 수납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외국인 지원실적 저조 원인 검토 및 외국인 지원 목표 인원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3443-303)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지원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였으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임<br>- 실집행실적이 2020년과 2021년에는 80%대였으나 2022년 50%대로 하락하였고 2023년에도 60.6%에 불과함<br>- 2022년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 외국인에 대한 실제 지원실적이 지원 목표 인원 대비 저조(2022년 0.5%, 2023년 5.6%)하여 실집행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외국인 지원실적 저조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홍보 강화 등 성과 제고 노력을 하는 한편, 외국인 지원 목표 인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 | | |
| 56 |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전년도 세계잉여금(89-893)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br>- 2021년 15억 5,900만원, 2022년 49억 9,9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3년에는 863억 5,2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금액이 수납되었음. 2024년의 경우에도 2023년도 세계잉여금 약 960억원이 수납될 예정(2024년 5월 8일 기준 추산)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반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5000) | 주의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중 3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기준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도 11개 발생<br>-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중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및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예산액 기준 152억 3,500만원 규모임<br>-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은 송도 투기장 복토 사업과 여수웅천마리나·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 등 11개가 있는데, 예산액 기준 790억 7,400만원 규모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연내 사업 추진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비축사업 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산발전기금 - 비축사업(3066-30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비축사업은 전액 저장품매입비(430-02)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데, 수산물 비축 및 판매에 따른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도 해당 비목에서 함께 집행되고 있어 수수료 편성 및 집행 관련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됨<br>- 2023년 동 사업은 수산물의 비축을 위한 저장품매입비(430-02)로 1,750억원 전액이 편성되어 수산물 수매를 위하여 1,279억 8,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비목에서 수산물의 비축과 판매에 따른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도 집행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수수료로 2021년에는 34억 2,600만원, 2022년에는 40억 6,800만원, 2023년에는 6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음<br>-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결산 관련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러한 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정한 규모의 수수료가 편성 및 집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됨<br>※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지원 사업은 비축사업의 예산을 저장품매입비, 시설장비유지비, 공사비, 비축사업 관리비 등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하여 해양수산부 비축사업의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축사업 관리비가 별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축사업 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분리하는 등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9 |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4년 내 착공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마리나항만(5062-301) | 시정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여수웅천마리나 내역사업과 안산방아머리마리나 내역사업은 2016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실시계획 승인 지연, 타당성재조사 실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액이 전무함<br>-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은 2023년도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24억 5,000만원 중 41억 4,000만원이 이월되고, 재이월이 불가능한 83억 1,000만원 불용처리<br>-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52억 3,300만원 중 집행액은 없고 42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원 불용처리<br>-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 감안할 때 준공시점이 당초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가량 연장될 가능성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후 계약·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고수온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등 재해대책비(3443-302)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이 충분하지 못함<br>- 2021년 약 293억원, 2022년 약 10억원, 2023년 약 438억원 등 최근 3년간 약 741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보상 금액은 2021년 121억원, 2022년 4억 6,000만원, 2023년 140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어가당 최대 5,000만원 밖에 보상받지 못함<br>-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도 2021년 39억원, 2022년 12억원, 2023년 64억원밖에 보상받지 못함<br>○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양식장 피해와 관련하여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대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사전 대책만으로는 고수온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비를 상향하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 |
| 61 | **서해 5도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확대 및 집하장 추가 설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수산발전기금 - 해양폐기물 정화(1065-301)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해 5도 해양쓰레기의 물량이 증가하고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신속한 수거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을 확대하고 집하장을 추가설치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인천항 남항우회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반영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인천남항(5058-310) |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
| | | 지적사항 | ○ 인천항 남항우회도로는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02~2011) 이후 기본계획에 남항 내 도로 연결노선으로 약 20년간 반영되었으나 실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남항우회도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

## 5. 해양경찰청(16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세입결산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 후, 소송진행, 체납자 재력부족,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수납률이 4년 평균 19.5%에 불과하고,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음<br>- 국회의 지속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청의 변상금 수납 의지가 약하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변상금 발생원인 차단 및 변상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 |
| 2 | **신규 대형헬기 도입 사업 관리 강화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항공기도입(3101-301)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은 광역해역에서 장시간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이 4년('23년~'26년)인데 1년차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대형헬기가 적기에 현장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br>- 동 사업은 업체 무응찰로 계약이 유찰되어 2023년도 예산액 11억 4,9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br>- 유찰 사유는 2022년 2월 발생한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예산 편성 당시 제작사에 구두로 확인한 금액에 기초한 잘못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사업 계획 전에 세부적인 편성근거를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방제정 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방제정건조(4334-300)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은 신설서인 사천서에 배치할 방제정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7,800만원이 이월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br>-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2026년으로 1차 연도인 2023년도에 조선소 무응찰 등의 사유로 계약이 유찰되어 사업비 1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음<br>- 2024년. 4월에야 건조사와 계약이 체결(계약기간: ’24.4.1.~’27.2.15.)되어 전체 사업 공정 지연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방제정 건조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 | | |
| 4 | **지방관서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방관서인건비(7201-101)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지방관서인건비 사업의 예산은 8,009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는데, 2023년도 초과근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3개의 세부사업에서 이용 132억 2,600만원, 전용 83억 700만원, 내역변경 27억 1,200만원을 실시하였음<br>- 당초 계획에 없던 청년인턴사업의 인건비 마련을 위해 지방관서인건비에서 13억 9,300만원을 ‘치안지원인력사업(7203-314)’으로 전용하였다가,<br>※ ’23.1.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100명을 채용하였다가 20명이 퇴사하여 집행잔액 2억 5,200만원 발생함<br>- ‘치안지원인력사업(7203-314)’에서 지방관서 보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관서인건비(7201-101)’로 다시 전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관서인건비의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해경 홍보관 활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무활동(7203-301)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해양경찰청 청사 안에 홍보관을 만드는 데 2009년 3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023년 '해경의 날 70주년'을 맞아 부분적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데 4,464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개하는 등 해경 홍보관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해경의 역할과 활동상에 대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관 운영지침」 신설 등 홍보관의 활용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 추진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진압및전투장비관리(3104-303)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노후방독면 교체’ 사업은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노후 방독면 952개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방탄헬멧(1억 7,000만원) 및 진압장비(3,300만원) 구입 비용으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함<br>- 해양경찰청은 방독면 제조업체 간 소송문제(특허분쟁)로 조달청 구매계약이 반려되어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함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노후방독면교체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의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행사 추진 지양**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3001-300)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사업에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과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관련 경비가 집행되고 있음<br>- 위 2건의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사업 내 일반용역비를 2023년에 6,700만원 증액 조정하였고, 2022년에도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예산 세목조정 등을 통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과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의 예산 편성 여부 결정을 위해 그 효과성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공공요금및제세<br>연례적 이전용<br>최소화 등<br>국회시정요구<br>사항 준수방안<br>강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지방관서기본경비(7202-2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해양경찰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적정 규모 예산 미편성에 따라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부족 예산 충당 양상이 반복되고, 주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br>-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전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및제세를 증액한 예산의 합계는 101억 8,200만원으로, 연평균 20억 3,64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으로 변경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br>※ 지방관서기본경비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 현황
<table>
<tr><th>구 분</th><th>시정요구<br>유형</th><th>시정요구사항</th></tr>
<tr><td>2015<br>회계연도</td><td>주의</td><td>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전용 등의 예산 변경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과도할 경우 자칫 다른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내용에 큰 변화를 일으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td></tr>
<tr><td>2016<br>회계연도</td><td>주의</td><td>해양경찰청은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한편, 공공요금 실제 소요를 반영한 적정예산 편성을 통해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r><td>2018<br>회계연도</td><td>제도<br>개선</td><td>해양경찰청은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공공요금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는 공공요금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td></tr>
<tr><td>2022<br>회계연도</td><td>시정</td><td>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의 최근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의 최근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등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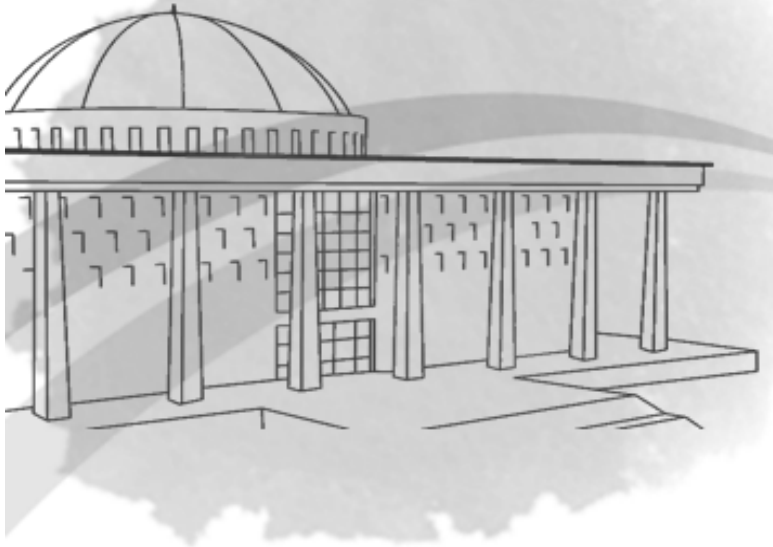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민간위탁사업비 과다편성 후 연례적 이용 등 행태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외사경찰활동지원(3102-302)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과다계상되어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br>- 2020년의 경우 7억원이 함정정비유지비 시설장비비 부족분 지원, 2022년과 2023년은 공공요금 및 공무원 보수 부족의 사유로 각각 1억 8,600만원과 7억 400만원이 지방관서 인건비 등으로 이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0 | R&D 사업 주관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조기술개발R&D(7239-611)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중 ‘연안고립자용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과제는 갯벌 등에서 운용이 가능한 구조보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7,200만원 중 집행액은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함<br>- 최초 주관연구기관 회사 대표(연구책임자)의 구속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한 데 이어, 새로 변경된 주관연구기관이 기업경영악화를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여 2023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일부 연구성과물 매몰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R&D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시 재무정보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산금 환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동 과제의 성과물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연구개발(R&D) 14개 사업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해양경찰청의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총괄하는 전담조직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br>- 해경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수 및 예산은 2014년 1건 9.8억에서 2023년 14건 518.1억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사업 수 14배, 예산액 52.9배 증가), 현재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예산배분·성과관리 등의 기능을 해양경찰청 본청 장비기획과 계단위(연구개발계)에서 2명(정원기준)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보강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12 |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7203-300)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해양경찰청 직원의 갑질,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증가하면서 소청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br>- 연간 징계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3년 113건으로 증가<br>- 해양경찰청의 징계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건수는 2019년 27건에서 2023년 52건으로 증가<br>-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19년 0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증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법집행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자문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무인기 사고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해양경찰청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드론보험, 유지보수, 조종인력 양성, 드론 도입 등 무인기 관련 사업에 6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최근 무인기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발생하고 있음.<br>-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헬기 사고는 총 6건 발생하였는데, 4건은 기체결함, 2건은 조종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무인기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지출 방지를 위해 향후 안정성이 검증된 기종 선정 및 조종사의 조종역량 강화 등 무인기 사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4 |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건물대여료(51-512),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기타잡수입(69-691) | 제도개선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건물대여료・기타관유물대여료・기타재산이자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잡수입 세입과목은 실제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간에 차이가 발생함<br>- 해당 세입과목들은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유사한 예산액이 편성됨<br>※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br>・건물대여료: ('21년) 22.3%, ('22년) 65.8%, ('23년) 15.4%<br>・기타관유물대여료: ('21년) 40.0%, ('22년) 20.0%, ('23년) 20.0%<br>・기타재산이자수입: ('21년) 280.8%, ('22년) 132.2%, ('23년) 423.0%<br>・기타경상이전수입: ('21년) 116.8%, ('22년) 52.1%, ('23년) 54.7%<br>・기타잡수입: ('21년) 57.6%, ('22년) 171.2%, ('23년) 220.7%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액 산정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내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향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7203-300) | 주의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조직청렴도에 대한 내부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청렴노력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br>- 2023년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이었으나, 청렴노력도가 전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함<br>- 청렴체감도의 경우 2022년 4등급에서 2023년 3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으나, 청렴체감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는 2022년 60.6점, 2023년 61.0점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청렴도 개선에 대하여 체감하는 수준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내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 | | |
| 16 |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정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무활동(7203-301) | 주의 | 해양경찰청 |
| | | 지적사항 | ○ 해양경찰청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br>-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8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5월말 기준으로도 5건이 발생하여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중 중징계는 50건, 경징계는 6건으로 중징계의 비중이 높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양경찰청은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 |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산업통상자원부(8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 원칙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ODA 사업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ODA 사업시 상대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함<br>-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br>- 그러나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액을 교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비목별 적정수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시 세목조정 · 전용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세출사업 공통 - 과다한 세목조정 · 전용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각종 운영비에서 약 55억원을 국외업무여비 및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 전용하였고, 각종 기본경비에서 약 4억원 가량을 다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 전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비목별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 ·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 | |
| 3 | **불용예상되는 집행잔액 전용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세출사업 공통 - 연도말 전용 집행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실국 기본경비에서 연말인 12월 28일(목)에 4억원의 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4억원을 집행함<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 · 불급한 일상적 ·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불요 · 불급한 소요에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예산 불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세출사업 총괄 - 에너지 분야 예산 불용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분야 예산 관리가 중요하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 ‘냉장고 문달기’,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등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
| 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보화경비 예산 적정 금액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사업 중 정보화경비는 예산액 대부분이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이 부진하였음<br>- 2022년부터 사업 지연으로 2023년 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이코리아 사업과 사업관리/재무회계시스템 사업 예산을 고려없이 반영했다가 불용하여 재정 운용 비효율 초래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집행률을 관리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해외공동 물류센터 지원방식·예산 산출방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내역사업인 해외공동물류센터 국고지원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적정 자부담률,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동 사업은 2023년 1,555개사를 지원하였으나, 지원기업 중 일부만 국고지원을 받았고, 그 외 기업은 비용을 전액 자부담하였으며, 단지 물류 관련 서비스만 지원받음<br>(2023년 국고 지원받은 기업은 834개사(53.6%), 자부담 기업은 721개사(46.4%))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향후 예산 편성시 적정 자부담률,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를 검토하고, 국고 지원 기업 기준으로 예산안을 산출할 것 | | |
| 7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목표과업 면밀한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1139-313)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전용을 통한 국외여비 증액 집행 및 낙찰차액·목표과업 일부 취소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전용을 통한 예외적인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목표과업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의 전용 및 세목조정 과다 등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1139-31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사업추진체계 잦은 변경 및 전용·세목조정 과다 주의 필요<br>-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국가주도(2019.11.~) → 민간주도(2021.7.~) → 국가주도(2022.7. ~2023.12.)"로 사업추진체계가 각각 1~2년만에 개편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전용 및 세목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의할 것 | | |
| 9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경비 적정 사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1139-313) | 시정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국외여비로의 전용·세목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기념품 제작비, 언론홍보비, 용역비 관련 집행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주요 사업추진시 당초 편성된 여비, 사업비, 용역비 등 예산 전용 및 세목 간 조정 최소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상반기 용역 조기 발주를 통한 연례적 이월집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3133-304)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2020년 이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과제 공고를 확대하고,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높임으로써 용역 조기 발주를 유도하여 이월 집행을 최소화할 것 | | |
| 11 |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3171-34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군산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및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실패로 무산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추진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나노융합산업<br>효과적인<br>지원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나노융합2020+(3541-3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47%만 분양되는 등 유망산업인 나노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노력이 미흡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나노융합산업이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국회 예산심의<br>취지를 반영한<br>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5447-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26억 9,200만원) 전액을 국내외유전개발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br>※ 2023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의 내역별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23년도</th><th>2024년도</th></tr>
<tr><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d colspan="2">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td><td>175,408</td><td>175,408</td><td>-</td><td>39,817</td></tr>
<tr><td>국내외유전개발</td><td>172,716</td><td>175,408</td><td>△2,692</td><td>38,163</td></tr>
<tr><td>해외광물자원개발</td><td>2,692</td><td>-</td><td>2,692</td><td>1,65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기타 기반시설 지원(2733-409)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인데, 실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 |
| 15 | **명확한 지출 기준 확립 및 철저한 기금 운용 ·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총괄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체 지출 중에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 비중이 크고(1조 5,303억원, 28.6%) 방만 집행 등을 지적받고 있으며(위법 · 부정집행 사례 5,359건, 5,824억원),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이 많아 발전원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등 발전원 개발이라는 당초 법정부담금 징수 취지에 어긋나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br>- 신재생에너지 보조 및 기술개발 등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원전 관련 4개 사업에는 981억원을 지원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수입인 법정부담금을 징수하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갖추어 지출하고 기금 운용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실증사업비를 기획평가관리비처럼 지출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5201-31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의 사업운영관리비로 편성된 실증사업비[기관운영출연금(350-01), 500만원]를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구축현장 점검 등 목적이 아닌 일반 기획평가관리비(360-06)와 같이 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정보화 용역 지출에 충당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운영관리비로 편성된 실증사업비를 기획평가관리비처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7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이월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융자과정에서 공사 및 자재 수급지연, 자금추천 및 대출심사 지연 등으로 융자액 인출이 지연되며 예산액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심태양광과 산업시설에서 공사 지연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하는 동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 준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면밀하게 수행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해상풍력산업지원(5202-318)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산업지원을 위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 | | |
| 19 | **발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반영한 후속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5203-341)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중단된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시스템 설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도서자가발전 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 중 투자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농어촌전기공급(5457-301)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결손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투자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운영비용에 해당한다기보다 별도의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할 성질의 사업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 포함된 투자비가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것 | | |
| 21 |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5632-302)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방안 마련’ 등 2개 연구용역 사업을 축소하면서, 대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기반 마련’ 사업예산을 확보함<br>-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한 것으로, 2023년에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연구용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추진 필요성과 효과적인 사업수행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무역안보 관리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차액 반납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1133-50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경영평가성과급의 정산 차액은 차년도 자체수입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舊전략물자관리원(現무역안보관리원)은 2019년 이후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 정산 차액을 2023년까지 보유하였음<br>- 2024년 4월에 그동안 누적된 임의보유금 1억 7,500만원을 전기이월금으로 계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평가 성과급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를 차년도 자체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임의보유하게 되면서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해외무역관 운영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은 사업비를 해외무역관 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일부 집행하고 있어, 해외무역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 예산 부족분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br>- 사업비 중 1억 3,600만원을 해외무역관의 인터넷 사용료로, 1억 7,000만원을 사무실 통신비 및 업무용 무선통신비로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조직망운영비, 사업비 등 내역사업별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산출하고, 사업비로 해외무역관 운영비 성격의 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24</td><td rowspan="2">반도체<br>인력양성 사업<br>교육과정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3161-319),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3161-323), 반도체아카데미구축(3161-329)</td><td rowspan="2">주의,<br>제도개선</td><td rowspan="2">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교육분야별로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실적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br>-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과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사업은 2023년 취업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br>※ 2023년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교육 수료 및 취업 현황<br>(단위: 명, %)
<table>
<tr><th>구분</th><th>졸업(예정)자<br>(A)</th><th>취업자<br>(B)</th><th>취업률<br>(B/A)</th></tr>
<tr><td>반도체인프라 활용현장인력양성</td><td>329</td><td>105</td><td>31.9</td></tr>
<tr><td>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td><td>196</td><td>110</td><td>56.1</td></tr>
<tr><td>반도체아카데미구축</td><td>338</td><td>104</td><td>30.8</td></tr>
<tr><td>합계</td><td>863</td><td>319</td><td>37.0</td></tr>
</table>
-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과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사업은 2023년 취업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br>※ 2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이 취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br>❍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은 실습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을 중도 변경하는 등 사업차질이 발생</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형 | 조치대상 기관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br>❍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과정 운영 시 산업별 수요 고려, 장·단기과정 균형 편성 등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br>❍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 이상의 중장기 교육 신설을 통해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인력양성 사업의 교육분야별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취업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분야에 대한 취업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실습교육 인프라 노후화 현황 점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3161-319)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대학별로 실습 장비의 노후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대학은 평균 연식이 10년 이상인 노후 장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br>○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022.7.)' 을 통해 2023년 이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인력양성 성과는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의 반도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별 반도체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대학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습 장비 현행화 및 교육수행 기관 선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수요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수료생에 대한 모니터링, 취업 실적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인력 양성 성과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3161-32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022.7.)’을 통해 2023년 이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인력양성 성과는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부족, 수요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수료생에 대한 모니터링, 취업 실적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을 개선할 것 | | |
| 27 | 구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실효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반도체아카데미구축(3161-329)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교육 주관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과의 협약 체결 이후 특정 반도체 장비 매매 기업과의 임차계약을 추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실습 교육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장비 교육 수요에 대응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br>○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022.7.)’을 통해 2023년 이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인력양성 성과는 미흡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장비 교육 수요에 대응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향후 반도체 등 산업 분야별 인력양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 방안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부족, 수요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수료생에 대한 모니터링, 취업 실적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구축 계획 장비 사양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및 예산 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지원(3179-379)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자율제조 자동화 공정라인 기반 구축 과정에서 장비 및 SW 구입 비용 상승, 국내 장비제작 업체의 경험부족 등으로 장비 사양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 동 사업을 통해 2종의 SW와 1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상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 계획에 맞추어 사양을 변경하는 데에 상당기간이 소요<br>- 2024년 5월에야 SW 및 장비 구입공고를 시행, 6월에 업체를 선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해양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에서 2024년 이후 구축될 장비 사양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운용기간 연장 신중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일부 자펀드가 최초 투자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청산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청산을 유보한 채 2024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금융위원회의 지역투자활성화펀드 사업에 동 펀드의 유보잔액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br>※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미드림타운 조성을 위해 출자한 펀드 자금 140억원(국비 130억원, 산업단지공단 10억원)에 대한 청산 유보(운용기간 연장) 추진 중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산기간이 도래한 펀드 내 정부 출자금에 대한 펀드운용기간 연장을 신중히 추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산업단지<br>환경개선펀드<br>출자예산의<br>SPC 납입실적<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로 출자된 금액 중 실제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SPC법인에 납입된 실적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br>※ 2020~2023년 출자금의 실제 SPC법인 납입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산업단지공단<br>출자액</th><th colspan="6">출자액의 연내 결성 및 이후 SPC 법인 납입금 규모<br>(SPC 법인 자본금 납입 시점 기준)</th></tr>
<tr><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br>(5월말)</th><th>계</th></tr>
<tr><td>2021</td><td>147,510</td><td></td><td>-</td><td>59,000</td><td>35,000</td><td>-</td><td>94,000</td></tr>
<tr><td>2022</td><td>125,866</td><td></td><td></td><td>45,500</td><td>29,100</td><td>-</td><td>74,600</td></tr>
<tr><td>2023</td><td>93,677</td><td></td><td></td><td></td><td>15,000</td><td>20,000</td><td>35,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출자된 자금의 실제 SPC 투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제 결성 및 집행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출자금 예산을 조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산업단지<br>환경개선펀드<br>관리위탁<br>수수료의<br>예산안 심의<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출자금 예산 편성 이후「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공단과 매년 협의하여 적정 위탁수수료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방식 하에서는 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br>※「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관리지침」<br>제7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펀드조성비와 위탁수수료로 구성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2】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br>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연도 전체 운영펀드 예산의 0.25% 이내에서 펀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사업비가 없거나 조성된 펀드의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관리 위탁수수료를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수수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다양한 투자처 발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심으로 투자대상이 선정되고 있음<br>- 2023년까지 동 펀드를 통해 구축·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19개 6,996호이며, 2024년 4월 기준 2,382호(34.0%)가 미분양 또는 분양 후 미입주 상태<br>○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향후 미분양 등에 따라 펀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펀드 투자처를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장비도입 과제의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집행부진 최소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3551-30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말 기준 최종 교부된 출연금의 연구비관리시스템상 최종 집행률(등록일 2023.12.)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최종집행률이 20% 미만인 과제가 4건으로 확인되며, 이들 과제는 모두 장비도입형 R&D의 성격을 띠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도입 과제의 경우 입찰 및 조달, 실제 장비도입에 이르기까지의 집행절차가 소요되므로,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중고장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3551-30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와이드밴드갭소재기반 차량용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구축' 사업은 반도체 장비 가격 상승으로 중고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중고장비의 내구연한 및 사후관리 등으로 장비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과다한 운영비용 발생으로 장비 활용이 어려울 우려가 있음<br>- 주관기관(포항공대)은 2022~2024년에 걸쳐 4종의 반도체 장비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1종(KrF 스캐너)은 가격 상승에 따라 중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br>- 중고 장비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조달이 불가하여 주관기관 자체 조달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장비 구입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중고제품의 경우 장비 상태에 따라 유지보수 등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제품 가격 상승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장비를 중고제품으로 무리하게 구입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고제품 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이차보전사업 운영비의 별도 예산 편성 및 정산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3551-326)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년 교부된 이차보전금 24억 200만원 중 8억 5,300만원만을 2023년 신규 이차보전 신청 건에 대해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사업비 15억 4,900만원은 미집행된 채로 2024년 이차보전지원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보유하고 있음<br>- 이차보전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익(2023년 기준 6,800만원)을 2024년 6월 말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었음<b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교부받은 24억 9,000만원 중 8,800만원을 해당 이차보전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로 계상하고 전액 집행함<br>-「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차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운영비로 이차보전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무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금 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조속히 국고로 반납조치하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도 통상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정산 규정을 마련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금으로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별도 사업비(일반용역비 등)를 편성하여 사업관리비용을 지원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형 | 조치대상 기관 |
|---|---|---|---|---|---|
| 36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사업 대안마련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R&D0(3551-35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동 사업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br>- 국토교통부의 실증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지자체에서 2022~2023년 부담금 85억원을 미납함에 따라 2023년 11월 중단 결정이 내려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실증 대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산업기술혁신 사업 수입금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부적정 및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로봇산업진흥원(3672-312)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정보화사업에 충당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음<br>-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2019.11.12. 시행)은 R&D 과제 수행기관이 기반구축 결과물인 장비 또는 시설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직접비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br>- 2017년 이후 5년간 누적 수익금 23억 4,500만원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지출하지 않았고, 이후 2023년에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3억 9,500만원을 집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 과제 추진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정보화사업 추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수익금이 적기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지역혁신<br>클러스터<br>육성(R&D)<br>사업의<br>일부 R&D 과제<br>집행 부진 문제<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3362-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2023년도 예산 대비 과제비 최종집행률은 70.1%로 전년 대비 14.5%p 감소하였음<br>-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R&D 지출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사업비가 2023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바 있음<br>※ 2019~2023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최종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예 산(A)</td><td>59,203</td><td>75,088</td><td>75,400</td><td>67,058</td><td>72,377</td></tr>
<tr><td>최종집행액(B)</td><td>45,955</td><td>58,969</td><td>52,634</td><td>56,749</td><td>50,763</td></tr>
<tr><td>최종집행률(B/A)</td><td>77.6</td><td>78.5</td><td>69.8</td><td>84.6</td><td>70.1</td></tr>
</table>
○ 일부 R&D 과제에서 차년도 R&D 예산 감액에 따른 인력 확보 차질, 매칭지방비 입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최종 집행이 부진하였음<br>- 2023년 9월 신규 협약 과제로 추진된 A 과제의 경우, 2차년도인 2024년도 정부 R&D 예산 감액에 따라 신규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R&D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년도 R&D 예산 감액이나 지방비 입금 지연 등 재정, 행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R&D 관리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산출 기준 명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 3171-367 / 소특 3232-304 / 지특 3362-316)<br>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 3171-368 / 소특 3232-305)<b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 5804-316 / 전력기금 5806-304)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R&D 관리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는 2022년 기획평가관리비 통합 운영 이후, R&D 사업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편성 및 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전문기관의 관리대상 사업비를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획평가관리비 산출 및 집행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비R&D 사업 내 간접비 계상 관행 개선 및 이자수익 미반납 재발 주의** | 관련사업명 |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비R&D 사업 | 주의,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비R&D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출연금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만 포함하도록 하는 「2023 예산안 편성지침」을 위반하여, 비R&D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적인 기관운영경비 소요를 간접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음<b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총 37개 사업에서 출연금 또는 수탁사업비 수령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을 2024년 4월까지 관리 소홀로 반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출연금을 통해 기관운영출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br>○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향후 R&D 사업 및 일반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이자수익 정산 및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법정부담금 수입 감소를 고려한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법정부담금(59-59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에특회계는 2022년 이후 세출 예산 대비 법정부담금 등 자체 세입 예산이 부족하여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을 통해 부족한 세입 예산을 보전하고 있음<br>- 2023년 법정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5,850억원 감소하였으나 순세출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04억원 증가하여 외부 전입재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br>※ 정부가 2024년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를 경우 향후 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 회계 운영방안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세계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예측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집행 가능성 고려한 이차보전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 | 시정,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내역사업 중 이차보전사업 예산(15억원)이 2년 연속 전액 불용되었음<br>- 동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부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조달 지원 시 융자와 이차보전(신설) 방식 중 하나를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집행 결과 전액 융자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졌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수행 시 지원조건이 좋은 융자 방식에 수요가 집중되어 이차보전 방식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을 감안하여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br>○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 상황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지차보전기관 전기이월금 적정 계상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5143-30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발생한 처분전 결산잉여금을 차기이월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적립금에 충당하고 있음<br>※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계상 시 전기이월금 추계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기관 내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보유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44 | 연말 사업계획 변경 지양 및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수소유통기반구축(5203-302)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2023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소유통 사업자에 대한 임대 지원에서 구매비 보조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였으나, 구매비 보조 공고가 연말에 진행되어 2024년 5월까지 구매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수소 공급·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차별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수소유통기반구축(5203-302)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환경부 수소충전소설치보조 사업에서 신규 수소충전소 사업자에 대해 수소튜브트레일러 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어 동 사업과 사업내용 중복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 |
| 46 | **블루수소 해외생산 사업 등 청정수소 공급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5203-318) | 주의,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LNG 가격 상승에 따른 블루수소 해외생산 사업 지연으로 당초 계획한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br>- 블루수소는 LNG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LNG 가격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는데,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LNG 직접 판매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지연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가격 변동 등 국제에너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블루수소 해외생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br>○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에 따른 청정수소 공급 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획을 정비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수지차보전기관 전기이월금 적정 계상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광해광업공단출연(5440-302)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 계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처분 전 결산잉여금 전액을 차차년도의 전전기이월금으로 수납해 왔음<br>※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계상 시 전기이월금 추계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기관 내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보유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 |
| 48 | **수지차보전기관 지정해제 시 결산잉여금 처리를 위한 규정과 원칙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광해광업공단출연(5440-302)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발생한 2023년 결산잉여금 391억 6,000만원의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br>※ 수지차보전기관은 자체수입의 예산 대비 초과 수납이 발생할 시 이를 이월결산잉여금에 반영하여 차년도 수지차보전지원액 산출과정에서 차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해제 시 직전년도 결산잉여금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정과 원칙을 확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한국광해광업 공단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광해광업공단출연(5440-302)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설립 이후 자체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및 주요 자체수입 재원인 강원랜드 배당수익금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결산잉여금이 2023년 감소한 바 있음<br>※ (2021년) 1,305억 8,000만원 → (2023년) 1,156억 1,600만원<br>○ 동 기관은 2024년부터 수지차 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며, 사업외 수입 중 강원랜드 배당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큼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자체수입 증대 등 안정적인 기관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의 해외유전지분 매입 예산 불용 문제**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유전개발사업출자(5444-30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출자계획 미흡으로 인하여 유망생산 자산투자를 위해 편성된 출자금 145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매도사의 매도 의사철회나 지분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제안 거절 등으로 인하여 3개 사업에 대한 지분 매입이 불발되어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br>○ 해외유전 지분 매입 추진 중 1개 사업은 국내 A사가 보유한 중도지역 유전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사실이 있음<br>- 민간기업 지분 매입보다는 차별화된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해외 유전지분 매입 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민간 기업과 차별화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출자금 교부 시 출자금 규모 신중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5440-304)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축일원화를 위해 실제 필요한 출자금(52억 6,100만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상 편성된 출자금(89억 6,6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음<br>- 당초 예산 편성 시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인 코발트의 톤당 단가를 2022년 하반기 시세 수준($50,000)으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코발트 시세 하락으로 코발트의 톤당 단가가 $30,00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출자금 교부 시 출자 필요액을 교부 시점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내 이관대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면밀한 전력기금 수입 · 지출 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법정부담금(59-59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수입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였음<br>※ 여유자금 규모: 2023년 당초 6,818억원 → 2023년 2월 운용계획 1조 2,157억원<br>○ 면밀한 지출 계획 수립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추진한 신규사업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함<br>- 자체변경을 통해 냉장고문달기 지원 사업(2023년 계획현액 100억원)과 노후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2023년 계획현액 300억원)을 신규 추진하였으나, 각각 10억 100만원(10.1%), 111억 1,800만원(37.1%)만이 실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여유자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3 | **세수결손 부담 분담 등 여유자금 운용방안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법정부담금(59-59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 내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등 정부 내부지출을 증가시키기보다 직접 운용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였음<br>※ 여유자금 규모: 2023년 당초 6,818억원 → 2023년 2월 운용계획 1조 2,157억원<br>- 2023년 적자 재정으로 재정운용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으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유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정부 내부지출을 통해 세수결손 대응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의 여유자금 운용 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계획액 초과 집행에 따른 부담 전기소비자에 전가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5145-302)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캐시백’ 내역사업에서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초과집행에 따른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였음<br>-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2023년도 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캐시백 지원 사업비 25억 6,000만원을 초과하여 총 104억원을 2023년 한 해 동안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으로 일반 가구들에게 지급하였음<br>○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약 78억원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요금 중 일부인 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등 산정 방식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br>- 2024년 6월 말 기준 약관 개정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 요금 부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전력공사가 자체재원으로 임시 부담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초과집행에 따른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이후 대규모 불용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5145-302) | 시정,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하지 않은 냉장고문달기(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내역사업)와 노후냉난방기 지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 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함<br>- 45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실집행률이 각각 5.3%, 32.4%에 불과<br>○ 에너지 절약 과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하는 과제에 해당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추진할 시급성이 부족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불용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정책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시정)<br>○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사업내용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할 것(시정)<br>○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적절한 비용분담 방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제도개선)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변경 요건 준수 및 점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전력산업기반기금 - 농어촌전기공급(5457-301), 전력산업홍보(740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3개 사업에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연중 계획현액을 증액 변경하였음<br>※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자체변경 증액 주요 사업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당초</th><th>계획현액</th><th>증액</th></tr>
<tr><td>전력효율향상(5145-302)</td><td>51,802</td><td>96,802</td><td>45,000</td></tr>
<tr><td>농어촌전기공급(5457-301)</td><td>132,638</td><td>175,726</td><td>43,088</td></tr>
<tr><td>전력산업홍보(7401-301)</td><td>6,907</td><td>9,407</td><td>2,500</td></tr>
</table>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발전시설 운전을 위한 유류비 부족에 따라 449억 6,400만원 증액 및 농어촌전기공급에서 신규 전기시설 공사 중단에 따라 20억 7,600만원 감액 등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br>- 추가로 자체변경을 통해 시급성이 부족한 전기절약 홍보 사업 및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사업내용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시급성이 부족한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실집행 이월 최소화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5202-303)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건물지원 내역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실집행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br>- 특히, 건물지원의 실집행 이월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여 후순위 지원대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지연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성 있는 건물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실집행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보조금 비중 등을 점검하여 보조금의 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고, 건물 태양광 설치 비용 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금융 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 녹색혁신금융(융자) (5202-306)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산 및 시설자금’ 사업 중 이차보전금(계획액 31억 3,000만원) 전액이 2년 연속 불용되었음<br>○ ‘녹색혁신금융(출연)’ 사업에 편성된 2023년도 이차보전금(계획액 1억 8,800만원) 전액이 2년 연속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사업 설계 시 금융기관 및 신청자의 사전 수요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보조금 교부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전력산업기반기금－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5203-34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시작 연도인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br>※ 2021~2023년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예산현액</td><td>6,000</td><td>6,000</td><td>3,000</td></tr>
<tr><td>교부액(A)</td><td>6,000</td><td>6,000</td><td>3,000</td></tr>
<tr><td>실집행액(B)</td><td>3,707</td><td>2,436</td><td>417</td></tr>
<tr><td>실집행률(B/A)</td><td>61.8</td><td>40.6</td><td>13.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보조금 교부 전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부적절한 보조금 재이월에 대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후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전력산업기반기금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5451-301),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545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2년 9월 국무조정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보조금 중 지자체 교부 후 2년이 초과된 이월금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후에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재이월금에 대하여 회수를 유예하는 등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사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br>- 2021년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2022년 말까지 집행되지 못하여 회수가 필요한 금액 176억 5,700만원 중 100억 700만원을 회수 유예조치함<br>※「국가재정법」<br>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br>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의 재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과 달리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였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보조금의 3년 초과 이월을 승인하는 관행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전력산업기반기금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5451-301),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545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2건(서산시, 울진군)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장기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2021년에 일괄 지자체에 교부한 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3년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것을 승인함<br>※ 2021년 장기계획 수립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이월 현황<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승인 년도</th><th>시행자</th><th>기간</th><th>사업내용</th><th>교부액 (2021년 교부)</th><th>실집행액 (24.5.기준)</th><th>이월액 (24.5.기준)</th></tr>
<tr><td rowspan="2">2021</td><td>울진군</td><td>5년</td><td>치유농업 시설단지 조성</td><td>2,290</td><td>12</td><td>2,278</td></tr>
<tr><td>서산시</td><td>3년</td><td>라키비움 서산 건립</td><td>1,800</td><td>23</td><td>1,77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내 보조금의 3년 초과 이월을 승인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반납 대상인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국고반납 조치 이행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농어촌전기공급(5457-301) | 시정,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연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지자체의 운영결손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12월 22일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449억 6,400만원 자체변경(증)하였음<br>-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전기 미공급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주체(한국전력공사 또는 지자체)별 운영결손비를 지원<br>○ 한국전력공사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취지와 달리, 기존 도서지역 관리용역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수행기간을 2024년 1월로 연장하여 용역비를 초과지출하는 방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44억 1,800만원)을 집행<br>- 보조금의 이월 없이 차년도인 2024년 1월의 용역비를 2023년 예산으로 선지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결손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보조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금 정산 및 국고반납 조치를 엄격히 이행할 것(시정)<br>○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3 | **특정 기업에 대한 R&D 의존도 축소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 관련사업명 | 총괄- 원자력 분야 14개 R&D 사업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원자력 분야 14개 R&D 사업은 특정 기업의 연구비 부정 집행 및 연구장비 해외 무단 반출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특별조사로 연구비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br>○ 일부 R&D 사업에서는 해외제조 부품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업체를 발굴하여 부품을 조달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술개발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실집행이 지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원자력 분야 R&D 의존도를 낮추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공급망 문제에 따른 부품 조달 가능성과 국내 제작 업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4 | **원자력 분야 R&D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사업 중단·지연 사전 방지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5703-303)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023년에 18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이 중 2개 과제(6억 4,200만원)가 중단되었음<br>- 2개 과제는 A사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A사가 타 과제의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후 대체 기관을 찾지 못하여 중단 결정이 내려졌음<br>※ A사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다른 과제에서 인건비 및 수당 과다 집행,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의 해외 무단반출로 장비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비 유용이 적발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분야 R&D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5 | **실계통 연계 실증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재생에너지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기술개발(R&D)(5704-32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실증 부지 인허가 문제로 인해 실증지를 변경하여 실제 전력계통이 아닌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R&D 성과를 검증함에 따라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br>- 해당 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당초 계획했던 실증 장소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었던 연료전지 10MW급 등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어서.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실계통에 연계하는 방식의 실증이 제약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성과를 실계통이 아닌 시험평가 부지에서 검증함에 따라 당초 목표한 기술개발의 완성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핵심전략품목의 과제기관 선정관리 강화 및 과제진도 · 성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소재부품기술개발(R&D)(3231-302) | 시정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과 연구결과 불량 등으로 인한 과제 중단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였고, 전략품목으로 비공개 지원한 과제 중에서도 중단된 과제가 발생하여 핵심전략품목 기술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br>- 2020~2023년 동 사업 지원과제 총 1,360개 중 중단과제는 12개, 중단 과제에 지원된 정부 출연금은 총 351억원 규모로 나타남<br>※ 연구비 부정사용 및 연구불량으로 인한 중단과제는 5개, 지원된 출연금은 총 222억원 규모<br>- 이 중 5개 과제(2023년 2개, 2022년 3개 과제)는 전략품목을 지원한 과제로, 對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가적 전략목표 등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과제 수행결과 미흡,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중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에서도 중단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중단에 따른 연구비 매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기관 선정 및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과제 진도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제조장비 국산화와 함께 핵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3231-304)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조장비실증’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3년 11개 지원 과제 중 제조장비의 국산화율이 50% 미만 과제가 포함되는 등 일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음<br>- 2023년 사업의 과제별 실증대상 생산장비·기계를 구성하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은 80.6%로 나타났으나, 2개 과제의 경우 국산화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남<br>○ 또한, 제조장비실증사업 중 ‘PCD마이크로드릴 제조용 다축레이저 가공 장비 실증과제’는 23년에 해외로부터 핵심부품 입고가 지연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장비실증 사업 추진 시, 제조장비의 국산화 과정에서 핵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 등 국산화율 개선 효과가 함께 나타나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8</td><td rowspan="3">기타경상<br>이전수입<br>미회수잔액에<br>대한<br>징수결정 및<br>수납관리 철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무역보험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수출신용보증 상품 구상채권의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회수율이 1.4%로 매년 2%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음<br>※ 2019~2023년 구상채권 회수율 현황<br>(단위: %)
<table>
<tr><th>구 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회수율</td><td>1.0</td><td>1.0</td><td>1.4</td><td>1.3</td><td>1.4</td></tr>
</table>
❍ 수출신용보증이 아닌 다른 상품(수출보증보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미회수잔액(채권잔액)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있음<br>- 수출보증보험으로 인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된 국내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말채권잔액이 1조 4,409억원에 이르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br>❍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 등 수출신용보증 외 상품의 미회수잔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적극적인 수납관리를 실시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9 | **정보화사업 등 예산집행시 목적외 사용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무역보험기금 -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1531-408)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빅데이터기반 디지털무역금융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용역비(일반연구비)의 일부를 당초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하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타 세부사업의 일반 수용비를 데이터서비스 구독료로 집행하는 등 사업간 경계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내역사업인 지역거점수출중기지원 사업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세목조정 등 없이 사용하여 감정평가 용역 발주 및 실내 건축공사를 수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및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예산 집행 전반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0</td><td rowspan="3">갱도굴진<br>사업자금 결산<br>공시 및 국회<br>보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갱도굴진사업자금</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석탄광물의 갱도굴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부의 별도 자금인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사용하여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만 관리·감독되고 있고, 국가결산상 자산에서도 누락되고 있음<br>※ 2023년 기준 갱도굴진사업자금의 자산 규모는 145억 1,300만원<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1980년</th><th>2000년</th><th>2020년</th><th>2023년</th></tr>
<tr><td>자산</td><td>2,268</td><td>6,142</td><td>14,503</td><td>14,513</td></tr>
<tr><td>부채</td><td>42</td><td>38</td><td>70</td><td>1</td></tr>
<tr><td>자본</td><td>2,226</td><td>6,104</td><td>14,433</td><td>14,512</td></tr>
</table>
○ 동 자금은 1960년 6월 29일 “한미정부간 사업협정(협정 490-0062호)”에 의하여 상공부 광무국에 KOMEP(Korea Office of Mineral Exploration Project)이 설치됨에 따라, 미국이 대한민국의 탐광갱도굴진 지원을 위해 미화 85만 8,000달러를 출연(무상원조)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바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갱도굴진사업자금을 통한 융자사업 수행 및 자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자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형 | 조치대상 기관 |
|---|---|---|---|---|---|
| 71 | **산업단지 내 유휴 국유부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토지매각대(72-721)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당초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매각대 161억 3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향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에 이 같은 세입을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음<br>- 토지매각대는 2023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충북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매각에 따라 국가 지분 161억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국유 유휴부지의 매각·임대에 관한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에 토지매각대 등을 반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2 |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적정 반영 및 공개 필요** | 관련사업명 | 전기요금 인상요인 전망 관련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018년 대비 최대 39.6%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br>○ 그러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전망 결과를 재검토하고,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고 공식 발표함<br>- 이어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 하락을 가정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과거(13.9%)보다 낮은 10.9%라고 전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할 것 | | |
| 73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 점검 필요** | 관련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관련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11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br>-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등) 임직원 251명이 ‘겸직허가 의무’, ‘가족사업 신고’ 등을 위반하여 태양광 발전소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br>○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실제 처벌 여부, 발전소 처분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4 | **전략기획단 법인카드 사용 및 대외업무비 집행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R&D관리기관지원(R&D)(3171-305) | 시정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대외업무비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br>※「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조<br>② 제1항에 따른 설립 · 운영 ·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 · 지원 받아 집행한다.<br>○ 전략기획단 단장, MD는 대외업무를 목적으로 기획평가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한도 및 사용처에 대한 관리 및 증빙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업무성과도 미비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 제고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5 | **낙찰차액 활용 장비비 예산 보충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3232-313) | 주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비용이 상승한 장비 구축비 마련을 위하여 다른 장비의 조달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br>-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에서 구축하는 ①자동용접장비와 ②코너부자동용접장비의 당초 구입 예산을 1.6억원, 1.6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실증장비의 설계 변경과 센서 모델 변경·단가 상승 등으로 장비구축 예산이 각각 1.88억원, 1.91억원 소요됨을 확인<br>- 이에 다른 장비의 조달청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장비 구매가 완료되기를 기다린 후 2023. 12월 협약변경을 시행한 후 2024. 3월에야 두 장비의 조달공고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구축 사업을 포함한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활용한 예산 보충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6</td><td rowspan="3">무역보험기금의<br>적정 계약 체결<br>한도 설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무역보험기금 총괄 - 계약 체결 한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본 기금은 2023년에 계약 체결 한도 260조원 대비 243조 5,141억원의 무역보험을 인수하여 계약 체결 한도를 93.7% 소진하였으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에서는 보험인수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함<br>※ 보험종목별 2023년도 인수액<br>(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2022년(A)</th><th>2023년(B)</th><th>B-A</th></tr>
<tr><td>단기수출보험</td><td>2,169,409</td><td>2,081,067</td><td>△88,342</td></tr>
<tr><td>수출신용보증</td><td>45,133</td><td>44,470</td><td>△66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기금 운용시 수출신용보증 등 계약체결이 감소한 보험종목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설정 등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7</td><td rowspan="3">대한석탄공사의<br>폐광 후 부채<br>처리 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기관 - 대한석탄공사</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에 석탄사업 종료 예정으로 동 사업 종료 후 약 2.5조원의 부채를 해결해야 함<br>-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 부채의 대부분(98.2%)은 금융부채로, 금융부채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2조 4,580억원으로 총자산 8,592억원의 3배에 근접(286.1%)하고 있음<br>- 대한석탄공사의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2023년 말 기준 2,469억원으로 금융부채 규모에 미치지 못함<br>※ 대한석탄공사 차입금의존도 및 금융부채 비중<br>(단위: 억원, %, %p)
<table>
<tr><th>구분</th><th>2019(a)</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b)</th><th>증감<br>(b-a)</th></tr>
<tr><td>총자산(A)</td><td>8,704</td><td>9,116</td><td>9,705</td><td>9,659</td><td>8,592</td><td>△112</td></tr>
<tr><td>총부채(B)</td><td>19,813</td><td>21,010</td><td>22,628</td><td>23,917</td><td>25,020</td><td>5,207</td></tr>
<tr><td>금융부채<br>(C)</td><td>19,225</td><td>20,495</td><td>22,047</td><td>23,633</td><td>24,580</td><td>5,355</td></tr>
<tr><td>차입금의<br>존도(C/A)</td><td>220.9</td><td>224.8</td><td>227.2</td><td>244.7</td><td>286.1</td><td>65.2</td></tr>
<tr><td>금융부채<br>비중(C/B)</td><td>97.0</td><td>97.5</td><td>97.4</td><td>98.8</td><td>98.2</td><td>1.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대한석탄공사의 2025년 폐광 후 부채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8 | **댐 소유권에 따른 주민지원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5451-301)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댐의 건설 목적과 관리 주체에 따라 환경부 소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br>○ 2023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댐으로 분류되어 있는 화천댐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총 11억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환경부 소관 댐으로 분류되었더라면 총 22억 1,0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br>- 댐의 소유권과 관련된 결정이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보다 열악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9 |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근무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舊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3333-310)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2018년~2022년까지 시행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원기업의 퇴사인원을 月 1만명 가량 줄인 성과있는 사업이었음에도 2023년 이후 중단된 바 있음<br>-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月 5만원 지원<br>- 사업성과(시행 전(2017.7~2018.6)과 시행 후(2018.7~2021.6) 비교)<br>* 퇴사율 대폭감소(4.54% → 1.00%)<br>* 지원기업 월평균 1만 2,835명 퇴사 → 2,829명 퇴사 (月 1만명 퇴사 ↓)<br>* 미지원기업 월평균 1,063명 퇴사 → 1,076명 퇴사 (月 13명 퇴사 ↑)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들의 근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 | |
| 80 | **공공기관 현실에 맞는 냉난방온도규정 조정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건물 실내온도 규정 관련 |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 규정이 1980년 28도로 설정된 이후 44년간 유지되고 있어,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및 직원들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실내온도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 특허청(12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1036-301) | 주의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출원및등록제도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국제출원 관련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비목의 경비 집행을 제한하는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향후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과 달리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비목의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IP-R&D 전략지원(R&D)(1233-303) | 제도개선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IP-R&D 확산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리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대상 교육에 대한 참여율(2023년 4.5%)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진단업무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동 진단기관 대상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3 |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 | 제도개선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매입 IP 활용 성과가 2023년도 목표(11%) 대비 저조(2.56%)하였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매입한 산업재산권 186개 중 46개(24.7%)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매입한 산업재산권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과장 및 5급승진 역량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제도개선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특허청은 과장 및 5급승진을 위한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를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과제나 평가위원 선정 등을 전적으로 위탁업체에만 의존하여 과제가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승진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보조금<br>집행계획에<br>부합하는 예산<br>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지식재산 창출지원(1232-300), IP활용 창업·성장지원(1232-3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특허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예산 산출근거 및 세부 집행계획과 달리 보조금(117억 1,800만원) 중 일부(12억 9,500만원)를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관리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br>❍ IP활용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IP나래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중 6억 9,200만원을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관리비로 직접 배정하였음<br>※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상 내역사업별 국비 교부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총사업비</th><th>국비<br>(A)</th><th>지방비<br>(B)</th><th>차액<br>(A-B)</th></tr>
<tr><td>IP기반 해외진출 지원</td><td>22,141</td><td>11,718</td><td>10,423</td><td>1,295</td></tr>
<tr><td>IP 나래 프로그램</td><td>17,820</td><td>9,256</td><td>8,564</td><td>692</td></tr>
<tr><td>합 계</td><td>39,961</td><td>20,974</td><td>18,987</td><td>1,98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특허청은 국회가 예산 심의한 보조금의 편성 근거 및 집행계획과 달리 매칭 보조금의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비로 집행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기관 고유사업과 보조사업간 구분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지식재산 창출지원(1232-300) | 주의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한국발명진흥회는 내역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비를 지출목적이 다른 지식재산 경영인증 관련 방문심사수당으로 지급(8,059만원)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보조사업비를 기관 고유사업과 보조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고, 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7 | **회수전문기관 성과보수 지급체계 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 | 제도개선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발명진흥회는 회수전문기관에게 개별 담보IP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최대 40%까지를 성과보수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기준수익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담보IP의 수익화 실적으로만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일부 개별 IP의 수익화 실적에만 근거하여 회수전문기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낙찰차액을 사용한 신규 용역 추진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431-500) | 주의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특허청은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의 낙찰차액(1억 5,900만원) 중 일부(9,700만원)를 사용하여 2023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용역비 규모는 전년(900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에 필요한 적정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고, 낙찰차액으로 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진단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9 |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축사업의 계약 체결 지연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심사지원(1031-300) | 주의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축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의 미흡으로 6월 말에 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사업 업무를 미리 착수·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br>- 2023년 6월 27일이 되어서야 용역사업자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PC 분류체계 적용 계획이 당초 8월에서 2024년 1월로 연기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직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계약 체결 전 사업이 진행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중부권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 건립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발명교육 활성화(1235-302) | 주의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예산(6억원) 중 0.3%(200만원)만 실집행되었음<br>○ 이는 예정부지(충주시 탄금공원) 내 쓰레기 매립시설이 발견됨에 따른 건립부지 변경으로 1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당초 부지선정과정에서 제약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국비 집행 지연 방지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1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1) | 제도개선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은 실제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기업들의 활용도가 2.4%로 저조하며, 실제 조정 성립 건수도 낮게 나타남<br>※ 조정실적: 최근 5년간 조정신청 건수는 평균 86.6건, 이 중 33.6건 조정 성립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여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조정 절차를 도입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활용 지원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1) | 제도개선 | 특허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사업은 영업비밀 보호활동 관련 컨설팅이 민간 기업 대상으로만 지원되어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후속 보안시스템 구축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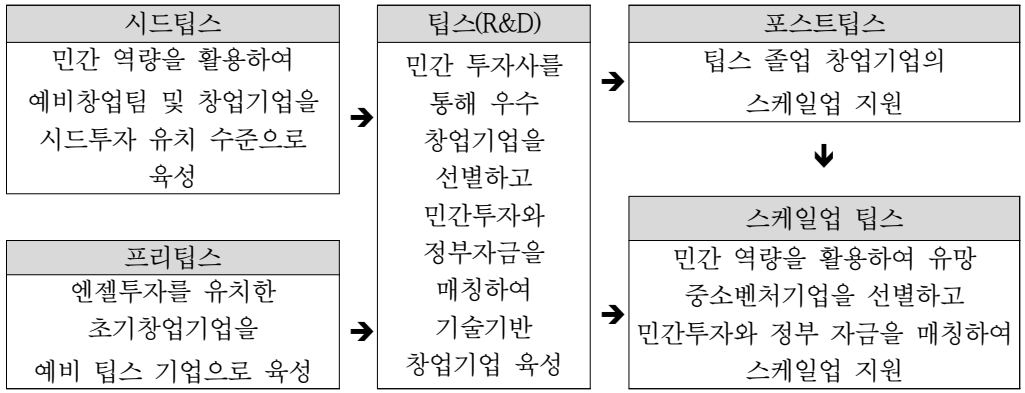
## 3. 중소벤처기업부(60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지방 중소기업 R&D 육성 사업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R&D 사업 공통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5년 예산안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이 신설되었으나 지방 중소기업 R&D 육성 관련 예산이 여전히 매우 부족하므로, 관련 사업 확대 및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함<br>- 중소기업 대상 R&D 사업의 경우 과제 지원예산액이 부족하여 과제포기가 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지방 중소기업 R&D 육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급기준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신용보증기금 출연(1231-88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말 기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누적 대출(보증) 실적은 2,579억원으로 당초 공급목표 8조 5,000억원 대비 3.0%에 불과함.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출연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한 2023년도의 경우에도 연도말 기준 누적 대출(보증) 실적은 1조 2,949억 원으로 추가 출연으로 늘어난 공급목표 9조 5,000억원 대비 13.6%로 저조하였음<br>*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예산 6,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의 경우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출연된 예산 7,600억원에 보증배수 12.5배를 적용한 9조 5,000억원의 대환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함<br>- 부진한 실적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배정된 예산을 전액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고, 그 결과 2023년말 기준 실제 보증배수가 1.7배에 불과한 실정임. 즉, 당초 보증배수 12.5배를 기준으로 기획된 보증사업이 충분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추가 출연이 없더라도 사업 운용에 지장이 없음에도 국가재정을 추가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배정된 출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불요불급한 국가재정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지출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제재조치, 제재환수금 징수 지연 방지 및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2023년 제재조치가 결정된 138건 중 137건이 2019년 및 2020년 지원사업에 해당하여 제재심의 및 제재조치가 지연되고 있음<br>- 제재조치로 적발된 기업에 대하여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2020년 이후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수조치 필요액 총 301억 2,957만원 중 2023년까지 환수 완료된 금액은 91억 1,882만원(30.3%)에 불과함<br>-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환수 조치된 과제의 경우 현재까지 제재부가금이 징수되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제재조치 및 제재환수금 징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부정이익 등의 환수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 | | |
| 4 | **보조금 및 출연금 이월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두 내역사업의 예산 및 사업기간 변경·승인내역 중 이월 관련 보고·검토 및 승인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업비 이월 승인이 타당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br>-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내역사업, 보조)의 보조금 이월 승인은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것뿐이어서 공식적인 이월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br>-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내역사업, 출연)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기관장(재단) 승인 하에 다음연도 해당 사업비로 이월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비 이월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월 승인시 사전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이월 승인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및 협약서 내용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투자형R&D 방식 지원실적 제고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시장확대형’에서 추진하는 스케일업 팁스 사업은 민간 운영사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려는 것인데, 지원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하고, 운영사의 기업 발굴·투자활동이 민간투자와 연계한 ‘투자형R&D(매칭투자)’보다 ‘투자연계형R&D(출연금)’ 방식에 집중되어 있음<br>- 스케일업 팁스 사업의 지원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지원기업 수 기준으로 2022년 60.0%, 2023년 72.1%, 정부 투자액 기준으로 2022년 38.9%, 2023년 44.7%로 나타나 미흡하고, 특히 투자형R&D(매칭투자)는 두 기준 모두 달성률이 30% 수준에 불과함<br>- 투자연계형R&D의 비중은 84.1%이나 투자형R&D의 경우 15.9%로 지원유형 간 비중 편차가 크므로, 투자형R&D 지원 강화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팁스 사업의 기업 발굴·투자 관련 투자형R&D 지원방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팁스 및<br>스케일업 팁스의<br>사업 간 연계<br>지원체계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스케일업 팁스 사업은 팁스(R&D)를 수행하거나 포스트팁스에 선정된 기업에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팁스(R&D) 사업을 수행한 창업기업 비율은 2022년 51.9%에서 2023년 45.1%로 하락함<br><br>[팁스 사업 연계 현황]<br> 

* 2024년부터 시드팁스는 프리팁스에 포함되어 추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사업과 스케일업 팁스 사업 간 연계율 제고를 위해 사업 간 연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R&D 사업<br>업무위탁 실태<br>점검 및<br>개선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2134-42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br>중소기업기술정보<br>진흥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3년부터 한국엔젤투자협회에 팁스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2023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b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이 편성된 2022년부터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일부를 기본계획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별도조직에 위탁했는데 2024년에야 모든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br>[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업무위탁협약 체결 여부]
<table>
<tr><th>별도조직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h>비고</th></tr>
<tr><td>한국엔젤투자협회</td><td>×</td><td>○</td><td>○</td><td>2013년 운영기관 지정</td></tr>
<tr><td>한국벤처캐피탈협회</td><td>○</td><td>○</td><td>○</td><td></td></tr>
<tr><td>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td><td>×</td><td>×</td><td>○</td><td></td></tr>
<tr><td>국방진흥연구소</td><td>×</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2022년까지 관리기관 지정</td></tr>
<tr><td>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td><td>해당없음</td><td>×</td><td>○</td><td>2023년 관리기관 지정</td></tr>
<tr><td>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td><td>×</td><td>×</td><td>○</td><td></td></tr>
<tr><td>한국산학연협회</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소관 R&D사업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미체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위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집행단계에<br>이르러<br>사업계획을<br>변경하여<br>신규지원유형<br>신설 지양</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추진단계에 이르러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내역과 다른 임의적인 집행을 하였음. 이러한 집행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br>-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집행단계에 이르러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내역과 다른 집행계획을 별도로 마련(2023년 1월)하여 사업을 추진함. 전년도 수출 1,000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강소+기업’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하였고, 각 유형별 참여기업 수, 예산액 등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내역과 다르게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br>(단위: 개사,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지원대상<br>(지원한도)</th><th colspan="2">국회 확정예산</th><th colspan="2">집행계획</th></tr>
<tr><th>기업수</th><th>예산액</th><th>기업수</th><th>예산액</th></tr>
<tr><td>내수기업</td><td>전년도 직수출 0<br>(보조금한도: 30백만원)</td><td>950</td><td>26,000</td><td>1,100</td><td>33,000</td></tr>
<tr><td>수출초보기업</td><td>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br>(보조금한도: 30백만원)</td><td>898</td><td>24,430</td><td>500</td><td>15,000</td></tr>
<tr><td>수출유망기업</td><td>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br>(보조금한도: 50백만원)</td><td>558</td><td>22,750</td><td>530</td><td>21,200</td></tr>
<tr><td>수출성장기업</td><td>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br>(보조금한도: 80백만원)</td><td>256</td><td>14,800</td><td>360</td><td>19,800</td></tr>
<tr><td>수출강소기업</td><td>전년도 직수출 500만불 이상<br>(보조금한도: 100백만원)</td><td>321</td><td>14,000</td><td>280</td><td>11,200</td></tr>
<tr><td>수출강소+기업</td><td>전년도 직수출 1,000만불 이상,<br>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이력 보유<br>(보조금한도: 120백만원)</td><td>-</td><td>-</td><td>30</td><td>1,200</td></tr>
<tr><td>물류바우처</td><td>국제운송비 수요기업<br>(보조금한도: 14백만원)</td><td>1,300</td><td>18,000</td><td>2,500</td><td>18,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안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실제 집행단계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임의로 변경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ODA 사업별 사후관리방안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ODA 사업이 단기간 지원으로 종료되는 경우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면 ODA 사업으로 구축한 성과가 ODA 지원종료 후 단절될 우려가 있음<br>* 내역사업 중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녹색전환 역량강화’는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2024년 6월말 기준 지원이 이미 종료되었고,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내역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음. ‘라오스 테크노파크설립 및 IT인력양성’ 등 나머지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3년 또는 4년의 단기간 지원이 계획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역사업별로 기존에 지원한 물자의 교체 및 부품·소모품의 제공, 기술협력을 지속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것 | | |
| 10 | 보조사업비로 기관운영비성 지출 지양 및 중요재산 취득 보고 이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4231-301)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보조사업 수행자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일반 사업수행 목적의 보조금과 별도로 운영비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각 내역사업별 보조사업비를 기관 근조기 사용비용, 관리비 등의 기관운영비 성격으로 지출함<br>- 동 재단은 2004년부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요재산의 관리, 공시 및 재산처분 승인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보조금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요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보조사업 수행자가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수익금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마케팅지원사업(4835-305)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예산으로 2024년도분 비용을 지출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법 제3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br>- 중소벤처기업부는 회계연도 말인 2023년 12월 28일에 이르러 국고에 반납*되어야 할 수익금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금 집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변경승인을 근거로 “2024년분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쇼핑백 구매·제작” 등 다음연도분 지출에 수익금 집행잔액을 사용함<br>* ①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보조사업 수익금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 및 이월한 것은 부적절함. ② 시정요구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받도록 하고, 보조사업 정산 및 회계처리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시정요구유형: 주의)<br>- 연도말 지출원인행위(쇼핑백 구매·제작 수의계약, 2023년 12월 28일)를 근거로 차년도에 수익금을 집행한 것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인 “보조사업 수익금의 이월 부적절”과 유사한 집행이라는 문제도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금 반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보조사업자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상 허점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마케팅지원사업(4835-305)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br>중소기업유통센터 |
| | | 지적사항 | ○ 유통망진출지원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수입 및 그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확히 공시하지 아니함.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수익금 수입에 관한 사항도 정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br>- 보조금관리법상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 지출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수입 및 수익금 지출에 관한 사항도 공시할 필요가 있음<br>* 보조금관리법 제26조의10 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정산,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이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br>- 2023년도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익금 수입이 19억 700만원, 수익금 지출이 29억 1,700만원(이월액 지출 포함), 수익금 집행잔액 6,700만원이었음에도,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수입·지출 내역의 경우 수익금 수익과 지출, 집행잔액(국고반환액) 등이 없는 것으로 공시(미공시)하고, ② 정산부분의 경우 수익금 수입이 6,700만원, 수익금 지출 0원, 수익금 집행잔액(국고반환액) 6,700만원으로 공시(사실과 다르게 공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보조사업 수익금 수입 및 집행에 관한 정보공시를 누락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공시함으로써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취지에 부합한 정보공시를 하도록 시정명령·보조금 삭감(법 제26조의10제2항), 명단공표(법 제36조의2제1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공공구매 목표치 달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공공구매제도운영을 총괄 담당하면서 타 공공기관등의 구매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관련사항을 공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구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타 공공기관등의 공공구매 목표치 달성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br>-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금액은 목표금액(44억 4,500만원)에 미달한 11억 9,8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도 구매목표비율 33.4%에 미달한 17.0%임<br>-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금액은 목표금액 53억 6,700만원보다 적은 41억 7,600만원이고, 구매비율도 구매목표비율 14.9%에 미달한 13.8%임<br>-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금액은 목표금액 3억 9,400만원보다 적은 3억 800만원이고, 구매비율도 구매목표비율 1.1%에 미달한 1.0%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자체 공공구매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14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br>중소벤처기업연구원<br>신용보증재단중앙회<br>기술보증기금<br>한국벤처투자 |
| | | 지적사항 |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함<br>-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구매총액의 8% 이상이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2.4%), 신용보증재단중앙회(6.0%), 기술보증기금(6.6%), 한국벤처투자(6.9%) 등 4개 기관의 경우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직원 적시충원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 | | 지적사항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교부받은 예산(73억 2,800만원) 중 66억 2,900만원을 실집행하고 6억 6,90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br>-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내역사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5조의2제4항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임<br>- 퇴사인력 충원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2억 9,400만원)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연구운영비 미집행(3억 1,700만원)과 같이 인력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비 연구과제 수행 물량을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연구운영비 미집행이 발생하였음. 이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기능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연의 과업수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직원충원(정규직)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기능과 같은 본연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16 | **팁스 운영사의 창업 초기기업 추천을 독려하고 운영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시행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부에 따라 팁스 예산도 대폭 깎이고,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마저 지급이 차년으로 밀리는 현상 반복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선정된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권 소진율 78.2%(9.7%p↓)과 창업기업당 평균 투자액 1.6억원(5000만원↓)이 줄고 있음<br>○ 운영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함<br>-「팁스 총괄 운영지침」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운영사의 창업 초기기업 추천을 독려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운영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때 운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명확하게 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병행사업의 적정 사업방식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br>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수행하던 융자사업(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직접융자 방식을 병행하여 지원한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것임<br>-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기존사업 보완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라고 보기 어려움<br>○ 한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4대 재정혁신 방안 중 하나로서 정책금융에 대해 직접금융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형적인 예산규모 절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지원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하는 대신,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원방식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사업확대를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임원 인건비 지급 관련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재검토**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보조금 실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간접사업비 중 사업 운영 인건비 명목으로 반영되어 집행된 인건비 90억 2,830만원에서 약 3억 4,610만원은 동 내역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의 인건비 소요(급여, 성과연봉,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등)로 집행되었음<br>-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다른 보조사업에서는 해당 임원들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임원 인건비 소요의 60%를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임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보조사업비를 정산할 때 사업 기여도에 따른 인건비 집행 기준을 면밀히 검증할 것 | | |
| 19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보조금 사업 제도개선**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내역사업 보조사업비가 임원 인건비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br>- 보조사업비(830억원) 중 인건비(90억 2,830만원)에서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의 인건비로 3억 4,610만원이 지급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소상공인전용 결제시스템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사업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32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12월 기준 실집행률이 36.2%로 저조함<br>-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함<br>*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간편결제시스템의 원활한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간편결제시스템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용실적을 추적 관찰하는 등 지원사업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2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실집행 부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창업지원(4131-316)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민간자본보조 22억 5,000만원은 신규 체험점포 구축을 위해 지역의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br>- 2022년에도 편성된 보조사업비(민간자본보조 30억원) 중 대부분을 미집행 이월하였는데, 동일한 문제점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br>*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내역사업은 예비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체험점포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신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선별하여 교육, 사업화 지원 등 창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보조사업비 이월과 사업기간 연장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소공인<br>복합지원센터<br>구축·운영<br>실집행률 및<br>사업방식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공인특화지원(4131-31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12월 기준 복합지원센터 구축 · 운영 실집행률이 9.5%로 저조함<br>- 복합지원센터의 경우 다년도(2년) 사업으로 부지확보, 설계용역, 건축 등의 과정이 필요하나, 집행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함<br>*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스마트 제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한 공동장비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하여 연내에 보조금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독려하고, 향후 다년도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확보할 것</td></tr>
<tr><td rowspan="3">23</td><td rowspan="3">소상공인전용<br>결제시스템의<br>장기적 활용방안<br>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32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말 기준 누적 보급된 제로페이 QR 키트 179만 5,000개 중 116만 5,055개의 가맹점에서 1년 이상 결제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실제 QR 키트의 1년 내 사용률은 35%에 불과한 상황임<br>* 소상공인결제시스템 누적 가맹점 및 결제액 현황<br>(단위: 천개, 억원)
<table>
<tr><th>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누적가맹점</td><td>324</td><td>729</td><td>1,383</td><td>1,626</td><td>1,795</td></tr>
<tr><td>누적결제액</td><td>767</td><td>11,575</td><td>36,229</td><td>56,079</td><td>68,60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소상공인 융자<br>부실률 관리를<br>통한 안정적인<br>기금 운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지원(융자)(415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br>소상공인시장진흥<br>공단</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의 부실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 융자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br>- 소상공인 융자의 부실률은 2023년 10.0%로 나타나, 2021년 1.6%, 2022년 2.8%에 비해 급증하였음. 이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시행되었던 각종 대출의 거치기간(2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3년부터 원리금균등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규 대출심사 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부실대출의 규모를 감축할 것</td></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온누리상품권<br>발행 사업의<br>적정<br>기금운용계획<br>수립</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온누리상품권 목표 발행액 대비 실제 발행액이 미달하여 사업 실집행률(67.5%)이 저조하고 이월(942억원)이 발생함<br>* 온누리상품권 목표 발행액 및 실제 발행액 비교<br>(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목표 발행액</th><th>실제 발행액</th><th>구분</th><th>목표 발행액</th><th>실제 발행액</th></tr>
<tr><td>2013년</td><td>5,000</td><td>5,000</td><td>2019년</td><td>20,000</td><td>20,074</td></tr>
<tr><td>2014년</td><td>7,000</td><td>6,360</td><td>2020년</td><td>40,000</td><td>40,487</td></tr>
<tr><td>2015년</td><td>7,000</td><td>7,381</td><td>2021년</td><td>31,500</td><td>31,573</td></tr>
<tr><td>2016년</td><td>10,000</td><td>10,030</td><td>2022년</td><td>35,000</td><td>35,391</td></tr>
<tr><td>2017년</td><td>12,000</td><td>12,850</td><td>2023년</td><td>40,000</td><td>20,242</td></tr>
<tr><td>2018년</td><td>15,000</td><td>15,016</td><td>2024년 3월</td><td>50,000</td><td>7,472</td></tr>
</table>
- 발행액 대비 미판매 · 미회수액 비중: (2022)66.2%, (2023)64.8%</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적정 수준의 발행규모를 추산하여 계획액을 편성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디지털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디지털상품권 가맹점이 지류형상품권 가맹점에 비해 적고 상품권의 활용도가 낮아 판매가 저조하므로, 디지털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가맹점 확대가 필요함<br>- 소상공인 매출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가 필요함<br>* 2023년 온누리상품권 가맹 현황: (지류형)19.9만개, (카드형)9.5만개, (모바일)9.4만개<br>○ 지류형상품권 가맹점 중 디지털상품권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 독려활동 및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일괄가맹 안내 수준의 대책으로는 발행목표(5조원)를 달성하기 어려움<br>- 지류형상품권 이용자(고령자 등)를 고려하여 보다 활발한 지류형상품권 사용을 통해 발행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모바일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 매출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카드형 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7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 참여 확대 등**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12월 기준 실집행률이 77.6%로 저조함<br>- 실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br>*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실집행률: 98%(2021년)→80.7%(2022년)→77.6%(2023년)<br>-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2023년 31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참여대상 및 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인식 및 관심도 제고에 노력을 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사업 간 연계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대기업, 대학과 전통시장 간 상생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해 신규반영되었지만, 취지와 달리 추진됨<br>-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홍보·마케팅 교육 제공 등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민간 전문기관이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전통시장에 활용하는 일회적 이벤트성 사업에 그침<br>○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및 후속연계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음<br>- 기존 특성화 육성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된 활용이 부족하여 정부지원 종료 후 사업성과 및 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연계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음<br>- 2025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사업(44.27억원)이 신설되었는데, 민간 전문가 주도로 상권전략을 기획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대학생·청년 의견 반영이 미흡함<br>* 산학연계 경영혁신 내역사업은 대학의 아이디어를 민간 전문기관이 전통시장과 함께 실행하여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2023년 계획액 5억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며 특색있는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신규 방문객 확대를 위해 대학생·청년들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시장종합정보지 발간·배포방식 개선 등 사업 내실화 노력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시장종합정보지는 2017~2018년의 경우 연간 10권 이상을 발간하였으나, 2019년에는 4권을 발간하는 데 그쳤고 2020년 이후부터는 연말인 12월에 1권만 발간하고 있음<br>- 정보 유통·소비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장종합정보지는 지류로 제작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있는 실정임<br>- 모바일판을 제작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카카오톡 채널 및 SNS 기반 매체 배포를 병행하는 등 접근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br>* 전통시장 홍보 내역사업은 온·오프라인, 언론·방송, 박람회·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임(2023년도 계획액 31억 4,6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종합정보지의 발간·배포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
| 30 |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상권활성화(4154-305)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동네상권발전소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상권 발전전략 수립을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단계인 상권활성화사업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br>- 상권활성화사업 대상 상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지역(10곳) 중 2024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5곳)으로 선정된 상권이 없음<br>-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립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네상권발전소→상권활성화사업→코어상권] 순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적시하고 있음<br>- 사업공고에도 동네상권발전소 수행성과를 평가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에 연계하여 반영하고 사전 필수절차(예비사업)로 운영할 예정으로 명시함<br>* 동네상권발전소 내역사업은 민간 차원의 지역상권 문제해결 및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임(2023년도 계획현액 10억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및 지역상권 발전전략 수립과 상권활성화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집행**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진기금 기본경비(7277-200)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지적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에서 보조비목 중 일반연구비(260-01목)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대가 지급이 이루어짐<b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용역대가의 일부는 2023년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4년도 보조금으로 지급함<br>*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지역센터의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2023년도 계획액 75억 5,4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b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규정 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정산절차 강화 및 사업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실제 사업비 지원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초과한 실집행 지연사례가 연례적으로 상당 부분 발생하였음<br>- 2023년 기준 1,268개의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 중 사업연도 내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완료된 경우는 216개(17.1%)에 불과하며, 2023년 일부 사업(의약품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경우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2024년 1월 초에 사업이 시작되었음<br>- 공고-선정-교부-집행-후속조치 등 한 회계연도 내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구조에 따른 지연이 있으므로 사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br>-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중층 출연형태의 사업구조로 인해 운영기관에 대한 집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정산절차를 강화하여 운영기관의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실집행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팁스의 모험자본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창업성장기술개발(R&D)(2134-309) | 주의,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2~2023년 선정된 운영사의 창업기업 추천권 소진율*은 78.2%로 2013~2021년에 선정된 운영사의 87.9%에 비해 9.7%가 낮고, 2022~2023년 운영사의 창업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1억 6,200만원으로 2013~2021년에 선정된 운영사가 2억 1,170만원인 것에 비해 실적이 부진함<br>* 소진율 = 창업기업 추천 건수 / 창업기업 추천권 보유 건수<br>- 팁스 운영사의 창업기업 투자의 지분투자유형이 보통주보다 우선주 비중이 높은데, 이는 위험회피성 투자 경향이 높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br>* 2013~2018년(보통주 40~50%) → 2023년(보통주 23.8%, 우선주 70.4%)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팁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개편할 것(제도개선)<br>○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팁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팁스 운영사의 투자 시 모험자본 비중이 높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3133-301)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브랜드K는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 있어서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음<br>*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은 브랜드 파워가 약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의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관련 전시관 등에 해당 상품을 입점·홍보해 주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2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br>- 상당수의 인증기업은 제품의 실제 판매 과정에서 '브랜드K'를 함께 노출시켜 활용한 사례가 저조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검색어 검색 빈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br>- 또한 본 사업은 2018년 개발 이후 2021년까지 사업 예산이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로는 사업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으며, 특히 브랜드K의 가치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리운영 예산의 경우 2023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사업 예산과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축소된 채 운영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계획 및 집행 관리상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체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3335-304)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사업은 근거 법령에 민간위탁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에 해당 제도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집행함<br>- 2023년 기준 47억 7,900만원 중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목적의 관리용역비 4억 1,000만원을 제외한 43억 6,9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함<br>- 민간위탁을 하려면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중기부장관의 권한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이전되어 해당 기관의 명의로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나, 근거 법령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br>- 민간위탁 근거가 미비한 이상 수의계약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사업 수행시 법률상 위탁 근거 없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의계약 역시 체결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집행점검 및 운영 자립화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3337-306) | 시정,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천안 백석지구 및 대구 침산지구 등 사업지 2개소 모두 2022년 중순에 사업지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023년 1월에 사업지가 최종 선정되어 5월 31일에 비로소 각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2024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br>- 스마트혁신센터의 건립이 완료된 이후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5억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별도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스마트 혁신센터의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 수익창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스마트혁신센터의 자립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br>○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사업이 실집행률 부진으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사업의 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 시정,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의 추진 지연에 따라 연내 실증매칭 실적이 저조함<br>*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업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에 앞서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성능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2023년도 신규 내역사업임<br>- 총 66건의 실증지원 신청 중 사업연도 내에 실증매칭이 완료된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4월 말 현재 기준으로도 매칭이 완료되어 실증에 들어간 것은 전체 신청 건수의 34.8%(23건)에 그쳤음<br>- 특히, 본 사업은 기업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바로 매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서류 검토 및 계획서 평가, 현장 설치 및 수요기관과의 사전 조정 등을 거쳐야 비로소 수요 공공기관과의 실증이 진행되므로, 신청 절차가 늦을 경우 실제 실증완료는 사업연도를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실증 희망제품 사전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실증 신청이 있을 경우 회신 목표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br>○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하게 실증이 진행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적인 제도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4838-301)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 실적이 종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함<br>- 애로사항 발굴 건수는 2020~2021년에 약 5천 건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2,661건, 2023년에는 3,648건 수준에 그침. 그 중 개선 건수는 2022년(1,100건)과 2023년(1,239건)으로 모두 2020~2021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br>- 특히 2022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공표제도 신설)하였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발령하는 개선 권고 및 공표 건수는 2022년 및 2023년 각각 1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옴부즈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청소년비즈쿨 사업의 참여 제고 등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창업저변확대(5132-30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비즈쿨 사업은 해마다 거점형·일반형 비즈쿨의 참여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음<br>- 2019년(2020년까지 지원)에는 거점형 15개교, 일반형 480개교 등 총 495개교가 사업에 참여했으나, 2023년에는 거점형 16개교, 일반형 322개교(중도 포기 제외) 등 총 338개교로 감소하여 해마다 참여 학교 수가 줄어들었으며, 지역 별로도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학생 수 분포에 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있음<br>* 광주·전남·제주 지역은 학생 수는 전국의 8.1%를 차지하지만 비즈쿨의 비중은 5.0%였으며, 강원 지역 역시 학생 수 비중(2.7%)에 비해 비즈쿨 비중(0.9%)이 적었음<br>○ 비즈쿨 사업에 대해 학생, 청소년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으로 사업담당자 만족도 4.41점보다 낮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비즈쿨 사업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과소 운영지역에 대한 일선 학교의 신청·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다른 지원과의 연계 강화 및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예산 확충**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화자금 지원 외에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등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사업의 주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연계 지원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br>- 2023년 기준 전체 275개 사업화자금 지원기업 중 정책자금 융자를 받고 있는 기업은 12.7%(35개), 기술보증은 14.2%(39개), R&D 지원은 14.9%(41개), 수출바우처 지원은 9.8%(27개)의 기업에서만 각각 연계지원이 이루어졌음<br>- 일부 분야(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의 경우, 사업 신설 당시의 R&D 지원비율(15.6%)보다 현재의 연계지원 실적(각각 8.0%, 10.3%)이 오히려 낮았음<br>○ 새로 창업하는 기업의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창업의 시작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음<br>- 성장기업, 혁신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영역임<br>- 민간이 지원, 투자하기 어려운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 수행시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중 특히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른 성장단계 사업보다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및 과다 이월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5133-302)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사업예산 실집행률이 19.4%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의 80.6%(12.2억원)가 이월됨<br>-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23년 신규반영된 사업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단 운영과 시스템 설계가 하반기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실집행률은 19.4%, 1,220백만원 이월이 발생함<br>- K-바이오 랩허브 사업추진단을 연초부터 운영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단의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이 차년도로 이월 추진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단 구성 지연에 따른 사업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주의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사업계획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벤처기업확인 수수료 보조금 예산을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벤처기업경쟁력강화(5231-301)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편성 당시 벤처기업확인 수요를 16,000개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벤처기업확인 건수는 당초 계획 대비 55.0%인 총 8,791개 기업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수수료 보조금 지급액은 당초 편성액 16억 대비 63.1%인 10억 1,000만원에 그침<br>-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수수료 보조금 미집행분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신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집행하였는데, 내내역사업으로 국회에서 심사·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예산을 이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수수료 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요를 과다 예측했을 뿐 아니라, 미집행분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당초 편성되지 않은 신규 연구용역 수행에 집행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현실적인 사업 규모를 설정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5231-306)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사업 실집행률이 74.7%로 저조함<br>-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22년 이후에는 수요가 급감함<br>* (2020) 78,148개사 → (2021) 66,786개사 → (2022) 16,706개사 → (2023) 7,010개사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사업 규모를 설정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사업 집행 이전에 사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이탈률 증가 및 저조한 자격증 취득 실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학협력인력양성(5431-30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미진학하는 비율(이탈률)이 증가하고, 산업기사 취득률이 낮아지고 있음<br>*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특성화고(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임<br>- 기술사관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실제 전문대로 진학하는 비율은 47.8%로 절반 이하에 불과한 상황임<br>- 해당 사업을 이수한 학생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거나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자격을 획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산업기사 취득률: 69.3%→63.7%)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참여인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재직 유도 정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력유입인프라조성(5431-302) | 시정,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자 목표(15,000명) 대비 36.4%인 5,465명에 불과했으며, 예산현액 197억 9,100만원 중 60억 9,900만원만 집행되고, 136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이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신설하면서 업종을 제조·건설업으로 제한하고 기업부담은 낮춘 대신 청년부담*을 높인 결과 가입자가 급감함<br>* 청년 근로자 본인부담은 기존 24%에서 33%로 늘어났고, 정부지원금은 총 1,0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b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보다 혜택이 많고, 가입범위도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허용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2022년 가입목표가 20,000명임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편성시 가입목표가 과도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가입실적 미달, 제도 변경에 따른 가입자 형평성 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중소기업 청년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공제사업 등 유도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br>○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불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br>○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공제사업을 검토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4154-30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제주)(4154-30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국정감사, 예산 및 결산심사에서 실집행률 부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br>- 사업기간을 현행화하고 성장촉진지역,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향 지원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집행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2023년도 실집행률 60% 미만)<br>- 2023년 경북 예천군 예천중앙시장의 사업 포기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전에 지원대상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함<b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임(2023년 계획현액 656억 4,1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복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집행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집행부진 사유 분석, 페널티 부과 등 집중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지식산업센터 실집행부진 개선 및 입주율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지식산업센터(제주) (5151-302),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 시정,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31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중 21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이고, 이 중 7개 사업은 보조금이 재이월되었으며, 5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집행액이 전무함<br>- 인·허가 등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지역자율계정예산의 성격에 따른 실집행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br>-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으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임차료 등의 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현재 운영 중인 18개소의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16.4% 수준이므로 입주율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교부, 각 지역별 사업 추진상황에 맞는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br>○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식산업센터 예산 편성 시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전남·전북연수원 건립 촉진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전북연수원 건립(5451-309), 전남연수원 건립(5451-31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 지적사항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연수원 건립은 기존 시설물의 이설작업과 지반조사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전남연수원 건립은 2023년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1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 향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br>- 본 사업은 전남·전북 지역에 각각 전략산업과 지역 주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각각 8억 4000만원 중 4억 700만원(전북), 11억 7,500만원 중 7억 8,100만원(전남)을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남·전북연수원 건립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br>○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연수원 건립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기술보증기금 보증사업의 사고율 상승에 대비할 필요** | 관련사업명 | 기술보증기금 -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
| | | 지적사항 | ○ 2023년 집행 결과 당초 예측 대비 낮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을 기록하여 실제 지출계획 대비 적은 대위변제비용이 집행되었음<br>- 2021년도에 발행·보증된 유동화증권의 2022년도 사고율은 6.6%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3.8%에 그쳤으며, 2023년도 사고율은 7.6%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3.3%였음<br>- 2023년도 대위변제보증해지율 역시 예상은 69.8%였으나 실제는 55.8%만이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이어짐<br>- 다만, 이는 부실률 감소보다는 기존 보증채권의 차환·추가발행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최근 3년간 연도별 사고율 추이를 보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특히 그 동안의 금융권 만기연장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 코로나19 회복기간 이후로는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소상공인시장<br>진흥기금의<br>재무건전성 회복<br>노력</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융자사업의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부실률 증가로 재원 부족 문제가 향후 더욱 악화될 전망임<br>-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로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기준 기금 자산 14.7조원, 부채 20.7조원으로, 순자산이 △6.0조원임. 이는 적자 규모가 전년도 △5.2조원 대비 0.8조원 증가한 것임<br>-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20.6조원)은 2023년 기금사업비 규모(4.0조원)의 5배를 상회함<br>*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현황<br>(단위: 조원)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기금 사업비(결산 기준)</td><td>9.6</td><td>21.2</td><td>47.8</td><td>4.0</td></tr>
<tr><td>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액</td><td>2.8</td><td>6.0</td><td>5.2</td><td>3.0</td></tr>
<tr><td>기금 순자산</td><td>△0.2</td><td>△2.4</td><td>△5.2</td><td>△6.0</td></tr>
</table>
- 2024년에도 2.6조원을 추가로 예수할 계획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시행되었던 각종 대출의 거치기간(2년)이 도래함에 따라 부실률 또한 2021년 1.6%에서 2023년 10.0%로 급증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현행 수입-지출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재원 발굴 등 구조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지양**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 구조고도화 · 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사업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함<br>- 채널진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20% 이내 범위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br>-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집행임<br>○ 채널진출 지원을 받았으나 해당 플랫폼에서의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일부 발생함<br>- 매출 미발생률: 온라인 쇼핑몰 지원(9.9%), 미디어커머스 지원(17.7%), 해외쇼핑몰(30.3%), 구독경제 지원(6.3%)<br>*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내역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위한 교육 · 마케팅 ·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2023년 예산현액 944억원)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및 집행에 주의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쇄적인 ISP, ISMP 추진 및 사업 지연 방지**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을 다시 수행하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거듭 수행하였음<br>- ISP를 포괄하는 ISMP를 2022년에 편성·집행하였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위한 시간·인력·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임<b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시스템 재구축 및 신규 시스템 구축 관련 사전 준비도에 따라 양자 중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br>- ISMP 종료 후 이를 바탕으로 ‘중소유통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연말에서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다음 연도에 수행하였음<br>* 공동마케팅 지원, 물류운영 혁신, 유통정보 제공 등 사업운영 인프라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기업의 협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임(2023년도 계획현액 85억 5,8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ISMP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수립된 사전계획대로 정보시스템이 지연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3 | **특별경영 안정자금의 적극적 지원**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지원(융자)(4151-30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지적사항 | ○ 고금리와 내수부진 등 복합위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혹독한 경영환경 상황임을 감안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이 불용되지 않고 폭넓게 지원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br>- 소상공인지원(융자) 중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조 2,871억원 중 427억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성장기반자금의 경우 1조 1,949억원 중 114억원을 불용처리하였음<br>- 특히, 특별경영안정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기업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집행금액은 3,1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폭넓은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함<br>○ 특별경영안정자금 중 재도전특별자금은 당초 계획액 2,000억원 대비 26.4%에 해당하는 528억 9,400만원만 집행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경기침체,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 등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도전특별자금 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온누리상품권 발행목표 대비 이월 과다**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고금리와 내수부진 상황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오히려 축소됨<br>- 소상공인 매출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강조해 왔지만 2023년 실집행률은 67.5%에 불과하고 941억 5,400만원을 이월함<br>- 2022년 3,189억 4,000만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1,794억 5,600만원(62.2%)을 집행하고 1,088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3년에도 2,986억 2,500만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대비 1,956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9.1%에 불과함<br>-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로 발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2023년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내수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복합청년몰 공실률 해소를 위한 사업 평가 환류체계 개선**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청년몰 활성화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복합청년몰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음<br>* 2023년 활성화사업 대상 청년몰 6개소 중 4개소의 연말 공실률이 20% 이상임<br>- 2023년 청년몰 활성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2개 시장(김천 · 제주)은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1개 시장(제주)은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b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몰 활성화사업의 성과평가 시 성과등급을 S · A · B · C 4단계로 부여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 중 S등급에 한해 우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복합청년몰 성과평가 중 S등급은 부여된 바 없어 성과평가의 환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br>- 2021~2023년 청년몰 활성화사업의 성과평가를 비교해 보면, ①전년도에 낮은 성과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다시 선정되거나, ②연이어 청년몰 사업을 지원받은 일부 시장의 경우 전년도에 높은 성과평가를 받았으나 다음연도 성과평가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조성된 복합청년몰의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 평가방안을 면밀히 설계하고 다음연도 사업이 제대로 환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6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실집행률 개선**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비 잔액 발생 등의 이유로 계획현액 138억 5,300만원 중 31억원을 불용처리함<br>- 해당 사업은 실집행률 저조로 매년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실집행률 개선이 저조함<br>- 임차상가 등 시장상인들의 신청 저조, 지방비 확보 문제, 관계기관 협의 문제,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파악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br>* 2018~2022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 총 285건, 피해액 약 820억원(연평균 57건)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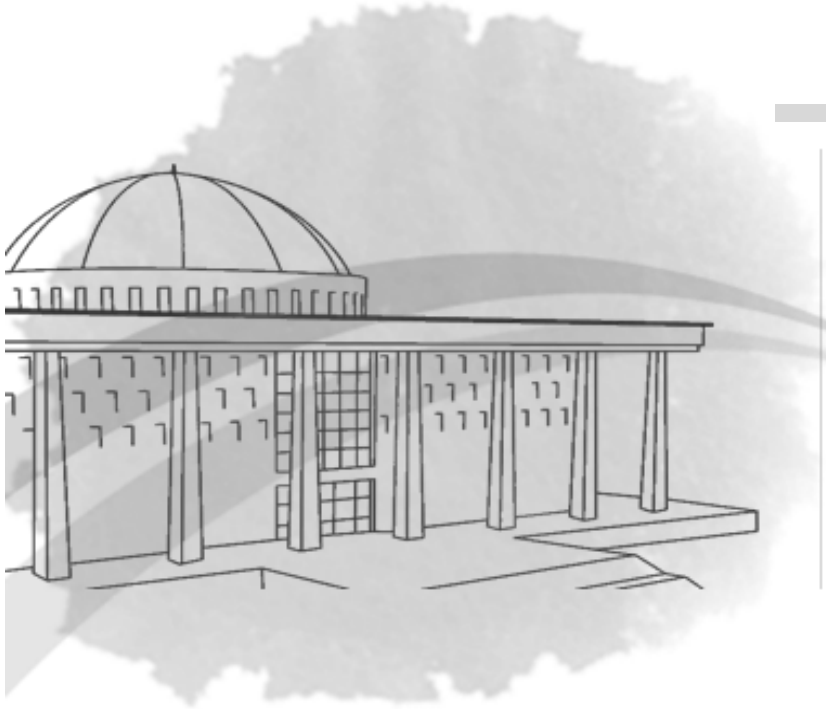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일괄 편성**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7277-201)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각 세부사업에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데 회계적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제기됨<br>- 중소벤처기업부는 적정 예산 규모 대비 과소한 예산(40%)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말에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발주하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br>*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은 17억 8,000만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에 6억 9,900만원만 편성하였음<b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개 세부사업의 보조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이를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는데,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및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업이 임의로 지출되었음<br>- 다수 사업관리시스템에 관한 통합유지관리 비용을 각 보조사업별로 배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실집행액과 정산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의 필요 예산을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 사업에 일괄 편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수행 및 집행관리를 면밀히 점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4131-327)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1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ISP’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는 등 사전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2023년 91억 8,000만원)의 계약체결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이 발생함(실집행률 72.9%)<br>-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매출액·임대료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통신회사·결제사 등의 데이터도 결합하여 상권정보, 맞춤형 가게 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이 필요적으로 수반됨<br>-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미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관련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이 용이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9 | R&D 관련 제재부가금 징수비목 정정 및 장기미납액 징수 제고 | 관련사업명 | 총괄 - R&D 사업 공통 | 주의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부과된 R&D 관련 제재부가금 부과액 9억 1,354만원을 비목상 과징금(56-565)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으로 잘못 분류하여 처리함<br>- 2022년 이전에 부과되어 1년 이상 미납되고 있는 장기미납 R&D 제재부가금(5억 8,015만원)에 대한 2023년 징수실적도 전무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징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br>- 특히 과징금 미납시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절차를 밟게 되므로,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부가금을 과징금 비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장기미납된 R&D 제재부가금의 징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마산어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
| | | 지적사항 |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임<br>- 2023년 194억원 집행(81개 시장×239.5백만원)<br>- 지원기간 2년, 예산 최대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10%p 차등지원)<br>○ 마산어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1년차 4억 4,000만원, 2년차 4억원)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일회성 행사가 다수 포함됨<br>-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지역 특화로서 지속가능한 시장 고유의 축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일회성 행사는 제한이 필요함<br>○ 마산어시장의 2년차 사업은 인건비가 1억 1,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4억원)의 29%를 차지하여 인건비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br>○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통상 5월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7개월로 내실있게 사업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산어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내용, 인건비 비중, 사업 기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보건복지위원회



# 1. 보건복지부(143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의료 인력 등에 관한 법정계획 미수립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는 현재 7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br>-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종합계획(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인 수급계획(의료법), 빈곤아동의 복지 · 교육 · 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기본계획(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br>○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이에 연계된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의료인 수급계획 등 의료인력 관련 법정계획들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미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그와 연계된 의료인력 관련 법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며, 관련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적정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장애인의무고용 의무 위반 공공기관 시정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br>대한적십자사<br>국립중앙의료원<br>한국장기조직기증원<br>한국보건의료정보원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위반하였는데, 4개 기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음<br>-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위반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요인이 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소관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3 |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재산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수급권자의 수에는 변화 폭이 없이 150만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br>○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재정안정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확대시킬, 명백한 의료급여 제도 개악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사업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의료급여 정신병원 수가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이 경영난으로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병원 의료급여 예산을 1,438억원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br>- 기획재정부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면, 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선집행한 후,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현실화 등 정신병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 |
| 5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br>-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함<br>-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지 않고 2025년부터 연 소득 1.3억원 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입장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적기 처리율 제고 및 인력 확보 등 통한 평가자 안전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사업(1137-31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1인 출장 평가의 한계가 우려됨<br>- 2023년 적기 처리율이 높아졌으나, 이는 2인 1조로 구성된 출장 평가건수의 증가보다 1인 출장 평가 건수를 늘린 결과임<br>- 신규 수급자와 정신신경계 질환자 평가를 위한 활동능력평가 출장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출장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존재,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들의 수급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 처리율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 등을 통해 평가자의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 |
| 7 | **긴급복지 지원 예산 효율적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긴급복지(1133-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사업비 부족 해소를 위해 기초의료급여 사업비에서 238억 7,800만원을 전용받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148억 1,700만원을 불용하여 실제 사업비 부족으로 전용 받은 238억 7,800만원 중 62%가 불용처리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지역 간 격차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노숙인 등 복지지원(1931-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4년 6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중 노숙인 관련 조례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도, 14개 시·군·구에 불과함<br>- 지방정부의 노숙인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br>❍ 현재 6개 시·도(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는 해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거리 노숙인에 대한 필수물품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 지원이 어려움<br>- 향후 거점시설 확대 설치하는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2024년부터 관련 사업 예산 폐지로 직접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보호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노숙인 등 종합계획 시행계획 평가를 면밀히 할 것 | | |
| 9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아동보호체계구축 지원 사업 중 지자체 경상보조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집행률은 2021년 87.1%, 2022년 85.1%, 2023년 81.8%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br>❍ 이와 같은 예산 집행 부진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715명 중, 2023년 12월 기준 597명만 채용되어(83.5%) 채용률만큼의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업무 부담 편중을 관리하여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거나,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률 제고를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 처우개선, 시도별 전담요원 1인당 담당 아동수 적정 수준 관리 등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예산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집행계획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2640-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사회보장정보원은 2023년 일반용역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약 44억 3,100만원 중 약 5억 8,600만원(13%)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br>- 이월된 5억 8,600만원 중 약 5,900만원 수준인 직원 채용 업무위탁 계약 외 ① 원내시스템 기능개선 및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 사업(4억 6,000만원), ②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3,300만원), ③ 청렴 홍보 콘텐츠 및 저작물 제작(1,900만원) ④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1,300만원) 계약은 모두 연말 (11월 및 12월)에 계약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연말 계약체결로 인한 예산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계획을 철저히 관리할 것 | | |
| 1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면밀한 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3347-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17년 이후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청년 고독사는 6.5%에 달함<br>- 청년 고독사의 주원인은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고립, 구직 문제 등이 있음<br>○ 주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을 복지대상자로 편입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함<br>- 청년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수시로 취약 계층의 상태를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관리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면밀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6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건수는 2017~2022년 5년간 연평균 15,549건인데, 2023년 17만 1,288건으로 폭증하였음<br>○ 현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으므로,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3 |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이용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7042-300)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지급 등으로부터 27억 3,800만원이 이용(증)되어 본예산(5억 100만원)보다 집행액(22억 2,200만원)이 4배 이상 많게 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이용증액이 부적절하므로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의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가 2010년 이후 매년 100억원으로 동결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
| 15 | **사업 기준 준수 여부 및 제기된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 등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2635-316)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기준인 60% 투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펀드 투자 기간이 끝나는 2027년 10월까지 145억원 중 87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2024년 6월 기준 투자된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이 주목적 투자 대상이고, 투자 금액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br>○ 제21대 국회에서는 기기·기술·장비 개발 관련 기업 투자는 무방하나, 서비스 직접 제공 기업에 투자하여 서비스 공공성을 약화하고 기존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 및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과 사업 종료 시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대체인력 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 해소 및 실제 지원 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예산현액 대비 4억원~9억원 사이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2023년 12월 말 기준 대체인력 정원(274명) 대비 13.5%인 37명이 결원 상태인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 기간제 근로계약 및 원거리 출·퇴근 등 열악한 처우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br>○ 대체인력 지원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실적을 보면 50~70%대에 머무르고 있고, 2023년 실적은 전년도(56.9%)에 비해 더 낮아진 것(53.4%)으로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 채용률 제고를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촉진방안을 검토할 것 | | |
| 17 | **부적절한 예산 전용의 시정조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공공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의 출장비용으로 전용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br>- 출장은 사회보장서비스 민영화라는 비판이 있는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전략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일, 스웨덴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목적과 배치되는 사유로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제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사례관리서비스 참여 아동 수는 최근 4년간 88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8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고, 1인당 평균 이용 건수는 2023년의 경우 38.9회로 전년의 35.2회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목표(50회)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 추이도 최근 4년간 70%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참여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자립지원전담인력 처우 개선,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 및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내 미집행 문제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상시적으로 미달 상태이고 퇴직자도 정원의 28%에 이르는바, 인건비가 낮아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채용 인력의 이·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br>○ 2023년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지자체별 실집행내역은 예산액 76억 3,500만원 중 불용액이 10억 3,400만원으로, 사례관리실적은 2,000건을 초과하여 2,477건이었음에도 불용이 상당한바, 이는 보호종료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연간 한도(480만원) 내에서 보호종료아동별로 자립에 필요한 사례관리 횟수가 달라 실제 집행액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사례관리를 1회만 지원받아도 사례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임<br>○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급여업무프로그램에 의료비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음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시스템 구축이 11월말에야 완료되어 예산액 중 시스템 개발비용만 집행되고 의료비 지원분 등은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인건비 단가 인상,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호종료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례관리비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례관리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내 미집행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 재조정 및 설치비 단가 현실화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동학대 예방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2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2023년 36개소의 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6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말 신규설치 쉼터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10개소는 이월 예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설치는 9개소에 불과하는 등 실집행률이 36.2%에 그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쉼터 설치 목표를 재조정하고, 쉼터 설치비 단가 현실화 등 지자체의 쉼터 신규 설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1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피해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관으로, 2023년말 기준 전국에 9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br>○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신규 14개소를 더한 95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85개소만 설치되었고, 2023년도에도 설치 목표 105개소 대비 92개소만 설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규 설치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액도 불용되어 예산액의 87.59%만 실집행된 바, 낮은 설치단가(6억원)와 위탁법인 및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신규설치 지연의 주 원인인 낮은 설치 단가를 현실화하여 설치 지연을 방지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첫만남이용권의 정책효과를 반영할 성과지표 마련 및 장기영향 조사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첫만남이용권 지원(2533-306)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 ‘첫만남이용권 신청률(당해연도 신청자수/당해연도 첫만남이용권 수급 대상자)’ 을 두고 있는데, 해당 성과지표는 단기적인 정책의 인지도와 수급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표 및 정책효과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br>○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도입 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목표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업추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결혼예정자·결혼 직후의 부부에게 이 제도가 임신 및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3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1338-31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2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가 2023회계연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자율편성 한도에서 지역 수요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물량 및 소요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된 후, 설치 계획이 전년 대비 53.7%(450개소→208개소) 감소되었고, 실제 설치 개소 측면에서도 2023년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는 167개소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이며, 설치비 지원의 실집행률도 33~52%로 저조한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돌봄 수요에 상응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실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난임·우울증상 담센터 설치 및 인력확충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난임·우울증상담센터별 상담서비스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상담 예약 신청 후 일반상담까지 소요된 평균 일수가 2023년 기준 중앙센터는 57일이고, 권역센터는 대기없음에서 21일까지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며,<br>난임·우울증상담센터별 인건비 보조비목의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권역센터의 경우 26%에 지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대기일수 개선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설치 지역에 센터를 확충하고 각 센터의 인력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5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수혜율 및 예산 집행률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부 혹은 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21년 이후 실집행률이 매년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혜율도 높지 않음. 또한, 동 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 인건비 단가가 2017년 공공의료기관 간호사(30대) 월평균 임금(2,716천원) 기준 반영 이후 동결되어 보건소 인력 채용이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실집행률과 수혜율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고령친화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령친화산업육성(2142-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전세계적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2024년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br>- 국내시장규모: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 예상<br>- 세계시장규모: 2025년 1조 217억 달러(1,387조 4,686억원) 예상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7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예산 중 치매예방사업 전액조정(감) 문제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노인단체 지원(2133-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옥상·외부 등 누수관련 방수공사 및 실내외 인테리어를 이유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10월 31일 계약하여 12월 6일 준공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재원 부족으로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원을 전액조정함<br>○ 치매환자 증가 등 치매예방의 긴요성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2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청사 공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액을 조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한노인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으로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원을 전액조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보조금관리스템 정산절차 간소화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자체 실집행액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노인단체 지원(2133-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지원단가 인상으로 48억 1,500만원이 전용되어 전액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 기준으로 전용액보다 많은 59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지원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절차 간소화, 인력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전용금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전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 | |
| 29 |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조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사시설설치(2140-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장사시설설치’ 사업의 주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81억 5,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55억 8,900만원(실집행률 73.9%)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br>- 실집행률: 2021회계연도 39.9% / 2022회계연도 67.3%<br>○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적 개선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장사시설설치’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지방비 확보 지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서비스 대상 238,806가구(노인 227,328가구, 장애인 11,478가구), 응급관리요원 671명 배치로 목표(30만 가구, 696명)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br>○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 대수(356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부산·전북 등 9개 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br>○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기간제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야간·휴일 응급상황 대응, 출장·교통비 지원 미비 등으로 이직율이 높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출장·교통비 미지급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31 |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 근무여건 개선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 구축 (2234-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역사업의 사업비가 2022년도 446억 7,100만원(개소당 1억 7,450만원)에서 2023년도 251억 2,200만원(개소당 9,813만원)으로 감액(△43.8%). 그러나 경도인지장애진단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사업비 편성이 필요함<br>○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각 1명 이상)을 충족한 센터는 전국 256개 중 35.1%인 90개소에 불과한 바, 근무여건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br>○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과 낮은 지원단가 등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내역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충원 확대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br>○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치매전문병동 설치)’ 내역사업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와 단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원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노인건강관리(2235-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5년간 노인실명예방수술비와 노인무릎수술비 지원건수는 신청건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노인실명예방수술비는 8월, 노인무릎수술비는 5월에 지원이 마감됨<br>○ 2024년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예산(40억 8,200만원)은 전년(32억 9,300만원) 대비 24% 증액되었으나,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20억 5,400만원)은 2022년 예산액(20억 7,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와 단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원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추계·편성할 것 | | |
| 33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 수준 예산 편성 및 미지급금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1531-31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br>- 특히 2023년, 누적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약 66% 증가한 255억 5,200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예산액 286억 2,400만원 대비 약 89%에 달하는 금액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수요 파악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고, 미지급금 해소 예산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예산조정을 통한 연도 말 정책연구용역 계약 후 전액 이월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는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을 연말에 예산 전용과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br>-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당초 정책연구비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일부를 전용하고, 동 내역사업 내 일반연구비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총 9,000만원을 마련한 후, 연도 말(2023. 11. 28.)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예산조정을 통한 연도 말 정책연구용역 계약 후 전액 이월한 것은 예산지침에 위배되고「국가재정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계획에 없는<br>국외출장의<br>예산조정 후<br>집행 지양</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장애인지원관리(1532-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내역사업의 국외여비 예산은 지난 5년간 1백만원씩 편성하였으며, 매년 불용하여 왔음<br><2019~2023년 기타운영비 사업 중 국외여비 예산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예산</td><td>1</td><td>1</td><td>1</td><td>1</td><td>1</td></tr>
<tr><td>예산현액</td><td>1</td><td>1</td><td>1</td><td>1</td><td>19</td></tr>
<tr><td><u>실집행액</u></td><td><u>0</u></td><td><u>0</u></td><td><u>0</u></td><td><u>0</u></td><td><u>18</u></td></tr>
<tr><td><u>불용액</u></td><td><u>1</u></td><td><u>1</u></td><td><u>1</u></td><td><u>1</u></td><td><u>1</u></td></tr>
</table>
- 그런데 2023년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국외여비를 각각 400만원, 1,400만원을 전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국외출장 경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예산편성 시 계획에 없던 국외출장을 예산을 전용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양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활동지원사 인력 확대 및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활동지원사는 직접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br>○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사 수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24년 1월 기준, 시·도별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사 비율은 0.7명으로 1:1 매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br>- 이러한 원인으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낮은 처우가 지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중증장애인 별도 수당 등의 지급을 활동지원기관에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활동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인력을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 및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37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의 지방비 부족으로 인한 포기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서울 50%, 그 외 지역은 70%로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국고보조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br>- 2019년 최초 사업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지방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부산 지역 4개 자치구와 충남 지역 2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부산 지역 5개 자치구와 충남 지역 2개 시에서 발생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지방비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사업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독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지연 우려가 있음<br>- 2023년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는 보조금액의 약 35.2%(16억 2,6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금액의 약 37.2%(8억 7,600만원)가 이월되었음<br>○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성과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만족도, 소규모거주시설 비율,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증가율로 동 사업성과의 확인이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집행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한국장애인개발원<br>지원 사업의<br>성과지표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1538-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선안도 그 구성요소(정책반영도+장애인삶 만족도)를 살펴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편향성이 큼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성과지표</th><th>측정산식</th><td rowspan="2">⇨</td><th rowspan="2">개선안</th><th>성과지표</th><th>측정산식</th></tr>
<tr><td>정책연구<br>활동실적</td><td>정책연구 건수<br>+정책활동 건수<br>+정책반영 건수</td><td>장애인<br>정책지원</td><td>정책반영도<br>+장애인삶 만족도</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다양한 업무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성과지표의 개발을 새롭게 모색할 것</td></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장애인단체<br>보조금 형평성<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장애인단체(1538-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중앙지원센터는 2008년 운영 개시 이후, 2016년 1회 2,000만원의 증액이 있어 2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의 경우는 2023년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5억원을 지원 받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각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유사기능의 편의센터에 모두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400명의 장애인이 동 사업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103명 참여에 불과하여, 2023회계연도 교부액(45억8,500만) 대비 실집행률은 37.4%(실집행액 17억1,400만원)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시설 퇴소 이후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실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자립이 필요한 재가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할 것 | | |
| 42 |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참여 장애인을 위해 자립 전부터 개별전환지원계획 수립, 거주시설 퇴소 및 이주 준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자립 이후에도 주택입주,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임<br>○ 그런데 사업 실시 이후, 지난 2년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채용 및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원 88명 중 22명이 퇴직하였으며(퇴직률 25%),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8.7개월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해 이들의 급여수준을 유사돌봄인력(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1542-30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두 내역사업은 모두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함<br>- 장애인 건강검진의 경우는 실집행률이 3.2%,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실집행률이 47.3%에 불과하여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워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실집행률을 개선하고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44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4333-301) | 주의,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 | | 지적사항 |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임차료 예산을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으로 전용하고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내역변경하는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br>○ 동 사업은 2023년부터 민간보조사업(320-01)에서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비목 전환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르면 한림원의 각 사업은 국가사무를 위탁하는 형태가 아닌 한림원의 고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사업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지표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한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br>○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철저한 예산 집행관리 및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것(제도개선)<br>○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성과에 입각한 사업관리를 실시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대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1년 71.8%, 2022년 32.1%, 2023년 66.4%로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2023년은 전년 대비 예산액을 20%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사업 1년차인 2021년보다 실집행률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설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 집행 독려와 조기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집행률 제고 및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
| 46 |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지원대상 및 개소당 CCTV 설치비용 지원단가의 과다 편성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하였음<br>- 실제 예산 지원기관은 1,602개소로서 지원 대상기관(2,091개소) 대비 76.6%, 개소당 실제 지원단가(1.1백만원)는 예산 편성시(1.8백만원) 61% 수준이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 예산의 지원대상 및 단가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보조금 분할지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2755-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내차입금상환과 복리후생비를 경상경비로만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분할지출한바 있는데, 이처럼 내역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각 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br>○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의 분할지출 등 유사한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
| 48 | **대전의료원 및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사업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부실한 집행 예방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43-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대전의료원 설립 지원’ 및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지원’ 내역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및 취약지역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임<br>○ 2023회계연도에 각 의료원 설립 지원을 위하여 교부한 설계비(대전의료원 5억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12억원)가 모두 이월되는 등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대전의료원과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의 차질 없는 지방의료원 기능 수행을 위하여 건립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제공 서비스의 효과와 질 제고 및 소아청소년암 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암관리(2756-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암생존자지지사업 지원사업의 경우 각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별 수행 프로그램의 종류에 비하여 전담인력이 적고, 대부분의 센터에서 전담인력을 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권역센터별로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수가 최대 6.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br>* 대구경북권역센터 - 전담인력 3명, 참여인원 1,617명(전담인력 1인당 평균 539명 담당)<br>울산권역센터 - 전담인력 3명, 참여인원 244명(전담인력 1인당 평균 81.3명 담당)<br>○ 이와 같은 운영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균등성,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전담인력 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서비스 질의 제고 방안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 |
| 50 | **응급환자 미수금 상환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응급의료기금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28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5년 반동안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2만 9,987건, 지급액은 407억 5,800만원이나, 해당 기간 상환 실적은 1만 6,440건, 54억 9,300만원으로, 1만 5,451건에 해당하는 189억 400만원이 결손 처리됨<br>○ 이는 해당 업무 수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상환자의 상환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어려운 탓으로, 효율적인 상환업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 관련 상환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안정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의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내역사업은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병원 응급실에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점병원이 간호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br>○ 간호사 파견 요청과 실제 파견 내역을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파견 수요 대비 적은 수의 인력을 파견해 온 바,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2023회계연도의 경우, 27개 시·군, 31개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63명 파견 요청에 대해 17개 응급의료기관에 28명을 파견했고, 이는 요청 인원의 44%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후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내역사업은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 등에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원격협진을 위하여 거점병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임<br>○ 이와 관련하여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 회계연도 중에 종료되어 사업비의 40~60% 이상에 달하는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 | |
| 53 |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의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3234-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10년 운영 시작 이후 운영 중단 및 이용률(시설 전체면적 대비 이용률) 저조에 따른 시설 활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이용률이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이 많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2024년 사업종료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3237-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18-2024년 6년의 사업기간동안 총 304억 2,100만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의 주요 목표가 현대의학을 응용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실증적 제품 개발에 목적이 있음에도 실제 제품 출시 실적은 총 2건에 그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추진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2024년에 종료되는 동 사업의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할 것 | | |
| 55 | 수요에 기반한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R&D)(3237-308)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신규사업임에도 2억 2,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15건의 연구과제를 계획하였으나 13과제만 선정되는 등 사전준비과정에서 연구지원분야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준비과정에서 연구지원 분야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6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의 연구방법론 공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험정책관리사업(4931-301)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으로 추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및 전망 방법이 비공개되어 있는데, 재정전망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 재정전망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및 전망방법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론을 공개할 것 | | |
| 57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일관성 유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4931-30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예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수입의 15%를 편성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징금 세입예산액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과징금 예상수입규모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이 일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징금 세입예산액의 15%를 충족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 및 관련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보험재정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br>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지적사항 | ○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관련 고시를 2023년 9월에 개정한 바, 개정 이전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제도의 미이행으로 32억 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 및 사업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59 | **연구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겨 연구 과제의 적시 활용에 기여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3332-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18개 연구 과제에 대해 용역이 발주되었으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보상방안 연구’,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마련 연구’,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기획 연구’, ‘국가건강검진 내 조기 정신증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등 5개 과제는 계약 체결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연구 결과물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효과적인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한 충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비급여진료비 지원은 전년도 진료 환자 수 기준으로 권역센터별로 지원금액을 교부하고, 이후 환자 진료 실적에 따라 일부 조정하며, 국고보조금 예산 소진 후에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바, 2023년도의 경우 경기 1억 4,159만원, 충남 9,780만원 등의 비급여진료비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였고, 충남의 경우는 9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차년도로 진료일정 등이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구강진료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비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 | |
| 61 |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시부터 장애인 환자의 진료 편의 고려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실집행률이 10.6%에 불과한 것은 세종권역센터(6억 5,000만원)의 설치 지연 때문으로, 장애인 환자의 이용 편의 및 진료 효율 향상을 위해 설계 및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사 지연이 초래된 데 기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향후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시부터 장애인환자의 진료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수검률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지원을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3334-30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지원사업 대상자는 67만 3,000명이나 수검자는 23만 6,000명으로 수검률이 35.1%에 불과하였고, 최근 3년간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 대상자의 지원율이 연례적으로 17%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율에서도 경기 지역은 25%로 가장 높고 울산 지역은 11.5%로 가장 낮은 등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임<br>○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 비용이 1회성 검사비에 그치는 한계도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대기 등 접근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지역적 지원율 편차 시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 지원이 1회성 검사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3 | **금연상담인력의 안정적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금연상담전화의 경우 이직률이 2022년 26.7%에서 2023년 31.9%로 증가하였고, 근속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가 64.7%에 이르는 등 인력 운영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단가 인상 등을 검토하여 금연상담전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4 |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1년 49.2%, 2022년 47.2%, 2023년 69.4%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실집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안내 등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65 |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 유도 제고 및 지역별 성공률 편차 해소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12월 기준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1만 1,860명으로,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하여 60% 수준에 그치고 있고, 4주 평균 금연성공률과 6개월 평균 성공률은 큰 변동이 없이 각각 70.6% 및 32.6% 수준을 보이고 있고, 보건소별 성공률 편차도 2023년도의 경우 최상위 70.5%와 최하위 5.4% 등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금연클리닉 사업의 참여 유도 및 이용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소별 금연클리닉 성공률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상담 역량 편차를 좁히기 위한 상담사의 주기적 교육·역량 강화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금연캠프 사업의 연령대 편중 및 지역별 성공률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금연캠프 등록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치료형의 경우 50대, 60대가 65.7%,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59.2%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현재 흡연율이 남성은 40대(36.6%)→50대(32.5%)→20대(30.6%)→60대(28.2%), 여성은 30대(6.8%)→50대(6.1%)→20대(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대가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br>○ 4주 금연 성공률이 79.0%에 비하여 6개월 금연 성공률은 42.8%에 불과함<br>○ 4주 금연 성공률의 경우 17개 지역 금연지원센터별로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인바, 경기 남부·북부는 90%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강원도는 각각 55%, 64.6%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금연캠프에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6개월 금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금연성공률이 저조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대한 원인 분석을 기초로 성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등 기능 보강사업 실적율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기능 보강 지원에 대한 2023년도 실집행률을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0% 수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9% 수준으로 그 실적이 상당히 낮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 | | |
| 68 | **전용을 통하여 본예산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원칙적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연말인 2023년 11월 1일에 전용된 2억 9,300만원 및 내역변경된 민간경상보조비 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심리상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내에 그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이를 전액 이월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9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중독자 치료 예산액은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인 4억 1,000만원보다 더 많은 규모인 4억 7,400만원을 내역변경 및 전용으로 확보하여 집행하였는데, 마약류 투약사범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6,177명에서 2023년 10,899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향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치료 시설 확충 등 추가 재정 소요에 철저히 대비할 것<br>○ 보건복지부는 향후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 치료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 | |
| 70 | **마약류 중독재활치료비 미지급금 방지를 위한 예산대책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마약중독치료보호기관은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해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병동이 많았고, 실제 인천 참사랑병원은 외상치료비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증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치료비 미지급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1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전문인력 부족 및 낮은 예산 집행률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전문인력 부족 및 낮은 예산 집행률은 문제인바, 전담인력인 간호사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겸임인력으로서 적시에 응급환자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개선하고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외상 및 정신과적 평가의 신속한 이행으로 조기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72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정신건강증진사업(3346-301)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종사자는 4,553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66.3%에 이르는 등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3.3년에 지나지 않음. 또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전국 평균 25.2명에 이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퇴직률도 증가하는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및 종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동안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 인력의 이직률은 31.2%('19)→20%('20)→13.3%('21)→25.5%('22)→17.5%('23) 이며, 인력 채용 시 자살예방이라는 상담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필수 자격증 등 요구가 현재는 부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채용 미달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바, 인력 충원을 위한 처우 개선과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74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지역별 편차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현재 시행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유족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지역별 집행 상황에서도 대구, 세종과 같이 전액 집행된 지역이 있는 반면 충남(58%), 충북(67.4%), 강원(67.8%), 서울(85.1%) 등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유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지역별 집행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5 | **독립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분석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12월 기준 12개소의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 중으로, 이 중 독립형 센터는 2개소, 부설형은 10개소이며,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를 두지 않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의 전담팀을 두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세종·충북·전북·전남·경남 등 5개 지역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함께 독립형과 그 외 형태의 기관에 대한 심층적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자살예방센터의 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것 | | |
| 76 | **의사면허자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군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3033-349)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온 정책 방향이 지원체계 기반 정비 등 거시적인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의사과학자 진로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개별 의사면허자의 선호나 요구사항 등을 세심히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유인책'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br>- 의사과학자 소속 대학(원)은 국고보조율(2:1)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대학(원)의 관심 및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의지나 연구역량과 무관하게 사업참여에 한계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국방부는 군 필수 의학계열 전문과목 지정 시기 및 내용 등이 사전 예고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7 |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관리·운영(3033-5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전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인증 비율이 약 10.2%로, 특히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 성과가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사용인증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78 |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3034-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전체 의료기관 39,213개소 중 1,004개소(2.6%) 참여)로 나의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의 범위가 제한되어 서비스 개시 후 이용률 및 활용도가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및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9 |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관련 고시 정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의 비목 변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0년 1월부터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전신인 임상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8월 16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2022년 1월 12일 제정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므로, 민간위탁사업비에 해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0 |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기획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구중심병원육성(R&D)(3031-31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부터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연구중심병원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2기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인 ‘2기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성과관리 등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기획에 주의할 것 | | |
| 81 |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국민건강증진기금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부터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운용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br>- 2023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7,000억원으로, 누적 예수금은 4조 5,32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885억원을 이자로 상환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부터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에서 과도한 예수금 차입을 방지하고, 지출 구조조정 및 수입 확대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2 |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및 수납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6-596),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약 2배 수준임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연례적으로 60~70% 수준으로 저조함<br>-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 보관에 따른 이자는 기타재산이자수입 비목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됨에도, 2020년 이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 징수결정을 실시한 사업 중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과소계상 관행을 시정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결산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될 수 있도록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 | |
| 83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예산의 결산상 잉여금 규모 축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수입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지출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이 결국 당해연도 예산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귀결되어 이 잉여금이 차년도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br>- 2023년도에는 2022년으로부터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의 규모가 출연사업비의 52.2%에 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향후 전년도 이월액과 잉여금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4 |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의료급여 사업의 불용액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7.7% 수준인 7,000억 3,800만원으로, 이·전용 등 감액 360억 4,7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대비 집행되지 않는 금액은 8.1% 규모에 달함<br>○ 급여 대상자를 기초 1종 116만 4,000명, 기초 2종 39만명, 타법 1·2종 8만 3,000명으로 추계하였지만,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기초 1종 108만 8,000명, 기초 2종 35만 3,000명, 타법1·2종 8만 2,000명으로, 편성 인원 대비 실집행 인원이 적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과다추계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5 | **누적 적립금 운용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음<br>- 시·도가 단순히 국고지원액과 지자체 매칭액을 한꺼번에 건보공단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건보공단에 이를 예탁·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계속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는 문제가 있음<br>- 기금의 재원 자체가 보조금이고, 기금 운용의 취지가 급여비용 재원의 충당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기금의 과도한 적립과 미지급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금의 누적적립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6 | 예산편성의 잦은 이·전용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에 미교부된 예산(총 7,360억 5,200만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3,616억 700만원, 49%)이고, 그 다음으로 미지급 지원비(3,383억 9,300만원, 46%)임<br>○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미지급금 지원 예산은 2022년 2,392억원의 예산 이·전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손실액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br>2022년 대규모 예산 이·전용이 2023년도의 미지급금 지원비 편성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2023회계연도의 대규모 예산의 불용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br>-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왔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잦은 이·전용으로 인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불필요한 절차를 지양할 것 | | |
| 87 | 면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활사업(1137-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자활근로 사업은 예산 확정 시 인상한 단가를 연도 중인 3월에 바로 조정하면서 전용(증)하였는데, 전용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예산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3년 3월 자활근로사업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예산 확정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단가를 인상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내역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 추진 추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변경하는 등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8 |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신속한 정산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1137-309)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예산 편성 인원 대비 실 가입인원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자체 실집행실적 또한 교부 예산액 2,269억 600만원 중 1,954억 6,800만원만이 실집행(86.2%)되어 높지 않음<br>○ 국비와 지자체의 매칭액을 예탁금으로 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개발원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반납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반납이 지연되고 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산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89 | **계약 해지 관련 원만한 후속 처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00)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감사원 감사결과, 과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 개통을 강행하여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 문제가 발생한 사건임<br>- 1·2차 개통 이후 발생한 전산 오류가 지속되어 당초 2022년 10월 및 2022년 11월 개통 예정이었던 3차·4차 개통이 지연되었고, LG CNS 컨소시엄 측은 3차 및 4차 개통을 완료하지 않고 수익성을 사유로 사업 철수를 결정, 조달청은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는바, 선금 등의 반환 요구 및 처분 취소소송 등이 진행중임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약 해지 관련 대금 반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송 등 후속 처리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추궁 및 관리감독 방안과 향후 예산 편성 계획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0 | **잔여 과업의 조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감사원 감사결과, 과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 개통을 강행하여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 문제가 발생한 사건임<br>○ 차세대 시스템 잔여과업은 전자바우처 및 사회서비스 분야 개별시스템 통합 등 3차 개통, 통합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4차 개통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오지급된 사례 파악 및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의 잔여 과업의 조속한 추진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통합대상 개별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별도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부수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조속히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지연에 따라 임시조직 운영, 감사 및 연구 소요 등이 발생하여 비목별 조정·전용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실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1 | **조속한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1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시스템 통합 지연에 따라 사업비 실집행률이 저조함<br>-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당초 2022년 11월로 계획했으나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하기 위해 2023년 2월 실시하였고, 이후 수요조사를 2회(2023년 5~6월) 추가하여 당초보다 7개월가량 늦게 사업을 착수함<b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개별시스템 17개를 1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현재 3개 개별시스템만 통합 구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 미 통합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통합시스템 개통 일정은 미정인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총사업비 협의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과업 도출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 | |
| 92 |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적용기준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연급 수급자 수는 2018년 513만명에서 2023년 651만명으로 5년간 약 21%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7%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동 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9.1조원에서 18.5조원으로 증가함<br>○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실효성이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3</td><td rowspan="3">기금운용<br>전문인력 확충<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연금기금 - 공단관리운영 인건비(7378-6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문성 높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 방안’(2023년 6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자 대비 퇴직자 비중도 높은 수준임<br>※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br>(단위: 명)
<table>
<tr><th>구 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6월말)</th></tr>
<tr><td>정원(A)</td><td>297</td><td>301</td><td>341</td><td>380</td><td>376</td><td>426</td></tr>
<tr><td>현원(B)</td><td>266</td><td>278</td><td>314</td><td>319</td><td>345</td><td>371</td></tr>
<tr><td>결원(A-B)</td><td>31</td><td>23</td><td>27</td><td>61</td><td>31</td><td>55</td></tr>
</table>
주: 기금운용본부+준법지원실+국민연금연구원 정원 기준으로, 2019~2022년까지는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운용직 정원(4명)이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미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기금운용직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4 | **정부·공공기관 회의시설 활용 기준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연금기금 - 기금관리운영비(7376-2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정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회의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출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정부·공공기관 회의시설을 활용하여 회의시설 임차료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수립할 것 | | |
| 95 | **해외사무소 정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해외 대체 투자의 위탁수수료가 2022년 기준 1조 8,137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br>○ 그런데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의 기초 인프라인 해외사무소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br>- 최근 6년간 해외사무소 현원이 정원보다 20% 이상 부족하고, 런던사무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원을 0명으로 조정하였음(2023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해외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기준인원 등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견경비와 파견수당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발된 인력의 차질 없는 파견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외사무소 파견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6 | **해외 파견종료 인력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해외파견 종료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해외 파견종료 인력의 이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파견인력의 이탈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처우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책을 모색하여 해외 파견인력의 이탈률을 낮추는 한편,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인재 영입 방안을 모색할 것 | | |
| 97 |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급여지급(7631-401)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계획액(당초) 대비 집행액 비율은 2022년 111.1%, 2023년 107.8%로 최근 2년 사이 오차율이 크게 증가하였음<br>- 과소추계로 큰 규모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재정 총 규모가 과소추계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목표로 할 적정 재정규모를 산출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의 계획액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국가재정 규모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과소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8 |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br>- 예산현액 200억 7,600만원 중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80억 2,1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실집행은 17억 4,200만원으로 62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8.7%)<br>- 보건복지부는 ‘현장의견수렴 진행 및 공모 절차’ 등으로 선정이 지연되고, ‘지방비 매칭’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청년 맞춤형 홍보와 인식 개선 등 홍보 강화 및 사업 수요 등의 정확한 추계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취약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9 | 사업 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사업계획 발표는 3개월, 사업 추진은 4개월 가량 지연되어 추진됨<br>❍ 이에 따라 집행액 77억 9,300만원 중 15억 7,500만원을 실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8.5%로 매우 저조하고, 8개 시도에서 실집행률이 20% 이하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집행가능한 예산의 교부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사업 홍보의 확대, 이용자 발굴 및 모집 다양화 방안을 찾고,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며, 사업 실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br>❍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청년, 중장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장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br>❍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용 대상 확대, 특화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가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2023년 계획 대비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사업비 실집행률이 8.5%로 저조하므로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수 및 서비스 단가 등을 고려한 현실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0 | **펀드 운용계획 조정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2635-316)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정책펀드의 출자율보다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이 낮아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br>- 동 사업의 경우 정책펀드의 출자율이 69%(당초 계획은 72%)로서 타 펀드에 비해 높은 편이나,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이 약정총액의 60%에 불과하여 실제 정부의 재원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 투자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정책펀드의 출자율을 하향하거나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정책펀드가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1 |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및 계좌 중도 해지에 따른 미수납금의 환수에 대한 징수결정 방식 시정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 87,847명 중 63,200명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대상 아동 대비 가입 아동수 비율이 75.9%로 연례적으로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음<br>○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에 따라 환수금은 1억 6,800만원 발생하였음에도 3,666만원만이 징수결정되어 환수되었음<br>○ 계좌 가입률이 2020년 89.6%에서 2023년 71.9%로 하락하고 저축률도 2022년 대비 2%p 하락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아동발달지원계좌 미인출금액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만기 후 미인출금액에 적용되는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br>○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정부지원 매칭금은 환수해야 하는바,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 현황은 전체대상 확대에 따라 2020년 83명에서 2023년 14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가입률 제고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률, 적립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환수 시 현재와 같이 환수가능금액만을 징수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보건복지부는 가입대상 및 저축률을 적정 규모로 산출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 확대에 따라 가입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인출 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주의할 것<br>○ 보건복지부는 해당 계좌의 금리구조 개선을 통해 만기 후 미인출 아동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의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의 연도별 미적립 아동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미적립 비율이 높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계좌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2 | **아동수당 지급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등 고려한 추계 및 사업효과성 등을 고려한 지급대상 범위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동수당 지급(2539-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정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활용하여 총 249만 8,776명을 지급대상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내출생 아동만 추계하여 편성하고 해외출생 및 난민 아동, 특별기여자 등을 지급 대상에 반영하지 않음<br>○ 현재 정부의 양육지원 현금성 지원사업은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에 입학하면 지원이 중단되어 정부 지원과 실제 양육 비용 지출 간 간극이 존재하며, 심각한 저출생 상황임에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아동수당 지급연령 기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br>-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6세 미만이 기준인 국가 8개국, 18세 미만이 기준인 국가가 18개국으로, 8세 미만이 기준인 국가는 한국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예산 편성 시 해외출생아, 난민, 특별기여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 아동 수 변동 현황을 통한 수급 비율 추이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면밀히 추계할 것<br>○ 보건복지부는 타 양육수당 지원 사업 및 해외 사례, 사업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검토할 것 | | |
| 103 | **부모급여 지급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3143-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부모급여를 현금과 바우처 혼합 지급방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시설 입·퇴소나 부모급여로 지출할 수 있는 서비스(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를 변경할 경우 유형별 서비스의 세부 이용 절차가 상이하여 별도 신청이나 비용 산정 방식의 차이 등을 유발하는바, 부모급여 지급 누락이나 오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아동의 경우 활용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바우처 지급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급여 실태조사 및 지급 만족도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4 |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상담서비스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연금기금 -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지역노후준비센터로 지정된 기관(5개) 중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2곳에 불과하여 노후준비상담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중 상담서비스 제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5</td><td rowspan="3">전용재원으로서의<br>역할 지양 및<br>노인일자리<br>유형별 안전대책<br>수립 등 질적<br>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도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여러 사업의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본예산</th><th>추경(A)</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B)</th><th>집행액(C)</th><th>실집행액</th></tr>
<tr><td>2020</td><td>1,201,501</td><td>1,329,649</td><td>△30,000</td><td>1,299,649</td><td>1,299,565</td><td>1,151,750</td></tr>
<tr><td>2021</td><td>1,315,156</td><td>1,330,679</td><td>—</td><td>1,330,679</td><td>1,330,633</td><td>1,284,907</td></tr>
<tr><td>2022</td><td>1,442,195</td><td>1,442,195</td><td>△4,041</td><td>1,438,154</td><td>1,438,070</td><td>1,410,722</td></tr>
<tr><td>2023</td><td>1,540,016</td><td>1,540,016</td><td>△3,700</td><td>1,536,316</td><td>1,536,278</td><td>1,488,798</td></tr>
</table>
❍ 노인일자리의 중도포기율은 2020년 10.5% 대비 2023년 11.1%로 증가하였으며, 안전사고는 2023년 총 3,086건으로 전년 대비 86.1% 증가함<br>❍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보수 단가는 시간당 9,667원로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사업기간은 11개월임<br>❍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지역별 대기자 편차가 있으며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용재원으로 역할은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자체집행에 집중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중도포기율, 안전사고 발생추이·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노인일자리 유형별로 체계적인 안전대책, 노인활동역량 지표 등을 마련 및 개선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할 것<br>❍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율을 고려하여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보수 단가를 인상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br>❍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었고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율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6 | **연내 집행가능성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업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0~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집행률은 20.4%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br>○ 자재비 등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 과다 발생 및 신축부지 매입 비용 과다 발생, 시설 재정 악화 등 대부분 재정적 이유로 중도 포기시설이 다수 발생함<br>○ ‘환기시설 설치’, ‘CCTV 설치’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 및 설계, 공사가 연례적으로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건축단가 및 기준면적 등 연내 집행 가능성을 토대로 예산편성 및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업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것<br>○ 보건복지부는 환기시설·CCTV 설치 등 실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br>○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면밀한 수요조사 실시,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건축단가 및 기준 면적을 토대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7</td><td rowspan="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부당청구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884건, 환수결정된 부당청구액은 3,414억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의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td></tr>
<tr><td rowspan="3">108</td><td rowspan="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0~2023년 활동지원 급여 이용률 실적은 2020년 81.6%에서 2023년에는 80.4%로 감소하는 추세임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3목표치 산출근거</th></tr>
<tr><td rowspan="3">활동지원급여 이용률(%)</td><td>목표</td><td>83.9</td><td>82.6</td><td>81.7</td><td>81.7</td><td>81.8</td><td rowspan="3">최근 3년간 평균 급여 이용률 설정</td></tr>
<tr><td>실적</td><td>81.6</td><td>81.3</td><td>80.3</td><td>80.4</td><td>-</td></tr>
<tr><td>달성도</td><td>97.3</td><td>98.4</td><td>98.4</td><td>98.4</td><td>-</td></tr>
</table>
○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미이용 사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3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는 활동지원사 부족이 가장 높았음. 또한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사 비율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0.7명에 불과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이용률 제고를 위해 미이용 사유 파악,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9 |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과 활동지원사가 있음<br>-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은 활동지원급여 구간 및 지원 시간을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 직원이 종합조사 근무경력이 없으며 업무 배치인력 순환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음<br>-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2023년 기준, 전체 활동지원사(112,750명) 중 여성이 87.6%, 50~70대는 79.22%로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관련 교육강화, 처우개선 등을 통해 활동지원 인력과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1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의 면밀한 예산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의 평균 이용률은 70.7%이며, 이용률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중 7개,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는 평균 이용률 55.6%, 이용률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8개로 지역별 서비스 이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br>○ 특히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2023년 기준 40-49세는 3.0%, 50-59세는 2.1%, 60-69세는 0.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1인당 실제 평균 이용시간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활성화 및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실집행률은 각각 79.4%, 70.9%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2021-2023년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주간활동서비스 63.4%, 방과후활동서비스 47.1%)<br>- 2021~2023년 주간활동지원서비스와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실적은 목표 대비 63.4%와 47.1%에 그침(2023년은 89.6%와 66.5%)<br>- 또한 발달장애인 수 증가에도 이용자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수준에서의 집행 부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원인파악과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강화체계 구축을 하고, 제공기관 평가, 연령별 사업 유인책, 사업 홍보, 국고보조율 조정, 활동지원급여 차감 축소, 급여량 증대, 65세 이상 이용자 제한 폐지, 사업 집행현황을 고려한 추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업비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바, 장애 연령별 사업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제도개선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2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1535-31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모의적용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부여되는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20%를 일상생활 등 6개 영역에 지출하거나, 특수자격 인력 이용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됨<br>- 활동지원 급여 수준(서비스 제공 시간)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하며, 중도포기자도 발생함(2023년 사업 참여자 123명 중 34명 중도 포기)<br>- 참여자 중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에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이용이라는 개인예산제도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뿐만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예산제에 포함시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서비스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 | | |
| 113 | **기타민간이자수입 과목 편성 및 징수결정 실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민간전대차관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융자원금 및 이자의 납입시 융자원금 및 이자 잔액에 대한 이자(연 2%) 및 상환기한 도과시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해당 세입 예산과목인 기타민간이자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을 실시하지 아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기타민간이자수입 과목을 편성하고 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비목의 상환기한 도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철저히 실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4 | 전공의등 육성 지원사업의 필수의료인력 육성 기여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임<br>- 2023년 전반기 모집 기준 단기연수 지원대상 총 12과목 중 정원 대비 확보율이 70%를 넘은 과목은 4과목에 불과하고, 술기교육 지원 대상과목의 2023년 전공의 확보율은 25.5~77.5%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에 관한 국가의 책임성을 고려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
| 115 |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의 성과 달성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임상교수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의정갈등으로 인하여 전공의 확보에 차질 발생이 우려됨<br>- 2023년말 기준 공공임상교수 모집예정인원 150명 중 28명 모집에 그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동 시범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 및 전공의 확보 전략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6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예산 지원을 받은 간호대학들이 시뮬레이터 등 실습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침대옆 탁자, 환자감시장치, 전자칠판, 데스크탑 등 시뮬레이터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발생함<br>○ 동 사업을 통한 취득 장비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간호대학에 공통 적용되는 별도의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년도 이후 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에 대하여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서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물품 구입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br>○ 보건복지부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취득 장비의 보유·사용·관리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공동활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 | |
| 117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2740-311) | 주의,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사업 추진과정 중 공모-재공모 절차 진행, 추가적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작업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전반적인 사업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년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음<br>○ 2023회계연도 보조금 예산 교부가 연도말(11월)에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주체에 교부된 예산 40억원 중 15억 3,500만원(38.4%)만 실집행되어 관련 예산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상시 집행점검을 수행할 것(제도개선)<br>○ 보건복지부는 전문요양병원 건립 후 중증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인력 확보계획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8 |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2740-30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1~2023년) 평균 실집행률이 25.2% 수준에 불과함<br>○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공공전문진료센터 신규 지정 공고 및 선정 절차 이후 기능강화 사업 공모가 7월부터 진행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에도 각 수행기관별 행정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현액 36억 5,500만원 중 53.5%인 19억 5,600만원만 실집행됨<br>※ 실집행액은 '24.3월 기준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확인된 금액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차년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119 |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 개선 및 지역의사제 등과 연계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2750-303)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예산 편성상 의대생 및 의전원생 선발 목표 인원은 20명이나, 최근 5년간(2019~2023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실제 지원을 받은 의대생 및 의전원생의 비율은 평균 52% 수준으로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함<br>- 간호대생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최근 3년간 평균 3.8배에 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 실적 및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사제 등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0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법정비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1-300)<br>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2-300)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국고지원율은 14%를 약간 상회하는 상황이며, 국고지원금액 계상 시 예상수입액이 과소계상되어 실제지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br>○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의 교부를 과도하게 지연하여 건강보험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무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법상 제시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연간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교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법상 제시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1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1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2023년 지원목표 인원 22,216명 중 실제 상병수당을 지원받은 인원은 5,911명(26.6%), 2단계 시범사업은 4,818명 중 939명(19.5%)에 그치는 등 지급실적이 부진하였는데, 이는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한정한 점, 65세 이상 고령층 배제, 낮은 보장수준, 인지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br>○ 2023년도 1단계 시범사업은 전체 의료기관 중 16.5%, 2단계 시범사업은 15.7%만 등록하는 등 의료기관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 확대, 보장수준 제고, 고용유지, 접근성 제고, 인센티브 마련, 인지도 개선 등 본사업에 대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대기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지원 목표 및 소요재정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연례적인 실적 부진 및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2 | **건강보험재정 예산 편성 ·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보험재정 | 주의,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예산으로 자체예산사업인 ‘자격부과사업’, ‘보험급여사업’, ‘건강증진사업’, ‘정보화사업’, ‘행정지원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지출’의 7개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br>- 7개 ‘사업’의 세부단위인 20개 ‘단위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예산액의 10% 이상으로 높은 사업이 8건에 달함<br>○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건강보험 재정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재정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의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례적인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보험재정의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주의)<br>○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3 | **연례적인 초과집행 관행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보험재정, 장기요양보험재정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례적으로 예산의 변경(이·전용 및 조정 등) 조치 없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집행의 근거가 미흡함<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에 수립된 예산보다 많은 집행이 예상될 때에는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변경(이·전용 및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 절차의 번거로움을 우회하기 위하여 초과집행이라는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br>*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 심의·조정 등 검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액을 확정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안 확정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과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산 변경 절차를 준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4</td><td rowspan="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계약 체결 시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할하여 추진한 사례 재발 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건강증진기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두 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하나의 계약을 통합 발주하거나 일반회계사업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재원을 별도의 계리를 통하여 관리하지 않고,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함<b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체결한 일부 계약의 예 ]
<table>
<tr><th>계약명</th><th>계약액</th><th>구분</th><th>세부사업명</th></tr>
<tr><td rowspan="2">2023년 방문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td><td rowspan="2">50,000천원</td><td>회계</td><td>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td></tr>
<tr><td>기금</td><td>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td></tr>
<tr><td rowspan="2">2023년 음주폐해예방 홍보 운영</td><td rowspan="2">99,875천원</td><td>기금</td><td>음주폐해예방관리 (3340-300)</td></tr>
<tr><td>기금</td><td>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 또는 회계와 기금에서 분할하여 추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5 |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업 연례적 실적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업의 수행기관 설치(확보)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설치 목표 62개소 대비 총 63개소를 설치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감소하여 2020년 78.4%, 2021년 87.5%, 2022년 87%, 2023년 83.2% 수준으로 매년 예산 편성 시 계획하였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8개 시·도(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의 경우,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자살시도자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br>○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업은 당초 설치 목표 대비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서비스 동의율 및 사례관리 서비스 수행률 등 관련 성과가 일부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126 | **연구중심병원 성과제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연구중심병원육성(R&D)(3031-31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연구·산업화 수입 비중, 연구개발 자립도 등)가 저조하거나 정체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적절한 사업 지원 방식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7</td><td rowspan="3">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연구과제 제재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031-38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중대한 협약변경, 연구개발과정에서 불량과 거짓, 완전자본잠식 등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된 일부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 대부분이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바, 연구과제 선정 과정 및 부처별 사업단 운영 전반 등을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 과정을 포함하여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고 범부처 사업의 부처별 사업단 운영 전반을 점검·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128</td><td rowspan="3">연구과제 중단 사유 점검 및 성과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031-38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4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br>[최근 4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 과제 중단 현황]<br>(단위: 건)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신규 과제</th><th rowspan="3">중단 과제</th><th colspan="4">중단 사유</th></tr>
<tr><th rowspan="2">연구자 요청인정</th><th colspan="3">단계평가 결과 중단</th><th rowspan="2">기타</th></tr>
<tr><th>단계</th><th>중간</th><th>특별</th></tr>
<tr><td>2020년</td><td>754</td><td>7</td><td>6</td><td>-</td><td>1</td><td>-</td><td>-</td></tr>
<tr><td>2021년</td><td>447</td><td>6</td><td>4</td><td>-</td><td>2</td><td>-</td><td>-</td></tr>
<tr><td>2022년</td><td>671</td><td>15</td><td>8</td><td>1</td><td>-</td><td>2</td><td>4</td></tr>
<tr><td>2023년</td><td>743</td><td>17</td><td>8</td><td>-</td><td>-</td><td>9</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중단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해 당초 기획한 연구 목표 및 성과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9</td><td rowspan="3">연구과제별 별도 사업단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031-38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별 연구과제에 대하여 별개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경우 운영비 중복 지원, 집행 시차 발생, 사업단 별도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별도 사업단을 구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td></tr>
<tr><td rowspan="3">130</td><td rowspan="3">계획적인 예산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3035-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은 이·전용 감액된 후 다시 증액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최근 4년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 이·전용 등 현황]<br>(단위: 건,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건수</td><td>14</td><td>32</td><td>39</td><td>23</td></tr>
<tr><td>증감액(총)</td><td>2,369</td><td>3,176</td><td>5,426</td><td>8,306</td></tr>
<tr><td>증감액(순)</td><td>△486</td><td>48</td><td>3,564</td><td>6,755</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1 |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제약산업 육성·지원(3039-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K-글로벌 백신 펀드는 당초 조성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투자대상이 제약·백신 이외에 의료기기·헬스케어·바이오 인공장기 등을 포괄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제약·백신 비중이 축소되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펀드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 | |
| 132 |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3039-303)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2호점 신규 개관을 위한 7억 6,400만원 전용(증)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적절한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의 전용을 통한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단 전용을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3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개산급의 신속한 정산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서 지원되는 개산급의 경우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재정의 결손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국 국고 예산의 낭비로 귀결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br>○ 개산급으로 지원된 의료기관의 전체 지원개소 대비 정산 개소수를 보면, 2024년도 6월말 현재 477개소(변동없는 기관 포함)로 전체 지원 의료기관인 620개소 대비 77% 수준이며, 전체 지원금액 8조 6,582억원 대비 37.4%인 3조 2,407억원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서 지원되는 개산급 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134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 | 주의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이나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2023년 12월말 기준 위탁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 전부가 미집행됨<br>- 당초 편성 당시 계획 병상(1,700개)보다 실제 수요(취소반영 755개)가 부족함<br>- 국고보조율이 50%로 2021~2023년 ‘병동형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국고보조율(100%)에 비해 낮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의 실행가능성·재정부담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진행상황과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보건복지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수요 및 사업 추진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어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5 | **적립금 운용 수익률 향상 방만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부서의 전문가 채용비율이 저조함<br>- 타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운용수익률 대비 수익률 저조(2023년 국민연금은 13.59%, 공무원연금은 10.2%)<br>- 적립금 운용은 국민건강보험 자금운용부(총괄 1인 외 10명)에서 담당하며, 구성이 일반직(행정) 9명, 경력직 2명으로 이루어짐. 특히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6인 모두 일반직(행정)으로 구성(6인 중 5인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운용 수익률 향상을 위해 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36 | **첫만남이용권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성과 분석**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첫만남이용권 지원(2533-306)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2021~2023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산으로 총 2조 1,259억 1,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21년 대비 2023년 86.6% 증가하여 향후 출산지원금 재정 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br>- 막대한 예산이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에 투입되었음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경우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의 경우 지자체 간 편차가 존재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사업 효과성 분석이 미비하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7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조직 내실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2537-302)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원의 64.5%가 파견공무원, 21.5%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및 2021년 61.0%(현원 41명 중 25명), 2022년 62.1%(현원 29명 중 18명), 2023년 62.9%(현원 35명 중 22명), 2024년(현원 53명 중 40명) 75.5%로 전년 대비 파견공무원의 비율이 12.6%p 증가함<br>- 2023년 기준 파견직 공무원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3개월로 범부처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 업무를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
| | | 시정요구사항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전체 인력의 75.5%가 파견공무원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 적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내실화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
| 138 |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기준 개편 대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시한 기초연금 개편(안) 공론화 결과('24.4.21), 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급여 상향 의견이 52.3%로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 축소 및 차등지급 의견(45.7%)보다 6.6%p 높게 나타남<br>- 그러나 다수안(52.3%, 수급범위 유지·급여 상향)과 소수안(45.7%, 수급범위 축소, 차등지급)이 오차범위(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4.42%p) 내에서 격차를 보임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의 개혁에 따른 향후 기준 개편에 대해 대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9 |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영역 보완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이 하기 힘들고 꺼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함<br>- 그러나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운영과 같은 민간 선호서비스 영역에 주력하고 있고,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시에도 민간기피서비스 지원은 저조함<br>* 민간기피서비스 수혜 대상자 수: 277명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영역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기피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0</td><td rowspan="3">기금운용위원회<br>당연직 위원<br>참석률 제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연금기금 - 기금관리운영비(7376-2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각 부처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br>※ 최근 5년간(2019~2023년) 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 참석 현황<br>(단위: 회, %)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전체<br>개최횟수</th><th colspan="6">당연직위원 참석횟수</th></tr>
<tr><th>복지부장관<br>(위원장)</th><th>기재부<br>차관</th><th>농림부<br>차관</th><th>산업부<br>차관</th><th>고용부<br>차관</th><th>연금공단<br>이사장</th></tr>
<tr><td>2019</td><td>9</td><td>9</td><td>8</td><td>-</td><td>-</td><td>-</td><td>9</td></tr>
<tr><td>2020</td><td>10</td><td>8</td><td>3</td><td>1</td><td>-</td><td>2</td><td>10</td></tr>
<tr><td>2021</td><td>11</td><td>9</td><td>3</td><td>-</td><td>2</td><td>1</td><td>11</td></tr>
<tr><td>2022</td><td>6</td><td>2</td><td>3</td><td>-</td><td>1</td><td>-</td><td>6</td></tr>
<tr><td>2023</td><td>6</td><td>3</td><td>3</td><td>-</td><td>1</td><td>2</td><td>6</td></tr>
<tr><td rowspan="2">합<br>계</td><td>42</td><td>31</td><td>20</td><td>1</td><td>4</td><td>5</td><td>42</td></tr>
<tr><td>(100.0)</td><td>(73.8)</td><td>(47.6)</td><td>(2.4)</td><td>(9.5)</td><td>(11.9)</td><td>(100.0)</td></tr>
</table>
주: 괄호 안은 전체 개최횟수 대비 참석률을 의미<br>자료: 보건복지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1 | **연구비 집행내역 등록 관리 업무 철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R&D)(3130-377)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제70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연구비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 연구비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br>- 그러나 연구비를 집행한 후 연말에 등록함에 따라 통합 Ezbaro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집행률과 실제 최종집행률이 많게는 6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등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142 | **의료인력 양성 적정수급관리 사업 난항 예상**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의대증원 확대 논란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었고,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함<br>- 이로 인해 내년도 전공의 모집도 사실상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계획을 준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3 |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전면 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2750-303) |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 | | 지적사항 | ○ 의대생 및 의전원생 참여가 근본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br>- 의대증원 확대 논란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었고,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함<br>- 이로 인해 내년도 전공의 모집도 사실상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 | |

## 2. 식품의약품안전처(2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관련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2025년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식약처장은 담배 종류에 따라 유해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종합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만으로는 금연 유도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제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br>○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의 범위와 측정방식을 향후 식약처고시로 규정할 계획인데, 식약처에서 유해성분 측정방식으로 ISO 인텐스 방식을 규정할 경우 동일한 담배임에도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타르, 니코틴의 함유량과 식약처가 공개하는 타르, 니코틴의 함유량이 달라지게 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해성분 함유량 측정방식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수요를 반영한 교육계획 및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1031-30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2019년 12월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이 의무화(매년 7시간, 임명된 최초의 해는 21시간)된 이후, 매년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초과되고 있고, 2023년 경력자 대상 현장실무분야 교육의 경우 회당 교육인원이 최대 111명(적정 교육인원 35명)에 달하는 등 지자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할 것 | | |
| 3 | **식품위생교육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1032-307)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총 10개의 식품위생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8개의 동업자조합, 한국외식산업협회)의 교육운영 및 회계관리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함. 이는 식약처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식중독 예방 및 관리(1232-30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은 2023년 기준 6.6%에 불과하고, 2년의 유효기간 경과 후 위생등급 재지정 신청률도 57.7%에 그치고 있어 재지정 유인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br>○ 각 지자체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두 제도는 '위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표지판 교부 등 지정에 따른 혜택도 유사하나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업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5 | **재이월 고려한 예산편성 및 인과성 인정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실집행률은 44.9%로 저조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3억 3,2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향후 4년간 지속해서 재이월될 것으로 예상됨<br>- 2023년 12월 기준 총 14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해구제 급여대상에서 제외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시 재이월 등의 집행 상황을 반영하고, 의약품 피해구제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인과성 인정 및 지급 예외사유가 과도하게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지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의약품 품질고도화를 위한 QbD 도입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의약품 품질고도화(2033-302)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사업 시행 10년이 경과하여 QbD 적용모델 개발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약업체의 QbD 도입률은 44.1%에 불과함<br>- 제약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의 부재와 과도한 개발비용 등이 QbD 도입이 어려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무 전문가 양성, 비용부담 완화, 업계와의 소통, 스마트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등을 통해 QbD 도입률을 제고할 것 | | |
| 7 | **참여형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031-301)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신규 구축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VR기기 등을 활용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참여형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br>○ 기구축된 플랫폼의 기술상 문제로 접속자 수와 사용실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지표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여형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방식의 적절성 검토 및 기구축된 플랫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시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이용률을 집계하는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마약류 폐해 대국민 인식도 조사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032-30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폐해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단순 설문조사한 것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자의 인식도 제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 | |
| 9 | **세목조정 필요시 절차 준수 및 비목에 맞는 보조금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2131-30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주차 관제시설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세목 조정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해야 하는 공사비를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예산집행 관련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개방형 시험실 사업운영의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개방형 시험실의 운영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향후 신규 업체의 진입 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실 내부의 냉난방기 고장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시험실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정책 취지에 맞게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시설을 정비하는 등 사업운영을 내실화할 것 | | |
| 11 |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의 본사업 운영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3032-30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동 사업을 위한 예산은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분산 집행되었고, 사업 특성상 지속적인 이상사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3년 한도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운영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기술료 징수 관리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R&D)(4031-303)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 종료된 동 연구사업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기준 누적 수납액이 1억 8,100만원에 불과하여 총 계약금액 대비 기술료 수납률이 12.8%로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료된 연구사업의 기술료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 | |
| 13 | **신고포상금 집행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입식품 안전관리(1515-300), 농축수산물 안전관리(1231-301)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5031-301)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식약처 소관 포상금(310-03목) 중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은 2023년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435만원(21.8%)이었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매년 700만원 중 50~60% 수준의 집행액을 보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도 집행률이 매년 10%대로 나타났음<br>○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과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만 안내 게시를 하였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경우 특정 2명의 신고인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포상금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홍보를 강화할 것<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감안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가산금(58-581) |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2.3%인 58억 3,300만원으로, 이는 2020년 미수납액(35억 8,500만원) 대비 62.7% 증가한 수치임<br>○ 2020년 및 2022년도 결산 심사 시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현재까지의 징수를 위한 대책들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징수절차 진행과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사업 추진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1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 4월 24일 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 고시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총한도액(향후 5년간 정부지급금: 427억 5,800만원) 등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을 위하여 사업이 보류되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음<br>○ 2024년 8월 현재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현황을 보면, 제21대국회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만 개정·시행('24.7.24.)되었을 뿐, 관련된「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은 아직 개정되지 못한 상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민간투자로 진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할 것<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지급금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향후 새로 사업 추진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HACCP제도 활성화(1032-300)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 사후관리 평가 대상 HACCP 인증업체(12,765개소) 중 현장평가 실시업체는 6,841개소(53.6%)에 불과하였고, 평가 결과 부적합률이 약 10%에 달하였음<br>- 식약처는 HACCP 의무적용 확대로 인증업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사후관리 전문인력(총 29명)으로는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2020년 3월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현장평가 면제 대상업체 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관리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현장평가를 확대하는 등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 |
| 17 |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관련 가중치 부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1232-311)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대상집단이 어린이로 한정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비교하여 업무의 다양성과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 및 직원 운영기준은 등록되어 있는 '급식소 개수'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동일하게 적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조금에 차등을 둘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성과지표 개선 및 지속적인 사업확대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1232-311)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양적 지표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율’ 인데, 지원 급식소의 만족도 등 장기적으로 사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함<br>○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년차 팀원의 기본급은 약 196만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1만원에 미달하며, 맞춤형 식단 지원 등 여러 급식소를 관리하는 사업 특성상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인건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원 급식소의 만족도 등 사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지표로 개선하며, 영양사 등 인건비 지급기준 및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개선 및 사업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2032-301) | 주의,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원자를 선발하는 심사기준과 지원금액을 변경함에 따라 선발 여부에 대한 환자들의 혼선을 초래함<br>○ 해당 사업은 2023년에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는데, 중위소득 125%인 자에 대한 지원이 절반 수준(49.4%)을 차지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사업대상의 과도한 확대로 인하여 저소득계층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행상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일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여 환자들이 지원 가능성 및 지원금액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 | |
| 20 | **예산 외 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이월액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2032-301)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구매·공급한 뒤 회수대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회전자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br>○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3억 5,2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한데(64.8%), 2024년부터는 회전자금 운용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예산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이월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국가필수의약품 구입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이월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전자금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을 확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운용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부담금 적립금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부담금 운용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br>- 매년 부담금 지출액은 22억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신규 적립액은 50~55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적립금 증가가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담금 수입 측면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요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부담금 지출 측면에서 부담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피해구제 인정방식을 확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2 | **계획성 있는 전용과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031-301) |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연도 중 예산액의 10%가 넘는 전용과 세목조정이 발생하였는데, 하나의 비목에서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등 집행에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 (예시)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1억 7,500만원 세목조정 증액(6.8.) → 미국 마약중독재활센터 MOU 체결 등을 위한 세목조정 감액(7.17.)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증액을 위한 전용 감액(9.15.) → 홍보비 잔금 집행 목적 전용 및 세목조정 증액(12.7.)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의 비목에서 전용 등의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행위를 지양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 방안 검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상용임금(110-03), 고용부담금(320-09), 복리후생비(210-12) |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개별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매년 전용 및 내역변경이 발생하고 있음<br>- 2023회계연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체 120개 세부사업 중 51개 사업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편성·집행하고 있어 연중 인력 변동에 따라 부족 또는 불용액이 사업별로 상이하여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의 전용 및 내역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4 | **천연물안전 관리원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 | 주의, 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지적사항 | ○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사업 초기 재원분담 및 사업방식에 관한 준비 미흡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사업이 순연되어 실집행실적이 저조<br>-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br>○ 현행법상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기능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약처 산하기관으로의 설립 및 예산 반영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br>*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속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측면이 있으므로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 및 국회 시정요구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 3. 질병청(38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조사·분석·평가 등 사업비의 일반연구비 편성·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조사·분석 등 사업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바, 일반회계에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세부사업에서 ‘2023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통계 생산 및 분석’ 등 3건,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세부사업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아형별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 개발 및 최적화’ 1건 등 6건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결핵예방 세부사업에서 ‘유전자변이를 이용한 신속한 결핵 퀴놀론 감수성 확인’,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세부사업에서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질관리(장기2차)’ 등 2건을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기술, 평가, 조사, 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 예산 이용 주의** | 관련사업명 | 총괄 -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139억 5,400만원 대비 62.7%인 87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4.0%인 47억 4,200만원을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음<br>○ 시험연구인력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이용 재원으로 과다 사용한 내역사업도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시험연구인력지원, 형질분석연구 시험연구인력지원,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 시험연구인력지원 등 3개에 이르고 있고, 예산액의 30% 이상 50% 미만을 이용 재원으로 사용한 내역사업도 4개에 이르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개별 R&D 사업의 시험연구인력 예산을 과다하게 이용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R&D 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 | |
| 3 | **시험연구비에서 일반연구비로의 과다 전용 및 이월 주의** | 관련사업명 | [총괄] 일반회계 -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는 시험연구비로 집행하고,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는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br>○ 또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연구비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1월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R&D 세부사업에서 분석 등 용역사업을 시험연구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일괄 전용하여 집행하거나 일반연구비의 이월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미수납액 수납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기타경상이전수입 연도별 수납률을 보면 2020년 55.9%에서 2023년 74.8%로 개선되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023년에는 코로나 19관련 대규모 보조사업 집행부진으로 집행잔액 반납금인 징수결정액이 대폭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미수납액도 2022년 599억 700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1,906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음<br>- 2024년 4월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793억원, 2022년 5억 3,200만원, 2021년 3,500만원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에 대해 차질없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미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불납결손 처리되지 않고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 |
| 5 | **C형간염 시범사업 미지급금 예산편성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관리(6131-303)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질병관리청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수행 중 당초 계획 대비 검사비용 단가 초과 등으로 11억 6,1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br>- 2023년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2020년 C형간염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1억 2,000만원을 조정하여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미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조속한 상환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다부처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목적외 사용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관리(6131-303)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다부처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업 일반연구비 예산 2억원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부족분을 위해 3,100만원을 전용(△)하고, 5,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액 1억 3,100만원 중, 동 내역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국립결핵병원 장기비전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용역으로 6,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결핵병원 장기비전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는 결핵병원 관련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결핵예방 사업에서 집행할 성격으로, 다부처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7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추가 확대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6137-300)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검역 및 해외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 진단과 관련하여 감염병 세균·바이러스 진단검사와 병원체 변이특성 분석검사와 최근 3년 검사량을 보면 34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수도권과 경남권의 진단검사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권역별 연평균 22,724건의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등의 위협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위기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추가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전사업비 편성·집행 불일치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6137-30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상 「건축법」상 대수선, 증축, 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선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산 비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바뀜<br>○ 사업비 8억 1,200만원 중 7억 6,2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였다가 예산집행 단계에서 편성 시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비로 전액 전용하였고, 이 중 집행액은 2억 1,800만원에 그쳤고, 5억 3,600만원은 이월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내용에 맞는 적정 비목을 편성하여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9 | **치료제구입비 과다 이·전용 주의 및 치료제 수급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코로나19 치료제구입비 이·전용 재원으로 이용한 사업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세부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예산액의 61.8%(2,821억 2,600만원)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예산액의 31.9%(57억 7,100만원)를, ‘형질분석연구(R&D)’ 사업은 예산액의 17.7%(3억 9,000만원)를 감액하여 이용 재원으로 사용하였음<br>○ 먹는 치료제 도입량은 지난해 2분기 34.1만명분 대비 17.9만명분이고, 누적 비축량 역시 2023년 2분기 52.9만명분 대비 20.6만명분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먹는 치료제 확보가 매우 중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 발생에 따른 것인 만큼, 이·전용이 아니라 예비비 확보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치밀한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장례지원비 재이월금 규모의 과다 책정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장례지원비 집행 잔액 재이월을 통한 예산확보 필요성에 따라 111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재이월한바, 재이월 산출 근거를 보면 2022년도에 불인정된 2,689명이 모두 재심사 요청 시 인용률 72%를 적용한 1,936명 중 재심사 신청(신청률 50% 가정) 인원 968명에 대해 재인용을 가정하고, 실지원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br>○ 재이월액 111억 4,500만원 중 실집행액은 6,900만원이고, 추가 소요액은 20억 8,800만원을 추계되고 있어 89억 8,700만원은 불용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재이월 소요액 추계 근거가 부정확하여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한 채 가족의 장사를 진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 | | |
| 11 |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 감시 사업비 전용 후 다음연도 이월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을 전용(6.16.)하여 집행하였고, 2024년 해당하는 사업비는 연말(12.27.)에 전용(증)하여 이월·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거나 다음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연말에 전용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이월·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코로나19 변이 상황에 따른 백신 물량확보 및 객관적 · 과학적인 백신 수요 분석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 | 주의,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2,150억 7,800만원 규모인 2,146억 9,900만원을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 전용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6,587억 5,700만원을 재원으로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기계약 물량 1,550만 회분의 공급일정을 조정하여 2023년 신규 백신으로 전환 도입하였음<br>○ 2021년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총 도입물량 2억 1,679만 회분 중 폐기량은 3,049만 회분으로 폐기율은 14.1%에 이르고, 24년 8월까지 폐기량은 6,197만회분으로 28.6%에 달함<br>○ 폐기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 백신 온도 일탈, 백신 용기 파손, 사용기간 경과 등이 있는데, 약 99.2%가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여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할 것(주의)<br>○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 과학적인 백신 수요 분석시스템 구축에 기관 역량을 집중할 것(제도개선) | | |
| 13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상반응 신고 및 보상심사 기각률과 인용률을 보면, 기각률(기각건수/심의건수)은 2021년 60.4%, 2022년 72.9%, 2023년 86.8%로 높은 반면, 인용률은 2021년 39.6%, 2022년 27.1%, 2023년 13.2%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br>○ 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금 예산 624억 8,800만원 중 46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에 불과하고, 보상금 지급 인원도 3,547명으로 계획인원 3만 7,578명 대비 9.4%에 불과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일반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6532-30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 ‘기후변화 관련 극한기후의 건강영향 연구’ 등 7건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이 발주되었는데, 이 중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활용성 강화방안 연구’는 2026년에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연구의 수행시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겠음<br>○ ‘기후변화 관련 질병관리청 대응방안 중장기 계획’의 경우 하반기에 전용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후변화 관련 국민의 시급한 건강보호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전용을 통한 신규 과제 수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연구용역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주할 필요가 있겠고, 전용을 통한 신규과제 발주는 지양할 필요가 있는 등 일반연구비 집행의 적절성을 제고할 것 | | |
| 15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관리용역비 편성·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생의료안전관리 운영(6631-302)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를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특히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은 연구용역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는 전산운영 관리업무 경비로서 일반연구비가 아닌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국제백신연구소(IVI) 운영비 30%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R&D)(6632-310)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IVI 유치신청 시 약속사항인 운영비 30% 지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구제적인 재정적인 지원내용은 5년을 유효기간으로 달라지고 있는바, 2013년 12월 교육부와 IVI 간 양해각서 개정 시 ‘R&D 제외 운영비 30% 지원’이 ‘R&D 포함 운영비 30% 지원’으로 개정되었고,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와 IVI 간 양해각서 체결 시 ‘R&D 포함 운영비 30% 지원’에서 ‘프로젝트 보조 인건비와 외부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운영비 30% 지원’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br>○ 최근 지원액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원인은 IVI의 우리나라 유치 조건이 운영비 30% 지원에 따른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향후 MOU 재체결 시(유효기간: 2022.5.13.~ 2027.5.12., 5년간) 재정지원 부담을 합리화하고 국제 신임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
| 17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 집행 부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4-343)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예산현액 74억 7,200만원 중 74.6%인 55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9.5%인 14억 5,4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함<br>○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은 1차부터 3차까지 202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3년 동 4차 사업 지연 사유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HPV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를 위한 면역원성 시험법 및 표준항체개발체계 구축, 백신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연구 5건의 연구용역 등은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예산 집행에 있어 적극적 사업관리를 통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HIV/AIDS 진료비 미지급금 정산 철저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에이즈 및 성병예방(6135-304)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신규 감염인 발생 및 HIV/AIDS 치료제 발달로 인한 감염인의 생존기간 연장으로 지원대상자 수 및 치료 관리기간이 증가하여 진료비 누적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br>○ 최근 3년간 누적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2021년 3억 6,200만원, 2022년 1억 8,800만원, 2023년 5,800만원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HIV/AIDS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와 함께 진료비 지원 시스템 정비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br>○ 질병관리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지표 및 추진과제 달성률이 미흡한바 사업 성과 개선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예방·관리에 노력할 것 | | |
| 19 | 결핵관리 전담인력 이직률 축소 및 처우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결핵환자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전담인력 감소시 관리망 이탈 환자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br>○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 파악을 위한 고용형태를 조사한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및 조사시점에 채용 중인 인력의 비율로 추정시 매년 27~67% 가량의 이직률 발생이 추정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전담간호사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과 결핵관리 전담요원 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br>○ 질병관리청은 결핵관리전담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적정한 두창백신 및 탄저백신 비축물량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6236-302)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2024년 5월 현재 약 4,000만명분의 두창백신을 비축해 놓고 있으나 이 중 58% 가량(2,324만명분)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임<br>○ 현재 비축 중인 탄저백신은 1,000명분으로 필요한 최소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탄저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비축된 두창백신은 2세대 백신으로서 보다 안전한 두창으로 평가받는 3세대 백신으로 비축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탄저백신 비축계획을 설정하여 대비가 가능한 충분한 물량을 비축하도록 할 것 | | |
| 21 |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로 접종대상 백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br>○ 현재 12~17세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남아 등에게도 확대하는 내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제21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로 접종대상 백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미지급금 발생 방지 조치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고령화에 따른 등록환자의 증가로 2019년부터 인센티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13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함<br>○ 현재 1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수요자 반응이 좋은 만큼 참여지역 확대가 필요하며, 전체 대상기관 대비 의원, 약국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참여지역의 확대 및 의원·약국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3 |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조사대상 확대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동 조사는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br>-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해 조사<br>○ 표본가구 대체율*이 30%가 넘어 조사대상의 대표성의 유지를 위한 관리 필요함<br>*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거주환경이 유사한 가구로 교체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비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및 표본대체율 관리를 통해 조사의 대표성 및 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유지를 도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참여율 및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영양조사(6535-304)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은 매년 대상자의 30% 정도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br>○ 조사결과는 매년 그 다음해 11월경 발표되어, 조사시점과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상당한 시간적 이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사결과의 발표도 앞당겨 당해 정책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의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의 과다한 이·전용 재발 방지 주의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관리(6131-303)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실집행 실적이 저조(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4.3%)하고 예산의 전액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전용(333억원)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였음<br>* 추가 확보한 예산 중 284억원 규모를 2024년으로 이월하여 활용<br>- 예산집행의 대상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미교부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세출예산의 이월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정한 집행으로도 보기 어려움<br>○ 방역대응 관련 사업의 특성상 의료기관의 청구 및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예산의 집행 및 실집행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향후 사업 수행시 집행가능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및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청구가 선행되어야 심사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한 방역대응 관련 사업의 절차상 구조·특성 및 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의 신속한 청구 독려 및 지자체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유급휴가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반납 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중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예산액 전액을 이·전용 감액하였음(예산액 1,215억 6,000만원 중 541억 6,000만원 이·전용 감액)<br>○ 질병관리청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체결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위탁계약이 2023년 12월 31일 공식 종료되었으므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2,344억 9,000만원에 대한 정산·반납이 필요함<br>-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액 2,591억 3,900만원 중 246억 4,800만원 집행, 나머지 금액인 2,344억 9,000만원을 다시 차년도로 재이월하였는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국가재정법」제48조에 규정된 이월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향후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성과 소요를 고려함으로써 이·전용을 통한 과다한 감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질병관리청은 국고금에 대한 재이월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속 조치에 따른 적절한 금액만을 유보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 신속히 정산·반납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의 정상화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 | 주의,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호남·충청·경북·경남·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중 호남권은 공모 후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고, 충청권·경북권은 병원 자체 계획 재검토 중, 경남권은 KDI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수도권은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br>- 이러한 상황에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전액 교부한 문제 등으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함<br>* 연례적으로 0%('18년), 0.2%('19년), 5.0%('20년), 4.7%('21년), 2.9%('22년), 2.6%('23년) 등 연평균 실집행률이 약 2.2% 수준임<br>○ 사업 초기 지자체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비 100%의 보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후 추가 권역별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매칭액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일괄 교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감염병 대응 체계에 큰 의미를 가지는 만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주의할 것(주의)<br>○ 질병관리청은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 목적 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을 제고하는 동 사업의 성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보조율 조정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국회 예산심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예방접종 홍보, 추진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연도 중 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br>- 두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각각 7억원(당초 예산안 10억원)과 5억원(당초 예산안 7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023년 1월 및 3월에 7억 9,200만원과 700만원의 세목조정 증액을 통해 집행함<br>○ 국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국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9 | 질병관리청의 출연금 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역할 구분 및 중복 지원의 지속적 점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6631-303)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로 관리하는 3개의 출연사업 중 2개 사업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 내 하위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평가관리비가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중복 지원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의 출연금 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기본계획 재수립, 총사업비 조정 등 변동 사항의 발생으로 연례적으로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31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운영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4-343)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치료 산업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나 연구용역 결과 연구인력 등 참여인력 채용에 어려움 따를 가능성이 있음<br>- 센터 건립 후 백신 등의 개발 후 이전을 통한 수수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의 재정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br>○ 동 사업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당초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되었던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건물의 건축이 아닌 재단의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과는 달라진 것임<br>* 2023년도 예산안 확보시 3자 협의(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건축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센터의 참여 인력 확보 및 자체 수입방안을 마련할 것<br>○ 질병관리청은 향후 재단의 예산 편성 추이와 집행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규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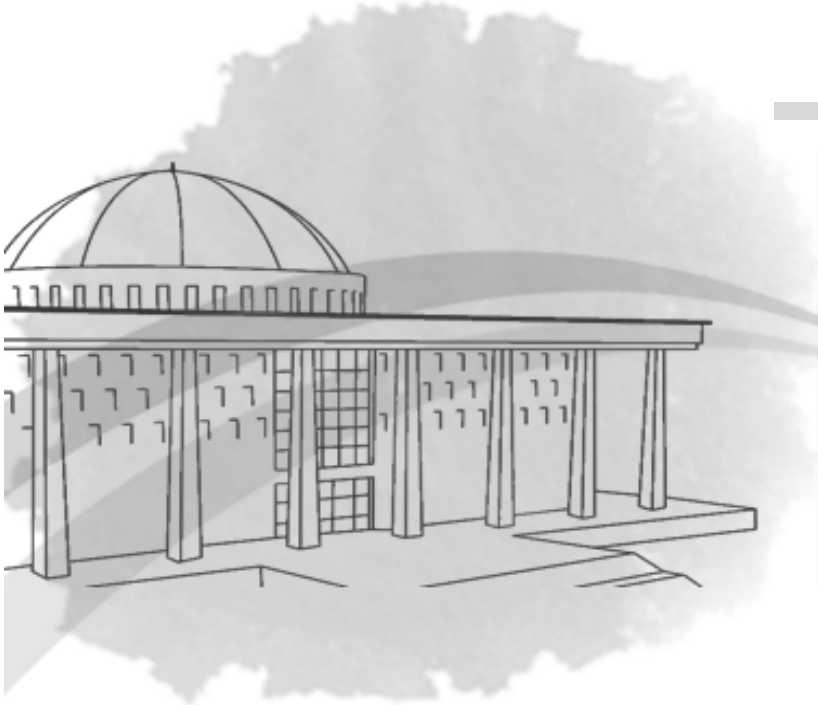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 지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4761-300) | 주의,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 집행이 저조(집행률: 0.0004%)하여 계획달성이 부진하므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br>○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내성결핵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내성결핵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을 조속히 개선하여 내성결핵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 안전을 강화하도록 할 것(주의)<br>○ 질병관리청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세계잉여금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 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 | |
| 33 | 코로나19 백신 잔여물량 및 신규 도입예정 물량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잔여물량 및 신규 도입예정 물량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br>- 2024년 5월말 기준 제약사와의 구매계약을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총 2억 6,998만 회분이며, 그 중 2024년 하반기 이후 도입 예정인 신규 백신(723만 회분)을 제외한 2억 1,679만 회분을 실제 도입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잔여물량 및 신규 도입예정 물량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의 비목 변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br>(6132-510)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질병관리청은 동 내역사업의 예산('23년 384억 7,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320-01목)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의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하는 등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특성 및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 |
| 35 |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예산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집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정보화사업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질병관리청은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3년 총 7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52건의 계약에서 7억 4,4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br>-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중 일부를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시스템 개편을 위한 사전 설계 사업 계약 추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 부족분 지원에 활용하였는데,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찰차액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내역으로 판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향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한 불필요한 연구용역 추진**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 주의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사업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신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대부분 이월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발생함<br>-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2억 7,700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자체 전용하여 5개의 연구용역 과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연구용역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용역 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br>○ 질병관리청은 전용되어 추진된 연구용역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전용을 통한 계획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및 이월 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시정할 것 | | |
| 37 |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지연 문제,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예산 편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 전액 교부 문제 등이 발생함<br>- 동 사업이 신규 추진된 이래, 사업시행주체 기준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8년 0%, 2019년 0.2%, 2020년 5.0%, 2021년 4.7%, 2022년 2.9%, 2023년 2.6% 등 연평균 실집행률이 약 2.2% 수준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 설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 | 제도개선 | 질병관리청 |
| | | 지적사항 | ○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보건위기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함<br>- 질병관리청의 최초 용역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이 있는 곳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조속히 전문 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환경노동위원회



# 1. 환경부(91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세입징수비용교부금의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세입징수비용교부금(7135-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세입징수비용교부금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편성함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누적 미지급금이 595억 3,500만원(법정 징수비용 대비 39.4%)까지 확대되고 있음<br>※ 연도별 세입징수비용교부금 지급 내역<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부담금 수납액1)</th><th>법정 징수비용(A)</th><th>징수비용 교부액(B)</th><th>미지급금(A-B)</th></tr>
<tr><td>2018</td><td>725,302</td><td>104,073(14.3)</td><td>103,428</td><td>645</td></tr>
<tr><td>2019</td><td>899,889</td><td>165,585(18.4)</td><td>153,974</td><td>11,611</td></tr>
<tr><td>2020</td><td>837,404</td><td>164,699(19.7)</td><td>130,225</td><td>34,474</td></tr>
<tr><td>2021</td><td>794,484</td><td>162,978(20.5)</td><td>123,461</td><td>41,316</td></tr>
<tr><td>2022</td><td>707,512</td><td>157,766(22.3)</td><td>103,872</td><td>53,894</td></tr>
<tr><td>2023</td><td>696,160</td><td>151,173(21.7)</td><td>91,638</td><td>59,535</td></tr>
</table>
주 1) 부담금 수납액에는 징수비용 교부 대상 과징금 및 가산금 포함<br>2) 괄호는 부담금 수납액 대비 법정 징수비용의 비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세입징수비용교부금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국제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1771-301)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은 2020년 이후 국제기후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br>* 사업이 시행된 2016년 이후 국제기후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함<br>-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컨셉노트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2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책임자 퇴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었음<br>-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GGGI*)를 통해 사업이 수행된 문제가 있었음<br>* GGGI(Global Green Grwo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기금)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홍보를 강화하고, 제안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중도에 중단된 사업의 경우 제재조치 마련, 우수한 환경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사업비 비중 확대 등 사업방식 변경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1771-302)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인도네시아 발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은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 전기버스, 충전기 등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2023~2027년, 총사업비 112억원)으로,<br>다른 ODA 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ODA 사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동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br>- 사업 집행 예산 7억 1,600만원 중 57%인 4억 92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국제기구(GGGI)가 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기업이 사업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건비 비중을 축소하고 실제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과다한 보유자금 해소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한국환경공단 출연(1534-303) | 시정 | 환경부<br>한국환경공단 |
| | | 지적사항 | ❍ 한국환경공단 사업 중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누적 보유자금이 9,680억 2,300만원에 달하고 있음<br>* 동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생태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임<br>- 이는 지자체가 조기집행실적 달성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연차별 집행 소요 이상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교부**하고 있기 때문임<br>** 공단의 사업추진현황과 무관하게 지자체가 사업비를 추가 교부한 사업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299개 중 135개로, 규모로 보면 전체 자금 9,680억원 중 55.6%인 5,385억원으로 나타났음<br>❍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준공 이후에도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집행잔액이 미반납되어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가 보조사업자 정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br>- 2024년 5월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이전 준공이 완료된 16개 환경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21억 9,4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음<br>※「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의 반납기한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할 것<br>❍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집행잔액 반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한국환경공단<br>압수폐기물자원화 사업 손실 축소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한국환경공단 출연(1534-3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한국환경공단</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환경공단의 ‘압수폐기물자원화’ 사업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br>※ 연도별 압수폐기물자원화 사업의 수입지출 현황<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14년</th><th>’15년</th><th>’16년</th><th>’17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r>
<tr><td>매각수입(A)</td><td>2,443</td><td>2,990</td><td>2,693</td><td>2,950</td><td>2,443</td><td>1,953</td><td>1,572</td><td>2,149</td><td>846</td><td>518</td></tr>
<tr><td>사업비지출(B)</td><td>5,579</td><td>2,165</td><td>2,418</td><td>2,417</td><td>2,658</td><td>2,446</td><td>2,244</td><td>2,054</td><td>2,087</td><td>2,149</td></tr>
<tr><td>인건비지출(C)</td><td>7,279</td><td>3,409</td><td>3,446</td><td>3,687</td><td>3,748</td><td>3,818</td><td>4,267</td><td>3,572</td><td>1,974</td><td>1,868</td></tr>
<tr><td>사업손실<br>(A-B-C)</td><td>△10,415</td><td>△2,584</td><td>△3,171</td><td>△3,154</td><td>△3,963</td><td>△4,311</td><td>△4,939</td><td>△3,477</td><td>△3,215</td><td>△3,49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환경공단은 재고물량을 축소하고, 보관 창고·부지의 관리비용 및 인건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며, 업무를 수사기관(대검찰청)으로 이관(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기관운영비 비중<br>과다 및<br>보조사업비의<br>부적절 집행<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531-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새활용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대비 기관운영비 비중(총사업비 중 31.7%)이 높으며, 사업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항목(웹드라마 제작·홍보 등)에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함<br>-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산업협회는 국외 출장 관련 비용으로 약 1억 4,500만원, 웹드라마 제작·홍보 비용으로 약 2억 3,400만원을 집행함<br>※ 각 지원사업별 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현황<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분<br>(예산액)</th><th>보조사업자</th><th>사업비(기업 지원금액) 및<br>기관운영비</th><th>지원기업수</th></tr>
<tr><td>사업화지원<br>(30,560)</td><td>한국환경산업기술원</td><td>사업비 : 29,401(96.2%)<br>기관운영비 : 1,159(3.8%)</td><td>132개사</td></tr>
<tr><td>새활용 육성 지원<br>(6,000)</td><td>한국환경산업협회</td><td>사업비 : 4,100(68.3%)<br>기관운영비 : 1,900(31.7%)</td><td>109개사</td></tr>
<tr><td>상생협력 실증<br>프로그램<br>(13,500)</td><td>한국환경공단</td><td>사업비 : 13,200(97.8%)<br>기관운영비 : 300(2.2%)</td><td>14개사</td></tr>
<tr><td>에코스타트업<br>지원<br>(15,834)</td><td>한국환경산업기술원</td><td>사업비 : 14,440(91.2%)<br>기관운영비 : 1,394(8.8%)</td><td>155개사</td></tr>
<tr><td>사회적 경제기업<br>사업화 지원<br>(1,300)</td><td>한국환경산업협회</td><td>사업비 : 1,000(76.9%)<br>기관운영비 : 300(23.1%)</td><td>23개사</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기관운영비 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별도<br>내역사업으로<br>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환경개선특별회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531-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새활용 육성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사업화 지원’ 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행 내역 등이 예결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등 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환경부는 ‘새활용 육성 지원 사업’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집행가능성을<br>고려한 자금<br>교부 실시 및<br>운용요강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환경개선특별회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1531-3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자금이 예년과 달리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2023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함<br>○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은 융자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일부 행정처분이 누락되어 있는 등의 미비점이 있음<br>※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선 필요사항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문제점</th></tr>
<tr><td>지원제외<br>대상</td><td>과거 1년간 환경법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장</td><td>일부 행정처분이 누락(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td></tr>
<tr><td>지원제외<br>기간</td><td>과거 1년간의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td><td>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 지원 제외 기간을 구분하여 규정 필요</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환경부는 융자금의 실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융자 실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br>○ 환경부는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미세플라스틱 관련 R&D 예산 증액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R&D)(1532-309)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및 2024년에 관련 예산이 감소함<br>- 동 사업 예산은 2022년 81억 6,300만원, 2023년 45억 2,000만원, 2024년 20억 5,0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R&D예산을 증액할 것 | | |
| 10 | **연구개발비의 환수금 등에 대한 징수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평가관리사업(R&D)(1532-317) | 시정 | 환경부,<br>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지적사항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R&D 과제의 연구개발비 환수금 등 68억 600만원이 국고로 납입되지 않고 있음<br>-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제재부가금 미수납액 8억 900만원,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수납 29억 9,300만원, 정산금 미반납 30억 4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환수·회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퇴직급여충당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1534-302) | 주의, 제도개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지적사항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입출금계좌로 보유(2023년도 기말 잔액 103억 6,000만원)하고 있어 자금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함<br>-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액은 2021년 5억 5,000만원, 2022년 6억 3,400만원, 2023년 4억 1,200만원에 불과<br>○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및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가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할 가능성도 있음<br>- 2023년 연말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퇴직금제도 가입자 수는 437명(64.7%),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는 238명(35.5%)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일부 집행예상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할 것(주의)<b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퇴직연금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제도개선)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DPF저감장치<br>클리닝 유도<br>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PM-NOx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사업의 연간 저감장치 클리닝 실적이 부착 직후에 비하여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br>※ 저감장치 부착 및 클리닝 실적(2020~2023)<br>(단위: 대, 건)
<table>
<tr><th>구분</th><th>저감장치<br>부착 차량</th><th>1회차 클리닝<br>실적</th><th>2회차 클리닝<br>실적</th><th>3회차 클리닝<br>실적</th></tr>
<tr><td>2020</td><td>87,807</td><td>82,434</td><td>73,798</td><td>58,139</td></tr>
<tr><td>2021</td><td>71,860</td><td>66,554</td><td>55,796</td><td>29,118</td></tr>
<tr><td>2022</td><td>36,897</td><td>31,871</td><td>14,911</td><td>1,209</td></tr>
<tr><td>2023</td><td>14,176</td><td>2,123</td><td>8</td><td>-</td></tr>
</table>
* 차주의 요청에 따라 차량의 출력저하(공회전 부착장치 배압(압력) 30mbar 이상시)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클리닝 실시 주기(10개월 이상)와 무관하게 실시한 클리닝(특별) 건수 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량·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이후 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클리닝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저감장치 유지관리비의 단년도 정산 방안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 | 시정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PM-NOx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사업에서 저감장치 부착 당시에 편성된 3년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 기준 4년이 경과한 이후에 정산하고 있어, 국회의 단년도 예·결산 심사에서의 집행 점검이 어려움<br>- 2024년 6월 기준, 2019년도에 부착한 저감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2020~2022년) 정산이 완료되어 세입조치를 위한 고지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저감장치별 부착 연도에 편성된 3회분의 유지관리비를 클리닝 주기인 1년 단위로 정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철저한 사업관리 및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 시 시범사업 기간 고려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1633-303)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냉난방기에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 제작사의 기술개발 지연('23.11)으로 인하여 2023년도 예산의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br>-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83억 2,800만원 중 81억 6,900만원 이월, 1억 5,900만원 불용(실집행률 0%)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이월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br>○ 환경부는 향후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 시 시범사업의 결과 환류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사업의 목적 및 수요를 고려한 사업 재검토 및 개선계획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1633-314)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지속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고, 사업의 본래 취지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설비* 설치가 아닌 기타 미세먼지 설비 설치(6건 중 6건, 100%)를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br>- '23년 실집행률 48.0%('22년 39.7%, '21년 42.8%)<br>*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설비,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NCR) 설비 등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동 사업의 목적 및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br>❍ 환경부는 단기적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저감설비 설치 의무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을 국회에 제출(의원실로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이차보전 사업의 관리기관 비용 별도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1633-314)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환경부가 동 사업 융자 잔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23년 기준 9백만원)을 융자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이차보전금에서 간접 차감하여 관리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차보전금*의 경비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음<br>- 이차보전금: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동 사업의 관리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비용을 지원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층전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및 설치수요 배분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1633-312) | 제도개선 | 환경부<br>한국환경공단<br>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충전기 설치 지연·사업자의 자진 포기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이 부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2026년 이후 충전기 직접 설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br>- 2023년도 예산 민간 완속 충전기 설치 실집행률 58.6%, 민간 급속 충전기 설치 실집행률 65.6%<br>* 공공건물, 공공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br>○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로 완속충전기에 대한 설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br>○ 환경부는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급속충전소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br>○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하는 2026년 이후 특정 연도에 충전기 설치 수요가 집중되어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협회는 충전기 설치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수자원시설등의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및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자원종합연구(5131-308) | 시정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2017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재평가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댐의 평가** 역시 2016년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지만 현재까지 관련 세부지침이 고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br>*「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br>**「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댐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평가 대상 수자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댐의 평가 및 수자원시설 재평가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자원시설의 관리를 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자원공사지원(5131-30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br>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위·수탁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탁사업자금(지자체 등)을 자체사업자금과 같은 계좌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br>- 한국수자원공사는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자체사업자금과 수탁사업자금의 잔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이자수익은 138억원임<br>○ 또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지방상수도현대화)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필요 이상 자금이 교부되어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br>※ 2021년~202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위·수탁사업자금 중 미집행액(선수금)
<table>
<tr><th>2021년말 기준</th><th>2022년말 기준</th><th>2023년말 기준</th></tr>
<tr><td>1조 1,684억원</td><td>1조 3,869억원</td><td>1조 1,296억원</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사업자금과 수탁사업자금을 별도 운용하는 등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탁사업의 실집행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댐BIM 구축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댐 운영관리(5231-301) | 시정 | 환경부<br>한국수자원공사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스마트댐 안전관리사업의 댐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구축사업*은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6개, 8개, 20개 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4개 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구축 사업을 실시 중임<br>* 댐 안전정보의 빅테이터화, 인공지능(AI)분석 등을 활용하여 댐 시설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br>○ 환경부는 대행사업자의 사업 진도와 관계없이 2023년 동 사업 예산을 연초에 일괄 교부하였으며, 대행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사업 준공금으로 일부 집행 후 전액 이월함<br>○ 한국수자원공사는 동 사업의 2023년 이월 예산과 2024년 예산으로 완수일이 2026년 1월까지인 4개 회계연도에 걸친 계약을 체결함<br>- 4개 회계연도(2023년~2026년)에 걸쳐 단년도 예산(이월예산 포함) 집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수자원공사는 34개 댐에 대해 동시 진행 중인 댐BIM 구축 사업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 및 안정성 검증절차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환경부는 향후 회계연도 내 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행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운영시스템 계약지연으로 인한 연쇄적 용역 준공 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댐 운영관리(5231-301)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스마트댐 안전관리사업의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없이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2023년 용역계약(2차)까지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음<br>-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후 정부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br>○ 동 사업은 명확한 정보화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연계 사업인 ‘댐-하천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의 지연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명확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추진된 사업의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 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댐 운영관리(5231-301) | 시정 | 환경부<br>한국수자원공사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수량-수질 관측소를 신설하여 실시간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내역 사업인 통합감시시설 운영 사업은 2022년 편성예산의 31%, 2023년 편성예산의 36%만 집행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br>❍ 내내역사업인 통합관측소 설치 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TOC*(총유기탄소)측정기기 설치사업을 실시함<br>* 총유기탄소(TOC:Total Organic Carbon)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탄소의 총량으로 “물의 오염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질 지표 중 하나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통합감시시설 운영사업 관련 예산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br>❍ 환경부는 국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 심사 시 반영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유역·지방 환경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하천정비(5331-301) | 시정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환경부는 2023년 총 95개 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 지구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총액으로 계상하고 있음<br>○ 하천기본계획 외에 신규사업 대상 각 지구별 사업 기본계획과 종료된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부재하여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에 대한 환경부 본부의 관리가 미흡함<br>○ 하천연장 대비 친수지구 비율, 면적 등 친수지구 지정 현황과 지구별 친수사업 실시현황을 환경부 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친수시설 설치·관리 지침은 환경청별로 친수사업 필요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음<br>○ 환경부는 2022년 대상지 22곳을 선정하고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사업 검토 과정에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음<br>*하천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치수, 이수, 수질, 생태, 친수, 경관 등의 다양한 하천사업을 통합하여 연계 추진하는 사업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지구(내역사업)별로 구분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유역·지방 환경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것<br>○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이 일관된 기준으로 친수지구 지정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친수시설 설치·관리 지침을 보완하여 명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친수사업을 실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치수연구개발(5331-302)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145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권역의 71.7%인 104개 권역만 수립을 완료하였고, 40개 권역(27.6%)은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남<br>- 환경부는 2018년까지 145개 권역에 대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35개 권역만 수립(24.1%)하는 데 그쳐, 하천기본계획 수립완료 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2년 연장된 2020년으로 수정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우선 조속히 완료하고, 최초 수립 후 일정 기한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도 타당성 조사 및 재수립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율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한 예산 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하천재해복구(국가하천)(5331-306)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 이월된 하천재해복구(국가하천)사업 예산 36억 3,600만원 중 14억 6,200만원(40.2%)을 2023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함<br>○ 안양천 및 도림천 복구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 전액을 차년도로 이월*한 후 타 구간 복구사업으로 일부 변경 집행(426백만원)한 것 외에는 이월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남<br>* 서울특별시가 자체 예산으로 복구사업을 완료('22.9~'22. 12월)하였으나, 환경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하수관리(5131-301) 사업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5134-302) 사업 예산을 전용('22.12.2.), 예산배정('22.12.15.) 및 차년도('23) 이월까지 실시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재해복구비 관련 예비비 편성 또는 이·전용이 필요할 시 집행소요의 면밀한 추산을 통해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단계별 사업 관리 및 집행 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사업(2038-339) | 주의 | 환경부<br>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 지적사항 | ○ 연구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장납기부품(레이더 안테나) 확보 지연으로 탑재체 체계 상세설계 등을 2023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차년도 사업으로 조정하였음<br>- 이에 따라 이후 일정(상세설계검토수행, 레이더구성품 제작 등)이 순연되어 2024년도 예산 145억 2,700만원의 실집행률은 2024년 5월말 현재 2.9%(4억 2,100만원)로 부진한 상황임<br>○ 연구수행기관의 2023년 연구비(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활동비) 편성금액과 집행내역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실행예산 변경 요청은 연중 1회(12.28.)만 사후에 실시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 없이 본체 개발 일정에 맞추어 위성체 총조립 착수(2026년)가 가능하도록 동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br>○ 연구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비 지출 항목별로 집행 소요를 면밀히 추산하여 그에 따른 집행 계획을 세우고, 연구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그에 맞춰 지출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집행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비점오염저감사업(1131-302)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사전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지자체 공모가 지연되어 2년 연속 실집행이 부진하였음<br>- 동 사업은 산업단지 5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55억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사전 연구용역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 및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및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한 환경부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1131-310)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관련 지자체의 매칭 재원 미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낙동강 수질 개선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r>- 2022년 예산현액 12억 8,100만원 전액 불용에 이어 2023년에도 예산현액 13억 2,5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의 국고신청을 독려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9</td><td rowspan="3">BTL 방식의<br>하수관로<br>정비사업 수행<br>재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1132-7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중인 동 사업의 특성상 과도한 이율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민간이 투자한 비용을 임대료 형식으로 사업 준공 후 20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었음<br>※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table>
<tr><td>2020</td><td>계속사업 99개소, 신규사업 2개소 국고 332,174백만원</td></tr>
<tr><td>2021</td><td>계속사업 101개소, 신규사업 3개소 국고 337,491백만원</td></tr>
<tr><td>2022</td><td>계속사업 104개소 335,722백만원 지원</td></tr>
<tr><td>2023</td><td>계속사업 104개소 336,493백만원 지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정해진 계약기간 이후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 BTL 방식으로 수행할지 여부를 재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낙동강 대저수문 개선공사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133-304)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 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낙동강하굿둑 개방’ 사업으로 수행하는 ‘낙동강 대저수문 개선공사 사업’은 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이월·불용되었음<br>- 2022년 교부 공사비 111억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 교부된 49억원 중 1억 8,2000만원만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질개선 사업 예산의 단년도 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문제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133-304)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가수질측정망 운영’ 내 내내역사업인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질개선 사업’은 설계비 및 공사비를 단년도로 편성하여 실집행이 부진하였음<br>- 2023년 기준 전년도 이월액 17억 2,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 7,900만원 중 이·불용액은 49억 7,2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설계·공사 단계를 나누어 예산을 편성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사업의 회계연도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의 연례적 체결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133-30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사업은 매년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집행이 부진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한편, 사업 시행자인 환경공단의 수탁계좌에 40억 9,700만원의 자금이 유보(2023년 말 기준)되어 있는 상황임<br>※ 2023회계연도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사업 기초 및 기말 선수금 내역<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선수금기초</th><th>당기증가<br>(수납)</th><th>당기감소<br>(반납)</th><th>당기감소<br>(집행)</th><th>기타증감<br>(합계)</th><th>선수금기말</th></tr>
<tr><td>4,744</td><td>14,026</td><td>-</td><td>7,174</td><td>(-)7,499</td><td>4,09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교부하고 연례적인 계약 기간 연장을 지양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공공성 강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R&D)(1133-327)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 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향후 사업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연구협약서에 공공으로의 기술이전을 명시하는 등 연구성과 중 일부를 공공영역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R&D)(1133-327)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건축비 변동,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증부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총 연구비 실집행률은 56%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 지연을 방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하수관로정비(1132-312)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환경부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차원에서 불용액이 큰 상황임<br>-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은 9,5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부가 교부한 보조금을 실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불용액은 약 173억원, 이월액은 약 1,540억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 등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5033-303),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5031-301),<br>광역상수도 확충 사업(5033-301), 공업용수도 확충사업(5031-302),<br>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사업(5033-355) | 시정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시행한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 등 출자 수도사업은 수도사업 집행 시 수자원공사의 매칭 비율을 70%로 설정하였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매칭비율(70%) 보다 사업 비용을 과소하게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사업 집행시 당초 매칭비율인 70%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집행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ODA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5110-302) | 시정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대행기간 내 공사·자재 계약 관련 현지 협의 등이 지체되어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br>-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연례적으로 30억원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예산을 전액 교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br>○ 한국수자원공사는 업무역량강화교육을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UNESCO I-WSSM)에 재위탁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강사진 및 교육장소 등 공사의 인프라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ODA 사업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한 비용만을 반영할 것<br>○ 환경부는 업무역량강화교육 진행 과정에서 교육역량 및 인프라를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설계 및 공사단계를 나누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하수 관리(5131-301)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은 단년도로 설계·공사비를 편성한 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상당부분 이월*되었음<br>* 2023년 동 사업의 예산현액 43억 2,500만원 중 34억 6,400만원이 이월<br>- 또한 동 사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운영 및 소유 시설에 대하여 유출지하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효과, 용수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br>*「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등 지하시설물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설계 및 공사 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br>○ 환경부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집행관리 철저 등**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2031-326)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유충이 정수장 등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형생물에 대한 물리적 차단 기술을 정수장에 도입하는 사업이나,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수돗물 유충 사태가 재발하는 등 위생관리 문제가 제기됨<br>- 동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단년도로 편성하였으나, 설계검토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이 55.3%로 부진함<br>-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모니터링 미흡, 유충 차단 장치 미설치 등 일부 정수장의 미숙한 대응으로 유충 사태가 재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사업의 집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에서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피해 상수도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2098-301) | 시정,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및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한 예산현액 72억 300만원 중 2억 3,200만원만 집행되었고, 69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4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실집행실적이 부진함<br>- 다른 목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신속한 재해복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전용하였음에도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예산을 이·전용하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할 것(시정)<br>○ 환경부는 상수도시설의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수탁사업자금 미집행 문제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후상수도정비(2032-302)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지자체의 노후된 상수관망 및 정수장 시설을 정비하여 누수율을 저감하고 유수율을 제고(85% 이상)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사업기간 단축 및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실집행단계(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과다한 자금이 미집행되고 있음<br>* 2023년 말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35개, 한국환경공단은 7개에 달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연차별 예산 소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된 자금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2</td><td rowspan="3">퇴직급여충당금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운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립공원공단 출연(1831-306)</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립공원공단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182억원)를 입출금계좌에 예치하고 있어 운용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출연금과 혼재하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br>※ 국립공원공단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현황<br>(단위: 백만원, 2023.12.31.기준)
<table>
<tr><th>계좌구분</th><th>계좌번호</th><th>계좌잔액<br>(퇴직급여충당금)</th><th>2023년도<br>퇴직급여<br>충당금<br>적립액(A)</th><th>2023년도<br>적립기준액<br>(B)</th><th>적립률<br>(A/B)<br>*100</th></tr>
<tr><td>입출금통장</td><td>1127-17-xxxxxx</td><td>14,823(14,823)</td><td rowspan="4">28,203</td><td rowspan="4">78,910</td><td rowspan="4">36%</td></tr>
<tr><td>입출금통장</td><td>317-0009-xxxxx</td><td>3,606(2,663)</td></tr>
<tr><td>입출금통장</td><td>317-0000-xxxxx</td><td>717(717)</td></tr>
<tr><td>정기예금</td><td>303-9483-xxxxx</td><td>10,000(10,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출연금과 혼재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계획하지 않은 사업 추가 실시 지양**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831-309)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환경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전용 및 불용예산 활용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연례적으로 추가 실시함<br>- 환경부는 2023년에 총 6건의 용역시행을 계획하였으나, ‘고병원성 AI대응을 위한 AI 검사위탁 용역’ 등 5건(집행액: 7억 4,300만원)의 용역을 추가 실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사전에 용역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44</td><td rowspan="2">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1831-309)</td><td rowspan="2">주의</td><td rowspan="2">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2023년도 예산 312억 9,000만원)에서 추진 중인 2차 울타리 설치비(74억 4,300만원)가 미집행되어 전액 전용되었고, 2024년 예산(64억 4,300만원)도 2024년 7월말 현재 미집행 상태가 지속됨<br>*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러 멧돼지의 생태 및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임<br><br>※ 2차 울타리 설치 예산 집행현황<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본예산</th><th>예비비,<br>이·전용 등</th><th>집행액</th><th>불 용</th><th>비 고</th></tr>
<tr><td>2022년</td><td>2,192</td><td>6,000</td><td>1,877</td><td>6,315</td><td>예비비 추가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불용<br>- 2개 지자체(충북 보은, 경북 상주) 설치</td></tr>
<tr><td>2023년</td><td>7,443</td><td>△7,443</td><td>-</td><td>-</td><td>전액 감 조정하여 ‘포획 포상금’<br>예산 충당</td></tr>
<tr><td>2024년</td><td>6,443</td><td>-</td><td>-</td><td></td><td>2024.7월 기준 집행액 없음</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멧돼지 신고·포획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이·전용이나 예비비 편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br>※ 멧돼지 신고·포획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br>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0</td><td>5,038</td><td>5,038</td><td>-</td><td>10,054</td><td>5,000</td><td>20,092</td><td>18,977</td><td>641</td><td>474</td></tr>
<tr><td>2021</td><td>5,038</td><td>5,038</td><td>641</td><td>2,200</td><td>5,000</td><td>12,879</td><td>12,626</td><td>253</td><td>-</td></tr>
<tr><td>2022</td><td>5,000</td><td>5,000</td><td>253</td><td>-</td><td>9,423</td><td>14,676</td><td>14,440</td><td>-</td><td>236</td></tr>
<tr><td>2023</td><td>5,000</td><td>5,000</td><td>-</td><td>11,160</td><td>-</td><td>16,160</td><td>16,144</td><td>-</td><td>16</td></tr>
<tr><td>2024.7.</td><td>10,000</td><td>10,000</td><td>-</td><td>-</td><td>-</td><td>10,000</td><td>7,842</td><td>-</td><td>-</td></tr>
</table>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하여 수행중인 ASF 광역울타리 관리사업(53억 9,800만원)의 사업 수행기간(2023.6.~2024.5.)을 별다른 사유 없이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게 설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2차 울타리 설치비 예산의 필요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br>○ 환경부는 멧돼지 신고·포획 포상의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br>○ 환경부는 ASF 광역울타리 관리사업의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45</td><td rowspan="2">집행부진에 따른 집행관리 강화 및 사업 효과성 측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1832-308)</td><td rowspan="2">주의,<br>제도개선</td><td rowspan="2">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에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있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 환경부가 보조금 예산을 교부한 것은 부적절하며, 사업 전체의 연도별 실집행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b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1차 교부 이후 점검 결과에 따른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br>※ 2023년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 부적정 교부 현황<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환경부<br>교부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br>현액(A)</th><th>집행액<br>(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r>(B/A)</th><th>사업시행<br>주체명</th><th>보조금<br>교부일</th></tr>
<tr><td>150</td><td>-</td><td>150</td><td>-</td><td>150</td><td>-</td><td>0</td><td>괴산군</td><td>4.18.(100)<br>9.11(50)</td></tr>
<tr><td>150</td><td>-</td><td>150</td><td>-</td><td>150</td><td>-</td><td>0</td><td>음성군</td><td>4.18.(100)<br>9.11(50)</td></tr>
<tr><td>650</td><td>1</td><td>651</td><td>-</td><td>650</td><td>1</td><td>0</td><td>제천시</td><td>4.18.(450)<br>10.25.(20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최근 3년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환경부</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h>이·<br>전용등</th><th>교부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br>현액<br>(A)</th><th>집행액<br>(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r>(B/A)</th></tr>
<tr><td>2021</td><td>5,000</td><td>5,000</td><td>-</td><td>5,000</td><td>86</td><td>5,086</td><td>3,892</td><td>1,191</td><td>3</td><td>76.5</td></tr>
<tr><td>2022</td><td>8,050</td><td>8,050</td><td>-</td><td>8,050</td><td>915</td><td>8,965</td><td>5,460</td><td>3,291</td><td>214</td><td>60.9</td></tr>
<tr><td>2023</td><td>13,125</td><td>13,125</td><td>-</td><td>13,125</td><td>3,577</td><td>16,702</td><td>9,554</td><td>7,098</td><td>50</td><td>57.2</td></tr>
</table>
○ 내역사업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성과지표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 효과도 파악하기 어려움</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주의)<br>○ 환경부는 성과지표 신설,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제도개선)</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46</td><td rowspan="2">보조사업 자금<br>및 사업 관리<br>철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833-302)</td><td rowspan="2">주의</td><td rowspan="2">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에서 추진 중인 ‘경북 영양군 에코촌 조성’ 사업(총사업비 120억원)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함<br>-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 50억원을 영양군에 교부하였고, 영양군은 이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으로 실제 사업시행자인 국립공원공단의 수탁계좌에 100억 4,900만원*의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유보(2023.12.31.기준)됨<br>* 국립공원공단이 2023년까지 수령한 예산 113억원(국비 53억 5,000만원+지방비 59억 5,000만원) 중 1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임<br>※ 영양 에코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환경부</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영양군)</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h>이·전용등</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 (A)</th><th>집행액 (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B/A)</th></tr>
<tr><td>2022</td><td>350</td><td>-</td><td>-</td><td>350</td><td>-</td><td>350</td><td>350</td><td>-</td><td>-</td><td>100</td></tr>
<tr><td>2023</td><td>5,000</td><td>-</td><td>-</td><td>5,000</td><td>-</td><td>5,000</td><td>5,000</td><td>-</td><td>-</td><td>10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국립공원공단의 수탁사업 예산 실집행현황<br><br>(단위: 백만원)<br><table><tr><th>구분</th><th>교부액</th><th>집행액</th><th>잔액</th><th>집행내역</th></tr><tr><td>2022년</td><td>1,300**</td><td>-</td><td>1,300</td><td></td></tr><tr><td>2023년</td><td>10,000</td><td>1,261</td><td>8,739</td><td>용도지역변경 인허가 용역 선금(42백만원)<br>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수립 용역 선금(41백만원)<br>교통성 및 경관성 검토 용역 선금 등(52백만원)<br>자금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1,126백만원)</td></tr><tr><td>계</td><td>11,300</td><td>1,261</td><td>10,049</td><td>집행잔액(100억 3,900만원 + 이자수입 1,000만원)</td></tr></table>**2022년도 사업비 7억원(국비 3.5억원+지방비 3.5억원)에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변경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방비 6억원이 추가</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동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합리적인 인력 운용 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1833-347)</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다른 생물자원관에 비해 연구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미충원으로 인하여 결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br>※ 생물자원관별 인원 현황<br>(단위: 명, 2024.3.기준)
<table>
<tr><th rowspan="2">기관명</th><th colspan="2">정규직</th><th rowspan="2">계</th></tr>
<tr><th>관리직(비율)</th><th>연구직(비율)</th></tr>
<tr><td>국립생물자원관</td><td>32(27.6%)</td><td>84(72.4%)</td><td>116(100%)</td></tr>
<tr><td>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td><td>40(34.5%)</td><td>76(65.5%)</td><td>116(100%)</td></tr>
<tr><td>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td><td>47(40.5%)</td><td>69(59.5%)</td><td>116(100%)</td></tr>
</table>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원 현황<br>(단위: 명, 2024.3.기준)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총계</th><th rowspan="3">임원</th><th colspan="8">일반정규직</th><th rowspan="3">무기<br>계약직</th><th rowspan="3">별도직</th></tr>
<tr><th colspan="4">관리직</th><th colspan="4">연구직</th></tr>
<tr><th>수석급</th><th>책임급</th><th>선임급</th><th>원급</th><th>수석급</th><th>책임급</th><th>선임급</th><th>원급</th></tr>
<tr><td>정원</td><td>185</td><td>3</td><td>3</td><td>10</td><td>15</td><td>19</td><td>3</td><td>11</td><td>26</td><td>29</td><td>65</td><td>1</td></tr>
<tr><td>현원</td><td>169</td><td>3</td><td>0</td><td>9</td><td>9</td><td>23</td><td>1</td><td>6</td><td>10</td><td>49</td><td>58</td><td>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연구직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1833-347)</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에듀센터 건립사업’은 사전 준비 미흡으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이 필요함<br>-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3년도 예산현액 51억 8,600만원 중 4억 5,000만원만이 집행됨<br>※ 에듀센터 건립사업의 실집행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환경부</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h>이·전용등</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 (A)</th><th>집행액 (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B/A)</th></tr>
<tr><td rowspan="3">2022</td><td>실시설계비</td><td>354</td><td>-</td><td>-</td><td>354</td><td>-</td><td>354</td><td>168</td><td>140</td><td>46</td><td>47%</td></tr>
<tr><td>공사비</td><td>619</td><td>-</td><td>-</td><td>619</td><td>-</td><td>619</td><td>-</td><td>619</td><td>-</td><td>0%</td></tr>
<tr><td>계</td><td>973</td><td>-</td><td>-</td><td>973</td><td>-</td><td>973</td><td>168</td><td>759</td><td>46</td><td>17%</td></tr>
<tr><td rowspan="4">2023</td><td>실시설계비</td><td>-</td><td>-</td><td>-</td><td>-</td><td>140</td><td>140</td><td>140</td><td>-</td><td>-</td><td>100%</td></tr>
<tr><td>공사비</td><td>3,927</td><td>-</td><td>-</td><td>3,927</td><td>619</td><td>4,546</td><td>308</td><td>4,238</td><td>-</td><td>7%</td></tr>
<tr><td>감리비</td><td>500</td><td>-</td><td>-</td><td>500</td><td>-</td><td>500</td><td>2</td><td>410</td><td>88</td><td>0%</td></tr>
<tr><td>계</td><td>4,427</td><td></td><td></td><td>4,427</td><td>759</td><td>5,186</td><td>450</td><td>4,648</td><td>88</td><td>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동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산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일회용컵<br>보증금제 사업<br>등 자원순환<br>실천을 위한<br>사업 추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원순환 기반구축(14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탈일회용품을 비롯한 자원순환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실천 사업이 필요함에도 일회용컵 보증제 사업, 종이 빨대 사용 등 정책이 요원한 상황임<br>- 최근 5개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br>※ 최근 5개년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 예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사업비</td><td>3,962</td><td>5,234</td><td>4,928</td><td>5,028</td><td>2,91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2023년 국회 예산 부대의견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개선 대책 검토’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자원순환 정책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원순환 기반구축(1431-302)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자원순환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한국환경공단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을 통한 지원효과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br>- 한국환경공단 실집행 기준, 교부금 2억 6,100만원 중 1억 5,700만원(60.1%) 집행<br>-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br>· (2023) 공모승인업체 34개 중 18개 취소, (2022) 42개 중 15개 취소<br>· 직접고용인원 26명(’22 대비 △24명), 매출액 54억 1,300만원(’22 대비 △46억 7,8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허가절차 지연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현실화 및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자원순환<br>성과관리<br>이행지원 사업<br>보조율 차등화<br>등 사업의<br>효과성 제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원순환촉진지원(1431-3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자원순환성과 관리제도 운영’ 사업 중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0%의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br>- 참고로, 타 환경부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간 자부담 비율을 차등화함<br>※ 타 환경부 시설개선 지원사업 비교
<table>
<tr><th>구분</th><th>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th><th>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br>지원사업</th></tr>
<tr><td>지원대상</td><td>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br>중견기업</td><td>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최소화<br>등 설비 설치 개선</td><td>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td></tr>
<tr><td>2023년 예산액</td><td>909억원</td><td>1,313억원</td></tr>
<tr><td>보조율</td><td>중소 60%<br>중견 50%</td><td>중소 70%<br>중견 50%<br>대기업 3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환경부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의 중견·중소기업 간 자부담 비율에 대한 차등화 방안, 지원 기업 선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절차 부적절**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1432-306) | 시정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 중 강원권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설치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지자체에서 잠정 보류를 요청한 후 사업이 중단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민원 제기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필요한 토지매입비·설계비 집행을 지양하는 한편,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행정대집행<br>비용에 대한<br>구상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1433-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사업의 대규모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청구가 미흡한 실정임<br>※ 연도별 불법폐기물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br>(단위 : 건,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대집행<br>건수</th><th colspan="3">대집행금액</th><th rowspan="2">구상건수<br>(비율)</th><th rowspan="2">구상금액<br>(비율)</th></tr>
<tr><th>계</th><th>국고</th><th>지방비</th></tr>
<tr><td>2019년</td><td>85</td><td>67,120</td><td>29,770</td><td>37,350</td><td>17(20.0%)</td><td>1,965(2.9%)</td></tr>
<tr><td>2020년</td><td>30</td><td>42,193</td><td>35,348</td><td>6,845</td><td>4(13.3%)</td><td>211(0.5%)</td></tr>
<tr><td>2021년</td><td>6</td><td>9,277</td><td>7,368</td><td>1,909</td><td>-</td><td>-</td></tr>
<tr><td>2022년</td><td>7</td><td>8,797</td><td>5,019</td><td>3,778</td><td>-</td><td>-</td></tr>
<tr><td>2023년</td><td>3</td><td>5,150</td><td>2,817</td><td>2,333</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구상을 강화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금리 적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1433-301)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매립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사후관리 완료 후 반환할 경우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있음<br>-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 시 일률적으로 5%의 금리 적용<br>- 2023년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64%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시 금리를 적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5</td><td rowspan="3">폐기물처리<br>현장정보 시스템<br>GPS 부착률<br>제고 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434-5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정보 현장전송 시스템 관련 수집운반차량의 GPS 부착률이 저조한 상황임<br>- 2024년 4월 말 기준 폐기물 정보 현장전송 시스템 관련 수집운반차량의 GPS 미부착률은 건설폐기물 18.1%, 지정폐기물 13.1%<br>※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장정보 전송장치(GPS) 설치현황(2024.4.)<br>(단위 : 대수)
<table>
<tr><th>구 분</th><th>수집·운반차량</th><th>전송장치 설치차량</th><th>미부착률</th></tr>
<tr><td>건설폐기물</td><td>21,443</td><td>17,556 (81.9%)</td><td>18.1%</td></tr>
<tr><td>지정폐기물<br>(의료폐기물 제외)</td><td>5,206</td><td>4,522 (86.9%)</td><td>13.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현장전송 시스템 관련 GPS 부착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이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폐기물처리<br>재해복구비 예산<br>소요의 적정<br>파악 및 불용<br>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1498-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은 연례적인 이월·불용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br>- 2023년 기준, 전년도 이월액 28억 1,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6억 5,400만원 중, 165억 4,000만원(27.5%)을 집행하고 243억 6,400만원은 이월, 87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실집행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3">부처</th><th colspan="10">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 colspan="2">예산</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예산<br>현액</th><th rowspan="2">집행액<br>(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br>제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br>(C/A)</th></tr>
<tr><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br>현액<br>(A)</th><th>예산<br>현액</th><th>집행액<br>(C)</th></tr>
<tr><td>4,027</td><td>48,697</td><td>46,842</td><td>46,842</td><td>2,812</td><td>49,654</td><td>16,540</td><td>46,842</td><td>13,389</td><td>24,364</td><td>8,751</td><td>27.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재해복구비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예산 소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전용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장점검 실시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행·위탁 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행·위탁사업 관련 | 시정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참여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약 39억원 가량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이 2023년 하반기 환경부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음<br>- 2023년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간대행 사업: ①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 ②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③ 녹색화학 인식확산 등을 통한 기반마련, ④ 화학물질확인 등 위탁사업 ⑤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⑥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지원 사업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대행·위탁하여 온 사업 관련 정산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보조사업 정산액 소요의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세입 계상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2022년 88억 3,900만원, 2023년 88억 3,000만원)하고 있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br>- 국가하천정비 등 하천 사업 관련 보조금의 정산·반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2022년 이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급증하였고, 5개년 수납액 평균으로 세입예산을 산출함에 따라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br>※ 연도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체등<br>증감액</th><th rowspan="2">예산<br>현액</th><th rowspan="2">징수<br>결정액<br>(B)</th><th rowspan="2">수납액<br>(C)</th><th rowspan="2">수납률<br>(C/A)</th><th rowspan="2">수납률<br>(C/B)</th><th rowspan="2">미<br>수납액</th><th rowspan="2">불납<br>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td><td>350</td><td>350</td><td>-</td><td>350</td><td>5,979</td><td>5,979</td><td>1,708.3</td><td>100.0</td><td>-</td><td>-</td></tr>
<tr><td>’21</td><td>350</td><td>350</td><td>-</td><td>350</td><td>6,617</td><td>6,245</td><td>1,784.3</td><td>94.4</td><td>372</td><td>-</td></tr>
<tr><td>’22</td><td>2,685</td><td>2,685</td><td>12,028</td><td>14,713</td><td>61,201</td><td>52,362</td><td>1,950.2</td><td>85.6</td><td>8,839</td><td>-</td></tr>
<tr><td>’23</td><td>4,759</td><td>4,759</td><td>-</td><td>4,759</td><td>39,737</td><td>30,907</td><td>649.4</td><td>77.8</td><td>8,830</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br>❍ 환경부는 하천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반환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을 계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예산 편성 없는<br>정규직 인건비<br>집행 등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1531-31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의 예산 중 일부로 편성되어 있는 외부검토 비용(15억원)은 예산 편성내역(75개사×건당 2,000만원)과 달리 예산의 57%인 8억 4,000만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운영비로 집행됨<br>- 특히 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정규직 인건비(2억 800만원)를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한 집행 소요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5등급 노후<br>경유차의<br>조기폐차 실적<br>제고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조기폐차’ 사업의 본래 목표는 ‘5등급 노후 경유차’ 퇴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 노후 경유차의 폐차 실적(8.3만대)이 목표(17만대) 대비 부진하였음<br>※ 2023년 조기폐차 차종별 목표 대비 실적 현황<br>(단위: 대, %)
<table>
<tr><th>구분</th><th>목표(A)</th><th>수요조사 결과</th><th>교부</th><th>실집행(B)</th><th>실집행률(B/A)</th></tr>
<tr><td>합 계</td><td>24.5만</td><td>22.6만</td><td>22.0만</td><td>16.6만</td><td>67.7</td></tr>
<tr><td>5등급</td><td>17.0만</td><td>15.8만</td><td>13.0만</td><td>8.3만</td><td>48.8</td></tr>
<tr><td>4등급</td><td>7.0만</td><td>6.4만</td><td>8.5만</td><td>8.2만</td><td>117.1</td></tr>
<tr><td>건설기계</td><td>0.5만</td><td>0.4만</td><td>0.5만</td><td>0.1만</td><td>2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획물량 대비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1 | **전기굴착기 보급 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신규 편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함<br>- 2023년 예산 14억 5,000만원 중 1억 4,500만원 집행(12억 9,500만원 불용·1,000만원 이월)<br>- 2023년 실집행률 8.6%(’22년 22.1%, ’21년 10.6%, ’20년 10.0%)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목표 물량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 방안 이외에도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연례적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62 | **예산안 편성과 그 실질이 다른 집행 지양 및 근거 법률 마련 이후 사업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2310-301)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유해성 정보 작성’ 예산(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법 개정이 지연(’24.2.)됨에 따라 당초 편성내역과 상이하게 집행(1억 6,000만원)하였음<br>- 민간대행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유해성정보 작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1,230건, 17억 2,200만원) 중 15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한 후, 감액한 금액을 ‘유해성정보 DB 구축 사업’ 용역에 사용하였음<br>*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되는 연간 제조·수입량 0.1톤→1톤으로 조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와 비교하여 그 실질이 지나치게 다른 집행은 지양하고, 연구용역 계약의 경우 필요하다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br>❍ 환경부는 향후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신규 시범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신속한<br>피해복구를 위한<br>실집행 제고 및<br>사업관리 강화<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하천재해복구(지방하천)(5338-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사업수행주체인 10개 시도의 2023년 실집행률은 평균 27.8%에 불과하였고, 실집행률이 20% 미만인 지자체도 5개임<br>○ 이월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하천재해복구(지방하천) 이월예산 실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회계연도</th><th>이월예산<br>예산현액(A)</th><th>이월예산<br>실집행액(B)</th><th>실집행률(B/A)</th></tr>
<tr><td>2023</td><td>331,752</td><td>91,268</td><td>27.5</td></tr>
<tr><td>2024</td><td>242,177</td><td>68,937</td><td>28.8</td></tr>
</table>
주) 2024회계연도는 5월 말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복구 예산의 실집행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집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4</td><td rowspan="3">법정부담금<br>수납률 개선을<br>위한 차별화된<br>징수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 법정부담금(59-56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 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2023년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2.9%로 저조함<br>※ 연도별 법정부담금 수납률 현황<br>(단위: 억원, %)
<table>
<tr><th>구 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부과액(A)</td><td>15,258</td><td>16,994</td><td>16,136</td><td>15,009</td><td>13,911</td><td>13,323</td></tr>
<tr><td>수납액(B)</td><td>7,248</td><td>9,017</td><td>8,415</td><td>8,004</td><td>7,249</td><td>7,051</td></tr>
<tr><td>수납률(B/A)</td><td>47.5</td><td>53.1</td><td>52.1</td><td>53.3</td><td>52.1</td><td>52.9</td></tr>
</table>
-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부진함<br>* 수질배출부과금은 고액장기체납자 3인의 미납금이 전체 미수납액의 87.3%인 415억 6,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br>※ 2018~2022년 환경개선부담금·수질배출부과금 수납률 현황<br>(단위: %)
<table>
<tr><th>구 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환경개선부담금</td><td>38.6</td><td>38.0</td><td>35.4</td><td>32.3</td><td>28.8</td><td>26.9</td></tr>
<tr><td>수질배출부담금</td><td>12.1</td><td>10.0</td><td>10.6</td><td>21.9</td><td>11.5</td><td>11.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수납실적이 저조한 부담금에 대한 차별화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이미 시행중인 제도개선 대책이 실질적인 수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br>○ 환경부는 수질배출부과금의 고액장기체납자의 미납금 시효가 완성되어 불납결손액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5 | **통합적인 스마트하수도 관리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운영사업(1132-309)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별로 지자체 및 시설을 달리 선정하여 사업이 분산 실시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이 분절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br>-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스마트 하수처리장(13곳), 스마트하수관로(10곳), 하수도 자산관리(10곳)가 있는데, 3개 내역사업을 동시수행하는 지자체는 없고, 2개 내역사업 동시수행 지자체는 2군데(경북 의성, 전남 광양)이며, 그 외 31개 지자체는 1개 내역사업만 수행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스마트 하수도 사업 확대 시 이미 선정된 지자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업효과성 제고 및 성과측정을 위해 통합적인 관리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것 | | |
| 66 |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추가적인 집행지연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운영사업(1132-309)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수립한 사업 완료 시점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br>-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현액 66억 3,500만원 중 1억 2,000만원만 실집행되었고, 36억 3,800만원은 이월, 28억 7,700만원은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사업을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집행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집행 부진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1433-306)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br>- 2023년 교부현액 2,090억 4,300만원 중 지자체 실집행액은 1,394억 9,800만원(66.7%)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집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br>○ 환경부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 |
| 68 |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연례적 과다 이월 부적절**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831-309)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세부사업은 미흡한 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매년 연례적인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br>- 2023년에는 예산현액 875억 4,300만원의 38%인 332억 9,8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이후 이월예산 합계는 총 931억 1,900만원에 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9</td><td rowspan="3">하수처리수<br>재이용사업 민간<br>참여 활성화<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2038-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지자체 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선제안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br>- 신규사업 시행 지자체 중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비중은 전체 신규사업 대비 9.7%에 그침<br>※ 2021년~2024년 신규사업 중 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 실시 현황<br>(단위: 개, %,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신규사업수</th><th>비율</th><th>총 국고지원액</th></tr>
<tr><td>합계</td><td>31</td><td>100</td><td>260,941</td></tr>
<tr><td>재정사업</td><td>28</td><td>90.3</td><td>189,472</td></tr>
<tr><td>민간투자사업</td><td>3</td><td><u>9.7</u></td><td>71,46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해 공업용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0</td><td rowspan="3">물 재이용<br>기본계획 준수를<br>위한 제도개선<br>이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2038-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하수처리수의 수자원 기능 강화·수도계획 등 하수처리수와 관련된 타법과의 연계 강화 등 정책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 실적은 다소 미흡한 상황임<br>※ 물 재이용 기본계획 실제 이행여부 현황
<table>
<tr><th colspan="2">정책 제시내용</th><th>관련 법률</th><th>추진 현황</th></tr>
<tr><td colspan="2">수자원의 개념에 하수처리수와 재이용시설 등을 포함</td><td>수자원법<br>(수자원 정의 등)</td><td>검토중</td></tr>
<tr><td rowspan="3">하수처리수<br>재이용계획과<br>타 법정계획간 연계<br>강화</td><td>수자원계획</td><td>수자원법<br>(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td><td>검토중</td></tr>
<tr><td>수도계획</td><td>수도법<br>(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등)</td><td>일부 이행</td></tr>
<tr><td>하수도계획</td><td>하수도법<br>(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등)</td><td>검토중</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1</td><td rowspan="3">실집행 가능성을<br>고려한 예산<br>편성 및<br>성과분석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1633-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중도포기, 계획 대비 저조한 신청 등의 사유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실집행 및 이·불용이 반복되고 있음<br>※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실집행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교부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br>현액(A)</th><th>집행액<br>(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r>(B/A)</th></tr>
<tr><td>2021</td><td>146,034</td><td>84,297</td><td>230,331</td><td>150,978</td><td>51,652</td><td>27,701</td><td>65.5</td></tr>
<tr><td>2022</td><td>112,600</td><td>51,652</td><td>164,252</td><td>102,645</td><td>44,581</td><td>17,026</td><td>62.5</td></tr>
<tr><td>2023</td><td>108,491</td><td>44,581</td><td>153,072</td><td>99,728</td><td>44,446</td><td>8,898</td><td>64.9</td></tr>
</table>
❍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19년 및 2020년 지원기업에 대한 성과분석(’21.11)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br>-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2021년 이후부터의 지원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 등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사업장 측의 중도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연말 교부를 지양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br>❍ 환경부는 사업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것<br>❍ 환경부는 방지시설 설치의 환경개선 성과 및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1년과 2022년 지원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조속히 실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72</td><td rowspan="2">사업 운영규정<br>정비 등 사업<br>추진에 대한<br>개선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1531-317)</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함<br>- 동 사업의 운영규정은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이 설비투자 등의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지원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음<br>「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br>제8조(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① 당해연도 녹색채권 발행 계획이 있거나 발행한 기업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br>1.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이 A0등급 이상인 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BB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일 것<br>2. 녹색채권 발행 또는 발행 예정인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의 활동기준을 충족하고 조달자금이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것<br>3. 녹색채권 발행 또는 발행 예정인 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이차보전 사업에 참여(“간접 참여 또는 수행” 포함)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일 것. 단, 지원금을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한도 이내로 지급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 ○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에 편중(2023년 수혜 기업 중 92.7%)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br>○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녹색 경제활동이 전기차, 배터리 등 온실가스 감축에 50%이상 과도하게 편중됨<br>- 「녹색분류체계가이드라인」은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을 위한 6대 환경목표를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분류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사업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br>○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br>○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ODA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원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1771-302)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수원국 측의 사업부지 변경요청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이 37.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br>- 2023년 예산현액 123억 5,700만원 중 46억 1,400만원 실집행(실집행률 37.3%), 76억 9,500만원 이월<br>- 특히 실집행이 부진한 2023년 계속사업(라오스, 우간다, 몽골)의 경우 2022년에도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 유사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23년에도 반복된 것임<br>○ 정부는 그린분야 ODA 추진전략 세부목표로 ‘ODA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 지원’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수원국 및 사업분야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협정 미체결국가와 수자원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등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br>○ 환경부는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정책환경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지원 전략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4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1432-306)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지연, 지역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실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함<br>-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자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함<br>※ 실집행률: 2019년 38.4%, 2020년 46.1%, 2021년 34.1%, 2022년 51.9%, 2023년 29.5%<br>- 특히 2023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지자체로 교부된 예산현액 614억 7,900만원 중 181억 9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29.5%)하고 430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500만원은 불용하였고, 총 48개 지자체 중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지자체도 14곳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연내 집행 가능 금액 교부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5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령준수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4대강 수계관리기금 - 관리청별 주민지원(1331-301, 1334-301, 1337-301, 1340-301)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수계관리기금간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편차가 발생하고 지자체 실집행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절차조항이 시행령과 지침간, 각 수계별 지침간에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br>- 남양주시(2%), 이천시(56.6%), 순천시(11.4%) 등 일부 지자체의 특별지원사업 실집행률이 저조<br>- 각각의 수계법 시행령은 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으로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년도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및 차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등 사업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br>-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통보기한에 대한 시행령(매년 3월 31일까지)과 각 수계별 주민지원사업 지침(매년 5월 31일까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승인 신청기한 등의 조항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 및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br>○ 환경부 및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집행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이한 절차규정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6</td><td rowspan="3">지출소요 증가를<br>고려한 기금의<br>장기적 재정<br>안정성 확보<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석면피해구제기금 - 석면피해구제급여(2205-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석면피해인정자의 증가로 인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마련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연례적으로 변경되고 있고, 여유자금 규모 또한 감소하는 추세임<br>- 석면피해구제급여는 ’21년 201억 8,800만원, ’22년 270억 7,300만원, ’23년 324억 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br>- 환경부는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로 275억 7,9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63억 2,000만원을 증액변경(’23.10.)하여 337억 9,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br>- 한편, 2018년 이후 석면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br>※ 2018년 이후 석면피해기금 여유자금 추세<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여유자금</td><td>48,340</td><td>43,263</td><td>38,633</td><td>29,123</td><td>14,216</td><td>2,136</td><td>3,31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석면피해자 인정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출소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기금 수지에 대한 면밀한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중·장기적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br>❍ 환경부는 기금 수입 확대 측면에서 기업분담금과 정부 전출금 증액을 추진하고, 지출 합리화 등 기금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7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민원 처리 속도 향상 등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생활공해관리(2205-308) | 제도개선 | 한국환경공단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사업(15억 4,000만원)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민원 대기시간 단축 및 소음측정기 대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지역별 평균 현장진단 민원 대기 시간을 살펴보면 강원(43일), 인천(39일), 경기(34일), 광주(1일), 전남(1일), 전북(2일), 서울(4일), 경북(9일) 등 편차가 상당하였으며,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대기 시간을 살펴보면 30일 이상 소요된 건수가 전체 220건 중 58건(약 26.3%)으로 나타났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환경공단은 온라인 예약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민원 처리 속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충분한 수의 대여용 소음측정기를 확보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8</td><td rowspan="3">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관리 및 사업 관리 철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td><td rowspan="3">시정,<br>주의,<br>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br>서울특별시</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는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선정 지연 등에 따라 2023년 예산 전액(121억 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24년 예산(125억원)도 전액 미집행 중임<br>※ 2024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3">환경부(2024)</th><th colspan="5">서울시(2024. 7. 현재)</th></tr>
<tr><th>예산</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이월액</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r>
<tr><td>12,500</td><td>12,500</td><td>12,500</td><td>12,500</td><td>12,124<br>(3,031)</td><td>49,624<br>(3,031)</td><td>0</td><td>0.0</td></tr>
</table>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국비 수치임<br>2) 서울시 예산현액 = 전년도 이월액(국고 3,031+지방비 9,093)+24년 지방비 37,500백만원<br>❍ 동 사업 관련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가 차질없이 집행된다 하여도 설계기간이 과소계상되어 있고,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br>❍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14.5% 감액하면서 일부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br>- 본선 직경 20cm 감소(10m ▸ 9.8m)하여 유수량 2만㎥ 감소(40만㎥ ▸ 38만㎥) 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실시설계 등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주의)<br>❍ 환경부와 서울시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결과 변경된 시설규모에 따른 안정성 검증 절차를 정밀하게 실시할 것(시정)<br>❍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9 | **강남 및 광화문 대심도터널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하수관로정비(1132-312)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사업은 서울시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음<br>- 2023년 편성된 예산 54억 3,500만원이 실집행 기준 전액 미집행됨<br>- 국비 25%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45억원이 전액 이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2024년 내에 우선시공분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연례적인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현실물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배정할 것 | | |
| 80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예산 편성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2038-329)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은 수열에너지 이용 확산을 위해 수열관로, 히트펌프·열교환기 등 수열설비의 구축설계 및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보조율 50%)으로, 2023년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 착수가 늦어져 전 사업장에서 이월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사전에 필요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br>○ 환경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br>○ 환경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 종료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별 진행상황 및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1</td><td rowspan="3">합리적인 전기차 보급물량 추산 및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조 9,180억원)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전 차종(승용·승합·화물·이륜)에서 저조하게 나타나 불용액이 과다함<br>- 전기승용 82.1%, 전기버스 59.6%, 전기화물 87.2%, 전기이륜 50.6%<br>※ 2023회계연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실집행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7">보조사업자 전체 실집행 기준</th></tr>
<tr><th>교부</th><th>전년이월</th><th>예산현액<br>(a)</th><th>실집행액<br>(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r>(b/a)</th></tr>
<tr><td>전기승용</td><td>671,491</td><td>21,829</td><td>693,320</td><td>568,904</td><td>20,982</td><td>103,434</td><td>82.1</td></tr>
<tr><td>전기버스</td><td>205,939</td><td>66,115</td><td>272,054</td><td>162,076</td><td>85,712</td><td>24,266</td><td>59.6</td></tr>
<tr><td>전기화물차</td><td>681,836</td><td>7,574</td><td>689,410</td><td>601,226</td><td>5,862</td><td>82,322</td><td>87.2</td></tr>
<tr><td>전기이륜차</td><td>13,703</td><td>1,078</td><td>14,781</td><td>7,485</td><td>57</td><td>7,239</td><td>50.6</td></tr>
<tr><td>계</td><td>1,572,969</td><td>96,596</td><td>1,669,565</td><td>1,339,691</td><td>112,613</td><td>217,261</td><td>80.2</td></tr>
</table>
자료: 환경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무공해차 시장의 수요 동향과 보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종별 집행실적 제고 및 수요 견인을 위한 적정 수준의 전기차 보급물량을 추산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br>❍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사와 과다충전 방지 시스템 마련,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신설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2</td><td rowspan="3">지방자치단체<br>교부예산 불용액<br>반납관리 철저<br>및 보조금<br>지급방식 재검토</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사업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의 불용 이후 국고 미반납액 규모가 2024년 5월 말 기준 누적 1,066억 8,200만원에 달함<br>※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정산 현황<br>(누적 기준,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지자체 불용액</th><th>반납대상액<br>('24. 5. 기준)</th><th>반납액</th><th>미반납액</th></tr>
<tr><td>2018</td><td>7,693</td><td>3,072</td><td>1,993</td><td>1,079</td></tr>
<tr><td>2019</td><td>62,315</td><td>4,083</td><td>3,375</td><td>708</td></tr>
<tr><td>2020</td><td>79,035</td><td>5,328</td><td>3,150</td><td>2,178</td></tr>
<tr><td>2021</td><td>80,009</td><td>35,166</td><td>1,842</td><td>33,324</td></tr>
<tr><td>2022</td><td>71,227</td><td>79,098</td><td>9,704</td><td>69,393</td></tr>
<tr><td>합계</td><td>557,403</td><td>126,747</td><td>20,065</td><td>106,682</td></tr>
</table>
○ 개인 및 최초 1대만 구입하는 법인에게 국비보조금 이외에 지방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매칭하는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은 예산 편성 방식의 이원화로 인한 정산 지연 등 행정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정산 후 보조사업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발생액 규모를 면밀히 정산하여 누적된 보조금 정산액과 이자액 반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br>○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 편성 방식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재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3 | **집행가능한 수준의 수소차 보급 물량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함<br>- 2023년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 29.3%(2022년 35.9%, 2021년 54.6%)<br>- 2023년 환경부 불용액 3,110억 8,000만원(2022년 1,656억 9,200만원, 2021년 1,364억 9,0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차종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충전 인프라 및 유통망 구축을 통하여 실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84 | **지역별 분배를 고려한 전기차 충전소인프라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1633-312)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차중비*가 1을 넘었으므로 향후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충전기 설치 계획을 수립할 단계로 보이고, 완속 충전기 설치 예산의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br>*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보급 대수의 비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지역별 분배·내연기관 인프라를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차량 제조사·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br>○ 완속 충전기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5</td><td rowspan="3">면밀한 계획<br>수립을 통한<br>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831-30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은 부지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설보상비 예산 250억원 전액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사비로 전용하였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용한 공사비 예산도 전액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함<br>※ 2023년도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 예산 전용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br>(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 등 사유</th></tr>
<tr><th>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th><th>목-세목<br>코드</th><th>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th><th>목-세목<br>코드</th></tr>
<tr><td>전용<br>('23.12.27)</td><td>야생동식물<br>보호및관리<br>(1831-309)</td><td>건설<br>보상비<br>(410-00)</td><td>25,000</td><td>야생동식물<br>보호및관리<br>(1831-309)</td><td>공사비<br>(420-03)</td><td>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건립부지 사용방식 변경(매입→임차)</td></tr>
</table>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 예산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예산<br>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2</td><td>1,210</td><td>1,210</td><td>-</td><td>1,210</td><td>449</td><td>449</td><td>312</td></tr>
<tr><td>2023</td><td>25,000</td><td>25,000</td><td>449</td><td>25,449</td><td>433</td><td>25,000</td><td>16</td></tr>
<tr><td>2024.7.</td><td>3,300</td><td>3,300</td><td>25,000</td><td>28,300</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6</td><td rowspan="3">미래폐자원<br>거점수거센터의<br>기능 재조정<br>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1432-31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거점수거센터의 전기차 국내 등록 말소 건수 대비 폐배터리 회수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도 배터리 반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r>- 최근 3년간 배터리 말소의 약 85% 이상이 수출말소로 해외에 유출됨<br>※ 폐배터리 회수 현황<br>(단위: 대, %)
<table>
<tr><th>연도</th><th>말소대수</th><th>수출말소<br>대수</th><th>반납<br>대상</th><th>반납</th><th>미반납</th><th>미반납률</th></tr>
<tr><td>2021</td><td>4,014</td><td>3,493(87%)</td><td>521</td><td>263</td><td>258</td><td>49.5</td></tr>
<tr><td>2022</td><td>5,953</td><td>5,045(85%)</td><td>908</td><td>426</td><td>482</td><td>53.1</td></tr>
<tr><td>2023</td><td>6,892</td><td>5,934(86%)</td><td>958</td><td>389</td><td>569</td><td>59.4</td></tr>
</table>
○ 민간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직접 매각이 활성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거점수거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폐배터리 반납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배터리 자원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br>○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거점수거센터의 기능 재조정 등을 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7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지자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5033-356)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낙동강 상류 및 하류 권역별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본류 수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중단되는 등 관계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음<br>- 2022년에도 낙동강 상류지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전액 불용(17억원)되었고, 2023년에도 낙동강 하류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19억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지자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 | |
| 88 |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831-309) | 주의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 사업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등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이 이월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동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9 | **강원 수열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2038-329) | 제도개선 | 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됨<br>- ’23.5월 실시계획 승인, ’23.7월 총사업비 조정심사, ’23.8월 공사 발주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환경부는 강원 수열 클러스터 사업 준공 및 가동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융복합 클러스터 내에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모집될 수 있도록 수요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0</td><td rowspan="3">한국수자원공사<br>수탁사업자금<br>관리 철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한국수자원공사 수탁사업 관련</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자금을 공사의 자체운영사업 및 투자사업 등에 활용하면서 운용계좌(보통예금) 이율(0.10%) 수준의 이자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공사에 귀속시켰음<br>※ 한국수자원공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th><th colspan="2">이자수익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2022</th><th>2023</th><th>2022</th><th>2023</th></tr>
<tr><td>수탁사업</td><td>19,167</td><td>12,452</td><td>0.1</td><td>0.1</td><td>수탁사업자금</td></tr>
<tr><td>대행사업</td><td>42,844</td><td>76,403</td><td>1,94</td><td>3.41</td><td>정부대행<br>사업자금</td></tr>
<tr><td>4대강<br>사업</td><td>-</td><td>22,312</td><td>1,94</td><td>3.41</td><td>4대강 사업<br>출자금 및<br>금융비용<br>관리용 계좌</td></tr>
<tr><td>기타</td><td>609,002</td><td>103,108</td><td>0.01~4.35</td><td>0.1~4.23</td><td>원화, 외화</td></tr>
<tr><td>계</td><td>671,013</td><td>214,275</td><td colspan="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위・수탁계약 체결 시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납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1</td><td rowspan="3">무공해차 보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환경부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소요 계획 없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고갈되었음에도 현재 운행차 중 무공해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함<br>- 환경부는 2017~2023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 5.7조원, 수소차 보조금 1.2조원을 실집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공자기금 잔여금이 모두 고갈되었음<br>- 전체 운행차량 2,613만대 중 무공해차는 64만대로 2.5%에 불과함<br>※ 현재 운행차 중 무공해차가 차지하는 비율<br>(단위: 대)
<table>
<tr><th>구분</th><th>합계</th><th>승용</th><th>버스</th><th>화물</th><th>특수</th></tr>
<tr><td>전체 등록대수 (A)</td><td>26,134,475</td><td>21,589,772</td><td>678,774</td><td>3,724,788</td><td>141,141</td></tr>
<tr><td>무공해차 등록대수 (B)</td><td>642,597</td><td>499,101</td><td>10,075</td><td>132,957</td><td>464</td></tr>
<tr><td>전기차</td><td>606,610</td><td>464,128</td><td>9,085</td><td>132,935</td><td>462</td></tr>
<tr><td>수소차</td><td>35,987</td><td>34,973</td><td>990</td><td>22</td><td>2</td></tr>
<tr><td>비율 (B/A, %)</td><td>2.5</td><td>2.3</td><td>1.5</td><td>3.6</td><td>0.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환경부는 그동안 추진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소요재원 대비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td></tr>
</table>

## 2. 기상청(13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 강화 및 국산 기술 개발 장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 | 제도개선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도로 살얼음, 안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상청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주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br>○ 현재 도로기상관측망 수집정보를 제공받는 내비게이션 업체가 3곳에 불과함<br>○ 도로기상관측장비 구입시 국산장비 대신 외국산 장비 수입을 통하여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국산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br>○ 기상청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과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제2해양기상기지 공사 관리 감독 철저 및 시공 감리업체 제재 수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1232-303) | 주의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은 시공사의 하자조치가 미흡함에도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시공 및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수단 및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전기요금 부족분 예산 집행 부적정 및 전주기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1239-502) | 주의, 제도개선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슈퍼컴퓨터 관련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예산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예산을 확보하려는 기상청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br>○ 기상청 퇴역 슈퍼컴퓨터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국립농업과학원에 이관한 경우가 있지만, 체계적인 전주기 운영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슈퍼컴퓨터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전기요금 추이 및 슈퍼컴퓨터 활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예산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br>○ 향후 슈퍼컴퓨터 6호기를 도입하는 경우 전주기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연례적 이월발생 최소화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3133-312) | 주의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일부 과제의 인건비 집행이 부진하고 3개 연구과제 모두에서 전반적인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고 있으며 특히 사업단 인력 미충원 등의 사유로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연구과제 특성상 인력의 확보가 사업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이월로 인하여 사업효과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
| 5 |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 집행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4133-301) | 제도개선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일반용역비, 공사비 등은 시험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일반적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음<br>○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 및 시험연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목적의 세목조정 및 내역변경 등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조정 문제가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시험연구비는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임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비목별 예산의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국제 기상 전문인력 양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6132-301) | 주의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국제 기상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교육생 중 기상 관련 전공자 비율이 최근 5년간 40~70% 정도에 그치고 해외인턴십 참가자의 기상분야 취업 비율도 50% 미만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국제적인 기상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 해외인턴십 참가자의 경우 기상관련 전공자 위주로 추천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 | | |
| 7 | **부적정한 집행 관행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상레이더운영(1233-302) | 주의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수적인 감리용역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목조정을 통해 해당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이전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br>- 동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5,000만원으로,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가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기상청은 본예산에 동 사업 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세목조정을 통해 감리용역 예산을 조달하였음<br>- 기상청은 2024년도 예산에도 감리를 위한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동 사업 2차년도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감리용역이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 감리 용역을 본예산부터 편성하고,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용역을 추진하는 부적정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인건비 이월<br>과다 및<br>한국기상산업<br>기술원<br>청사이전에 따른<br>분리운영 기간<br>단축을 위한<br>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상산업 활성화(14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상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사업은 매년 인건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음<b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 rowspan="3">기관 운영 출연금 (인건비)</td><td>수입</td><td>4,661</td><td>4,782</td><td>4,887</td><td>5,092</td><td>5,667</td><td>6,346</td><td>6,637</td></tr>
<tr><td>지출</td><td>4,185</td><td>3,877</td><td>4,390</td><td>4,587</td><td>5,343</td><td>6,074</td><td>6,129</td></tr>
<tr><td>잔액<br>(=차년도 이월액)</td><td>476</td><td>905</td><td>497</td><td>505</td><td>324</td><td>272</td><td>508</td></tr>
</table>
자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br>○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존 서울청사 임차·관리비는 8억 8,700만원이나 이원화 운영에 따른 임차·관리비는 9억 5,200만원으로 경상운영비가 증가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상청은 인력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청사이전에 따른 분리운영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7141-301) | 주의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탄소중립청사로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KDI의 사업적정성 검토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2022년도 및 202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br>- 2023년 30억 4,400만원 중 28억 6,300만원 불용, 2022년 9억 4,500만원 전액 불용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향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무추진 단계별로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
| 10 |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238-501) | 제도개선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기상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 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지자체의 경우 기상청의 지진정보 직접연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수가 광역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과 비교하여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음<br>-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관별 서비스 연계 활용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6개, 기초 지자체는 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직접연계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효과적 제도 이행을 위하여 관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 | 제도개선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기상관측기관이 발생하고 있음<br>- 기상청이 수립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2023년 관리계획 미준수 시설 40개소(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이행한 시설 32개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관측시설 폐지·이전·교체한 시설 8개소)<br>○ 2023년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청 기상관측환경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이 완료되지 않고 있음<br>- 기상청은 2023년 101개소에 대하여 관측환경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23년 개선요청을 받은 관측시설 28개소 중 9개소만 이행을 완료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각 관측기관의 이행여부를 조속히 점검하고, 미이행 관측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등 각 기상관측기관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 | | |
| 12 | **안정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4133-301) | 주의 | 기상청 |
| | | 지적사항 | ○ 국립기상과학원은 2021년 이후 매년 결원이 발생하여 연구 인력 운영 문제가 지속되어 기상청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관련 사업은 현업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될 수 있음<br>- 2023년 예산현액 321억 9,900만원 중 305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액 중 인력운용 문제로 인한 불용액이 6억 8,5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의 정상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인력 운용 문제가 동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기상·기후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상산업 활성화(14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상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기상·기후기업들의 해외수출 성과가 부진한 측면이 있음<br>- 2023년 기상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상기후산업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달리 해외진출의 핵심 성과지표인 기상산업 수출액은 2021년 222억 3,400만원에서 2022년 227억 9,400만원으로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남<br>❍ 동 사업을 통한 수출 지원 혜택이 특정 기상·기후기업들에게 편중되어 있음<br>- 기상청의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과 종합수출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지원기업 현황을 보면, 몇 개의 특정기업들이 중복·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최근 3년간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기업 선정 통계
<table>
<tr><th>지원횟수</th><th>기업명</th><th>지원 상세 현황</th></tr>
<tr><td rowspan="2">4회</td><td>㈜지아이이앤에스</td><td>'21년, '23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br>'21년, '22년 종합수출 지원사업</td></tr>
<tr><td>㈜솔탑</td><td>'21년, '22년, '23년 종합수출 지원사업<br>'22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td></tr>
<tr><td>3회</td><td>㈜진성이엔지</td><td>'21년, '22년, '23년 종합수출 지원사업</td></tr>
<tr><td rowspan="4">2회</td><td>㈜씨텍</td><td>'21년, '23년 종합수출 지원사업</td></tr>
<tr><td>㈜웨더피아</td><td>'21년, '22년 종합수출 지원사업</td></tr>
<tr><td>㈜웨덱스</td><td>'21년 종합수출 지원사업<br>'22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td></tr>
<tr><td>㈜레인버드지오</td><td>'21년, '22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td></tr>
</table>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상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수출에 필요한 경쟁력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수출 지원 혜택이 특정 기상·기후기업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td></tr>
</table>

## 3. 고용노동부(86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가산금 미수납액<br>징수 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결산에서 미수납액이 66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4%에 불과함<br>※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및 2024년 예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체<br>등<br>증감액</th><th rowspan="2">예산<br>현액</th><th rowspan="2">징수<br>결정액<br>(B)</th><th rowspan="2">수납액<br>(C)</th><th rowspan="2">수납률<br>(C/A)</th><th rowspan="2">수납률<br>(C/B)</th><th rowspan="2">미수납<br>액</th><th rowspan="2">불납<br>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br>(A)</th></tr>
<tr><td>’20</td><td>264</td><td>264</td><td>-</td><td>264</td><td>4,702</td><td>215</td><td>81.3</td><td>4.6</td><td>4,397</td><td>91</td></tr>
<tr><td>’21</td><td>264</td><td>264</td><td>-</td><td>264</td><td>5,220</td><td>219</td><td>83.0</td><td>4.2</td><td>4,883</td><td>119</td></tr>
<tr><td>’22</td><td>264</td><td>264</td><td>-</td><td>264</td><td>6,181</td><td>221</td><td>83.8</td><td>3.6</td><td>5,839</td><td>121</td></tr>
<tr><td>’23</td><td>264</td><td>264</td><td>-</td><td>264</td><td>7,184</td><td>241</td><td>91.2</td><td>3.4</td><td>6,632</td><td>311</td></tr>
<tr><td>’24</td><td>264</td><td>26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가산금 미수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일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32-302)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내역사업인 일자리사업평가 사업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 있으나「고용정책 기본법」에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br>-「국가재정법」 제12조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은 그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br>- 동 사업비가 고용노동부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나,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br>○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 외에도 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집행이 자유로운 출연금의 형태로 산하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평가 사업 예산을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 중 어떠한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 | |
| 3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및 지역청년 참여율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을 포함하여 졸업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혜택이 해당 대학 재학생에게로 편중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졸업생 및 지역청년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서의 후속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1037-311)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실적 저조 등을 사유로 2024년부터는 동 사업을 폐지하고 2023년까지 육성된 창업팀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만 진행하기로 한바, 창업성공팀 대다수는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2023년 실시된 사업에 의해 창업에 성공한 팀 중 과반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을 받지 못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창업성공팀 중 예비사회적기업 기지정팀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미지정 팀에 대해서는 타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인·지정 수요 발굴 등 후속조치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 | |
| 5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1037-311)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2024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의 신규지원이 중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기존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사업 운영을 조사하고 2024년 관련 진행 사업 진행 경과 및 예산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br>○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존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달리 '취업애로청년'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였음에도 기존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을 적용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사업 추진 시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 | | |
| 7 | **사고이월을 통한 사업수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잡월드운영지원(1049-301) | 주의 | 한국잡월드 |
| | | 지적사항 | ○ 잡월드는 2023년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홍보용역, 시설유지보수, 물품구매까지 사고이월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일부 홍보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약하는 등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잡월드는 향후 당해연도의 사업은 그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을 통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할 것 | | |
| 8 | **K-Move스쿨 사후관리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해외취업지원(1051-304)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운영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6개월 단위로 취업현황 중심의 보고를 받고 있는바, 이직 등 취업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K-Move스쿨 운영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역할 정립 및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철저한 예산수립 및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 시정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홍보를 목적으로 6차례 이전용이 이루어졌으며,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일반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의 16.8%에 달하는 이전용이 있는 등 철저한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빈번한 세목조정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예산 수립 및 사업관리를 하도록 시정할 것 | | |
| 10 | **지원실적 및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율 높일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과의 연계율은 취업 연계율 31.7%,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율 12.9% 등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등으로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1 |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실적 개선, 전국 지자체 참여율 개선)에 대해 개선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성과가 미흡하고, 참여인원 대비 중도탈락자비율(10.6%)과 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율(16.6%)은 동 사업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이라는 목표를 충족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하고, 중도탈락자 비율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특정 심사평가위원으로의 쏠림 현상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300) | 시정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특정 심사평가위원이 많은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 심사평가위원이 지나치게 많은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평가를 수행할 경우 피로도 증가에 따른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년 동일한 심사평가위원이 심사·평가할 경우 반복적인 평가로 인해 심사·평가의 질이 저해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특정 심사평가위원에게 심사·평가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더 많은 심사·평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
| 13 |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사업 홍보 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사업의 성과지표인 여성수혜비율이 연례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자격제도의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수혜비율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 지원자의 수요 및 여성 친화적인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 | |
| 14 | **컨설팅 실적 허위 보고 수행기관 제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장년층취업지원(1340-30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적발된 불성실 수행기업에 대해 계약해지, 차년도 참여제한 등의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ISP 수립 완료되기 전 시스템 구축 사례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합리적 노사관계지원(2031-30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2023년 직무와 연계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한국형 O*net’(오넷)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면서 ISP 수립 완료 전 미리 별도의 예산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도의 예산을 사전적으로 집행<br>- ‘한국형 O*net’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현재 운영 중인 임금직무정보 시스템 개선 용도의 예산을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임<br>- ISP 수립 완료 및 이에 따른 예산 배정 전에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요구 전에 ISP 수립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위반한 집행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을 집행할 때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ISP 수립 후 이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정된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한 예산 전용 등 최소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합리적 노사관계지원(2031-300)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동 세부사업에서 총 11건의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한바 예산 편성의 부실과 예산 집행의 체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br>- 전용 및 세목조정 사유는 용역비 부족, 연구비 부족, 홍보비 부족, 기념품 구매비 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고, 일반용역비와 일반수용비를 서로 주고 받는 형태의 세목조정도 있었음<br>-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관련 연구비로 3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2023년 동 세부사업 일반연구비 예산 2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전용으로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의 전용 및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통합 편성 · 집행**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 주의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기관 경상운영비를 통해 집행하여야 할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기관 경상운영비 외 위탁 또는 보조사업비에서 나누어 편성하여 집행<br>- 2023년 총 4억 9,000만원의 유지보수비 중 2억 4,700만원을 8개 보조·위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각각 집행<br>- 기관운영비를 여러 사업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은 기관운영비 집행내역에 관한 투명성을 저해하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며, 해당 보조·위탁사업에서 직접사업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 문제<br>- 이는 위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보조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증액을 위해 투자사업비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의 기관 경상운영비가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발전재단은 향후 기관의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에 편성된 경상운영비를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임차보증금의 중요재산 관리**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br>노사발전재단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발전재단 본부 및 지사 등의 사무공간을 임대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교부받은 사업비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br>- 2024년 5월말 기준 총 23억 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민간경상보조비로 지급<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br>*「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중요재산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발전재단의 임차보증금을 중요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권리구제<br>지원팀 업무범위<br>조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권리구제지원팀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원 아닌 자가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가 배정되고 있음<br>※ 권리구제지원팀 주요 직무 내용
<table>
<tr><th>구 분</th><th>주요 업무</th></tr>
<tr><td>노동변호사</td><td>노동법상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 민·형사 법률 심층상담, 기관대상 행정쟁송 지원, 노동법 교육 등 수행</td></tr>
<tr><td>공인노무사</td><td>노동법 전반 심층상담,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약 등 각종 인허가 검토, 기관 내·외 노동법 교육 및 설명 등 수행</td></tr>
<tr><td>노동권익<br>지원관</td><td>기관 방문 및 유선 민원인 초기상담(임금체불 등), 임금체불 청산지원 업무 수행</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권리구제지원팀<br>전문직 인력<br>충원 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대구청·광주청·대전청과 같은 주요 지방노동관서에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고 있지 못하는 등 전문직 인력충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br>-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변호사, 공인노무사의 충원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중 23개소에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br>※ 2023년 권리구제지원팀 자격인원별 배치 현황<br>(단위: 명, %)
<table>
<tr><th>구분</th><th>정원</th><th>현원</th><th>충원률</th></tr>
<tr><td>변호사</td><td>32</td><td>14</td><td>43.8</td></tr>
<tr><td>공인노무사</td><td>34</td><td>21</td><td>61.8</td></tr>
<tr><td>노동권익지원관</td><td>111</td><td>116</td><td>104.5</td></tr>
<tr><td>계</td><td>177</td><td>151</td><td>85.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 전문직 직원 채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보조사업의<br>구체적인 내용에<br>따른 예산 편성<br>기준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3031-3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였음<br>-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사업은 쉼터 설치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단가(1개 지원 사업당 2억 1,000만원)를 책정하였으나, 쉼터 설치·운영 외에 안전장구 지급, 종사자 교육 등 단가 기준과 다른 내용의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졌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향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지역별 차별화 가능 사업 위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3031-304)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플랫폼 종사자의 업종이나 사업체에 따라 노무제공 환경과 현물성 지원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 이미 민간 플랫폼 기업에서 동 사업을 통해 안전장구 등 현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는 쉼터 설치·운영 지원이나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br>-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사업을 통해 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김포시·안산시, 전라남도 여수시·해남군(6곳)은 주로 방한장구 지급 등 현물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할 것 | | |
| 23 |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의 구별 편성 및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책에 참조하기 위한 정책연구비 용도로 집행하였고, 이는 정책연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경우를 전수조사하여 정책연구에 적용되는 절차를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연구의 성격에 맞게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를 구별하여 편성·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일반수용비의 과다편성과 무분별한 사용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자체전용·세목조정으로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외빈 선물에 상당액을 사용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일반수용비를 적정액으로 편성하고 비목에 맞게 집행할 것 | | |
| 25 | 유류비 과다 계상과 수사지원 차량의 운행 저조 문제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4135-30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이동식 수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사차량 4대를 제작·구매하기 위하여 총 5억 3,2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유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류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4대의 수사지원 차량이 총 30회를 운행함으로써 예산액의 6.5%인 13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고, 유류비의 집행부진은 수사지원 차량의 운행이 저조한 데서 비롯된바, 경기지청이 총 4회를 운행하는데 그쳤고, 중부청은 5회, 대전청은 9회, 부산청은 12회를 각각 운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시급히 운행률 저조의 원인을 해결하고, 운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본부 차원에서 향후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예산 전액 불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산 편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500)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의 경우, 예산 3억 1,400만원 중 3억원을 전용, 1,4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액이 없음<br>-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해당 비목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 필요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할 것 | | |
| 27 |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지급기준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7040-307) | 제도개선 |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
| | | 지적사항 | ○ 2023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명백한 별도 용역 제공 없이 수행이나 자문 등 일상 업무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함<br>- 이는 2020년 감사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감사에서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지적한 것을 위반한 것임<br>- 수행·보좌 업무는 상시업무로서 상근직원이 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자문위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어 불필요한 인사조치에 해당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의 지급을 출퇴근이 아닌 명백한 용역 제공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시업무에 해당하는 수행·보좌 역할을 비상임 자문위원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과업량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사례 재발 방지**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56-317)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한국능률협회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23년 기존 계약에 추가하여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행정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과업의 내용이 기존 계약을 통해 수행한 과업과 동일하거나 일부 증가한 수준으로, 과업량 대비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br>- 2022년 및 2023년 기존 계약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023년 추가 계약을 통해 2억 9,000만원을 교부<br>- 2022년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고용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2023년에도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이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업비 증액(2022년 약 1,220억원 → 2023년 약 1,358억원)으로 행정지원 업무가 기존 대비 일부 확대되었으나 예산의 2배 이상 증액 교부의 근거 부족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지원 명목 용역계약을 같은 기관과 이중으로 체결하면서 과업량에 비해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하였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 |
| 29 | **행정절차 미숙지로 인한 사업 지연 주의** |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1136-309)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1공학관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설계용역 추진 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동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사업 절차를 숙지하여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숙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 달성 방안 마련 및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재원조달 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음<br>※ 최근 10년간 고용보험기금 계정별(임금근로자) 적립배율 현황<br>(단위: 억원, 배)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 rowspan="3">실업<br>급여<br>계정</td><td>지출액<br>(A)</td><td>79,157</td><td>98,558</td><td>138,860</td><td>144,138</td><td>141,325</td><td>143,307</td></tr>
<tr><td>연말적립금<br>(B)</td><td>55,201</td><td>41,374</td><td>38,666</td><td>42,665</td><td>36,953</td><td>37,525</td></tr>
<tr><td>적립배율<br>(B/A)</td><td>0.7</td><td>0.4</td><td>0.3</td><td>0.3</td><td>0.3</td><td>0.3</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사업의 적정 지출액을 검토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실업급여 계정이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고용보험기금 수입 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의 수납률 제고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징수·수납 현황을 보면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수납률(환수율)이 2022년 60.7%에서 2023년 56%으로 하락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78.8%에서 2023년 20.8%로 하락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의 수납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32 | 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한 후속사업 연계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2024년 종료될 예정이나 동 사업과 유사하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 중이므로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br>- 2022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 절차 및 지도·관리의 측면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근무시간 단축 증빙 등 행정적 부분의 어려움,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후속 사업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에 연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3 | **타 장려금 사업과 차별화**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집행액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집행액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감소하는 추세로, 집행 감소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관련 장려금 제도의 중복 시행임<br>- 2017년 2,433억원을 집행하였으나 2019년에는 40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후 2021년 4,817억원이 집행되었으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2021년 말까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면서 2023년에는 집행액이 다시 434억원으로 줄어들었음<br>-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신규 실시되면서 고용촉진장려금집행이 감소되었으며, 현재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시행되고 있는바 두 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됨<br>* 청년을 신규고용한다는 조건 하에 두 제도를 비교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로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높게 책정되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타 장려금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참여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유사 사업에의 적용 필요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46-351)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이 30.69%로 저조하였고, 신규가입 종료 후 사업예산 감소에도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사업주 참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업과 같이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잔여 소요분의 집행이 문제되는 유사 사업에서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유사 사업 등에 반영할 것 | | |
| 35 |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52-35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내내역사업인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의 집행률이 30.1%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기(旣)훈련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집행 저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인력 지원 및 훈련과정·실시과정 다변화 등 집행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은 목표 16,250명 대비 7,206명만을 지원하였고(달성율 44.3%),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은 목표 인원(4,044명)은 달성하였으나 실 지원액은 91억 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120억 9,600만원)에 미달하였으며,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 유연근무 장려금의 경우, 2023년 10,935명을 지원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3,544명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32.4%), 지원액 역시 계획했던 157억 4,600만원 중 51억 8,500만원만 지원한 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지원 목표(29,154명)를 크게 상회하는 54,686명을 지원하는(187.6%) 등 목표설정 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실적 제고 및 사업 개선을 위한 내역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 정책연용역 등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추계하며 성과평가에 환류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를 정비할 것<br>○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 설정 및 계약을 통한 과업내용 정립 필요**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예산(일반용역비, 210-14) 성격과 부합하지 않고, 그간 별도의 계약 없이 사업이 수행되어 온바, 명확한 과업내용의 부재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성격에 맞게 비목을 변경하고, 공공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책임과 의무, 과업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것<br>○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사업 중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 |
| 38 | **공공직장어린이집의 'AI 푸드스캐너' 장비 확대 및 임차기간 연장 필요**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공공직장어린이집 중 22개 어린이집에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AI 푸드스캐너'가 도입되었으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임차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장비 미도입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장비 보급 확대 요청이 지속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원활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해당 장비 확대 및 임차기간 연장 방안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고용주부담금(38-381) | 시정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13,641개소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적발하였음에도 98.2%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br>- 산재보험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입 홍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재해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미가입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실제 부과·징수하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특별요구로 실시한 쿠팡CLS 전수조사 외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일절 부과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재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징수하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 | |
| 40 |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의 수납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이 2021년 39.2%를 보인 이후 계속 떨어졌고, 2023회계연도에는 21.8%를 보이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2022년 결산 시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을 받았음에도 수납률 및 환수율이 낮아진 점에 대해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소음성 난청의<br>재해조사 기간<br>단축 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산재보험급여(4051-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음성 난청 사건의 재해조사가 지연되고 있음<br>- 업무상 질병 사건 중 소음성 난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인 214.5일보다 119.2일 긴 333.7일로 나타나고 있음<br>- 소음성 난청 관련 장해급여청구 건수가 2019년 4,534건에서 2023년 17,182건으로 12,648건(278.9%) 증가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소음노출의 수준과 기간을 확인하는 소음노출력 조사기관은 8개소에서 11개소로 3개소(37.5%) 증가한 것에 그쳤음<br>※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접수 및 처리 현황 및 검사 기관 현황<br>(단위: 건, 개소)
<table>
<tr><th colspan="2">연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 rowspan="3">장해급여청구</td><td>접수건수</td><td>4,534</td><td>9,090</td><td>9,840</td><td>12,590</td><td>17,182</td></tr>
<tr><td>처리건수</td><td>3,852</td><td>4,823</td><td>7,952</td><td>10,531</td><td>13,542</td></tr>
<tr><td>미처리 누적건수</td><td>-</td><td>7,669</td><td>9,762</td><td>12,045</td><td>16,059</td></tr>
<tr><td rowspan="2">조사기관 수</td><td>청력검사</td><td>74</td><td>88</td><td>109</td><td>108</td><td>120</td></tr>
<tr><td>소음노출력</td><td>8</td><td>8</td><td>9</td><td>11</td><td>11</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난청 사건에 관한 소음노출력 조사를 신뢰성 있는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등 산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장기심사 기준 마련 등 산재사건 심사 신속성 강화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산재보험급여(4051-35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 | | 지적사항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결정 시한 7일에는 공단의 재해조사 기간이 제외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재해조사 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심사의 기준이 모호하며 장기심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별 담당자의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면서도 검사방식이나 심사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어 진단·평가 소요 기간이 타 질병에 비해 비교적 일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병군에 대하여는 각 진단·평가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기심사의 기준을 마련할 것<br>○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건의 장기 심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심사 등 장기 심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집중재활치료<br>활성화 방안<br>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산재병원 지원(4054-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근로복지공단</td></tr>
<tr><td>지적사항</td><td>❍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진찰 실적 및 집중재활치료 실적이 저조한데,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실적이 저조함<br>- 집중재활치료는 ①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따라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 보이는 ② 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상병이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재활프로그램(도수치료, 운전재활, 인지재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진찰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정함<br>※ 2019년～2023년 특별진찰·집중재활치료 실적<br>(단위: 건, 명)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 colspan="2">집중재활치료 대상 상병자</td><td>29,797</td><td>30,996</td><td>35,485</td><td>41,785</td><td>38,888</td></tr>
<tr><td rowspan="3">특별진찰</td><td>공단</td><td>1,666</td><td>1,305</td><td>1,421</td><td>1,696</td><td>1,521</td></tr>
<tr><td>민간</td><td>112</td><td>20</td><td>63</td><td>99</td><td>13</td></tr>
<tr><td>소계</td><td>1,778</td><td>1,325</td><td>1,484</td><td>1,795</td><td>1,534</td></tr>
<tr><td rowspan="3">집중재활치료</td><td>공단</td><td>1,378</td><td>1,593</td><td>1,888</td><td>1,972</td><td>2,456</td></tr>
<tr><td>민간</td><td>573</td><td>547</td><td>713</td><td>670</td><td>618</td></tr>
<tr><td>소계</td><td>1,951</td><td>2,140</td><td>2,601</td><td>2,642</td><td>3,074</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근로복지공단은 집중재활치료 홍보·안내 수단을 확대하고, 주치의가 직접 특별진찰의 신청을 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재해근로자의 집중재활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민간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및 집중재활치료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유 다양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4060-35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목적이 한정적임<br>- 산재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차량구입, 주택이전과 같이 특정한 생계 목적에 해당하거나, 취업안정자금과 같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br>- 유사한 취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와 같이 사용 목적을 비교적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고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목적을 다양화할 것 | | |
| 45 | **사업의 정확한 계획액 산출을 위한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 주의 | 고용노동부<br>한국산업<br>안전보건공단 |
| | | 지적사항 | ○ 상생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임에도 과거 수치에 의존한 계획액 산출로 75억원의 계획액 중 55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약 74%에 그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참여 기업의 의사 등 구체적인 조사와 사업핵심 요소의 과학적인 분석으로 계획액의 정확성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위탁사업비 현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 | 주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 | | 지적사항 | ○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낮은 단가로 인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참여 저조로 추가배정, 목표 조정, 추가공모 및 재공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미달 지역의 보건관리 기술지도 지원이 지연되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등 보건관리 기술지도 지원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 수행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민간 위탁기관 지도요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타 위탁사업 대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목표 물량 달성보다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지역적 균형 및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47 |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 주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 | | 지적사항 | ○ 특정 사업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캠페인이나 교육 등 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사단법인)에서 많게는 수천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된 경우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목표가 단순 교육이수 인원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복 이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 보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제출 의무를 9회 이행하지 않음<br>- 2023년에는 세 차례 이행하지 않음<br>- 기금관리주체(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주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
| 49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인턴제 실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장애인취업지원(1452-311)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인턴제 사업의 취업연계율 및 고용유지율이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인턴제의 경우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0 | **사업 목적 외 지출 주의** | 관련사업명 | 근로복지진흥기금 총괄 | 주의 | 근로복지공단 |
| | | 지적사항 | ○ 근로복지공단은 ① ‘근로자복지지원’ 사업의 예산 중 2,800만원을 기관운영경비로 지출하여야 할 근로복지연구원의 통계분석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하고, ②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 예산 중 4,900만원을 ‘근로자복지지원’ 사업 예산으로 수행하여야 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 운영비로 지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성된 계획액을 목적 외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위탁운영비가 단일한 세부사업을 통해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준을 개선할 것 | | |
| 51 | **철저한 예산 수립 및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연말 임차료를 국내여비로, 무형자산을 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과도한 전용이 이루어졌음<br>○ 당초 계획되지 않은 워크넷 모니터링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일반용역비를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워크넷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철저히 수립·관리하여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br>○ 고용노동부는 전용을 통한 연도 내 신규 연구용역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사회적기업<br>자율경영공시<br>참여 제고를<br>위한 유인체계<br>분석 및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1037-3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지원 사업의 기업 참여도는 2022년과 2023년에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회적기업 수(공시 대상 기업 수) 대비 공시에 참여한 기업 수를 나타내는 자율경영공시율은 2021년 53% 수준에서 2022년 29.4%, 2023년 28.6%로 매년 저조한 수준임<br>※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자율경영공시 참여현황<br>(단위: 개, %)
<table>
<tr><th>연도</th><th>전체 사회적기업 수 (A)</th><th>공시기업 수 (B)</th><th>공시율 (B/A)</th></tr>
<tr><td>2018</td><td>1,877</td><td>481</td><td>25.6</td></tr>
<tr><td>2019</td><td>2,122</td><td>800</td><td>37.7</td></tr>
<tr><td>2020</td><td>2,453</td><td>1,110</td><td>45.6</td></tr>
<tr><td>2021</td><td>2,777</td><td>1,472</td><td>53.0</td></tr>
<tr><td>2022</td><td>3,215</td><td>944</td><td>29.4</td></tr>
<tr><td>2023</td><td>3,534</td><td>1,010</td><td>28.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자율경영공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유형별 참여율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시 참여를 독려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경영공시 참여 및 미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심층 연구 수행 등을 통하여 유인체계를 재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3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2022~2024년 지원 대상자 변화를 보면,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br>-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인 청년에서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인 청년으로 요건 완화<br>- 청년일경험지원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 |
| 54 |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 시정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예산은 '단기성 체험위주' 사업으로 구직청년들에게 '희망고문'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이 단기성 체험위주의 일경험지원이 되지 않도록 성과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5</td><td rowspan="3">청년일경험지원<br>사업의 지역별<br>프로그램 운영<br>편차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지역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br>- 일부 권역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유형이 전혀 운영되지 않았으며, 참여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 청년들의 기회가 제한됨<br>* 충북권이나 충남권,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의 경우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음<br>※ 2023년 시·도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참여 현황
<table>
<tr><th>지자체</th><th>서울</th><th>인천</th><th>경기</th><th>부산</th><th>대구</th><th>광주</th><th>대전</th><th>울산</th><th>세종</th></tr>
<tr><td>기업 (개)</td><td>640</td><td>109</td><td>328</td><td>144</td><td>154</td><td>48</td><td>27</td><td>22</td><td>5</td></tr>
<tr><td>청년 (명)</td><td>7,546</td><td>1,393</td><td>3,306</td><td>2,065</td><td>1,064</td><td>546</td><td>389</td><td>407</td><td>101</td></tr>
<tr><th>지자체</th><th>강원</th><th>충북</th><th>충남</th><th>전북</th><th>전남</th><th>경북</th><th>경남</th><th>제주</th><th>기타</th></tr>
<tr><td>기업 (개)</td><td>47</td><td>59</td><td>9</td><td>71</td><td>6</td><td>39</td><td>27</td><td>12</td><td>110</td></tr>
<tr><td>청년 (명)</td><td>371</td><td>661</td><td>41</td><td>874</td><td>186</td><td>662</td><td>247</td><td>184</td><td>793</td></tr>
</table>
주) 기타는 비대면(온라인, 메타버스 등), 해외 일경험 등 국내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의 운영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운영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과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6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사업 참여자 효과성 분석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규모 및 지원사항, 예산액 등은 매년 변경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 수행내용의 정책 변화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부족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업의 운영규모 또는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요자 차원의 조사 및 실태분석 등을 선행하고, 그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등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
| 57 |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유형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역특화 유형은 다른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2023년 실제 운영에서 구직단념청년으로 보기 어려운 대상까지 포함됨<br>- 구직단념이나 취업 어려움과 무관한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나 39세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지역특화 유형의 대상자 선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성과평가 환류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대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 이후 실제로 예산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미흡 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구체화하며,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할 것 | | |
| 59 | **시장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1062-30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6억 6,900만원 중 27억 6,400만원을 집행(집행률 36%)하여 불용액은 49억 500만원이며, 2024년 예산액은 12억 7,300만원으로 대폭 줄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소득, 연령, 지역별 분포 등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시장 현황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원 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지역별 재원 배분, 사업 참여 인센티브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br>○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넘어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식 노동시장에서 가사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정확한<br>성과평가를 위한<br>성과목표 설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070-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의 성과 달성도가 3년 연속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 목표 설정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3년 연속 같은 목표(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를 설정한 것은 부적절함<br>※ 2021~2023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목표 및 실적<br>(단위: 명)
<table>
<tr><th></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목표 (A)</td><td>4,035</td><td>8,010</td><td>8,010</td><td>8,010</td></tr>
<tr><td>실적 (B)</td><td>8,601</td><td>10,879</td><td>26,823</td><td>사업 진행중</td></tr>
<tr><td>목표 대비 실적</td><td>213.2%</td><td>135.8%</td><td>162.9%</td><td>사업 진행중</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사업 계획이 부실하여 과정 확보 후 미개설·미운영된 사례가 있음<br>※ 2023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집행 내역<br>(단위: 명,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021년도</th><th colspan="3">2022년도</th><th colspan="3">2023년도</th></tr>
<tr><th>목표<br>(A)</th><th>실적<br>(B)</th><th>목표 대비 실적<br>(B/A)</th><th>목표<br>(A)</th><th>실적<br>(B)</th><th>목표 대비 실적<br>(B/A)</th><th>목표(A)</th><th>실제(B)</th><th>목표 대비 실적<br>(B/A)</th></tr>
<tr><td>훈련인원</td><td>24,015</td><td>11,727</td><td>48.8</td><td>28,521</td><td>22,394</td><td>78.5</td><td>36,580</td><td>31,722</td><td>86.7</td></tr>
<tr><td>훈련비용</td><td>222,462</td><td>81,454</td><td>36.6</td><td>306,822</td><td>233,952</td><td>76.3</td><td>414,260</td><td>369,114</td><td>89.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예정된 훈련과정의 미개설 방지 및 실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의 면밀한 실적 관리 및 내일배움카드 사후관리 철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학교유형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공무원 등 적용 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심사 시에만 판정되며, 카드가 발급된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자를 학교 유형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각 학교 유형에 따라 실적을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도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63 | **지방소재 직업계고의 참여 확대 노력**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1131-315)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참여지역 및 학과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울산·세종·강원 및 제주 소재 직업계고의 사업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지방소재 직업계고에서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4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136-30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의 강의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회원가입 후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강좌 추천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 보다 많은 강의 정보를 수강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훈련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5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단가의 면밀한 책정**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 주의,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2021년부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고, 사업주가 자사의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움<br>○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하지 않아 지원 인원의 목표달성률과 지원 금액의 집행률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요건 사전 확인 시스템 등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br>○ 고용노동부는 정책대상별 실질적 사각지대에 대해 정책 변경 사항 및 고용시장 변동 사항 등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지원 목표의 적절성, 현재 지원 요건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의 효과성 등 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하며, 추계의 정확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주가 지원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사회보험 지원을 위해 집행한 사업과 방안 등을 검토하고 사회보험 정책에 맞도록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br>○ 고용노동부는 실제 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하여 지원 인원 목표달성률과 지원 금액의 집행률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6</td><td rowspan="3">적정 목표 설정,<br>참여 저조 원인<br>파악 및 참여<br>확대 방안 모색</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br>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7041-31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Ⅰ유형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동 사업이 도입된 2021년부터 연례적으로 저조함에도 2023년 목표 인원을 2022년의 2배 수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사업수요에 기초한 목표 설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주지역의 참여율이 전국 대비 훨씬 저조함<br>- 제주지역의 경우 2023년 목표인원 4,600명 대비 2,600명 참여 (참여율 56.5%)<br>※ 2021~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th><th rowspan="2">예산<br>현액</th><th rowspan="2">집행액<br>(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집행률<br>(B/A)</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년</td><td>828,647</td><td>937,179</td><td>30</td><td>462</td><td>937,671</td><td>820,544</td><td>-</td><td>117,127</td><td>87.6</td></tr>
<tr><td>2022년</td><td>1,205,551</td><td>1,205,429</td><td>-</td><td>-</td><td>1,205,429</td><td>724,416</td><td>50</td><td>480,963</td><td>60.1</td></tr>
<tr><td>2023년</td><td>1,048,796</td><td>1,048,796</td><td>50</td><td>-</td><td>1,048,846</td><td>756,542</td><td>-</td><td>292,254</td><td>72.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며,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수요 예측 절차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주지역 내 구직자의 참여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구직촉진수당의 잠재적 수급 대상자 추계를 활용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정치적 의도에 따른 예산의 자의적 집행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합리적 노사관계지원(2031-30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으로 ‘재정서류 비치·보전 여부 확인 증빙자료 제출여부 등’을 추가하여 노동조합 등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결과 사업의 집행률이 17.9%로 저조<br>- 예산액 44억 7,200만원 중 8억 200만원 집행<br>- 사업의 지원요건 추가는 정부의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2022.12.26.) 이후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의 집행을 정치적 의도로 지연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등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각종 사업을 진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8 |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및 FGI 연구용역 명목으로 전용·조정 사례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및 FGI (Focus Group Interview) 연구용역을 위해 조달한 금원은 잦은 전용·조정을 야기하고 종래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액을 우회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해당함<br>-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4억 6,0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한 뒤(5.11.), 다시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1억 4,400만원(5.19.)을 전용하였음<br>- 전용 대상이 되는 4억 6,000만원은 종래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6억 1,800만원 내에 포함된 금액이었으나, 동 전용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실집행은 1억원에 그쳤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및 FGI 연구용역 명목으로의 전용·조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전용·조정을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9</td><td rowspan="3">ODA 사업관리 강화 및 출연금 교부관리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3050-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전년도 교부금 대부분이 이월되었음에도, 1~2월에 출연금을 전액교부하여 집행부진 누적을 초래하였음<br>※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내역사업 출연기관별 집행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출연기관</th><th colspan="2">고용노동부</th><th colspan="6">출연기관</th></tr>
<tr><th>예산</th><th>교부액<br>(A)</th><th>전년도<br>이월액<br>(B)</th><th>예산<br>현액<br>(A+B)</th><th>실집행액<br>(C)</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율<br>[C/(A+B)]</th></tr>
<tr><td>한국산업<br>인력공단</td><td>3,375</td><td>3,375</td><td>2,573</td><td>5,948</td><td>2,189</td><td>3,745</td><td>14</td><td>36.8</td></tr>
<tr><td>한국산업<br>안전보건공단</td><td>600</td><td>600</td><td>200</td><td>800</td><td>410</td><td>390</td><td>0</td><td>51.25</td></tr>
<tr><td>한국고용정보원</td><td>3,070</td><td>3,070</td><td>0</td><td>3,070</td><td>0</td><td>0</td><td>3,070</td><td>0</td></tr>
<tr><td>근로복지공단</td><td>150</td><td>150</td><td>0</td><td>150</td><td>150</td><td>0</td><td>0</td><td>100</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 출연사업의 출연금 교부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나 수원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ODA 출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0</td><td rowspan="3">전공심화과정의<br>모집률 감소 및<br>교원 충원 문제<br>해결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폴리텍운영지원(1135-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임<br>※ 2020~2024년 전공심화 과정 모집률<br>(단위: 명, %)
<table>
<tr><th colspan="3">2020년</th><th colspan="3">2021년</th><th colspan="3">2022년</th><th colspan="3">2023년</th><th colspan="3">2024년</th></tr>
<tr><th>정원</th><th>현원</th><th>모집률</th><th>정원</th><th>현원</th><th>모집률</th><th>정원</th><th>현원</th><th>모집률</th><th>정원</th><th>현원</th><th>모집률</th><th>정원</th><th>현원</th><th>모집률</th></tr>
<tr><td>250</td><td>136</td><td>54.4</td><td>250</td><td>1652</td><td>66.0</td><td>250</td><td>140</td><td>56.0</td><td>200</td><td>128</td><td>64.0</td><td>205</td><td>128</td><td>62.4</td></tr>
</table>
❍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당 부분이 불용되었음. 실제 2024년 4월 19일 기준 한국폴리텍 전체 교원 정・현원 차이는 173명으로 정원(1,218명) 대비 약 85%(1,045명)의 인력만을 확보하고 있음<br>❍ ‘학과신설 및 개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원이 계획대로 채용되어야 하나, 교원 충원율이 저조함<br>※ 2020~2024년 한국폴리텍 대한 교원 수급률
<table>
<tr><th></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br>상반기</th></tr>
<tr><td>교원 수급률</td><td>58.7%</td><td>66.1%</td><td>32.5%</td><td>53%</td><td>23%</td></tr>
</table>
주) 해당년도 충원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충원 인원의 비율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입학인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전공심화과정 입학 인원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산업・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학과 개편 및 교육 체계 다변화 등 전공심화과정 모집률 상승 방안을 모색할 것<br>❍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과 산업인력 확보, 원활한 신설 학과 운영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충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1 |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억원으로, 전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집행액(2조 2,614억 9,600만원)의 13.3%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2</td><td rowspan="3">국가기간·전략<br>산업직종훈련<br>사업의 적정<br>목표 설정 및<br>경쟁력 강화<br>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 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이 유사한 직종이 있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함<br>-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2023년 계획현액 4,248억 3,300만원 중 2,181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3%)되고 2,066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2021~2023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의 주요 유사 직종 훈련 인원 비교<br>(단위: 명,)
<table>
<tr><th colspan="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th><th colspan="4">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br>(K-디지털트레이닝)</th></tr>
<tr><th>훈련대상 직종</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훈련대상 직종</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디지털<br>컨버전스</td><td>12,081</td><td>7,879</td><td>4,677</td><td>디지털<br>컨버전스</td><td>140</td><td>2,284</td><td>6,136</td></tr>
<tr><td>스마트웹<br>& 콘텐츠 개발</td><td>4,291</td><td>2,829</td><td>1,938</td><td>스마트웹<br>& 콘텐츠 개발</td><td>553</td><td>2,431</td><td>4,027</td></tr>
<tr><td>정보시스템구축<br>(개발, 운영)</td><td>1,514</td><td>707</td><td>404</td><td>정보시스템구축<br>(개발, 운영)</td><td>462</td><td>1,432</td><td>3,09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및 훈련방식 다각화 등 참여 확대 방안과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일학습병행 지원금 부정수급 추가 징수에 대한 시행령 개정**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1154-356)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정수급에 대해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은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학습병행 지원금 부정수급 추가 징수 규정을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할 것 | | |
| 74 | **여성재취업훈련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고용보험기금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1155-35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여성재취업훈련' 사업 참여자의 180일 이상 고용 유지 인원이 취업자 중 48.8%에 불과하고, 직업훈련 종료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도 2021년 118일에서 2023년 132일로 증가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여성재취업훈련 사업 추진 시 고용유지율 등 성과를 제고하고, 동 사업의 혜택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5</td><td rowspan="3">근로복지공단<br>직원 처우<br>개선비 및<br>운영비 증액<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76-115)<br>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br>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근로복지공단은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최근 5년 내 전체 보험사업 신규 입사자 1,029명 중 158명(15%)이 퇴사하고 있고,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대국민 접근성이 제한되고, 고객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있음<br>-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수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중 75위로 유관기관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차료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임<br>※ 유관기관과의 평균보수 격차<br>(단위: 천원)
<table>
<tr><th>연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건강보험공단</td><td>65,402</td><td>67,033</td><td>68,509</td><td>69,671</td></tr>
<tr><td>국민연금공단</td><td>68,719</td><td>69,200</td><td>70,041</td><td>70,977</td></tr>
<tr><td>근로복지공단<br>(의사제외)*</td><td>56,335</td><td>57,099</td><td>58,461</td><td>58,897</td></tr>
</table>
* 의사직 포함 시 2023년 63,353천원</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내부역량 축적 및 국가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단의 단계적 임금격차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 등 원활한 기관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6</td><td rowspan="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일반회계 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14조 9,677억 7,9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0.13%인 200억원에 불과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r><td rowspan="3">77</td><td rowspan="3">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처리 지연 개선 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산재보험급여(4051-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사건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을 살펴보면, 2019년 40.9일에서 2023년 55.0일로, 이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사건은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일로 늘어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br>- 업무상 질병 사건의 복잡·다단화에 따른 신속 대응 등을 위한 적정인력 추가 배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고 내실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br>※ 2019~2023년 산재 승인 평균 처리일 수<br>(단위: 일)
<table>
<tr><th>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평균 처리일 수 (전체)</td><td>40.9</td><td>39.1</td><td>43.4</td><td>47.6</td><td>55.0</td></tr>
<tr><td>평균 처리일 수<br>(출퇴근재해를 포함한 업무상 사고)</td><td>16.1</td><td>15.5</td><td>15.3</td><td>15.9</td><td>16.5</td></tr>
<tr><td>평균 처리일 수 (업무상 질병)</td><td>186.0</td><td>172.4</td><td>175.8</td><td>182.0</td><td>214.5</td></tr>
</table>
자료: 근로복지공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br>❍ 고용노동부는 향후 업무상 질병 판정 관련 사업 예산 및 인력 편성 시 사업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집행 및 처리지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과 인력 운영에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8 |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4151-350)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964개 사업장 총 2,890대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총 2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을 보면 125억 6,9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이 중 90%가 넘는 113억 2,400만원이 11월과 12월에 집중 집행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사업 진행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기능에 충실한 품목들을 발굴하는 등 사업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 | | |
| 79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건설업종 지원 실적 제고** | 관련사업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4151-350) | 주의,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종의 참여저조 및 집행부진에 따라 2023년 계획현액 1,197억원 중 113억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많으므로, 추락·붕괴 등 예방을 위한 지원 품목을 적극 확대하고,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의 지원율도 강화할 것(제도개선)<br>○ 고용노동부는 향후 건설업종에서의 지원 촉진을 위하여 건설업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0</td><td rowspan="3">임금채권<br>보장기금<br>일반회계 전입금<br>증액 방안 마련<br>및 국회 보고</td><td>관련사업명</td><td>임금채권보장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3년 수입 결산액 9,752억 2,200만원 중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8,200만원으로 0.008%(운영비의 0.43%)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있음<br>-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수입의 99%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200만원을 부담하고 전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 중<br>※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수지<br>(단위: 억원, %)
<table>
<tr><th>구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수입(A)</td><td>5,239</td><td>5,654</td><td>6,173</td></tr>
<tr><td>지출(B)</td><td>6,274</td><td>6,004</td><td>7,923</td></tr>
<tr><td>재정수지(A-B)</td><td>△1,035</td><td>△350</td><td>△1,750</td></tr>
<tr><td>누적적립금</td><td>7,305</td><td>6,955</td><td>5,20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1 | **대지급금 회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임금채권보장기금 - 대지급금 지급(3051-300)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대지급금 지급 후 회수가 미흡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음<br>- 2023년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이 30.9%(6조 2,371억 7,700만원 중 1조 9,913억 5,300만원 회수)에 불과하고, 기금 적립금이 2019년 대비 45% 이상 감소(2019년 9,587억 7,700만원 → 2023년 5,204억 8,700만원, 45.7% 감소)하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우려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
| 82 |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관련사업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법정부담금(59-593)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은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국방부, 교육부 및 교육청 등 2023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부처가 있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직접 고용이 어려운 부처나 기관의 경우 연계고용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3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근로복지진흥기금 -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업’은 계획현액 133억 1,200만원 중 63억 7,200만원(47.8%)을 집행하고, 지원목표인원 87,207명 중 21,844명(25.1%)을 실제 지원하여 실적이 부진함<br>- 2023년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미가입 이유에 관하여 ‘제도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이고, 미가입자 중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로 나타나고 있음<br>-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운영지원 서비스 가입 사업장의 편입 유도, 근로자 대상 가입 독려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사업의 활성화 및 미가입 사업장 참여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수단의 효과성 분석,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br>○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의할 것<br>○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br>○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운영지원 서비스 가입 사업장 편입 유도 및 근로자 대상 가입 독려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4 |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성과지표 관련 | 시정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 사업 중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 다수 발견됨<br>-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를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성과를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 존재<br>- 2022년 결산시부터 성과지표 외에 해당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개선이 없는 상황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소관 사업 중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5 |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br>일반회계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br>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br>고용보험기금 - 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br>고용보험기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46-351) | 주의 | 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고용노동부 사업 중 5개 사업의 불용액이 2023년에만 1조원을 상회하고, 이러한 상황은 2년 연속 반복되고 있음<br>-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고용유지율이 예상보다 낮아 8,891억원의 예산 중 1,696억원이 불용됨<br>-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참여 수요가 많지 않아 1조 764억원의 예산 중 2,152억원이 불용됨<br>-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사업은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라 1조 2,256억원의 예산 중 3,000억원이 불용됨<br>- 내일배움카드(고보)사업은 훈련기간이 장기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저조로 인하여 8,873억원의 계획액 중 2,319억원이 불용됨<br>-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긴 지원기간(3년),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와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2,294억원의 계획액 중 1,590억원이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고용노동부는 연례적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5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 시 과다추계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6</td><td rowspan="3">구직촉진수당<br>지원의 효과적인<br>제도개선 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인원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개선되지 않았음<br>-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률이 2018년 64.9%였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64.7%로서 사실상 취업성공패키지와 큰 차이가 없음<br>- 고용유지율 또한 1년 이상이 절반 수준에 불과함<br>※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종료자 중 고용유지율<br>(단위: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고용유지율</th></tr>
<tr><th>3개월 이상</th><th>6개월 이상</th><th>1년 이상</th></tr>
<tr><td>2022년</td><td>79.6</td><td>65.9</td><td>52.0</td></tr>
<tr><td>2023년</td><td>80.7</td><td>68.0</td><td>54.5</td></tr>
</table>
주) 당해연도 취업으로 종료된 참여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23년 종료자의 경우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취업 후 각 기간(3~12개월)을 도과한 참여자를 모수로 고용유지율이 산출되었으며 2024년 12월말까지 매월 변동 가능함<br>○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음<br>-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9만 6,270원(10,030원×209시간)으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은 월 최저임금 대비 23.85%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의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br>○ 고용노동부는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사업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본 취지에 맞게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td></tr>
</table>

# 국토교통위원회



# 1. 국토교통부(159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기준 예산액은 54조 6,616억원으로, 그 중 3조 1,774억원이 불용되었음<br>- 총계 기준 세출예산(기금 제외) 현액은 36조 5,390억원으로, 그 중 4조 4,982억원이 불용되었음<br>○ 경기 둔화 국면에 정부 지출을 줄이면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소비·생산·소득·고용 등 국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br>○ 예산 불용은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인 만큼 활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세입 미수납<br>대책 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조 7,546억 6,500만원으로, 15조 8,525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조 2,247억 1,9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7%)되고, 83억 6,3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1조 6,194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br><br>○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연도별 미수납액은 2019년 9,750억원 수준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1조 6,194억원으로 2019년 대비 66.1%가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1년 94.4%에서 2023년에는 89.7%까지 감소하였음<br><br>※ 2019~2023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br><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th><th>예산현액</th><th>징수결정액<br>(A)</th><th>수납액<br>(B)</th><th>수납률<br>(B/A)</th><th>불납<br>결손액</th><th>미수납액</th></tr>
<tr><td>2019</td><td>15,465,891</td><td>15,389,358</td><td>16,189,436</td><td>15,205,304</td><td>93.9</td><td>9,124</td><td>975,008</td></tr>
<tr><td>2020</td><td>15,276,258</td><td>15,411,135</td><td>16,608,479</td><td>15,500,048</td><td>93.3</td><td>4,108</td><td>1,104,323</td></tr>
<tr><td>2021</td><td>20,722,276</td><td>20,494,875</td><td>21,633,321</td><td>20,416,197</td><td>94.4</td><td>7,645</td><td>1,209,480</td></tr>
<tr><td>2022</td><td>16,412,982</td><td>15,951,474</td><td>17,731,875</td><td>16,255,959</td><td>91.7</td><td>8,024</td><td>1,467,892</td></tr>
<tr><td>2023</td><td>14,754,665</td><td>14,754,665</td><td>15,852,517</td><td>14,224,719</td><td>89.7</td><td>8,363</td><td>1,619,435</td></tr>
</table>
○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체 미수납액 1조 6,194억원 중 89.6%인 1조 4,504억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조 2,317억원은 지역자율계정에서, 나머지 2,187억원은 지역지원계정에서 발생하였음<br><br>- 가장 큰 미수납액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법정부담금으로 1조 1,72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동 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법정부담금이 2,138억원이 발생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세입 관련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조 6,19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90%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징수 독려 및 징수 실적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성과보고서에는 69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49개(71%)에 불과함<br>- 세부적으로는 ①균형국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84.6% ②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 42.9% ③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00% ④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 부가가치 제고 75.0% ⑤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SOC 구축 66.7% ⑥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증진 100%임<br>○ 서민주거복지 향상 관련하여서는 14개의 세부사업 중 8개가 미달되어 42.9%라는 낮은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주택공급량에서 목표가 미달성됨<br>- 주택공급량의 경우 준공기준이 아닌 사업승인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시장과 괴리된 성과발표와 주거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사업승인도 줄어들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제고할 것 | | |
| 4 | **예·결산 심의대상 사업과 성과목표관리 대상 불일치** | 관련사업명 | 총괄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 자료에서 결산 심의대상 사업과 성과목표 관리대상 간의 불일치 현상이 발견됨<br>- 일부 결산 심의대상 사업은 성과지표의 설정 단위로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일부 다른 대상 사업들은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며,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해당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실적 및 달성도를 파악하기 어려움<br>○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 심사, 결산 심의과정에서는 사실상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되고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 수준에서 성과지표가 설정될 경우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성과가 배제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를 정하기보다는 측정이 필요한 사업단위를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정하는 등 각 사업의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저출생 대응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저출생 대응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1.4조원(43.5%)으로 가장 많은데, 그 중 17조 8,90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86%에 그치고 있음<br>- 이후 보건복지부 13.4조원, 교육부 6.4조원, 고용노동부 4,8조원 순서이며, 보건복지부(99.7%)와 교육부(99.9%) 등은 예산을 대부분 집행함<br>○ 국토교통부 저출생 예산은 대부분 주거 안정이라는 점에서 타 항목보다 중요성이 강조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저출생 대응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한국토지주택공사<br>토지은행적립금<br>자본금 전입을<br>통한 활용방안<br>모색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토지 비축 제도 관련</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1조에 의해 매년 정부 배당 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이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023년 말 기준 8.68조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실제 토지은행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음<br>- 공공개발용 공공토지는 LH가 사전 일괄 보상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시행자에게 비축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공급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및 자본비용으로 구성됨<br>- 자본비용은 타인자본비용(부채)과 자기자본비용(적립금)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데, 토지비축 사업비용은 대부분 타인자본비용으로 조달되고 있음<br>※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자본비용률(2019~2023)<br>(단위: %, %p)
<table>
<tr><th colspan="3">유형 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 rowspan="5">자본비용률</td><td rowspan="2">자기자본비용</td><td>자기자본비용률(A)</td><td>2.31</td><td>1.59</td><td>1.23</td><td>1.72</td><td>3.32</td></tr>
<tr><td>자기자본비율(B)</td><td>21.04</td><td>24.29</td><td>37.57</td><td>17.23</td><td>4.88</td></tr>
<tr><td rowspan="2">타인자본비용</td><td>타인자본비용률(C)</td><td>2.49</td><td>1.72</td><td>1.42</td><td>1.91</td><td>3.81</td></tr>
<tr><td>타인자본비율(D)</td><td>78.96</td><td>75.71</td><td>62.43</td><td>82.77</td><td>95.12</td></tr>
<tr><td colspan="2">비율 합계(B+D)</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 colspan="3">자본비용률 합계(A×B)+(C×D)〕</td><td>2.45</td><td>1.69</td><td>1.35</td><td>1.88</td><td>3.79</td></tr>
</table>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적립금은 토지은행의 자본으로 전입될 수 있고, 이로써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면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23년 말까지 토지은행 자본으로 전입된 적립금은 없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토지은행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배당 전 이익금 40%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공공토지 계획 연차별 조정을 통해 토지은행적립금을 토지은행 계정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개발용 비축토지의 공급가액을 실효적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인 공급가액을 산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공공임대주택<br>사업실적<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국민임대(융자)(1332-401), 공공임대(융자)(1333-401), 행복주택(융자)(1335-401),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국민임대출자(1440-404), 영구임대출자(1440-407), 행복주택출자(1440-408),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착공 실적이 부진하며, 사업취소 물량이 급증함<br>-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착공 실적이 특히 부진하며, 다가구매입임대의 공급실적도 부진함<br>-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전체 미착공물량 4만 4,777호 중 3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이 2만 6,771호로 전체의 60%를 차지함<br>-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 취소 물량은 총 1만 7,338호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함<br>※ 2023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계획 대비 실적(LH)<br>(단위: 호,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사업승인</th><th colspan="3">착공</th><th colspan="3">준공</th></tr>
<tr><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r>
<tr><td>영구임대</td><td>50</td><td>50</td><td>100.0</td><td>941</td><td>253</td><td>27.0</td><td>2,788</td><td>2,470</td><td>88.6</td></tr>
<tr><td>국민임대</td><td>-</td><td>-</td><td></td><td>1,864</td><td>618</td><td>33.2</td><td>5,892</td><td>5,856</td><td>99.4</td></tr>
<tr><td>행복주택</td><td>629</td><td>634</td><td>100.8</td><td>5,930</td><td>2,885</td><td>48.7</td><td>21,010</td><td>21,666</td><td>103.1</td></tr>
<tr><td>공공임대</td><td>5,674</td><td>13,726</td><td>241.9</td><td>158</td><td>-</td><td>0.0</td><td>939</td><td>939</td><td>100.0</td></tr>
<tr><td>통합임대</td><td>25,114</td><td>23,772</td><td>94.7</td><td>2,262</td><td>354</td><td>15.6</td><td>1,181</td><td>1,181</td><td>100.0</td></tr>
<tr><th>구분</th><th colspan="3">계획</th><th colspan="3">실적</th><th colspan="3">달성률</th></tr>
<tr><td>다가구<br>매입임대</td><td colspan="3">27,846</td><td colspan="3">6,162</td><td colspan="3">22.1</td></tr>
<tr><td>전세임대</td><td colspan="3">30,160</td><td colspan="3">30,570</td><td colspan="3">101.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착공 및 사업취소 현황 및 재승인 사업들의 지연현황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주거급여 관련<br>정책연구용역<br>결과 반영<br>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주거급여지원(1034-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5년간 주거급여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실제 정책 반영도가 미흡함<br>※ 최근 5년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정책연구용역 계약 내역<br>(단위 : 천원)
<table>
<tr><th>주제</th><th>완료일</th><th>계약액</th><th>상대방</th></tr>
<tr><td>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td><td>‘19.12.28</td><td>86,300</td><td>국토연구원</td></tr>
<tr><td>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평가</td><td>‘20.2.22</td><td>38,875</td><td>한국주거학회</td></tr>
<tr><td>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연구</td><td>‘21.4.16</td><td>331,300</td><td>국토연구원</td></tr>
<tr><td>지역 주거복지 정책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td><td>‘21.5.27</td><td>191,928</td><td>국토연구원</td></tr>
<tr><td>21년 주거급여 발전방안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평가 연구</td><td>‘22.7.31</td><td>330,300</td><td>국토연구원</td></tr>
<tr><td>택지공모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수립 연구용역</td><td>‘21.9.30.</td><td>21,000</td><td>국토연구원</td></tr>
<tr><td>지자체 주거복지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연구</td><td>‘22.4.26</td><td>136,364</td><td>국토연구원</td></tr>
<tr><td>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td><td>‘22.4.3</td><td>85,000</td><td>주택산업<br>연구원</td></tr>
<tr><td>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td><td>‘23.2.8</td><td>89,091</td><td>국토연구원</td></tr>
<tr><td>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지원</td><td>‘23.4.10</td><td>96,900</td><td>새로운사회를<br>여는연구원</td></tr>
<tr><td>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td><td>‘23.12.23</td><td>294,000</td><td>국토연구원</td></tr>
<tr><td>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td><td>‘23.10.5</td><td>56,445</td><td>한국토지주택<br>연구원</td></tr>
<tr><td>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연구</td><td>‘23.10.31</td><td>52,364</td><td>국토연구원</td></tr>
<tr><td>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제고 및 발전방안 연구</td><td>‘25.1.20</td><td>267,000</td><td>국토연구원</td></tr>
<tr><td>주거급여 지원범위 확대방안 연구</td><td>‘24.11.27</td><td>178,000</td><td>국토연구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지방자치단체<br>집행여건을<br>고려한 보조금<br>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34-3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임<br>-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 사업으로 도입<br>❍ 당초 예산액 442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은 2022년 14.2%, 2023년 65.9%로 저조함<br>- 2022년도 이월액 662억원이 남아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2023년도에 예산 442억원을 전액 교부한 결과, 163억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고, 212억원은 불용하였음<br>※ 2022년 및 2023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집행내역<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6">보조사업자</th></tr>
<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교부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22</td><td>82,149</td><td>82,149</td><td>82,149</td><td>-</td><td>82,149</td><td>11,644</td><td>66,187</td><td>4,333</td></tr>
<tr><td>2023</td><td>44,200</td><td>44,200</td><td>44,200</td><td>66,187</td><td>110,387</td><td>72,825</td><td>16,354</td><td>21,208</td></tr>
</table>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은 보조금 교부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주거비 수준, 소득 기준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전문인력<br>확보를 위한<br>인건비 활용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034-32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1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후 매년 변호사 인력 퇴사 및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br>※ 2021-2023회계연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집행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예산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집행률</th><th rowspan="2">불용액</th><th>인건비 불용액</th></tr>
<tr></tr>
<tr><td>2021</td><td>8,538</td><td>5,844</td><td>68.4</td><td>2,694</td><td>935</td></tr>
<tr><td>2022</td><td>7,134</td><td>5,433</td><td>76.2</td><td>1,701</td><td>1,104</td></tr>
<tr><td>2023</td><td>7,134</td><td>5,789</td><td>81.2</td><td>1,345</td><td>1,09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의 적정 급여 수준을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건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보조금 교부 및<br>집행 관리 철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34-32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br>❍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5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실집행에 대한 고려 없이 2023년 8월에 일괄 교부하였고, 202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74.1%인 41억 7,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집행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성과지표 변경<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34-32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br>○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가입 건수의 증가 자체를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 대상인 무주택 청년층이 아닌 전체 가입 건수를 측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br>※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br>(단위: 만명, %)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3 목표치 산출근거</th></tr>
<tr><td rowspan="3">전세보증금<br>반환보증<br>가입건수(HUG)</td><td>목표</td><td>-</td><td>-</td><td>-</td><td>26</td><td>28</td><td rowspan="3">전년 가입 건수 대비<br>10% 상향 목표 설정</td></tr>
<tr><td>실적</td><td>-</td><td>-</td><td>23.7</td><td>31</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td><td>119</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사업 내용 및 대상을 고려하여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하여 관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보조금 교부 시<br>연내집행가능성<br>고려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4270-51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은 예산 전액을 7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집행률은 100%이나, 그 중 4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총 교부액 45억원 중 11억 6,900만원(26%)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었음<br>-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이월을 초래<br>※ 최근 3년간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결산내역<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th><th>집행액 [실집행액]</th><th>집행률 [실집행률]</th></tr>
<tr><td>2021</td><td>3,500</td><td>3,500 [1,365]</td><td>100.0 [39.0]</td></tr>
<tr><td>2022</td><td>4,900</td><td>4,900 [2,566]</td><td>100.0 [52.4]</td></tr>
<tr><td>2023</td><td>4,500</td><td>4,500 [1,169]</td><td>100.0 [26.0]</td></tr>
</table>
- 동 시범사업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3년 간의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향후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임<br>*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및 도시문제를 디지털 트윈국토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시범 개발하는 사업</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정식 추진하려는 경우 2024년도에 진행 중인 2023년도 이월 보조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연구용역 사업<br>연례적·관례적<br>이월<br>재발 방지<br>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4305-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의 대부분이 연례적·관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의 이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br>※ 연도별 연구용역 이월 현황<br><table><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연구용역 발주건수</td><td>6건</td><td>7건</td><td>3건</td><td>2건</td></tr><tr><td>연구용역 이월건수</td><td>6건</td><td>2건</td><td>3건</td><td>2건</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이 연례적·관례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엄격한 예산 집행 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건설기계임대료<br>신고체납센터<br>합리적<br>성과금(인건비)<br>지급 기준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4308-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2023년도 업무 처리 실적이 2022년도 대비 저조하였음에도 2022년도와 동일한 성과상여금(1,892만원)이 지급된 것은 사기 진작을 고취하려는 성과상여금의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br>- 2019년도에는 1,346만원, 2020년도에는 0원, 2021년도에는 512만원의 성과상여금이 집행되는 등 별도의 기준 없이 성과상여금이 집행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건설기계임대료신고체납센터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제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4308-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임대료 체납에 관한 사항이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로의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체납신고가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사업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소관 직접투자 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2018년 280억 100만원에서 2023년 2,813억 9,400만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함<br>○ 또한, 정책펀드(GIF · PIS 합계) 조성을 통한 사업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2018년 12억원에서 2023년 4,244억원으로 약 3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투자 사업의 효과적 성공을 위한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연도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직접 투자사업 및 정책펀드 사업 규모<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직접투자사업 승인금액</td><td>28,001</td><td>74,100</td><td>83,147</td><td>162,750</td><td>143,364</td><td>281,394</td></tr>
<tr><td>정책펀드 승인금액</td><td>1,200</td><td>32,000</td><td>54,000</td><td>269,600</td><td>388,000</td><td>424,4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정책펀드 조성을 통해 추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전문적으로 추진되고, 그 사업 추진 과정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한파대피소, 지진대피소 등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대부분을 차지(79,390개 중 98.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건수가 2021년 4,922개소에서 2023년 3,010개소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br>-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 중 195개소가 미흡 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 확대 편성 및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9 |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필요한 법적 권한 미비로 적발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건설 현장직원들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 공사 현장을 적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불시 점검 또는 수시적 현장점검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업무가 실제 현장에서 시의적절하고 신속·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현장점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정책연구비 연례적·관례적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담당자 관리·평가 시행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건설기술제도선진화(4318-3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가 연례적·반복적으로 이월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상임위의 지적(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9억 3,000만원 중 2억 900만원을 이월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사업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평가를 시행할 것 | | |
| 21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4323-304)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의 경우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계약 관련 위반 신고 건수가 총 289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서의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거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지자체 교부금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4323-306)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의 경우 동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25억원 중 8억 7,500만원(35%)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실집행률 저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발주 기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출연금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건설 BIM 활성화 지원(4326-3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급된 출연금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 실집행률: 2021년 26.4%, 2022년 0.6%, 2023년 66.5%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성과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토정책 종합연구(5547-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토정책 종합연구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로 ‘제도개선 활용률’과 ‘국토계획 평가를 통한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을 설정하고 있음<br>○ ‘국토계획평가를 통한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 지표의 경우 연례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br>※ 국토정책 종합연구 사업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3목표치<br>산출근거</th><th>측정산식<br>(또는 측정방법)</th></tr>
<tr><td rowspan="3">제도개선 활용률<br>(단위:%)</td><td>목표</td><td>88.5</td><td>88.5</td><td>88.5</td><td>88.5</td><td>88.5</td><td rowspan="3">최근<br>3년간(’20-’22)<br>정책연구용역 중<br>제도개선 활용률<br>평균을 감안하여<br>산정</td><td rowspan="3">(제도개선활용<br>연구용역/최근2<br>년내 준공한<br>연구용역)×100</td></tr>
<tr><td>실적</td><td>85.7</td><td>87.5</td><td>87.2</td><td>88.8</td><td>-</td></tr>
<tr><td>달성도</td><td>96.8</td><td>98.9</td><td>99.9</td><td>100</td><td>-</td></tr>
<tr><td rowspan="3">국토계획평가를<br>통한 평가대상<br>계획의<br>보완 개선율<br>(단위:%)</td><td>목표</td><td>96.8</td><td>98.9</td><td>98.9</td><td>98.9</td><td>98.9</td><td rowspan="3">최근<br>3년간(’20-’22)<br>평가대상계획의<br>보완 개선율<br>평균을 감안하여<br>산정</td><td rowspan="3">(총 반영건수<br>/총 개선<br>보완요구<br>건수)×100<br>* 전년도<br>하반기~<br>해당연도 상반기</td></tr>
<tr><td>실적</td><td>75</td><td>75</td><td>77</td><td>73.3</td><td>-</td></tr>
<tr><td>달성도</td><td>76.5</td><td>77.2</td><td>77.2</td><td>74.1</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성과목표 달성도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5 | **연초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용역 발주와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도시정책 종합연구(5632-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새로운 도시정책 모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임<br>○ 최근 4년간 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2020년 5,300만원에서 2023년 2억 9,300만원으로 연도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도 2020년 90.3%에서 2023년 66.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추진 지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초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및 이월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5637-308)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은 2021년 및 2022년도에는 각각 70.7%, 72.0%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48.8%로 집행실적이 저조함<br>○ 또한, 동 사업의 연도별 불용액이 2021년도 1억 6,800만원, 2022년도 2억 8,600만원, 2023년도 6억 7,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음<br>-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지원 사업 중 스마트시티 성과확산 사업의 경우 2022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4억 4,1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2억 3,000만원이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당 사업의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할 경우에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7 |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사업 이·전용 관련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5734-302)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통합관리사업’* 내역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연구비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함<br>-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br>- 동 내역사업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용도의 예산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 예산의 자산취득비로의 전용은 불가하여 전액 불용한 바 있음<br>* 공간정보 정책사업의 활성화 및 중복구축 방지 등 총괄·조정을 위한 사업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용도의 예산을 전액 불용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예산 편성 없이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충당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5734-302)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 내역사업은 2회계연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함<br>- 2022회계연도 집행률은 0.4%(400만원)에 불과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주의)가 있었으나, 2023회계연도 집행률도 3.4%에 그침<br>*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보안심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신규 편성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었으므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br>○ 국토교통부는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 민간 수요 제고 방안 및 보안심사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체계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29 | **사업 지속을 위한 방안 검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5735-303)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북한지적원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며 2023년도 집행률은 97.9%이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br>- 북한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 사이 제작된 자료로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 등이 모두 표시된 세부 측량자료로서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 토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정부는 동 자료를 국가중요기록물(영구기록물)로 지정하여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음<br>-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당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접근불능지역 DB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양질의<br>전시소장품<br>확보를 위한<br>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도시건축박물관 운영(6131-31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전시소장품 확보’ 사업은 단가가 낮은 소장품 위주로 확보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고 박물관 전시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br>- 소장품 구매를 위한 편성 단가(210만원)에 비해 집행 단가(약 50만원)가 현저히 낮음<br>※ 최근 2년간 전시소장품 확보 현황
<table>
<tr><th>구 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
<tr><td>2022년</td><td>841백만원<br>(400점×210만원)</td><td>629백만원<br>(1,289점×49만원)</td><td>96백만원</td></tr>
<tr><td>2023년</td><td>4,931백만원<br>(2,348점×210만원)</td><td>3,742백만원<br>(6,938점×54만원)</td><td>885백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박물관 전시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소장품 구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요한 예산의 경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기한 내 완료 및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 주의,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당초 화재안전성능보강의 공사비용 지원 기간은「건축물관리법」 제29조(현행 제29조의2) 및 부칙에 따라 2022년 말까지였으나,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법률 개정(2023. 4. 18.)을 통해 2025년 말까지 다시 연장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예산지원 유효기간 만료 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건축물관리자들의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국회에 유효기간 연장을 재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할 것(주의)<br>○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특히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집행이 저조하므로, 건축주를 설득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을 제고하고, 아울러 동 사업의 대상을 노후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제도개선)<br>○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5개년 중 3개년은 집행률이 20% 미만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마련 및 지출 구조조정 등 기금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 유지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총괄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며,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58.7조원에서 2021년 76.1조원까지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62.6조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63.5조원으로 2021년 대비 12.6조원(△16.6%)이 감소하였음<br>○ 또한, 2021년 49조원까지 증가했던 기금 여유자금 잔액이 2022년 28.7조원, 2023년에는 19.2조원, 2024.3월에는 13.9조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유자금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지출 구조조정 등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3</td><td rowspan="3">이차보전 사업의<br>적정 규모 검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이차보전 지원(1042-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민간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려는 것임<br><br>❍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회수되지 않는 사업방식임에도 최근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차보전 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br><br>- 최근 이차보전 사업의 예산을 살펴 보면, 당초 계획액 기준 2019년 1,903억원에서 2023년 7,656억원으로 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대출수요 증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시켜 왔으며, 변경된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178억원에서 2023년 1조 95억원 수준으로 5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br><br>- 2021~2023년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전금리 변동 내역을 보면, 2021년 상반기 이차보전 금리는 1.01% 수준이었으나 시중금리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2.21%까지 증가하였음<br><br>※ 2021~~2023년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전금리 변동 내역<br><br>(단위: %)<br><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r><tr><th>상반기</th><th>하반기</th><th>상반기</th><th>하반기</th><th>상반기</th><th>하반기</th></tr><tr><td>보전금리</td><td>1.01</td><td>1.34</td><td>1.68</td><td>1.86</td><td>2.21</td><td>1.96</td></tr></table>주) 보전금리: 생애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대한 보전금리 평균</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공공분양주택<br>미분양 물량<br>해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융자)(1134-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분양주택 2023년 누적 공급호수는 4만 7,924호인데, 이 가운데 미분양호수는 5,852호로 미분양률이 12.2%로 나타남<br>- 최근 5년 중 2019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br>- 2021년 미분양률은 1%였으나, 2022년과 2023년 신규 공급 물량에서 미분양 다수 발생<br>- 주요 미분양 단지로 양주옥정의 경우 미분양률 83%, 익산·울산·인천 등은 미분양률 90% 수준<br>※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미분양률 현황(LH)<br>(단위: 호,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공급호수</th><th rowspan="2">미분양호수(B)</th><th rowspan="2">미분양률(B/A)</th></tr>
<tr><th>연간</th><th>누적(A)</th></tr>
<tr><td>2019</td><td>5,035</td><td>5,035</td><td>1,333</td><td>26.5</td></tr>
<tr><td>2020</td><td>12,162</td><td>17,197</td><td>1,051</td><td>6.1</td></tr>
<tr><td>2021</td><td>16,439</td><td>33,636</td><td>352</td><td>1.0</td></tr>
<tr><td>2022</td><td>8,632</td><td>42,268</td><td>4,962</td><td>11.7</td></tr>
<tr><td>2023</td><td>5,656</td><td>47,924</td><td>5,852</td><td>12.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입지선호도나 수요를 고려한 공급을 통한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5 |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융자)(1134-4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서 수요자에게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br>○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지연 문제 및 분양가 상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br>- 사전청약 99개 단지 총 5만 2,000호 중 2023년 말 기준 본청약 완료 단지는 13개 단지 총 6,915호이며, 공지된 시기에 본청약이 이루어진 단지는 1개 단지에 불과함<br>- 본청약 완료 13개 단지의 경우, 실제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지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8,698만원(12.74%) 인상됨<br>- 아울러, 본청약 예정일이 1달 정도 남았을 때 본청약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및 임대차 계약 일정에 영향을 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음<br>○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낮추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br>- 여전히 인상된 분양가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본청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본청약 지연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통지하며, 사업장이 취소된 곳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br>○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하여 현재 지원대책과 별개로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한국토지주택공사<br>수탁사업자금<br>관리 부적절<br>제도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탁사업자금을 이자수익률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고 이로 인해 공적 자금의 운용 수익이 민간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br>- LH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2023년 기준 총 167개의 사업을 수탁함<br>- LH는 수탁사업자금을 이자수익률이 낮은 보통예금(연 0.1% 이율 수준)으로 예치하였는데, 고금리기조 등으로 은행권들의 실적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자금 운용 수익이 과하게 민간에 귀속된 면이 있음<br>- 한국환경공단 등 타 공공기관에서 수탁사업자금에 대해 보통예금 수준을 상회하는 이율의 적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효율 높은 관리방안 마련이 가능함<br>*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21년 수탁사업자금 이자수익률은 0.5%였으나 2023년 3.04%로 증가함<br>※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의 수탁사업자금 이자수익률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한국토지주택공사</th><th colspan="2">한국환경공단</th></tr>
<tr><th>연도말 잔액</th><th>이자수익률</th><th>연도말 잔액</th><th>이자수익률</th></tr>
<tr><td>2021년</td><td>442,276</td><td>0.1%</td><td>1,535,675</td><td>0.50%</td></tr>
<tr><td>2022년</td><td>554,706</td><td>0.1%</td><td>1,341,289</td><td>1.57%</td></tr>
<tr><td>2023년</td><td>579,894</td><td>0.1%</td><td>1,106,431</td><td>3.04%</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탁사업자금을 이자수익률이 낮은 보통예금(연 0.1% 이율 수준)으로 예치하였고 이로 인해 공적 자금의 운용 수익이 민간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탁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 수준의 이자수익이 반환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매각 계획 현실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자산효율화계획에 따른 정리대상 자산 중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의 99%를 차지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수립함<br>- LH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 7월)에 따라 자산효율화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7,778억원의 자산을 효율화하겠다고 계획함<br>- 2023년까지 자산효율화 계획률은 34.71%이나 실제 이행률은 4.13%로 집단에너지사업의 매각실적 저조가 주 원인임<br>※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효율화계획 이행 실적<br>(단위: 억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3년까지</th><th>전체기간</th><th colspan="2">~2023년까지</th></tr>
<tr><th>계획 금액(A)</th><th>이행실적(B)</th><th>계획 금액(c)</th><th>계획률(A/C)</th><th>이행률(B/C)</th></tr>
<tr><td>비핵심 부동산</td><td>198</td><td>177.2</td><td>4,847</td><td>4.09</td><td>3.66</td></tr>
<tr><td>불요불급한 여타 자산</td><td>2,380</td><td>1.28</td><td>2,382</td><td>99.92</td><td>0.05</td></tr>
<tr><td>집단에너지사업</td><td>2,377</td><td>0</td><td>2,377</td><td>100.0</td><td>0</td></tr>
<tr><td>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td><td>122</td><td>143.02</td><td>549</td><td>22.22</td><td>26.05</td></tr>
<tr><td>합계</td><td>2,700</td><td>321.5</td><td>7,778</td><td>34.71</td><td>4.13</td></tr>
</table>
- 집단에너지사업은 누적 경상손실로 인해 반복 유찰되는 등 매각이 지연되고 있음<br>*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 및 전기 에너지를 사업지구 내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의 누적이 심화되고 있고 매각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자산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소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항공기검사(3634-35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항공기검사 사업은 항공사 등 민원소요자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각종 증명·승인,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 정비조직 인증 등을 위한 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수행하는 감독관 등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임<br>○ 2021년까지는 일반수용비(210-01) 비목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2년 이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공통경비 감액('21.8.23)에 맞춰 공통경비 감액분만큼 일반수용비로 배정하되 불용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음<br>○ 그러나 일반수용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①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②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③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목에 해당하는바, 이는 해당 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고, 일반수용비가 신규편성된 2022년 이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국내여비로 5백만원 전용(감)하여 집행한 내역 외에는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였음<br>* 2022년 2,400만원, 2023년 1,900만원 불용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항공기검사 사업에 일반수용비를 편성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전용하거나 전액 불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안전한 관사 계약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 · 관사 관리(3731-302)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청 · 관사 관리 사업은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의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 사무실 및 지방공항 관사 임차료, 청사시설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고, 청사 및 관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임<br>○ 청 · 관사 관리 사업의 무형자산 비목은 관사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지난 2019년 항공교통본부 직원의 관사 용도로 다가구주택을 전세금 6,00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2023년 6월 주택소유자의 채무 미이행에 따른 채권자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 및 배당 결과 전세금 6,000만원 중 4,000만원은 미회수되었음<br>○ 지난 5년간 항공교통본부의 전세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선순위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관사의 경우 근저당권, 소액임차인 보증금 등을 합하면 해당 건물의 거래가액을 넘는 경우도 존재하며, 특히 주택소유자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아직 전세금이 회수되지 못한 건의 경우에는 감정가액(11억 3,600만원)이 계약 당시 거래가액(12억 2,400만원)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매에 따른 낙찰액(8억 7,800만원)이 거래가액의 8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관사들도 자칫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고의 손실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관사를 계약함에 있어 안전한 관사를 계약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0 | **택배산업서비스 평가 사업의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물류산업지원(4034-309)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물류산업지원 사업은 물류 효율화 기반 조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 등 물류산업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문 물류시장 확대, 물류산업 선진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임<br>○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택배산업서비스 평가 사업은 '14년도부터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br>○ 다만, 지난 3년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택배군에서 일부 기업들이 계속 특정 등급(B, C++, C+)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반면 대기업군에 속하는 업체들이 특정 등급대(A+, A, B++, B)를 계속 받는 결과가 나타나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라는 사업의 당초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서비스평가 대상을 일반택배군과 기업택배군으로 구분하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로 볼 수 있어 평가 대상군의 대기업군, 중견기업군 또는 중소기업군으로 구분 등을 통한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br>○ 매년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별 평가결과의 택배업계와의 공유를 통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부처에서 관련 추진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연도별 평가 결과 공유회 1회 개최가 전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택배산업서비스 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택배서비스의 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결과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중견· 중소기업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이차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4034-315)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기존 물류센터의 개선·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장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한 효율성·안전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에 대한 대출 투자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br>○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스마트물류센터 효과분석 사례조사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분류 자동화 등으로 직·간접 인건비 및 직송 활성화를 통한 연계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br>※ 분류자동화로 1일 1.6억원, 직송 활성화로 1일 177억원 절감효과, 적재량 증가로 충분한 안전재고 확보 등<br>○ 다만, 실제 동 사업에 의해 이차지원이 이루어진 스마트물류센터 소유 기업의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물류센터가 매년 증가하고, 선정된 물류센터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이차지원금 가운데 대기업 소유 물류센터에 지원되는 지원금 총액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미 자금 등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br>* '21년 4개소(총 6개소), '22년 11개소(총 18개소), '23년 14개소(총 23개소)<br>** '21년 약 62%, '22년 약 70%, '23년 약 62%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이차지원이 확대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포함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대상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의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4158-308)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957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정보통신기술-도로교통 융합신기술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융합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자율주행 신뢰도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연구개발 사업임<br>○ 2023년 동 사업 과제들의 정부출연금 실집행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과제들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총 44억 4,216만원의 잔금 및 이월금이 발생하였음<br>○ 또한 동 사업의 정산결과, 13개 과제에 대하여 약 1억 1,700만원의 사업비 불인정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불, 목적 외 식대 사용, 연구수당 초과지급 등 연구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집행 가능성과 연구개발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3 | **제3교통안전체험 센터 구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통사고예방지원(4631-305)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제3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사업은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및 안전운전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br>○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등 체험교육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건립 진행이 필요함<br>- 부지확보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3년 건립공사 예산 26억원이 전액 불용된바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개소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체험교육 수요가 누적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제3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첨단자동차검사 연구센터 장비 구입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4633-308)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전기차 · 수소차 ·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자동차들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br>○ 2023년 국토교통부는 VR/AR 기반의 관능(육안) 검사를 위한 3종의 콘텐츠장비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확정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여 계획대로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소비자 권익 구제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br>○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2024년 4월말까지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접수 2,720건 중 2,518건이 종료되었으며, 사건종료 건수 중 932건(37.0%)이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되어 중재사건 종료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br>○ 요건미충족 등 각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중재진행을 위해 연락하더라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각하된 건이 932건 중 851건(91.3%)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에 관하여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면밀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장비 구입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장비구축(4634-327)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 장비구축 사업은 국내 수소자동차 활성화와 수소자동차 충돌사고 및 화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시험평가 센터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상환경 재현 수소 연료시스템 모니터링 평가장비 1종을 구입하였는데, 2023년 12월 구입계약을 완료하여 2024년 10월에 설치될 예정임<br>○ 그러나 정작 장비가 설치될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는 2026년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되지 않은 센터의 장비를 선제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장비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교통안전공단출연(4638-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요건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br>○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로서 만 65~70세 미만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중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혈압·신체기능 적합도 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의료적성검사 대체제도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도입 당시 택시 및 화물차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부실검사, 낮은 검사기준, 반복 재검사 등으로 인해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br>- 최근 4년간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2020~2023년 평균 2.5% 수준이나 의료적성검사는 0.2%에 불과하여 고령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련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부실검사 예방, 적성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8 | **추진실적이 미흡한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4638-302)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전국에 분산된 주차장 공간정보를 국가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교통혼잡·주차난 해결 및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임<br>○ 지방자치단체 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의 주차장 개소는 전국 주차장 1,891,458개소(2022년 기준) 중 168,949개소(8.93%)이며,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주차장은 1,037개소(0.05%)임<br>*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2개 지자체와 연계 완료, 2024년 14개 추가하여 총 96개 지자체 연계<br>- 또한, 동 사업은 2021년 이후 예산이 1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2023년에도 예산 집행율이 81.9% 수준으로 높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br>* 2020년 294백만원, 2021년 2,680백만원, 2022·2023년 193백만원<br>*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사업 지속추진 여부 재검토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민영 주차장 연계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br>○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모바일 실태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주차장 정보의 통합관리 활용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2025년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한바, 진행 상황에 대한 관찰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9 | **교통시설특별회계 대규모 불용 및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총괄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됨 (국토부 : 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 해수부 : 항만계정)<br>○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2023년에 4조 4,982억원이 불용되어 전년대비 3조 9,696억원(750.1%)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예산현액은 2023년이 가장 적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2.3%로 크게 증가함<br>*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 2019년 1.8%, 2020년 0.5%, 2021년 1.0%, 2022년 1.3%<br>- 이 중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불용규모가 1조 2,885억원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불용액 약 1.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집행자금 부족으로 예산규모가 크고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SOC 분야의 집행을 다음연도로 늦춘 것으로 보임<br>- 교통시설건설분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증가(116.88→156.51)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br>* 건설공사비지수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특정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자재비, 인건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는 지수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2023년 세수 부족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3조원 규모의 불용액 발생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대규모 국책 사업의 목적 달성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도로건설사업<br>철저한 사업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고속도로건설(1532) 단위사업, 일반국도건설(1632) 단위사업,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636) 단위사업</td><td rowspan="3">시정,<br>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고속도로・일반국도・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규모가 총 3,957억원 수준임<br>-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br>※ 2023년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결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B)</th><th rowspan="2">이・전용<br>등(C)</th><th rowspan="2">예산현액<br>(A+B+C)</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고속도로건설</td><td>1,638,846</td><td>1,638,846</td><td>-</td><td>-</td><td>1,638,846</td><td>1,402,940</td><td>-</td><td>235,906</td></tr>
<tr><td>일반국도건설</td><td>1,478,673</td><td>1,478,673</td><td>193,085</td><td>△80,828</td><td>1,590,930</td><td>1,323,097</td><td>135,402</td><td>132,431</td></tr>
<tr><td>대체우회도로건설</td><td>335,339</td><td>335,339</td><td>43,069</td><td>35,559</td><td>413,967</td><td>350,000</td><td>36,573</td><td>27,395</td></tr>
</table>
❍ 세 건설사업의 이・전용규모를 보면 고속국도가 1조 850억원, 일반국도가 6,071억원,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 811억원인데 국회 확정예산 대비 66.2%, 41.1%, 24.2% 비율임<br>-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이 관행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일반국도건설사업의 경우 17개 사업에서 본예산의 70% 이상이 전용・조정된 바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 사업 지연 시 총사업비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할 것(시정)<br>❍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건설사업에서 본예산에 상당하는 예산의 전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1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과적단속운영(1732-303)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과적단속운영 사업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 인건비,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에 지출하는 사업비임<br>○ 과적단속운영 사업 운영비 예산 중 일부를 국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집행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함<br>- 일반수용비 예산 243만원<br>○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지출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2 | **과적단속 운행제한 부실조치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과적단속운영(1732-303) | 시정,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는 과적단속 및 후속조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 지방국토관리청(일반국도), 민자사업자(민자고속국도)자에게 위임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br>○ 감사원 감사(2023년 6월~7월) 결과 과적 해소가 가능한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명령은 0.4%에 불과하고 나머지 99.6%는 도로운행이 가능한 회차, 통과로 과적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br>○ 또한, 과적차량 분리운송을 위해서는 분리운송 공간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분리 운송 공간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한 280개 단속검문소에 대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하지 않음<br>- 그 결과 과적단속 차량이 회차, 통과 명령을 통해 도로를 운행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적극 실시하는 등 단순 회차·통과 조치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시정)<br>○ 국토교통부는 단속검문소를 전수조사하고 분리운송 공간 마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 53 | **지자체 ITS 구축 예산의 적정한 편성·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첨단도로교통체계(1736-304)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추진을 위해 국도 ITS 구축 운영 및 지자체 ITS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함<br>○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2023회계연도 1,020억원에서 2024년도 54억원으로 대폭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br>○ 지자체 실집행률(74.6%), 성과지표(ITS 구축연장), 지방도 ITS 구축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보조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ITS 구축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통편의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4 | **여객 공항시설 사용료 관리체계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항공항만수입(67-67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항공항만수입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 비행장 · 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통해 구성됨<br>○ 현행 법령에 따라 항공사가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놓치는 등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권 환불신청기한 내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 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지나쳐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br>* 국제선 : 인천공항 · 김포공항 출발여객 17,000원, 기타공항 국제선 출발여객 12,000원, 모든 공항 환승여객 10,000원 / 국내선 : 인천공항 5,000원, 김포 및 기타 공항 4,000원<br>- 이는 20년 이상 지속된 문제로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는 경우 환급가능한 요금 문제는 외교부(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등 다부처에 걸쳐 있어 범부처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여객공항시설 사용료 관리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5 |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정책연구 방식으로 변경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공항개발조사(3532-309)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공항개발조사 사업은 공항분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공항발전 지원 사업 내에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2억원)이 편성되었음<br>○ 경기남부국제공항 용역 예산을 ‘정책연구비’로 변경 집행할 필요가 있음<br>- 경기남부국제공항 2023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합의 미흡 등을 사유로 불용하였고, 이후 2024년 예산에 다시 반영되었음<br>- 예산 반영 취지를 고려하고 지역갈등 해결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정책연구 방식으로 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정책연구 방식으로 시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비로 변경 집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제주 제2공항<br>건설 사업 관련<br>주체들의 갈등<br>완화·조정 방안<br>마련 및 면밀한<br>사업 설계<br>등으로 연례적<br>예산 불용 재발<br>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제주 제2공항 건설(3538-3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및 제주도민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2024년도 예산 172억 8,000만원 중 172억 2,000만원을 불용한바, 연례적인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 불용 상황이 반복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있음<br>* 제주도 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의견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고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4차례 주민설명회 등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와 지자체 내 자체 검토기간 등을 거쳐 2023년 7월 지자체 의견을 접수한 바 있음<br>※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추이<br>(단위: %)
<table>
<tr><th>구분</th><th>'16.1.</th><th>'17.9.</th><th>'18.9.</th><th>'19.6.</th><th>'20.1</th><th>'21.2.</th><th></th><th>'21.9.</th><th>'22.2.</th><th>'22.5.</th><th></th><th>'22.10.</th><th>'23.1.</th><th>'23.5.</th><th>'24.2.</th><th>'24.3.</th></tr>
<tr><td>찬</td><td>68</td><td>63.7</td><td>51.7</td><td>48.6</td><td>47.3</td><td>44.1</td><td>43.8</td><td>45.2</td><td>45.9</td><td>44.9</td><td>46.2</td><td>46.4</td><td>45.7</td><td>43.1</td><td>48.0</td><td>46.1</td></tr>
<tr><td>반</td><td>21</td><td>24</td><td>41.8</td><td>47.1</td><td>48.5</td><td>47</td><td>51.1</td><td>49.1</td><td>49.6</td><td>48.8</td><td>46.6.</td><td>50.8</td><td>48.8</td><td>49.2</td><td>47.0</td><td>47.7</td></tr>
</table>
▸주 찬성 요인 : 공항 주변지역(제주 동부) 발전, 건설 ·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등<br>▸주 반대 요인 : 현 공항 주변 상권 침체 우려(제주 중부), 환경훼손 우려, 오버투어리즘 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관련 주체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 설계 등으로 연례적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유지보수 비용 예산의 불용 및 중복 편성 사례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3636-338)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항공안전자료 분석에 따른 취약분야 선제적 발굴 및 집중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한 항공안전감독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임<br>○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에는 하드웨어(서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로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의 서버 이관을 추진하였던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된 정보시스템은 관리원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함.<br>- 이에 지난 2년 간 국토교통부의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내역사업 예산 1억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2년간 불용처리(2022년 8,600만원, 2023년 9,300만원)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예산의 불용 및 중복 편성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8 |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의 적극적 추진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3637-324)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①국내 드론 기업의 우수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과 드론 비즈니스모델을 실증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②지역별로 드론을 활용한 특화 분야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③국내 드론 제작·활용업체, 공공분야 드론 보유·활용현황 등 드론산업 동향 파악 및 통계분석을 통해 드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드론산업 실태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br>○ 동 사업에 따라 수립된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023~2032)'은 맞춤형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일정까지 설정한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23.下)'을 수립하였으나, 현장실습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비롯한 6개 세부과제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적극적 개선이 요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과 관련하여 미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비롯한 세부 과제들의 차질없는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 |
| 59 |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회계 관리 및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드론 인증센터 구축사업(3637-328)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급증하는 드론 인증 수요에 대비하고 상업용 드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론 시스템 안전성 인증 인프라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br>○ 건축공정 지연,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16억 8,000만원뿐만 아니라 전년도 이월 예산 21억 6,000만원을 전부 이월하는 등 재이월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0 |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br>[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3031 - 316),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3031-320),<br>양산도시철도건설(3031-322,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3031-326),<br>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3031-333),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3031-335),<br>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3031-353),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3031-355,<br>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건설(3031-356)]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총 예산 4,560억 4,500만원 중 45.5%인 2,074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br>○ 특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액 1,847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br>○ 일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임에도 사업비 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과소 집행하였음<br>○ 2022년 사업이 종료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다음 연도인 2023년 내에 보조금 반납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 7월에야 반납을 완료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제고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시철도 건설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고, 공사비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추진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방비 매칭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1 | **택시산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택시산업지원(4931-316)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택시 총량조사를 통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에 따라 자율감차를 신청한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 부담금을 재원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하여 택시업계의 근본문제인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려는 사업임<br>-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46억 8,300만원으로, 45억 6,100만원(97.4%)이 집행되었고, 지자체 택시감차 수요부족에 따른 교부잔액으로 1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2022회계연도 국회 예결위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사전점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광주, 제주, 전북 등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곳이 발생하였고, 전국적 감차 규모도 감차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음<br>- 제5차 택시총량 조사에 의해 감차 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여전히 실제 택시감차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가 필요함<br>* 현재 제5차 총량제(2025~2029) 조사를 위한 지침 개정 추진 중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규모를 재산정하며, 택시 거래가를 정확히 책정해 현실적인 보상비 규모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모빌리티활성화 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대규모 이월 반복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모빌리티활성화지원(4931-350)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은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모빌리티 시대 대비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임<br>○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 27억원은 사업 공모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지원내역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액 전액이 이월된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향후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 추진시 사업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3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도입지원(101억 200만원)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운영지원(237억 5,000만원)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2023년도 실집행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98.9%, 82.6%),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달성률과 운영지원 실집행률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br>* 법정운영대수 달성률 : 시·도별 편차(세종시 122.7%, 부산 63.2%) 최대 59.5%p 수준<br>*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지역별 실집행률 : 서울·인천·세종 등은 100%이나, 전남(34.9%), 광주(60.5%), 울산(62%) 등 지역별 편차 존재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4</td><td rowspan="3">환승센터구축지원의 사업계획 부실 및 집행관리 미흡문제 해결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환승센터 구축지원(4542-31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환승센터구축지원 사업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환승센터의 구축 사업 소요자금의 일부(국비 30%, 지방비 또는 민간 70%)를 자본보조(320-07목 또는 330-03목)로 지원하는 사업임<br>❍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31억 6,300만원으로, 이 중 83억 8,300만원을 집행(63.7%)하였는데, 총 8개의 내역사업 중 킨텍스역 환승센터 사업 등 4개의 내역사업은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br>※ 2023년도 환승센터구축지원 일부 내역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br>(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예산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br>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불용액 발생사유</th></tr>
<tr><td>킨텍스역<br>환승센터</td><td>850</td><td>-</td><td>-</td><td>-</td><td>-</td><td>-</td><td>복합환승센터로 사업계획<br>변경 검토에 따른 집행 부진</td></tr>
<tr><td>의정부역<br>환승센터</td><td>750</td><td>-</td><td>-</td><td>-</td><td>-</td><td>-</td><td>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에 따른<br>사업계획 재검토</td></tr>
<tr><td>수원역 동측<br>환승센터</td><td>2,500</td><td>-</td><td>-</td><td>-</td><td>-</td><td>-</td><td>사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br>사업계획 재검토</td></tr>
<tr><td>아주대삼거리역<br>환승센터</td><td>680</td><td>-</td><td>-</td><td>-</td><td>-</td><td>-</td><td>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br>사업계획 재검토</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환승센터구축지원 사업이 사업계획 부실 및 집행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5</td><td rowspan="3">충청권<br>자율주행모빌리<br>티 상용화<br>지구조성 사업의<br>철저한 사업계획<br>수립 및<br>집행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46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은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을 연결하는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조성 · 운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35억 3,900만원(국고보조 141억 2,300만원, 보조율 60%)을 투입하여 자율주행 버스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임<br>○ 2023년 실집행실적을 보면, 교부된 예산 24억 100만원 중 52.7%인 12억 6,500만원만이 실집행되고 11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저조한 실집행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자율주행 전기버스 구매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임<br>※ 2023년도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 실집행실적<br>(단위 : 백만원, %)
<table>
<tr><th>보조사업자</th><th>예산</th><th>교부금액</th><th>실집행액</th><th>실집행률</th></tr>
<tr><td>세종시</td><td>1,400</td><td>1,400</td><td>875</td><td>62.5</td></tr>
<tr><td>충청북도</td><td>1,001</td><td>1,001</td><td>390</td><td>39.0</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버스공영차고지 지원(4931-345)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버스공영차고지 신규 확충·개선 등으로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여건 및 종사자의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br>○ 동 사업은 실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2023년도 편성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전액 이월된 바 있음. 이처럼 다수 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또는 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검토와 집행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br>* 실집행률 : 2020년도 31.8%, 2021년도 34.9%, 2022년도 71.9%, 2023년도 68.2%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형 | 조치대상 기관 |
|---|---|---|---|---|---|
| 67 | **녹색물류전환사업 성과지표 개선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친환경 물류지원(4034-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친환경 물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물류전환사업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의 구입비용을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br>○ 동 내역사업은 장비 등의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그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보조금의 집행이 아닌 보조금을 활용하여 구입한 장비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친화적 목표의 달성이고, 보조금의 실집행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 미세먼지 감축량 등으로 변경·개선할 필요가 있음<br>○ 동 내역사업의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미세먼지 감축량, 유류절감량 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비 대비 저감계수 등 사업 효과가 좋은 사업에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정부지정핵심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동 내역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8 | **전환실적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전환교통지원(4034-302)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전환교통지원사업은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운송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br>○ 전환교통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2021년 28.8억원, 2022년 41.8억원, 2023년 43.5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 집행률은 99.9% → 95.7% → 94.6%로 하락추세임<br>○ 또한,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도 감소추세임. 2021년 100.4%(707/704백만톤·km), 2022년 95.2%(674/708백만톤·km), 2023년 78%(536/687백만톤·km)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전환실적의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예산 규모를 산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9 | **면허수당제도가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도로공사 총괄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건설기계 운전인원 확보를 위해 종사자가 보유한 면허 1종 당 3만원(1인당 최대 15만원)을 면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br>- 면허수당 지급 취지를 고려하면 자신이 소속된 지사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긴급 재난에 대해 관련 장비를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br>○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면허수당 지급 기준은 ‘면허 보유 여부’ 뿐이므로 취득한 면허 관련 장비가 소속 지사에 존재하지 않아 관련 장비를 운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직원도 해당 면허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br>- 실제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면허수당이 지급된 건수는 1,926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면허수당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0 | **차선도색공사 관리 · 감독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도로공사 총괄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고속국도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차선도색공사를 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3,529천㎡ 에 대한 도색을 위하여 535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함<br>○ 감사원 감사결과 2021년~2022년 차선도색공사를 실시한 한국도로공사 77개 중 36개(46.8%)지사에서는 일일 작업 후에 주행속도가 기재된 기록장치를 제출받지 않았음<br>○ 또한, 고속국도의 반사성능 측정을 통해 시공 품질을 확인한 결과 9개 지사 중 5개 지사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1 |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실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도로공사 총괄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한국도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하고 있음<br>○ 동법에서는 취득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그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토지보상관리예규」에도 포함됨<br>○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환매권을 미통지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14억원을 지급한 바 있음<br>○ 또한, 고속국도 건설·유지관리 등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부지로 관리하면서 도로사업에 필요하다는 막연한 사유로 환매권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통지를 소홀히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2</td><td rowspan="3">당초 예산 대비<br>전용 과다로<br>면밀한 사업계획<br>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5635-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1년~'22년 2년 연속 결산에서 이·전용의 최소화를, '22년 결산에서는 예비비 122억원 편성을 지적받았으며, '23년에는 132억원을 이·전용하였음<br>○ 예산편성 당시 추진하려던 공원계획수립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와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하고, 132억원을 전용하여 새로운 추가과업에 집행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br>※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전용액 집행내역
<table>
<tr><th colspan="2">당초</th><th colspan="3">변경</th></tr>
<tr><th>예산액<br>(A)</th><th>사업내용</th><th>예산액<br>(B)</th><th>전용액<br>(B-A)</th><th>추가과업 등 변경내역</th></tr>
<tr><td>85억원</td><td>용산어린이정원내<br>수공간(관람형 연못)<br>조성</td><td>130억원</td><td>45억원</td><td>어린이가족을 위한<br>분수정원으로 조성계획 변경</td></tr>
<tr><td>-</td><td>-</td><td>45억원</td><td>45억원</td><td>위해성 저감사업 보강시행</td></tr>
<tr><td>55억원</td><td>용산어린이정원 등<br>임시개방부지 관리<br>운영비</td><td>97억원</td><td>42억원</td><td>분수정원 등 추가개방에<br>따른 시설안내,<br>안전관리요원 증원 등<br>관리운영 인력 증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의 당초 예산 대비 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3 | **주택공급통계 오류 재발 방지 및 통계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4244-516),<br>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263-502),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의 오류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과소집계되었다가 정정되었음<br>* 주택 인허가 38.9→42.9만호, 착공 20.9→24.2만호, 준공 31.6→43.6만호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통계 오류 발생원인을 철저히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를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4</td><td rowspan="3">공시가격<br>조사·결정의<br>정책 타당성<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주택공시가격조사(103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이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로 수요 집중이 심화되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침<br>-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벌어져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나, 2023년 이후 공시가격 반영률을 하향 조정함<br>- 2023년 5월 비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이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하(주택공시가격 140% × 담보인정비율 90%)로 변경되면서, 빌라 등 특정 공동주택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반환보증 가입범위를 초과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불허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비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함<br>※ 2023년~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대비)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
<tr><th>계획</th><th>수정</th><th>계획</th><th>수정</th></tr>
<tr><td>공동주택</td><td>72.7%</td><td>69.0%</td><td>75.6%</td><td>69.0%</td></tr>
<tr><td>단독주택</td><td>60.4%</td><td>53.6%</td><td>63.6%</td><td>53.6%</td></tr>
<tr><td>토지</td><td>74.7%</td><td>65.5%</td><td>77.8%</td><td>65.5%</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비아파트 시장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분한 대책 없이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정책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5 | **한국철도공사 인건비 부족문제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2731-30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를 출연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운용됨<br>○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는 인건비, 경비, 보수비로 구분되며, 2021년~2023년 집행내역을 보면 보수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 등의 부족액은 2021년 400억원, 2022년 672억원, 2023년 7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함<br>-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강화 정책으로 2017~2022년 동안 1,258명 증원이 있었는데, 정부지원 인건비는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아 인건비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임<br>○ 현재 2023년 부족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 중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6 | **관련법령 준수 및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소송발생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배상금(310-02)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배상금(310-02목)’은 국가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57억 5,900만원 중 555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3,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br>○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4,622억원에 달하고 있음<br>-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배상금(310-02목) 결산 내역을 보면, 2020년 이후 예산액은 205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2019년 785억원, 2020년 877억원, 2021년에는 1,8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556억원 수준의 배상금을 집행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예산액 대비 350억원(171.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국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시설물의 하자를 줄이는 등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77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공공임대(융자)(1333-40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액함<br>- 당초 계획액은 1,179억 5,8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335억 6,900만원을 증액한 2,515억 2,700만원으로 변경한 후 계획안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던 공공리츠사업에 1,688억 8,000만원 집행<br>○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당초 국회 확정예산에 비해 큰 규모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한 것은 국회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공공리츠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로 집행한바, 향후 동일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8 |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대규모 변경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총괄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3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출계획현액 105조 5,386억원 중 95조 4,377억원이 지출되고 24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조 3,236억원이 불용되었음<br>○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회계연도 종료 3일 전인 ’23.12.28.에 3조 7,448억원 규모(57.6%)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br>- 최근 10년간 12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없었던 해가 없으며, 변경 규모 측면에서도 ‘22년에 6조 8,635억원으로 가장 크며, 최근 2년간 변경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관례화되지 않고 그 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br>○ 국토교통부는 연말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9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조성 및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임<br>○ 동 사업의 2023년 당초 계획액은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액한 수정 계획액은 3,839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br>-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2023년 3,839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출자하였고, 2024년 2월 7,00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3월에는 4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였음<br>○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3조 7,804억원이 발생하고 있음<br>-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0 |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으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조성 및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임<br>○ 동 사업의 2023년 당초 계획액은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액한 수정 계획액은 3,839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br>○ 동 사업은 당초 계획액이 없었음에도 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출자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문제가 있음<br>-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급증으로 인한 보증 가입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에 다다름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함<br>-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 상승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당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의 출자가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여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신규 출자하는 것을 지양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1</td><td rowspan="3">연례적 실집행<br>부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일반철도건설 단위사업(263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반철도건설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으로 출연금의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음<br>※ 일반철도건설 사업 2023년도 결산<br>(단위: %, 백만원)
<table>
<tr><th>2023년<br>교부액</th><th>2022년<br>이월액</th><th>교부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집행률</th></tr>
<tr><td>1,700,904</td><td>1,983,903</td><td>3,684,807</td><td>1,858,219</td><td>1,821,182</td><td>50.4</td></tr>
</table>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시정), 일반철도사업 예산을 수시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 바 있음(제도개선)</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며,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 등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2</td><td rowspan="3">한국토지주택공사<br>중장기<br>재무건전성<br>개선을 위한<br>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한국토지주택공사</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정(2022. 6.)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임<br>- LH의 최근 5년('19년~'23년) 간 부채 규모, 이자부담부채(사채・주택도시기금 등) 규모, 이자부담부채 비율 및 장기보유재고자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br>※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5년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br>(단위: 조원, %)
<table>
<tr><th>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부채(A)</td><td>127</td><td>130</td><td>139</td><td>147</td><td>153</td></tr>
<tr><td>부채비율(부채/자본)</td><td>254</td><td>234</td><td>221</td><td>219</td><td>218</td></tr>
<tr><td>이자부담부채(B)</td><td>65.9</td><td>68.8</td><td>75.2</td><td>81.6</td><td>88.3</td></tr>
<tr><td>이자부담부채비율(B/A)</td><td>51.9</td><td>52.9</td><td>54.1</td><td>55.5</td><td>57.7</td></tr>
<tr><td>장기보유재고자산</td><td>67</td><td>69</td><td>73</td><td>78</td><td>83</td></tr>
</table>
- '23년 부채비율은 218%로서 '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14% 대비 4%p 증가하였음<br>- LH 재무상태표 내 미분양토지 중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토지의 비중이 54.9%를 차지함<br>○ LH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2년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6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양주 옥정, 창원 가포, 양산 사송 세 지구의 미분양 물량 합계는 1,153호에 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장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br>○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기보유재고자산(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미분양 주택 재고 해소를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3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적자와 차입금 증가 등으로 2023년 부채비율은 95.8% 수준이고, 총 부채액 중 금융부채 비중이 80%를 상회하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023년 979억원 발생하였음<br>- 총 부채액 7조 4,559억원 중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5조 9,852억원(80.3%)이고 이자비용은 2023년 979억원으로 2022년 821억원 대비 19.2%가 증가하였음. 이는 2023년 영업이익 5,224억원의 18.7% 수준이고, 2024년 예산에도 1,263억원의 이자비용을 편성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채비율 및 금융부채 감축 노력과 더불어 지출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4 | **헬스케어타운 및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 중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부지에 총사업비 1조 5,966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총 2조 5,14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휴양콘도와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임<br>○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간 개발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손해배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br>-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1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나 2017년 6월 녹지그룹이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임<br>-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2015년 3월 토지수용 관련 소송패소 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손해배상으로 약 1,6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24년 4월 현재 JDC는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보상액이 약 7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 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5</td><td rowspan="3">해외인프라도시<br>개발지원공사에<br>출자한 출자금<br>중 유보금 및<br>이자수입에 대한<br>적절한 처리 방안<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토교통부가 글로벌인프라(GIF)펀드 및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 조성을 위하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중 투자되지 않고 유보된 금액은 각각 1,003억 1,400만원, 75억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각각 73억원, 38억원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글로벌인프라펀드(GIF)는 투자기간이 지났음에도 미투자금액이 존재하여 원활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br>(단위: 억원, %)
<table>
<tr><th rowspan="2">펀드명</th><th rowspan="2">결성<br>시기</th><th rowspan="2">투자<br>기간</th><th rowspan="2">존속<br>기간</th><th colspan="2">결성총액(A)</th><th rowspan="2">투자<br>집행(B)</th><th rowspan="2">미투자<br>금액(C)</th><th rowspan="2">미투자율<br>(C/A)</th></tr>
<tr><th>합계</th><th>정부<br>예산</th></tr>
<tr><td>GIF(1호)</td><td>'17.09</td><td>'22.09</td><td>'32.09</td><td>650</td><td>200</td><td>218</td><td>432</td><td>66</td></tr>
<tr><td>GIF 5호</td><td>'19.12</td><td>'22.12</td><td>'34.12</td><td>1,100</td><td>450</td><td>-</td><td>1,100</td><td>100</td></tr>
<tr><td>GIF 6호</td><td>'19.12</td><td>'22.12</td><td>'34.12</td><td>1,100</td><td>450</td><td>-</td><td>1,100</td><td>1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중 유보금 및 이자수입에 대해 향후 유사 목적의 펀드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6 | **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높은 초기 시설투자비용으로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물류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임<br>○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연말까지 27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였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며, 2024년에도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역시 예산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자인 제주도의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 | |
| 87 | **천안 공동물류센터의 조속한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천안 공동물류센터는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시기인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늦어진 2023년 12월 29일 준공되었음. 천안 공동물류센터는 '24.3월까지 공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위해 1차 공고(4.9.~5.20.) 및 2차 공고(7.24.~8.8.)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3차 공고(8.14.~21.)를 거쳐 위탁운영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입주업체 선정, 운영설비 투입 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센터의 실질적 운영은 2024년 10월 중에야 가능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천안 공동물류센터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8 |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731-46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은 사고 빈발지역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확충 등에 필요한 단년도 경상비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임<br>- 총액계상사업이란 예산을 세부 내역별로 편성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세부내역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도록 규정함<br>○ 동 사업을 통해 ‘천사대교* 스마트관리사무소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다년도 사업이며, 해상교량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량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어려움<br>※ 전남 신안군 암태면~압해읍를 연결하는 교량(연장 7,224m, 왕복 2차로)으로 사장교 + 현수교가 복합된 케이블 교량(2019.4월 개통)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다년도 사업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9</td><td rowspan="3">광역 BRT<br>구축사업의<br>철저한 집행관리<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광역BRT구축(4541-38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광역BRT 구축 사업은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의 구축 사업 소요자금의 일부(국비 50%, 지방비 50%)를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로 지원하는 사업임<br>○ 일부 BRT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하였음<br>※ 2023년도 광역BRT 구축사업 실집행실적<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8">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th><th>예산(A)</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 (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C/A)</th></tr>
<tr><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 (C)</th><th></th><th></th><th></th></tr>
<tr><td>창원BRT</td><td>8,972</td><td>8,972</td><td>8,972</td><td>4,616</td><td>13,588</td><td>9,364</td><td>8,972</td><td>4,748</td><td>4,224</td><td>-</td><td>52.9</td></tr>
<tr><td>성남 S-BRT</td><td>500</td><td>500</td><td>500</td><td>775</td><td>1,275</td><td>657</td><td>500</td><td>-</td><td>500</td><td>118</td><td>0</td></tr>
<tr><td>공주~세종 BRT</td><td>1,900</td><td>1,900</td><td>1,900</td><td>-</td><td>1,900</td><td>1</td><td>1,899</td><td>1</td><td>1,899</td><td>-</td><td>0</td></tr>
<tr><td>제주 BRT</td><td>4,380</td><td>4,380</td><td>4,380</td><td>-</td><td>4,380</td><td>226</td><td>4,380</td><td>226</td><td>4,154</td><td>-</td><td>5.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광역 BRT 구축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0 | S-BRT 노선 구축시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광역BRT구축(4541-383)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S-BRT(Super BRT)는 기존 BRT의 서비스 수준을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국제기준 Gold 등급의 최고급형 BRT로, 2018년 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도입이 발표되었고 2020년 1월에는 S-BRT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서인 '고급 간선급행버스 체계 표준가이드라인' 이 마련되었음<br>○ 현재 개통하여 운행 중인 창원 BRT 1단계 구간은 당초 S-BRT로 계획하였으며 최근('24.5.15) 임시개통되었으나, 창원 BRT는 국토교통부의 S-BRT 표준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 상당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S-BRT 시범사업 추진시 'S-BRT 표준가이드라인' 에 따른 S-BRT 구성요소를 충족시킴으로써 일반 BRT와의 차별점을 강화하고 향후 타 지역의 S-BRT 구축 및 운영과정에 반영할 것 | | |
| 91 | 공공분양주택 공급 실적 개선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융자)(1134-4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실적 등 공급실적이 저조하고, 장기 미착공률이 높은 상황이며, 사업취소물량도 전년 대비 증가함<br>- 2023년 착공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66%로 부진<br>- 2023년 미착공 물량 7만 3,502호 중 사업승인 후 3년 이상 경과 물량은 1만 6,260호(22%)<br>- 2023년 사업취소 물량은 9,393호로 전년 대비 5.3배 수준으로 급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지연·사업 취소 문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공급실적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형 | 조치대상 기관 |
|---|---|---|---|---|---|
| 92 | **분양주택(융자) 사업 관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융자)(1134-4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분양주택(융자)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br>○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41.3%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br>- 당초 ①분양주택, ②청년원가주택, ③역세권첫집 3가지 유형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분양주택만을 신규 유형인 나눔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여 계획과 다르게 집행<br>-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제도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준비가 미비하였으며, 그 결과 나눔형의 2023년 공급 계획(5.4만호) 대비 실적(9,700호)이 18%에 불과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융자) 사업의 사업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공급실적을 개선하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3</td><td rowspan="3">공공임대주택<br>사업 관련<br>과도한<br>기금운용계획<br>변경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총괄</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함<br>※ 2023회계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B)</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변경<br>비율<br>(B/A)</th><th rowspan="2">당초대비<br>집행률<br>(C/A)</th></tr>
<tr><th>당초(A)</th><th>수정</th></tr>
<tr><td>영구임대출자</td><td>179,683</td><td>133,683</td><td>△46,000</td><td>133,683</td><td>101,174</td><td>△25.6</td><td>56.3</td></tr>
<tr><td>국민임대(융자)</td><td>300,114</td><td>157,445</td><td>△142,669</td><td>157,445</td><td>148,344</td><td>△47.5</td><td>49.4</td></tr>
<tr><td>국민임대출자</td><td>219,221</td><td>68,271</td><td>△150,950</td><td>68,271</td><td>56,313</td><td>△68.9</td><td>25.7</td></tr>
<tr><td>행복주택(융자)</td><td>1,004,089</td><td>620,089</td><td>△384,000</td><td>620,089</td><td>536,346</td><td>△38.2</td><td>53.4</td></tr>
<tr><td>행복주택출자</td><td>684,607</td><td>461,607</td><td>△223,000</td><td>461,607</td><td>421,615</td><td>△32.6</td><td>61.6</td></tr>
<tr><td>공공임대(융자)</td><td>117,958</td><td>251,527</td><td>133,569</td><td>251,527</td><td>246,578</td><td>113.2</td><td>209.0</td></tr>
<tr><td>통합공공임대(융자)</td><td>1,190,038</td><td>522,404</td><td>△667,634</td><td>522,404</td><td>516,442</td><td>△56.1</td><td>43.4</td></tr>
<tr><td>통합공공임대출자</td><td>1,070,374</td><td>570,374</td><td>△500,000</td><td>570,374</td><td>456,569</td><td>△46.7</td><td>42.7</td></tr>
<tr><td>다가구매입(융자)</td><td>3,237,000</td><td>1,533,120</td><td>△1,703,880</td><td>1,533,120</td><td>1,461,701</td><td>△52.6</td><td>45.2</td></tr>
<tr><td>다가구매입출자</td><td>2,839,300</td><td>2,698,784</td><td>△140,516</td><td>2,698,784</td><td>2,471,225</td><td>△4.9</td><td>87.0</td></tr>
<tr><td>전세임대(융자)</td><td>4,174,950</td><td>5,087,730</td><td>912,780</td><td>5,087,730</td><td>4,780,620</td><td>21.9</td><td>114.5</td></tr>
</table>
○ 유형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함<br>-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임대주택지원(융·출자) 프로그램 내에 편성됨<br>- 이에 따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고객만족도’, ‘미임대율’ 두 가지 성과지표만 설정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4</td><td rowspan="3">공공임대주택<br>미임대율<br>개선방안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국민임대(융자)(1332-401), 공공임대(융자)(1333-401), 행복주택(융자)(1335-401),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국민임대출자(1440-404), 영구임대출자(1440-407), 행복주택출자(1440-408)</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6개월 이상 미임대율이 전년 대비 증가함<br>※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미임대 현황<br>(단위: 호, %)
<table>
<tr><th rowspan="3">유형</th><th colspan="4">2022년 말 기준</th><th colspan="4">2023년 말 기준</th></tr>
<tr><th rowspan="2">재고량</th><th colspan="3">미임대</th><th rowspan="2">재고량</th><th colspan="3">미임대</th></tr>
<tr><th>계</th><th>6개월 미만</th><th>6개월 이상</th><th>계</th><th>6개월 미만</th><th>6개월 이상</th></tr>
<tr><td>영구임대</td><td>162,450</td><td>7,798<br>(4.8)</td><td>6,530<br>(4.0)</td><td>1,268<br>(0.8)</td><td>165,724</td><td>10,943<br>(6.6)</td><td>9,050<br>(5.5)</td><td>1,893<br>(1.1)</td></tr>
<tr><td>국민임대</td><td>553,825</td><td>25,482<br>(4.6)</td><td>15,029<br>(2.7)</td><td>10,453<br>(1.9)</td><td>562,859</td><td>28,637<br>(5.1)</td><td>15,651<br>(2.8)</td><td>12,986<br>(2.3)</td></tr>
<tr><td>행복주택</td><td>106,710</td><td>15,557<br>(14.6)</td><td>9,450<br>(8.9)</td><td>6,107<br>(5.7)</td><td>129,047</td><td>17,348<br>(13.5)</td><td>8,741<br>(6.8)</td><td>8,607<br>(6.7)</td></tr>
<tr><td>공공임대</td><td>124,970</td><td>3,449<br>(2.7)</td><td>1,665<br>(1.3)</td><td>1,784<br>(1.4)</td><td>122,020</td><td>4,245<br>(3.5)</td><td>2,055<br>(1.7)</td><td>2,190<br>(1.8)</td></tr>
<tr><td>다가구<br>매입임대</td><td>162,469</td><td>10,328<br>(6.3)</td><td>5,741<br>(3.5)</td><td>4,587<br>(2.8)</td><td>171,516</td><td>7,660<br>(4.4)</td><td>2,658<br>(1.5)</td><td>5,002<br>(2.9)</td></tr>
</table>
○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임대 해소방안으로 ①소득・자산・무주택요건 등 입주자격 완화, ②청년・신혼부부・다가구 대상 리모델링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율 상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임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5 | **국고보조금지침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국민임대출자(1440-404), 영구임대출자(1440-407), 행복주택출자(1440-408),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에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br>- 아울러, 연말인 12월 5일이나 12월 27일에 보조금을 전액 일괄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집행 가능성이 없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도 있음<br>○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이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교부·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6 | **통합공공임대 기준사업비 현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는 ‘기준사업비’를 기준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36%를 출자, 38% 융자하고, 사업시행자가 14%, 입주자가 12%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br>- 기준사업비는 2023년 전년 대비 7% 상승하였으며, 매년 전년 대비 5~7% 수준 상승함<br>○ 실제 사업비의 평균값인 ‘계획사업비’의 경우 기준사업비에 비해 인상률이 커 LH 등 사업시행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 LH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 품질 저하가 우려됨<br>- 계획사업비는 2023년 전년 대비 27.7% 상승하여, 실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정부지원비율은 기준사업비 기준 74%(출자 36% + 융자 38%) 대비 27%p 낮은 47%에 불과함<br>○ 2023년의 경우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의 격차로 LH가 호당 약 1억 1,117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총 2조 6,429억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였음<br>- 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부담한 금액은 최근 4년 누적 3조 6,974억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 기준사업비를 실제 소요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7</td><td rowspan="3">다가구매입임대<br>실집행을 고려한<br>출자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다가구매입임대 출자는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와 달리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교부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왜곡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br>- 출자와 융자는 주택유형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동시에 지원되는데, 융자는 매입 실적 저조로 집행률이 52.6%인 반면, 출자는 집행률이 87%로 큰 차이가 나타남<br>- LH에 일괄 교부된 출자금 2조 1,046억 4,000만원 중 1조 6,416억 700만원이 유보됨<br>※ 최근 5년간 다가구매입임대 LH출자 실집행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출자금(A)</td><td>1,518,051</td><td>1,246,349</td><td>2,465,195</td><td>2,302,124</td><td>2,104,640</td></tr>
<tr><td>집행액(B)</td><td>1,350,606</td><td>1,246,349</td><td>1,562,161</td><td>919,000</td><td>463,033</td></tr>
<tr><td>유보금(C=A-B)</td><td>167,445</td><td>-</td><td>903,034</td><td>1,383,124</td><td>1,641,60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자하도록 사업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8</td><td rowspan="3">다가구매입임대<br>매입 실적<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br>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다가구매입임대의 매입 실적이 10,673호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함<br>※최근 5년간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매입 계획 대비 실적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획</th><th colspan="3">실적</th></tr>
<tr><th>전체</th><th>LH</th><th>지자체</th></tr>
<tr><td>2019</td><td>25,540호</td><td>29,302호</td><td>20,344호</td><td>8,958호</td></tr>
<tr><td>2020</td><td>27,830호</td><td>28,626호</td><td>16,562호</td><td>12,064호</td></tr>
<tr><td>2021</td><td>54,000호</td><td>34,778호</td><td>24,162호</td><td>10,616호</td></tr>
<tr><td>2022</td><td>48,000호</td><td>19,453호</td><td>14,054호</td><td>5,399호</td></tr>
<tr><td>2023</td><td>35,000호</td><td>10,673호</td><td>5,563호</td><td>5,110호</td></tr>
</table>
○ 이러한 실적 급감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4월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하여 매입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사업 착수절차가 지연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br>- 국토교통부는 이로부터 1년이 안 된 시점인 2024년 2월 다시 매입가 산정기준을 변경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매입가 산정기준 현실화 등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매입 실적을 제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9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br>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임대)할 수 있음<br>○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023년은 전무한 상황이며, 2024년 7월말 기준으로는 23호에 불과함<br>- 2024년 7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2만 217명이고,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격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는 1만 6,677명임<br>○ 국회는 2024년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신탁사기피해주택·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매입임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절차 완화 및 실효성 있는 매입 수단 모색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0 | **매입임대주택 매각금액 관련 지침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br>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은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 당시 지원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 후 남은 보상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그러나 LH는 매입임대주택 매각금액의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도 정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지침 위반 및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음<br>- LH는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281호를 매각하였으며, 그 매입금액은 152억 8,000만원, 매각금액은 305억 4,000만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매각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1</td><td rowspan="3">신축매입주택<br>미임대율 개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4,610호 중 신축예정주택이 4,439호로 96%를 차지함<br>※ 최근 5년간 다가구매입임대 LH 매입 현황<br>(단위: 호)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전체(A=B+C)</td><td>20,344</td><td>16,562</td><td>24,162</td><td>14,054</td><td>4,610</td></tr>
<tr><td>신축매입약정(B)</td><td>-</td><td>-</td><td>16,254</td><td>11,830</td><td>4,439</td></tr>
<tr><td>기존주택매입(C)</td><td>20,344</td><td>16,562</td><td>7,908</td><td>2,224</td><td>171</td></tr>
<tr><td>신축매입약정<br>비율(B/A)</td><td>0%</td><td>0%</td><td>67%</td><td>84%</td><td>96%</td></tr>
</table>
❍ 한편, 2023년 기준 신축매입약정주택의 재고량 9,212호 중 16.4%에 해당하는 1,509호가 미임대 상태라는 점에서 신축주택이 기존주택에 비해 반드시 선호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 신축예정주택 적정 비율에 대해 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2 | **실효성 있는 자산매각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한국철도공사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까지 3조 9,294억원의 비핵심부동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7,073억원만 이행 완료함(18%)<br>○ 이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영향이 큰데,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br>- 용산역세권은 2007년부터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가 수립한 토지매각계획의 실효성이 낮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매각 지연을 자산매각계획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자산매각계획을 수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3</td><td rowspan="3">주거급여<br>부정수급 환수분<br>처리 방식<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주거급여지원(1034-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을 당해 연도 환수액은 국고에 귀속하고, 차년도 환수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현행 방식이 부적절함<br>-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03년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임<br>- 그러나, 해당 감사원 지적은 부정수급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라는 취지이지 환수 시점에 따라 국고 귀속 여부를 달리 하라는 것이 아니며, 현행 방식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부정수급 환수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br>※ 2020~2023년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br>(단위: 건,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환수<br>결정건수</th><th>환수<br>결정금액<br>(A)</th><th>환수<br>납부건수</th><th>환수액</th><th>미환수액<br>(B)</th><th>미환수율<br>(B/A)</th></tr>
<tr><td>2020</td><td>9,300</td><td>3,077</td><td>8,297</td><td>2,235</td><td>841</td><td>27.3</td></tr>
<tr><td>2021</td><td>21,176</td><td>7,412</td><td>18,931</td><td>5,550</td><td>1,862</td><td>25.1</td></tr>
<tr><td>2022</td><td>20,185</td><td>6,699</td><td>17,467</td><td>4,536</td><td>2,163</td><td>32.3</td></tr>
<tr><td>2023</td><td>19,210</td><td>8,386</td><td>16,025</td><td>3,927</td><td>4,458</td><td>53.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4</td><td rowspan="3">글로벌인프라(GIF)펀드 및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의 미투자금액 처리방안 마련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글로벌인프라(GIF)펀드 4 · 5 · 6호의 경우 그 투자기간(2022년 12월까지)이 경과하였음에도 미투자금액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글로벌인프라(GIF)펀드 투자 현황 ('24년 4월말 기준)
<table>
<tr><th>펀드명</th><th>결성시기</th><th>투자기간</th><th>투자집행</th><th>미투자금액</th><th>미투자율</th></tr>
<tr><td>GIF 4호</td><td>2017년 9월</td><td>2022년 9월</td><td>218억원</td><td>432억원</td><td>66%</td></tr>
<tr><td>GIF 5호</td><td>2019년 12월</td><td>2022년 12월</td><td>-</td><td>1,100억원</td><td>100%</td></tr>
<tr><td>GIF 6호</td><td>2019년 12월</td><td>2022년 12월</td><td>-</td><td>1,100억원</td><td>100%</td></tr>
</table>
❍ 또한, 글로벌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PIS)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기간이 24년 하반기까지임을 고려하여 글로벌인프라(GIF)펀드와 같이 미투자금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글로벌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PIS) 자펀드 투자 현황 ('24년 4월말 기준)
<table>
<tr><th>펀드명</th><th>결성시기</th><th>투자기간</th><th>투자집행</th><th>미투자금액</th><th>미투자율</th></tr>
<tr><td>플랜트</td><td>2020년 9월</td><td>2024년 9월</td><td>1,288억원</td><td>812억원</td><td>38.7%</td></tr>
<tr><td>인프라</td><td>2020년 9월</td><td>2024년 9월</td><td>2,653억원</td><td>1,847억원</td><td>41.0%</td></tr>
<tr><td>스마트시티</td><td>2020년 9월</td><td>2024년 9월</td><td>295억원</td><td>2,105억원</td><td>87.7%</td></tr>
<tr><td>EIF PIS</td><td>2023년 8월</td><td>2025년 8월</td><td>42억원</td><td>1,024억원</td><td>96.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GIF)펀드 미투자금액의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글로벌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PIS)펀드의 투자금액이 투자기간 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5</td><td rowspan="3">공동주택관리<br>분쟁조정센터의<br>층간소음 분쟁<br>해결을 위한<br>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1034-30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비하여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br>※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 접수 현황<br>(단위: 건)
<table>
<tr><th>구분</th><th>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th><th>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th></tr>
<tr><td>2023년</td><td>40</td><td>44,204</td></tr>
</table>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 측정이 가능한 반면,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은 없어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br>- 이에 따라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분쟁을 접수하는 건수가 많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6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토지 비축 제도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공공토지 비축 제도*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br>- 2023년 위원회 개최 실적은 12월 22일 한 차례에 불과하여 2023년의 공공토지 비축 제도가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사후승인의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문제가 있음<br>- 위원회는 토지은행에 대한 예·결산 사항도 심의하는데, 2022년 토지은행 결산 및 2024년 토지은행 예산에 대한 심의 모두 2024년 시작 약 일주일 전인 2023년 12월 22일 서면회의 한 차례로 이루어져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br>*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br>**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토지비축계획, 비축대상 토지의 선정·관리 및 공급기준, 토지은행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공공토지비축에 대한 시행계획 및 토지은행 예·결산에 대한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7 |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토지 비축 제도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토지 비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토지비축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게 될 우려가 있음<br>- LH가 토지 비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비축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취득세를 공급가에 포함하여 토지를 매각함<br>-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취득세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거나 지방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br>*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LH가 고유계정과 별도로 토지은행 계정을 설치하여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비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8 |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및 민간의 수요, 시장 상황, 유사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소물류시스템 구축(4034-317)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소화물차 공급 및 확산에 대비하여 대형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임<br>○ 2023년 총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차례 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9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br>- 대형 수소화물차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일반 수소충전소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br>-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대형화물차용 수소충전소 2개소(인천, 울산)의 경우 수소화물차보다는 수소승용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월평균 74회, 매출액은 월평균 260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수요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대형 수소화물차의 운행대수 등 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 지자체·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 유사사업 추진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9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공공요금 선납할인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요금 선납제도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25조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2023년에 각각 5,279만원과 6억 9,589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음<br>○「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정의 신속집행 차원에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정의 신속집행 차원에서 공공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연간 약 7~10%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0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지원 등을 위해 흑산도에 소형공항(1,200m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br>○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일정 등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이 순연되고 있고, 80인승 항공기 취항 기준으로 공항등급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총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될 경우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만큼 총사업비 변동요인과 사업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1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방지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제주 제2공항 건설(3538-304)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저비용항공사 성장, 내·외국인 관광객 증대 등으로 급증하는 제주지역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연 1,992만명 수용가능한 규모의 신공항(3,200m 활주로,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br>○ 2023년 7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을 마쳤음에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설계 2년, 공사 5년이 소요될 예정인바, 2024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에 고시될 경우 2025년 기본설계, 2026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 후 2032년 상반기에야 준공·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2 |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후속절차 집행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새만금 신공항 건설(3538-305)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및 새만금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2028년까지 총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하여 군산시 새만금 지역에 연장 2,500m 활주로 및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br>○ 동 사업은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SOC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적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동 사업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2023년 예산은 이로 인해 기본조사 설계비 중 57억 800만원을 이월하고 실시설계비 75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의 후속절차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3 | **보조금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은 노후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자금을 교부함<br>- 위 계획에 따라 2023년에는 보조사업자인 서울시와 부산시에 각각 415억원, 181억원을 교부함<br>○ 서울시 및 부산시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44.4%, 57.1%에 그쳤는데, 이는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이 실제사업기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br>- 서울시는 2021년도 발주분(5·8호선 298칸)의 사업기간(5년)과 국비지원기간(3년)의 차이 및 2023년도 발주분(5호선 200칸)의 계약 지연으로 인해 229억원을 이월함<br>- 부산시는 2021년도 발주분(부산1호선 200칸)의 사업기간(4년)과 국비지원기간(3년)의 차이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78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의 보조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보조금이 과다지급되는 비효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4 |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노선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 대안 모색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4931-330)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노선버스 운전인원 확충을 위하여 군·경 운전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운전자격 취득 지원 및 버스운전인력 양성교육자에 대한 견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br>○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군·경 운전자격 취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수혜인원 대비 버스회사 취업 인원은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br>○ 버스업계 인력부족 상황은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등에 기인하므로, 근로여건과 교통환경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버스준공영제 확대 시행 및 제도보완(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 전담관리조직 신설 등)과 같은 현실적 여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5년간 추진하였으나 실제 노선버스 인력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노선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5 |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등 지자체보조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895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895억 1,400만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불용액 500만원은 배분잔액)<br>-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지자체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수의 지자체가 교부받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초래함(실집행률 61.2%)<br>-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별 교부금 배정시 저상버스 발주 및 실제 도입 현황을 근거로 적정예산을 교부해야 했음에도 모든 지자체에 2023년 편성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향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등과 유사한 지자체보조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별 실제 집행 소요를 감안하여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에도 사전에 지자체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여 교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6 |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 시정,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8,73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3년 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40%에 불과함. 서울시가 70%를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개별 광역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br>- 동 사업 지연으로 저상버스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지역간 편차가 큰 것은 휠체어 이용자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br>* 전국 17개 시도 평균 실집행률 61.2%<br>* 저상버스 도입률(2023년도) : 서울시 71.7%(최고), 울산 14.6%(최저), 경남 32,9%, 충북 33.5% 등<br>*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목표 : 3차 2021년도 42%, 4차 2026년도 62%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률이 아직 저조하므로, 관계기관 및 차량제작사 등과 협력하여 저상버스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시정)<br>○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7 |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 | 주의,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민자철도운영지원사업 중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비용(비용보전금액)을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br>○ 2015년부터 재정부담 절감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방식을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부의 비용보전금액이 2022년 4,415억원, 2023년 4,159억원으로 많은 정부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br>○ 또한, 공항철도 측의 교통센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공항철도의 기타운영비로 인정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상승하고 비용보전금액이 증가한 문제가 있음<br>- 운영수입과 운영비용 간 차이를 보전하는 구조인데, 인천공항 교통센터 소송판결액 282억, 4,2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원하였는데, ㈜공항철도 측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 것은 부적절함<br>○ 한편, 인천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서울역-인천공항2터미널)은 11,000원으로 협약상 요금인 17,8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해외 공항철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데,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 열차 운임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점은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교통센터 소송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br>○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등 정부 지원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8 | **사업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한 세부사업 분리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민자철도운영지원사업에는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3,638억원) 철도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3,779억원)이 포함됨<br>○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전지출 성격의 비용보전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금액을 성격에 맞지 않는 임차료로 편성·집행하고 있음<br>-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므로 임차료 비목이 적절함<br>○ 참고로 BTO 방식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의 사업자손실보전금액은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의 비목을 임대료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9 | **연계 구간 개통지연 관련 민자철도 손실보상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br>수도권광역급행철도(2833-310) | 주의,<br>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운영사업에서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의 운영사인 ㈜신분당선에게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차료 목 191억원을 배상금 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함<br>- 이는 연계노선인 성남~여주, 정자~광교 노선의 개통지연에 따른 것임<b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경우 운정~삼성(민자), 삼성역(서울시), 삼성~동탄(재정)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삼성역 구간의 개통지연으로 인한 민자사업자의 순운영이익 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예상되는 상황임<br>○ 두 사례는 하나의 노선이 여러 구간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의 개통지연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게 되는 공통된 구조를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손실보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계구간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에 대한 사전 연구·설계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br>○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관련 소송배상금 지출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0 | **냉방 및 방음시설 설치 지연 문제 해소방안 마련,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태점검 및 사업방향 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공항소음대책(3632-3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공항소음대책 사업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방음·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br>○ 국토교통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1~'25)' 에 따르면, 냉방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까지 84%, 2030년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상황(냉방시설 누적 설치율은 2023년말 기준 59%)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음시설 설치사업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방음시설 설치율은 60%대임<br>○ 또한, 국토교통부는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을 통해 제2차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제3차 계획이 고시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정책의 세부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항별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사업 방향 개편을 추진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1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사업의 면밀한 사업수요 예측 및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모색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4931-33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을 제공하는 사업임<br>○ 국토교통부는 당초 64만명의 수요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수는 약 109만명에 달해 부정확한 수요예측 결과를 보였음<br>○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당초 회당 500~900원 적립에서 회당 700~1,100원 적립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이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이 실 소요 대비 과소편성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음<br>○ 특히, 내역변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2023년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는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4.1% ~ 24.9% 감액하여 지급하였음<br>* 2024.4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5부터 K-패스로 전환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2024.5월부터 추진중인 K-패스 사업의 경우 이용자 증가 추세, 이용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도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2 |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고속도로건설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고속도로건설(1532) 단위사업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고속도로건설 단위사업은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202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338억원이며 이 중 1조 4,029억원을 집행하고 2,359억원을 불용함<br>○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안산-인천고속도로(30억원), 문산-도라산고속도로(524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의 경우 관련 예산이 전액 타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불용됨<br>- 그밖에 세종-청주고속도로(1,007억원), 울산외곽고속도로(573억원)도 전액 불용됨<br>○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노선의 경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나,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2023년 6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게 되며 2023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
| 123 | **벽지노선지원 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벽지노선지원(4539-601)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벽지노선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벽지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br>○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예산집행률(%)’로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액으로 측정하고 있음<br>- 이는 단순 투입지표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지표이며,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측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벽지노선 운행거리나 벽지노선 수 등 벽오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반영하고 벽오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4</td><td rowspan="3">실집행을 고려한<br>출자금 교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1440-41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LH의 ‘단일세대및세대통합’ 내역사업과 ‘매입임대시설개선’ 내역사업의 2023년 실집행액이 0원임에도 LH에 대한 출자금 계획액 전부를 집행하였음<br>※2020~2023년 LH출자금 실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LH</th></tr>
<tr><th>출자금(A)</th><th>실집행(B)</th><th>잔여유보금(A-B)</th></tr>
<tr><td rowspan="4">단일세대 및<br>세대통합</td><td>2020</td><td>5,950</td><td>5,950</td><td>0</td></tr>
<tr><td>2021</td><td>258,476</td><td>137,595</td><td>120,881</td></tr>
<tr><td>2022</td><td>369,919</td><td>268,788</td><td>101,131</td></tr>
<tr><td>2023</td><td>115,596</td><td>0</td><td>115,596</td></tr>
<tr><td rowspan="4">매입임대<br>시설개선</td><td>2020</td><td>30,000</td><td>30,000</td><td>0</td></tr>
<tr><td>2021</td><td>35,500</td><td>35,500</td><td>0</td></tr>
<tr><td>2022</td><td>35,500</td><td>26,751</td><td>8,749</td></tr>
<tr><td>2023</td><td>11,800</td><td>0</td><td>11,800</td></tr>
</table>
○ 국토교통부는 2021년~2022년 과도한 물량이 편성되어 이월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계획액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물량만을 편성하거나, 집행 단계에서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자금을 교부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편성하고 출자금을 교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5</td><td rowspan="3">실제 리모델링 기간 반영하여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1440-41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내역사업은 실제로 2회계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계획안에 단년도 사업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실제 상황과 계획액 교부가 괴리되고 있음<br>- 사업 기간은 착수부터 평균 21개월 소요되며, 최근 3년간 당해연도 완료 비율은 7.9%</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의 실제 사업 수행기간에 맞게 다년도 사업으로 계획액을 편성할 것</td></tr>
<tr><td rowspan="3">126</td><td rowspan="3">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의 집행 실적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1440-41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주거복지사 배치’ 내역사업은 23년 신규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LH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br>○ 해당 사업은 2023년 계획액을 감액조정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43.7%로 저조함<br>- LH 보조분은 사업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면서 집행률이 저조<br>- 지방자치단체 보조분의 경우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액이 전액 삭감됨<br>※ 2023회계연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결산 현황
<table>
<tr><th rowspan="2">내역사업명</th><th colspan="8">2023</th><th>2024</th></tr>
<tr><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계획현액 (A)</th><th>집행액 (B)</th><th>다음년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계획액</th></tr>
<tr><th></th><th>당초</th><th>수정</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r>
<tr><td>주거복지사배치</td><td>5,677</td><td>2,483</td><td>-</td><td>△3,194</td><td>2,483</td><td>2,482</td><td>-</td><td>1</td><td>5,677</td></tr>
<tr><td>-민간경상보조</td><td>3,920</td><td>2,483</td><td>-</td><td>△1,437</td><td>2,483</td><td>2,482</td><td>-</td><td>1</td><td>3,920</td></tr>
<tr><td>-지자체경상보조</td><td>1,757</td><td>-</td><td>-</td><td>△1,757</td><td>-</td><td>-</td><td>-</td><td>-</td><td>1,757</td></tr>
</table>
(단위: 백만원)</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실적을 개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7 |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자동차교환환불제도운영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중재부의 중재심리 및 판정서 작성수당, 하자 사실조사 비용, 자동차제작결함 심의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br>○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일부 위원들의 경우 연간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1~2회만 참석하는 등 참석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br>주요 업무인 중재사건의 경우 2023년 연간 중재사건 139건 중 1건도 담당하지 않은 중재위원이 전체 중재위원 60명 중 12명, 1~2건에 불과한 위원도 16명으로 활동 실적 또한 미흡했음<br>○ 또한 최근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사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참석률 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위원 선임 등 운영상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8 |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관리 철저 및 환급금 지출 시 별도의 지출사업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국공채발행수입(81-81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으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됨<br>-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착오로 매입한 사례가 최근 다수 발견되면서 2023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는 해당 매입비용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착오매입 건수는 72.3만건이고 착오매입 규모는 총 2조 6,356억원임<br>○ 착오매입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이 부담한 비용은 1,437억원이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지연배상 이자(이자율 5%) 359억원 등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는 총 1,796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br>○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환급금을 ‘기타여유자금운용’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착오매입 환급금의 집행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별도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유자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타여유자금운용’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의무를 발생시킨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관리에 주의할 것<br>○ 부득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지출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해당 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9 |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확인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층간소음 성능보강(1131-407),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1131-408)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층간소음 성능보강사업’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중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저감 매트를 구입하거나 시공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60개월간 융자하는 사업이고,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기축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고성능(1·2등급) 바닥구조를 사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최대 500만원까지 그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음<br>○ ‘층간소음 성능보강사업’은 2023년도 계획액 150억원 중 집행액은 1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이 0.7%에 불과하고,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도 계획액 4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집행률 0.0%)<br>- 지원 방식이 무상 지원이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특히 자가가 아닌 전세 가구의 경우 원금을 부담하면서 시공할 유인이 떨어지고, 이 사업의 수단인 소음저감매트가 실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br>- 수요조사 없이 계획안을 편성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행 절차 마련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2023년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리모델링 사업자에 제공하는 연 4.0%의 금리가 시중 금리(3~5%)와 비교하여 우대 폭이 크지 않음<br>* 층간소음의 원인 중 가장 비중이 큰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여기에 속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융자사업보다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것<br>○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 당시 융자 및 방음매트 설치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통한 재정낭비를 초래했으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30</td><td rowspan="3">생활지원 및<br>학자금 적정<br>규모의 계획액<br>편성 필요 및<br>무상지원사업으<br>로의 전환 검토</td><td>관련사업명</td><td>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4641-3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자금(무이자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현액 11억 1,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br>❍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에 비해 계획현액이 감액조정되었음에도 실집행률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계획액 편성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br>현액(B)</th><th rowspan="2">실집행액<br>(C)</th><th rowspan="2">당초 기준<br>실집행률<br>(C/A)</th><th rowspan="2">현액 대비<br>실집행률<br>(C/B)</th></tr>
<tr><th>당초(A)</th><th>수정</th></tr>
<tr><td>2020</td><td>1,700</td><td>1,108</td><td>1,108</td><td>1,095</td><td>64.4</td><td>98.8</td></tr>
<tr><td>2021</td><td>1,104</td><td>1,074</td><td>1,074</td><td>847</td><td>76.7</td><td>78.9</td></tr>
<tr><td>2022</td><td>1,242</td><td>1,002</td><td>1,002</td><td>779</td><td>62.7</td><td>77.7</td></tr>
<tr><td>2023</td><td>1,119</td><td>1,119</td><td>1,119</td><td>694</td><td>62.0</td><td>62.0</td></tr>
</table>
❍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주로 신규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2023년 기준 전체 수혜인원 295명 중 해당 연도에 신규로 대출을 받은 인원은 18명(6.1%)에 불과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생활지원 및 학자금 사업의 신규대출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점을 반영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하고,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무상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1 |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인력운용 구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1034-307)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 사무국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br>○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전용부분 하자에 관한 사건은 최장 90일 이내에, 공용부분의 하자는 최장 1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br>○ 최근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은 계속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도의 경우에는 처리건수 4,559건 중 법정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722건(15.8%)에 불과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 점검을 통해 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132 | **과적단속장비 문제 관련 정확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과적단속운영(1732-303)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과적단속운영 사업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 인건비,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에 지출하는 사업비임<br>○ 언론보도를 통해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장비의 측정 오차율이 58%가 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센서오류가 있다는 점이 드러남<br>○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전국 검문소 15곳 가운데 11곳에서의 문제를 발견했으며 154억원을 들여 센서장비를 교체하는 개선작업을 벌이기로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과적단속장비를 도입한 경위를 파악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3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5637-308)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시범도시 구축 사업의 경우 SPC 설립 지연 및 미설립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52.3%)하고 재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있음<br>-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SPC 설립이 지연되었고,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아직 SPC가 설립조차 되지 않아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저조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br>- 또한, 사업비를 교부함에 있어서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이월액 발생 현황 및 SPC 설립 현황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부하여 실집행이 저조(세종시 22.6%, 부산시 0%)하고 재이월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됨<br>○ 국가시범도시 구축 사업의 경우 2021년, 2022년 국회에서 지적하여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SPC 설립 및 사업 지연 상황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실집행 저조 및 재이월 발생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4 | **실수요를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5637-304)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은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지 않는 계획 수립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음<br>- 동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2023년 실집행률은 28.6%에 불과하며, 보조금을 12월 20일~29일에 교부하는 등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율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br>○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br>- 경남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선정('23.12.22.)부터 협약체결('23.12.27.), 사업계획 수립('23.12.28.)까지 불과 일주일이 소요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충북을 제외하고 모두 보조금이 전액 이월된 문제가 발생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수행 시 지자체의 실수요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 저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5 | **지역건축 안전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적극 설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된 금액은 이월액 2억 4,9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22억 4,900만원 중 12억 1,100만원에 그쳐(실집행률 53.8%),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br>- 동 사업의 부진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과 지원 대상이 계측장비 구입 등에 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신청이 저조했던 것에 기인하며, 특히, 이 문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인구 50만명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한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이 부진한 인구 50만명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6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실집행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성장촉진지역개발(5549-30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에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으로 100% 자본보조하는 것임<br>- 성장촉진지역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7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음<br>○ 국토교통부는 매년 예산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100%를 집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br>-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매년 50%에 미달한 사업이 27개이며,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연속해서 30% 이하를 기록한 사업은 9개임<b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당초 목적 내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의 보조금이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 강화 등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7 |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실집행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주거급여지원(1034-302)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가구)하는 것임<br>○ 내역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이사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함<br>-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의 실집행률은 LH 40.5%, 지방자치단체 69.8%<br>- 이사비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은 49.5%<br>○ 주거상향지원사업 중 LH에 대한 보조사업은 용역기간(매년 5~6월, 1년)과 회계연도 불일치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지원사업의 회계연도와 사업추진일정 불일치 개선, 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38 |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대안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1031-301)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의 1.3. 대책 당시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였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급격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기인한 부분이 있음<br>○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이 사업의 2023년도 실적으로 들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일괄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음에도 충분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았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9 | **사업관리 철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지원 실적 제고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34-322)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30만원을 한도로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음<br>○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이 2023년 7월에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였으며,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실집행률이 23.7%에 그치고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17.4%(1만 7,113건)로 저조함<br>* 무주택 청년층의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38.8% 증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무주택 임차인 보호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br>○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을 통일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0 |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 27억 4,000만원 전액을 제주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절차를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상정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등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여 실집행액은 400만원(0.1%)에 불과함<br>○ 천안 공동물류센터는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시기인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늦어진 '23.12.29.에 준공되었음. 천안 공동물류센터는 '24.3월까지 공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위해 1차 공고(4.9~5.20)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 예정인 상황임. 이에 따라 물류센터의 실질적 운영은 2024년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제주 물류센터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는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br>○ 국토교통부는 천안 공동물류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센터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형 | 조치대상 기관 |
|---|---|---|---|---|---|
| 141 |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위 시정요구 미이행 관련 조치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고속도로조사설계(1531-301) | 시정, 주의,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은 고속도로의 계획·설계 관련 비용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 27억 2,600만원이 전액 불용됨<br>○ 2022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의결로 국토부 내부감사, 관계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비심사보고서 의결(2023.9.1.)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부감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관계공무원 징계도 완료되지 못함<br>- 노선 확정 후 전략영향평가도 진행해야 하는데 국토위 요구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br>※ 2022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시정요구(시정요구 유형 : 징계)<br>-국토교통부는 용역사의 타당성조사 월간 진도보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100% 준공 안 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담당자를 징계할 것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책임자를 징계할 것(시정)<br>○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불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br>○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의혹 해소 후 대안 노선이 아닌 원안으로 실시될 경우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원안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2 |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재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총괄 | 시정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면적기준이 축소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br>- 국토교통부는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축소(40㎡→35㎡ 이하)하여 주거의 질 악화 등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br>-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주거기본법」상 유도주거기준이 도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이후 1인당 최저주거기준도 개정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 공표하며 최저주거기준 역시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3 | **취소 후 재승인되는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규모 공표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 총괄 | 시정,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공적주택의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며, 기존에 사업승인되었으나 사업취소 후 재승인받는 물량은 실적으로 중복계상되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 공적주택 공급실적은 총 12만 8,200호로 계획 대비 70.1%에 불과<br>(공공분양: 계획대비 64.7%, 공공임대: 계획 대비 73.8%)<br>- 이러한 실적에는 기존에 사업승인되었으나 사업 취소 후 유형변경을 통하여 재승인받은 물량도 포함되어 기존 실적과 중복계상되는 문제가 있으며, 당해 연도에 신규로 공급된 물량으로 보기 어려움. 해당 물량을 제외한 2023년 순공급실적은 총 10만 9,400호로 계획 대비 59.8%에 불과함<br>○ 선택형 분양주택은 기존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하여 실적으로 계상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적주택 공급실적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존에 사업승인되었으나 취소 후 재승인되는 물량은 당해 연도 신규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공급실적에 중복계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공급규모를 별도로 공표할 것(시정)<br>○ 국토교통부는 선택형 분양주택을 공공분양주택 실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제도개선)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4</td><td rowspan="3">공적주택<br>공급실적 발표<br>시 착공·준공<br>및 입주일 기준<br>계획 대비<br>실적도 공표<br>필요</td><td>시정요구사항</td><td>주택도시기금- 총괄</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적주택의 공급계획 기준이 사업승인 및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급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br>- 2023년~2027년 공적주택 공급계획은 사업승인 및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됨<br>※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 변경 현황
<table>
<tr><th>공급계획</th><th>공공분양</th><th>공공임대(건설형)</th><th>공공임대(매입형・전세형)</th></tr>
<tr><td>기존(2018~2022)</td><td>착공</td><td colspan="2">준공・입주</td></tr>
<tr><td>현재(2023~2027)</td><td>사업승인</td><td>사업승인</td><td>계약일</td></tr>
</table>
- 그러나 최근 5년간 준공된 주택 기준 공공분양은 사업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평균 6.6년, 건설형 공공임대은 평균 4.3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승인일부터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됨. 또한, 매입형 역시 신축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입주까지 평균 1~2년 소요되어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br>- 또한 공급실적을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사업승인 후 취소되는 물량까지도 공급실적에 포함되어 실적이 과다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사업승인 후 취소된 물량은 약 8만 8,600호에 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2023~2027 공적주택 공급계획의 기준이 사업승인일 및 계약일로 변경되어 공급실적과 국민의 체감도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적주택 공급실적 발표 시 착공・준공 및 입주일 기준 계획 대비 실적도 함께 공표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5 | **일반회계 에서 교통시설 특별회계 로의 전출금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91-91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등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도록 하고 있음<br>○ 그런데 2023회계연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은 9조 4,54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7조 9,054억원만 전출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의 관리운용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전출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미전출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6 |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2년 결산 당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38.1%,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30.6% 수준에 그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인구·사업체 수 감소 및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 쇠퇴에 대응하고, 성장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달동네·판자촌·쪽방 등 취약지역의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47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263-503)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연례적으로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7년 활용률 3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활용률은 4.67%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 2027년 30% 달성이라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8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4308-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지급보증 미발급 등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신고센터의 운영(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br>○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금 회수율은 2023년 52.4%로, 체납 및 지급보증 미발급은 영세한 대여업자에게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체납금 회수가 영세 대여업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사원 회수활동을 위한 보조금 인상 등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149 | **법정부담금 징수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법정부담금(59-593)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법정부담금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징수수단을 다각화하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오히려 증가함(2022년 2억 5,200만원 2023년 2억 6,000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0 | **도로유지보수 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유지보수(1733-46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도로유지보수사업의 최근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이월액은 245억원이였으나 2023년에는 406억원으로, 2021년 불용액은 24억원이었으나, 2023년 6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도로유지보수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연례적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1 | **도시재생 사업 재검토 및 재구조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5641-301),<br>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활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2018-2023년 5년간 약 4조원의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었음<br>○ 그러나 성과평가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유동인구, 매출액, 창업, 민간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표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br>- 사업 추진 전보다 유동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37곳, 매출액이 감소한 지역이 33곳, 창업건수 변화율이 없거나 감소한 지역이 34곳, 민간분야 고용자 수 변화율이 없거나 감소한 지역이 22곳에 달함<br>○ 지금도 500여곳 이상의 사업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큰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큼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재구조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2 |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관리(5551-3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조치하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음<br>○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여 성장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창원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유지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 |
| 153 | **신생아특례대출 등 수요억제 정책 필요** | 관련사업명 |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1-40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을 확대해서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겼음<br>-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신혼부부 가계대출 증가 및 30대 생애최초 구매가 두드러지게 되었음<br>○ 8.8 부동산 대책과 같은 중장기 공급대책으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어려우므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규모 축소와 같은 단기 수요 억제책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거나 비수도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정책자금 공급 규모 축소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54</td><td rowspan="3">노후교량사업에<br>국비 지원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4323-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대전시 유등교, 세종시 대곡교, 성남시 정자교 등이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침하·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함<br><br>○ 노후교량 대부분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움<br><br>- 전체 31,015개소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량은 18,127개소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30년이 넘은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와 함께, 노후된 시설물을 대체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td></tr>
<tr><td rowspan="3">155</td><td rowspan="3">새만금개발공사<br>재무건전성 관리<br>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새만금개발공사</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 설립 이후 누적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사업수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는 공사채 발생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로 사업비 투입액만큼 매출액이 발생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br>- 새만금개발공사는 기관 출범 이후의 누적 손실로 인해 부분자본잠식상황에서 추진 사업의 지연 등으로 수익 발생은 저조한 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이자비용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br><br>※ 새만금개발공사 이익잉여금(결손금)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1,497</td><td>△8,416</td><td>△17,764</td><td>△28,537</td><td>△25,566</td><td>△21,16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누적 손실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6 | **스마트 수변도시 및 케이블카 조성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새만금개발공사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및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손실 누적 및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2023년부터 분양수익 발생을 목표했던 것과 달리 2024년도 5월까지 관련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br>-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 대비 계속 지연되고 있고, 2024년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지거나 수익 발생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및 케이블카 조성 사업 등 주요 수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7 |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에 대한 상환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새만금개발공사 | 주의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새만금개발공사는 2038년까지 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상환하여야 하는바, 공사가 수립하는 현물출자 상환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상환계획 수립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br>-「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의 현물출자 상환 기한은 출자시기로부터 20년 이내로서 2038년까지인데, 새만금개발공사는 출자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8년까지도 누적 손실을 보전하지 못해 현물출자의 상환요건조차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br>- 새만금개발공사의 연도별 상환계획 내용을 보면 매년 새만금개발공사의 수익 발생 시기 및 규모가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현물출자 상환이 어렵다는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상환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현물출자 상환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58</td><td rowspan="3">새만금 육상<br>태양광 발전사업<br>매립면허권<br>이용료 적정<br>수준 책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새만금개발공사</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 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별로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공사의 누적 손실 장기화 및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액 발생 규모를 고려할 때, 매립면허권 이용료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수익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 2022년 및 2023년 발전 매출액 대비 매립면허권 이용료 규모를 비교해보면 1~3구역의 발전매출액 수준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1・2구역이 3구역 대비 낮은 수준임<br>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별 매출액 및 매립면허권 이용료 현황<br>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h colspan="2">2023</th></tr>
<tr><th>발전<br>매출액</th><th>매립<br>면허권<br>이용료</th><th>발전<br>매출액</th><th>매립<br>면허권<br>이용료</th><th>발전<br>매출액</th><th>매립<br>면허권<br>이용료</th></tr>
<tr><td>1구역</td><td>-</td><td>-</td><td>33,000</td><td>2,310</td><td>25,114</td><td>1,758</td></tr>
<tr><td>2구역</td><td>-</td><td>-</td><td>32,033</td><td>961</td><td>25,633</td><td>769</td></tr>
<tr><td>3구역</td><td>-</td><td>43,459</td><td>26,620</td><td>3,858</td><td>24,860</td><td>5,127</td></tr>
<tr><td>합계</td><td>-</td><td>43,459</td><td>91,653</td><td>7,129</td><td>75,607</td><td>7,654</td></tr>
</table>
○ 매립면허권 이용료가 매출액과 연동되는 1・2구역과 달리, 육상 3구역의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과 무관한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음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지역에서 신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공사의 수익성을 제고할 것<br>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발전 3구역 출자를 통해 매출액에 비례하는 배당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9 | **해상교통에 대한 교통비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4931-331)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패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일정 비율을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상교통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br>○ K-패스를 해상교통에도 적용하는 경우 도서지역 주민 8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는 해상교통에도 K-패스를 확대적용하여 해상교통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제한적 적용 필요** | 관련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기본경비(1011-200, 1011-250) | 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지적사항 | ○ 기본경비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결산 내역을 보면 1억 4,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br>-「국가재정법」 제48조는 세출예산의 이월 금지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월한도를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음<br>○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기본경비 이월조서를 보면, 일반용역비 이월 중 계약기간이 2023. 4. 10. ~ 2024. 2. 3. 까지인 ‘영상기록물 제작용역’의 이월사유를 기본경비 이월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용역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고이월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재정법」의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고이월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후 보조금 교부 필요** | 관련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2032-318) | 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 | | 지적사항 |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583억원을 국비(50%)와 지방비(대전광역시, 50%)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것임<br>-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25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나, 대전광역시에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교부액 2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억 1,600만원으로, 이 중 대전광역시가 실집행한 금액은 21억 9,600(실집행률 32.7%)만원에 불과함<br>○ 또한, 2023년도 예산액에 대한 실집행액 내역이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실집행액 관리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건축기획용역 수행 누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절** | 관련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과학문화센터 건립(2034-406) | 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지적사항 | ○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에 과학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이 소통하는 과학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과학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br>-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기본설계비인 1억원이고, 3,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500만원이 이월되었음<br>○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br>○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계획 당시 건축기획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건축기획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2023년 7월에서야 비로소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3월에 해당 용역이 완료되었음<br>○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에 준공·개원 예정이었던 과학문화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2028년 12월에야 준공·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법적 절차를 누락하여 사업이 지연된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필수 절차 미비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종캠퍼스 공익법인 운영(1031-515) | 제도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안 심사시 부대의견으로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시되어 수시배정 사업으로 관리되었는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공동캠퍼스 운영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현재까지 수시배정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우수대학·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공익법인 운영 사업이 수시배정예산으로 관리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 |

## 3. 새만금개발청(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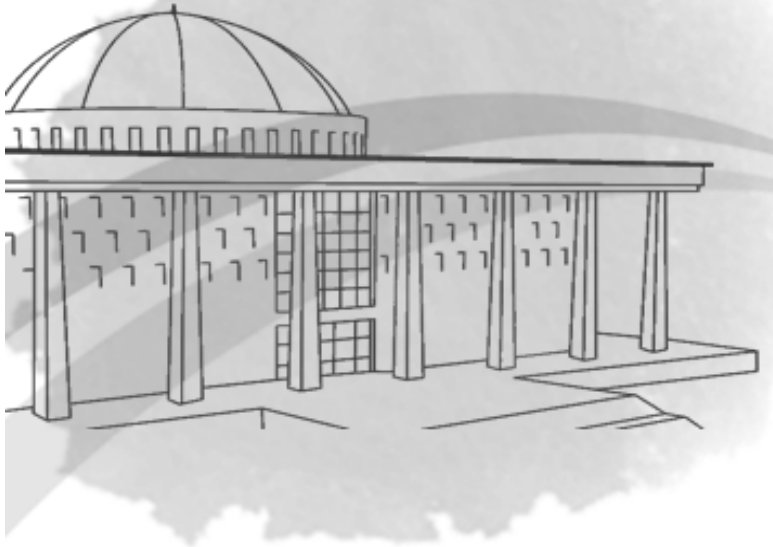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5557-323) | 제도개선 | 새만금개발청 |
| | | 지적사항 | ○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른 동 사업의 기간은 2019~2024년이었지만,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 협의 지연, 토질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공법 검토 등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었음<br>- 또한, 동 사업은 불용액 발생 및 보조사업자인 군산시의 실집행실적 부진 등으로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개항, 스마트 수변도시 입주에 따른 용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옥구배수지 건설공사의 사업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주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5557-376) | 주의 | 새만금개발청 |
| | | 지적사항 |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정책환경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1년 2월에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추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임<br>- 동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은 완료되었고(2022. 6. ~ 2023. 6.), 2차년도 사업은 2023년 3월에 계약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상위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임<br>○ 재정비가 완료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하위계획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변경함으로써 하위계획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중지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의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5557-387) | 주의 | 새만금개발청 |
| | | 지적사항 |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2권역(복합개발용지)·3권역(관광레저용지)과 주변 국도(12호선, 30호선)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임<br>-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6억 4,200만원으로, 새만금개발청은 10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br>○ 동 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사업은 2023년 9월 정부의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정과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2024년도 예산의 수시배정 예산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음<br>○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한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연된 새만금 SOC사업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새만금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이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새만금 홍보<br>예산의 효과적인<br>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새만금투자유치지원(7031-3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새만금개발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새만금 홍보 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은 홍보대행 용역비 4억 6,500만원 및 광고료·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결산 내역에 따르면, 홍보대행 용역비로 4억 5,406만원 및 일반수용비 4억 8,344만원을 집행하였음<br>❍ 그런데, 새만금 홍보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신문사 지면광고 및 방송사 광고료로 집행되었음<br>※ 2023년 새만금 홍보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br>(단위: 원)
<table>
<tr><th>내용</th><th>금액</th><th>건수</th><th>비고</th></tr>
<tr><td>광고료 지급</td><td>376,500,000</td><td>40건</td><td></td></tr>
<tr><td>홍보물품비</td><td>106,897,000</td><td>4건</td><td>기념품 등 제작</td></tr>
<tr><td>그 밖의 비용</td><td>40,000</td><td>1건</td><td></td></tr>
<tr><td>합계</td><td>483,437,000</td><td>45건</td><td></td></tr>
</table>
- 또한 동 사업 홍보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3년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광고료가 집중적으로 집행(40건 중 26건)되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새만금홍보예산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 투자유치 확대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부족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홍보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것</td></tr>
</table>

# 여성가족위원회



# 1. 여성가족부(47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양성평등정책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적정 예산비목으로 편성 · 집행**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① 연구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② 정책연구결과가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적정 비목으로 별도 편성 · 집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활성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이 48%이고,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방식이 대부분 서면 방식이라 실질적인 논의 조정에 한계가 있음<br>○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임시기구로서 운영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이고, 8개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부처간 예산 편차가 크고 기능과 역할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확대 및 대면회의를 활성화할 것 | | |
| 3 |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231-32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은 202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1%이나, 지자체는 49.1%로 중앙행정기관보다 낮고,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참여가 전년 대비 35,665명(△37.9%)이 감소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 관련 중간설계의 적정 비목 편성 및 철저한 집행관리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사전시관(1232-332)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간설계는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이므로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집행해야 하나, 실시설계비(420-02)로 집행한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5 | 성과지표 보완 및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새일센터 성과지표인 취·창업 건수가 목표치(17만 3,038건)에 다소 못 미치는 16만 5,53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일센터는 고용유지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고부가가치 및 지역 핵심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지원할 것<br>○ 여성가족부는 직장 부적응과 같은 개인별 중단사유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고충상담이나 직장문화 개선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고용유지율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새일센터 종사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속기간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부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 중장년내일센터의 종사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평균 근속기간인 10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br>○ 새일센터 종사자의 기간제·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30%에 달하는 상황으로 고용의 질이 불안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평균근속기간을 상향하는 목표 설정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br>○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종사자의 임금인상,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7 | **새일여성인턴 사업 취업자 고용유지율 등 사후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새일여성인턴 사업 취업자 중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은 95% 이상이나, 6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70%대이고, 12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50%대로 감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br>○ 여성가족부 성과목표관리체계 중 새일센터와 관련된 성과지표는 취·창업 건수(건)가 전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br>○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가 아닌 취업 이후 고용유지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2136-313)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학교별로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초중고 모두 90%를 상회하나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예방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방교육 콘텐츠에 딥페이크 내용이 최근에야 포함되고 실제 폭력 사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의 효과성 측정을 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학생 대상으로 대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예방교육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할 것 | | |
| 9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및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기반 강화, 인식개선 홍보, 예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피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각각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음란물 삭제, 피해자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 | |
| 11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예산 확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br>한국여성<br>인권진흥원 |
| | | 지적사항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의 변화로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은 2021년부터 39명 그대로이고, 2023년 기준 종사자의 38.5%(15명)가 기간제 인력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와 신규채용의 반복으로 인한 업무 단절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성범죄자 알림e 열람 및 모바일 고지 홍보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2137-322)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필요한 경우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열람 건수를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거의 증가하지 않음<br>○ 모바일 고지 열람률이 2023년 기준 35.8%로 많이 저조한 편으로 모바일 고지 열람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 |
| 13 |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관련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대부분 기관 및 센터 운영비로 집행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거의 없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 직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방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양육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급여(청년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서울 50%, 지방 80%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방보조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 |
| 15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형태로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부모가 제출한 소득판별 관련 서류만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6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교부하여 교부액의 29.3%가 불용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반납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연내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기한 내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17 |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타 기관변호사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17명에서 2023년 10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력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동일 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전문직 변호사 간 동일 임금을 반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8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원인 규명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 환수결정 금액이 '19년 3억 6,900만원에서 '23년 5억 3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수급 환수비율은 2020년 56.3%, 2021년 69.6%, 2022년 65.0%, 2023년 42.8%로 매우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정기적인 부정수급 징수계획과 징수현황 조사, 징수율이 부진한 지자체의 환수 독려 등 환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19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17개 지자체 중에서 2022년에 교부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3년까지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가 4개(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고, 2021년에 교부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2022년까지 반납하지 않고 2023년에야 반납한 지자체가 5개(서울, 울산, 충남, 전북, 경북)이며, 충남, 전북은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전년도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전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2023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률(84.1%)이 저조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전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 | | |
| 21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목표인원과 자립촉진수당 목표가구가 매년 과다하게 산정되어 실집행률(2021년 67.0%, 2022년 68.7%, 2023년 77.2%)이 연례적으로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인원, 지원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2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다른 사업으로 이관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편성되어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의 예산규모, 실집행내역, 성과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 |
| 23 | 가족센터 평가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 필요 | 관련사업명 | 양성평등기금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가족센터 평가업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평가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양성평등기금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지원대상 과다 산정, 수요 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82.1%로 저조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수요를 기반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정산 및 반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25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124억 8,800만원) 중 105억 7,000만원이 실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84.6%이며, 당초 예산액(131억 8,8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80.1%임<br>그런데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중 9~10세 연령대의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이 47.4%로 저조하며, 19~24세 신청률은 72.3%로 많이 올랐으나 아직까지 평균 신청률(80.1%)보다 낮으므로 사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 가능 구매처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생리용품 바우처 오프라인 구매처가 대부분 대형마트와 편의점이며, 카드사별로 구매처의 편차가 있음<br>- KB국민카드, 신한카드는 구매처가 편의점 두 곳 뿐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를 확대할 것 | | |
| 27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주의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수요가 높아 매년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음에도 동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 가능 대상자가 감소하였음<br>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중 9~24세인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전용 사유 및 근거를 국회에 보고하고 소명하며, 동 사업 포함 대상자 직접지원 성격의 복지사업과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의 예산 전용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범위의 중장기적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저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년 2.3%, 2023년 18.5%로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29 |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진행 중 이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조사설계 계약체결을 사유로 실시설계비를 이월하고,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일부를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집행관리를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0 | **청소년치료재활 센터 건립 사업 신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국립 대구 청소년디딤센터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센터 건립을 완공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남아 있으며, 호남권(익산, 광주) 지역센터 건립 사업 2건 모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공사 진척도 등과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각 내역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할 것 | | |
| 31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실집행 저조**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소년활동 지원(2254-54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의 2022년 예산현액 73억 9,100만원 중 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8,0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9.6%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2023년에도 실집행률이 45.9%(예산현액 66억 8,000만원, 실집행액 30억 6,900만원)로 여전히 저조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가 미흡했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 수행 시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방향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2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예산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립지원수당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93.5%), 경기(100%), 전북(90%), 경남(100%)은 2023년 평균 실집행률(79.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32.3%), 세종(33.3%)의 경우 실집행률이 30%대에 머물렀고, 대구(55.6%), 울산(53.7%), 강원(64.1%), 전남(69.1%), 제주(62.9%)의 경우 실집행률이 50~60%대로 저조하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지원수당의 집행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33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 시정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입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설치 목적 및 본연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br>- 최근 10년간 두 기금이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2014년 1,497억원에서 2023년 6,300억원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14년 467억원에서 2023년 1,495억원까지 복권기금 전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br>- 최근 5년간 전체 사업 대비 복권기금 재원 사업의 비중을 보면, 양성평등기금은 모든 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만 편성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23년 결산 기준 전체 사업 8개 중 5개, 지출액 기준 93.2%가 복권기금 재원 사업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및 기금 존치 여부 재검토 등 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4 |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134-341) | 주의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70.2%에 불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가 13,031가구이며,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에 달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돌봄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35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및 보조금 내역사업별 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134-341) | 시정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별개의 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당초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액 대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를 초과집행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함<br>- 2023년의 경우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에서 각각 104억 6,100만원, 53억 8,900만원 초과집행이 발생하여 그 부족분을 돌봄수당 집행잔액으로 충당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예산편성 시 내역사업별 예산수요 등을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돌봄수당 집행잔액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6 | **사업성과 측정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134-341) | 주의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2019년, 2020년 실제 교육인원은 예산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고, 2021년 37.9%, 2022년, 2023년에는 실제 교육인원(3,000명대)은 유사하나, 목표치를 2021년(10,300명)에서 2023년(4,500명)으로 낮춰 달성률(87.7%)을 높였으며, 교육 인원 중 2/3 이상이 교육만 받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아 전체 활동 아이돌보미 수도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수요 예측, 아이돌보미 공급 필요 인력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성과 측정 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7 |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률 개정 노력, 사업관리 강화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134-341) | 시정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미준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집행실적(68.5%)도 저조한 상황이며, 17개 시·도 중에서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서울과 울산은 여전히 센터 지정을 보류 중인 상태임<br>*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나,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 곳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개에 불과하였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서울과 울산이 여전히 센터 지정을 보류 중인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8 | **지역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주의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2021년 4월에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2023.1.1.시행)」에 따르면, 17개 시·도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나, 지자체가 전문성 부족 및 다양한 착취 유형을 담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희망하지 않아 2023년 1개소 시범 운영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현재까지 한 곳도 설치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불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청 연계, 관계 부처와의 협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br>○ 여성가족부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조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9 | **관련성 적은 사업에 예산집행 재발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시정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지역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편성된 ‘지역피해자 지원 위탁연구’ 예산을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인신매매등 식별지표 교육자료(해설서) 제작, 인신매매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제도 및 사례 연구용역 등에 집행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예산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
| 40 | **국립청소년진로 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실적 저조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시정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예산의 이월·불용·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br>- 2021년 동 사업 시행 이후 2023년까지 편성된 총 예산액 24억 3,500만원 중 집행액은 8억 4,900만원(34.9%)에 불과하며, 그 중 15억 2,100만원(62.5%)은 타 사업으로 전용·조정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이로 인해 준공 시기가 늦춰지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1 |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주의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을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가 아닌 전년도 실시설계비(420-02목) 이월액으로 집행한 문제가 있음<br>- 2022년 12월 계획설계가 완료된 후 여성가족부는 중간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실시설계비 3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한 후 2023년에 중간설계를 실시하여 12월에 완료되자 그 비용을 전년도 실시설계비 이월액 3억 7,000만원으로 집행하였음<br>- 중간설계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이므로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집행한 것은「국가재정법」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부합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2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금액과 누적 회수율은 증가(2020년 5.05%, 2021년 9.29%, 2022년 12.72%, 2023년 15.36%)하고 있으나, 2023년 말 기준 누적 회수율은 여전히 15.36%에 불과함<br>○ 여성가족부는 2024년 3월 동 사업의 지급범위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여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이를 위해서는 선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강력한 회수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되었으므로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br>○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육비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
| 43 |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2021년까지 회수한 양육비는 2023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결산잉여금으로 활용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 5월말까지 회수한 양육비는 기타수입으로 자체통장에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br>○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이 회수를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임을 고려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수입 직접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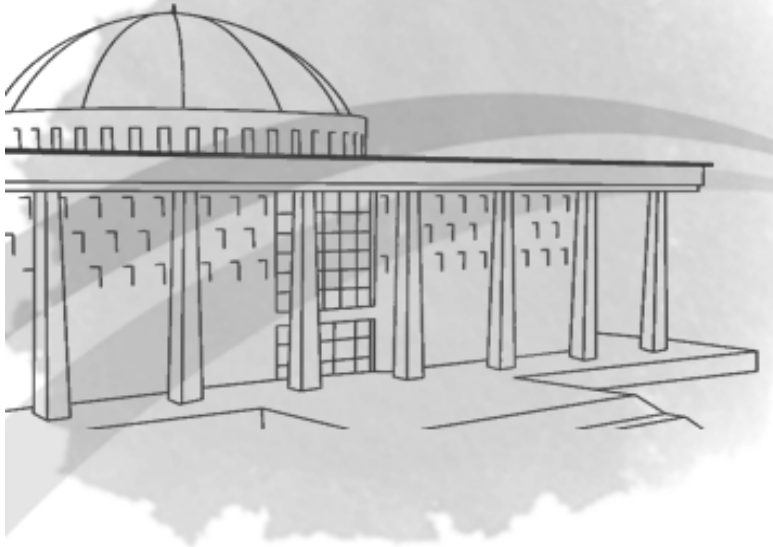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4 |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에 대한 보조금 비목전환 등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2237-372)<br>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2254-43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 시정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도에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 출연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7개 내역사업에서 67억 3,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음<b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97억 9,600만원을 편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상담1388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중앙지원기관 운영 등 7개 내역사업에서 총 67억 3,7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계상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전액 교부하였음<br>- 2024년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과 함께 4개 내역사업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4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출연기관이 편성된 예산을 통해 고유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각 보조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출연금·민간위탁 등으로의 비목 전환을 검토하는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5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주의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원아동수는 1,569명으로, 여성가족부가 통계청 통계(아동가구 통계등록부)로 추정치를 확보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요조사만으로 대상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액 36억원 중 18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18억원은 불용하였음<br>- 지자체는 교부받은 18억원 중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70.7%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예산 편성시 통계데이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상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과다추계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6 |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 시 합리적 공사기간 설정 및 연례적 이월 · 불용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여성사전시관(1232-332) | 시정, 주의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당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중간설계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일시 정지 상태임<br>○ 2022년도 이월예산인 실시설계비 8억 6,600만원과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 37억 7,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0.04%로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 및 공사 기간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br>○ 여성가족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교육의 장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시정)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7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미흡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2254-542) | 주의, 제도개선 | 여성가족부 |
| | | 지적사항 | ○ 2023 세계잼버리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매년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행사 준비를 주관하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전라북도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행사 당해연도인 2023년에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를 배정한 문제가 있음<br>- 2023회계연도 본예산은 95억 1,300만원이나, 행사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29억 5,8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하고, 151억 7,7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81억 3,500만원(190.6%)이 증액<br>○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 예비비로 배정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여성가족부는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주무부처와 지자체 행정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주의)<br>○ 여성가족부 및 관계 기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잼버리와 관련 없는 해외출장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 및 시정할 것(제도개선)<br>○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추진할 것(주의) | | |

# 공통사항



# 1. 공통(14건)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R&D 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 관련사업명 | R&D 총괄 | 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 | | 지적사항 | ○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R&D 계속과제 예산 삭감에 따라 각 부처는 과제별 협약변경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사전준비가 다소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음<br>- 정부의 2024년 R&D 예산 편성 방향이 ‘비효율적 R&D의 구조조정 및 도전적·성과창출형 R&D 집중 투자’ 였던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처의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던 상황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R&D 예산의 대규모 감액으로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R&D 성과 관리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면밀한 R&D 예산편성을 통한 연구비 매몰화 재발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R&D 총괄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
| | | 지적사항 | ○ 2023년 신규과제로서 R&D 구조조정 시점에는 그 성과를 알 수 없었는데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다년도 계속과제 및 장비도입 등 지속적인 재정투입 이후에 성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R&D 연구비 구조조정으로 2024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 투입된 연구비가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br>-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R&D)<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br>-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R&D)<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R&D)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연구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매몰화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연구개발(R&D) 과제의 지속성과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면밀히 R&D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기술료 관련 매출실적보고서 법정기한 내 제출 필요** | 관련사업명 | 기술료 총괄 |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 | | 지적사항 | ○ 경상기술료는 기업들의 ‘과제 관련 사업화매출액’과 ‘기술기여도’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제출한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 등이 기재된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기술료를 부과함<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료 관련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19년 64개, 2020년 56개, 2021년 15개, 2022년 79개의 기업이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69개, 2020년 76개, 2021년 253개, 2022년 90개 기업이 매출실적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br>-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도 기한을 경과하여 매출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사례가 2021년 41건, 2022년 113건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27개사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675건, 2020년 816건, 2021년 1,056건, 2022년 1,4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들의 매출실적 보고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전용을 통한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 재발방지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중앙부처 청년인턴 총괄 | 주의, 제도개선 | 전 부처 |
| | | 지적사항 | ○ 2023년 청년인턴 사업은 46개의 부처에서 총 1,950여명의 청년인턴이 채용되어 약 225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에는 목표인원이 더욱 확대되어 4,770명 채용 및 625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br>-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은「국가재정법」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br>※「국가재정법」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br>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br>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br>- 연도 중 전용을 통해 청년인턴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타직 보수나 상용임금 등 부적절한 비목으로 청년인턴 임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였음<br>- 급격하게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청년인턴을 소관 공공기관으로 파견하여 인턴을 운영하는 등 청년인턴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전용을 통한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br>○ 정부는 청년인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정 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인력 수요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산정할 것(제도개선)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BTL한도액안 제출 시 주요서류 제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등 |
| | | 지적사항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시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명세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타당성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br>- 별도의 자료 요청 없이는 한도액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내용도 알 수 없어 국회의 한도액안 심의가 제한되는 측면이 존재<br>-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까지의 정부지급금 추계만이 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제출 시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서, 타당성분석 결과 등의 주요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br>○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추계기간을 사업종료일까지 확대하여 10회계연도 이후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정부지급금 추계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서류 국회제출 필요** | 관련사업명 |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등 |
| | | 지적사항 | ○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건설보상비에 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출 등을 통해 보상자금을 선투입한 경우 그 원금 및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것임<br>○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국가에 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에도 법률로써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 조달비용 산정방식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제출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음<br>-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불과함<br>-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활용 시 선투입한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은 결국 국가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하는바 장기간에 걸친 국가의 확정채무가 발생함에도, 별도로 국회의 심의를 받거나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제출하고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정의·요건·절차 등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재정 외로<br>운용되는<br>부담금이<br>국가재정 편입<br>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부담금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 등</td></tr>
<tr><td>지적사항</td><td>○ 부담금이 중앙행정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으므로 민주적 재정통제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면 지방의회에 의한 심사가 가능함<br>- 그러나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사업 또는 공익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어 민주적 통제에 기반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br>- 2023년 1,000억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보이는 부담금 3개가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고, 징수실적은 6,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br>※ 2023년 1,000억원 이상 징수된 부담금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재정 외로 운영되는 부담금</th><th>소관부처</th><th>귀속기관 등</th><th>2023년<br>징수실적</th></tr>
<tr><td>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td><td>금융위원회</td><td>서민금융진흥원</td><td>274,062</td></tr>
<tr><td>집단에너지공급시설<br>건설비용부담금</td><td>산업통상<br>자원부</td><td>지역난방공사 등</td><td>188,462</td></tr>
<tr><td>지역신용보증재단 및<br>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td><td>중소벤처<br>기업부</td><td>지역신용보증재단 등</td><td>208,429</td></tr>
<tr><td colspan="3">계</td><td>670,95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정부는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 각 부담금의 특성, 운용방식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편입가능성을 검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 | | 지적사항 |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은 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구현되는 것임에도 정부가 해당 사업목록을 관리하지 않아 각 과제별 추진실적을 알 수 없음<br>- 대부분 정보화사업으로 일반적인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계획·검토 이원성 및 예산안 편성과 계획 간 연계부족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미흡함<br>○ 재정소요와 연차별 투입계획, 비용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명확한 성과관리체계 필요<br>○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플랫폼의 장점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로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해당 정책사업 범위 및 예산규모의 불명확성,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 문제, 기존 정보화사업의 계획·검토 이원성에 따른 비효율적 추진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자본 촉진 및 역할재정립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모태펀드 사업 |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등 |
| | | 지적사항 | ○ 모태펀드는 정부재정으로 결성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로서, 모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게 되면 자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함<br>- 2023년 현재 모태펀드 출자실적은 총 10개 부처 6,815억원 규모임<br>○ 모태펀드 사업을 통한 벤처시장으로의 신규 투자 규모는 2021년(3조 9,666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2조 7,940억원)부터는 하락하는 경향(2023년 2조 4,476억원)<br>- 전체 벤처캐피탈시장에서 차지하는 모태펀드 사업의 투자비중 역시 2017년(44.4%)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2023년 22.4%)<br>○ 모태펀드에 의존한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민간벤처투자 수요의 유입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 외에 새로운 모태펀드의 역할로서 ‘정책적 목적에 따른 시장실패의 치유’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모태펀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와의 관계에 있어 모태펀드의 시장실패 치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최초 총사업비 산정 시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기획재정부 등 38개 부처, 941개 사업) | 주의 | 기획재정부 등 |
| | | 지적사항 | ○ 일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2023년도에 재정당국과 협의조정을 통해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었고, 이는 사업타당성재조사결과에 따른 부지가격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br>-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2023년에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20% 이상 증액한 사업은 모두 39개로 파악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최초 총사업비 산정 시 정확성을 제고하여 총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을 지양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적정예산 반영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관련사업명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기획재정부 등 38개 부처, 941개 사업) | 주의 | 기획재정부 등 |
| | | 지적사항 | ○ 2023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은 75.5%로 전년도 집행률 78.6%보다 낮았고, 일부 사업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br>-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5.5%로, 2021회계연도 87.2%, 2022회계연도 78.6%에 비하여 집행률이 낮았고, 최근 3년간 집행률 또한 하락하는 추세임<br>○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2023년도 신규사업의 집행률은 68.2%로 계속사업의 집행률 75.6%에 비해 낮게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 지연을 최소화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기획재정부 등 38개 부처, 941개 사업) | 주의 | 기획재정부 등 |
| | | 지적사항 | ○ 정부는「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는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변경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그 내용이 불충분한 문제점이 있음<br>- 동 집행명세서는 각 사업별로 사업기간, 총사업비 규모 및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등 기본적인 현황만이 단 한줄로 기재되어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에 사업의 내용,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 현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국회 감액사업 증액집행 및 미편성 신규사업 임의 집행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국회 감액사업 및 예산 미편성 신규사업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등 |
| | | 지적사항 | ○ 국회에서 감액 의결된 사업이 연도 중 증액집행되고,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임의집행되며,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이 과도하게 변경되어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등「국가재정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함<br>- (외교부)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국회 감액사업이나 증액집행됨<b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보: 국회 감액사업이나 증액집행됨<br>-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국회 감액사업이나 증액집행됨<br>- (국가유산청)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 등: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았으나 신규사업으로 집행<br>-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등: 국회 의결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증감하여 집행 | | |
| | | 시정요구사항 | ○ 해당 중앙관서는「국가재정법」위반 소지가 없도록 국회 의결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전기차 배터리 셀 안전기준 강화 필요 등** | 관련사업명 | 전기차 배터리 셀 안전기준 |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로부터 발생하는 화재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불안 가중 및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br>○ 전기차 배터리 셀 안전기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충전시설 안전성 문제, 화재 대응능력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정부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지하주차, 배터리 완충, 중국산 배터리 문제 등과 관련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 | |